

2010~11년 연구지원 선정

논문집

2010년 '연구지원 논문'

- 각종 일지로 본 5·18항쟁
노영기 7
- 민중항쟁기억의 세대계승과 청소년 축제
현해경, 한은영 38

2010년 '5·18전문연구자 육성' 석사논문

- 저항집단의 생애사를 통해 본 하위주체의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과정
강은숙(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83

2011년 '연구지원 논문'

- 1980년대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과 5·18
한규무(광주대학교) 247
- 한국 국립묘지의 정치학
하상복(목포대학교 정치학) 295
- 국립5·18민주묘지 비문 읽기
김 강 (호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18
- 1970년대 광주일고 이념서클에 대한 연구
황광우 353
-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이영재(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393

2010년 연구지원 논문

- ▣ 각종 일지로 본 5·18항쟁
- ▣ 민중항쟁기억의 세대계승과 청소년 축제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5·18기념재단

각종 일지로 본 5·18항쟁

작성자 : 노영기

1. 머리말
2. 자료 소개
3. 5월 18일 이전의 군부대 이동과 초기 진압
4. 시민항쟁으로의 전환과 계엄군의 발포
5. 계엄군의 외곽봉쇄와 공동체의 회복
6. 상무총정작전
7. 맺음말

1. 머리말

1980년 5월 18일 이후 광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과 시민들의 항쟁을 목격하였다. 대다수의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 광경을 목격하고 분노하며 자연스럽게 거대한 시민항쟁의 대열에 참가하였다. 반면 5월 18일부터 광주를 점거한 계엄군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던 시민들의 저항을 강경하게 진압하였다. 계엄군의 야만적인 ‘진압’과 시민들의 ‘항쟁’은 5·18항쟁기 내내 지속되었고, 이러한 대립 구도는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신군부와 광주 시민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5·18항쟁을 기록하고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5·18항쟁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만들어졌다.

5·18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정권 장악에 성공한 신군부는 5·18항쟁을 ‘내란’이자 ‘폭동’으로 규정하며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주요 근거로 이용하였다. 반면, 광주 시민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5·18항쟁

을 정리하였다. 5월 27일 5·18항쟁이 진압된 이후부터 광주 시민들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동시에 지나친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밝혀나갔다.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진전되며 정부는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공권력의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였다. 그러나 관련 자료들은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유실된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최근 관련 자료들이 새로 발굴되었고, 그중에는 그 존재의 유무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5·18항쟁 당시 계엄군의 진압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발굴되었다. 이 자료들에 근거해 2007년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굴된 자료들에 근거하여 5·18항쟁의 전개 과정을 재구성해보겠다.

2. 자료 소개

1980년 5·18항쟁 당시 광주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시민들은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 광경을 목격하거나 들은 뒤 항쟁의 주체로 나섰다. 5월 27일 계엄군이 무력으로 시민항쟁을 강제 진압한 직후부터 시민들은 5·18항쟁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시민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첫째로 5·18항쟁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투쟁이었다. 항쟁의 주체로 참여했던 사람들 뿐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은 그 책무감에서 피 묻은 권력을 비판하였다. 둘째로 시민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장면을 기록하고 정리하였다. 특히 항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관련자들의 구술을 채록해 5·18항쟁이 신군부가 규정하듯이 ‘내란’이나 ‘폭동’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다.

그 첫 시도이자 대표적인 성과가 전남사회운동협의회가 엮은 『죽음을 너머 시대의 어둠을 너머』이다. 5·18항쟁의 전모를 시계열적으로 서술한 이 책은 출간되자 곧바로 정부에 의해 금서가 되고 발행인과 편집자가 구속되며 서점에 배포된 책마저도 압수될 정도로 전두환 정권에게는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입장과는 달리 광주 시민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책은 5·18항쟁의 진실을 밝힌 교과서처럼 읽혀졌다. 정부 당국이 물리적으로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책은 해적판으로 복사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고 읽혀졌고, 5·18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¹⁾

시민들의 구술을 정리한 성과는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에서 간행한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이다. 이 책은 1990년까지의 관련 자료와 구술을 정리한 성과물이다. 또 구술 뿐 아니라 각종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군 측 자료들을 정리함으로써 구술의 가치를 더욱 높여줬다. 다만, 구술 채록이 주로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탓에 상대적으로 계엄군의 동향과 입장을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시민들의 기록과는 달리 시민들의 항쟁을 진압했던 계엄 당국의 기록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나마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자료들도 일부 유실되거나 조작된 흔적이 있다. 최근 계엄 당국의 자료들이 새로 발굴되었다.

계엄 당국의 관련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광주의 계엄 임무를 실행한 군대(2군사령부, 전투교육사령부, 31사단, 특전사령부, 제3공수여단,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의 자료가 있다. 2군사령부의 「광주권 총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은 일지는 아니지만 2군사령부가 전투교육사령부에 내린 명령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경진압의 배경과 진압작전 단계별 주요 경과를 검토할 수 있는 명령과 계엄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담겨있다. 전투교육사령부(이하 ‘전교사’로 줄임)의 일지는 몇 가지가 남아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발굴된 일지 외에도 전교사 작전국에서 작성한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가 있다. 이 자료는 전교사가 파악한 광주 시내의 동향 및 계엄군의 동향이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5월 17일 이전에 전교사에서 진행한 작전계획 및 계엄군의 진압과정, 5월 20일 발표 등이 기록되어 있다. 31사단의 일지는 광주시내 동향과 31사단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계엄군이 시내에 주둔한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보고와 5월 27일 이후의 보고로 구성되어 있다.

전남도경찰국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보고문건(주로 일지)이 있다. 전남도경의 자료는 경찰이 강경하게 진압하지 않았던 이유가 담긴 자료이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광주지검의 자료는 일지지만 항쟁과 관련한 중요 사실은 시기별 변화에 따라 보고되었다. 중요한 상황(예를 들어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표)은 다른 자료들에 비해 비교

1) 심지어 외국으로까지 그 책은 전파되어 5·18항쟁의 진상이 알려졌다.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1999.

적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또 사망자 수습 업무를 검찰이 담당했기 때문에 시신 수습과정 및 5·18항쟁기 사망자의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변동 상황에 또 광주 전남 계엄사령부였던 제2군사령부에서 작성한 각종 지시 사항과 '상무총정작전'을 입안부터 완료 단계까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문서철(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 작성), 계엄사령부에서 하루 상황을 종합한 「총정일일업무주요사항」이 있다. 이외에도 전남합수단에서 작성한 각종 명단(연행자와 부상자, 훈방자, 구속자 명단),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명단(검안위원회의 사체검안 명단)과 사망자의 일자별 상황, 부상자의 부상 부위 및 연령별 분류 기준 등의 자료가 있다.

5·18항쟁기 광주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한 기관은 보안사령부였다. 우선, 광주 현지의 505보안부대(부대장 : 이재우 중령)가 있다. 보안부대는 본부는 당시 광주시 화정동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광주 시내 금남로에도 사무실이 있었다. 보안부대는 계엄업무와 관련하여 군대(계엄군), 경찰, 검찰, 각급 행정기관(전남도청, 광주시청, 광주시 동구청)으로부터 올라온 정보를 취합하였다. 광주 현지의 505보안부대 뿐만이 아니었다. 서울의 보안사령부에서도 광주로부터 올라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였다.

다음으로 행정관서의 기록이다. 전남도청과 광주시청, 동구청의 자료가 대표적인 자료이다. 당시 전남도청과 동구청은 5·18항쟁의 중심지였던 금남로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어떤 자료보다도 귀중한 자료이다. 당시 이 자료들의 작성자들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군의 자료와는 달리 행정관서의 자료는 상황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던 까닭에 군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교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외에도 검찰의 자료가 있다. 당시 광주 전남의 상황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취합해 법무부에 올린 보고이다. 기본적으로 날마다 작성되었으나 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몇 차례나 보고가 올라간 경우도 있다. 또 검찰은 업무의 특성상, 다른 자료들과는 달리 사망자들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이 직접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정리한 정보 외에도 시신 수습과 관련해 검찰이 검안을 담당할 탓에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기록되어 있다.

3. 5월 18일 이전의 군부대 이동과 초기 진압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정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부터 신군부는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려고 계획하였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통해 군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앙정보부는 ‘북괴 남침설’을 조작해 5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선포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국무회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사전에 군대는 시위 진압에 동원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군부는 1980년 2월부터 후방부대를 중심으로 ‘충정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시위 진압에 나설 때의 지침이 마련된 상태였다.²⁾

시위 진압에 군대를 동원하려던 신군부의 계획은 5월 초순부터 실행에 옮겨졌다. 5월 6일 국방부에는 소요진압부대로 해병 1사단 2개 연대의 사용을 건의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 안건은 5월 9일 승인되었다. 5월 7일 11공수특전여단과 13여단이 각각의 주둔지를 떠나 서울 인근의 김포와 거여동으로 이동하였다. 5월 10일 소요진압을 공중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헬기(500MD, UH-1H)에 가스 살포기 사과탄 및 조작병 등을 탑재한 채 대기시켰다. 5월 14일 8시 50분에 시위진압 부대의 투입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날 특전사령부 지휘 아래 있던 7개 여단에 출동준비 지시가 내려졌다.³⁾

광주에서도 충정작전을 준비하려는 지시와 작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5월 10일 14시 56분 2군사령부는 전교사에 ‘2군 학원소요에 대한 증원계획지시’를 내렸다. 이 명령은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을 때를 대비한 병력 배치 지시였다. 구체적으로 전북대에는 7공수여단 제32대대, 충남대 31대대, 전남대와 광주교대 제33대대, 조선대와 전남대 의대 제35대대가 배치하도록 지시되었다.⁴⁾ 5월 14일 KBS, 전일방송, MBC, CBS 등 광주 시내의 주요 보안시설에 31사단 병력이 배치되었다.⁵⁾ 5월 14일 전교사 사령관은 5월 18일의 작전에 대비해 주요 목표물

2) 1980년 2월 충정훈련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박만규, 「신군부의 광주항쟁 진압과 미국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1호, 200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12~217쪽.

3) 계엄사령부, 「충정상황」 1980.

4) ‘5.17조치’가 내려진 직후 전북대에는 31대대, 충남대는 32대대가 배치되었고, 광주는 이 지시대로 병력이 배치되었다.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 1980. 5. 10.

5) 31사단, 「작전상황일지」 (1980. 5. 13~5. 28).

을 파악하도록 예하 31사단(전북)과 35사단(전남)에 각각 지시하였다. 또 이날 10시 45분부터 11시 20분까지 전라남도 도지사실에서는 학원사태 대책회의가 열렸다.⁶⁾ 5월 15일 17시 5분에는 전교사의 2.5톤 트럭 31대가 7공수여단으로 지원나갔다.⁷⁾ 같은 날 3관구사령부(대전)와 35사단에서도 각각 19대와 18대의 차량을 지원하였다.⁸⁾ 5월 15일 충청작전 지휘조가 훈련을 실시하였다.⁹⁾ 이렇듯 '5. 17조치'가 공포되기 전부터 군에서는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에 대비한 준비가 착착 이루어졌다. 즉 '5.17 조치'가 있기 전부터 병력 이동 준비가 마쳐진 상태에서 5월 17일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국무회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마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 조치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 대변인이 공식 발표하기 전인 5월 17일에도 2군사령관은 구두로 “충청작전 유효, 5. 18. 00:01를 기해 불순분자를 체포, 5. 18. 04:00 이전 주요 학교 점령”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날 17시 30분 ‘부대이동 및 작전준비 지시’를 각 관구 작전참모와 해병대사령부, 7공수여단에 내렸다.¹⁰⁾ 이어 19시 15분에 ‘충청작전 지시 80-2호(작상전 414)’와 22시45분에 ‘학교 점령시간 변동 지시(육본지시에 의거)’를 내려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¹¹⁾ 또 이날 전국 각지에서 합수단 소속 수사관들이 예비검속 대상자들의 일제 검거에 나섰다. 이 모든 조치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5월 17일 24시 이전에 이루어졌다.

당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상 이회성 명의의 계엄 포고령 10호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포고문만으로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확대되는 이유는 최규하 대통령 명의의 특별성명에 분명하게 반영되었다. 이 성명에는 “국내적으로는 계속되는 사회혼란을 이용한 북한공산집단이 대남적화책동이 날로 격증되고 우리사회 교란을 목적으로 무장간첩의 지속적인 침투가 예상”되

6)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 1980. 5. 14. 이 회의의 참석자는 전남도지사, 전남대 총장, 조선대 총장, 중앙정보부 광주지부장, 광주전남 합수단장(505보안부대장), 전남도경찰국장 등이었다.

7) 특전사, 「충청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 1980. 5. 15.

8) 육군본부, 「작전상황일지」, 1980. 5. 17. 20:54.

9) 전교사,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 1980. 5. 16.

10) 2군사령부, 「광주권 충청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1) 2군사령부, 위의 자료. ‘작상전 414호’는 “5.18. 00:01부로 충청작전 지시 80-1호 유효, 5. 18. 04:00 이전에 학교 점령” 이었고, ‘학교 점령 시간 변동 지시’는 “04:00 이전 점령을 02:00까지로” 였다.

며 “우리 학원의 소요사태 등을 고무, 찬양, 선동함으로써 남침의 결정적 시기 조성을 획책하고 있”다는 정세 인식 아래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불가피성을 발표하였다.¹²⁾ 이것이 당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병력을 배치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근거였다.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 병력의 배치현황에서 볼 때 대학가의 시위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각지 201개 지역에 총 23,860(2,129/21,731)명의 계엄군이 배치되었는데, 이 중 92개 대학에 계엄군 병력 중 93%인 22,342(1,865/20,477)명이 배치되었다. 반면 국가 보안시설 109개에는 2,395(144/2,254)명만 배치되었다. 병력배치 비율만으로 볼 때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유는 대학가의 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즉 신군부는 1980년대 초반 이른바 ‘서울의 봄’ 시기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켰고, 이 때문에 국가 보안시설 보다 수가 적은 대학가에 계엄군의 대다수 병력을 배치하였다.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즉자적인 반발은 전남대 정문 앞에서 터져 나왔다. 일요일인 까닭에 도서관으로 향하던 학생들과 휴교령이 공포되면 학교 앞으로 모이 자던 5월 16일의 약속 때문에 전남대 정문 앞에는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학생들이 모여들자 전남대 정문 앞에서 경계 중이던 공수부대원들이 곧바로 강제 해산에 나섰고 학생들은 돌을 던지며 저항하였다. 하지만, 잘 훈련된 공수부대원들의 강경한 진압 때문에 더 이상의 저항이 불가능해지자 학생들은 11시경에 해산한 뒤 광주 시내로 향하였다.¹³⁾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은 전남대 정문 앞에서 시위가 있던 그 무렵 금남로와 충장로에서도 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각종 자료와 사람들의 구술에 따르면, 전남대 정문 앞 시위는 10시에 발생해 11시경에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강제 진압 당하였다. 하지만, 전남대 정문의 학생들이 해산되던 11시경부터 금남로에서도 150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전대생으로 보이는 150명이 계엄해제를 외치며 관광호텔 및 우체국을 지나 충장로쪽으로 스크럼을 짜고 ‘계엄해제’를 외치면서 손에 벽돌을

12) 계엄 포고령 10호와 특별성명은 다음에 전재,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편,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1997, 19~20쪽.

13)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1980, 5, 18.

취고”라는 보고처럼¹⁴⁾ 광주 시내에서도 시위가 발생하였다. 한 연구자가 의문을 제기했듯이¹⁵⁾ 전남대 정문과 금남로의 거리(약 3.6km)를 감안할 때 전남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과 금남로의 시위 대열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광주 시내로 진출한 학생들은 ‘5.17조치’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11시 40분경 전남대생 500여명이 금남로 카톨릭센터 앞에서 “계엄철폐,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그로부터 한 시간 쯤 뒤에 학생들은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학생들의 가두시위가 벌어지자 경찰은 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전남도경찰국 안병하 국장은 시위 학생들을 연행도록 지시하면서도 동시에 연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시하였다.¹⁶⁾

온건한 시위진압을 지시했던 전남도경찰국장의 명령과는 달리 5월 17일 2군사령관은 “공수부대 시내에 출동, 융통성 있게 운영, 전 가용 작전부대 투입, 주모자 체포,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는 명령을 하급 부대에 지시하였다.¹⁷⁾ 5월 18일 이전부터 학생들의 가두시위가 발생하면 공수부대를 시내에 투입하도록 결정한 상태였고, 공수부대원들에게 가혹한 진압작전을 명령한 것이다.¹⁸⁾ 다음날에는 포고령 위반자는 가용수단을 동원해 엄중 처리하며, 소요자는 최후의 1인까지 추격하여 타격 및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¹⁹⁾ 특히 당시 계엄부사령관인 육군참모차장은 전남대의 소요에 대해 보안사령부계통에서 전교사 사령관에게 지휘 조언하여 강력하게 다루도록 하도록 지시하였다.²⁰⁾ 즉 계엄사령부의 상층부를 구성한 지휘관들은 강경하게 광주의 시위를 진압하도록 명령하였다.

시위진압에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은 광주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유신체제 말기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이 발생했을 때도 이미 공수부대를 투입시켜 시위진압

14) 505보안부대, 위의 자료.

15) 김영택, 「5월 18일, 광주-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 2010, 역사공간, 246~247쪽의 주10)번을 참고.

16) 이 때문에 안병하 전남도경찰장은 자진사퇴 형식의 강제 해직을 당하였다. 안병하 도경찰장의 행적과 합수부 처결에 대해서는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66~67쪽을 참고.

17) 2군사령부, 「광주권 총정적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980

18) 계엄령 아래에서 가혹한 진압을 명령한 것은 이미 부마항쟁을 진압한 선례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앞의 보고서, 64쪽.

19) 「총정업무 일일주요사항」, 1980. 5. 19.

20) 보안사령부, 「광주사태일일속보철」 1980. 5. 19. 원문은 다음과 같다. “계엄부사령관 지시사항 - 80. 5. 18 계엄부사령관은 전남대학교 소요에 단호한 계엄사의 조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보안사령부 계통에서 전교사령관에게 지휘 조건, 강력하게 다루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음.”

한 선례가 있었다. 특히 부마항쟁을 진압한 뒤 작성한 평가서에는 ‘초등단계에 신속하게 진압하며, 군이 진압을 위해 투입되면 인명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타격 데모대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함으로서 군대만 보면 겁이 나서 데모의 의지를 상실토록 위력을 보여야’한다며 강경 진압을 조장하고 있다.²¹⁾ 1980년 5월 18일 오후 서울의 영등포에서 학생들이 시위가 발생하자 제9공수여단 52연대가 출동해 진압하고 88명을 연행한 뒤 철수하였다. 그런데, 5월 18일 아침 성균관대에 주둔한 제13공수여단 병력이 기숙사 학생들을 구타하자 구타를 금지하는 지시가 내려졌다. 광주에서와는 달리 서울의 계엄군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과격한 진압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아마도 여론을 의식한 지시였을 것이다.²²⁾

학생들이 시내에서 시위를 계속하자 12시45에 31사단은 전남대와 조선대에 주둔한 7공수여단 병력의 출동준비 지시(작전명령 1호)를 내렸다.²³⁾ 7공수여단 33대대와 35대대에 최소경계 병력만을 남겨두고 시위 진압을 위해 출동하라는 지시였다.²⁴⁾ 오후 2시 30분 조선대에서는 31사단장 주재 아래 7공수여단 대대장 및 경찰서 경비과장들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열렸다.²⁵⁾ 이후 오후 3시 40분에 7공수여단 33대대(35/267)와 35대대(26/196)가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다.²⁶⁾ 7공수여단 33대대와 35대대가 광주 시내로 출동한 시각은 각각 3시 40분과 3시 50분이었으며, 금남로와 충장로로 이동한 시각은 오후 4시였다.²⁷⁾ 오후 4시 5분에 전남대에 주둔했던 병력은 카톨릭센터로 출동하였고, 오후 3시 34분에는 조선대 주둔 병력이 충장로로 출동하였다.²⁸⁾

잘 알려졌듯이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강력하게 학생 시위를 진압하였다. 그러나 5·18 초기 상황을 기록한 계엄 당국의 자료에는 학생들의 시위와 군경의 진압이 기록되었으나 공수부대원들의 진압과정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엄군의 자료만으로 시위진압이 얼마나 가혹했는가를 짐작키는 어렵다. 다음의 보고는 당시 광주 시내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한 계엄 당국의 몇 가지 예이다.

21) 보안사령부, 「부마지역학생소요사태교훈」, 1979.

22) 「충정상황」 1980. 5. 18.

23) 보안사령부, 「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 1980. 5. 18.

24)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1980. 5. 18.

25)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1980. 5. 18.

26)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1980. 5. 18.

27) 7공수여단, 「전투상보」.

28) 31사단, 「작전상황일지」, 1980. 5. 18.

- 전대생으로 보이는 150여 명은 관광호텔 및 우체국을 지나 총창로 쪽으로 스크럽 짜고 "게엄해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손에 벽돌을 쥐고 튀어나가고 있음(5. 18, 11:00)/학생 300여명은 지산동파출소에 난입, 유리창 30개 출입문 2개 책상 5개 전화기 4대 싸이카 2대를 소실시키고 경찰 제지로 도주(5. 18, 16:40).²⁹⁾
- 현재 시위학생 100여명 동구 동산파출소 점거, 유리창 파손후 지산파출소 쪽으로 향하고 있음(5. 18, 16:15).³⁰⁾
- 전남대생 500여명여 11:40분 현재 카톨릭 센터 앞에서 손에 돌을 들고 전00 물러가라, 게엄해제 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어 현재 경찰과 대치중. *7공수 33대대가 출동 예정.³¹⁾
- 80.5.18 10:50 동교(전남대)정문에서 학교에 들어가려고 전대생 200명과 이를 제지하는 계엄군 사이에 투석전이 벌어져 이에 쫓긴 학생들이 광주시 신안동 소재 대한통운앞 등 시내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모인 학생 800여명과 합류하여 11:50경 광주시 금남로 소재 카톨릭센터 앞으로 진출 "비상게엄해제하라, 전두환 물러가라"는 등 프랑카드를 달고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하자 경찰이 이들을 포위 최류탄을발사하며 강제로 분산시켜 이에 쫓긴 학생들이 불뿔이 흩어져 달아나면서 돌을 던져 총창로 파출소 유리창 7매, 산수동 파출소 유리창 20매를 파손하였고, 광주경찰서에선 주모자등 검거 중에 있음. 끝.³²⁾
- 현재 시위학생 100여명 동구 동산파출소 점거, 유리창 파손후 지산파출소 쪽으로 향하고 있음(5. 18, 16:29).
- 300여명 지산동 파출소의 유리창 30매, 출입문 2개, 책상 및 의자 5개, 전화기 4대를 파손하고 싸이카 2대, 자전거 4대를 몽거졌음(5. 18, 16:40).³³⁾
- 산발적으로 증가 합세된 1,000여명의 학생은 도청 인근 노동청 앞에서 경찰과 계엄군에의 격퇴 분산 도주. 10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경찰과 대치중(5. 18, 17:30).³⁴⁾
- 약 1,000여명 학생 광주시 광산동 노동청 앞에서 시위, 군경 합동진압중.³⁵⁾
- 100여명의 학생 및 시민들이 제일은행 앞에서 계엄군과 투석중(5. 18, 17:30).³⁶⁾

위의 몇 가지 예와 같이 계엄 당국의 자료는 학생들의 시위가 과격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반면 상대적으로 계엄군은 단순히 출동했다는 식으로 서술함으로써 공수부대원들의 강경한 진압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보안사령부 자료 중에는 계엄군

29) 505보안부대, 앞의 자료, 1980. 5. 18.

30)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5. 18.

31)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 1980. 5. 18.

32)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5. 18.

33)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5. 18.

34)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1980. 5. 18.

35)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5. 18.

36)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1980. 5. 18.

의 과잉진압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 보안사령부는 5월 2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5월 18일과 19일의 소요에 따른 인명 피해 사항으로 경찰 69명(중상6, 경상 63), 민간인 1명 사망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인명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³⁷⁾ 또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 병력이 체포 위주의 강력한 진압작전을 전개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광주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였다. 7공수여단 33대대는 오후 4시 30분에 진압작전을 종결할 때까지 103명을 체포하였고, 35대대는 오후 7시에 진압작전을 종결해 173명을 체포하였다. 또 5월 19일 새벽 1시 50분에도 광주 시내의 가택을 수색하기도 했다.³⁸⁾

계엄 당국의 자료와 달리 공수부대원들의 폭력적인 진압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당시 전남도청을 비롯한 행정관서의 보고이다. 전남도청의 「5·18사태 주요 사건일지」에는 공수부대들이 학생이나 학생 차림 젊은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 연행하며, 혹독(酷毒)한 진압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흥분 분개하고 있다고 기술되었다.³⁹⁾ 금남로에 위치한 광주시 동구청이 작성한 「5·18사태일지」에는 당시 금남로의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었다.⁴⁰⁾ 5월 18일 밤 9시경 조선대학교 입구의 철로변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지나가는 학생들을 총개머리판으로 1시간 20분 동안 구타했다고 적혀 있다. 또 전남도청의 기록에는 “(5월 19일 오전 7시 : 인용자)전대, 조대 및 전문대 등 공수부대 주둔 삼엄한 경계. 시내 각 파출소에 현역군 배치 경계. 공수부대 2인조로 시내 순찰. 학생통행완전통제. 도청광장 통행 차량통제(택시 제외)”라고 하여 당시 광주 시내의 분위기가 얼마나 삼엄했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5월 18일 밤부터 광주 시내에는 “학생들이 많이 죽고 민주주의가 말살되었다. 부녀자의 유방을 도려내고 하니 이대로 참을 수 없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었다.

‘5.17조치’가 발표된 직후 광주에서만 시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서울과 부산 등에서도 산발적인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 5월 18일 서울의 공덕동로터리와 영등포 역 앞에서 소규모 시위가 있었고, 부산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특히 영등포 로터리에서 서울대생들이 시위하였으나 제9공수특전여단 52대대 병력(43/270)이

37)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5. 20. 14:30.

38) 특전사령부,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 1980. 5. 19. 02:00.

39) 전남도청, 「5·18 주요 사건일지」.

40) 광주시 동구청, 「5·18사태일지」(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9~13쪽에서 재인용).

출동해 진압하였다. 5월 19일 18시 10분경에 학생 300여 명이 서울역 앞에서 시위하였고, 경찰이 출동해 10여명을 연행하였다.⁴¹⁾ 육군행정학교 문무대에 입소한 중앙대생들은 “휴교령이 내렸으면 훈련도 받지 않아야 한다”며 계엄철폐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군 부대 내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하자 3공수 여단 병력이 출동하였고, 중앙대 학교 관계자와 교수들이 나서 학생들을 설득하였다. 또 대학생 30여 명이 5월 18일 11시 45분경 동국대 부근 엠버서스 호텔 앞에서 프랭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였고, 동국대 주둔중인 11공수여단이 출동을 준비하였다. 서울 명동의 쌍용빌딩앞에서는 대학생 70-80 여명이 시위하자 5공수여단 22대 병력이 출동하였다. 5월 18일 오전 12시 45분에 세종대에서 교수 20여명과 학생 30여명이 시위를 벌이자 건국대에 주둔한 20사단 62연대 병력이 출동해 교수 3명(미국인 교수 2명 포함)과 학생 4명을 연행하였다. 서울대생 20여명은 5월 19일 중앙극장 앞 도로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서울 사대생 1명은 검거되었다. 5월 19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분 동안 부산 남포동 부영극장 앞에서 부산대 철학과 김영 외 3명이 ‘1.계엄 철폐 2.구속인사 연행학생 석방 3.휴교령 철폐 4. 유신잔당 물러가라. 5. 언론검열 중지 6. 학생행동 오도 말라’는 요지의 유인물을 뿌리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렇듯 광주 뿐 아니라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도 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산발적이며 소규모적인 시위가 발생하였다. 시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과 군이 출동해 진압하였고, 광주와는 달리 다른 지역은 소강상태에 빠져들었다.

4. 시민항쟁으로의 전환과 계엄군의 발포

공수부대원들의 강경 진압이 계속되자 학생들은 돌을 던지며 저항하였고, 시민들 또한 학생들의 시위에 동조하였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각종 일지는 시위 양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5월 18일에는 수 백 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던 시위가 다음날부터 시민들 수천 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다. 시위의 방식도 변화하였다. 5월 18일 돌을 던지다가도 계엄군이 진압하면 도망치던 시위 대열이 5월

41)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5. 19.

19일 오전의 시위부터는 화염병과 각목 및 쇠파이프 등을 들고서 계엄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였다. 5월 18일 오후 금남로 한복판에 벌어졌던 공수부대원들의 잔혹한 진압 광경을 목격자의 입장에서 근심 어린 눈초리로 살펴보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계엄군의 행위를 저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계엄군을 물리치기 시작하였다.

5월 19일 10시 30분경 금남로 광주은행 앞 시위에서 시민들은 길 위에 석유를 뿌리고 화염병 던지며 시위했으며,⁴²⁾ 5월 19일 오후 5시 30분경 학동에서는 계엄군이 학생을 구타하던 도중 민간인들로부터 구타당해 부상당하였다.⁴³⁾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은 공사장 부근의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경찰과 대치하거나 공사장 물건으로 바리케이트를 치며 계엄군에 적극 저항하였다. 이제 시위의 양상이 학생 시위에서 시민들이 참가하는 시위로 전환하였다. 시위의 규모가 확대되고 한층 격렬해지자 5월 19일 오전 계엄군은 광주관광호텔 앞의 시위대열을 장갑차를 동원해 해산시킬 정도였다.⁴⁴⁾

5월 19일 시위에는 시민들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5월 19일부터 대동고, 중앙여고, 광주일고, 광산여고, 정광고 등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특히 당시 중앙여고 학생회장은 “어제(5월 18일 : 인용자) 학생들이 많이 죽고 연행되어 갔다하기에 상의 카라를 떼고 추모식을 하려 한다”고 했으나 교사들의 설득으로 수업에 참가하고 리본을 떼어냈다고 한다. 또 중고등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나 광주 시내에서 전개되던 시위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⁴⁵⁾ 고등학생들의 동요가 계속되자 광주교육청은 5월 20일부터 휴교령을 내렸다.⁴⁶⁾

신군부는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폭도’들의 ‘폭동’이자 ‘내란’으로 규정하였다. 관련 자료에서 ‘폭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때는 5월 21일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5월 20일 밤에 있었던 광주세무서 방화 때부터 ‘난동자’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군대가 국민들을 향해 총칼을 겨누는 것에 항의하며 광주세무서에 불을 질렀다. 이전까지 계엄당국의 자료에는 ‘시민’

42)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5. 19. 10:40.

43)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1980. 5. 19. 17:30.

44)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5. 19. 11:10.

45)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1980. 5. 19. 16:40.

46)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1980. 5. 19;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5. 19.

과 ‘학생’ 또는 ‘군중’으로 서술했으나 이 때부터 각종 자료에는 ‘폭도’ 또는 ‘난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시민항쟁의 성격을 왜곡하였다.

계엄군이 과격한 진압을 전개하자 광주에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었다. 유언비어를 만든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고 사실을 왜곡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5월 19일 밤 8시경 경상도 출신 군인들이 광주를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경상도 변호관을 단 차량이나 가게가 불타기도 했다.⁴⁷⁾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5·18항쟁기 최초 발포가 이루어졌다. 5월 19일 오후 4시 50분경 광주시 계림동 광주고등학교와 계림파출소 사이의 도로에서 장갑차가 운행하던 도중 시민들이 장갑차를 공격하자 당시 11공수여단 63연대 작전장교가 해치를 열고 발포하였다. 당시 조대부고 3학년 김영찬은 그 유탄에 맞아 총상을 입었다. 5월 20일 새벽 1시 보안사령부는 현지 보안부대로부터 “5. 19 고교생 1명(인적사항 미상)이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전남의대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았다”⁴⁸⁾는 보고를 받았다. 505보안부대는 “관내 4개 파출소 파괴 집결 데모대가 쇠파이프 및 면도칼을 소지했던 점으로 보아 특정 배후 조직에 의한 조직적이고 기동력 있는 데모대로 판단”하며, “데모 진압병력에게 실탄을 미지급코 있고 경계병력만 1인당 10발씩을 분출, 장교가 통합 보관코 있을 뿐 아니라, 5. 19. 발포 사실 전무하였음을 감안할 때 고교생은 특정 데모세력에 의해 무성 권총으로 사격, 계엄군이 발포한 것으로 선동키 위한 지능적 수법”으로 분석하였다. 계엄사령부도 「고교생 총상자 확인 결과」에서 “김영찬(조대부고 3년, 19), 5월 19일 17:00 광주시 계림동 5거리에서 데모대에 가입. 장갑차에 방화하려다가 복부 관통 상해를 입고, 전남대 병원에 후송. 총탄 출구가 입구보다 적으며 다수의 파편이 박혀 총기 제원 판단 곤란”⁴⁹⁾ 판단하였다. 이렇듯 군에서는 발포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것이 계엄군의 행위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강경 진압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하고 금남로를 비롯한 광주 시내 곳곳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5월 18, 19일의 진압에 따른 상흔을 지우려고 5월 20일 새벽 6시 20분 전교사 병력 143명(장교 6명, 사병 137명)과 트럭 15대가 출동해 금남로를 청소한 뒤 9시경에 부대로 복귀하였다.⁵⁰⁾

47)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5, 19.

48)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 1980, 5, 20.

49) 계엄사, 「총정업무 일일 주요사항」 1980, 5, 20.

50) 전교사, 「작전일지」 1980, 5, 20.

5월 20일 저녁에 있었던 차량시위는 5·18항쟁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 이날 저녁부터 시위에 참가하는 숫자가 수만 명 단위로 많아졌을 뿐 아니라 시위 양상도 과격하면서도 공세적으로 변하였다. 시민들은 왜곡보도를 일삼았던 광주 MBC건물과 광주 세무서에 방화하고, 광주소방서에 돌을 던지고 공수부대를 광주 시내에서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4-5만 명 추정되는 시위 군중이 광주소방서에 투석, 각종 기물파손 후, 전남대학으로 가자면서 종합터미널 앞을 통과 계엄군과 대치중. 시위자들의 방화로 MBC는 전소되었음. 기타사항은 파악이 곤란할 정도로 마비 상태”로 보고하였다.⁵¹⁾ 경찰은 5월 20일 밤 시위대가 10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광주 시가지 쪽에서 총성이 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보고 시각은 통행금지 시각을 훨씬 지난 밤 11시 10분이었다.⁵²⁾ 이날부터 계엄 당국의 자료에는 ‘난동자’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였다. 또 시민들과 계엄군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해 사상자가 많아지자 5월 21일 아침 광주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시위 도중 부상한 사람(자료에는 ‘폭도’라고 기술)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도록 호소하였다.⁵³⁾

한편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진압하던 도중에 진압봉이 교체되었다. 11공수여단의 진압봉은 처음에는 부대에서 충정훈련을 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으나 5월 20일부터 서울에서 공수해온 진압봉으로 대체되었다. 이 진압봉은 계엄사령부에서 배분한 것이었다. 계엄사령부는 5월 19일 특전사령부와 2군사령부, 3군사령부 및 수도군단, 제1군단 등에 육군 제1공병여단에서 제작한 진압봉을 수령토록 지시하였다.⁵⁴⁾ 총 10,000개의 진압봉 중 5,438개가 특전사에 할당되었고, 이 중 2,313개가 광주로 공수되었다. 새로 배분된 진압봉은 원래의 진압봉보다 길이가 길어진 것이었다. 서울에서 공수된 진압봉은 5월 20일 오후 3시경 송정리 비행장에 내려져 광주 시내에서 시위진압을 하고 있던 각 공수여단과 전교사에 배분되었다. 3공수여단에 710개, 7공수여단에 420개, 11공수여단에 638개, 전교사에 545개가 각각 배분되었다.⁵⁵⁾

5월 20일 저녁 무렵의 차량시위 이후 광주 시내에서의 시위 양상이 과격해졌을 뿐 아니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5월 20일 9시 50분경 제3공수여단의 대원이

51) 보안사령부, 「광주시태 상황보고」, 1980. 5. 20. 20:40.

52) 보안사령부, 위의 자료, 1980. 5. 20. 23:10.

53) 505보안부대, 위의 자료, 1980. 5. 18. 07:00.

54) 계엄사령부, ‘작상전 80-215호’ (1980. 5. 19.).

55) 3공수여단 「전투상보」에는 730개로 기록되었다. 3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50쪽.

시위대의 차량에 치여 사망하자 제3여단장은 각 대대에 엠 16 실탄 배부 및 장착 지시(1인당 20발)하였다. 또 3여단장은 광주역 앞의 병력을 여단의 예비대가 구출토록 지시해 예비대는 발포하며 구출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발포에 대해 특전사령부나 보안사령부도 발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다만, 31사단과 전교사는 5월 20일 광주역 발포 사실을 파악하였다. 31사단에는 5월 20일 23시 04분에 아세아자동차나 서부경찰서 쪽에서 LMG 연발 총성이 들렸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23시 20분에는 시청 옥상의 공수부대에서 예광탄으로 위협사격을 했다고 보고되었다.⁵⁶⁾ 또 전교사에는 5월 20일 23시 30분에 총성소리가 3, 4발씩 계림동과출소 쪽에서 들린다는 민간인의 신고가 접수되었다.⁵⁷⁾ 이어진 23시 35분의 보고는, 계림동 사무소에서 얼마 전까지 총성이 들렸으나 현재 군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⁵⁸⁾ 그러나 전교사나 31사단은 발포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 군 자료는 발포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한 경향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검찰은 집단 발포를 보고하고 있다. 5월 20일 밤 11시 30분의 보고는 시내에서 총성(공포로 사료됨)이 계속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이 시각은 제3공수여단이 전남대와 광주역, 광주시청 부근에서 시위대를 향해 집단발포 할 무렵이었다.

다음날 새벽 3여단 병력이 광주역에서 전남대로 복귀하며 앞을 가로막은 시위대를 돌파하던 도중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날의 광주역 앞에서 희생된 사상 경위를 보안사령부는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보안사령부에는 제3공수여단이 전남대로 철수하던 도중 근봉으로 구타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초기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들은 대개 계엄군이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해 국군통합병원에 안치하거나 민간병원에 입원 도중 사망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시신은 시민들이 먼저 발견하였다. 5월 21일 새벽 2시 20분경 3공수여단 병력이 광주역을 비롯한 시내 지역에서 전남대로 퇴각한 뒤 광주역 앞에는 희생자들의 시신이 남겨졌다.⁵⁹⁾

이날 새벽 5시 20분경 시민들은 이 시신을 수습하였고, 분노한 시민들은 시신들을 트럭에 싣고 공수부대의 만행을 알리기 시작하였다.⁶⁰⁾ 분노한 시민들은 이른 아

56) 31사단, 「작전상황일지」 1980. 5. 21.

57) 전교사, 「광주사태시 전교사 직전일지」 1980. 5. 21.

58) 전교사, 위의 자료, 1980. 5. 21.

59) 이날 광주역 앞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허봉과 김재화였다. 허봉은 구타당한 뒤 사망하였고, 김재화는 광주역 광장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노영기, 「5·18항쟁기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진혹곡」, 『역사비평』, 2010년 봄호, 역사비평사, 2010, 218~219쪽을 참고.

침부터 손수레에 시신을 앞세우고 금남로로 향하였다. 시민들은 공수부대원들이 시민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리며 시내로 집결하였다. 이날 새벽 5시 45분경부터 시위 군중들이 트럭에 시신 2구를 싣고 시내를 다니며 시민들을 흥분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⁶¹⁾ 이후 시민들은 2구의 시신을 손수레에 싣고 전남도청 앞으로 향하였고, 금남로의 한국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계엄군과 대치하기 시작하였다.

5월 21일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은 전남도청과 전남대 등지에서 계엄군을 광주에서 몰아내려는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특히 전남도청 앞 시위에는 이날 아침 아세아자동차로부터 징발해온 장갑차와 군용 차량이 등장하였다. 시민들은 이날 아침 9시경부터 아세아자동차로 몰려가 군용 차량과 장갑차를 반출해 시위에 참가하였다.⁶²⁾ 이날 10시 10분 현재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금남로에는 10만 여명의 시민들이 모일 정도로⁶³⁾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이 대열 중 약 3만여명은 12시경에 트럭, 짚차, 장갑차 등을 앞세우고 유동삼거리에서 공설운동장(무등경기장)쪽으로 이동하며 “전두환은 물러가라”, “계엄 해제하라”, “연행학생 석방하라”고 외치며 가두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내 중심가인 금남로 뿐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전개되었다.

시민들은 시위를 계속 전개하는 한편 전남도지사와의 면담을 가졌다. 이날 오전 9시 25분 도청수산국장실에서 열린 민관 면담에서 시민들은 ‘계엄군 투입, 무차별 구타에 대한 공개 사과, 연행학생 및 시민 석방, 금일(5월 21일 : 인용자) 12시까지 공수단 완전 철수’ 등을 요구하였다.⁶⁴⁾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12시까지 공수부대를 비롯한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퇴각하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의 장갑차가 계엄군을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남도청 앞과 전남대 정문 부근에서 계엄군은 집단 발포하였다. 각종 자료에는 발포가 이루어진 시각이 오후 1시경인 것으로 기술되었다. 다음은 전남도청 앞 발포를 기술한 각종 자료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한 것이다.⁶⁵⁾

60) 당시 전교사 작전일지에는 5시 20분 광주역전 50m에서 민간인 시체 2구가 발견되었다는 광주역 근무 조역(성명 미상)의 정보가 있었다.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 1980. 5. 21. 05:20.

61)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1980. 5. 21. 06:10.

62)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5. 21.

63)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1980. 5. 21.

64)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1980. 5. 21.

65) 아래의 자료는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앞의 보고서에서 재인용.

- △ 12:55 데모대 도청으로 진격, 계엄군 뚫고, 계엄군 사격(4-5발) 계속 사격, 군인 2, 시민 3 쓰러짐.
- △ 12:58 장갑차와 화염병 공격으로 금남로 저지선 돌파당하고 군경 최후저지선 완전 무너짐, 군경부대 도청 안으로 후퇴.
- △ 12:58 금남로에서 장갑차 2대로 일제공격 개시로 금남로 방어선 무너지고 도청 앞 광장 군중 운집 도청 피함, 계엄군 전원 도청 내곽에서 작전 중.
- △ 12:59 군의 발포로 시위군중 일단 분산.
- △ 12:59 연속 총성(계엄군 공포 난사).
- △ 13:00경 시위대 선두에 있던 장갑차가 시동을 건 후 불시에 계엄군 대열에 돌진하여 선두에 있던 61, 62대대는 피했으나 후방에 위치한 63대대 병사 1명이 압사, 도청을 향해 돌진하여 계엄군은 분산 및 재집결.
- △ 13:05 도청에서 총격전 발생.
- △ 13:05 도청에서 총격, 군인 2 시민 3명이 쓰러져 있음.
- △ 13:07 11여단지역 APC 및 버스 질주, 11여단 1명 사망, 도청 쪽으로 나는 총성 20여발.
- △ 13:10 도청은 현재까지 포위된 상태에서 대치중인바 13:10경 폭도차량이 경찰을 향해 돌진, 통과하여 대응발포 하였음(사상자 다수 추정).
- △ 13:10 도청 앞 대치중 13:10경 폭도의 장갑차 공격으로 계엄군 1명이 사망하고 대응발포로 최소한 고등학생 1명, 민간인 1명이 중상인 것으로 사료됨(미확인).
- △ 13:15 도청 앞에서 노인 2명, 처녀 1명, 학생 4명 사망, 부상자는 상당수.
- △ 13:15 진압부대 도청 안에서 부대 재정비 완료, *기동 1, 2, 3, 118부대 및 기타 동원 부대도 견제, 도청 내에서 부대 재집결 완료.
- △ 13:16 연속 총성, 광주 서부 자체 방어 철저 지시.
- △ 13:17 도지사 선무방송.
- △ 13:20 각 동원부대 소대장 경비과 집결 지시(내곽 경비 배치 및 엄중한 경계 실시 당부).
- △ 13:30 도청 앞 중사 1명 전사(사망에서 전사로 고쳐짐), 폭도가 발사한 총기로 인해(11공수).
- △ 13:30 자위권 발동.
- △ 13:30경 시위대는 도청 감제가 가능한 주변 고층건물(전일빌딩, 지하도 주변, 신축건물 등)에서 계엄군을 향해 사격, 계엄군 부상 1명.
- △ 13:35 도청 앞에서 폭도의 권총으로 11공수 병력 1명 사망, 1명 부상하였으며 계엄군 공포탄 발사로 진압, 폭도 무장으로 무차별 사격 개시(도청 앞).
- △ 13:36 도청 경계중 폭도들이 쏜 권총에 맞은 후 청사에서 추락하여 방어하던 APC에 깔려 현장에서 즉사(63대대), 11공수여단 2명 중태 헬기로 후송(통합병원).
- △ 13:40 무장난동자들이 탈취한 장갑차 1대가 도청앞 분수대 옆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뚫고 도청으로 진출하다가 대치중인 계엄군의 발포로 동 장갑차는 바리케이드 속에 묻히었음.
- △ 14:10 폭도들이 쏜 업총과 권총에 11공수여단 1명 즉사(61대대 3지역대 8중대 하사 권용운).

당시 집단발포를 전후하여 전남도청 앞에서는 시위대와 계엄군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계엄군을 광주시내로부터 몰아내려는 시민들의 실력행사가 있었다. 시민들이 몰고 나온 버스와 장갑차가 전남도청 앞에 있던 계엄군을 향해 달려들고, 시민들이 계엄군 측 장갑차에 불을 붙이자 후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11공수여단 무전병 권용운 일병이 시민측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무렵 전남도청에서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과 함께 계엄군의 발포가 시작되었다. 처음 공수부대원들의 발포는 공포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집결한 상태에서 주변 건물에 있던 저격병들이 조준사격을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시민들을 향한 본격적인 발포가 이루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위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하였다. 군의 자료는 시민들의 발포로 기록하고 있으나 당시 시민들은 아직 무장하지 않은 시각이다. 둘째, 전남도청 앞 발포에 대해 군과 행정관서의 서술이 다르다. 군은 계엄군이 발포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검찰과 행정관서의 기록은 군에서 대응 발포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발포 시각이 오후 1시를 전후한 때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 애국가가 집단 발포의 신호였다고 주장되지만,⁶⁶⁾ 당시 전남도청 자료에는 전라남도 내무국장이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틀었다고 적혀 있다.⁶⁷⁾ 1시를 전후한 때의 공수부대원들의 상황과 이후 발포 경과를 볼 때 타당한 자료이다. 당시 공수부대의 무차별 발포가 이루어졌다면 전남도청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다만, 처음 집단발포 이후 저격수들이 인근 건물에서 조준사격을 한 까닭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이다.

계엄군의 발포가 계속되어 사상자가 많아지자 시민들은 광주와 인근 지역의 예비군 무기고로 가서 자위 수준의 무장을 진행하였다.⁶⁸⁾ 다음은 6월 7일 오전 8시까지 시민들이 반출해간 무기와 계엄 당국이 회수한 무기의 현황이다.⁶⁹⁾

66)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영화 '화려한 휴가'의 전남도청 앞 발포 장면이다.

67) 전라남도, 「5·18사태 주요 사건일지(5. 14.~27.)」, 1980. 5. 21.

68)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있기 전에도 총기류의 반출이 있었으나 아직 실탄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는 시민들이 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69) 이 통계는 5월 27일 '상무총정직전'이 진행되어 항쟁이 끝난 6월 7일까지 보안사령부가 파악한 수치와 회수비율이다. 다른 자료들에도 피탈수가 있으나 대개의 경우 항쟁이 진행되는 도중에 작성되었다. 때문에 이 수치가 비교적 정확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안사령부, 「광주시태 상황보고」, 1980. 6. 7. 08:00.

무기 종류	반출량	회수량	회수비율	미회수
M1	1,281		98.5	18
CAR	3,432	3,078	89.7	354
M16	34	29	85.3	5
권총	42	17	40.5	25
AR	21	23	100	0
LMG	3	3	100	0
50MG	3	3	100	0
업총	395	192	43.5	223
소계	5233	4607	88.1	626
실탄	299,095	122,151	42.1	167,944
수류탄	552	508	92.1	44
차량	554	554	100	0
무전기	220	168	76.4	52

이후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부터 퇴각하는 시각까지 무장한 시민들과 계엄군 사이에 산발적인 교전이 발생하였다. 당시 보안사령부 자료에는, 전남대에서 계엄군과 폭도가 오후 6시 현재 교전중이며 조선대에서는 계엄군이 기관단총을 폭도에게 발사했다고 한다. 또 전남도청에 대기 중인 계엄군과 폭도 사이에 산발적인 교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⁷⁰⁾

한편, 광주의 상황이 악화되자 광주의 실상은 다른 지역으로까지 알려졌고, 광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리려는 시도는 전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있었다. 5월 20일 경기도 인교구 주임신부는 광주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소지했다가 지역 보안부대에 연행되었고, 5월 22일 서울대생 안근석은 서울의 미도파 백화점에서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살포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또 계엄군의 발포로 사상자가 많아지자 광주 시민들을 돕자는 헌혈운동이 진행되었다. 5월 26일 오전 10시 50분경부터 서울 남부 시립병원 혈액원 기획실장 윤기섭은 서울시 종로구 화신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헌혈을 받았는데, 헌혈차량의 차창에는 “광주시민을 위한 헌혈을 요망”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안내문에는 “재경 광주고 동창회 여러분 헌혈을 도움시다. 황폐된 내 고향을 향토애로 도움시다. 헌혈 뒤 헌혈증을 동창회 사무소나 이곳 헌혈차에 제출합시다”고 적혀 있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헌혈 안내문을 철거하고 헌혈차를 병원으로 복귀시키며 윤기섭은 종로경찰서로 연행 조사하였다.⁷¹⁾

70)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5. 21.

71)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5. 26.

5. 계엄군의 외곽봉쇄와 공동체의 회복

광주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자 계엄사령관은 5월 21일 오후 3시 35분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광주에 국한시키기 위해 시민대표와 협상시간을 끝며 선무활동을 실시하고 불순세력을 분리시키며, 군부 지휘체제의 일원화를 기하고 사기를 진작 시키고, 선무활동은 공중에서 방송과 전단을 통해 "나라 장래를 위한 자제와 군이 잘못된 시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설득하며 교도소는 사수하고, 목포, 여수, 화순지역으로 나가는 도로를 차단하고 기타 도시에 선무활동을 하라는 것이었다. 또 3시 50분에 전교사 사령관에게 "폭도가 부대에 침입해도 최대한 제지하고 약간의 피해는 감소하라, 설득할 때까지 최대한 설득하다 그래도 군대에게 확대되면 다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계엄사령관의 지시는 사후약방문격이었으며, 이미 계엄군과 시민 사이에 교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책임회피용 지시였다.

5월 21일 계엄사령관은 항쟁이 광주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광주시 외부로 나가는 도로망을 차단토록 지시하였다.⁷²⁾ 그에 따라 5월 21일 오후 광주시내로부터 철수한 공수부대를 비롯한 계엄군 병력은 다음의 지역을 봉쇄하였다.⁷³⁾

외곽봉쇄 작전부대 및 봉쇄지역(5. 21~5. 24. 09:00)

부 대	병 력	비 고
3공수	265/1,261	광주교도소 경계, 남부 고속도로 차단
7공수	82/604	광주-화순 도로 차단
11공수	163/1,056	광주-화순 도로 차단
20사단	308/4,778	60연대 추가 투입, 광주-목포간 도로 차단
31사단	22/294	자대 주둔
전교사	42/746	자대 주둔
계	882/8,739	5개 진입로상, 6개 차단지역 운영

물론, 이전부터 일부 보안 시설(예를 들어 광주 교도소)에 계엄군 병력이 배치되

72) 2군사령부, 앞의 자료, 1980. 5. 21. 15:33 사태수습을 위한 참모총장 지시(작성전 455호).

73) 계엄사, 「총정 일일주요업무 상황」 1980. 5. 23.

고 있었으나 공수부대가 광주시내로부터 완전히 철수한 5월 22일부터의 외곽봉쇄는 전 단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계엄군에게는 “무기 휴대 폭도의 봉쇄선 이탈 절대 거부, 폭도 중 반항치 않는 자 체포, 반항자 사살, APC 또는 차량을 이용 강습 시도 시는 사살, 현 봉쇄망은 주 도로만 치중치 말고 지선 도로도 장악 폭도 탈출 적극 방지” 하라는⁷⁴⁾ 지침이 내려졌다. 이 지침대로라면 광주시를 빠져나가는 거의 모든 사람 또는 차량은 발포 대상이 되었고, 위의 6개 차단지역 외에도 간선 도로에서도 살상 가능성이 내포되었다. 또 계엄군들에게 많은 실탄이 지급된 가운데 내려진 봉쇄 지침은 사실명령이나 다름없었다. 여기에 광주시를 벗어나서 광주의 실상을 알리려는 시민군이나 광주 이외의 지역으로 피신하려는⁷⁵⁾ 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이 무차별적으로 발포한 까닭에 계엄군이 외곽을 봉쇄한 기간 동안에 사상자가 많아졌다. 5월 22일 오후 1시 전대병원에 가슴에 총상을 입고 입원한 30대 환자는 “시 외곽에서 사복을 입은 베레모에게 총을 맞고 온다”고 말하였다.⁷⁶⁾ 5월 22일 오후 5시 30분부터 광주-송정 간 도로에서는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공단 입구까지 진출해 바리케이트를 친 시민군과 교전하였고, 총격전은 밤 8시까지 계속될 정도로 격렬하였다. 그로 인해 시민군 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였다. 광주 뿐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도 광주시 외곽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 5월 23일 밤 해남 우슬재에서 해남읍으로 진출하려는 시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계엄군의 교전으로 3~4명이 부상을 입어 강진도립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장흥지청장의 보고가 있었다.⁷⁷⁾ 한편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로 철수한 제3공수여단은 연행자 100명을 광주교도소에 가수용하는 한편으로 사망자 시신 6구를 인근의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⁷⁸⁾

우선 시민군은 법원, 공단 입구, 고속톨게이트, 백운동 건물복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다.⁷⁹⁾ 5월 21일 오후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퇴각하자 시민들은 곧바로 계엄군에 의해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해갔다. 시민들은 전남도청 앞에 모여 계엄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당시 군의 보고는 이를 구

74) 20사단, 『총정직전상보(1980. 5. 21-5. 29)』, 1980, 8쪽, 특전사와 각 공수여단(3, 7, 11여단)의 『전투상보』에는 이 지침이 빠져 있다.

75) 5월 26일의 보고에 따르면, 이날 12:00 현재 불만에 떨던 3, 400여 명의 시민들이 작은 길이나 하천 독을 따라 화순방면으로 피산하고 있었다고 한다. 보안사령부, 『광주소요사태』, 1980, 5, 26.

76)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5, 22, 13:00.

77) 광주지검,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 1980, 5, 23.

78) 광주지검, 『광주사태당시 학원동향』, 1980, 5, 22.

79)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5, 22, 18:35.

체적으로 기술하였다.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는 9만 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유신 잔동 몰아내자, 현 정부 물러나라, 꼭두각시 최규하는 물러가라, 전투환은 물러가라” 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시민들은 시민대표를 선출해 “1. 질서 회복 후 계엄군 진입을 불허한다. 2. 이번 사태는 과잉진압에 원인이 있음을 시인하라. 3.이번 사태의 책임을 불문에 붙이기로 보장하라. 4. 정부에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하라. 5. 광주 MBC는 즉각 방송을 재개하라”라며 구속학생들을 석방하면 무장을 해제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계엄군이 물러가자 시민들은 계엄군의 구타와 발포로 희생된 사람들의 시신들을 수습했는데, 검찰은 당시 시신 수습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 5. 23, 11:30 상황보고, 도청 앞 광장에 사체 43구를 가져다 놓고 장례식을 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운집하고 있음.
- 5. 23, 현재까지 파악된 사체는 전남의대 병원에 22구, 도청 앞에 44구 계 66구임.
- 5. 23, 16:00 현재 상황보고, 이번 소요사태로 사망한 숫자를 각 병원책임자에게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음.

병원	숫자	인계
적십자병원	21	5. 22밤 학생들에게 인계 19명
기독교병원	14	5. 22밤 학생들에게 인계 12명
전대병원	29	5. 22밤 학생들에게 인계 14
조대병원	3	1명은 경찰에 인계
소계	67	
교도소가매장	6	
군경 사망	5	
계	78	

- 전일(5. 23.) 보고한 외 추가 사망자는 3명이 파악되었으며, 적십자, 기독교, 전대, 조대병원에 이번 사태로 현재 입원중인 환자는 총계 215명이고, 그중 약 80%는 총상임. 의약품 공급은 약 솜 등 위생재료 부족(적십자병원), 의약품 부족(전대병원), 산소공급두절(전대 및 조대병원) 현상이고 방카C유 부족으로 환자 식사공급이 어려운 실정임(조대병원).
- 5. 24, 상무관에 입관 안치된 사체는 44구(원문에는 340이나 오기임), 약 20구를 입관 중에 있으며 외신기자(동경주재 독일인) 등이 사체 및 유족 모습을 촬영중임.
- 5. 25, 17:30, 데모군중 과격파 때문에 수습을 위한 대회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속

한 총기 인수 및 치안회복 전망은 불투명한 바 15:00 현재 상무관에 안치된 사체 48구, 도청안에 신원 미확인 사체 20구가 있고, 시민들은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있으며 17:00경부터 도청 앞 광장에서 시민궐기대회를 개최중임.

- 5. 25. 13:00 현재 이번 사태로 인한 사상자로 판명된 현황은 사망 97명(경찰 4, 민간 89, 군 4), 입원 244명(종합병원 217, 개인병원 27)임. 군부대에 있는 사체검시를 위하여 당청 검사 3명을 군부대에 파견하였음.
- 5월 25일 10:00 현재 상황보고 : 09:50 계엄군법회의에서 군부대에서 관리중인 사체에 대한 검사의 입회 요청이 있었음(민간인 사체 14구).
- 5월 24일 18:00 현재 상황보고 - 16:45 현재 도청 상무관에 입관 안치된 사체는 54(45구), 도청안에 있는 신원 미확인 사체 4구는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확인토록 하고 있음.

5월 24일 검찰총장은 광주지검장에게 사체검안에 검사가 입회하며 총상 사망자는 총기 종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사인을 규명토록 지시하였다.⁸⁰⁾ 5월 24일 광주지검장은 광주교도소장에게 5월 21일 가매장한 사체를 발굴 이동할 때는 군 당국과 협의 아래 광주지검 검사가 감시토록 지시하였다. 5월 25일 대검 공안부장은 법무장관의 지시사항으로 주동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토록 지시하였다. 또 5월 25일 계엄사령부 광주분소장(전교사 사령관 : 인용자 주)은 광주지검장에게 전화해 군부대 보관 사체 검사업무를 위해 검사 파견을 요청하며 민간인 사체 검시에도 군 수사관이나 가장 가까운 곳의 지휘관 참여를 위해 민간인 사체 숫자 및 위치를 알려주도록 요청하였다.⁸¹⁾ 그리하여 광주지검 검사 3명이 상무대에 파견되어 사체 16구를 검시한 뒤 귀환하였고,⁸²⁾ 5월 25일 31사단 해남부대에 민간인 사체 2구는 장흥지청 검사가 검시한 뒤 M16 총상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하였다. 5월 27일부터 검찰은 전남도청 구내와 상무관에서 총 89구의 사체를 검시하였고, 5월 28일에는 광주교도소 인근 공동묘지에 가매장된 사체 6구를 검시하였다.

계엄군이 물러난 광주는 평화롭고 점차 공동체를 회복해나갔다. 당시 광주 시내에서는 피가 부족하다는 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나서 피가 남아돌 지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보고에 그대로 나타났다. 검찰은 “각

80) 5월 25일 검찰총장은 광주지검 검사장에게 사체검시 때 신원미상자의 지문을 파악하고 신원판별을 위해 사진을 촬영토록 지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토록 지시했다.

81) 광주지검,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 이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은 5. 25. 12:20에 이루어졌다.

82) 검시내역은 CAC(전교사 : 인용자), 통합병원, 31사, 3개소에 민간인 사체 16구, 사망원인은 총상 7(M16 4, 칼빈 3), 자살 4, 타박상 5이고 신원미상자는 8구.

병원의 실정은 의약품이 떨어져가고 있고(전남대 병원), 혈액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량이 많아져서 헌혈을 중지할 정도(적십자 병원)로 기술하고 있다. 또 계엄군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전남대 병원과 적십자 병원은 많은 총상 환자들로 넘쳐났다. 특히, 적십자병원은 전남도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인 까담에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실려 갔는데 피가 부족하다고 호소하자 총장로와 금남로에 있던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나선 결과였다. 당시 적십자병원은 구급차를 내주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 ‘헌혈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5월 23일 적십자 병원은 피가 남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헌혈운동’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계엄군의 총격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5월 24일자 검찰 보고에 계엄군의 구타와 발포로 총 215명의 환자가 조선대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그중 80%가 총상 환자였다. 환자들이 많아지자 광주 시내 각 병원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적십자병원은 약솜 등 위생재료 부족하였고 전남대 병원도 의약품이 부족하였으며, 조선대병원은 산소공급이 두절되고 병커 C유 부족으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공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5월 22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는 “껍데기 최규하 정부 물러가라, 살인마 전투환 물러가라, 구국 과도정부를 민주인사로 구성하라, 구속 학생 및 민주인사 석방, 계엄 즉각 해제, 휴교령 폐지하라, 언론은 광주 시민 상황을 정확히 보도하라, 전남의 지역감정을 배제하라, 천인공노할 발포명령을 철폐하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이 발표되었다. 5월 22일부터 전남도청 앞에 모인 시민들은 11명의 시민 대표들을 뽑아 계엄 분소에 파견하였다. 당시 계엄사 보고에는 시민들이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1. 질서 회복후 계엄군 진입을 불허한다. 2. 이번 사태는 과잉진압에 원인이 있음을 시인하라. 3.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불문에 붙이기로 보장하라. 4. 정부에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하라. 5. 광주 MBC는 즉각 방송을 재개하라’는 요구조건과 구속학생을 석방하면 자진 무장 해제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고되었다. 5월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전교사 부사령관실에서 계엄군과 시민 대표들 사이에 협상이 열렸다. 이종기 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시민 대표들이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던 국군통합병원 앞으로 소송 100여정을 들고 와 계엄사령부와의 대화를 신청해 이루어진 협상이었다. 시민들은 먼저 ‘시내 수습 이전에 계엄군의 시내 진입 금지, 5월 18, 19일의 과잉진압 인정, 연행자 석방, 사망자에 대한 보상 및 부상자 치료, 사태

수습 후 보복 금지, 방송 복구 후 사실보도, 시민들의 무장해제, 시민들을 폭도로 부르지 말 것, 자극적 언사 금지, 허위보도 방지, 연행학생 즉시 석방'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5월 23일 오전 7시가 기한이었으나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외에도 과잉진압, 연행자 석방, 사망자 보상, 보복 금지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으나 군 측의 결론은 “폭도들의 요구사항은 불가”한 것이었다. 즉 계엄군의 요구는 우선적으로 시민군의 무장 해제와 무기 반납이었다.⁸³⁾

이렇듯 계엄군 측이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시민 대표들의 수습 노력은 무산되고, 항쟁의 지휘부도 변화하게 되었다. 당시 보안사령부 보고에는 “오전까지는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계엄군에게 호응하는 듯 했으나 하오부터는 도청 및 도경 소속 직원 출입까지도 강력 통제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파악하였고, 당시 광주 시내에 침투해 활동 중이던 보안사령부 홍성률 대령도 이 같은 상황 변화를 감지하였다. 5월 22일 오후 6시 30분 보고에서 그는 “극렬 폭도들의 약탈과 강제 동원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쌓여 극히 지쳐있고 야음을 이용한 폭도들의 각종 횡포로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계엄군들의 소탕을 외면하고 있다 하여 계엄군에 대한 원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런 계엄군을 믿고 어떻게 방위세를 낼 수 있느냐는 등 흥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여 달라진 광주 분위기를 간접으로 반영하였다.⁸⁴⁾ 계엄군은 민군 협상에서 시민 대표들은 반납받은 무기들을 가져오지 않은 채 학생들의 석방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군에서는 시간만 끌려는 수단으로 판단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계엄군의 외곽봉쇄가 계속되자 광주 시내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였다. 이 때문에 5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전남도청 부지사실에서 광주시장을 만난 시민들은 유류와 장례비, 식량 등을 지원해주도록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금남로를 제외한 광주시내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도록 요구하고, 아울러서 치안유지는 경찰이 하며 장례식은 도민장으로 치러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미 ‘상무충정작전’이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이었다.

83) 계엄 당국은 시민 대표들이 반납 받은 무기를 가져오지 않고 학생 석방만을 요구한다며 시간만 끌려는 수단으로 판단하고 협상이 교착상태(결렬)로 판단하였다. 보안사령부, 「광주시태 상황보고」 1980. 5.23 08:05.

84) 보안사령부,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전문」 1980. 5. 23. 23:45.

6. 상무총정작전

광주에서 계엄군이 철수하여 광주 외곽을 봉쇄한 가운데 계엄사령부는 최종 진압 작전을 구상하였다. 5월 22일 2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총정작전 계획’을 건의했으나 참모총장은 무력으로 평정하면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 곤란하고, 민간인을 인질로 했을 때는 대처가 곤란하며 한미 간의 협의 등의 이유를 들어 5월 24일까지 진압작전을 연기하도록 지시하였다. 같은 날 2군사령관은 광주시 외부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라고 지시하였다.⁸⁵⁾

5월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육군참모총장 접견실에서는 최종 작전을 구상하는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본부와 2군사령부의 주요 간부들이었다. ‘광주사태 소탕작전회의’로 이름 붙여진 이 회의는 광주에 대한 무력 공격을 예정한 2군사령부의 진압계획안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무력 진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전남 출신으로 육군본부 보급운영처장인 박춘식 준장은 자신이 직접 군복 차림으로 광주에 들어가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월 23일 2군사령관은 5월 24일 새벽 2시를 기해 주모자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총정작전의 실시를 건의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5월 25일 새벽 2시 이후 작전을 연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상무총정작전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는 전교사를 방문해 현지 지휘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지휘관들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광주를 진압하도록 희망하였다.⁸⁶⁾ 5월 25일 12시 5분에 2군사령관은 ‘총정작전 유효지시(작전성 517호)’라는 지시를 내려 5월 27일 0시 이후 전교사 사령관의 책임 아래 진압작전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⁸⁷⁾ 결론적으로 광주에 대한 무력 진압의 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이날 오후 6시 최규하 대통령은 상무대를 방문하였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군의 개입이 필요한가를 전남도지사와 도경국장에 질문했는데, 전남도지사는 군의 개입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변하자 전교사 사령관은 억박지르듯이 “이보! 군이 필요한 거요, 안 한거요? 그러면 군은 완전히 손을 떼겠소. 지사로서 책임 회

85) 2군사령부, 「광주권 총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980. 5. 22.

86) 당시 참석한 지휘관들은 전교사 사령관, 특전사 사령관, 3개-3, 7, 11-여단장, 20사단장, 보안사령부 최예십 준장 등이었다.

87) 2군사령부, 「광주권 총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980. 5. 25.

피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겠소?”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경국장은 군의 개입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 자리가 끝나자 고급 장교들은 도지사를 “형편없는 놈”이라고 힐책하였다. 이후 최규하 대통령은 성명을 녹음한 뒤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⁸⁸⁾

‘상무총정작전’이 실행되기 전날인 5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전남도청에서 광주시장과의 면담이 있었다. 이날 시민군은 ‘기름, 식량, 관’을 요구하며 시내버스 운행재개 및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장례식은 도민장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5월 27일 01시 15분경 전남도청 행정전화를 이용해 한 사람이 정부 종합청사 당직실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보사부 건축기사가 받았는데, “적십자를 통한 약품과 혈액을 요구, 생필품을 보내달라, 계엄군이 포위하고 있는데 광주에 대해 대책은 무엇인가” 등을 요구하였다.

‘상무총정작전’은 5월 27일 새벽 3시 30분부터 시작되었다. 각 공수여단에서 차출된 특공조가 광주 시내로 침투하고, 20사단과 31사단이 외곽을 압축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시 5분에 전남도청에 도착한 3공수여단 특공조는 시민군과의 교전 끝에 4시 55분에 점거하였고, 4시 23분에 광주공원에 도착한 7공수여단 특공조도 5시 6분에 점거하였으며, 4시 30분에 전일빌딩과 광주관광호텔에 도착한 11공수여단 특공조는 5시 4분에 점거하였다. 이후 5시 8분에 기갑학교 전차 13대가 광주국군통합병원에 집결하였고, 5시 10분에 20사단 61연대 1대대와 2대대가 각각 전남도청과 광주경찰서에 진입하였다. 이날 전남도청을 비롯한 광주 시내에서 17명이 사망하였고, 227명이 연행되었다. 다음과 같은 군 장비가 회수되었다(괄호 안은 회수율).

소총 4,609(83.4)/기관총 21(60)/실탄 240,425(68.4)/수류탄 315(49.7)/차량 283(87.3)/무전기 25(12.8)

이날의 작전으로 계엄군 측에서는 2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가 12명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10일간의 항쟁이 무력 진압되었다. 이후 수습과정은 시민들이 반출해간 무기를 회수하는 것과,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르는 것, 그리고 추가로 시민군들을 연행하고 재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행정관서와 경찰은 비상 근무하였으며, 집으로 돌아간 시민군들을 체포하려고 군은 경계하고 경찰이 가택수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 외에 무등산을 비롯한 광주 외곽 지역에 대한 수색작전이 진행되었다. 그런

88) 보안사령부, 「광주시태 상황보고」 5, 25, 19:00.

데 5월 29일 수색작전에 나섰던 헬기가 무등산에서 이륙하던 도중 추락하여 동원된 7공수여단 병력이 부상하였다. 시민군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으나 계엄군 병력은 주요 지점에 병력을 배치한 뒤 검문소를 운영하였다. 이것은 6월까지 계속되었다.

3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은 5월 29일에 각각 주둔지와 국민대, 경희대, 외대(11공수여단) 등으로 복귀하였다. 부상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통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235명과 민간 병원의 165명에 대한 합수단의 조사가 계속되었다.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에서 검사 2명과 중앙정보부 수사관 2명이 광주를 방문해 수사 상황을 검토하였다. 이들이 주로 검토한 것은 5월 17일 이전 학생시위와 5월 22일 이후 홍남순 변호사와의 연결 문제였다. 또 5월 17일 이전 행위에 대해 내란 공모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 5월 22일 이후 소요가 내란으로 변하는 시기, 그리고 김대중과 '광주사태'와의 관련연결 문제 등이었다. 현지에서 건의된 사항은 내란 또는 소요죄는 정책적 결정이지만 광주 시민들은 김대중이 내란의 수뇌라야 납득한다는 것이었고, 또 처벌 범위는 500여명 정도에서 결정하며 주요 입부 수행자는 30-40여명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의자 정동년의 심문조서에 김대중과의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지시되었으며, 그 외 자금 요청과 500만원 수수한 것, 정동년의 지시로 박관현 등이 전남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포함하라는 것이었다. 즉 합동수사의 결론이 나온 것이었는데, 그 것은 김대중과 5·18항쟁이 직접 연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었다.⁸⁹⁾

7. 맺음말

5월 27일 '상무총정작전'이 전개되고 무력으로 진압됨으로써 항쟁은 끝이 났다. 그러나 항쟁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항쟁이 끝난 직후부터 시민들은 다시 싸우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내란'이자 '폭동'이 '민중화운동'이자 '항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투쟁이었으며, 동시에 의롭게 싸우다 쓰러져간 5월의 넋들에 대한 기억 투쟁이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 부채감에서 다시 싸움을 시작하였고,⁹⁰⁾ 그 결과 십 수년이 흐른 뒤 학살을 일으켰던 자들은 다시 법정

89) 「합수조치내용」, 1980.

세울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행방불명자들과 그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 있고, 30년이 흐른 지금 5·18항쟁을 헐뜯고 상처 입히려는 세력들이 있다. 게다가 정부가 나서 그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 한다.⁹⁰⁾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총을 들었던 시민들의 그 뜻은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가 공권력이 지나치게 남용되었을 때 국민들이 어떤 위급한 처지에 처하는가를 볼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9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한홍구 『광주민중항쟁과 죽음의 자각』 『창작과비평』 2010년 여름호.

91) 30주년이 되는 올해 있었던 5·18 추모식 광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문헌

-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 1980
- 전라남도경찰국, 『전남도경상황일지』, 1980
- 『충정일일주요사항』, 1980
- 전투교육사령부,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 1980
- 31사단, 『작전상황일지』, 1980
- 특전사령부,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 1980
-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980
-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1980. 5. 19
-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상황보고』, 1980
-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1980
- 보안사령부,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전문』, 1980
- 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988
- 윤재걸,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 실천문화사, 1988
- 보안사령부, 『광주사태 합동수사』, 1989
- 보안사령부, 『광주사태전말보고(합수 사항 중심)』, 1989
- 김영진, 『충정작전과 광주항쟁』 상, 하, 동광출판사, 1989
- 정상용 · 조홍규 · 이해찬 · 송선태 · 서대석 · 이강술 · 유시민 · 차영귀 · 송상규 함께 지음, 『광주민중 항쟁 — 다큐멘터리 1980』, 돌베개, 1990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편,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1권~, 1999~.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2.12, 5.18실록』, 1997
-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민중항쟁사』, 2001
- 박만규, 『신군부의 광주항쟁 진압과 미국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1호, 전남대 5·18연구소, 2003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엮음 · 5.18기념재단 엮음,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1·2, 한얼미디어, 2005
- 박호재 · 임낙평 지음, 『윤상원 평전』, 풀빛, 2007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007
- 김영택, 『5월18일, 광주 : 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 역사공간, 2010

민중항쟁기억의 세대계승과 청소년 축제

: 광주 5·18청소년문화제(RedFesta)를 대상으로*

작성자 : 현혜경(전남대학교 사회학 박사) · 한은영(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수료)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연구 배경
3. 연구 대상, 범위 및 방법

II. 5·18청소년문화제(RedFesta)의 형성 과정

1. 문화제의 형성 과정
2. 문화제 주체의 형성 과정

III. 문화제의 실행 구조

1. 사·공간적 점유
2. 담론 실행의 형식과 내용

IV. 기억과 담론의 수용

1. 5·18사건에 대한 인식
2. 재현 주체, 기억과 담론의 수용

V. 종합 결과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국사회에서 광주 5·18사건은 국가 권력에 저항한 대표적인 정치사건이다.¹⁾ 이 사건은 국가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의 변화와 체험 주체들의 기억투쟁에 따라 주도 담론도 폭동(반란), 항쟁, 민주화운동 등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5·18사건의 체험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후체험 세대들은 무엇을 5·18사건의 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5·18사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²⁾

* 제목에서 이야기 하는 민중항쟁 기억은 5·18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한다. 본문에서는 민중항쟁을 5·18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다.

1) 5·18사건에 대한 공식적 명칭은 민주화 운동이지만, 여전히 담론 투쟁 과정에 있는 상황 속에서 조사자들에게 선입견을 주지 않기 위해 보통명사라 할 수 있는 '사건' 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제까지 5·18사건에 대한 후체험세대의 기억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슈만의 언급처럼 세대라고 하는 것이 사회집단 중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회고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을 때 기억의 세대 차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며, 현 시기는 5·18 기억의 세대 차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적절한 시기이다. 특히 5·18체험세대가 소멸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후체험세대들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후체험세대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5·18사건에 대한 기억은 이후 새로운 사회적 담론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기억이 평생을 좌우하는 만큼 오늘날 후체험세대의 기억은 향후 40~50년간의 주도 담론이 될 수도 있다.

이제껏 5·18사건에 대한 기억과 담론의 세대 계승은 주로 체험세대들로부터 대면적인 구술을 통해 후체험세대들에게 전달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신문, 방송영상, 사진, 문학, 연극, 영화 등 간접적인 기억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점차 이런 간접적인 매체들의 영향력은 대면적인 기억의 계승보다 힘을 가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간접적인 기억 매체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억 전달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이라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교과서)과 5·18청소년문화제(RedFesta) 등은 5·18사건에 대한 청소년들의 기억을 어떻게 전인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장치이다.³⁾

이 중 문화제는 5·18 체험세대와 후체험세대인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연대와 실행 과정을 통해 원초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민주, 인권, 평화와 같은 담론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5·18사건에 대한 기억과 담론의 세대 계승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문화제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5·18사건에 대한 기억의 세대 계승과 민주, 인권, 평화와 같은 담론이 문화제를 통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이는 축제의 실행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분석될 수 있다. 둘째, 계승(전수) 자체가 아이디어를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하므로, 실

2)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개념 중에는 체험세대와 후체험세대가 있다. 후체험세대라는 개념은 권귀숙(2006)이 43사건 발발 이후에 태어난 제주 주민으로 직접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를 이르기 위해 고안한 용어이다. 후체험세대 안에도 원초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억압받은 적이 있는 2세대 억압세대와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공유한 3세대 개방세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5·18사건의 경우 사건의 발발 시기가 상대적으로 오래지 않아 전자의 정의에 따르면 1세대 체험세대는 억압세대이지만, 2세대는 후체험세대이지만 개방세대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후체험세대 중에서 개방세대인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3) 물론 차후에는 불특정다수와 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억의 계승 차이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5·18 기억의 세대계승에 대한 여러 방향성을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행구조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연대와 기억의 재구성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체험세대인 청소년들이 5·18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5·18사건의 기억과 담론을 어떻게 수용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5·18청소년 문화제의 프로그램 재현과정과 의미수용과정 분석을 통해 5·18기억과 담론의 세대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2.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연구배경

본 연구와 관련한 국내외의 연구 경향은 ‘기억’이론에 집중되어 있다. 기억과 관련된 이론은 일찍이 개인의 심리학적, 철학적 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져 왔다. 그러나 기억의 사회적 측면과 관련하여 기억의 문제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사람은 알박스(Halbwachs)였다. 그는 ‘기억의 사회적 구성들’을 통해 기억의 사회적 조건과 형성 구조 그리고 기능 방식을 규명하는데 기여하였다(김영범, 1999: 566).

알박스의 논의는 신생 또는 식민지 국가의 민족 혹은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비롯하여 공포 정치, 전쟁과 학살에 대한 경험과 기억, 민중의 저항 행위들에 대한 기억과 망각 연구를 활발히 추동시켰다(정호기, 2004: 21). 이는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최근의 열망과 결합되어 여러 분야의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의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알박스의 논의는 과거 추념적 의식과 기억이 전달되고 유포되는 경로와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결여되어 있다(Schwartz, 1997).

기억이 전달, 유포되는 경로와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밀그램(Milgram)의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확인된다. 그는 기억의 조작적 전수와 사회화의 사이클을 통해 학살이 합리화되는 과정을 밝혀내었다. 그에 따르면 권위에 대한 복종과 조작된 기억이 사회화를 통해 청소년기에 계승되는 동안 타인에 대한 학살이 심리적으로 합리화되어 가는 과정을 밝혔다. 특히 일생동안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기억은 청년기와 초기 성인기 때 형성된 기억으로(Schuman&Scott, 1989), 일반적으로 12~25세 때 형성된 기억은 가장 오래 지속되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권귀숙, 2006: 150). 한편 기억은 사건이 제도화된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오히려 세대 단절 및 망각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들에게 5·18사건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5·18사건에 대한 기억의 전수, 즉 기억의 세대 계승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는 거의 없다.⁴⁾ 체험자의 증언은 진상 규명 과정에서 많이 채록되었지만, 조사자 외의 일반 후체험자가 어떤 기억들을 어떤 경로로 전달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기억은 세대 등 사회 집단뿐만 아니라 기억 매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의례는 공식성과 반복성을 통하여 기억을 보존함과 동시에, 구성 내용의 변화를 통하여 과거를 재해석하거나 기억을 재구성한다(Connerton, 1989). 알박스 조차도 의례가 과거를 상상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과거를 사고하고 기억을 재창조한다고 보았다(Halbwachs, 1980: 80). 코저(Coser) 또한 기념 의례들에 의해 집합 기억은 강화될 뿐만 아니라, 과거사를 추념하게끔 해준다고 주장한다(Coser, 1992: 25).

노라(Nora)는 의례와 같은 기억의 매개물들이 사실은 망각과 관련이 있음을 추론하였다. 이점은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는 5·18의 기억이 사실은 5·18기억의 어떤 부분들을 망각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한다. 노라의 연구 이후 아스만(Assman)부부는 개별 기억들이 통합되고 같등하면서 형성되는 집단 기억의 전수, 변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그들은 각종 텍스트, 신화와 종교적 제의, 기념물 및 기념장소, 문서보관소 등 다양한 재현 매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억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조직적으로 전승되는 형식을 규명하였다(Assman, 2003).

권귀숙(2006)은 제한적이거나 4·3사건 관련 기억의 세대 계승을 조사한 바 있는데, 권귀숙의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세대 간 기억 전수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에 따르면 개방세대로 오면서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직접성이 약화되면서 망각이 가속화됨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구체적 사례들이 파편화되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변형되어 전수되며, 망각된 기억의 공간을 공공 기억과 다양한 의견들로 메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부지만 개방세대는 다양한 문화적 표상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공공 기억을 형성,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았다(권귀숙, 2006: 144).

문화제의 경우도 일부 개방세대에 의해 문화적 표상물이 선택 구성되어 그들의 5·

4) 기존 연구들이 기억의 재현과 시민공동체의 재현에 집중하지만 5·18기념의례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기억의 재현을 받아들이고,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간과하고 있다. 사회, 역사적 상황의 변화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5·18기념의례와 5·18사건에 대한 기억의 재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5·18을 교과서나 축제 등 교육을 통해 역사로 배우는 청소년들의 5·18기억과 재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18사건에 대한 기억을 드러내고 있다. 그 기억 속에서는 체험세대 및 억압세대의 기억과 담론뿐만 아니라, 후체험세대의 기억과 담론을 드러내기도 한다. 정근식(2006)은 광주 5월 기념 의례를 분석하면서 5월 의례가 희생자 추모, 국가폭력에 대한 비판, 현재의 정치적 열망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공간이자, 한국 민주화 운동이 도달한 지점을 나타내는 계기판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도 문화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5·18사건에 대한 경험과 기억, 현재적 열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연구 대상, 범위 및 방법

연구 대상은 개방세대들이 참여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청소년 축제로 '5·18청소년문화제(RedFesta, 이하 문화제)'다. 문화제는 5·18기념행사 주간에 열리는 문화행사의 일부로 세대 계승적 차원에서 기획되고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이다.

여기서 청소년은 중학생 이상 대학생 이하로 규정하였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의 연령 범위는 9~2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제라는 특성상 주요 연령층이 10대~20대로 연령층의 확대 분포를 보임으로써, 범위에 유연성을 두고자 하였다.⁵⁾ 다만 이 청소년 집단을 성격에 따라 A집단과 B집단으로 구분했다. A집단은 문화제의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참가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B집단은 A집단이 마련해놓은 문화제를 즐기기 위해 참여한 청소년들로 관람자 집단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조사 및 연구 방법은 1) 문헌 및 자료 조사, 2) 참여관찰, 3) 면담, 4) 설문 조사 등이었다. 본 연구는 문화제의 실행 구조와 주체, 수용 과정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네 가지 연구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였다. 먼저 기억과 담론을 담아내는 문화제의 실행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문헌 및 자료 조사와 더불어 참여 관찰과 설문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실행 구조를 생산해 내고 있는 주체들의 연대와 상호작용, 기억의 재구성 과정에는 면담과 설문 조사 등을 혼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제를 통해 5·18사건에 대한 인식과 담론의 수용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설문 조사를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5) 문화제 주체들은 문화제가 전국의 14~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가 연령에 유연성을 두고 있다.

문헌 및 자료 조사와 분석은 행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와 결과보고서 및 문화제가 끝난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던 청소년과 전문 문화기획자가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 등을 기록해 5·18기념재단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다. 참여관찰은 이미 2008년과 2010년 문화제 준비기간(4월20~5월25)과 실제행사 연행기간(2010년 5월 21일~22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문화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던 청소년들(A집단에 속함)과 전문 문화기획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면담대상자(A집단)

순번	역할	성명	나이	활동 사항	면담일자
1	전문기획자	김○랑	40	공간디자인 전문가 (2004~2009 재단 자원활동가 지도)	2010.10
2		정○룡	40	북구문화의집 문화예술팀장 (2008~2010 재단 자원활동가 지도)	2010.10
3		양○훈	41	연극연출가 (2005년 이후 재현극 지도)	2010.10
4	대학생	국○혜	23	전남대(2008~2010 재단 자원활동)	2010.09
5		김○은	23	전남대(2008 재단 자원활동)	2010.09
6		문○선	23	전남대(2009 재단 자원활동)	2010.09
7		이○진	22	조선대(2008~2010 재단 자원활동)	2010.09
8		조○영	24	조선대(2007~2008 재단 자원활동)	2010.09
9	고등학생	박○하	19	조대부속고등학교 3학년 (2010 5월상황재현극 준비)	2010.09
10		신○은	19	살레시오 여자고등학교 3학년 (2010 5월상황재현극 준비)	2010.09
11		오○영	19	수피아 여자고등학교 3학년 (2010 5월상황재현극 준비)	2010.09
12		정○정	19	동신 여자고등학교 3학년 (2010 5월상황재현극 준비)	2010.09

설문조사는 2010년 문화제가 열린 둘째 날인 5월 22일(토요일) 오전에 행사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준비한 학생들(A집단)과 참여 학생들(B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375부가 취합되었는데, 핵심 내용에 대한 응답률이 저조한 53부를 제외한 322 샘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직접 준비한 학생이 작성한 214부(A집단)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108부(B집단)이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5·18사건에 대한 정보 입수 경로를 비롯해, 문화제 참여 동기, 실행과정, 수용과정 등이다. 설문 응답자들의 평균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A집단은

대체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참여 비율(86.4%)이 높고,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72.9%)로 구성되어 있다. B집단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고(92.1%), 광주 외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56.4%)이 많았다. 부모의 직업이나 부모의 학력, 가족 피해의 유무, 본인의 학력, 주거지 변수는 결측값이 많아 분석결과에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남녀 성별은 대등하게 이루어졌다(<표 2>참조).

<표 2> 설문조사 집단의 특성

연령	A집단			B집단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1	1	.5	.5	-	-	-
12	-	-	-	-	-	-
13	2	.9	1.4	-	-	-
14	5	2.3	3.7	46	45.5	45.5
15	10	4.7	8.4	5	5.0	50.5
16	11	5.1	13.6	5	5.0	55.4
17	48	22.4	36.0	25	24.8	80.2
18	38	17.8	53.7	11	10.9	91.1
19	16	7.5	61.2	1	1.0	92.1
20	35	16.4	77.6	6	5.9	98.0
21	18	8.4	86.0	2	2.0	100.0
22	9	4.2	90.2	-	-	-
23	5	2.3	92.5	-	-	-
24	8	3.7	96.3	-	-	-
25	3	1.4	97.7	-	-	-
26	3	1.4	99.1	-	-	-
27	1	.5	99.5	-	-	-
28	-	-	-	-	-	-
29	1	.5	100.0	-	-	-
합계	214	100.0	-	101	100.0	-

성별	A집단			B집단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남	108	50.5	50.5	51	50.5	50.5
여	106	49.5	100.0	50	49.5	100.0
합계	214	100.0	-	101	100.0	-

주거	A집단			B집단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광주	156	72.9	72.9	44	43.6	43.6
외부	58	27.1	100.0	57	56.4	100.0
합계	214	100.0	-	101	100.0	-

학력	A집단			B집단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중학교	29	13.6	13.6	55	54.5	54.5
고등학교	98	46.0	59.6	38	37.6	92.1
대학교	86	40.4	100.0	8	7.9	100.0
결측	1	-	-	-	-	-
합계	214	100.0	-	101	100.0	-

부모직업	A집단			B집단		
	빈도	퍼센트/유효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유효	누적 퍼센트
전문직	29	13.6/18.1	18.1	12	11.9/13.6	13.6
공무원 및 회사원	58	27.1/36.3	54.4	30	29.7/34.1	47.7
자영업	47	22.0/29.4	83.8	28	27.7/31.8	79.5
농업근로자 등	12	5.6/7.5	91.3	10	9.9/11.4	90.9
기타	14	6.5/8.8	100.0	8	7.9/9.1	100.0
결측	54	25.2/-	-	13	12.9/-	-
합계	214	100.0	-	101	100.0	-

부모학력	A집단			B집단		
	빈도	퍼센트/유효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유효	누적 퍼센트
고졸이하	90	42.1/46.6	46.6	39	38.6/41.1	41.1
대졸	84	39.3/43.5	90.2	38	37.6/40.0	81.1
대학원이상	5	7.0/7.8	97.9	13	12.9/13.7	94.7
기타	4	1.9/2.1	100.0	5	5.0/5.3	100.0
결측	21	9.8/-	-	6	5.9/-	-
합계	214	100.0	-	101	100.0	-

가족 피해	A집단			B집단		
	빈도	퍼센트/유효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유효	누적 퍼센트
있다	6	7.5/8.1	8.1	5	5.0/5.2	5.2
없다	181	84.6/91.9	100.0	92	91.1/94.8	100.0
결측	7	7.9/-	-	4	4.0/-	-
합계	214	100.0	-	101	100.0	-

II. 5·18청소년 문화제(RedFesta)의 형성 과정

1. 문화제의 형성 과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5·18기념사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광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시작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989년부터

터 5·18정신계승 전국 학생 글쓰기 한마당 및 그림과 만화그리기를 진행하였다. 1998년 정권교체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와 남북 관계의 호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담론의 부상, 2000년대 들어 밀레니엄 분위기에 따라 평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 소속 교사와 광주지역 청소년 단체 활동가들 공부 모임인 'OK YOUTH'는 청소년 축제를 통한 청소년 평화 교육을 논의하게 되었다.⁶⁾ 청소년 평화 교육에 대한 논의의 결과 2001년 '5·18기념공원 청소년축제'가 기획되었다. '5·18기념공원 청소년축제'는 끝장토론, 음악회, 영화제, 연극경연, 놀이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5·18기념공원에서 진행되었다. '5·18기념공원 청소년축제'는 2004년 5·18청소년 문화제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후 5·18기념재단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체험학교(2000년)'와 '역사교실(2000년)', '제1회 청소년을 위한 5·18록콘서트(2000년)', '평화를 위한 청소년 1424축제(2001년)',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2001년)'가 실행되었다. 이후 2006년부터는 5·18청소년 연극제가 연례적으로 진행되면서 청소년 기념행사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표 3〉 2004년 전후 청소년 대상 5·18기념 행사

년도	행사명	장소	주관	비고
2000	제1회 청소년을 위한 5·18록콘서트	전남대학교	5·18기념재단	
2001	5·18기념공원 청소년축제	5·18기념공원	5·18기념재단 전교조 광주지부	
2001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5·18기념공원	5·18기념재단	지속
2002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평화축제	5·18기념공원	5·18기념재단 전교조, 청소년단체	
2003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평화축제	5·18기념공원	청소년평화축제 준비위원회	청소년문 화제로
2004	5·18청소년 문화제(RED FESTA)	금남로	5·18기념재단	지속
2006	5·18청소년연극제	5·18문화센터	5·18기념재단	지속

6) 광주지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소속 교사들과 청소년 단체 활동가들은 청소년 평화 교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에 대한 협력 관계의 필요성을 일찍이 이해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소속 교사(이상현, 김복성, 이거러)와 청소년 단체활동가(김성훈, 정민기, 이민철, 이운기, 박필순(5·18기념재단))들은 청소년 축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5·18기념공원 청소년축제'를 기획하였다.

5·18사건에 대한 유형적인 기념사업이 종료되는 2000년대 초반은 5·18사건의 기억과 정신의 세대 계승을 위한 청소년 관련 사업이 받아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20주년이 되는 2000년에 5·18기념재단은 청소년 관련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⁷⁾ 5·18기념재단은 광주 지역 교사 연수를 비롯해 공교육 안에서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모색과 함께 5·18정신계승 토론회와 청소년 축제를 마련하였다. 한편으로 광주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문화제의 틀을 만들어 나갔다.

문화제는 옛 전라남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를 주요 무대로 이용하고 있다. 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옛 전라남도청과 민주광장 그리고 금남로로 이어지는 공간을 유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지만 교통 통제 문제로 인해 전라남도청과 금남로를 지상에서 연결하기 쉽지 않아, 2005년 이후 문화제의 무대는 민주광장과 금남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2010년 행사는 아시아문화전당 공사로 인한 도로변경과 지반 침하로 금남로에서만 이루어졌다. 문화제의 일정은 매년 다르지만, 대개 5월 18일 이후 토요일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화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오전 9시부터 현장에서 자신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설치·준비하며, 관람하는 학생들은 오전 수업 후 2~7시까지 참여하게 된다. 7시에는 문화제를 준비했던 청소년들도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다 같이 락페스티벌을 즐긴다.

문화제는 5·18사건의 역사적 사실 재현 및 민주주의, 인권, 평화, 나눔을 주제로 구성된다. 원초적 사건의 재현 외 후체험 세대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5·18담론으로 구성된 것이 민주, 인권, 평화, 나눔이다. 역사적 사실의 재현은 당시의 상황을 연극적인 재현을 통해 드러냄과 동시에 5·18사건 관련 사진 및 자료 전시가 이루어진다. 민주담론은 분단 상황 및 군사 독재시절의 레드 콤플렉스 등을 다루며, 인권담론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를 비롯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어린이 노동착취 등을 재현한다. 평화담론은 개인적 평화에서 학교 및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평화와 조화 그리고 국제간의 평화의 문제를

7) 2000년 락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01년 지도자 교육인 교사연수와 청소년역사캠프, 사적지안내 및 체험학습, 청소년 축제, 벽화그리기, 전국고등학생토론회가 진행되었다. 2002년에는 공교육 지원사업인 지역 협력교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되었다(신수연, 2008: 38).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외 5·18 나눔정신을 재현하기 위해 전통 놀이와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한 기념품 나눔을 실행하고 있다.

2. 문화제 주체의 형성 과정

문화제를 준비하는 주체는 전문 문화기획자를 비롯한 추진위원들과 추진위원들의 지도 아래 문화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다. 이 청소년들은 광주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1) 문화제 추진위는 행사의 전반적인 기획과 실행을 위해 행사 참여 단체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문화제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를 비롯해 광주지역의 청소년 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추진위에는 2004년부터 축제 기획과 청소년 지도를 위해 전문 문화기획자가 포함되었다. 추진위는 행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기 위한 조직으로 꾸준한 회의와 소통의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2004년 이후 전문 문화기획자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지역 청소년 단체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2) 전문 문화기획자는 5·18기념재단에서 대학생 자원활동가를 지도하며,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소속 교사들은 일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재량활동을 이끌고 있다. 4) 또한 광주지역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은 해당 단체에서 연계하는 청소년의 문화제 참여를 지도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을 담당해오고 있다. 5) 문화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광주지역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보다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에서는 2001년부터 자원활동가들을 교육, 육성하여 재단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의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은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문화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2007년은 대학생 자원활동가들과 고등학생이 중심이 된 청소년위원회가 문화제를 준비하였으나, 고등학생들이 문화제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제약이 많았다.⁸⁾ 따라서 5·18기념재단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문화제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의 기획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 2008년부터 ‘오월문화창작소’라는 문화 기획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전문 문화기획자의 지도 아래 진행되는 총 10주 과정의 오월문화창작소라는 문화 기획 워크샵은 문화제 전반에 대한 기획과 실행 계획을 도출해 내면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문화제 준비를 위한 교육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추진위 준비 방식의 문화제에서 탈피해 전문 문화기획자의 지도 아래 청소년 기획단의 준비 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실험이기도 하였다.

2010년은 5·18 사건이 발생한지 30년이 됨에 따라 잼버리 형식을 도입해 1박2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당일 행사에서 1박 2일의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와 오월문화창작소 공동 주관으로 준비되었다. 특히 문화제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타 지역 청소년 및 단체들의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부터 광주 외 서울, 부산 등지의 단체들까지 합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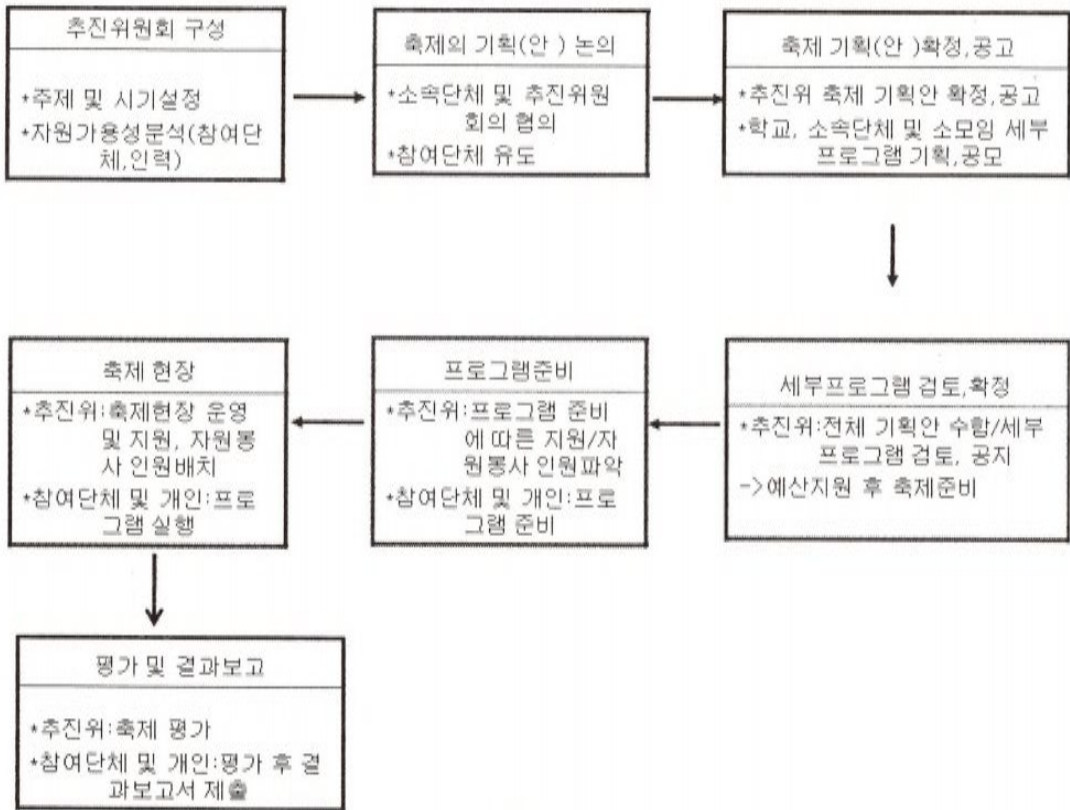
<표 4> 5·18청소년문화제 참여단체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시민사회단체	8	8	6	6	4	6	4
교육단체 및 학교	1	1	10	2	13	9	6
청소년 단체	5	4	1	6	9	9	3
동아리 소모임	5		3	6	13	23	3
기획관련 단체	2	1	4	4	4	1	2
지역외부 연대 단체		3	1			2	2
참여단체 계	25	22	31	31	51	59	30

이런 주체들은 <그림 1>과 같은 축제 기획 및 준비 흐름도를 따라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주체들의 연대와 문화제를 둘러싼 각 주체들의 실행 구조에 대한 영향 등은 제 4장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되고 있다(4장 참조할 것).

8) 중고등학생은 학교수업과 학원수업으로 인하여 대학생들과의 소통 시간이 부족했으며, 많은 부분 대학생이 기획한 내용을 조력하는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축제기획 및 준비 흐름도〉



〈그림 1〉

Ⅲ. 문화제의 실행 구조

1. 시공간적 점유

일반적으로 축제의 실행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적 규정, 성격, 예술적 형상화, 실행목표, 이념을 비롯해 축제의 실행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자원동원의 문제, 주체의 의지나 능력 문제, 선행 모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행 구조 자체보다는 계승의 문제에 더욱 초점이 있으므로 계승의 시공간적 규정과 담론 실행의 형식과 내용 등을 통해 실행 구조

를 살펴보는 것으로 범주를 한정하였다.

먼저 실행 구조에서 시공간적 점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것이 기억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분석하는 것은 문화제가 어떤 상징적 시간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점유 시간이 5·18사건에 대한 기억의 세대 계승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화제는 5월 행사 주간에 개최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때문에 토요일이라는 시간적 제한에 묶여 있었다.

장소는 특정 집단이 전통이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장소와 구별하는 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는 공간적 점유의 형태이자, 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담론 투쟁의 실현 장소가 될 수 있기에 원초적 사건과 현실의 정치적 열망이 어떻게 역학 관계를 이루며 재현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장이다. 문화제의 공간적 점유는 시간적 점유와 달리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제의 공간 배치는 5·18사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도청과 민주광장 가까이에 배치하고 있다. 도청 앞 민주광장에 락페스티벌과 5월상황재현극을 배치하고 내용에 따라 민주마당, 인권마당, 평화마당, 나눔마당을 금남로 1가부터 5가까지 배치하고 있다. 문화제는 공간을 ‘마당’이라 명명하여 편의적으로 구분하여 왔다.

문화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민주, 인권, 평화, 나눔마당의 배치 구조는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지속되어 왔다. 2009년에는 장소 구획을 마당에서 ‘광장’으로 하였으며, 2010년은 잼버리 형식에 따라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촌(마을)’로 하였다. 담론의 공간적 실행 구조의 이런 변화가 기존 내용별 배치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5·18사건의 집단적 저항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상성과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조해 후세대로의 전수를 고려한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2. 담론 실행의 형식과 내용

문화제의 민주, 인권, 평화라는 담론은 마당 혹은 광장 혹은 촌이라는 공간적 형식에 담겨 실행되고 있다. 우선 민주, 인권, 평화라는 담론의 근간이 되는 원초적 사건은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5월상황재현극’이 그것이다. 재현극은 5·18사건 당시의 ‘시민과 계엄군의 대치 상황’이 연극을 통해 연행된다. 5·18사

건의 전개 과정 중에서 시민군과 1980년 5월 계엄군의 대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은 '저항'이라는 측면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다. 시민들이 계엄군의 폭력에 항의하는 모습에서 5·18사건 당시의 폭력적 상황과 폭도, 사태로 왜곡되었던 사실을 후세대인 청소년들은 응축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또한 시민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보살피는 공동체성의 재현은 후세대에게 저항 근처에 있는 시민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한다. 이런 공동체성의 경험은 야전병원과 붉은 감옥의 경험을 통해 몸으로 체험하도록 구성되어졌다.

5월상황재현극이 진행되는 동안 연기자들은 관람객들에게 부상당한 시민들을 위해 헌혈을 독려하고 야전병원으로 데려가 헌혈을 체험하게 한다. 또한 재현된 계엄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행인인 관람객들을 붉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버스에 태워 곤봉 세례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1980년의 '국가폭력'을 후세대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의도로 기획되어졌다.⁹⁾

민주주의와 관련된 형식과 내용은 5·18사건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새기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2008년 민주마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 학생들은 5·18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레드팍 도사'에게 지나가는 학생들을 데려가 만나게 했다. 5·18당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와 추모의 마음을 종이 비행기에 담아 금남로 15m 거리를 가로지르는 철망에 매달았다. 5·18사건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만화책을 비롯하여 사진집, 판화집, 소설 및 시집을 파라솔 아래서 읽을 수 있게 하였다. 구 전라남도청 답사를 시간대별로 해설과 함께 진행하였다. 5·18당시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의 추모탑을 도안하여 참여자들이 한 칸 한 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였다. 특히 2008년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촛불 집회를 기념하여, 광우병에 대한 홍보와 의견개진 활동과 함께 종이벽돌을 분양하여 벽돌에 참여자 각자가 촛불을 그리거나 문구를 작성하게 하였다. 참여자들의 의견과 의지가 모인 종이벽돌을 이용하여 불의에 저항한 5월 정신의 상징인 도청을 형성화 하였다.

인권과 관련된 형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분 인권 수업을 진행하고, 간단한 설문을 통해 인권지수를 알아볼 수 있게 하였으며 참여자가 직접 '청소년인권'조항

9) 그와 함께 5·18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비롯해, 문학작품, 예술작품, 음악, 영상, 영화 등의 매체가 동원된다. 그 외 민주, 인권, 평화, 나눔의 담론을 실행하는 자료들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을 만들어보게 하였다.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자유발언도 진행하였다. 방과 후 아카데미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현장을 바탕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한 후 아이들이 느끼는 인권 내용을 표현하게 하여 결과물을 전시하였다.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과 어린이가 느끼는 인권 내용을 바탕으로 전시와 함께 경험담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또한 퍼포먼스으로도 표현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 관련 성범죄의 피해사례 현황과 위험성을 알려 아동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4·15교육조치를 전시를 통해 알리고 감옥으로 형상화한 공간에서 입시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상을 상영하였다. 성매매에 대한 정의와 실태를 전시하고 청소년의 성매매 발생 경로와 실태 전시를 통해 채팅 시 주의점을 홍보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참여해 성매매 방지 광고와 성사진을 만들어보고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는 호루라기를 배포하였다.

평화와 관련된 형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과의 평화, 마을의 평화, 우리들의 평화로 이루어졌다. 축제 현장에 숲의 공간을 설치하여 숲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의 메시지를 쓰면 문패를 만들어주었다. 자연의 평화를 해치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대한 선전판을 만들고 직접적인 피해자인 새들이 갈 곳을 잃고 배고픈 상황을 영상과 소리를 통해 보여주었다. 또한 솔방울과 나뭇가지를 이용해 새를 만들어 볼 수 있게 하였다. 생명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포스트잇에 기록하여 붙인 화분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화를 주제로 공모한 디지털 사진을 전시하였다. 묘비명을 쓰고 관 체험을 하기도 하며, 당신의 지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로의 마음을 안아주기도 하였다. 세계분쟁 지역을 적은 림보를 통과하는 놀이를 통해 세계 분쟁지역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보게 하여 현실적인 이해를 도왔다.

나눔에 대한 형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8사건 당시 밥을 나누었던 주먹밥 만들기 체험을 비롯하여, '아시아요리교실'에 참여한 중학생들이 만든 필리핀 요리, 베트남 요리, 한국 요리를 판매하여 수익금은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성금으로 중국 영사관에 전달하였다. 널뛰기, 투호, 링 던지기, 윷놀이, 제기, 공기, 굴렁쇠를 비롯한 전래 놀이와 공동체 놀이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경험하였다. 청소년이 참여한 밴드를 비롯해 댄스, 수화, 마술, 노래 공연은 청소년 문화를 선보임으로써 세대 간 소통의 의미도 있다. 축제의 놀이적 요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눔은 먹을거리를 비롯하여 놀이와 공연을 통해 체험하고 기부하는 실천으로 이어진다.¹⁰⁾

10) 이상의 프로그램은 2008년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2004년 이후 문화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에 기틀을 마련

이상의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었다. 재현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을 보여주는 전시가 주를 이룬다. 전시에 이어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리플달기와 설문 조사 등 다양한 형식의 의견개진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퍼포먼스와 같은 행위적 표현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의 재현과 그에 토대를 둔 담론의 실행 과정은 주로 '체험'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체험이 없는 후체험세대를 위해 만들어진 형식이며, 체험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축제, 즉 문화제가 선택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제의 실행 구조는 후체험세대의 직접 '체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몸으로 경험한 기억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체험은 오랫동안 기억으로 간직된다는 점에서 문화제는 후체험 세대에게 5·18사건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이자 현재의 담론이 공고화되는 공간이다. 특히 민주, 인권, 평화의 담론은 5·18사건의 역사적 사실 재현에서 원초적 사건의 비중은 줄어들고 공공의 기억과 보편적 가치들로 그 자리가 채워져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험의 직접성이 약화되고, 역사적 사실의 재현에서도 극적인 부분만 전수되고, 나머지는 담론들로 그 자리가 메워지고 있는 실행 구조를 보이고 있다.

IV. 기억과 담론의 수용

1. 5·18사건에 대한 인식

문화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5·18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게 된 경로는 무엇인가? 또한 문화제는 5·18사건을 처음한 기억의 세대 계승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설문을 통해 문화제에 참가한 A집단과 B집단에게 5·18사건을 처음 인지한 시기를 물었다. <표 5>와 같이 두 집단 모두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게 된 경우가 60%가 넘었다. 그 다음이 중학교 시절(24.8%)이었다. 이들 청소년 집단은 정권의 교체, 남북 관계의 해빙, 과거사의 정리 등이 이루어져 어느 정도 민주적

하게 되는데 2007, 2008년은 마당구성과 프로그램의 구성에 정형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분위기 속에서 이른 나이에 5·18사건에 대하여 인식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5·18사건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된 시기(Q1)

구분	A집단			B집단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초등학교	139	65.0	65.0	65	64.4	64.4
중학교	53	24.8	89.7	30	29.7	94.1
고등학교	2	.9	90.7	3	3.0	97.0
대학교	4	1.9	92.5	-	-	-
기타	16	7.5	100.0	3	3.0	100.0
합계	214	100.0	-	101	100.0	-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5·18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표 6>에서 보이듯 A 집단은 67.3%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식하였으며, 28.5%는 민중항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B집단 역시 63.4%가 민주화운동으로 33.7%가 민중항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로 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담론을 수용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중항쟁, 공산폭동 등의 다양한 층위의 기억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5·18사건에 대한 인식(Q2)

구분	A집단			B집단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민중항쟁	61	28.5	28.5	34	33.7	33.7
공산폭동	2	.9	29.4	1	1.0	34.7
민주화운동	144	67.3	96.7	64	63.4	98.0
기타	7	3.3	100.0	2	2.0	100.0
합계	214	100.0	-	101	100.0	-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5·18사건에 대한 기억 전수는 어떤 경로로 이루어진 것인가? 5·18사건에 대한 기억의 경로를 물어보았을 때(<표7>참조), A집단은 45.4%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19.8%), 5·18관련행사(13.0%), 대중매체(10.6%)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B집단은 학교 교육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두 집단 공히 학교 교육이 5·18사건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문화

제의 기획과 실행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A집단은 그 외에도 자신의 판단, 5·18관련 행사, 매체의 중요성 등 다양한 층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5·18사건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7〉 5·18사건을 인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체(Q3)

구분	A집단			B집단		
	빈도	퍼센트/유효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유효	누적 퍼센트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41	19.2/19.8	19.8	15	14.9/16.1	16.1
가족이나 주변사람	19	8.9/9.2	29.0	12	11.9/12.9	29.0
학교교육	94	43.9/45.4	74.4	40	39.6/43.0	72.0
518관련행사	27	12.6/13.0	87.4	14	13.9/15.1	87.1
대중매체	22	10.3/10.6	98.1	5	5.0/5.4	92.5
기타	4	1.9/1.9	100.0	7	6.9/7.5	100.0
결측	7	3.3/-	-	8	7.9/-	-
합계	214	100.0	-	101	100.0	-

이제 <표 8>에서 보듯, 민중항쟁 혹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실행하였는데 결측 값을 제외한 유효 수는 A집단 207명, B집단의 93명이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측 사례를 뺀 A집단 유효 수 207사례와 B집단의 93사례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A집단에서 민중항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이나 5·18행사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로를 보이고 있었으며,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식하는 경로는 학교 교육과 스스로의 판단이 컸다고 대답하였다. B집단의 경우도 민중항쟁, 민주화 운동 모두 학교 교육의 영향이 컸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를 통해 5·18사건에 대한 후세대 세대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 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한 경로를 보이는 청소년들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한 인식의 경로가 적은 것은 점차 체험 세대의 직접 전수에서 학교 교육, 행사, 매체와 같은 간접 기억의 전달 경로로 바뀌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향후 이러한 간접기억 매체가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5·18사건에 대한 인식과 결정적 영향을 미친 주체(Q2*Q3)

■ A집단(X²=40.119, F=15, p=.000***)

Q3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가족이나 주변사람	학교 교육	5·18관련 행사	대중 매체	기타	전체
Q2								
민중항쟁	빈도	10	2	28	12	7	1	60
	Q2의%	16.7	3.3	46.7	20.0	11.7	1.7	100.0
	Q3의%	24.4	10.5	29.8	44.4	31.8	25.0	29.0
	전체%	4.8	1.0	13.5	5.8	3.4	5	29.0
공산폭동	빈도	0	0	1	0	1	0	2
	Q2의%	.0	.0	50.0	.0	50.0	.0	100.0
	Q3의%	.0	.0	1.1	.0	4.5	.0	1.0
	전체%	.0	.0	.5	.0	.5	.0	1.0
민주화운동	빈도	29	17	62	15	14	1	138
	Q2의%	21.0	12.3	44.9	10.9	10.1	.7	100.0
	Q3의%	70.7	89.5	66.0	55.6	63.6	25.0	66.7
	전체%	14.0	8.2	30.0	7.2	6.8	.5	66.7
기타	빈도	2	0	3	0	0	2	7
	Q2의%	28.6	.0	42.9	.0	.0	28.6	100.0
	Q3의%	4.9	.0	3.2	.0	.0	50.0	3.4
	전체%	1.0	.0	1.4	.0	.0	1.0	3.4
전체	빈도	41	19	94	27	22	4	207
	Q2의%	19.8	9.2	45.4	13.0	10.6	1.9	100.0
	Q3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19.8	9.2	45.4	13.0	10.6	1.9	100.0

■ B집단(X²=12.524 F=15, p=.639)

Q2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가족이나 주변사람	학교 교육	5·18관련 행사	대중 매체	기타	전체
Q1								
민중항쟁	빈도	4	4	17	5	1	1	32
	Q2의%	12.5	12.5	53.1	15.6	3.1	3.1	100.0
	Q3의%	26.7	33.3	42.5	35.7	20.0	14.3	34.4
	전체%	4.3	4.3	18.3	5.4	1.1	1.1	34.4
공산폭동	빈도	0	0	1	0	0	0	1
	Q2의%	.0	.0	100.0	.0	.0	.0	100.0
	Q3의%	.0	.0	2.5	.0	.0	.0	1.1
	전체%	.0	.0	1.1	.0	.0	.0	1.1
민주화운동	빈도	11	8	22	8	4	5	58
	Q2의%	19.0	13.8	37.9	13.8	6.9	8.6	100.0
	Q3의%	73.3	66.7	55.0	57.1	80.0	71.4	62.4
	전체%	11.8	8.6	23.7	8.6	4.3	5.4	62.4
기타	빈도	0	0	0	1	0	1	2
	Q2의%	.0	.0	.0	50.0	.0	50.0	100.0
	Q3의%	.0	.0	.0	7.1	.0	14.3	2.2
	전체%	.0	.0	.0	1.1	.0	1.1	2.2
전체	빈도	15	12	40	14	5	7	93
	Q2의%	16.1	12.9	43.0	15.1	5.4	7.5	100.0
	Q3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16.1	12.9	43.0	15.1	5.4	7.5	100.0

따라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묻은 질문은 가장 빈번하게 5·18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로였다. 그 결과 <표 9>에서 보듯, 표본이 작아 교차분석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p=.807$, $p=.264$), 정보획득의 경향성은 추론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5·18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빈번하게 얻는 경로도 학교 교육이었다. A, B집단 공히 학교 교육을 통해 5·18사건에 대하여 가장 빈번하게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A집단의 경우는 B집단과 달리 대중매체(22.4%)와 5·18관련행사(20.1%)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A집단이 5·18관련 행사를 통해서도 빈번하게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중항쟁과 민주화운동으로의 인식은 학교교육이 가장 중요한 기억의 매개임을 보여주며, 문화제의 기획과 실행에 참가한 학생일수록 다양한 전수 경로를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문화제 체험활동을 통해 5·18사건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가 넓어지며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9> 5·18사건에 대한 가장 빈번한 정보의 경로(Q2*Q4)

■ A집단($X^2=7.714$, $F=12$, $p=.807$)

Q2 \ Q4		Q4					
		가족/주변	대중매체	학교교육	5·18관련행사	기타	전체
민중항쟁	빈도	7	13	28	10	3	61
	Q2의%	11.5	21.3	45.9	16.4	4.9	100.0
	Q4의%	43.8	27.1	28.9	23.3	30.0	28.5
	전체%	3.3	6.1	13.1	4.7	1.4	28.5
공산폭동	빈도	0	1	1	0	0	2
	Q2의%	.0	50.0	50.0	.0	.0	100.0
	Q4의%	.0	2.1	1.0	.0	.0	.9
	전체%	.0	.5	.5	.0	.0	.9
민주화운동	빈도	9	32	64	33	6	144
	Q2의%	6.3	22.2	44.4	22.9	4.2	100.0
	Q4의%	56.3	66.7	66.0	76.7	60.0	67.3
	전체%	4.2	15.0	29.9	15.4	2.8	67.3
기타	빈도	0	2	4	0	1	7
	Q2의%	.0	28.6	57.1	.0	14.3	100.0
	Q4의%	.0	4.2	4.1	.0	10.0	3.3
	전체%	.0	.9	1.9	.0	.5	3.3
전체	빈도	16	48	97	43	10	214
	Q2의%	7.5	22.4	45.3	20.1	4.7	100.0
	Q4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7.5	22.4	45.3	20.1	4.7	100.0

■ B집단(X²=14.608, F=12, p=.264)

Q2 \ Q4		가족/주변	대중매체	학교교육	5·18관련행사	기타	전체
민중항쟁	빈도	7	4	19	3	1	34
	Q2의%	20.6	11.8	55.9	8.8	2.9	100.0
	Q4의%	46.7	21.1	36.5	33.3	16.7	33.7
	전체%	6.9	4.0	18.8	3.0	1.0	33.7
공산폭동	빈도	0	1	0	0	0	1
	Q2의%	.0	100.0	.0	.0	.0	100.0
	Q4의%	.0	5.3	.0	.0	.0	1.0
	전체%	.0	1.0	.0	.0	.0	1.0
민주화운동	빈도	8	14	32	6	4	64
	Q2의%	12.5	21.9	50.0	9.4	6.3	100.0
	Q4의%	53.3	73.7	61.5	66.7	66.7	63.4
	전체%	7.9	13.9	31.7	5.9	4.0	63.4
기타	빈도	0	0	1	0	1	2
	Q2의%	.0	.0	50.0	.0	50.0	100.0
	Q4의%	.0	.0	1.9	.0	16.7	2.0
	전체%	.0	.0	1.0	.0	1.0	2.0
전체	빈도	15	19	52	9	6	101
	Q2의%	14.9	18.8	51.5	8.9	5.9	100.0
	Q4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14.9	18.8	51.5	8.9	5.9	100.0

결과적으로 문화제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후체험세대 청소년들은 대체로 민주화운동, 민중항쟁 등으로 5·18사건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교육 등 간접 매개를 통해 공공화된 기억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재현주체, 기억과 담론의 수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억 매체는 학교와 교과서를 제외하면 문화제와 같은 청소년 축제이다. 그렇다면 문화제는 청소년 기억 계승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청소년들에게 5·18관련 행사 중에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긴 행사가 어떤 것 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표 10>처럼 A, B집단 모두 5·18관련 행사 중 문화제가 51.2%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청소년들은 동일한 연령대의 친구나 선배들이 기획하고 참여한 행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5·18행사 중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긴 행사(Q6)

구분	A집단			B집단		
	빈도	퍼센트/유효	누적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야제	8	3.7/3.8	3.8	6	5.9	5.9
기념식	24	11.2/11.4	15.2	10	9.9	15.8
추모공연	28	13.1/13.3	28.4	18	17.8	33.7
레드페스타	108	50.5/51.2	79.6	52	51.5	85.1
사적지순례	23	10.7/10.9	90.5	7	6.9	92.1
기타	20	9.3/9.5	100.0	8	7.9	100.0
결측	3	1.4/-	-	-	-	-
합계	214	100.0	-	101	100.0	-

<표 11>은 5·18기념행사 주간에 청소년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다. 94.9%가 청소년 행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른 5·18기념행사는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무거움, 엄숙함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문화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그 만큼의 필요성도 절감할 수 있다.

<표 11> 청소년 행사의 유무(Q7)

구분	A집단			B집단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그렇다	203	94.9	94.9	97	96.0	96.0
아니다	11	5.1	100.0	4	4.0	100.0
합계	214	100.0	-	101	100.0	-

<표 13>은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자 중 문화제 참여 권유를 누구에게 받았는가란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A집단은 결측값을 제외한 50%가 동아리 차원에서 참여, 학교 선생님의 추천 및 권유가 21.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행사 차원의 참여가 높은 것은 대학생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동아리 형태로 참여했기 때문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선생님의 권유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동아리 역시 참여의 중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표 12>참조).

〈표 12〉 문화제 참여의 권유자(Q8)

■ A집단

Q8 학력		선생님 추천권유	동아리 행사참여	5·18관련자 추천권유	스스로 관심	부모친 지권유	대중매 체홍보	기타	전체
중학교	빈도	4	17	0	5	0	0	0	26
	학력의%	15.4	65.4	.0	19.2	.0	.0	.0	100.0
	Q8의%	9.1	17.0	.0	20.8	.0	.0	.0	12.9
	전체%	2.0	8.5	.0	2.5	.0	.0	.0	12.9
고등학교	빈도	39	33	1	14	1	3	4	95
	학력의%	41.1	34.7	1.1	14.7	1.1	3.2	4.2	100.0
	Q8의%	88.6	33.0	6.7	58.3	50.0	100.0	30.8	47.3
	전체%	19.4	16.4	.5	7.0	.5	1.5	2.0	47.3
대학교	빈도	1	50	14	5	1	0	9	80
	학력의%	1.3	62.5	17.5	6.3	1.3	.0	11.3	100.0
	Q8의%	2.3	50.0	93.3	20.8	50.0	.0	69.2	39.8
	전체%	.5	24.9	7.0	2.5	.5	.0	4.5	39.8
전체	빈도	44	100	15	24	2	3	13	201
	학력의%	21.9	49.8	7.5	11.9	1.0	1.5	6.5	100.0
	Q8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21.9	49.8	7.5	11.9	1.0	1.5	6.5	100.0

〈표 13〉 5·18청소년문화제 참가권유자(Q8)

구분	A집단			B집단		
	빈도	퍼센트/유효	누적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선생님추천권유	44	21.7/21.8	21.8	47	48.5	48.5
동아리행사참여	101	49.8/50.0	71.8	14	14.4	62.9
5·18관련자추천 권유	15	7.4/7.4	79.2	-	-	-
스스로관심	24	11.8/11.9	91.1	23	23.7	86.6
부모친지권유	2	1.0/1.0	92.1	1	1.0	87.6
대중매체홍보	3	1.5/1.5	93.6	2	2.1	89.7
기타	13	6.4/6.4	100.0	10	10.3	100.0
결측	1	.5/-	-	-	-	-
합계	203	100.0	-	97	100.0	-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제의 민주, 인권, 평화, 나눔의 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드는데,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학생 스스로의 결정이 54.7%를 차지하고 있고, 5·18관련단체 관계자들이 22.2%, 학교의 지도교사의 영향이 11.8%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기획자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의외로 청소년들은 전문기획자의 역할보다는 청소년 자신을 행사의 주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했고, 학교 교사보다는 5·18관련 단체의 관계

자들에게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5·18사건에 대한 첫 인식과 문화제로의 접근은 학교 교육과 교사들의 역할이 크지만, 문화제에 받을 들여놓는 순간부터는 자발적 혹은 5·18관련 단체의 관계자들에게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A집단-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드는데,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Q10)

구분	A집단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학교의 지도교사	24	11.8	11.8
학생들 스스로	111	54.7	66.5
5·18관련 단체의 관계자들	45	22.2	88.7
전문기획자	13	6.4	95.1
기타	10	4.9	100.0
합계	203	100.0	-

그것은 <표 15>의 교차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집단별로 보았을 때 결측을 제외한 202명의 A집단은 동아리→선생님 추천→스스로 관심 순서로 나타지만, B집단의 경우 선생님의 추천 및 권유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A 집단의 문화제 참여 권유자와 재현에 미치는 영향력 문제 (Q8*Q10)(X²=55.307, F=24 p=.000***)

Q10		학교의 지도교사	학생 스스로	5·18관련 관계자들	전문기획자	기타	전체
Q8							
선생님 추천권유	빈도	10	17	10	5	2	44
	Q8의%	22.7	38.6	22.7	11.4	4.5	100.0
	Q10의%	43.5	15.3	22.2	38.5	20.0	21.8
	전체%	5.0	8.4	5.0	2.5	1.0	21.8
동아리 행사참여	빈도	7	66	20	2	6	101
	Q8의%	6.9	65.3	19.8	2.0	5.9	100.0
	Q10의%	30.4	59.5	44.4	15.4	60.0	50.0
	전체%	3.5	32.7	9.9	1.0	3.0	50.0
5·18관련자 추천권유	빈도	0	10	5	0	0	15
	Q8의%	.0	66.7	33.3	.0	.0	100.0
	Q10의%	.0	9.0	11.1	.0	.0	7.4
	전체%	.0	5.0	2.5	.0	.0	7.4
스스로 관심	빈도	5	10	5	3	1	24
	Q8의%	20.8	41.7	20.8	12.5	4.2	100.0
	Q10의%	21.7	9.0	11.1	23.1	10.0	11.9
	전체%	2.5	5.0	2.5	1.5	.5	11.9

부모친지권유	빈도	0	0	1	0	1	2
	Q8의%	.0	.0	50.0	.0	50.0	100.0
	Q10의%	.0	.0	2.2	.0	10.0	1.0
	전체%	.0	.0	.5	.0	.5	1.0
대중매체홍보	빈도	0	0	1	2	0	3
	Q8의%	.0	.0	33.3	66.7	.0	100.0
	Q10의%	.0	.0	2.2	15.4	.0	1.5
	전체%	.0	.0	.5	1.0	.0	1.5
기타	빈도	1	8	3	1	0	13
	Q8의%	7.7	61.5	23.1	7.7	.0	100.0
	Q10의%	4.3	7.2	6.7	7.7	.0	6.4
	전체%	.5	4.0	1.5	.5	.0	6.4
전체	빈도	23	111	45	13	10	202
	Q8의%	11.4	55.0	22.3	6.4	5.0	100.0
	Q10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11.4	55.0	22.3	6.4	5.0	100.0

이들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A집단의 63.2%가 5·18사건 내용의 전달 및 재현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으며, 20.9%가 관객의 호응도를 꼽았다. B집단 역시 72.6%가 역사적 사실 재현을 문화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표 16> 참조). 그렇다면 청소년 문화제에 참여를 권유했던 주체들의 영향은 재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표 17>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청소년들이 5·18사건 내용의 전달 및 재현에 학교 선생님들의 영향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표 16> 재현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요소(Q11)

구분	A집단			B집단		
	빈도	퍼센트/유효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유효	누적 퍼센트
5·18사건내용 전달재현	127	62.6/63.2	63.2	69	71.1/72.6	72.6
전시기술과 전문성	23	11.3/11.4	74.6	6	6.2/6.3	78.9
관객호응도	42	20.7/20.9	95.5	19	19.6/20.0	98.9
기타	9	4.4/4.5	100.0	1	1.0/1.1	100.0
결측	2	1.0/-	-	2	-	-
합계	203	100.0	-	97	100.0	-

<표 17> A집단의 참가권유자와 재현과정의 영향력(Q8*Q11)(X²=21.011, F=18, p=.279)

Q8 \ Q11		5-18사건 내용 전달재현	전시기술과 전문성	관객호응도	기타	전체
선생님 추천권유	빈도	26	5	7	6	44
	Q8의%	59.1	11.4	15.9	13.6	100.0
	Q11의%	20.6	21.7	16.7	66.7	22.0
	전체%	13.0	2.5	3.5	3.0	22.0
동아리 행사참여	빈도	63	14	22	2	101
	Q8의%	62.4	13.9	21.8	2.0	100.0
	Q11의%	50.0	60.9	52.4	22.2	50.5
	전체%	31.5	7.0	11.0	1.0	50.5
5-18관련자 추천권유	빈도	9	2	4	0	15
	Q8의%	60.0	13.3	26.7	.0	100.0
	Q11의%	7.1	8.7	9.5	.0	7.5
	전체%	4.5	1.0	2.0	.0	7.5
스스로관심	빈도	16	1	4	1	22
	Q8의%	72.7	4.5	18.2	4.5	100.0
	Q11의%	12.7	4.3	9.5	11.1	11.0
	전체%	8.0	.5	2.0	.5	11.0
부모친지 권유	빈도	0	1	1	0	2
	Q8의%	.0	50.0	50.0	.0	100.0
	Q11의%	.0	4.3	2.4	.0	1.0
	전체%	.0	.5	.5	.0	1.0
대중매체 홍보	빈도	2	0	1	0	3
	Q8의%	66.7	.0	33.3	.0	100.0
	Q11의%	1.6	.0	2.4	.0	1.5
	전체%	1.0	.0	.5	.0	1.5
기타	빈도	10	0	3	0	13
	Q8의%	76.9	.0	23.1	.0	100.0
	Q11의%	7.9	.0	7.1	.0	6.5
	전체%	5.0	.0	1.5	.0	6.5
전체	빈도	126	23	42	9	200
	Q8의%	63.0	11.5	21.0	4.5	100.0
	Q11의%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63.0	11.5	21.0	4.5	100.0

결과적으로 문화제 참여 이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의 영향력은 있지만, 본격적인 재현과정의 참여 이후에는 청소년 스스로(44.1%) 및 5-18관련 관계자들에 의해서 5-18사건 내용의 전달 및 재현(27.6%)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프로그램 생산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역사적 사실의 재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후세대에게 의해서 새로운 기억의 재구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표 18>재현과정의 영향력 행사자와 재현과정의 중요 요소 (Q10*11)(X2=24.342, F=12, p=.018**)

■ A집단

Q11		5-18사건 내용전달재현	전시기술과 전문성	관객호응도	기타	전체
Q10						
학교의 지도교사	빈도	17	3	2	2	24
	Q10의%	70.8	12.5	8.3	8.3	100.0
	Q11의%	13.4	13.0	4.8	22.2	11.9
	전체%	8.5	1.5	1.0	1.0	11.9
학생스스로	빈도	56	18	30	6	110
	Q10의%	50.9	16.4	27.3	5.5	100.0
	Q11의%	44.1	78.3	71.4	66.7	54.7
	전체%	27.9	9.0	14.9	3.0	54.7
5-18관련 관계자들	빈도	35	0	8	1	44
	Q10의%	79.5	.0	18.2	2.3	100.0
	Q11의%	27.6	.0	19.0	11.1	21.9
	전체%	17.4	.0	4.0	.5	21.9
전문기획자	빈도	12	0	1	0	13
	Q10의%	92.3	.0	10.0	.0	100.0
	Q11의%	9.4	.0	2.4	.0	6.5
	전체%	6.0	.0	.5	.0	6.5
기타	빈도	7	2	1	0	10
	Q10의%	70.0	20.0	10.0	.0	100.0
	Q11의%	5.5	8.7	2.4	.0	5.0
	전체%	3.5	1.0	.5	.0	5.0
전체	빈도	127	23	42	9	201
	Q10의%	63.2	11.4	20.9	4.5	100.0
	Q11의%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63.2	11.4	20.9	4.5	100.0

앞선 교차 분석들을 비교 해보았을 때, 참여계기는 동아리 및 학교 선생님의 추천이 강하며, 참여 이후에는 자발적 참여 및 5-18관련 단체들의 기획력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5-18사건 내용의 전달 및 재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과정에는 참여권유자와 5-18관계자들의 영향력을 자신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결과라 사료된다.

즉, 담론의 수용과정에서 자신에게 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해준 교사 및 5·18관계자들의 영향력과 함께 자발적인 자각과 판단에 의해 축제가 기획됨을 인식할 수 있다. 100%의 자발성과 100%의 모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교사와 5·18 관계자들의 적절한 범위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순 없다. 오히려 기획의 의도와 내용의 본질을 자각하게 하는 과정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들 청소년들에게 문화제가 어떻게 재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A집단 51.7%, B집단의 59.8%가 5·18사건 내용의 전달 및 재현을, 19.7%가 평화,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의 재현을, 18.7%가 현대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비판적 재현을 해야 한다는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표 19>참조). 즉, 재현의 내용 중 절반은 역사적 사실과 같은 과거의 기억이지만, 절반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현재의 담론과 그 담론과 맞닿아 있는 현재의 사회문제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문화제의 향후 재현 방향(Q12)

구분	A집단			B집단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518사건내용의 전달 및 재현	105	51.7	51.7	58	59.8	59.8
현대사회문제 비판적재현	38	18.7	70.4	10	10.3	70.1
평화인권 등 보편가치재현	40	19.7	90.1	18	18.6	88.7
지역정체성 자긍심재현	18	8.9	99.0	8	8.2	96.9
기타	2	1.0	100.0	3	3.1	100.0
합계	203	100.0	-	97	100.0	-

<표 20>은 청소년 문화제의 재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아리, 교사, 5·18관련관계자들의 영향과 향후 재현 방향에 대한 교차분석이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드는데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학생 스스로의 경우, 5·18사건 내용의 전달 및 재현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것은 청소년들 스스로 5·18사건 내용의 전달 및 재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인권, 평화 등 인류보편가치의 재현 및 현대사회문제와 연관한 비판적 재현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

다. 후체험세대들은 기억과 담론의 수용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기억에 현재 시대상황과의 연관성을 통해 5·18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와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5·18관계자들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청소년들은 5·18사건의 역사적 재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주체로서의 욕구가 더 강하게 부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현과정에서 문화 전문기획자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확장적인 논의로 나아가는 데까지는 미비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0> 재현과정의 영향력 행사자와 향후 재현 방향(Q10*12)(X²=33.578, F=16, p=.006)**

■ A집단

Q10 \ Q12		5·18사건 내용의 전달 및 재현	현대사회문제 비판적 재현	평화인권 등 보편가치재현	지역정체성 자긍심재현	기타	전체
학교의 지도교사	빈도	12	3	5	3	1	24
	Q10의%	50.0	12.5	20.8	12.5	4.2	100.0
	Q12의%	11.4	7.9	12.5	16.7	50.0	11.8
	전체%	5.9	1.5	2.5	1.5	.5	11.8
학생스스로	빈도	45	27	28	11	0	111
	Q10의%	40.5	24.3	25.2	9.9	.0	100.0
	Q12의%	42.9	71.1	70.0	61.1	.0	54.7
	전체%	22.2	13.3	13.8	5.4	.0	54.7
5·18관련관계자들	빈도	31	6	5	1	0	45
	Q10의%	68.9	17.8	11.1	2.2	.0	100.0
	Q12의%	29.5	21.1	12.5	5.6	.0	22.2
	전체%	15.3	3.9	2.5	.5	.0	22.2
전문기획자	빈도	10	0	0	2	1	13
	Q10의%	76.9	.0	.0	15.4	7.7	100.0
	Q12의%	9.5	.0	.0	11.1	50.0	6.4
	전체%	4.9	.0	.0	1.0	.5	6.4
기타	빈도	7	0	2	1	0	10
	Q10의%	70.0	.0	20.0	10.0	.0	100.0
	Q12의%	6.7	.0	5.0	5.6	.0	4.9
	전체%	3.4	.0	1.0	.5	.0	4.9
전체	빈도	105	38	40	18	2	203
	Q10의%	51.7	18.7	19.7	8.9	1.0	100.0
	Q12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51.7	18.7	19.7	8.9	1.0	100.0

이와 달리 B집단에게는 문화제에서 가장 잘 재현된 담론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민주화 운동→민중항쟁→평화와 인권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교차분석한 결과 민주화운동, 민중항쟁, 평화와 인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5·18사건 내용의 전달 및 재현을 가장 염두해 두고 관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즉, 수많은 담론들이 원초적 사건 위에서 재생되고 있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 가장 본질적이며 이를 후세대 역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B집단-담론의 재현(X²=31.313, F=20 p=.051)

■ B집단

Q12 Q10		5·18사건 내용의 전달 및 재현	현대사회문제 비관적 재현	평화인권 등 보편가치재현	지역정체성 자긍심재현	기타	전체
민중항쟁	빈도	17	1	3	2	0	23
	Q10의%	73.9	4.3	13.0	8.7	.0	100.0
	Q12의%	29.3	10.0	17.6	25.0	.0	24.0
	전체%	17.7	1.0	3.1	2.1	.0	24.0
민주화 운동	빈도	22	4	6	1	2	35
	Q10의%	62.9	11.4	17.1	2.9	5.7	100.0
	Q12의%	37.9	40.0	35.3	12.5	66.7	36.5
	전체%	22.9	4.2	6.3	1.0	2.1	36.5
평화와 인권	빈도	11	3	7	1	0	22
	Q10의%	50.0	13.6	31.8	4.5	.0	100.0
	Q12의%	19.0	30.0	41.2	12.5	.0	22.9
	전체%	11.5	3.1	7.3	1.0	.0	22.9
지역 정체성	빈도	2	2	0	2	0	6
	Q10의%	33.3	33.3	.0	33.3	.0	100.0
	Q12의%	3.4	20.0	.0	25.0	.0	6.3
	전체%	2.1	2.1	.0	2.1	.0	6.3
광주사회 문제	빈도	3	0	1	0	1	5
	Q10의%	60.0	.0	20.0	.0	20.0	100.0
	Q12의%	5.2	.0	5.9	.0	33.3	5.2
	전체%	3.1	.0	1.0	.0	1.0	5.2
기타	빈도	3	0	0	2	0	5
	Q10의%	60.0	.0	.0	40.0	.0	100.0
	Q12의%	5.2	.0	.0	25.0	.0	5.2
	전체%	3.1	.0	.0	2.1	.0	5.2
전체	빈도	58	10	17	8	3	96
	Q10의%	60.4	10.4	17.7	8.3	3.1	100.0
	Q12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60.4	10.4	17.7	8.3	3.1	100.0

향후 문화제는 누가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67.8%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18관련 단체의 관계자들이 17.8%을 차지하였다(<표 22>참조).

<표 22> 문화제의 향후 기획자에 대한 의견(Q13)

구분	A집단			B집단		
	빈도	퍼센트/유효	누적 퍼센트	빈도	퍼센트/유효	누적 퍼센트
학교외지도교사	11	5.4/5.4	5.4	7	7.2/7.5	7.5
학생스스로	137	67.5/67.8	73.3	48	49.5/51.6	59.1
518관련관계자들	36	17.7/17.8	91.1	26	26.8/28.0	87.1
전문기획자	9	4.4/4.5	95.5	5	5.2/5.4	92.5
기타	9	4.4/4.5	100.0	7	7.2/7.5	100.0
결측	1	.5/-	-	4	4.1/-	-
합계	203	100.0	-	97	100.0	-

5·18사건의 내용 전달 및 재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청소년들이 향후의 재현주체는 청소년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18관련 단체들을 꼽았다. 반면 현대사회문제나 평화, 인권과 같은 담론의 재현은 학생스스로의 주체적 재현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스스로가 문화제에서 재현되는 5·18사건 및 담론의 수용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23> 참조).

<표 23> 향후 문화제 재현 내용과 재현 주체(Q12*13)(X2=17.851, F=16, p=.333)

■ A집단

Q12 \ Q13		학교의지도 교사	학생스스로	518관련관 계자들	전문기획자	기타	전체
5-18사건내용의 전달 및 재현	빈도	6	61	25	6	6	104
	Q12의%	5.8	58.7	24.0	5.8	5.8	100.0
	Q13의%	54.5	44.5	69.4	66.7	66.7	51.5
	전체%	3.0	30.2	12.4	3.0	3.0	51.5
현대사회문제 비판적 재현	빈도	3	26	4	3	2	38
	Q12의%	7.9	68.4	10.5	7.9	5.3	100.0
	Q13의%	27.3	19.0	11.1	33.3	22.2	18.8
	전체%	1.5	12.9	2.0	1.5	1.0	18.8
평화인권 등 보편가치재현	빈도	1	35	3	0	1	40
	Q12의%	2.5	87.5	7.5	.0	2.5	100.0
	Q13의%	9.1	25.5	8.3	.0	11.1	19.8
	전체%	.5	17.3	1.5	.0	.5	19.8
지역정체성 자긍심재현	빈도	1	14	3	0	0	18
	Q12의%	5.6	77.8	16.7	.0	.0	100.0
	Q13의%	9.1	10.2	8.3	.0	.0	8.9
	전체%	.5	6.9	1.5	.0	.0	8.9
기타	빈도	0	1	1	0	0	2
	Q12의%	.0	50.0	50.0	.0	.0	100.0
	Q13의%	.0	.7	2.8	.0	.0	1.0
	전체%	.0	.5	.5	.0	.0	1.0
전체	빈도	11	137	36	9	9	202
	Q12의%	5.4	67.8	17.8	4.5	4.5	100.0
	Q13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5.4	67.8	17.8	4.5	4.5	100.0

■ B집단(X2=15.330, F=16, p=.501)

Q12 \ Q13		학교의 지도교사	학생스스로	518관련 관계자들	전문기획자	기타	전체
5-18사건내용의 전달 및 재현	빈도	7	29	14	2	4	56
	Q12의%	12.5	51.8	25.0	3.6	7.1	100.0
	Q13의%	100.0	60.4	53.8	40.0	57.1	60.2
	전체%	7.5	31.2	15.1	2.2	4.3	60.2
현대사회문제 비판적 재현	빈도	0	8	1	1	0	10
	Q12의%	.0	80.0	10.0	10.0	.0	100.0
	Q13의%	.0	16.7	3.8	20.0	.0	10.8
	전체%	.0	8.6	1.1	1.1	.0	10.8
평화인권 등 보편가치 재현	빈도	0	8	5	1	2	16
	Q12의%	.0	50.0	31.3	6.3	12.5	100.0
	Q13의%	.0	16.7	19.2	20.0	28.6	17.2
	전체%	.0	8.6	5.4	1.1	2.2	17.2

지역경제성 자금심재현	빈도	0	2	4	1	1	8
	Q12의%	.0	25.0	50.0	12.5	12.5	100.0
	Q13의%	.0	4.2	15.4	20.0	14.3	8.6
	전체%	.0	2.2	4.3	1.1	1.1	8.6
기타	빈도	0	1	2	0	0	3
	Q12의%	.0	33.3	66.7	.0	.0	100.0
	Q13의%	.0	2.1	7.7	.0	.0	3.2
	전체%	.0	1.1	2.2	.0	.0	3.2
전체	빈도	7	48	26	5	7	93
	Q12의%	7.5	51.6	28.0	5.4	7.5	100.0
	Q13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7.5	51.6	28.0	5.4	7.5	100.0

V. 종합 결과

본 연구는 5·18사건에 대한 후체험세대로의 기억과 담론의 전수 과정에 관심을 두었다. 다시 말해서, 체험세대가 점차 줄어들며 이미지와 같은 간접 기억 매체들이 중심이 되는 기억의 전수과정에서 후체험세대들은 5·18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관심을 두었다. 특히 많은 기억 매체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 청소년 문화제와 같은 기억 매체들이 후체험세대들인 청소년들의 5·18에 대한 기억과 담론의 수용을 어떻게 견인하고 있는지 조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제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문화제의 재현과정과 구조를 분석함은 물론 후체험세대들의 5·18사건에 대한 기억과 담론의 수용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후체험세대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문화제의 실행구조는 5·18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응축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구조와 그에 기반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된 공공화된 민주, 인권, 평화, 나눔의 담론을 인식하는 실행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그러한 실행 구조를 보이게 된 데에는 실행 주체들의 문제가 제기되는 데, 문화제 참여한 주체들은 학교 교사, 5·18관련 단체 관계자, 청소년집단, 전문기획자 등으로, 5·18사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학교(교사, 교과서 포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문화제 재현 및 실행과정에서는 5·18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궁극적으

로는 학생 스스로의 주체 이행 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학생 스스로가 재현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후체험세대의 역할에 대해서 현재의 많은 분석들이 소홀히 다루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특히 문화제의 기획과 실행에 참여한 청소년들일수록 5·18사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 경로를 가지고 있었으며, 폭넓은 현재적 담론까지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문화제 자체가 청소년들이 재현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후체험 세대들은 문화제의 기획과 실행에 참여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문화제의 관람에 참여한 청소년들조차도 5·18사건은 민주화 운동, 민중항쟁과 같은 기억들로 5·18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5·18사건이 민주화운동 및 민중항쟁으로 기억이 전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5·18사건에 대한 수용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개 학교 교육을 통해 5·18사건에 대하여 첫 인식을 하는 계기를 맞았으며, 그 과정에서 5·18사건과 관련된 공공화된 담론들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화제와 같은 축제에서 청소년 집단 자체가 재현 주체가 되면서, 학교 교육에서 습득한 인식과 담론을 스스로 공고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 교육 이상의 새로운 담론과 사회문제들에 대한 청소년 담론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정이 나타났으며, 문화제 체험자들이 훨씬 더 빈번하고 다양한 정보 습득의 경로와 전수 경로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스스로 기억의 재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결국 문화제는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학교 교육과 문화제의 연계성에 대하여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껏 5·18기념의례에 대한 분석은 2000년 이후 5·18사건이 국가에 의해 기념되면서 5·18기념의례의 시민적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시민적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소규모 이벤트들이 분산 배치되고, 원초적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현되며 현실적인 운동과제들이 공존, 결합, 경쟁하는 구도로 변화하였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축제는 이와 달리 후체험세대의 계승이라는 뚜렷한 목표 하에 5·18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고, 현실의 담론과 문제들을 연계시키는 구도로 5·18사건에 대한 기억을 후체험 세대에게까지 공고히 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첨부: 설문지 등

■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 강창일, 현해경, 2006, '4.3기억의 곳을 통한 재현', 정근식 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 권귀숙, 2006, 『기억의 정치』, 문학과 지성사.
- 김영법, 1999, '알박스의 기억사회학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6(3)
- 민현정, 2009, '5·18에 대한 인식조사 분석', 『5·18민중항쟁 29주년 기념학술대회자료집』,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신수연, 2009,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논문.
- 정근식, 1999, '광주민중항쟁과 5월 운동',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 정근식, 2004, '5월운동과 혁명적 축제',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2』, 문학과학사.
- , 2005, '항쟁기억의 의례적 재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5.
- , 2006, '항쟁기억의 의례적 재현', 정근식 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 정호기, 2004,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정치사회적 과정과 자원동원',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38(2)
- 현해경, 2004, 『기억투쟁과 문화운동』, 역사와 비평사.
- Assman, A. 1999, Erinnerungsräume, Verlag C.h.Beck oHG.(변학수, 백설자, 채연숙 역, 2003,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 Connerton, P. 1989,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ser, L. A. 1992, "Introduction: Maurice Halbwachs, 1877-1945",
- Halbwachs, M. & Coser, L. A. (ed), 1992,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University Press,
- Halbwachs, M. 1980,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Milgram, S. 1974, Obedience to Authority, Harper Perennial.
- Nora, P. 2001, Rethinking France Vol 1-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uman, H. & Scott, J. 1989, "Generation and Collective Mem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 Schwartz, B. 1997, "Collective Memory and History: How Abraham Lincoln Became a Symbol of Racial Equality",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38, No.3

〈기타자료〉

5·18기념재단, 2009, 「5·18청소년 문화제 RED FESTA 결과보고서(2004-2009)」

5·18기념재단, 2004, 「5·18청소년 교육사업의 평가와 제언」

광주매일(2004년 5월21일자), 「5·18청소년 축제 레드페스타 개최」

무등일보(2006년 7월3일자) 「피플 파워-40, 도심 속의 문화 게릴라 모난돌」

〈인터넷 자료〉

5·18기념재단, 2008,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의 5·18민주화운동 진실왜곡에 대한 공개 사과 재요구」
(<http://www.518.org>)

5·18기념재단, 2008, 「경남 창원 지검 진주지청, 5·18관련 자료 사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5·18관련 단체 질의 및 항의서한 공문은 반송 처리해」 (<http://www.518.org>)

제7회 5·18청소년문화제에 대한 조사(프로그램준비자용)

본 조사는 5·18청소년문화제에 대한 조사로, 조사의 결과는 오직 학문적, 정책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귀하가 답변한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귀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현해경 (사회학과 BK21 계약교수) 019-698-0973/062-530-0126
 공동연구자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한은영 (사회학과 대학원) 010-9118-4462

대당하는 번호에 하나만 ○ 표 혹은 √ 표를 해주세요.

• 본 설문은 모두 기입하지 않으면 사용될 수 없으니, 양면 모두 기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5·18사건에 대한 기억>

1. 귀하는 5·18사건에 대하여 언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 5) 기타()

2. 귀하는 5·18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혹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1) 민중항쟁 2) 공산폭동 3) 민주화운동 4) 기타()

3. 귀하가 문항 2의 응답과 같이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입니까?
 1)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2) 가족이나 주변사람 3) 학교 교육
 4) 5·18관련 행사들 5) 대중매체의 영향 6) 기타()

4. 5·18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게 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1) 가족이나 주변사람을 통해 2) 대중매체의 프로그램을 통해 3) 학교 교육을 통해
 4) 5·18관련 행사들을 통해 5) 기타()

5. 5·18관련 행사들은 귀하가 5·18사건에 대한 정보를 아는데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1) 아주 많이 주고 있다. 2) 많이 주고 있다. 3) 보통이다
 4) 별로 주지 않고 있다. 5) 아무런 상관이 없다.

6. 이제까지 귀하가 보신 5·18행사 중에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 5월 17일 전야제 2) 5월 18일 공식 기념식
 3) 5·18추모공연 4) 5·18청소년문화제 REDFESTA
 5) 5·18사적지 순례 6) 기타()

7. 5·18주간에 청소년 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개인적 배경으로 가주세요).

B. <5-18청소년문화제 프로그램 준비자>

8. 2010년 5·18청소년문화제에는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셨습니까?
 1) 학교 선생님의 추천 및 권유로 2) 소속된 동아리가 행사에 참여해서
 3) 5·18단체 관계자의 추천 및 권유로 4) 스스로 관심을 가져서
 5) 부모님 및 친지의 권유로 6) 대중매체의 홍보를 보고 7)기타()

9. 귀하는 2010년 5·18청소년문화제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준비자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명:

10.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드는데,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 학교의 지도교사 2) 학생들 스스로 3) 5·18관련 단체의 관계자들 4) 전문기획자 5) 기타()

11.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1) 5·18사건 내용의 전달 및 재현 2) 전시(공연)기술과 전문성
 3) 관객의 호응도 4) 기타()

12. 5·18청소년문화제는 어떻게 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5·18사건의 역사적 재현 2) 현대 사회문제와 연관하여 비판적 재현
 3) 평화/인권 등 인류보편가치의 재현 4) 지역적 정체성 및 자긍심을 나타내는 재현
 5) 기타()

13. 5·18청소년문화제는 누가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학교의 지도교사 2) 학생들 스스로 3) 5·18단체의 관계자들 4) 전문기획자 5)기타()

14. 5·18청소년문화제는 어떤 느낌으로 치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숙해야 한다	←...1...2...3...4...5...→	즐겁고 자유로워야 한다
어두워야 한다	←...1...2...3...4...5...→	밝아야 한다
조용해야 한다	←...1...2...3...4...5...→	활기차야 한다
추모적이어야 한다	←...1...2...3...4...5...→	놀이적이어야 한다

15. 5·18청소년문화제를 본인이 기획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하고 싶은 프로그램:

이유:

<개인적 배경>

- A. 귀하의 연령은() B. 귀하의 성별은() C. 귀하의 주거지 ()도/시()동
 D. 귀하의 학교는() E. 귀하 부모님의 직업은()
 F. 귀하 부모님의 학력은?----- 1) 고졸 이하 2) 대졸 3) 대학원 이상 4) 기타()
 G. 귀하의 가족 및 친지 중 5·18 피해자가 계십니까?----- 1) 있다 2) 없다

감사합니다.

제7회 5·18청소년문화제에 대한 조사(참여자용)

본 조사는 5·18청소년문화제에 대한 조사로, 조사의 결과는 오직 학문적, 정책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귀하가 답변한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귀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현해경 (사회학과 BK21 계약교수) 019-698-0973/062-530-0126
 공동연구자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한은영 (사회학과 대학원) 010-9118-4462

에 해당하는 번호에 하나만 ○ 표 혹은 √ 표를 해주세요.

• 본 설문은 모두 기입하지 않으면 사용될 수 없으니, 양면 모두 기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5·18사건에 대한 기억>

1. 귀하는 5·18사건에 대하여 언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 5) 기타()

2. 귀하는 5·18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혹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1) 민중항쟁 2) 공산폭동 3) 민주화운동 4) 기타()

3. 귀하가 문항 2의 응답과 같이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입니까?
 1)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2) 가족이나 주변사람 3) 학교 교육
 4) 5·18관련 행사들 5) 대중매체의 영향 6) 기타()

4. 5·18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1) 가족이나 주변사람을 통해 2) 대중매체의 프로그램을 통해 3) 학교 교육을 통해
 4) 5·18관련 행사들을 통해 5) 기타()

5. 5·18관련 행사들은 귀하가 5·18사건에 대한 정보를 아는데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1) 아주 많이 주고 있다. 2) 많이 주고 있다. 3) 보통이다
 4) 별로 주지 않고 있다. 5) 아무런 상관이 없다.

6. 이제까지 귀하가 보신 5·18행사 중에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 5월 17일 전야제 2) 5월 18일 공식 기념식
 3) 5·18추모공연 4) 5·18청소년문화제 REDFESTA
 5) 5·18사적지 순례 6) 기타()

7. 5·18주간에 청소년 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개인적 배경으로 가주세요).

B. <5-18청소년문화제 참여자>

8. 2010년 5-18청소년문화제는 누구의 소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까?
 1) 학교 선생님의 추천 및 권유로 2) 친구의 추천 및 권유로
 3) 5-18단체 관계자의 추천 및 권유로 4) 스스로 관심을 가져서
 5) 부모님 및 친지의 권유로 6) 대중매체의 홍보를 보고 7)기타()
9. 2010년 5-18청소년문화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까?
 프로그램명:
 이유:
10. 2010년 5-18청소년문화제는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민중항쟁 2) 민주화(운동) 3) 평화와 인권 4) 지역정체성
 5) 현재 광주사회의 여러 문제들 6) 기타()
11. 프로그램을 관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1) 5-18사건 내용의 전달 및 재현 2) 공연(전시)기술과 전문성
 3) 관객의 호응도 4) 기타()
12. 5-18청소년문화제는 어떻게 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5-18사건의 역사적 재현 2) 현대 사회문제와 연관하여 비판적 재현
 3) 평화/인권 등 인류보편가치의 재현 4) 지역적 정체성 및 자긍심을 나타내는 재현
 5) 기타()
13. 5-18청소년문화제는 누가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학교의 지도교사 2) 학생을 스스로 3) 5-18단체의 관계자들 4)전문기획자 5)기타()
14. 5-18청소년문화제는 어떤 느낌으로 치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숙해야 한다	←...1...2...3...4...5...→	즐겁고 자유로워야 한다
어두워야 한다	←...1...2...3...4...5...→	밝아야 한다
조용해야 한다	←...1...2...3...4...5...→	활기차야 한다
추모적이어야 한다	←...1...2...3...4...5...→	놀이적이어야 한다

15. 5-18청소년문화제를 본인이 기획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하고 싶은 프로그램:
 이유:

<개인적 배경>

- A. 귀하의 연령은() B. 귀하의 성별은() C. 귀하의 주거지()
 D. 귀하의 학교는() E. 귀하 부모님의 직업은()
 F. 귀하 부모님의 학력은?----- 1) 고졸 이하 2) 대졸 3) 대학원 이상 4) 기타()
 G. 귀하의 가족 및 친지 중 5-18 피해자가 계십니까?----- 1) 있다 2) 없다

감사합니다.

2010년 5·18전문연구자 육성 석사논문

▣ 저항집단 내 하위주체의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에
관한 연구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5·18기념재단

국문초록

본 논문은 5월민중항쟁에서 시민군기동타격대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애사를 재구성하여, 이들이 5·18과 관련한 트라우마티즘을 극복 또는 형성해 가는 과정을 사회학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민군기동타격대의 생애를 네 시기-80년 5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구분하고, 각 시기마다 시민군기동타격대에게 나타나는 인정투쟁과 트라우마티즘의 양상을 정치·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밝혀보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정투쟁을 원초적 관계-권리관계-가치공동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그 속에서 자기민음, 자기존중, 자기가치부여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Honneth의 인정투쟁 이론과 Herman의 트라우마 회복 과정 분석을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으로 개념화하여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이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시민군기동타격대의 경우 ‘5월정신’이라는 집단정체성 즉, 일반화된 타자의 규범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은 기동타격대 동지회-5월단체-5월공동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끊임없는 인정투쟁 노력과 그 결과로서 트라우마티즘의 극복 및 형성 과정을 보여 왔는데, 이를 시기 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80년 5월 : ‘5·18체험’에 따른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 2) 80년대 : ‘5월정신’을 향한 인정투쟁을 통한 트라우마티즘의 극복
- 3) 90년대 : ‘5·18지원’을 향한 인정투쟁 및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 4) 2000년대 : ‘상처받은 5월정신’으로 인한 복합적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즉, 80년 5월민중항쟁 당시의 충격적인 외상사건에도 불구하고 항쟁 직후 시민군기동타격대가 자신들의 생존의 욕구를 초월한 투쟁정신을 보여주고 또·유지하고자 했던 기체로서의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은 그들이 외상을 통합하고 애도하며, 공동체와의 연결을 시도했던 자신들의 인정투쟁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80년대 전반에 걸쳐 그들에게 함께 지키고 실현시켜야 할 ‘5월정신’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그러나 5·18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90년대 이후부터 5·18이 자원화되며 그 의미가 제한되고 축소된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5월정신’의 훼손,

5월단체 내부갈등, 항쟁주체로서의 사회적 지지 축소 등이 동반되며 시민군기동타격대에게는 복합적인 트라우마티즘이 형성되게 된다. 복합적 트라우마티즘은 외상사건을 극복하기 위해 형성했던 높은 수준의 도덕적 규범이 상실되고, 항쟁 참여 공로에 대한 불인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며, 이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신, 박탈감, 적대감의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은 1)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 금전 보상 위주의 과거청산이 갖는 구조적 한계 2) 87년 민주화 이후 5·18이 제도정치로 편입되는 과정 3) 저항집단 내부의 갈등구조 및 고립화과정이라는 정치사회적 맥락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5·18시민군기동타격대, 5월민중항쟁, 5월운동, 5월공동체, 5·18 과거청산, 생애사, 인정투쟁, 정체성 형성과정, 사회적 지지, 트라우마,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저항적 트라우마티즘.

* 이 논문은 518기념재단의 '2010년도 5·18 전문연구자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감사의 글

1년 반에 걸쳐 논문을 쓰면서 구술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자원을 지니지 못한 나의 세계관의 한계를 느껴야 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또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구술이야기라는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조금은 그 분들의 고통에 다가갈 수 있었고,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빛나는 행위전략들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Herman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나로서는 살아있는 철학자들로부터 배우는 과정 자체가 무척 뜻 깊은 또 하나의 생애사적 사건이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간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 해주신 5·18시민군기동타격대 구술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이 논문이 나올 수 있었다. 그분들이 처음 찾아온 젊은 학생에게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논문은 추측과 이론들로만 가득 찬 논문이 되었을 것이다.

책상 앞에 앉아서, 원석과의 대화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질문들, “박○○ 씨는 그 때, 왜 서울을 떠났을까?” “염○○ 씨는 정말로 5·18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 “이분들의 심정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심리로만 얘기할 수 있을까?” “왜 이분들은 도청에 남는 선택을 했을까?”... 그러한 끊임없는 질문들로 1년을 살았다. 그 결과 처음의 가설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왔고, 부족하지만 5·18 참가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한발 한발 다가갈 수 있었다. 이것이 논문을 쓰면서 느낀 가장 큰 보람이었다. 구술자분들의 생애사를 이해하면서 무섭고, 두려운 것도 많았지만, 하나의 사건을 이해했을 때 들었던 존경과 감탄의 마음들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박○○, 김○○, 이○○, 김○○, 염○○, 양○○ 선생님 등 기동타격대 회원들, 그리고 친절히 광주조사를 안내해 주셨고, 이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던 허○○ 선생님께 커다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자신의 문제처럼 걱정하며 반복되는 질문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넘쳐나는 지지를 보내주었던 원석이 없었다면 논문을 끝까지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원석에게 사랑과 우정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지적 자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었던 명희 씨와 규식 씨 그리고 나의 철없는 고민들을 나누고 함께 생활해왔던 사회학과 동료들이 있었기에 논문을 쓸 결심도 하였고, 마지막까지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

게 되었다. 이들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논문 계획서부터 1차, 2차 심사까지 나의 문제의식을 지지하고,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주셨던 이종구 선생님, 필자 못지않게 5·18 트라우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김동춘, 한홍구 선생님, 그리고 사회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던 조희연, 김진업, 박경태, 조효제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취업도 하지 않고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에 간다고 했을 때, 믿어주고 선택을 존중해 주셨던 부모님께, 고통스런 생활 속에서 트라우마를 견디어 낸 것만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 아버지께 이 논문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항집단의 생애사를 통해 본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과정

-5·18시민군기동타격대의 '상처받은 5월 정신'

작성자 : 강은숙(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I. 서론

1.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2.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3.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방법

II. 5·18시민군 기동타격대의 생애사 재구성

1. 5월민중항쟁 이전의 삶
2. 5월민중항쟁의 체험
3. 5월민중항쟁 이후: 상무대 영창생활
4. 80년대: 5월투쟁의 전개과정
5. 90년대: 5월공동체의 갈등과 상처
6. 2000년대 '명예회복' 되지 못한 국가유공자

III.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과정 분석

1. '5·18체험' 과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2. '5월정신' 을 향한 인정투쟁과 트라우마티즘 극복 전략
3. '5·18자원' 을 향한 인정투쟁과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4. '상처받은 5월정신' 과 복합적인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IV. 트라우마티즘 강화의 정치사회적 함의

1. '5월정신' 을 희석시킨 5·18 과거청산
2. '5월정신' 의 훼손과 민주주의 심화의 실패
3. 사회운동과 트라우마티즘
4. 향후 실천적 과제

V. 결론

1. 연구주장의 요약
2. 연구의 함의 및 한계

참고문헌

I. 서론

1.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본 논문은 1980년 5월항쟁(이하 5월민중항쟁)에서 시민군기동타격대로 참가했던 사람들의 생애사를 통해, 이들이 5·18과 관련한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법·제도적 차원에서 5·18과 관련된 과거청산은 5·18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끝으로 마무리되었고, 공식적인 담론의 장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역사의 한 매듭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하지만,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5·18과 관련된 문제들이 정작 참가자들에게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5·18참가자들의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만성화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가배상, 기념사업, 명예회복의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된 5·18과거청산의 과정이 5·18참가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데에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5·18 문제의 해결은 이제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그 치유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한편, 5월민중항쟁 및 항쟁 이후의 5·18에 관련된 의제들은 주로 지식인 집단의 언어로 기록되어 왔기 때문에, 기층민중 출신 참가자들의 항쟁체험 및 항쟁 전후 생애체험은 제대로 표현되기 어려웠다. 물론 5·18에 대한 공식적인 담론의 생산과정을 통해 ‘폭도’와 ‘내란선동자’로 낙인찍혔던 항쟁 참가자들은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될 수 있었지만, 이러한 5·18 담론의 생산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내부적으로 겪었던 항쟁의 체험 및 항쟁 이후의 다양한 삶의 경로에 대한 관심이 동반되지 못했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바로 당사자들의 트라우마 확대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생애체험과 고유한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공식적 담론에서의 명예회복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이유로 기층민중 출신의 참가자들이 체험한 5·18의 의미, 정치체험, 정체성의 형성과 훼손 과정 그리고 이러한 체험들이

가로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생애사 재구성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애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드러난 트라우마의 내용, 트라우마화 과정,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환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트라우마가 형성·확대·축소·소멸되는 이유와 조건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5·18 참가자들의 삶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항쟁을 진압한 신군부는 5·18참가자들을 ‘내란을 선동한 폭도’로 규정하면서 위협과 배제라는 방법으로 5·18참가자들을 탄압했다. 하지만 5·18 참가자들은 5월민중항쟁이 끝난 이후에도 수십 년간 5·18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2의 항쟁을 벌여 왔다. 즉, 5·18참가자들은 신군부 집권 기간 동안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위와 같은 투쟁을 통해 나름대로 저항의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90년을 전후하여 5·18에 대한 왜곡·억압정책은 어느 정도 누그러졌고, 금전적인 보상과 형식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항쟁의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5·18의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지지자들은 90년대에 걸쳐서 지속적인 진실규명 운동을 펼쳐왔고, 집단 내부의 분화와 갈등도 겪었다. 90년대 후반 김영삼 정부 하에서는 5·18문제의 해결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살자를 처벌하고, 기념사업을 조성하는 등 부분적인 명예회복기가 조성된다. 2001년 김대중 정부가 관련자들을 국가 차원의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고 5·18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킴으로써 광주문제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과거청산은 실질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해결의 과정은 시기별로 담론의 변화를 동반했다. 항쟁 직후 신군부는 이들을 ‘폭도와 불순분자’로 낙인찍고 5·18에 대한 모든 사실공개를 통제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은 아는 사람들끼리만 암암리에 항쟁의 기억을 공유했고, 재야 운동세력은 비공식적 논의를 통해서만 5·18과 관련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다. 90년 전후에는 공개적으로 광주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참가자들은 항쟁의 주체가 아닌, 국가폭력의 ‘피해자’로서만 간주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재야운동세력으로부터 생성된 ‘열사와 투사’의 담론이 확장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이들은 ‘5·18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간략히 말하자면 5·18 참가자들은 이러한 담론의 변화 과정 속에서 ‘폭도’에서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이룬 셈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치적 국면 속에서 5·18 당사자들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이들은 역사적 격변 속에

서 생애사적 굴절과 회로애락을 경험했을텐데, 이 점은 5·18 과거청산의 과정에 대한 정책적인 분석이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한 시대가 주도하는 관점과 담론으로 이들의 삶이 조명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특정한 집단, 특정한 기억을 중심으로 재현될 수밖에 없었다.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5월민중항쟁은 정치적 격변의 한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에 5·18과 관련된 지식생산은 항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실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민중항쟁의 가치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고, 국가의 책임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5·18에 대한 법·제도적인 해결의 필요성 때문에, 지배 권력이 광주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즉 5·18을 둘러싼 정치체제 동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5월민중항쟁이라는 사건이 놓여 있는 사회의 거시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방향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그것은 거시적 차원을 통해 도출된 5·18의 역사적 가치, 보편적 상징, 사회적 과제 등에 대한 단일한 입장만이 강조되다 보니, 내부집단의 이질성과 체험의 다양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관점과 방식들이 존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층민중 참가자가 느낀 항쟁의 의미나 이들의 항쟁 이후의 삶과 생활세계를 복원하는 작업은 빈 공간으로 남겨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5·18 참가자들은 정치 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가 규정한 5·18의 이질적인 의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당사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영향을 받았는가? 둘째, 이러한 호명의 과정은 당사자의 삶을 대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현재 '영웅'으로 상징된 5·18참가자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셋째, 만성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민주화투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공식적인 문헌들 속에서 찾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5·18 참가자들이 살아오면서 부딪히는 정치적 격변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과정을 당시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들의 언어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동안의 5·18 담론이 항쟁 참가자들의 관점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당사자의 생애 체험을 중심으로

5·18의 역사를 그들의 삶 속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삶을 ‘5·18민주화운동’ 혹은 ‘5월민중항쟁’, ‘5월정신’ 등의 보편적인 상징에만 묶어두고자 하지 않으며, 역사적 정신의 계승이라는 목적론적 관점을 접어두고 5·18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이는 5·18참가자들이 항쟁 및 이후의 사건들을 어떻게 피부로 느끼고 내적으로 고민해 왔는지를 드러내고자 함이다. 또한 5월민중항쟁에서 결집되었던 다양한 주체들이 항쟁이 전개되는 과정, 항쟁 이후 5월운동 조직이 형성·분화하는 과정에서 상이하게 체험한 삶의 경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의 항쟁체험은 생애사에 있어 정체성을 형성하는 원초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라 보고, ‘5·18’이라는 상징으로 대표되는 체험 및 의미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정체성이 5월운동이라는 공동체적 상호작용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트라우마가 강화되거나 해소되는 과정, 새로운 트라우마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1) ‘민주화-역사’가 아닌 ‘생애-사’의 재구성

5·18에 대한 공식적·역사적 기억을 넘어서 기층민중의 비공식적 기억과 체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의 계보학을 서술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대신 당사자들의 생애사를 재구성하는 방식이 요청된다.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사건을 분석하는 관점은 사회 전체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 사회 내의 다양한 개인 및 집단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 체험의 의미를 담아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기층민중이 항쟁의 참여과정에서 취한 ‘자기참조적’ 동기와 행위전략, 감정과 의식을 다루고, 이들이 항쟁을 통해 느낀 일체감과 승리감의 경험뿐만 아니라, 5·18로 인한 실패와 좌절의 경험도 함께 구성하고자 한다. 나아가 ‘항쟁이라는 무대’ 이후의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떤 행위전략을 추구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5·18은 한국의 민주화 세력을 단결·각성시킨, 민중적 저항의 유산으로 기억되지만, 일부 당사자들에게 5·18은 정신적 고통 및 침묵으로 표현된다. 또한, 기층민중들에게 있어 ‘민주주의’, ‘5월정신’, 5월운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표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기층민중들은 이념적인 언어가 아닌 자신만의 비공식적인 생활세계의 논리 안에서 5·18을 체험하였다. 생애사적 관점은 이러한 삶의 언어를 구성하는 것이며, 앞서 밝힌 ‘폭도’-‘열사와 투사’-‘피해자’-‘유공자’ 등으로 호명된, 한 사람의 굴절된 생애사

를 당사자의 시각에서 서술할 수 있는 관점이다. 그리고 생애사 과정에 대한 이해는 5·18 참가자들을 역사적 평가에 의해 규정된, 대상화된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사회적 모순을 수용하고, 극복하고 변형시키고자 노력해 온 삶의 주체로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2) 상이한 정체성들로 구성된 저항공동체

광주시민들은 국가폭력에 대한 공동의 항쟁체험을 통해, 항쟁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단일한 집단적 정체성을 지닌 '5월 공동체'¹⁾를 형성하였다. 이들의 집단정체성은 군부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적대감, 5월민중항쟁에서 생성된 한의 감정 및 집단적 트라우마, 5·18진실규명에 대한 염원, 정치지도자 김대중에 대한 동일시 감정 등으로 표현된다.(정근식, 1997) 그러나 그러한 집단적 정체성의 형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되고, 내부 집단마다 상이한 결을 형성하게 된다. 항쟁 이후에 벌어진 5월운동²⁾의 과정은 항쟁 이전에 지닌 계층 간의 차이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고, 5월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다시 좌절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식인 집단이 역사적인 지식을 통해 이념적으로 정립한 '5월정신'은 감성적·실천적 성격이 강한 기층민중의 '5월정신'과 구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차이는 시기별로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확장된다. 또한 항쟁 이후 광주 지역 내부의 사회적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5·18이라는 유산은 각자의 삶에 자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장애물로서 작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각자가 지닌 사회적 조건의 틀과 행위양식과 맞물려 5월공동체 내부에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해 갔다. 5월공동체는 5·18이라는 공통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변수가 상호작용하면서, 그 내부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융화와 분화가 함께 진행되었다고 할

1) '5월 공동체'는 5·18당사자뿐만 아니라 5·18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고 있는 광주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가리킨다. 5월단체는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5·18광주의거침년동지회, 8월운동협의회 등 5·18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당사자 단체와 당사자들의 연합단체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2) 5월운동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80년 5월 이후에 벌어진 운동으로서, 5월민중항쟁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집합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5월운동은 매년 5월에 진행된 추념행사와 망월동 민주묘지와 관련된 일련의 창례투쟁으로 시작되었으나, 80년대 후반에는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 명예회복,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집합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5월운동은 자연스럽게 군부세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민주화운동과 연결됨에 따라, 5·18당사자들의 운동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5월정신'을 계승하려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운동의 의미로 확장되기도 하였다.(정근식, 1997; 정호기, 2003a) 여기서는 '5월정신'을 계승하려는 제반의 운동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당사자들 중심의 운동을 가리킬 때에는 5월투쟁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외부적으로 드러난 5월공동체 단일한 정체성이 아닌 내부의 이질적인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정체성의 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트라우마의 사회학적 접근

최정운(1999)은 광주시민들이 젊은이들을 “희생의 제단에 받침으로써” 광주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한다. 항쟁 당시에 계엄군의 전면적인 진압이 예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저항할 경우 누군가의 죽음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누군가는 죽음을 택함으로써 광주의 진실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당시의 상황이 ‘삶과 진실’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즉, ‘피를 흘려야만 민주주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더욱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는가? 본 논문에서는 최정운이 제기한 정치적 딜레마를 푸는 것이 주요 목적은 아니다. 다만, 이처럼 정치적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역사가 남긴 피해자들이 항쟁으로 인해 받은 고통은 무엇이고, 항쟁 이후 지속되는 트라우마의 과정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항쟁 참가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단순히 외상 사건의 충격에 대한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다각적인 사회적 환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살과 고문 등을 경험한 사람의 사회적인 조건-계층, 학력, 성별 등-은 무엇이었는지, 학살이나 고문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였는지, 석방 이후에는 어떠한 정서적·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놓여있었는지에 따라 외상으로 인한 한 개인의 트라우마는 가중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Herman, 1997)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누군가에게는 5·18은 학살의 체험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저항과 해방의 체험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 두 가지 체험이 조금씩 달리하며 뒤섞여 있거나, 새로운 요소에 의해 전혀 다른 것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다질적인 결로 이루어진 충격적 체험은 항쟁 이후에는 5월운동에의 참여여부, 경제적인 안정상태, 가족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재해석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5·18 트라우마'에 대한 설명은 이와 같은 생애사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각 개인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펼친 행위전략과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밝혀져야 한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항쟁 참가자들에게 5·18이라는 생애사적 사건은 이들의 삶 속에 현재 진행형이며, 5·18로부터 비롯된 상처와 고통이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당시 기층민중 참가자들의 삶의 과정을 파악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 논문은 미시사적·해석적 방법을 통해, 공식적 담론에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기층민출신 참여자의 생애사를 재구성하고, '말해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5·18체험을 재현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5월공동체 및 5월단체 내부의 집단적 정체성의 본질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체험이 공식적으로 표현된 정체성과는 다른 어떤 정체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동체의 분화과정 속에서 주변화된 집단의 기억 및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를 해명하여, 사례집단의 트라우마화 과정을 사회학적 차원으로 이끌어 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1) 선행연구

5월민중항쟁에 대한 연구는 주제별로는 크게 항쟁의 원인 및 전개과정, 항쟁의 성격·주체·의의, 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과정(과거청산),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18 분석, 5월운동 연구, '5·18 트라우마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제별 구분을 통해 볼 때 본 논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5월민중항쟁 당시 기층민중들의 항쟁 체험에 관한 연구, 5월운동 및 5월단체 내부집단 분화과정에 관한 연구, '5·18 트라우마'의 형성에 대한 연구, 5·18참가자들의 생애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5월민중항쟁 당시 대한 기층민중들의 항쟁 체험에 대한 최초의 의미 있는 저서로는 르포 형태로 발간된 황석영(1985)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다. 황석영은 이 저서에서 항쟁 전개과정을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사실적 재구

성과 더불어 항쟁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행동, 현장의 목소리, 당시의 느낌을 동시에 담아냄으로써 항쟁 참가자들의 항쟁체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항쟁체험을 보다 깊이 있는 해석학적 관점을 통해 분석한 연구는 최정운(1999)의 『오월의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기존의 사실 재구성의 관점을 벗어나서 “외관으로서의 사실을 지나 시민들이 겪었던 내적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사실’으로써 사건에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들이 당시 가졌던 생각, 감정상태 등을 감정이입을 통해 재구성”하고자 하였다.(최정운, 1999: 22)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구성하기 위해, 5·18에 대한 공식적인 담론³⁾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상대화시킴으로써 항쟁 당시의 체험과 의미에 더욱 근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밝혀낸 중요한 해석학적 사건 가운데 하나는 시민들이 형성한 ‘절대공동체’⁴⁾의 체험이다. 광주시민들은 5월 18일에서 20일 사이 ‘폭력극장’에 대한 공포와 충격에 개인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지나 21일에는 절대공동체를 형성하였는데, 절대공동체 안에서는 “사유재산도 없고, 생명도 내 것 네 것이 따로 없었으며, 계급도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학력, 직업, 성별, 나이를 떠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서적인 일체감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일체감 때문에 상호 헌신적인 나눔이 가능했고, 나아가 공동체의 삶과 진실을 위해 자신의 죽음을 결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정운은 이러한 상호헌신과 용기의 발현이 가능했던 요소 중의 하나로 기층민중들의 생애사적 경험을 들고 있다.

5월민중항쟁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무장하여 적군(계엄군)에 대항하는 아군(시민군)을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김창진(2007)은 민중들에 의해 정치투쟁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이 현실적으로 전면화 되었고, 항쟁은 이의 정당성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한다. 비록 이들의 무장투쟁은 내적으로 견고한 체계를 지니고 외적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던 한계를 지녔지만, 민중의 건강한 자치의식과 저항폭력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분석한다. 5·18 시민군은 계엄군의 최후진압시까

3) 5·18 담론은 그것을 말하는 주체와 시기의 차이에 따라 각각 ‘폭도론’, ‘불순 정치집단론’, ‘유언비어론’, ‘과잉진압론’, ‘민주화론’, ‘민중론’, ‘혁명론’ 등으로 변화되어 왔다.(최정운, 1999: 25-94)

4) 최정운은 ‘절대공동체’를 “폭력에 대한 공포와 자신에 대한 수치를 이성과 용기로 극복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민들이 만나 서로가 진정한 인간임을, 공포를 극복한 용기와 이성 있는 시민임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결합한”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다.(최정운, 1999: 140)

지 결사적으로 저항하여, 한국 현대사에 있어 공권력에 대항한 무장투쟁의 역사를 남겼다. 안종철(2007a)은 이와 같은 무장항쟁의 과정을 시민군의 결성과 무장시위의 전개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동타격대, 기동순찰대, 특수기동대 등의 무장조직들이 매우 사적이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과정들을 보여주었고, 이 과정 속에서 시민군들의 구체적인 일상을 엿볼 수 있다.

5·18 참가자들은 5월민중항쟁이 끝난 이후에도 수십 년 간 5·18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하는 5월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5월운동의 흐름은 5·18 참가자들에게는 항쟁 이후의 중요한 생애사적 사건이자 배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광주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했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또한 5월운동이 한국의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긴밀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5·18은 재야운동세력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와 같은 5월운동의 중요성 때문에, 5·18 과거청산이 일정 정도 결실을 맺게 된 90년대 후반부터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다. 나간채(1997; 1999; 2007a)는 5월민중항쟁 직후의 5월단체 형성기부터 90년대까지의 시기별 단체 형성 및 분화 과정을 정리하고, 5월운동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5월단체의 활동이 정치체제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변화해가는 성격을 국면별로 분석함으로써 5월단체라는 조직의 생애사를 정리했다고 할 수 있다. 나간채는 5월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발생한 ‘가방끈 논쟁’을 5월운동이 지닌 한계이자 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5월민중항쟁의 ‘높낮이 없던 공동체’를 체험했던 광주시민들은 5월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시 그 높낮이를 확인하게 되었고, ‘배운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이 소외되는 과정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정근식(1997)의 연구를 통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된다. 그는 광주의 집단적 망탈리테⁵⁾를 민주성지론, DJ 동일시 메커니즘, 5월중후군 등으로 파악했는데, 이러한 정체성은 5월운동이 전개되고, 광주출신 정치인의 제도권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냉소적 회의주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신, 좌절된 욕구에 대한 분노와 불안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김두식(1998; 2003)은 이와 같은 집단정체성의 결을 ‘민주화 프레임’과 ‘평등과 형제애의 프레임’으로

5) 망탈리테는 일상생활의 조건들에 대한 범인들의 태도이자 역사적 행위자들의 집합적인 의식과 사고를 고찰할 때 드러나는 역사적 국면의 집단심리, 집합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정치문화(이대올로기)라는 총위로 사회구성체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중 문화의 총위에서도 인간 주체의 심리 복합의 심층부를 망탈리테라고 하고 그 부위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망탈리테사라고 한다.(김영범, 1991)

나누어 살펴본다. 광주시민들은 대외적으로는 ‘민주화 프레임’이라는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집단 정체성을 통해 다른 지역 및 세력과 경계를 구성하지만, 내부적으로 ‘높낮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기층민중 출신들은 운동권 출신들로부터 느낀 소외감과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해 ‘평등과 형제애의 프레임’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정치체제의 변화로 인한 저항공동체 내부의 분화과정 및 그로 인한 집단 정체성의 분열과정은 광주를 대표하는 담론에서는 표현되기 어려웠던 5·18 참가자들의 다양한 체험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대표된 5·18 정체성 이면에 소외된 기층민중 참가자들의 정체성의 내용과 5월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것이 변화해온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5월민중항쟁은 국가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공권력을 동원하여, 한 지역 시민들을 학살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항쟁 이후 학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5·18 피해자의 규모 및 피해정도에 대한 조사 작업과 더불어,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생활실태 등이 중요한 연구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87년 이전까지는 신군부가 의도적으로 피해의 규모와 정도를 축소시켰고, 이들에 대한 회유책으로서 개별적인 방식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처리’함에 따라 피해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가 드러나기 어려웠다. 5·18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적인 상황은 90년대 초반에 정부가 국가 보상(배상)을 위해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 상황을 신청 받음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록이 확보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보상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상해와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기록에 포함된다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5·18 피해자의 실태가 연구조사과정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수집될 수 있었다.(유광종, 1999) 5·18기념재단(2006a, 2007b)은 피해자들의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5·18 피해자들의 전반적인 직업실태, 생활실태와 더불어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는 80년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욱 악화되었으며, 정신건강 상태 즉,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측정 결과는 매우 심각했다.(5·18기념재단, 2006a)

5·18 참가자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90년대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확대되고 있다.(오수성, 1990; 2001; 변주나, 1996; 오수성·신현균·조용범, 2006) 최근에는 외

상후스트레스장애와 사회적 지지척도, 생활스트레스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한 심리학적 연구가 나왔다.(오수성·신현균, 2008) 또한 5·18 참가자들 중 자살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5·18 참가자들 중 자살자에 대한 심리학적 부검을 통해 이들의 자살의 정황을 생애사적 배경, 가족관계, 심리적 요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5·18기념재단, 2008)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5·18 참가자들의 정신적 고통 및 이를 뒷받침해주는 환경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고 있다.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로는 최정기(2006; 2008)와 정호기(2002b, 2003b)의 연구가 있다. 최정기(2008)는 트라우마의 강화 및 축소는 1차적인 증후뿐만 아니라 외상 사건 이후 당사자가 처하는 사회적 조건 및 처리과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5·18 기념사업에 관한 정호기의 연구는 5·18과 관련된 트라우마티즘을 사회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으로 확장시켜 논의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5·18 트라우마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향후 5·18 트라우마의 구체적인 내용, 트라우마의 사회적 형성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5·18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2000년대에는 5·18 담론과 기억에 대한 분석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5·18과 관련한 사회적 담론이 급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중요한 천착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일준(2007)은 담론을 지식-권력 관계의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저항담론으로서의 5월담론이 국가담론에 포섭됨으로써 여타 국가담론과 경쟁관계에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절대적 공동체'라는 경험적 공동체가 상상력을 통해 '역사적 공동체'라는 미래의 공동체로 구상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정호기(2002b)는 이를 기억투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기념사업은 5월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기억들 가운데 몇몇 주체의 기억만을 재현함으로써, 5·18이 지닌 의미가 희석되고 새로운 권위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구술생애사 방법론은 지배층이 전유하는 역사적 기록 속에서 다양한 개인 및 집단들의 목소리와 익명적 지식⁶⁾을 산출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애사를 바탕으로 5·18 참가자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⁷⁾ 그럼에도

6) 익명적 지식이란 충분히 가공되지 않은 지식 또는 비개념적 지식들로 폄하된 일련의 지식, 순진하고 낮은 위계에 속하는 지식이다. 그리고 기존 과학의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는 하위의, 자격이 없는, 주변적인 '보통 사람들의 지식'을 지칭한다. (Foucault, 1998; 김원, 2006에서 재인용)

도 5·18 참가자들에 대한 구술 자료는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1990, 이하 현사연)의 구술 증언 채록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에서 활발히 생산되어 왔다.⁸⁾ 다른 역사적 사건에 비해 5·18 참가자의 구술자료는 양적으로 매우 많이 확보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진실규명의 과정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⁹⁾

기층민중들의 구술 자료는 주로 현사연(1990)과 5·18기념재단(2007)의 자료집을 통해 확보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항쟁 참가자의 다수였던 기층민중들의 삶을 조명하는데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출간된 5·18 참가자들의 구술 자료들은 교육자, 사회운동가, 공직자 등 명명가의 사례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민군 중에서도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의 사례가 정리 되어 있다.(5·18기념재단, 2006b; 2010b; 전남대학교5·18연구소, 2003a; 2003b; 2005) 기층민중들에 관한 저술은 주로 사망자 및 정신질환자 등 5·18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피해자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 간행물이 다수이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07; 2008) 이러한 자료는 기층민중들의 삶에 있어 5·18이라는 사건이 개인의 삶을 파괴한 안타까운 결과들을 드러내 주고 있다. 하지만 수집된 구술 자료가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거나 분석되지 못하고 있으며, 5·18 참가자들의 항쟁 체험 및 생애체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5월민중항쟁은 다수 기층민중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들의 체험은 공식적인 담론에서 상당히 주변적으로만 기술되거나, 명망가들의 정치체험이 과대대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5·18 참가자의 생애체험을 구체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5·18에 대한 기층민중의 목소리를 확장시켜야 한다. 여전히 생존해 있는 5·18 참가자들 다수가 5·18로 인한 트라우마에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식적 담론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5·18과 관련

7) 오히려 5·18 참가자들의 생애체험은 소설, 수기, 연극, 다큐 등의 문화적 영역을 통해서 다루어져 왔다.

8) 5·18 참가자 구술자료는 1990년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의 500명 외에도, 1997년 광주YMCA에서 채록한 87명,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채록한 20명, 1998~2002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57명, 2005~2006년 국사편찬위원회의 11명, 2008년 대한의사협회 재단의 20명, 5·18기념재단의 786명(1999~2002년, 2005~2008년, 2008년)이 있다.(5·18기념재단, 2010a) 5·18민주유공자유족회(2007; 2008)에서는 행방불명자, 상이 후 사망자들에 대한 구술자료 등을 토대로 증언록을 발간하였다. 각각의 숫자는 중복 채록된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구술자 숫자는 모든 수를 합친 것보다 적다.

9)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5·18 구술 아카이브즈가 특정기관의 사업 결과물로서, 혹은 개별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만 소모되고 있으며, 향후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열람이 가능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는 각 학계에서 구술사 연구 자체가 활발히 논의되어, 공유할 만한 체계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강현아, 2010)

한 민주화 담론이 이미 하나의 지배적 담론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익명적 지식의 산출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2) 관련이론 검토

본 논문은 5·18의 대표된 기억이 아니라, '억압된 기억'을 드러내기 위해 5·18참가자들의 생애사를 재구성하고, 생애체험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5·18참가자들의 트라우마가 사회적으로 극복되거나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구술생애사가 공식적인 역사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역사'로서 어떤 특징과 의미를 지니는지를 먼저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외상사건 및 환경의 결과물이라는 기존의 '트라우마' 개념을,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으로 확장하기 위해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의 이론적 틀을 정리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을 주체의 적극적인 행위전략이 전개되는 과정 및 스스로가 세계관 및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기 위해 Honneth의 인정투쟁 이론과 일반화된 타자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5·18 참가자들의 인정투쟁 과정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일반화된 타자의 설정과 이에 대한 다차원적인 사회적 지지의 획득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정투쟁이 실패할 때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은 한층 가속화된다고 할 수 있다.

(1) 생활세계의 복원을 위한 생애사 재구성

'합리적 인간관' 혹은 '근대적 인간관'을 전제한 많은 사회학적 이론들은, 사회적 모순에 의한 '비합리적' 고통의 체험을 병리적인고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5·18 참가자의 경우, 국가폭력에 의한 신체적 학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데올로기적 낙인 등을 바탕으로 최초의 정치체험을 하고, 세계관을 형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애사 재구성을 위해서는 정치폭력에 끊임없이 대응하며 행위전략을 구축해왔던 고유의 생활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한다.¹⁰⁾ 또한, 다수가 기층민중들이었던 5·18참가자들은 '민주주의'나 '민중해방' 등의 정치

10) "특정 시대와 장소에서 노동자 또는 농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기본적인 임금노동 또는 다른 경제 관계에 의해 단순히 결정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역사적 경로를 통해 특정 하위주체 문화가 발전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자나 농민의 계급적 입장이 생생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의미를 제공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비통합적인 하위주체 문화다...계급이 경험되는 방식은 상이한 불평등들이 성별, 종족성, 기타 형태의 민족적 실체들을 통해 표현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Crehan, 2002: 261)

적 언어로 항쟁에 참여하기보다는 함성이고, 울음이고, 시의 언어로서 참가하였기 때문에(최정운, 1999) 이와 같은 감정 언어의 재구성은 그들이 지닌 상식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들은 '민주주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나, 사회적 실천을 위한 체계적 지식, 그에 기초한 선택과 행동으로 항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층민중의 삶은 '비존재', '비과학성' 등으로만 표현된다. 이것은 사회에 대한 총체적·분석적 관점, 전략적·정치적 언어로서 민중들에게는 낯선 세계의 인공적인 구조이다. Bourdieu(1979)가 말한 것처럼 민중계급(working classes)의 아비투스(Habitus)¹¹⁾는 오히려 그러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자원을 박탈당한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구조를 체험하는 '생활세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 기층민중들의 삶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생활세계는 행위자에게 있어 정상적이고 자명하고 질서 있고 객관적으로 느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이다. 일상생활은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의미의 세계, 즉 간주관적 세계¹²⁾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생활세계가 사회적 체계 및 구조와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체계에 영향을 받고, 상호작용하며 해석하는 영역이되, 구조적 법칙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는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 자신이 사회와 생활세계의 주체로서 지니는 고유한 세계관과 자기참조적 행위지향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¹³⁾ 그리고 생활세계에 대한 분석은 연역적으로 구상되기 보다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지니고 있는 생활과 문화의 자료

11) 아비투스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지속적인 성향들의 체계로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습득된 것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취향, 육화된 성향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Bourdieu는 각 계급의 취향은 이질적인 아비투스를 통해 구성되고,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러한 계급적 위치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Bourdieu가 지칭하는 민중계급은 중간 계급과 구분되며,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상징적 자본을 거의 소유하지 못한 숙련공, 단순노무자, 농업노동자 등의 하위계급들을 지칭하고 있다. (Bourdieu, 1979)

12) 간주관성은 현상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인간은 생활세계(life world)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생활세계는 자연환경, 인공적 환경, 사건, 개인들에 의해 한정된 경험의 모든 영역으로 다수의 현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일상 생활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의미의 세계, 즉 간주관적 세계로 나타난다. 즉, 인간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주관성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간주관성이라고 한다.

13) Geertz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비공식적 논리"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관을 구성한다. 생활세계는 문화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데, 문화란 신념과 사고의 영역이면서 "그 자신이 짜낸 의미의 그물에 걸려 있는 존재"이며, 문화는 그러한 그물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칙을 추구하는 실험적 과학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해석적인 과학이 필요하다. 적어도 사회의 법칙을 인지하며 구동하는 지식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들 행위의 이유, 원인, 맥락은 법칙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법칙적 실체로서의 사회구조(계급과 착취, 억압과 종속)를 체험하는 자의 삶은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Geertz; Crehan, 2002에서 재인용)

들을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¹⁴⁾ 그런데 생활세계의 자료들은 공식적인 문헌들 속에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개인들의 구술생애사의 대한 천착이 매우 중요해진다. 더구나 5·18 참가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분석은 의식화되지 않은 언어와 침묵된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술을 통한 말하기와 구술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정은 5·18 참가자들의 5·18을 둘러싼 생애체험을 복원하는데 필수적이다.

① 또 하나의 역사로서 구술생애사

구술사 연구에서 역사적 사실이란 한 개인의 사적 기억이라는 장치를 통해 현재로 불러 나와서 재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사적인 기억은 파편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구술은 개인의 과거 경험에 대한 현재적 시각에서의 재구성(reconstruction), 재현(representation)내지 해석(interpretation)이다. 이러한 작업은 역사적 언어로 이루어진 공적인 재현을 개인의 체험의 언어로 이루어진 사적 기억을 통해 상대화하는 작업이며, 반대로 다시 전자를 통해 후자를 상대화 하는 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개인의 서사를 분석할 때는 제3자의 거리가 필수적이다.(윤택림, 2001)

구술생애사를 통해 드러난 텍스트를 보는 관점은 “사실적 진실성(factual truth)과 서술적 진실성(narrative truth)”으로 구분될 수 있다.(김성래, 2004: 50) 전자는 지나간 체험에 대한 사실들을 재구성하려는 관점이며 후자는 현재의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 생애사의 서사성과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려는 작업이다.¹⁵⁾(이희영, 2005a: 125)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려는 목적에서는 구술자의 주관적 해석의 개입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판본을 분석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그러나 구술자가 이야기를 통해 구성한 생애사의 서사적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은 행위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틀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사실의 재구성보다는 의미의 재구성을 통해 구술자의 생애사에 드러난 서사적 내용과 행위 지향의 내적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문헌들 속에 정리된 사실들은 정리하는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사실들이 제거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그의 시각 또한 주관적일

14) 물론 그것은 일반화의 한계도 갖는다. 한 사회 내의 하위집단의 체험은 성별, 가족, 학력, 직업 등에 따라 그 결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위집단을 구조적으로 구획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생활세계에 대한 일반화는 사실상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등장하는 하위집단은 '남성' '주변부 노동계급' 출신의 '비타협적' '항쟁 참여자'이며, 이들의 생활세계는 다른 5월 당사자들의 체험과 또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15) 사회학과 역사학에서의 연구는 기존의 역사에서 배제된 역사의 복원을 위해 구술자의 체험된 생애사에서 드러나는 사실성에 집중하는 반면, 인류학과 여성학 연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즉, 서술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희영, 2005a: 125)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진실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런 점에서 공적 재현에서 배제되어 온 사람들의 구술은 객관적 역사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다.

개인 생애사의 서사성에 주목한다고 해서 개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 사회적 과정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행위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이며, 개인의 말하기는 행위자의 의미와 의미부여가 타자를 통해서 객관화되고, 일반화된 타자¹⁶⁾로서의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 안에 자리하게 됨으로써 안과 밖은 하나가 된다.(Mead, 1934; 이희영, 2005a: 127) 결국 행위가 가진 본원적 사회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애사에 드러난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한 과정, 개인에게 해석된 사회적 실재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② 생애사 재구성의 방법

구술사 방법론은 화자(story teller)의 구술을 통해 화자가 직접 또는 간접 경험한 과거에 대한 화자의 해석을 가지고 화자와 연구자 간의 간주관적 의사소통을 통해 경험을 이해하고 번역하여 해석해내는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기록된 구술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먼저 구술자의 구술은 다양한 경험의 파편들로 구성되지만 파편화된 기억의 통일체로서 서사적 구조가 존재한다. 먼저 생애사는 생애사적(life historical), 전기적(biographical)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따라서 생애사는 전기적 전환의 시점, 전환의 계기가 존재한다. 생애사적 전환은 개인에게 기존 가치의 부정과 사회적 위치 전환, 새로운 가치의 대체와 경계를 넘어서는 체험, 새로운 지평의 형성 및 새로운 생애사적 과제의 출현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생애사에 대한 분석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기적 기점과 기점을 통해 변화된 생애사적 의미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구술자의 생애사에 등장하는 사회적 실재¹⁷⁾가 무엇인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구술자의 이야기 형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구술자마다 서사적 순차성이 존재한다. 즉 구술자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사건이나 의미의 순서는 매우 다르다. 이

16) 일반화된 타자는 공동체 내의 협력관계를 규율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주체는 일반화된 타자를 받아들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확신하고 자기존중을 지닐 수 있다.(Mead, 193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17) 사회적 실재는 사건, 이념, 국가, 지역, 개인 등 다양한 층위와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상적 소재이든, 역사적 사건이든 생애사에서 상징화되고 각인되는 과정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환경에 따라 특수한 형태를 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릴 때, 연구자는 구술자가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말한 ‘중심 이야기(main narrative)’를 초점에 두고, 어떠한 사실들과 사건들로 생활세계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배열하여, 생애사의 소우주를 구성해야 한다. 그 후, 생활세계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건 및 상징들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사적 순차성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종합하다보면 구술자가 각각의 경험에 의미부여 하는 행위지향의 질서 및 의미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것은 자아정체성의 구조를 이루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사후적인 의미부여와 해석이 혼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진술들이 존재하거나, 두드러지게 생략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술자의 ‘이야기된 생애사’¹⁸⁾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야기된 생애사는 특정한 관점에 의해 선택적으로 조직하고 형상화하여 배치되고 해석되어진다. 특정한 관점이 앞서 말한 행위지향의 형식을 구성한다. 특정한 관점은 특정 경험을 더욱 의미부여하거나, 생략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관점에서 체험들을 재구성한다. 이럴 경우 ‘체험된 생애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점을 여과해야 하지만, 이러한 특정한 관점들 자체가 이야기된 생애사 재구성의 대상이 된다.(이희영, 2005a: 134) 또한 이러한 특정한 관점들 자체가 이중적이거나 다질적인 층위를 지니고 있으며, 구술자의 서술관점은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위치에 놓여 있을 수 있다. 인간의 내면은 기본적으로 상이한 정체성이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 속에 있으며, 정체성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실현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의식적으로 공표되지 못한다. 이럴 경우 구술자 역시 갈등하는 정체성 관계나 의식적 표현이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방어적 심리를 통해 생략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생애사적 사건을 방어하려는 말하기 전략이나, 관점과 관점이 유기적인 관계 맺기에 실패한 경우¹⁹⁾ 연구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및 분석 작업을 통해 이러한 정체성의 굴절과 심리적

18) 이희영은 생애사를 ‘체험된 생애사’와 ‘이야기된 생애사’로 구분하면서, 전자를 지나간 체험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후자는 현재를 기점으로 구술자가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구분한다.(이희영, 2005a)

19) 이러한 과정은 항쟁 참여자들이 보상국면, 민주화국면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과거 사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변형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항쟁에서의 트라우마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하면서 살아왔던 삶 속에서 사실과 사실이 유기적인 관계맺기에 실패한 경우 ‘누락’되거나, 분열적 기억의 방어적 절충을 시도할 수 있다. 트라우마가 강할수록 이러한 누락과 분열적 생애사의 불합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구술사를 통해 하위주체의 생애를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갈등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이 생애사를 발전시켜 가는 주관적인 행위전략과 독특한 정체성 지향을 이해할 수 있다.²⁰⁾ 더불어 다질적인 체험들과 정체성들이 분절되고 통합되는 매개와 사회적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²¹⁾

앞서 구술사 연구는 개인 행위의 본원적 사회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밝혔듯이 구술 생애사의 분석에는 개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맥락을 설명하고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구술자의 생애사적 사건에 대한 ‘자리매김(subject positioning)’이 필요하다. 자리매김이란 통시적으로는 화자가 태어날 때부터 현재에 까지 이르는 사회적 이동경로, 즉 살아오면서 화자의 가족, 계층, 교육, 직업, 종교 등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며, 공시적으로는 현재 화자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윤택림, 2001) 자신이 이용하고 선택한 사회적 자원-경제적 자원, 네트워크, 이념적 자원-의 특성과 연결시켜 보면 생애 체험에 대한 동일한 기억과 정체성을 지녔던 사람들도 생애의 전기적 국면 속에서 다양한 행위전략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의 자리매김은 바로 화자의 경험을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즉, 화자의 해석을 드러냄과 동시에 화자의 경험을 역사화하고, 사회적 주체로서 이해하기 위한 연구자의 해석을 제공하는 작업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5·18참여자 대한 생애사를 재구성함으로써, 생애사의 서사적 구조와 정체성 지향, 행위 전략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러한 생애사적 지향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조건과 배경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구술 자료가 지닌 한계 점을 2차 자료와의 충분한 검토 및 활용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2) PTSD와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측정

일반적으로 트라우마²²⁾란 일상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20) 이론적 검토에서 보았듯이 주체적 자아와 객체적 자아 사이의 갈등은 개인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하는 과정을 밝음으로써 개인의 발전 및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피지배집단의 경험을 가시화하여 억압기제를 폭로할 수는 있지만, 그 경험의 내적 논리와 작동기제를 폭로하기는 쉽지 않다.(윤택림, 2001)

22)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4판>에 따르면, 외상(trauma)이란 심각한 죽음이나 상해를 입을 위험을 실제로 겪었거나 그러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혹은 타인이 죽음이나 상해의 위험에 놓이는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강렬한 두려움, 무력감, 공포를 경험한 경우를 의미한다. 외상반응은 위험에 대한 인간의 반응체계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할 때 정교한 자기보호체계가 와해됨으로 발생한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위험이 끝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외상 당시의 변형되고 과장된 상태가 지속된다.(Herman, 1997)

에게 남겨진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4판>는 트라우마에 잇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신체적 증상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정의하고 있다. PTSD 증상은 일반적으로 과각성(불안), 침투(재경험), 억제(회피)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과각성(불안)의 상태는 충격사건의 상황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영속적인 경계 태세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과각성의 상태에서는 감정의 범위가 제한되어 친밀감, 부드러움 등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원함을 느끼게 된다. 침투(재경험)의 증상은 현재 상태에서도 외상을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외상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는 것으로, 플래시백²³⁾ 상태, 외상성 악몽으로 나타나며, 일상생활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심상', '절대 공포'로 체험된다. 마지막으로 억제(회피)의 증상은 완전한 굴복의 상황에서 의식의 상태를 변형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상황을 탈출하고자한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억제의 증상은 현실에 대한 심각한 수동성, 둔감화, 현실 왜곡, 해리증상 등으로 나타나는 데, 외상 후 기억상실이나 비현실감 등은 이에 해당한다. (Herman, 1997)

일반적으로 5·18당사자들에게 PTSD는 가족 및 이웃의 죽음과 잔혹한 살상의 직·간접적 경험, 연행 후 수개월 간의 고문 및 구타이라는 1차적 외상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들은 이와 같은 살상, 고문, 가해자에 대한 기억을 일상적 공간 속에서 재경험하며, 특히 고문을 당한 사람의 경우 당시의 가해자에 대해 느낀 수치, 모욕, 공포(발가락 짓밟기, 개미고문, 무릎으깨기, 대검으로 찌르기 등)가 떠오르면서 가해자에 대한 복수, 공격, 도피의 증상을 보이고, 종종 이러한 증상은 주변인을 향하기도 한다. 무기력했던 가해의 경험이 권력감을 가지고 있는 현재에 재현되면 주변사람들은 이러한 공포와 공격적 행동의 대상이 된다. 많은 구속자들은 악랄한 고문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매일, 수도 없이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통을 잊기 위해 마시는 술은 이러한 감정의 자제를 상실시켜 극단적인 행동과 선택을 하게끔 함으로써 문제를 악순환 시킨다. 또한, 이러한 트라우마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정들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 등에게 전이되어, 가족들이 이들의 고통과 폭력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 5·18 참가자는 전처를 살인하고, 복역 중 교도소에서 자살하였으며, 항쟁 당시 단순 목격자였던 아버지의 외상증상이 전이되어

23) 마치 외상 사건이 현재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한 지각, 착각, 환각, 해리성 환각이 재현되는 것. 외상성 악몽의 경우, 상상을 거의 보태지 않은 채 외상 사건의 파편들을 정확한 형태로 포함하고 있다.

그의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5·18기념재단, 2008; 'KBS스페셜 5·18자살자 심리부검 보고서, 2009)

PTSD는 일반적으로 증상없음(0-14), 가벼운 PTSD(15-19), 중간 PTSD(20-29), 심각한 PTSD(30이상)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당사자들 가운데 41.6%가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29.5%가 중간 정도 이상의 PTSD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18기념재단, 2006a)

<표 1> 5·18유공자 집단별 외상후 스트레스 점수별 비율(%)

점수	부상자	구속자	유족	유공자 소계	부상자 가족	구속자 가족	가족 소계	합계
0-14 (증상없음)	35.5	61.8	56.4	44.2	89.1	96.6	91.7	58.4
15-19 (가벼운 PTSD)	19.4	14.7	5.1	15.7	3.6	3.4	33.6	12.1
20-29 (중간 PTSD)	22.6	14.7	23.1	21.3	5.5	-	33.6	16.0
30이상 (심각한 PTSD)	22.6	8.8	15.4	18.8	1.8	-	11.2	13.0
합계(15이상)	64.6	38.2	43.6	55.8	10.9	3.4	8.3	41.6
합계(20이상)	45.2	23.5	38.5	40.1	7.3	-	4.8	29.5

자료: 5·18기념재단, 2006a

한편 5·18 참가자들 중에서도 부상자, 유족, 구속자 집단 별로 PTSD 정도의 차이가 발견된다. 집단별 분류를 통해 보면 가족을 제외한 당사자들의 PTSD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벼운 PTSD 이상인 경우는 55.8%이고, 중간 이상은 40.1%에 달한다. 기층민 출신이 다수인 부상자 집단의 경우 가벼운 PTSD 이상이 64.6%, 중간 이상이 45.2%, 심각한 수준이 22.6%였지만, 구속자 집단의 경우 가벼운 PTSD 이상이 38.2%, 중간 이상이 23.5%, 심각한 수준이 8.8%이다. 이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심각한 PTSD는 부상자 집단이 구속자 집단의 3배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외상을 경험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18 참가자들의 다수가 25년이 지난 조사시점까지도 높은 수준의 PTSD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후유증이 만성적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행되어 왔

음을 알 수 있다.²⁴⁾ Herman은 단일외상에 대한 PTSD와 달리 감옥, 강제수용소, 킬트종교집단, 성매매 집결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등에서 일어나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외상은 피해자의 심리를 속박시키는 과정이 동반되면서, 복합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PSD)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만성적인 외상을 다룰 때에는 단일 외상 사건을 중심으로 개념화된 PTSD보다, CPSD로서 분석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Herman, 1997: 205-210) 5·18참가자들의 경우, 신군부의 철저한 탄압과 감시, 항쟁의 진실에 대한 봉쇄 정책 때문에, 이들은 외상 이후 1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의학·사회·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등 ‘방치상태’로 놓여 있었다. 그 결과 발생한 트라우마는 경제력의 상실, 가정불화,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자살자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5·18 참가자들의 상이 후 자살자의 비율은 10.4%로 일반인의 500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KBS스페셜 5·18자살자 심리부검 보고서', 2009) 항쟁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참가자가 37일 간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뒤 달리는 열차에서 자살하는 등 이들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 “끔찍한” 과거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죽음보다 살아남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자살은 하나의 탈출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자살은 외상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현재 5·18묘지의 무덤은 40후반~50초반의 자살자로 채워지고 있다.

② 트라우마의 사회학적 차원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과거의 외상을 끊임없이 재경험하면서도, 일상생활로부터 회피하고, 끊임없는 불안 상태로 만든다. 이와 더불어 의미를 부여하는 신념 체계의 토대가 침식당하고, 자기라는 심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애착과 의미의 체계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외상사건은 세상이 안전하고, 자기는 가치 있으며, 세계질서에는 의미가 있다는 기본적인 가정들을 파괴한다.(Herman, 1997: 97)

24) PTSD에 대한 평생 유병률은 1~14% 정도에 이르고, PTSD 고위험군은 3~58%이다. 다양한 외상의 종류에 따른 유병률 연구에서는 자동차 사고 생존자인 경우 12%, 전쟁 생존 병사인 경우 15%까지 PTSD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성폭행에 의한 유병률은 68.89%, 고문 등 정치적 탄압을 피해 나온 난민은 50%, 전체 고문피해자의 70%가 PTSD증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5·18 참가자들은 성폭행이나 고문에 못지않은 심각한 PTSD증상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5·18기념재단, 2006a: 6)

공포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자연히 안심과 보호를 제공했던 최초의 원천을 찾게 된다. 부상당한 군인과 강간당한 여성은 어머니를 외치고, 신을 외친다. 이 외침이 응답받지 못했을 때, 기본 신뢰는 부서진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삶을 지탱하는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하던 인간과 신의 체계 바깥으로 내던져진 채, 완전히 버림받았으며 완전히 혼자라고 느낀다. 그 이후, 가족 간의 가장 친밀한 유대에서부터 공동체와 종교 안의 가장 관념적인 결합까지, 이 모든 관계 속으로 소외감과 단절감이 침투해 들어온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뢰를 상실하고서, 자신이 삶보다는 죽음에 더욱 소속되어 있음을 느낀다.(Herman, 1997: 98)

외상경험자는 어렸을 때 성장과정에서 확립한 자기감, 자존감,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수치심, 의심, 죄책감, 불안에 시달린다. 생존자 죄책감은 “다른 이들은 모두 두 불운을 만났다는 얇 속에서 혼자 살아남아 있다면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²⁵⁾ 또한 이들에게는 공격성과 공포가 동시에 존재하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착과 회피의 감정이 동시에 존재한다. 외상은 가까운 관계를 회피하게 만드는 동시에, 절박하게 관계를 추구하게도 만든다. 결국 트라우마는 생존자의 신체적·심리적 증상을 넘어 성격 부식, 인격 변형을 가져온다. 트라우마는 정신병리적 차원의 증상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자기 존중감의 파괴, 불신과 존재론적 비판 등 의식적 변형, 정체성의 변형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반대로 인격의 변형과 자기 존중감의 붕괴는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Herman, 1997)

또한 PTSD의 정도는 단순히 외상 사건의 충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사회적인 조건, 외상 사건이 개인에 받아들여지는 방식, 외상 후 외상사건을 사회가 처리하는 방식 등에 따라서 PTSD는 악화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심리적 외상은 사회적 수준에서 작동하며(Herman, 1997), 신체적-심리적 트라우마는 가족적-사회적-경제적 차원의 환경과 연결되어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라우마에 대한 분석은 원초적 사건이 발생시키는 심리적 결과와 더불어, 트라우마의 ‘과정’ 및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상에 대한 측정척도의 개념보다, ‘외상성 증상’들을 통칭하는 트라우마티즘(traumatism)이라는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며(정호기, 2003b), 트라우마티즘이 사회적·경제적 차원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25) 한 전투생존자에게 적의 습격, 차가운 물속의 신체적 고통, 죽음에 대한 공포, 그와 시련을 나누던 동료들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람의 생명을 가버린 여긴 구조대였다. 구조대의 무관심은 공동체를 향한 그의 믿음을 파괴하였다.(Herman, 1997)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이라는 범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트라우마티즘의 형성의 과정은 분석적인 차원에서 다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외상 이전의 환경, 2) 외상 사건의 종류 및 외상 당시의 경험, 3) 외상 이후에 처해지는 환경이 그것이다. 외상 이전의 요인으로는 개인의 성격, 계층, 학력, 성별, 나이 등이 있다. 다음으로 외상 사건의 특징 및 경험 자체가 무엇보다도 이후 정신적 변형에 심각한 영향을 행사한다. 그것이 자연재해와 같은 단순한 사상이나, 트라우마를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간이나, 정치적 탄압이 병행되는 고문이나에 따라 외상 후 신체와 정신의 변형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상 이후 당사자가 처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들은 이러한 외상을 강화시키거나 회복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일지라도 이와 같은 세 가지 차원의 요소들은 외상경험자에게 '보호요인' 또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최정기(2008)는 5·18참여자들의 트라우마티즘을 외상 이전의 요소-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학력수준-와 트라우마의 정도를 연관시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당히 낮은 부상자 집단과 유족 집단이 그 수준이 높은 구속자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PTSD를 보이고 있다.²⁶⁾ 특히 심각한 PTSD의 경우 부상자 집단은 구속자 집단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²⁷⁾ 이 연구결과는 사회경제적 조건, 학력, 운동참여의 경험 등의 요인이 5·18로 인한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 등의 관계가 한 개인이 지닌 사회문화적 해석체계에 따라 축소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폭력이나 육체적 고통은 그대로 개인의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문화적 수준의 해석체계²⁸⁾를 거쳐서 그 고통이 해소되든지, 아니면 더 악화되어 개개인의 불행과 고

26) 유가족의 경우 대졸자 비율이 10%인 반면, 부상자는 31%, 구속자는 45.7%이며, 구속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교수, 변호사, 교사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최정기, 2008)

27) 최정기(2008)에 의하면 구속자 역시도 구속과정에서 고문 및 식빙 후 '진과자'로 분류되는 등의 상당한 외상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집단 간 차이가 단순히 부상자의 육체적 피해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요인은 피해자가 지닌 사회적 조건-운동참여의 경험, 학력 등의 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8) 사회운동을 미리 경험했던 사람은 폭력에 대해 '정당한 행동 뒤의 탄압'이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반면, 이러한 정치적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옳은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기대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기대의 좌절, 즉, 언행, 고문, 감시 탄압의 결과는 기존 해석체계의 와해와 트라우마의 강화를 가져왔을 것이다.(최정기, 2008)

난으로 바뀌든지 하게 된다.²⁹⁾(최정기, 2008; Kleinman, 1997: 31~32)

다음으로 외상 사건 자체-단순 목격, 잔인한 학살의 목격, 직접 상해, 고문, 가족의 죽음의 목격-의 특징에 따라서 트라우마의 정도 및 성격이 달라진다. 다만 그것이 잔인성의 정도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외상 사건이 가져다주는 상징폭력과 인격 훼손의 정도나 사건 당시 느꼈던 고립의 정도, 협력의 경험 여부 등은 이후 정신적 고통을 강화·축소시킬 수 있다.(Herman, 1997) 이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상에 시달렸던 고문 생존자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의 상징폭력에 시달렸고, 인격의 훼손이 치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 집단의 트라우마는 더욱 심각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5월민중항쟁 당시 살육전 속에서도 인간적 가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거나, 정치적 관점 속에서 이를 소화할 수 있었거나, 다수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 폭력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트라우마 형성이 축소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 내부에서도 집단 별 외상경험이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트라우마 사건 이후에 놓인 외상 경험자의 사회적 환경은 앞선 두 가지 요인과 더불어 트라우마티즘이 해소될 수도 강화될 수도 있는 다양한 여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이 글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Herman(1997)은 외상경험자가 3단계의 회복과정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1) '안전'을 확보하고 인식하는 단계, 2) 외상기억을 자신의 삶으로 통합시켜 애도의 시간을 갖는 단계, 3) 파괴된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공동체와 연결되는 단계가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나선형적인 흐름 속에서 서서히 파괴된 사회적 지지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수성·신현균(2008)은 생활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지도³⁰⁾, 대처방식과 PTSD의 관계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외상 사건 이후에 치해지는 개인적·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사 결과 5·18 참가자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생활스트레스가 PTSD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정서적 불안정, 직업적응의 어려움 등은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29) 예를 들어 근대 이전의 신분제 사회에서 하층민이 겪었던 고통이나 종교적 맥락에서 주어지는 고통은 사회적 기원을 갖는 것이지만, 사회적 고통으로 전화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들이 겪는 고통은 나름대로의 해석체계에 의해 도덕적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Moore; 최정기, 2008)

30)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란 정보작물질적·정서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었는가에 대한 본인의 느낌의 정도를 가리킨다.(오수성·신현균, 2008)

못해 적응에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상자의 경우, 심리건강과 사회적 지지의 상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족 및 공동체의 지지와 위로는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구속자들의 경우 소신을 갖고 스스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부상자나 유족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인의 지지보다는 자신의 대처방식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부상자의 경우는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5·18이라는 사건 자체가 정치적 과정과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사회운동의 역동 속에 놓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5·18참가자들에게 사회적 지지의 문제는 가족을 통한 정서적 차원뿐만 아니라, 5월단체, 광주지역의 시민사회,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인정까지 그 범주와 의미가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실제 참가자들이 놓여 있는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환경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고, 그러한 정치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당사자들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3) 저항적 트라우마티즘과 인정투쟁

기존 트라우마티즘 연구의 한계는 트라우마 과정에서 주체의 행위성 및 집단적의 행위전략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5·18 참가자들은 상해 및 고문구타, 정치적 폭력 등의 복합적인 외상에 의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였지만, 항쟁 당시 계엄군의 학살극에 직면하여 오히려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물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집단적 일체감을 공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외상사건에 대한 피학적·수동적 수용만이 아니라, 협동을 통한 저항을 통해 외상에 대항하고 극복하려는 노력 또한 동반되었기 때문에, 5·18참가자들의 외상사건은 오히려 저항적 트라우마티즘³¹⁾(정호기, 2003b)으로 설명될 수 있다. 외상사건에 대항했던 저항의 체험은 트라우마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그리고 외상 후에 트라우마티

31)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이라는 개념은 트라우마 관련 이론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된 개념은 아니며, 다만 정호기(2003b)는 5·18 참가자들이 항쟁 이후 장례투쟁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행동, 항쟁의 상징적인 장소를 보존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여, 저항행위 과정 속에서 발생한 트라우마가 지나는 복합적인 특징들-외상의 충격으로 발생하는 공포, 분노 등의 극도의 흥분상태와 동시에 정치적 체험을 통한 희열이나 세계관의 균열 등의 각성상태가 동시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론화 과정은 향후 연구과제가 되어야 한다.

즘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광주시민들은 항쟁 이후 5월공동체를 형성하여 외상의 경험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5월투쟁³²⁾을 통해 저항적인 방식으로 트라우마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트라우마티즘에 대한 분석은 외상 및 주변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의 행위전략 및 행위공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5·18 참가자들이 단순히 트라우마의 대상이 아니라 트라우마티즘을 극복하고 형성해가는 행위주체로 설명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공동체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벌이는 ‘인정투쟁’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Honneth는 기본적으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도덕적 발전과정이라는 Hegel의 인정투쟁 이론³³⁾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근거한 Mead의 사회심리학을 종합하여, 관념적이고 구조적인 Hegel의 논의를 경험적이고 행위중심적 관점으로 전환시켰다. Mead(1934)에 의하면 주체는 상호작용 상대자들을 인정할 때, 자기 자신도 사회적 협력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일반화된 타자란 이처럼 주체가 상호주관적으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통합된 사회집단을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주체는 일반화된 타자의 규범적 태도를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와 상호주관적인 인정 관계를 획득할 수 있고, 자기 정체성과 자기존중을 확립할 수 있다.(Mead, 1934) 이처럼 일반화된 타자를 통해 구축한 의식적 자아가 ‘목적적 나(Me)’라면 ‘Me’에 대해 무의식적인 힘으로 대립하는 내적 충동이 ‘주격 나(I)’³⁴⁾이다. ‘I’는 공동체의 태도에 대한 반작용 및 개성화의 요구를 통해 일반화된 타자에 의해 구현된 규범들을 지속적으로 해체하고, 공동체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 결과 일반화된 타자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정체성들로 구성되고 변화된다. 하지만 이러

32) 80년대 감시와 탄압 속에 이루어진 당사자들의 투쟁은, 곡하고, 돌을 던지고, 까무러치는 등의 격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원격지 격리를 당하거나,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면 이에 저항하여 더욱 분노에 찬 투쟁에 동참하였다.

33) Hegel의 인정투쟁 이론은 원자론적 인간관에 반대로 모든 주체와 타자의 상호작용을 사회화의 기본과정으로 보았다. 주체가 타자와의 마찰 속에서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끊임없는 사회적 투쟁을 통해 초보적 인륜성은 절대적 인륜성으로 확장해 나아가며, 정서적-인지적-지적적관적 영역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정투쟁의 단계는 정서적 직관의 영역인 가족(사랑)의 영역에서 인지적 영역인 시민사회(권리)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정서와 인지가 통합된, 즉 합리화된 정서의 영역인 국가(연대)의 단계에 이르러 완성된다고 보았다.(Honneth, 1992)

34) ‘주격 나(I)’는 ‘목적적 나(Me)’의 의식된 행위 표현들을 사후에 새롭게 해석하며, 무대 뒤에서 대답하는 자이다. ‘주격 나’는 공동체의 태도에 대한 개인의 반작용이며, 의식적인 ‘나’에 대해 무의식적인 힘으로 대립하는 내적 충동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Me’는 ‘I’ 없이는 포착될 수 없다. 하지만, Mead는 ‘I’는 그 형식과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창조적인 이탈행위라는 것 정도 밖에는 알 수 없다고 한다.(Mead, 1934; Honneth, 1992)

한 개성화의 요구는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인정 관계의 확장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처럼 주체가 일반화된 타자로부터 얻고자 하는 인정의 노력 및 'I'의 개성화의 요구가 끊임없이 일반화된 타자의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Mead의 사회심리학에서는 인정투쟁이라고 한다.³⁵⁾

Honneth(1992)는 Mead의 이러한 자아정체성 구성의 상호작용 과정 및 인정투쟁을 통한 발전과정을 수용하면서도 인정투쟁이 근대사회의 사회적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구체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Honneth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헤겔이 논의했던 가족-시민사회-국가 차원의 특수한 인정 단계의 의미들을 주체의 자기관계 형성 과정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주체는 원초적 관계(사랑, 우정)-권리관계(권리)-가치공동체(연대)라는 사회적 인정형태를 통해, 1) 정서적 배려를 통한 자기 믿음 2) 인지적 존중을 통한 자기존중 3) 사회적 가치 부여를 통한 자기가치부여라는 세 가지 차원의 자기 관계(정체성)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체는 최종적으로 가치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연대' 관계에 의해서만 개성화된, 자주적인 주체들 사이의 대칭적 가치 부여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로 각각의 영역에서의 불인정-학대와 폭행을 당하거나, 권리에서 제외당하거나, 명예와 존엄성이 침해 될 때-을 경험할 때 주체의 자기 관계는 파괴될 수 있으며, 이것은 자기믿음-자기 존중-자기가치부여를 얻기 위한 인정투쟁의 실패를 의미한다.(Honneth, 1992: 220-221)

Honneth의 이론이 실제적 사회 집단의 정체성 분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서구 근대사회에 대한 기본 전제 속에서 구획된 '원초적 관계-권리관계-가치공동체'라는 인정투쟁의 3단계 범주가 변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심리적 발전과정의 동인을 현실 사회적 공간이 아닌 심리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치사회 현실로부터 발생한 인정의 요구 및 무시의 경험을 지니고 있는 사회집단의 심리적 동학은 창조적 도식을 필요로 하며, 인정투쟁의 궤적은 사례집단이 지닌 특수한 삶의 조건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형성과정이 일반화된 타자와의 긴밀한 상호작용, 혹은 반작용의 과정 속에서 인정투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이 다차원적인 사회관계 속에

35) Mead는 이러한 'I'와 'Me' 사이의 내적 마찰을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갈등 형태로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투쟁을 통한 사회발전은 개인적 자유권의 확대 과정으로 보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개성화 요구의 증대가 근대적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합가능한지에 대한 답을 오히려 '사회적 분업 모델'로 설명함으로써 개인의 자주성의 실현과 사회통합의 과제를 적절히 풀어내지 못했다.(Honneth, 1992: 148-149)

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 따라서 이와 같은 정체성 형성의 복합적인 동학 속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행위전략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Honneth의 이론은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4) 소결

구술생애사 이론을 통해 볼 때, 5·18 참가자의 생애사의 재구성은 억압된 기억에 대한 생활세계의 체험을 복원하여, 재구성된 체험을 바탕으로 5·18 참가자의 트라우마티즘을 분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외상사건이 기본적으로 재경험, 회피, 불안 등의 신체화 증상 뿐만 아니라, 자기존중감의 파괴, 애착된 인간관계의 단절, 신념체계의 붕괴라는 인간성의 파괴와 동반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트라우마 증상들은 외상 이후 안전의 확보, 외상기억에 대한 통합과 애도, 공동체와의 연결의 복구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회복단계는 단순히 단계적인 치유프로그램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5·18 트라우마의 경우, 외상사건 자체가 매우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된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넘어서기 위한 행위자의 행위전략과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5·18트라우마는 국가권력에 대한 각성, 공권력에 대한 저항경험, 공동체적 연대의 체험이 교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트라우마티즘은 행위자가 트라우마를 대면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한 정체성 및 행위전략이 외상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외상경험에 동반된 적극적인 체험(협력과 극복의 경험 등)의 구체적인 내용, 일반화된 타자의 강력한 집단정체성과의 인정관계가 설명되어야 한다. 트라우마로 파괴당한 자존감의 회복과정은 일반화된 타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및 인정의 획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체들이 일반화된 타자의 구성에 실패하게 되고, 그 결과 인정투쟁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정과 지지를 박탈당하게 될 경우, 일반화된 타자에 억압되거나, 자기 존중의 사회적 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의 형성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형성되어지는 정체성의 훼손 및 심리적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그리고 5·18 참가자들의 트라우마는 이들이 처한 구체적인 사회적 공간 즉, 가족-5월단체-5월공동

체-국가 등의 다차원적인 인정투쟁 영역을 탐색하고, 이러한 상호작용 집단과의 교류과정을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다.

3.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은 먼저, 사례집단의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생애사적 사건 및 체험들로 구성된 ‘중심이야기’를 연결하여, 생애사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재구성된 생애사에서는 사례집단이 정치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생애사적 과제 및 정체성은 어떤 것이며, 생애사적 국면마다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생애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의 형성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외상 사건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외상 사건 이후 트라우마티즘이 오히려 확대되거나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이 형성되는 과정, 또는 극복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것은 사례집단이 놓여진 구체적인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그리고 행위자가 일반화된 타자의 규범 즉, 집단정체성의 형성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인정투쟁을 벌이는 과정으로서 파악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트라우마티즘이 극복되거나 형성되는 사회구조적 조건을 분석해 봄으로써 5·18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이 제기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례집단의 생애사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생애체험은 생애사적 국면 시기에 따라 어떤 특징 및 서사적 구조를 지니며, 각 국면에서 형성되는 정체성과 및 생애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 둘째, 사례집단이 결정적인 생애사적 사건인 5월민중항쟁 및 5월투쟁에 참여면서 형성하는 집단정체성 즉, 일반화된 타자는 무엇이며, ‘5월정신’이라는 집단 정체성은 사례집단에 있어 어떤 변화과정을 거치는가?
- 셋째, 일반화된 타자의 형성을 통한 인정투쟁이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을 극복하고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인정투쟁의 세 가지 영역-원초적 관계-권리관계-가치공동체-에서 사례집단은 사회적 지지와 인정을 획득

하고 있는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넷째, 사례집단이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이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심리적 갈등구조는 무엇이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다섯째, 사례집단의 조사를 통해 볼 때,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이 형성되는 사회구조적 조건 및 원인은 무엇이며, 이것의 비판적·실천적 함의는 무엇인가?

1)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연구의 대상

필자는 기층민 집단이라는 광범위한 범주를 설정하고 시작한 연구과정에서 최후항전에 참여했던 ‘시민군기동타격대’ 회원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표 2〉 구술자의 인적사항

분류	이름	소속	5·18 당시 직업	현재 직업	당시 나이	학력	구술일시 /시간	비고
주요 구술자	박○○	구속부상자 회 내 기동타격대 동지회	음악실 DJ	무직	19	중퇴	2010.10.23 (05:13)	1차
	김○○	상동	나전철기공	무직	21	중퇴	2010.9.14 (02:51)	1차
	이○○	상동	방위병 (다방DJ)	무직	22	국졸	2010.9.14 (01:12)	1차
	영○○	상동	다방주방장	아파트 관리직	24	국졸	2010.9.14 (01:08) 2011.4.13 (02:43)	2차
	강○○ (유족구술 하○○)	상동	용접공	사망 (조경수 재배)	20	고퇴	2011.5.17 (01:43)	1차
보조 구술자	양○○	구속부상자 회	조선대 학생회장	구속 부상자 회 회장	미 확인	대졸	2010.9.15 (00:37)	1차
	허○○	83년 이후 5월단체 실무자	중학생	5월단체 및 지역운동 단체활동	18	대학 중퇴	2010.8.27 (02:39) 2010.9.13 (1:42) 2010.9.15 (3:53)	3차

초기 연구설계 단계에서는 기층민 출신 비율이 높은 부상자 단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눈덩이 표집을 통해 대상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정보제공자의 소개로 구속자 단체 소속의 '5·18시민군기동타격대' 회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집단은 대부분이 생산직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에 운동의 경험이나 조직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항쟁에서 즉자적으로 참여하고, 항쟁 기간 동안 상당히 응집적으로 참여하여 최후항전까지 무장투쟁을 전개한 집단이다. 또한 항쟁 이후 5월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운동의 적극적인 투쟁가로 활동해 온 사람들이 많다. 기동타격대는 약 50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다음의 주요 구술자는 광주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5월투쟁 및 5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최근까지도 이러한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필자는 위의 <표 2>에 제시된 5명의 기동타격대 회원들을 만나 구술인터뷰를 진행하였고, 5·18관련단체 실무활동가와 간부를 보조구술자로서 인터뷰 하였다. 구술자들은 인터뷰에 대해 실명 공개에 동의하였으나, 최소한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술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성이 중복되는 경우 다른 성을 사용하였다. 인터뷰는 비개입적인³⁶⁾ 생애사를 구성하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³⁷⁾ 대신, 살아온 이야기에 대한 자유로운 말하기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주요 생애사적 사건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5명의 구술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현대사자료연구원(1990)의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과 5·18기념재단(2007c)의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전사』, 전남대학교5·18연구소(2003a; 2003b; 2005)의 『5·18항쟁 증언자료집 I~IV』을 활용하여 추가로 7명의 기동타격대 회원의 구술채록 자료를 확보하여, 생애사 재구성과 트라우마티즘 분석에 반영하였다.

36) 면담자가 구술자의 이야기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면서 구술자가 자신의 주관적 기준과 생각의 흐름에 따라 생애를 이야기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구술자 자신이 삶의 다양한 사건들을 나름의 의미체계를 통해 정리하고, 구술자 스스로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실이나 기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7) 구조화된 질문지는 구술자에게 듣고 싶은 주제와 항목을 면담자가 미리 정해두고 그러한 질문에 맞게 구술자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구술자에게 듣고 싶은 주요 주제를 정해놓지만, 그와 관련하여 구술자가 연결시키는 사실 및 주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인터뷰의 쟁점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2)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연구를 위한 분석틀

연구질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생애사 서사의 주요 국면을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인정투쟁과 트라우마티즘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네 개의 시기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변화되는 인정투쟁의 양상을 기준으로 구분될 것이다. 다음으로 각 시기에 해당하는 트라우마티즘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회적 지지의 환경, 일반화된 타자의 내용 및 인정투쟁의 과정, 그 결과 형성되는 트라우마티즘의 성격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트라우마티즘이 극복·형성된 정치사회적인 조건을 제도적·사회운동론적·담론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의 시기별 특징 분석

기동타격대의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분석을 위해, 이들의 생애사 과정을 항쟁당시 -80년대-90년대-2000년대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나타난 일반화된 타자의 형성 과정 및 사회적 환경 그리고 인정투쟁의 과정, 트라우마티즘의 내용 분석할 것이다. 트라우마티즘은 사례집단이 놓여 있는 정서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응하고자하는 생애사적 과제가 출현하고, 이에 대해 인정투쟁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트라우마티즘의 성격과 내용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주요 생애사적 국면을 다음과 같은 다섯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이러한 트라우마티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 ① 80년 : '5·18체형'과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 ② 80년대 : '5월정신'을 향한 인정투쟁과 트라우마티즘 극복 전략
- ③ 90년대 : '5·18자원'을 향한 인정투쟁과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 ④ 2000년대 : '상처받은 5월정신'과 복합적인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2) 해당 시기의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분석을 위한 분석틀

사례집단의 시기별 트라우마티즘에 대한 분석은 앞서 논의한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생애사적 사건들을 통해 볼 때 사례집단이 처한 정서적·경제적·정치적 환경이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환경 속

에서 사례집단이 설정한 일반화된 타자는 무엇이며, 행위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인정투쟁의 과정은 펼치는가, 셋째,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인정투쟁의 과정은 어떠한 사회적 지지 및 인정을 획득하며, 그 결과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은 어떠한 성격과 내용으로 형성되는가.

① 주체를 둘러싼 사회적 지지 환경의 변화

Honneth의 인정방식에 대한 3단계 모델은, 5·18 참가자들에게는 개방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가 이들을 국민으로부터 배제하였기 때문에, 가족-시민사회-국가라는 사회구조를 전제한 인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세 가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정의 성격과 내용은 5·18참가자들의 실제 생활세계 공간을 통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기동타격대 집단의 실제적인 인정형태의 세 가지 차원은 다음 <표 3>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3> 5·18 참가자들의 인정과 무시 형태

Honneth의 인정과 무시 형태				5·18 참가자들의 인정과 무시 형태	
인정방식 및 형태	자기 관계	인정 요소	무시 형태	인정방식의 구체적 대상	인정과 무시의 구체적 형태
원초적 관계 (정서적 배려)	자기 믿음	신체적 불가침성	학대, 폭행	•가족 •기동타격대 동지회	-고문구타, 감시탄압으로 인한 신체적 안전의 여부 -가족 및 동료 집단을 통한 정서적 지지 여부
권리관계 (인지적 존중)	자기 존중	사회적 불가침성	권리형 재단차입	•5월단체 •광주지역 시민운동단체 •국가(정부)	-시민으로서의 인정 -노동권 등 법적 권리 인정 -경제적 안정
가치공동체 (사회적 가치부여)	자기 가치 부여	명예, 존엄성	존엄성 부정, 모욕	•5월단체 •5월공동체	-이데올로기적(폭도, 빨갱이) 낙인 여부 -시민들로부터의 도덕적 인정 -'5월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체적 연대

이들의 삶 속에는 5월공동체라는 가치공동체가 실제적인 의미에서 민족 및 국가

를 대신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5월정신’과 5월운동이라는 도덕적 규범이 통용되는 5월단체 및 광주에 ‘시민운동단체’는 이들에게 시민사회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그리고 가족이 존재했지만, 가족 이상의 정서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기동타격대 동지회는 부분적으로 정서적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을 것으로 본다. 즉, 기동타격대에게 가족, 기동타격대 동지회, 5월단체, 5월공동체는 이들의 정서적 안정, 신체적 안전, 경제적 안정, 시민으로서의 권리, 가치 연대 등을 가능하게 했던 실제적 인정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간은 정치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같은 관계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인정의 성격이 변화할 수도 있으며,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인정의 공간은 광주지역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

② 일반화된 타자 형성을 통한 인정투쟁의 과정 및 체험

‘5월정신’은 5월민중항쟁의 체험을 공유한 집단이 지닌 일반화된 타자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동타격대 집단은 5월단체를 이끌어 갔던 지식인 참가자들 및 재야 운동권 인물들 또는 단순 부상자들 및 유족들과는 달리 투쟁하는 기층민 청년집단으로서 지닌 고유한 ‘5월정신’의 정체성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집단 및 인물들과 교류하면서, 기동타격대는 이러한 ‘5월정신’의 내용을 확장하고, 변형시켜갈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동타격대가 일반화된 타자로부터 형성하는 집단적 정체성은 무엇이며,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정으로서의 인정투쟁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인정투쟁은 <표 3>에서 보듯이 가족·기동타격대 동지회-5월단체-광주지역시민단체-5월공동체-국가를 향해 있다. 이들은 이러한 상호작용 집단과의 교류 속에서 ‘자기민음, 자기존중, 그리고 자기가치부여를 어떤 방식으로 획득하는지, 혹은 실패하는지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일반화된 타자가 다수의 정체성들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정체성들 간의 갈등관계 및 심리적 갈등구조는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③ 인정투쟁의 과정 속에서 극복형성되는 트라우마티즘

인정투쟁의 결과는 외상경험자인 기동타격대에게 실제적인 트라우마티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다차원적인 사회적 지지와 인정은 이들의 파괴된 자존감 및 자기존중을 회생시켜 트라우마를 개선시킬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란 주요 상호작용 집단과의 인정투쟁을 통해 획득하는 정서적·도덕적·경제적 차원의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화된 타자를 통한 사회적 지지는 이들에게 '회복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Herman이 제시한 3가지 회복의 단계에 해당하는 1) 안전의 확보, 2) 기억의 통합과 애도, 3) 공동체를 통한 연결의 복구의 과정이 해당 시기에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외상경험자의 회복과정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3가지 단계가 현실적으로는 순차적으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의 여건에 따라, 각각의 회복 조건은 향상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5·18 참가자들 중에서도 집단별로 이러한 회복의 조건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기동타격대는 PTSD에 대한 생리적인 조절과 통제, 경제적·정서적 안정 등의 1단계의 회복조건을 지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럴 경우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트라우마티즘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전략을 펼쳤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3) 트라우마티즘 형성의 정치사회적 조건

이와 같은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과정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5·18 과거청산 과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5·18 참가자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5·18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의제였으므로, 민주화운동이 5·18 주체들과 어떤 연관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적·사회운동론적 차원의 정치현실의 변화는 5·18 담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을 동반하였으므로, 이러한 담론들이 5·18 참가자들의 기억과 체험, 즉, 익명적 지식을 어느 정도 드러내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세가지 분석을 통해, 기층민중 출신 저항집단의 트라우마티즘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정치사회적 함의를 제시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를 간략히 제시해 볼 것이다.

II. 5·18시민군기동타격대의 생애사 재구성

이 장에서는 5·18시민군기동타격대(이하 기동타격대)의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생애사를 재구성하였다. 기동타격대가 전 생애를 통해 경험한 핵심적인 사건들을 서술하고, 더불어 사건들에 대한 기동타격대의 내적 체험 및 체험의 의미를 제시하여 서사적 구조를 구성하였다. 시간적인 한계 및 구술 인터뷰 과정 상의 한계로 인해 생략된 사건과 사실은 2차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이 장의 목적은 생애사의 ‘서술적 진실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생애사적 사건들에 대한 구술자들의 생각의 흐름과 감정들을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므로, 사실자료의 보완은 언급되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한정하였다. 이 장은 생애사의 전개 국면에 따라 여섯 개의 시기로 구분한 후, 각 시기에서 등장하는 생애사적 사건 및 과제를 종합하여, 몇 개의 세부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1. 5월민중항쟁 이전의 삶

많은 글 속에서 5월민중항쟁의 전사(前史)는 지역적으로는 광주 지역 대학생과 교수들의 햇불시위로, 전국적으로는 80년 ‘서울의 봄’에 대학가에서 벌어진 학생운동 및 재야민주화 인사들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기록되어 왔다. 민주화 담론 생산 주체인 지식인들은 5·18이라는 사건을 민주화 운동의 한 계열로 편입시킴으로써, 5·18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위치에 놓여 있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5월민중항쟁에 참여했던 다수의 기층민중들에게 있어 5·18의 실제적 체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항쟁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이해하고, 그 사회구조적인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양식과 세계관을 분석해야 한다. 이들의 생애사에는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정치적 사건이 등장하지 않았으며, 생업에 시달리며 경제활동 이외의 사회적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항쟁 주체들의 생애사 서술을 위한 항쟁 이전의 전사는 기층민중들이 항쟁 이전에 살아왔던 과정 및 그 속에서 형성한 생활양식, 세계관 등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기동타격대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생계전선에 뛰어들어 자신의 일거리를 찾아다니

던 근로청소년 혹은 근로청년이었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직업을 마다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 다니며 살았고, 기술을 익혀 숙련공이 되기 위하여 갖은 어려움을 견디며 살았다. 그리고 배움을 갈망하였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고 각종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팔아야만 했던 사람들이다.³⁸⁾ 이들은 노동과 숙련, 절약과 저축을 통하여 자립과 자활을 희망하고 그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온 기층민의 생활세계 속에 살았다. 따라서 많은 경우 이들에게 정치현실은 관심과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어쩌면 가족과 개인의 불행에 어떠한 보상조차도 하지 않았고 가혹한 노무관리가 방치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정치는 처음부터 그들과는 무관한 존재,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는지 모른다. 20대 초반의 근로청소년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사회모순이나 ‘김대중’을 알 수 없는 세대이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활상의 자립과 안정이었다.(이종범, 2004: 235)

1) 생활상의 자립이 전부였던 근로청년들

실제로 5월민중항쟁 참가자의 연령과 직업분포를 보면, 다수는 기능직 노동을 하는 젊은 근로청년(또는 청소년)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4>를 보면 5·18 참가자들 중 다수는 생산직·서비스직 노동자, 영세영업자, 무직자였으며, 연령분포에서는 젊은 연령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5월민중항쟁 사망자의 연령별 직업별 분류

사망자 연령	인원	%	사망자 직업	인원	%
9세 이하	1	0.6	사무직	19	11.5
10세~19세	36	21.8	자영업	12	7.3
20세~29세	75	45.5	서비스업	9	5.5
30세~39세	28	17	기능직	50	30.3
40세~49세	9	5.5	농수축업	4	2.4
50세~59세	7	4	학생	30	18.2
60세~	4	2.4	군인	2	1.2
기타	5	3	기타	39	23.6
	165	100		165	100

자료: 광주지검 검사자료; 안종철, 2007a: 360

38) 이종범(2004)은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1990)의 5·18 참가자 증언록을 분석한 결과, 이 당시 근로청소년들은 가난으로 인한 학업 포기에서 오는 열등감과 자괴감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였으며 한편으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경제적 안정을 위해 나름의 목표를 갖고, 일에 매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는 농촌의 빈곤과 이농, 가족의 질병과 서민금융의 관행에 따른 가산의 탕진, 가부장제적 잔재, 일부다처제의 유산, 한국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이종범, 2004: 234-235) 그리고 이와 같은 생활상의 불안정이라는 삶의 조건은 당시 한국사회가 지닌 사회적 모순-농촌의 해체와 농업의 위기, 산업화와 도시화의 자본과 권력 위주에 따른 사회적 배제와 차별, 그에 따른 희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광주지역은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지 않은 상태여서 집결된 산업 노동자가 없었다. 이 지역 ‘출신’의 노동자는 어느 지역보다도 많았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는 어느 지역보다 적었다. 뿐만 아니라 임시노동자 또는 일용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농업의 위축에 의해서 이농을 강요당해 도시로 이주하여 저소득층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 즉, 주변적인 하층 노동자, 도시빈민이 많았다.

기동타격대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일반 항쟁 참가자보다 하층 노동자 출신이 더욱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기동타격대의 전체 인원은 50명 정도인데, <표 4>의 기능직 노동자 비율과 <표 5>의 생산직 노동자 비율을 비교해 보면³⁹⁾ 생산직 노동자의 비율이 두 배 이상이 되며, <표 5>에서 학생에 해당하는 10%는 모두 고등학생으로 추정된다.⁴⁰⁾ 기동타격대에 참가하게 되었던 사람들은 다수가 젊은 하층노동자 계층으로서, 가족 및 자신의 생계를 위해 생업에 종사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1950년 후반에서 1960년 초반에 태어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청소년 및 청년이었다.

<표 5> 구속된 시민군기동타격대의 계층별 현황

계급구성	인원	%
생산직 노동자	19	64.3
사무직 노동자	1	3.3
서비스직 노동자	3	10.0
학생	3	10.0
영세상인	2	6.7
농민	1	3.3
군인	1	3.3
총계	30	100

자료: 안종철, 2007a: 360

39) 두개 표를 비교해 볼 때 <표 4>에서 기능직에 해당하는 직업분류는 <표 5>의 생산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40) 연구자가 만난 구술자들과 현사연(1990) 증언록에 나온 자료를 종합해 보면 기동타격대 중 학생신분에 해당되었던 3명은 모두 고등학생이었다.

염○○ 씨의 경우 화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한 학기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취업을 위해 홀로 광주로 올라왔다. 양장점, 중국집 배달, 다방 주방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직 노동에 종사하였다. 그러다가, “서울이란 데를 가보고 싶어서” 연고 없는 서울에 여동생과 무작정 상경을 해서 가리봉 공단에서 일터를 잡았다. 가방공장 등을 전전하다가 봉제공장에서 시다와 미싱일로 철야작업, 연장근무도 마다 않고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이 반복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어려워지자 79년도에 광주로 내려와, 다시 다방 주방장으로 일을 하게 된다. 염○○ 씨는 석방 직후에도 다시 서울로 상경하여, 결혼을 위해 광주에 다시 내려오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보일러 설비 일로 생계를 꾸렸다. 그는 80년 이전의 생활을 “오로지 일만 한 거 같다”고 회상하였다. 당시에 가졌던 꿈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은 생각 못했고” “돈이 있어야 사니까” “하여튼 돈만 따라 댕긴” 시절로 기억한다. 염○○ 씨는 현재까지의 생활에 대해서도 평생에 걸쳐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생활을 가장 큰 고충이라고 호소하였다.(염○○2차: 1-4)⁴¹⁾

이○○ 씨는 광주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부모님은 시장에서 식료품 및 야채장사를 하여 전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다. 중학교를 다니다가 패싸움을 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서 2년간 정착지 없는 생활을 전전하다가 다시 광주로 내려왔다. 이○○ 씨는 이 무렵에 시내에서 DJ를 하는 선배를 알게 되어 따라다니다가, 다방에서 소위 “판돌이” 생활을 거치고 나이트클럽에서 사회 보는 일에 종사하였다. 이런 생활 중에 영장이 나와서 항쟁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에 공군 부대에 방위병으로 입대하였다. 그가 근무한 공군부대는 야전 정비부대로서 비행기 엔진 세척과 정비를 하는 곳이었는데, 낮에는 방위로 근무하고 밤에는 시내에 나가 DJ 일을 하곤 했다.(이○○; 현사연, 1990: 494)⁴²⁾ 이○○ 씨는 이 당시를 “어차피 농사꾼 아들이니까” 특별한 일 없이 돈 벌기 위해 취직하려고 했던 시절로 기억한다.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 학업의 기회가 있었던 경우는 강○○ 씨와 김○○ 씨 그리고 나○○ 씨의 경우이다. 강○○ 씨는 장성에서 농사일을 하는 집안의 4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광주농고를 다니다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중간에 학

41) 염○○ 씨의 2차 구술인터뷰 녹취록의 1~4 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는 뜻임.

42) 현사연(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증언록 494 페이지에 있는 이○○ 씨의 증언자료를 인용하였다는 뜻임.

교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공업사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던 중 5·18을 맞았다.(하○○: 12-13) 김○○ 씨는 고흥군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다니다가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그만두고 서울로 상경하여 각종 직업생활을 하면서 독학을 하였다가 78년에 다시 광주로 내려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작은 나진칠기 가내 공업 하청을 하고 있었다.(김○○: 1) 나○○ 씨는 광주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전남매일신문사에 근무하는 아버님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 광주에서 국민학교 3학년까지 다닌 후 부모님의 권유로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었으나, 담임선생님의 노골적인 금품요구를 접하고 실망하고, 성격도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학교 다니는 것에 흥미를 갖지 못해 중학교를 중퇴하고 서울과 광주를 왕래하며 특별한 일 없이 지냈다. 아버지는 사내 부조리를 알게 되면서부터 신문사를 그만두고 운수업을 하다가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나○○ 씨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약간의 사회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술회한다.(나○○: 현사연, 1990: 482)

2) 근로청년들의 생활세계와 정치의식

기동타격대원들은 주로 노동자 가정 출신으로서 시골에서 광주로, 또는 광주에서 서울을 오가며,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안 해 본 것 없이” 이직을 반복했던 하층노동자들이 다수였다.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생활전선에서 노동하며 생활상의 자립과 안정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또는 고등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특별한 일 없이 방황하던 청년들이었다. 목숨을 걸고 최후항전까지 참여하여, 신군부와 계엄군의 만행에 저항했던 기동타격대의 대부분은 이처럼 생활상의 자립과 안정을 목표로 분주하게, 때로는 무료하게 지냈던 젊은 노동자들이었다.

이들 다수는 항쟁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민주화 이념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었으며, 대학생들의 시위와 정치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다. 박○○ 씨는 평소에 대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힘들게 농사지어서 대학 보내줬더니 저 짓거리 하고 다닌다”며 학생들 데모를 ‘철없고 부모 고생시키는’ 행동으로 생각했다. 근로청년들은 생계에 시달렸기 때문에 학생들의 각종 시위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생활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의 행동은 사치스럽고, 여유 있는 사

람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는 “전두환이가 누군지도 몰랐으며”, “박정희 정권부터 호남출신 대통령 한번 뽑아보자” 했던 인물이 김대중이었으므로, 평소 대학생들의 시위를 보면서 “김대중을 석방하라”라고 외치는 구호 정도만이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나라 뭐 전쟁만 안 일어나고 편안히 살아가면 쓰겠다’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만 하고 살았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 갖고 땀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지 않고 사는 평범한 시민”이었다.(김○○: 1)

2. 5월민중항쟁의 체험

5월민중항쟁이라는 사건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평범한 근로청년의 일생생활을 뒤바꾸어 놓았다. 즉, 기동타격대는 항쟁기간 동안 시민군으로 활동하여 목숨을 건 최후항전까지 참여하게 됨으로써 기존 세계관과 가치관의 경계를 넘어섰고, 전 삶의 영역에 있어 새로운 신념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들의 평생의 삶은 어떤 식으로든 5·18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복합적인 생애사적 과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1) 참여 계기: “불의에 눈감지 않는 것이 젊은이의 도리”

(1) 항쟁 참여의 직접적 동기: 계엄군의 만행에 대한 분노와 절규

다수의 광주시민들이 항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1차적인 계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계엄군의 무자비한 살상극에 대한 분노의 감정 때문이었다. 항쟁 초반의 격렬한 감정은 “전두환 찢어 죽여라!”, “공수부대 다 때려 죽여라!”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와 같은 분노와 절규의 언어들로 표현되었다.⁴³⁾ 그리고 시민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공수부대라는 ‘적’에 대항하여 자신의 고향과 젊은 생명들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항쟁에 참여하였다. 즉, 이들의 항쟁 참여는 목적의식적인 동기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학살만행에 대한 ‘언어의 좌절’⁴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최정운, 1999)

43) 최정운(1999)은 계엄군의 만행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감정은 합성과 느낌표의 연속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대학생과 지식인들이 사용했던 논리적 언어 및 담론의 정치와 달리, 다수의 광주시민들이 느꼈던 언어는 상징어와 시의 언어로서, 이러한 언어를 통해 서로가 느낀 감각을 나누었다.

공수부대의 시위 진압은 ‘과감한 타격’을 넘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며 악귀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공수부대는 당시 문명사회가 수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정교하게 만들어낸 아만이자 악마였다. 공수부대의 18일과 19일에 걸친 만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광경을 공통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 ‘개 패듯 패고’, ‘개처럼 질질 끌고 와 트럭에 싣고’, ‘짐짝처럼 트럭 위로 올려져’ 등은 증언록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는 표현이며 이 대목은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어진다.(최정운, 1999: 125-126)

또한 이들의 대다수는 신군부 세력에 대한 비판의식을 지니거나, 민주화 운동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 5·18은 물론 정치학적 차원에서 군부독재 권력의 연장선에 있던 전두환 신군부 일파의 권력야욕에 의한 폭압적인 쿠데타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시민들의 저항은 이러한 신군부의 권력찬탈에 대한 도전으로서 민주화를 위해 기여했다고 ‘평가’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항쟁 참여자들 다수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울분이 일었다”거나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서 항쟁에 참가하게 되었다.(이종범, 2004)

박○○ 씨는 계엄군에 대한 분노를 느끼면서, 경상도 군인들에 맞서 “전라도는 우리가 지키자”는 심정으로 총을 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 동기에 대해 소위 민주화 ‘의식’이 있었던 학생들과 달리, ‘민주’라는 단어도 써 본 적 없었으며, 민주화를 원하지도 않았으며, “분해서 단순하게 맘먹은” 것으로 평가하며, 민주화운동을 했던 학생들과의 차이점을 스스로 강조하였다.

그니까 저 역시도 그걸(시민들의 참여) 보고 참여를 하게 된 거지, 처음부터 의식은 진짜 없었어요. 배운 사람들은 의식이 있었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의식이 없었죠. ‘민주’라는 단어도 써 보지도 않고, 평소에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민주를 원할 게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잘 사는데, 그런데 그게 인제 너무 확대되니까, 그게 인제 분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맘 먹은 거죠. (박○○: 4)

박○○ 씨는 5월민중항쟁이 끝나고, 수년이 지난 뒤에야 광주의 ‘운동권’ 학생들과 교류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민주화에 대한 정치학적인 지식을 갖기 시작한다. 아

44) 광주항쟁을 취재했던 기자는 만행, 폭거, 무차별공격 등의 단어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여 궁여지책으로 ‘인간사냥’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보고 백주검탈, 폭력난행, 성도착적 무력진압 등의 표현을 떠올렸지만 이마저도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기에는 적절치 못하였다고 한다.(한국기자협회, 1997)

마도 이러한 경험이 항쟁 당시 시민과 학생의 참여 동기의 차이점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⁴⁵⁾ 항쟁에 참여했던 ‘운동권’ 대학생들 및 지식인들은 계엄군이 진입했을 때, 신군부의 쿠데타 이후 정치적 체제의 변화와 쿠데타 세력이 지닌 집권계획 및 국민들에 대한 탄압의 징조를 정치적 언어로 읽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5·18이전부터 “민주화 투쟁의 목표를 ‘유신잔당의 전면 타도’로 발표하였으며, 그 이유를 유신잔당이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민주적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당시의 정치적 핵심을 신현확, 최규하, 전두환 등 3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퇴진, 비상계엄의 해제, 구속된 민주인사의 석방과 복직·복권을 주장”해 왔다.⁴⁶⁾(김진균·정근식, 1990: 155) 또한 대학생들과 민주화인사들은 전국적인 예비검속이 실시되면서 전두환 정권이 계획한 광주 탄압의 징조를 읽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 씨와 같은 참여자들은 계엄군의 만행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인식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치권력의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의 시간을 통해 국가와 군부,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2) 항쟁참여의 규범적 동기: “청년, 군인, 건달의 의리와 정의감”

김○○ 씨는 5월 18일, 유동삼거리 근처를 지나가다가 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계엄군에게 곤봉, 개머리판, 워커발로 “죽지 않을 만큼 이유 없이” 맞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비무장 상태였던 자신을 포함한 시민들이 다치고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무장하지 않은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21일에 다시 광주 시내를 나왔고, 시민군에 합류했다.

집에서 곱~곱히 여기저기 두드려 맞은 데도 아프고, 집에 누워 있는데, 참~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됐는지를, 그 때는 혈기왕성한 나이래. 왜 내가 맞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내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바깥 상황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중략)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당시 시민들은 비무장 상태였는데, 맨몸으로 맨몸으로... 맨몸인 상태의 시민들을 그렇게 부차별하니, 당시 진압봉이라는 게 곤봉인데, 곤봉 그 다음에 대검 착검해

45) 박○○ 씨는 계속되는 구술에서는 항쟁 당시의 기층민중들의 ‘5월정신’ 과 항쟁 이후에 학생들로부터 배운 ‘5월정신’ 을 구분하여 이야기를 풀어간다.

46) 5월16일 발표된 전남대학교 자유언론 투쟁위원회의 ‘대학의 소리’ 유인물 및 5월 15일에 발표된 전남대학교 대의원총회의 유인물.

서 총 개머리판 이런 것으로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일반 그냥 시민들을 흥기로 그렇게 잔인히 잔압하는 게 과연 무엇 때문이었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군들이 무장을 한 것은 각구목(각목) 정도, 그냥 뭐 나무 몽둥이, 그 다음에 돌맹이 정도였는데, 그 정도 무장 했다고 해서 총을 쏠 수가 있었는가?… (담배피심)…… 그래서 나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그만큼 18일날 두드려 맞았으면는 가만히 어딘가에 숨어 있었어야 됐는데, 왜 다시 뛰쳐 나왔던가, (중략) 왜 거기에 있었을까? 뭐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젊은 나이였거든요 다. 또 젊은 저 같은 사람 뿐 아니라 당시에 저희 부모 같은 어르신 분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끝까지 남아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옳지 못한, 그 불의를 보고 그냥 나만 살겠다고 도피한다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5월민중항쟁이 결국 승리의 깃발을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김○○: 2-3)

김○○ 씨는 계엄군의 만행이 자신의 ‘젊은이가 해야 할 도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18일에 이유 없이 구타당하여 공포심을 느꼈지만, “불의를 보고 나만 살겠다고 도피한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며, 정의에 어긋난다는 나름의 도덕규범을 통해 상황에 대응하였다. 이것은 비단 기충민중이나 광주시민에만 해당하는 규범은 아니었겠지만,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잔인한 학살극 속에서는 이들의 선택은 높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 스스로가 말하듯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더욱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시민군은 노동하는 청년들이었는데, 이들은 생활의 일탈과 분주함에서 묻혀 있으면서도, 청년 세대 특유의 감성적 정의감이나 행동적인 의사표현과 동료의식을 중시하였고(이종범, 2004: 236), 이러한 태도가 시민군에 참여하게 되는 규범적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 씨는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19일 저녁 계엄군이 시민들을 구타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되도록 몸을 피해 다녔으나, 그 모습을 본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 씨는 ‘군인의 의무’에 대한 나름의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계엄군을 적으로, 시민군을 아군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무장활동에 들어갔다. 그는 “맨주먹으로 돌만 던지고 그러다가, 맞고 나니까 오기도 생기고” 해서 무장을 결심했다.

나의 머릿속엔 나라를 지키는 정의로운 군인이 무고한 시민들을 못살게 구는 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 군인이려면 전투에서의 적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이○○, 현사연, 1990: 494)

염○○ 씨도 “광주시민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각종 일을 도왔고, “남자라면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기동순찰대를 지원하였다. 최○○ 씨는 당시 석공이었으며, 서방에서 ‘건달세계’에 있었다. 5월 19일 경 대선배의 조카가 공수부대에 사살 당한 후 후배들을 집합시켜 놓고, 건달로서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뺨을 한차례 썩 때리고 칼로 자신의 손을 찍어 자해행위를 하며 후배들에게 다짐을 시켰다. 최○○ 씨는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모인 다섯 명 정도의 친구들과 함께 화염병을 만들어 가지고, 서방 삼거리로 나와 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을 저지할 것을 외쳤다.

그러니까 제가 서방에서 그, 한 때는 건달세계를 했어요. 건달세계를 했는데 우리 대선배 조카가 공수부대한테 당했다고 집합을 해가지고 뺨따구를 했어요. 느그들이(너희들이) 건달이면 건달이지 광주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가만있냐. 열 받아 갖고 그 때부터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때는 날짜가 대략 19일 정도 될 거예요. 19일 정도 되는데 19일날 서방삼거리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됐어요.(최○○: 5·18기념재단, 2007c)

이처럼 기동타격대는 제각각 자신의 생활세계로부터 비롯한 나름의 양심과 도덕규범에 의존하여 행동방식을 선택하고, 무력감을 극복하며 저항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최정운이 말 한대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정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데 익숙지 않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룰데면 ‘의리라면 끝내주는’ 생활방식”을 지니고 있었다.(최정운, 1999: 81) 기동타격대 역시도 이러한 생활방식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계엄군에 의한 이웃과 가족들이 희생을 목격하면서, 각각 ‘청년’, ‘군인’, ‘건달’로서 지켜야 할 양심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각은 동료들과의 집단적인 결집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군의 역할로 이어졌다.

2) 시민군 활동: “지켜야 할 세상인 거 같았다”

(1) 노동자들에 의한 시민군 형성

5월민중항쟁에서 다양한 계층의 주체들은 각자가 지닌 능력 및 계층문화에 따라 다양한 실천의 양식을 만들어냈다. 대학생들은 ‘투사회보’를 비롯하여 상황 전달과

실천 제안을 위한 선전물을 제작하여 정보를 전달했고, 여성들은 주먹밥을 만들고 헌혈을 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마이크를 잡고 홍보활동을 담당했다. 그리고 육체노동에 익숙한 젊은 노동자들은 총을 들었고 노장년층은 거리에서 이러한 활동을 응원하고 박수를 쳐 주었다.

생산직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남성노동자들은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각종 무기를 탈취하고 자발적으로 무장활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21일 대낮(오후 1시)의 도청 앞 집단발포는 시민들을 극도의 공포감으로 몰아넣었고, 많은 시민들이 국군에 대한 공분을 느꼈다. 이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시민군이라는 명칭이 자연스럽게 부여되기 시작하면서 아군으로 간주되었다.⁴⁷⁾ 21일 오후 4시경 광주공원에서 최초로 120여 명의 시민군이 편성되었고, 오후 5시경 유동삼거리에서도 2백 명 가량의 무장 시민군이 편제되었다.⁴⁸⁾

시민군으로 활동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업노동자, 목공, 건설노동자, 구두닦이, 웨이터, 일용품팔이 노동자들이었다.(안종철, 2007a) 이들은 평소에 지니고 있었던 육체적 힘을 자연스럽게 무장활동으로 연결시켰으며, 무장활동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꼈다. 공장에 다니던 노동자들은 쇠파이프를 공수해 와서 무장했고, 목공들은 공장에서 각목 등을, 탄광에서는 다이너마이트를 노획해 왔다. 노동자들은 항쟁의 공간에서 이러한 노동 현장의 도구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계엄군과 대항하는 육체적 활동을 자신의 역할로 선택하였다.

22일 해방 광주의 첫 아침, 많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모여들고, 시민군들은 본격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예비군들에 의한 총기교육, 외곽 지역 순찰 배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오후부터는 도청이 새로운 시민군 사령부로 활용되어, 차량동행증, 유류보급증, 상황실 출입증 등을 발부하여 체계를 갖추었다. 78대의 차량을 등록시켜 지역별로 번호를 매겨 배정을 했고, 중간연락, 환자수송 등의 임무를 분담하고 운행지역과 임무를 정확하게 나누었다. 소형차량은 주로 구호연락 등의 임무를

47) 항쟁 초기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에 대항하기 위해 몽둥이, 곡괭이, 화염병 등의 자기방어적 무기를 소유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시민들 스스로 시민군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고, 21일 이후 사실상 무기인 M1, 칼빈 소총 등을 소유했을 때부터 시민군의 의미가 부여되고, 불리기 시작하였다.(안종철, 2007a: 330)

48) 총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부는 광주 근교 곳곳의 경찰서로 달려가서 무기를 노획하여 광주시내로 반입하고 지원동, 산수동, 백운동 로터리 등 외곽지역에서 청년들에게 분배하였고 시가전이 시작되었다. 시민군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전투지도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조별로 나누어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광주 시내 주요지점으로 배치되었다. 시민군들의 압박으로 계엄군은 총퇴각을 결정하자, 저녁에는 시민군이 계엄군을 몰아내고 교도소를 제외한 광주시의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안종철, 2007a)

맡고, 지프차는 지휘통제, 순찰 및 상황통제, 전달, 헌병업무를 군용트럭은 전투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시민군의 전형적인 모습은 기동순찰대였다. 이들은 21일 이후부터 치안, 전투를 위해 출동하거나, 물품도 나르는 경찰과 군의 역할을 동시에 구분하지 않고 수행하는 조직이었다. 조별로 차 한대와 무전기 한대가 전부였고 대원들은 임의적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집에 돌아가기도 했다.⁴⁹⁾ 처음부터 조직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거나 약간 낮익은 얼굴끼리 교신하는 상황이었으며, 짧은 시간에 나눈 친분을 바탕으로 급조된 군대였다.(안종철, 2007a)

시민군들의 활동 속에는 일상생활의 문화적 상징들이 녹아 있었다. 태극기는 이들의 싸움이 정의롭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상징으로서 관을 덮을 때나, 진격을 할 때, 시민들을 향해 응답할 때마다 사용되었다. 즉, 태극기는 이들의 싸움과 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이자 공인된 상징이었다.⁵⁰⁾ 시민군들은 ‘늙은 군인의 노래’, 군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애국가 등을 부르며, 사기를 높였다. 또한 노동자계층이 지녔던 생활상의 상식과 문화적 기호들 자연스럽게 시민군 활동의 과정에 부여되었다. 시민군은 총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고등학생에서부터, 해병대 출신, 조폭 출신, 노동자 출신 등 매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뭉친 ‘오합지졸’의 집단이었다. 따라서 각 조마다 자신들이 조를 운영하기 위한 방침은 각자의 상식 속에서 나왔다. 이○○ 씨는 24일 지원동에서 총상을 입은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 지원을 나갔다가, 2개의 조를 재정비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모모조’, ‘닐리리조’ 2개조로 재편성하여 성공리에 시민을 구출하였다. 기동타격대 1조는 이름 대신 ‘백곰’, ‘시계’, ‘사무라이’ 등 별명을 불러서 서로의 이름과 출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현사연, 1990: 496-497) 기동타격대는 위급한 상황의 최전선에서 주요 임무수행을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여, 배례모를 착용하는 등 특수부대의 복장을 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6조의 한 팀원은 자신의 활동을 명명하기 위해 대테러진압대의 활동을 그린 영화 제목을 따서 차량에 ‘특수기동대’라고 써 붙이고 다니기도 했다.(현사연, 1990: 509)

49) 이들의 활동은 조장 임명이 조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주요 건물 경비를 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등 조직적인 내부 규율이나 일원적 체계는 마련되지 못했지만, 상당히 질서 있게 유지되었다. 시민군들은 도청 안이나 근처에 운집해 있거나 차안에서 자고 있다가 전투가 벌어졌다는 연락이 오면 근처의 사람들이 차에 타서 출동을 했고, 누군가 경비를 서다가 총을 놓고 집에 가면 다른 사람이 아무나 그 자리를 메워주는 식이었다.(안종철, 2007a)

50) 태극기 이외에 이들의 ‘성스럽고’ ‘가슴벅찬’ 활동을 표현해 낼 수 있는 도구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태극기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의롭고 숭고한 대의를 상징하는 기호의 역할을 하였다.

시민군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청년들은 도청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항쟁 기간 내내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이직과 동시에 숙소를 옮겨 다녔던 노동자들의 생활에 익숙한 것이었다. 김○○ 씨, 박○○ 씨, 염○○ 씨 모두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숙식을 해결했던 근로청년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쟁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를 부모님이 알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단속해 줄 보호자가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쉽게 항쟁에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씨의 경우는 항쟁에 참여한 열흘간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일부 시민군들은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까봐, 혹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에서나 도청에서 숙식을 해결하곤 했다.

23일 이후부터 시민군은 상황실장이 된 박남선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지역방위대는 초기부터 7개 지역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면서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12개조까지 확대되었지만 24일을 전후로 모두 해산되었다. 외곽지역의 방어는 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예비군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외곽지역을 수색하면서 계엄군들이 들어오면 저지사격을 하는 등 간헐적인 전투가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수부대원이 생포되고 마찰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으며, 사망과 부상이 계속되었다.(안종철, 2007a)

(2) 항쟁공동체의 체험: “지켜야 할 세상인 거 같았다”

노동자들이 시민군 활동을 통해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으로부터 느낀 인간적인 감동과 기쁨의 체험이었다. 그것은 평소에 국가와 시민사회로부터 기층민중들이 박탈당해왔던 것이었다. 최○○ 씨는 항쟁 당시 시민군의 활동이 자신에게 의미했던 것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자랐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반건달로 살다가 갑자기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젊은이가 고생한다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략) 이런 거 하지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라는 말만 듣다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중략)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총을 드는 일밖에 없다고 자연스럽게 느꼈어요. 처음으로 제구실을 하면서 살게 됐죠. 거기에서 자유라는 게 느껴지더라 말이에요. 틀에 매어 있다가 다른 틀로 확 풀려서 들어간 것처럼. 거기서 도망을 가요? 아니죠. 지켜야죠.(최○○: 한겨레21, 2010)

이○○ 씨에게는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시민들이 “박수쳐 주고, 물주고, 빵 주고” 하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던 체험이 최후항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5월 23일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호응과 찬사를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군인신분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리라 결심했다고 한다.

인자 저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내가 뭐 민주화가 뭐인지 그 때 뭘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이런 걸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갔지, 그리고 인자, 우리 그 타격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사람들 다 그래요, 우리만 사실 5·18을 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민이 없었으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그 때 당시 담배 주고, 물주고, 빵 주고, 우리들 저 짐차 타고 오면 박수쳐주고, 그런 게 없으면, 우리끼리만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하면 뭣해요, 시민들이 동조가 없으면 인제, (중략) 그 때 당시 어머님들, 그런 대인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사실상 없었으면 이거 사람들도 별로 따라다니지도 (않았을 것이다) 시장 어머님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밥도 막 그 자리에서 막 지어서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우리도 사실 안 가, 우리만 먹고, 우리만 가서, (큰 소리로) 뭐하러 도청 안에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갔잖아요.(이○○: 7)

실제로 시민군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지지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시민군과 시민의 일체감은 역사에서 찾기 어려운 두터운 것이었다.(안중철, 2007a: 368) 항쟁에 참여한 1차적인 계기가 인간성의 파괴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결심이 죽음을 건 최후항전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2차적인 계기는 항쟁의 기간 동안에 형성된 ‘절대공동체’의 체험이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항쟁 당시의 상황은 “지켜야 할 세상인 거 같았다”는 말로만 표현된다. 최○○ 씨처럼 많은 근로청년들은 시민군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인간적인 지지는 삶에 있어 처음 느끼는 것이었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3) 5월 26일 기동타격대로의 편입

26일 낮에 계엄군의 진압 통보가 이미 들어온 상황에서 계엄군과의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기동타격대가 모집되었다. 기동순찰대에 활동했던 팀이 몇몇을 제외하고는 한 조로 결합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1조였던 이○○ 씨나 6조였던 박○○ 씨의 경우는 기동순찰대 조원 전원이 기동타격대로 지원하고 한조에 배정되었다. 1조와 6조의 경우는 동네 선후배나 친구가 조원인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단결력도 컸다. 이○○ 씨는 기동타격대를 지원할 때 “의연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싸울 것을 다짐”하였고, 4조

있던 김○○ 씨의 경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광주 시민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기동타격대에 편입하였다.

나는 아주 의연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싸울 것을 다짐하였다. 기동순찰대 활동을 했던 것보다 아주 뿌듯한 감이 들었다. 기동순찰대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기 때문이다.(이○○; 현사연, 1990: 497)

26일날 이제 계엄군이 진압을 해 들어온다는 것이 공공연하니 말이 떠돌다가, 저녁 때 되면 확실 시되었죠. 그래서 당시 수습대책위원들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도 다 도청에서 빠져나갔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사실 21일날 그런 무차별 사격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도청에 나와서는 살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물러난다고 한다 하면은 지금까지 광주의 시민들의 안위는 누가 지키겠냐, 그 어린 나이에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도청을 버리고 나갈 수가 없었고.(김○○: 3)

기동타격대는 항쟁지도부가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일원화된 조직체계를 갖춘 무장조직이었다. 기동타격대는 항쟁지도부 조직 체계 속에서 상황실장이 임명한 대장과 부대장, 그리고 조장들을 공식적으로 두고 있었다. 이 무장조직은 총기 회수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 무장조직은 창설 당시 공식적인 의식을 행하고 선서도 하여 대원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뿌듯한 자신감도 주었다.

〈기동타격대 선서문〉

우리는 계엄군으로부터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계엄군에게 훼손당한 질서를 회복해야 할 기동타격대로서 광주시민의 명예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다음을 준수한다.

- 하나. 계엄군의 동태를 파악하여 시내 진입을 저지하고 끝까지 도청을 사수한다.
- 하나. 계엄군과 대치하거나 대항할 때는 절대 우리가 먼저 총을 발사하지 않는다.
- 하나. 개인 총기 소유자나 거동이 수상한 자들을 체포하여 본부에 이송한다.
- 하나. 싸움, 음주 등 난동자들을 체포하여 본부에 이송한다.
- 하나. 본부에 이송된 자들은 적절히 조치하여 무고한 자들은 안전하게 귀가시킨다.
- 하나. 시민의 신고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협력에 응한다.
- 하나. 모든 상황은 기동타격대 본부에 연락하여 대처한다.

대원들에게는 대원증도 전원 발급하였고 옷도 전원 전투경찰복에다 방석모를 썼고, 이○○ 씨는 공수부대 베레모를 쓰기도 했다. 이들은 거의 노동자 출신의 20세 전후의 젊은이만으로 이루어진 동질성을 지향한 조직이었다. 대학생들은 시민군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당시 도청 수비대에만 배속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1개조 당 6명 내지 7명의 소수로 조직하여 13조까지 배치하였으며⁵¹⁾, 각 조 당 조장 1명, 타격대원 4~5명, 군용지프차 1대, 무전기 1대, 개인화기로 카빈소총 1정과 15발 실탄 1클럽씩이 지급되었다.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상호 관리가 가능하게 하였고 각 조는 이 전의 친구관계나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배치시키거나 기존에 함께 활동하던 기동순찰대 조원들이 한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안종철, 2007a)

3) 정치체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우리의 이웃과 고향”

(1) 수습과 항쟁의 갈등 “지식인 지도부와 노동자 시민군의 갈등”

5월 22일 낮에 신부, 목사, 변호사, 기업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5·18수습대책위원회’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기를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생수습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무기회수 문제에 대한 팽팽한 대립으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처럼 수습위와 시민 간의 갈등, 수습위 내부의 갈등이 첨예화된 것은 24일이였다. 도청 앞 쾨기대회에서는 수습위의 투항주의적 입장을 맹렬히 비난하는 연설들이 터져 나왔다. 이날 밤 학생수습위는 무기반납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대립하게 되었는데, 토론과 갈등 끝에 김창길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 지도부는 김종배 등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로 교체되었다.⁵²⁾ 한편 23일 이후 광주 시내에는 수습대책위 내부의 의견대립으로 지도력이 불안한데다가 정보요원들이 잠입하여 교란작전을 편 관계로 커다란 혼란에 휩싸여 있었고 25일 아침에는 독침사건이 발생하였다. 25일에 이르러서도 시민군의 무장해제와 거부를 둘러싼 대립은 계속되었으나 점차 무기회수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전 시내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박남선 상황실장은 쾨기대회에서 총을 들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발표했다.

51) 그러나 공식적인 기록은 7조까지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52) 김창길은 무기를 반납하면 계엄군이 탄압을 중단할 것이며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면 엄청난 희생이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로 무기반납을 주장했다. 김종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무기반납은 희생자의 죽음에 침묵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무기반납에 반대했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무기반납에 동의하자, 박남선 상황실장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 결과 반납을 원하는 학생들 일부가 이탈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 학생수습위를 개편하였다.(안종철, 2007a)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먼저 이 고장의 민주주의를 수호키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다 숨진 시민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차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만은 있을 수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중략) 계엄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과 청년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중략) 시민 여러분 너무나 경악스런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당국은 공식적으로 발표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시민 여러분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장을 지키고 우리 부모형제들을 지키고자 손에 총을 들었던 것입니다. (중략) 시민여러분,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또한 협상이 올바르게 진행되면 우리는 즉각 총을 놓겠습니다. 민주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을 절대적으로 믿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0. 5. 25 시민군 일동(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63)

그러나 일반 수습위에서는 무조건 무기반납을 결의하였고, 강경파였던 윤상원은 전남대 운동권 학생들과 기존 학생 수습위원회 위원을 추려, 새로운 집행부를 결성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⁵³⁾ 이 조직은 어느 정도 과도기를 거친 후 민주투쟁위원회로 개칭하기로 하고 정상용이 투쟁위원장직을 맡기로 잠정적인 합의가 되었다. 투쟁지도부는 YWCA에 대기 중이던 학생병력을 도청의 학생병력과 합류시키면서 앞으로의 전투와 협상 방향을 계획하고 있었다.(안종철, 2007a: 353-356)

항쟁 기간 동안 수습위와 연락망을 가졌던 시민군은 무기회수를 위해 활동하기도 하였지만, 수습위와 체계적인 의사소통 체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⁵⁴⁾ 다수의 시민군들은 각 팀의 방식으로 치안과 시민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떤 조는 총기를 회수하러 다니기도 하도 어떤 조는 회수에 반대하여 수습위에 공개적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무기회수를 반대했던 이○○ 씨는 수습위의 무기반납에 반대해 도청으로 찾아가 수습위원들에게 항의하였다.

53) 새로운 수습위는 김종배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생들과 시민군들을 모아 조편성에 들어갔고 1개조에 10명씩 편성하고 조장은 지금까지의 상황의 진전을 잘 알고 있는 시민군들이 맡았다. 새로운 지도부는 학생수습위의 일부 투쟁파, 기존의 청년운동권, 그리고 그 동안의 무장투쟁국면에서 전면으로 부상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54) 이와 같은 상황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항쟁지도부, 즉 수습대책위원회의 권위가 일부 시민군에게는 인정되지 않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인정되는 과도기적 성격이었기 때문이었다.(안종철, 2007a: 347)

어느 날인가 도청수습위원에서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순찰대원을 비롯한, 죽음을 걸고 싸우겠다는 사람들과 함께 도청 본관 2층 수습위원들이 있는 곳으로 쫓아갔다. 우리는 지금 계엄군들이 곧 치고 들어올 판에 무기를 반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수습위원들 앞에 있는 책상을 걷어차 버렸다. 어떤 사람은 수습위원에게 총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으박질렀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한 판국에 책상 앞에서 광주를 군인들에게 그냥 넘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이○○, 현사연, 1990: 496)

하지만, 엮○○ 씨와 박○○ 씨의 경우는 시민들에게 총이 난무할 경우 사태가 더욱 무질서해 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동순찰대를 하기 전까지 무기회수반에 참여하여 광주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기를 회수하였다. 하지만 이들 역시 26일에 기동타격대를 지원함으로써, 무장항쟁의 지속을 선택하였다. 이들이 수습과 무장에 대한 판단이 변화했던 이유는 계엄군의 동태와 협상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판단하기 힘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했던 팀의 결정에 따르는 것 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던 상황 때문이기도 했다. 기동타격대에 편입된 후에도 기동타격대원들의 다수는 항쟁지도부가 누구인지, 타격대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으며, 연락망이 구축된 이후에도 배정받은 지역으로 순찰을 도는 것 외에 지도부와의 긴밀한 의소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두개의 민주주의

왜 다수의 기층민중 출신 시민군들은 항쟁을 적극적으로 선택했는가? 그리고, 다수의 학생 및 지식인들은 수습과 타협의 길을 선택했는가? 결과적으로 두 집단은 항쟁에 대한 서로 다른 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5월민중항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었지만 항쟁 기간 동안 두개의 민주주의가 존재했다.(최정운, 1999) 박남선의 글에서처럼 일반적인 광주시민들은 '고향을 우리 손으로 지킨다'라는 향토방위의 마음으로 항쟁에 참여하였다. 항쟁 참여자 다수는 계엄군의 학살이 시작되면서 광주를 현실적인 '우리나라', '민족'의 모습으로 받아들였고, 광주 공동체는 또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최정운, 1999)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적에 맞서 '나라'를 수호하고 투쟁하는 것이었다. 한편 수습을 주장했던 다수 지식인들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정치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상상했지만,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러한 이념으로 설명해 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실제로 무장한 민중들의 폭발적 확산이 전

남도내 일원으로 확산되고 있던 21일 오후, 윤상원, 정상용, 이양현, 윤강욱, 정해직 등 나중에 최후의 투쟁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는 인물들인 광주 청년학생운동권은 ‘혁명적 낙관주의’가 아니라 ‘비관적 현실주의’에 머물러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현 상황은 (중략) 조직적인 역량의 미성숙 상태에서의 표면적인 정치운동에 불과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봉기의 한계를 미리 설정하고 따라서 자신들의 역할도 방관자로 규정했다. ‘민중언론’으로서의 지하선전 작업을 끈질기게 벌였던 윤상원을 제외하고는 이들 모두 23일에 이르기까지 과거 ‘사건’이 있으면 늘 그랬던 것처럼 잠적하거나 개인적 수준의 봉기의 조류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었다.(김창진, 2007: 174)

한편 ‘광주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죽음과 피의 대가가 불가피한 것이었고, 또 다시 누군가의 죽음과 피를 불러내는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다수의 시민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쟁기간 동안 죽어간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즉 죽음에 처한 시민들의 운명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즉, 수습과는 신군부의 정치전략, 미국의 태도, 민주화운동세력의 역량, 국민적 여론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항쟁의 가능성을 짐작했다면, 기층민중들은 성공가능성에 대한 판단보다, 실천적인 도덕 감정에 기반하여 행동을 선택하였다. 이들에게 인간의 도리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학살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며, 광주시민들이 항쟁기간 동안 당했던 수치와 모욕을 되갚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죽은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결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의 승리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기층민중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억압과 멸시의 일상 속에서 분노와 피해의식 그리고 박탈감 등의 생활세계의 체험들에 기반해 계엄군의 만행과 인간 파괴의 현장을 자신의 문제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감정을 광주시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분노와 수치심의 감정을 집단적인 감정으로 형성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계급적인 자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나름의 규범과 신념의 체계를 바탕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을 선택하였다.(최정운, 1999) 기동타격대의 경우 ‘청년으로서의 도리’, ‘군인으로서의 도리’, ‘건설로로서의 도리’는 이들에게 순수한 도덕성과 의협심, 상호부조, 형제애 등의 감정으로 느껴지게 되면서 항쟁을 통해 새로운 가치로 확장되었다. 이들은 학생들이 제공해준 ‘독재타도, 계엄철폐, 민주주의 쟁취’라는 슬로건을 외쳤지만 이것은 앞서 말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이웃과 우리의 고향’, ‘죽음을 걸고서라도 죽은 사람들의 넋을 달래야만 했던’

광주시민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상징적 도구였을 뿐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한 몸에 받았던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시민군과 시민의 일체감은 최후항전에 이르기까지 '진짜움'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었던 중요한 체험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인정의 경험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졌다. 평상시 이들이 할 수 있는 정치행위는 투표하고, 연설에 박수쳐 주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었고, 그마저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항쟁에서 자신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정치공간에 참여하는 주인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리고 항쟁의 기간 동안 이들의 의식은 다른 계층들과의 교류를 통해 급격히 성장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총을 들고 상황을 주도해가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등장하였고, 펜을 든 사람들과 대항하거나, 이들에게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것이 기층민중들이 항쟁에 참여하면서 느끼게 된 '민주주의'였다. 즉, 최후항전 참가자들은 항쟁기간 동안 적극적인 무장과 항쟁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사회적 인정을 획득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로 묶이게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항쟁체험을 통해 죽음과 피로 '민주주의'를 체험했던 사람들과 사상과 이념, 정치적 지식을 통해 '민주주의'를 인식했던 사람들의 선택이 통합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4) 최후항전: “죽음과 피의 체험”

26일 오후 11시 군의 최후통첩을 받은 도청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분주했다. 항쟁 지도부는 군의 진입에 대비해 도청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떠날 것을 권고하고, 나이 어린 학생, 노약자, 여성 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잔류한 사람들에게 총을 나누어 주고 총 쏘는 법을 가르쳤고, 지도부인 윤상원은 비장한 심정으로 “우리가 저들의 총탄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패배하지만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라는 연설로 결의를 다졌다. 한편 박남선 상황실장의 지휘 하에 시내 일원에 기동타격대가 배치되고, 지도부는 시 외곽 전투 상황을 점검하는 등 결사항전에 대비했다.⁵⁵⁾

55) 기동타격대 배치 상황을 살펴보면, 계림국고 30여 명, 유동 삼거리 10여 명, 덕림산 20여 명, 전일빌딩 40여 명, 전남대 병권 옥상 병력 수 미상, 서방시장 병력 수 미상, 학동·지원동·학운동 30여명(지역방위대), 광주공원 병력 수 미상, YWCA 20명 등이다. 시 외곽에는 규모 미상의 외곽 방위 병력이 있었고, 도청에는 200~500여 명이 있었다. (최영태 외, 2009)

5월민중항쟁 기간은 죽음과 대면하고 피를 보면서 지내야 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최후항전이 있던 27일에 도청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죽음을 초월한 자신들의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27일 새벽까지 피신하지 않고 목숨을 걸었는가? 이들의 구술을 통해 이를 살펴보면, 최후항전까지 가게 된 계기는 “지켜야 될 것 같았다”처럼 비교적 단순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해석되기 쉽지 않다. 김○○ 씨는 26일 저녁까지도 “군인들이 그렇게 치고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그 당시에 수습위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청은 저희(우리)가 사수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인식하게 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한다. (김○○; 5·18기념재단, 2007c)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당시 기동타격대를 포함한 사람들 중 일부가 최후항전에 잔류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보의 부재’, ‘계엄군의 현실적인 힘과 의지에 대한 판단의 미숙함 혹은 순진함’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죽음’을 결의했으나 ‘죽음’의 현실감을 체감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기에 27일 새벽에는 잠을 청한 시민군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이들이 ‘죽음’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기동타격대원들에게는 오히려 항쟁기간 동안 형성된 감정들, 즉 ‘나의 삶과 죽음’이 ‘공동체의 삶과 죽음’으로 받아들여진 것과, 따라서 ‘나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부심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 최후항전 참여에 대해 결의할 수 있는 계기였다. 이들이 열흘간 몸으로 느낀 죽음-분노-정의-공동체-인간-삶-헌신-정의-진실과 같은 단어들은 아마도 평생에 한 번도 그만큼의 깊이로 느껴 본 적이 없었던 단어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단어들이 조합되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최후항전과 죽음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을 택함으로써 평생에 ‘내 것이 아니었던’, 민족과 공동체를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잔류한 무장세력은 어림잡아 500명 정도였다.⁵⁶⁾ 군의 이른바 ‘폭도소탕작전’은 8개의 진입로를 통한, 2만여 명 이상의 정규군과 특전사 부대, 탱크와 헬기 등 각종 장비가 동원된 대규모 군사작전이었다. 5월 27일 새벽 3시 경 군의 작전 개시와 더불어 이를 알리는 항쟁 지도부의 가두방송이 시작됐다.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모두 나와 계엄군을 저지합시

56) 그러나 27일 군의 진압 작전에 대응해 싸운 사람들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도청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도 군 자료가 폐기됨에 따라 정확한 숫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27일 도청에서의 사망자 수를 참가자들은 60-70명으로 보고 있으며, 체포·연행된 사람은 계엄사에 의하면 195명이다.

다.” 외곽 지역에 배치된 무장시위대로부터 군의 진입 상황을 알리는 보고가 도청으로 쉴 새 없이 들어왔다. 진압부대는 예상과 달리 도청 뒷담을 넘어 들어와, 배치된 정문을 향해 접전을 벌이는 저항세력에 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진압했다. 이보다 조금 늦게 계엄군은 YWCA로 진입해 문화선전조, 고교생, 근로자 등을 공격하고 체포했다. 저항세력은 오전 5시 30분경에 모두 제압당함으로써 열흘 간의 항쟁은 막을 내렸다. 김○○ 씨가 최후항전 당시의 사건들 가운데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도청에 머물렀던 시민군들 중에서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항쟁 이후에 생사도 확인할 수 없었던 행방불명자들이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뒤에 저기 보면은 뒤로, 뒤로 다 수갑을 채웠던지 묶었던지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묶어서 2층 복도에 얽드려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광~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중략) 2층에서 분명히 도망가고 나가는 사람이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었는데, 저희가 1층에 내려왔을 때는 거의 피자국 하나도 바닥에 없는 깨~끗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80년 이후로도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당시에 도청에서 27일 상황은 사망자 수가 더 많다’, 이렇게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중략) 사람이 도청에 당시에 있었던 수에서 많이 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 사망한 시체는 어디론가 증발했다. 인제 그런 것까지도 아직 진실이 안 밝혀지고 있죠. 저는 지금도 그러한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된다.(김○○: 3-4)

박○○ 씨는 진압 시 목에 총을 맞고 피를 흘렸던 느낌과 강○○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하려고 군인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일을 항쟁체험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총을 맞았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무~ 그 소리도 안들리고,(눈시울이 붉어짐) 침에 멍했는데, 아 죽었구나하는 생각도 들고, 피가 쭉 나오는데, 광~장히 뜨겁더라고 내 피가. 그래서 우선 그… 그 평생 진짜 그 내 은인인 강○○라는 애가, 사실 겁나잖아요, 사람이 총을 맞고 쓰러진 걸 보면, 근데 살려야 된다고 끝까지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라고, 안된다고. 처음에는 나를 이렇게 들쳐 메고 도망을 갔어요. 갔는데, 어느 집인가가 그 때 숨어서 피하는데, (낮은 목소리로) 그 때 인제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니까 이제 불안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군인들 그 군화소리, 팍~ 그러면서 부르더라고, 잘못하면 지도 죽잖아요. 나는 어차피 인제 총 맞았으니까 놔두고 가야되는데, (xxx) 우리 친구 총 맞았다고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둘 다 잡혔죠. (중략) 우리 친구 총 맞았으니까 앰블런스 좀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인제 군인들한테 잡혔는데(박○○: 7)

그는 목에서 솟아오르는 붉은 피를 느끼며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실감했다. 그리고 무차별한 사격으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죽음’보다 ‘타인의 죽음’을 먼저 생각했던 강○○ 씨에 대한 기억은 현재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그는 나중에 상무대에서 ‘강○○’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예수” 같았다고 회고한다. 최○○ 씨 역시도 진압 당시 옆의 동지의 몸에서 솟아오르는 피가 자신의 몸에 닿는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순간은 그에게 “더 이상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죽음과 삶에 대한 경계가 없어” 졌던 순간이었다.

사람이 총알 맞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눈을 감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못 알아 들어도 눈을 껌벅껌벅하고 피가 솟구치는 거죠. 그 피가 이렇게 내 몸에 와 닿아요. (중략) 그 때까지만 해도 솔직한 심정에서 어떻게든 해 가지고 살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친구가 죽고 나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죽음과 삶이란 생각은 없어요. (중략) 그 피가 내 몸에 적셨을 때, 지금까지 내가 5·18을 견디게 하는 원천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나타나거든요. 그 꿈이(최○○: 5·18기념재단, 2007c)

이처럼 기동타격대를 포함해 도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섰고, 최후항전 당시의 생명-죽음-붉은 피-계엄군의 무차별한 사격 등의 기억이 현재까지도 변치 않는 심상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체험은 항쟁 이후 이들의 삶을 뒤바꾸어 놓았던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3. 5월민중항쟁 이후: 상무대 영창생활

도청 최후항전이 진압당한 후, 5월 27일 아침부터의 시간은 기동타격대에게 항쟁 당시에 느꼈던 환희와 열광의 시간에서 현실의 억압과 구속의 시간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이들은 곧장 상무대로 이송되면서 더 이상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없었고, 국가기관은 언어적 폭력을 동반한 고문과 구타를 자행하여, 이들의 몸과 정신을 파괴했다. 그 결과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의 격렬한 체험과 기억을 되새길 겨를도 없이 일방적으로 봉쇄당했다.

1) 인권유린의 감옥: “특A급 낙인과 개돼지보다 못한 생활”

(1) 상무대로의 이송: “열광의 시간에서 현실의 시간으로”

도청 항쟁이 끝나고 박○○ 씨가 눈을 뜬 것은 병원에서였고, 항쟁 당시와 달리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자신에게 닥쳐올 형벌과 고난에 대한 현실감이었다. 열광 속에서 항쟁이 막을 내린 뒤 다수의 기동타격대원은 현실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싸움은 집단적인 것이었으나 죽음은 개인적으로 찾아왔고”(황석영, 1985), 싸움이 끝난 뒤 대원들은 고립된 채 혼자만의 힘으로 생존의 방법을 찾아야 했다. 따라서 많은 대원들은 생존을 위해 군복을 벗어던지거나, 기동타격대원다는 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다시 눈 떠보니까 죽음보다 무서운 게, 당할 일이 더 무서운 거예요. (중략) 저 역시도 처음에는 기동타격대라는 걸 숨기고, 이제는 살아야 겠다 차라리 죽는 거보다는, 형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기동타격대를 숨기고, “도청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고 있는데 “기동타격대 조장 박○○ 나와” 그러는 거예요.(박○○: 7)

박○○ 씨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 기동타격대 조장임이 밝혀졌고, 목의 총상이 아물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강제퇴원을 당하고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는 몸이 성치 않은 상황에서 기동타격대 대부분이 그랬듯이 잔혹한 고문과 구타를 받았다. 이○○ 씨는 당시 군인신분이었기 때문에, 기동타격대 활동을 숨기하고자 했으나, 그 역시 1조 조장임이 밝혀져 더욱 가혹한 고문과 구타를 당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기동타격대원들은 항쟁에서 참여했던 일을 솔직하게 진술하기도 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구타와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2) ‘특A급’, ‘순악질’에 대한 가혹한 고문

상무대로 이송되면서 구속자들은 “개돼지보다 더 못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불의에 저항한 대가는 가혹하고 잔인했다. 상무대 영창에서는 30명이 적정 수용 인원인 공간에 100여명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리를 겹쳐서 자야 했으며, 7개월 간 제대로 씻지 못해, 피부병에 시달렸고, 소량의 저질 음식을 배급받았다. 김○○ 씨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서였는지 6월 초여름이었는데도 당시를 무척 춥게 지냈던 것으로 기억했다.

상무대 영창, 상무대 연병장에 가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옷 다 벗고 신발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황에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구타, (xxx) 시작되고, 지금 영창으로 들어왔는데, 영창에 끌려간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개돼지보다 더 못한... (중략) 그런데다 저녁에 잠자리는 뭐, 잠을 자면은 온전하게 누워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있으면 서로 가랑이를 끼고 자는 거예요. 포개서 잘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랑이를 끼고 모포 한 장 갖고, 여섯 명 여덟 명 씩 덮고 자는 거예요. 모포 한장을 이렇게 끼면은, 배 있는 데로만 덮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5월 달 되면은 덥잖아요. 더군다나 6월 달, 우리가 5월 27일 날 잡혀갔으니까, 바로 6월 달 되고 그랬으니까, 덥죠. 요즘 같으면은, 근데 그 당시는 그 6월 달이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담배 피심) (김○○: 5)

많은 구속자들은 내란폭도 집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건조작에 휘말려 각종 고문과 구타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견디다 못한 몇몇 사람들은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다. 기동타격대는 핵심적인 폭도집단으로 몰리면서 온갖 악질적인 종류의 고문에 시달렸다. 구타는 교도관이 죄수를 대하는 기본적인 언어였고, 그 밖에 물고문, 전기고문, 송곳으로 손톱 및 찌르기, 손각지에 불펜 넣고 돌리기, 개미고문, 고춧가루 물고문 등 악랄한 고문에 의해 육체와 정신이 파괴되었다. 김○○ 씨는 5개월간 상무대 영창에 있으면서 11번을 병원에 실려 가야 했으며, 박○○ 씨는 목의 총상이 채 아물지도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남들과 똑같이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 김○○ 씨는 당시 고문 중에서 개미고문을 아직도 잊히지 않는 고통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석방 이후에도 악몽에 시달렸다.

당시 상무대에는 포플러 나무가, 이렇게 큰 포플러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포플러 나무 밑에는 개미가, 왕개미가 있어요. 당시 군용 사각팬티만 입힌 상태에서 다리 묶어 놓고 뒤로 수갑 채워서, 나무 밑에 엎드려 놓고 지휘봉으로 개미굴을 이렇게 건드렸어. 개미가 수 백 마리 몸 속, 몸으로 올라와서 기어 다니고 물고, 개미도 상당히 그 무는 것은, 두드려 맞고 하는 것은, 무는 것은 아픈 자체는 고통 자체는 이제 이력이 나 가지고 참아져요. 근데, 이 위로 어디로 수백 마리가 막 개미가, 그 소름은 이루 지금도 진짜 표현하기가...(김○○: 6)

또한 기동타격대는 ‘특A급’, ‘순악질’ ‘극렬분자’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육체적인 가학행위는 물론 빨갱이 낙인과 온갖 비인간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이 빨갱이 새끼들! 너희들은 총알도 아까우니까 대검으로 쏘서 죽여야 돼(현사연, 1990: 490)

빨간 매직으로, 그때는 인자 우리 사복은 배껴 부렸고, 군 메리야스하고 팬티 줬으니까, 군 메리야스 우에다가 여름이니까 군 메리야스만 입잖아요. '순악질' 이라고 써놔 분 거예요, 매직으로, '순악질' 써노은(써놓으면), 그러면 이 조사실에 가나, 이 조사실에 가나 두드려 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근게 그 (xxx) 안 잊어 먹는 형사가 있어. 아~주 독종이여, 김○○ 씨라고, 우작나게 많이 맞었죠... 짝지 돌려 불고, 연필 같은 거 넣고 쥐고 돌려보면 오줌 싸부러요. 이렇게.(염○○차: 3)

고문과 구타는 1) 타격대 조직의 구성원을 파악하기 위해, 2) 방화, 탈취, 강도, 강간, 살상 등 죄목을 가중시켜 '무장폭도집단'을 만들기 위해, 3) '내란부화 수행'을 했다는 자백을 받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행동이나 범죄행위를 들이대며, 자백을 강요하고 모욕감을 주었다.

이 친구가 엄~청난 고문과 구타를 당했어요. "왜 다섯 명, 여섯 명 되는 한 조가 그렇게 되는데 왜 너 혼자 밖에 없느냐?", "누구나, 너그 조장은 누구냐? 빨리 밝혀라" 고문하고 두드려 패서 영창에 와서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눈을 마주못치죠 인자, 그렇게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결국 이 친구가 못 버티고 저를 분 거예요, 저를 지명을 하고 이제 "우리 조장이야", 사실은 조장도 아니었거든요, 조원인데, "조장이야" 이제 거기서부터 저는 만~신창이가 되기 시작하죠, 아침에 불러나가 걸어나가면은 저녁 때 되면 들것에 실려 오고.(김○○: 6)

영창 안으로 들어간 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조사하기 전에 한바탕 때리고 난 후 조사를 했다. 조사내용은 매우 유치했다. "너 가시내들 몇 명 겁탈했어?", "김대중에게서 돈을 얼마 받았냐?", "사람을 몇 명 죽이고 도둑질은 얼마나 했냐?" 이것들을 부인하면 장작개비로 온몸을 내리쳤다.(염○○: 현사연, 1990: 493)

또한, 가혹한 고문을 당해 실성하여 애국가를 부르는 등 정신이상 증세가 온 사람에 대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한 독거실에 격리시켜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5·18기념재단, 2007c) 수감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식을 하거나, 돌발적으로 교도관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항의행동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행동은 더욱 잔인한 보복으로 돌아왔다. 기동타격대원들은 20-30년이 지난 뒤에도 악랄하게 괴롭히기로 소문난 형사과장 '박○○'라는 이름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다.

이처럼 상무대는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사람이 하나 죽어나가도 누가 알 수 없는” 인권유린의 감옥이었으며, ‘감옥 속의 감옥’이었다.(김○○: 7)

2) 대학생과의 교류 및 갈등: “면회 차별, 담배 차별”

항쟁 당시에도 기동타격대는 대학생이나 지식인 계층과 대면하거나 교류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항쟁기간 동안에도 시민군들은 동료들과 팀을 짜서 곳곳을 돌아다녔고, 5월 25일 투쟁지도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노동자 출신 시민군과 대학생 시민군은 따로 배속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무대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노동자와 학생들은 많은 교류를 하게 되어, 서로 배우면서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나○○ 씨는 학생들에 대해 “공동체 의식이나 생활을 파괴하는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느끼고 불신과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나○○; 현사연, 1990: 484) 강○○ 씨는 학생들과 갈등도 많았지만, ‘노동삼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 도움이 많이 되었던 생활로 기억한다. 이○○ 씨는 감옥에서 가장 “알밋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학생들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되었고 ‘의식화’가 되어 갔다.

학생들은 각자의 환경이 어느 정도 좋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우리들보다 훨씬 잘 먹었다. 우리가 먹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가 감방에서 주는 2인 1그릇 씩 지급되는 식기에 담겨진 적은 양의 밥과 저질의 반찬이 고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사식이 들어와도 나눠먹을 줄을 몰랐다. 그래서 많은 갈등을 낳았다. (중략) 학생들은 거의가 예비검속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조사는 간단하게 끝나버려 학생들이 우리들에 대한 조사를 함께 의논해 주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얘기들 속에서 ‘의식화’가 되어갔다. 그동안 사회문제에 대해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부분들을 점차 문제의식을 가지고 느끼게 된 것이다. (이○○; 현사연, 1990: 499)

최○○ 씨의 경우 음식, 담배, 면회 등 사소한 일상에서도 학생들과 달리 차별받았던 것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5·18 이전에 예비검속되었던 부류, 항쟁 당시 구속된 부류, 항쟁 이후 검거된 부류가 있었는데, 주로 예비검속과 항쟁 후 검거로 들어온 학생과 교수들은 다른 방을 사용하였다고 한다.⁵⁷⁾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57) 상무대 영창은 부채꼴 모양의 건물인데, 그 안에는 중앙으로부터 부챗살 모양으로 나뉜진 6개 방(소대)이 있었다. 한 개 소대는 교도관이 사용하였고, 2, 3소대는 주로 항쟁 전후에 잡혀온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면회를 할 수 있었고 담배도 반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항쟁 당시 검거된 노동자층은 7-9개월 간 면회 한번 제대로 해 보지 못했다.(최○○; 전남대학교5·18 연구소, 2003a) 이처럼 노동자와 학생들 간의 만남은 계급차별적인 사회적 조건에 대해 경험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로 다른 계층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것은 상호 간의 배움과 함께 갈등의 출발이 되기도 했으며 석방 이후 5월운동 과정에서도 지속되었다.

3) 부모의 고통: “시체를 찾아 맨발로 산을 헤매고”

이처럼 상무대에서 면회조차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던 기동타격대의 부모들은 모두 자식의 생사여부도 모른 채 병원 응급실, 영안실, 암매장 되어 있던 곳, 심지어 산을 넘어 다니며 아들의 시체를 찾으러 다녔다. 기동타격대원들은 수감생활의 경험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할 방법도 찾지 못했고, 기회가 있어도 요령 있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 씨와 염○○ 씨는 자식을 찾아다니면서 겪었던 부모들의 슬픔과 고통을 뼈아픈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나와서 인자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어머니가 그럴~게 나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덩기면서, 아버지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불고, (중략)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내 송장 못 찾으니까, 남의(남의) 송장 갖다가 물어 놓고, 죽었다고 인자 해불고, 처리해 불고... 영창에 있으면서도 엽서(?)를 쓰라 해 갖고, 인자 그런 것들을 쓰고 했는데, 집에 도달이 안 되어분께, 검색(58)을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인자 (xxx) 일만하고 살았지 그런 것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너무 두드려 맞고, 고문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자세히 쓰니까 안 보내 줘분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크게 떨리는 한숨) (중략) 맨발로 그렇게 산을 넘어 덩기면서, 그러면서 남의 송장 갖다 물어 놓고, 그러면서 (xxx) 아 이거 나 생각만 하면 미치겠어.(염○○2차: 5)

염○○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체를 찾아다니고, 징역살이를 지켜본 충격으로 얼마 후 돌아가셨다. 김○○ 씨의 부모도 아들이 구형10년을 선고받았다는 충격으로 고통에 시달렸다. 기동타격대원은 대부분 상무대에 있는 몇 개월 동안, 생사여부를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없었고, 부모들은 자식의 시체를 찾아 헤매고 다녔다. 불의에

하지만, 다른 몇 개의 소대에는 교수들과 노동자들이 한방에서 섞여 생활하기도 하였다.

58) 상무대에서 구술자가 부모님께 쓴 엽서의 내용을 검열하여 보내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임.

대한 저항의 대가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들에게도 고스란히 고통으로 돌아온 것이다.

4) 석방 직후의 생활: “5·18이 망각된 시간”

계엄사령부는 80년 9월5일, 연행자들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174명 기소유예, 175명 내란 및 포고령 위반으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 2160명을 훈방 조치하겠다는 것이었다. 10월 25일에는 ‘관련자’ 225명에 대한 선거공판이 개최되었고, 핵심 주동자 5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11명에 10-20년 징역형, 152명에 10-5년 징역형, 80명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황석영, 1985) 기동타격대는 대부분 장기 7년, 단기 5년 실형을 받았고, 선고공판에서는 3년 전후의 구형을 받았다.⁵⁹⁾ 10월 30일에는 88명에게는 형집행정지, 16명에게는 감형조치가 있었다. 이 때 박○○ 씨, 김○○ 씨, 강○○ 씨, 엄○○ 씨 등이 석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81년 3월 3일에 이○○ 씨 등 176명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고, 1982년 12월 25일까지 5월민중항쟁으로 구속된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었다.

이들은 석방되기 전에 모두 상무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발설을 금지하는 정신교육을 받았고, 이를 통해 발설하는 즉시 구속된다는 위협과 석방 직후 감시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김○○ 씨의 구술내용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몽을 다시 꾸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석방 직후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고통을 이야기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광주교도소에서 나와서 다시 상무대로 갔어요. 상무대를 가서 교회를 가서 교회 강당에다가 석방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지그들의 만행을 밖으로 유포되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풀어주긴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육이, 핵심이 “여기에서 있었던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부모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너희들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는 다시 너희는 잡혀 온다” 몇 개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몽을 다시 꾸고 싶은 생각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가지고도 몸이 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도,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고,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김○○: 8)

이는 자연스럽게 항쟁 당시의 기억과 상무대 생활을 무의식적으로 망각하게 되는

59) 기동타격대 대장 윤석루 씨는 무기징역, 부대장 이재호 씨는 15년을 선고받았다.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비단 정신교육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들에게 항쟁과 고문의 기억을 나누고 치유 받을 기회는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의 기억을 잊어야만 오히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80년대 초반에는 국가적 제도적 차원에서 항쟁의 사실 자체가 거론될 수 없었고, 5·18참여 자체가 “빨갱이” 낙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망각’은 생존을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박○○ 씨는 항쟁 직후 몇 년간을 ‘5·18이 사라진 시간’으로 기억한다. 박○○ 씨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항쟁의 참상과 총상 및 병원생활, 상무대에서의 고문구타 등 5·18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머리에서 깨끗이 지워져” 버렸다. 그리고 81년 1월부터는 일상적인 노동과 가족의 시간이었던 80년 5월 17일 이전의 생애사의 연장선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는 비단 박○○ 씨만이 아니라 광주시민들 다수가 겪었던 집단적 망각의 상태였다. 박○○ 씨는 2-3년간은 5·18과 무관한 평소의 삶으로 돌아갔고, 평소에 하던 음악실 DJ 일 등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충실하였고, 82년에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다.

우리가 나오면서 훈련을 그렇게 받았고, “잊어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그랬을 거예요. 아마 81년도까지는 그 누구도 광주에서 5·18이 일어났는 생각을 안했을 거예요.(중략) 나도 진짜 81년도에 5·18에 대해서 이만큼도 생각이 안 났어, 아니 81년도가 아니라 83년까지 그랬어. 진짜 아~무 생각도 안했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교도소에 갔다 왔다는 것도 생각이 안나고, (큰 목소리로)내가 상처, 총 맞았다는 생각도 진짜 아예 머리에서 깨끗이 지워져 버렸으니까. 그 80년 5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가 없어요. 그냥, 공간이에요 공간. 그냥 5월18일부터 81년 그렇게 딱 연결 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산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것만이 통째로 딱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렇게 이어졌어요, 이어져, 그러니까 80년 5월 4월, 아니 5월 17일 그다음에 1981년 1월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대~로 음악하고 (중략) (만: 다른 분들도 그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큰 소리로) 글썄, 거의 사람들을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가지고 82년에 결혼을 하고... (박○○: 10)

염○○ 씨의 경우도 석방 이후, 상무대의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5월의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 81년 초에 서울로 올라간다. 그는 “광주가 싫어져서” 서울에 가서 모든 것을 잊고 생업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세월이... 우리가 다섯 달 있다 나왔다, 12월 달에 나왔는가, 나와가지고 인자, 일단 나오니까, 그 때가 30일 날인가 될 거예요, 내가 화순 도곡이니까, 능주 장날이었어 그날이, 집에를, 나와서 집에를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면회 갈라고 갔다 그러드라고, 그래서 장에 들어가니까 뒷모습이 꼭 어머니 같애, 장 안에서 그 많은 데서, 어머니가 나한테 올라고 시장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인자... 광주가 인자 싫어지는 거죠 인자, 광주가 싫어지고, 그래서 상경을 허쥌,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염○○차: 3)

한편 나○○ 씨는 10월 30일에 석방된 이후, 마음을 정리할 여유를 갖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고 81년 봄에 다시 광주로 왔다. 하지만, 사면 및 복권장이 날아들자, 이에 대한 적개심과 반발심이 생겨나고 살고 싶다는 의욕이 사라져, 음독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나○○; 현사연, 1990: 485) 한○○ 씨의 경우도 취직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5·18에 대해 발설할 수 없는 답답함과 폭도라는 누명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고문후유증으로 앓아 누워 있다가 두 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한○○; 현사연, 1990: 511)

요컨대, 기동타격대에게 상무대에서의 생활은 항쟁체험의 모든 기억이 봉쇄당하는 폭력적 현실이었다. 또한 이들은 육체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굴종할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생존과정에 익숙해져야 했고, 그 속에서 느낀 모욕감과 수치심은 이들의 정신을 망가뜨렸다. 이들은 항쟁체험이 낙인과 언어의 파괴로 마무리됨에 따라 80년의 모든 기억을 일시적으로 망각하게 되거나, 트라우마 증상으로 표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망각의 시간이 계속되지는 않았다. 80년의 체험과 기억은 5월투쟁을 통해 표현되면서 격렬한 저항으로 나타났다.

4. 80년대: 5월투쟁의 전개과정

1) 감시와 탄압의 시절: “미행과 납치의 일상”

정부는 기동타격대를 내란에 동조한 폭도 집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타격대원들은 석방 후에도 일상적인 감시상태에 놓여 있었다.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생활터전을 잡을지라도 정보과 형사들은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매일매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염○○ 씨는 85년까지 5·18과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고, 서울에 홀로 올라와 오로지 생업에 종사했지만, 매일매일 형사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염○○ 씨는 그 당시 생업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큰 마찰이 없었고 나중에는 정보과 형사와 “형 동생처럼” 지내게 되었다.

인자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그 경찰관이 뒤에 붙어서 오는 거요. 감시를 해. 처음에는 몰랐지. 그런데 옆에 계속 있다보니까, 물어보니까 그 안기부 쪽인가 그쪽에서 나와 갖고 (중략) 내가 고열게 한 가지 일을 쭉 하니까, 다른 탈은 없잖아요, 뭐 자기들 인자, 내가 인자 다른 어디 가서 뭐 허고 다닌 것도 아니고 계속 인자 (xxx), 오래까지 자기들이 감시를 하다보니까, 형 동생 가깝게 친해진 거지 뭐, 술 같이 먹고, 술 약하니까 난 (xxx) 자고.(염○○1차: 4)

박○○ 씨 역시도 나주에서 살았지만, 국가 행사나 시위가 있을 때마다, 강제로 원격지로 격리 당했다. 김○○ 씨는 81년도에 섬으로 납치를 당했는데, 형사들은 그를 배를 태워 외딴섬에 내리게 하고 쌀, 성냥개비, 냄비를 담은 꾸러미 하나만 던져 주고 떠나버렸다. 그는 이러한 감시생활을 견디다 못해 “가방도 없이 옷만 걸치고” 대구로 도망을 갔다.

나주에서도 그 관련자라는 소문이 나버려 가지고, 동장이 매일 같이 와요. 매일 같이 와서 조사해 가고, 어느 날 전투환이가 광주에 왔다, 광주 온 거 하고 나 하고 상관없잖아요, 나는 나주 사는데, 그런데 형사들이 와요, 낚시 가자고, “무슨 낚시를 가느냐” “아 그냥 가세요, 부탁 좀 한다” , 안 간다고, 그래도 데리고 가요, 1박2일 간… 왜 그러냐고, 그 때까지만 해도 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각하가 광주 오셨다네” , “그거 하고 나하고 뭐 상관있습니까, 광주 왔다는데 왜 나주에 있는 나를 가지고…” , “시키는 일이라 미안하네” …(박○○: 13)

처음에 81년도인가요, 그 때는 납치를 한번 당했어요, 저기 어디, 외딴 섬에 납치를 당했어요, 혼자. 그래 가지고, 한 달 정도 됐을까, 다시 데리러 왔드라고요, 정보과에서, (중략) 그 때, 쌀하고, 성냥하고 냄비 하나하고 차대기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에서 내리게 해서 던져 주드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최소한에 해 먹을 수 있는 것, 양식은 주고, 나머지는… 공께 죽지 않을 것으로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죽어버리라고 그랬는지, 그렇게 하고, 항상 감시가 따라 붙었어요, 제가 움직이는 데마다 미행을 하고 다녀요. (중략) 제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대구로, 아버님 상 치르고 나 갖고, 근데 한 일주일 만에 엽서가 날라 오드라고요, 어디를 간들 벗어날 수는 없다, 행동 조심할 것.(김○○: 5·18기념재단, 2007c)

2) 5월투쟁: “암매장시체 발굴과 화염병조 활동”

(1) 기동타격대 모임 결성

83년경부터 몇몇 회원의 주도로 ‘기동타격대 모임’ 결성이 시도되었다. 기동타격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80년 항쟁과 상무대의 체험에서 느꼈던 복합적인 감정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동타격대 모임을 통해 80년의 체험을 공유하고 고통을 위로하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었다. 유가족들과 부상자들 역시도 슬픔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각각 81년, 82년 모임을 시작했고, ‘장례투쟁’ 등으로 슬픔을 집단적으로 표현하였다. 구속자들의 경우, 가족들이 모여 각종 대책을 논의하면서 구속자협의회를 결성하였고, 구속자들이 석방된 이후 회합을 거쳐 84년경 구속자협의회가 출범했다.

기동타격대원들은 서로 연락을 취하고 모임을 결성하는 동안 더욱더 경찰의 감시망에 놓이게 되었다.⁶⁰⁾ 이○○ 씨는 83년 경 임시초대회장을 맡고 최초의 모임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각되어 모임 한번 갖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박○○ 씨가 타격대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명의 은인이었던 강○○와 만나게 된 것은 무척 기쁜 일이었지만, 박○○ 씨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강○○를 찾아가자, 강○○ 씨는 “5·18에 구속이 되고”, 그 역시도 경찰의 감시망에 놓이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들은 표면상 ‘운동단체’가 아닌 친목계의 형태로 각지에 있는 대원들과 연락하고 모임을 시도하여, 85년경에는 11명의 대원이 모임 수 있었다. 이 모임은 죽음, 고문·구타 등 트라우마를 함께 체험하고, 단결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임을 통해 기동타격대는 가족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기동타격대는 구속자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생 및 지식인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84년에 구속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체인 ‘구속자협의회’⁶¹⁾가 결성이 되었고, 87년에는 구속자와 연행자들의 당사자단체인 ‘5·18민중항쟁동지회(오향동)’⁶²⁾가 결성되었다. 기동타격대원들은 구속자 단체에 속하여 활동하면서도, 일부는

60) 80년대에는 구속자뿐만 아니라 투쟁하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원격지 격리, 감시, 연행 등의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이들의 투쟁은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조직적인 단결과 결집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61) 구속자협의회는 유가족과 부상자를 포함시키고, 나아가 노동자, 농민,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5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광범위한 연대는 5·18과 직접 관련이 있지 않은 운동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나간채, 1997)

비타협적인 투쟁을 지향하는 청년들 중심의 '5·18광주의거청년동지회(오청동)'⁶³의 멤버십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당시 '오청동'은 정부의 회유와 협박 및 방해에 맞서 당사자들의 원칙적인 투쟁을 지켜내기 위한, 의연한 '가치합리적' 집단이었다.(나간채, 1997) 또한 광주지역 청년운동의 주요 거점이었던 YWCA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면서 운동가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청년운동은 이전부터 나름의 이념과 이론에 근거한 전략전술을 바탕으로 진행된 조직적 운동이었기 때문에, 기동타격대원들은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5월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인식할 수 있었고,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5월투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2) '가방끈'으로부터의 배움과 소외감

5월투쟁은 80년 이전부터 기반을 지녀온 지역 운동조직 및 재야 지식인들의 주도 하에 시작되었다.⁶⁴ 나○○ 씨는 자살기도 후 아는 선배의 도움으로 전남사회문화연구원, 남동성당의 구속자를 위한 미사 등에 참가하면서, 5월투쟁에 나서게 된다. 나○○, 한○○, 최○○ 씨는 83년대 말 유화국면을 맞아 각종 운동 단체들이 연합하여 창립한 전남민주청년운동협의회(전청협)의 오월분과⁶⁵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이러한 조류 속에서 활동하다가 '오항동'이 결성되면서 더욱더 5월투쟁에 몰입하게 되었다. 운동권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활동은 그동안 이들이 지녀왔던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5·18항쟁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62) '오항동'은 창립 당시 300여명이 참여하였고, 조직구성이 체계적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지역별, 분야별 동지회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인데 분야별 동지회에는 투사회보, 기동타격대, YWCA, 도청항쟁, 80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80년초 선대학교 총학생회동지회가 규정되어 있다. 이 단체는 유가족이나 부상자단체와 달리 연령, 교육정도, 직업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가족이나 부상자회가 주로 기층민중적 성격을 갖는다면, 이 단체는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직업인과 운동의지가 투철한 능동적인 사회운동가가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나간채, 1997)

63) '오청동'은 유족회와 부상자회에 청년부가 조직되면서 이 청년부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1986년 4월 창립되었다. 이들은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교육정도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낮은 기층민중적 성격이 강한 집단이다. 이들은 5월문제를 원초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순수한 시각을 공유했고, 엄격한 가입 조건, 견고한 내적 결함력, 공격적 행동력을 특징으로 하였기에 경찰은 이들을 특공대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나간채, 1997) 기동타격대원들은 나이가 젊고, 행동력과 급진적 시각을 공유하면서 이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많았다.

64) 80년 당시에 광주지역운동의 큰 흐름은 홍남순, 조아라를 비롯한 재야원로 그룹(광주 YWCA, 광주 엠네스티)과 윤상원, 김상운을 중심으로 한 청년운동 그룹(현대문화연구소와 녹두서점), 복직생 및 총학생회 간부들을 필두로 한 학생운동그룹, 카톨릭 노동청년회와 노동야학 중심의 노동운동 및 각 지역의 농민운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공개 활동을 전제하는 조직으로는 청년운동 조직인 전남민청협이 지역운동의 근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지역운동의 연합체 성격의 전남국민연합은 5월 22일에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 부문조직으로는 들불백제야학 같은 노동야학조직과 문화운동조직으로 광대, 운동후원조직인 송백회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김희송, 2009)

65) 이것은 나중에 발전하여 87년 '5·18민중항쟁동지회(오항동)'으로 변화된다.

에 대한 신념 체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 씨에게는 “운명이 바뀐” 첫 번째 계기가 5·18이었다면 “운명이 바뀐” 두 번째 계기는 ‘5·18민중항쟁동지회(오항동)’와의 만남이었다. 그에게 이 시기는 항쟁의 참상, 상해와 고문으로 인한 고통, 범죄자 낙인 등의 잊고 싶었던 “과거가 되살아나”고 “그 덩어리가 통째로 누르기 시작하는” 시기이지만, 그러한 “덩어리”를 극복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5·18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다시 인제... 그 때부터 이제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5·18구속자회, 아니 5·18민중항쟁동지회가 결성될 때부터 시작을... (중략) 거기서부터 운명이 또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과거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5월 18일부터 그 덩어리가 (큰소리로) 통째로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은 목소리로) ‘오항동’ 회원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일상이 없어지고, 5·18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18사람이다’ ‘5·18을 끝까지 해야 된다.’ 실제로 5·18정신이 들어간 건 그때 부터예요. 5월 18일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뭣 때때 싸웠는가, 민주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는가.(박○○: 10)

박○○ 씨는 지역 운동권 인물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5·18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박○○ 씨는 5·18 당시에 느꼈던 항쟁참여의 이유는 소박한 것이었지만, ‘오항동’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5·18정신’을 스스로 부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의무감이 5월투쟁을 지속해 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5월정신’의 의식적인 형성은 박○○ 씨에게는 항쟁체험을 이해하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어딘가 “낯선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도 이러한 ‘의식화’ 과정을 통해 그는 새로운 “의무감”을 지니게 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5월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⁶⁶⁾

구술자: 범죄자가 아닌, ‘나는 5·18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

면담자: 그런 게 좀 어떠셨어요? 그런 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구술자: (큰 소리로) 의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

면담자: 그런... 게 강하셨어요? 아니면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 같은데

66) 하지만, 박○○ 씨에게 이러한 “낯설음”에 대한 느낌은 이후 구술에서 ‘5·18정신’이라는 상징으로부터 자신이 다시 소외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로 확장된다.

구술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운동가 하면은, 정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정신이라는 게,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던 사람이 독립운동가니까, 나는 뭘니까? '5·18을 위해 던졌던 사람', 그 때 당시는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아 5·18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칭찬을 받아야지 욕을 먹으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5·18정신' 을 만든 거죠, '5·18정신이 이거다' 가 아니라, 나는 '5·18 사람' 이니까 행동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 처음에는 5·18 활동이 없었죠, 그냥 정OO 회장이 만들었던, 추구하는 거는 5·18정신 계승이라는 건데, 사실 그 때 당시 나는 '5·18정신' 이 없었잖아요...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계승할 거는 없어도, 그러나 내 자신은 지켜야 된다는 거, '5·18사람' 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어서는 안된다,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는 과정에 처음에 '오항동' 이 그러한 정신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나갔어요. (박OO: 10-11)

하지만, 학생과 노동자의 교류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노동자들에게 지식을 알려주고, 노동자들은 이를 배우는 과정이었다. 5·18에 대한 역사적 판단과 해석의 언어는 학생들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5월민중항쟁에 대한 이념적 언어들 속에서 자신의 체험은 어딘가 모르게 대상화되고, 소외되기도 했다. 박OO 씨는 이러한 소외감을 당시에 학생들이 자신을 “영웅화”를 시켜서 자신의 체험을 과장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⁶⁷⁾

처음에는 저도 내가 무슨 영웅, 일단 학생들이 영웅을 만들어 노니까, “민주의 교과서인 5·18민주화 그 대상자님이 오신다” 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짜 영웅화를 시켜놔요, 나는 영웅이 아니잖아요, 그냥 참석했던 사람이지, ‘정신’ 이 없던, 참석했던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민주정신을 가지고, 대단한 이슈를 가지고 광주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을 만들어 놔요, 사실 나 아무 것도 없어요. (박OO: 17)

이러한 학생들과의 관계 때문에 5월투쟁에서 서로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었고, 기동타격대원들은 주로 행동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OO 씨는 각종 시위와 집회에서 사수대, 화염병조 등 물리적 투쟁을 담당했다. 이OO 씨는 이 당시의 투쟁을 “악쓰러” 다니는 활동이었다고 한다.

67) 하지만, 이러한 구술자의 평가는 현재적 관점 속에서 과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적 관점이란, 5·18 참가자들 중 학력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 ‘출세’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박탈감과 소외감이다. 물론 그 당시에도 그러한 감정이 존재했지만, 구술되어지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감정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나와 있다가 그 때 당시부터 인자, YWCA (웃음) 인자 서서히 들어가면서 아 이게, 운동 그런 개념 인자, 5월운동, 우리는 인자 다른 학생들 같이 뭐 그 운동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5월운동 해서 악쓰러 다닌 것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인자 자꾸, 그 이후로 많이 했었잖아요, 6.29 오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많이 했어요. 많은 싸움들에, 거기에 거의 안 빠지고 타격대들은 많이 나갔죠, 싸움의 경험들도 있고(이○○: 13)

최○○씨는 80년까지 노동자이면서 ‘건달세계’에서 지냈던 사람이었지만, 항쟁 이후 5월투쟁에 결합하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노동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운 사람들’에게 변변히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배우지 못한’ 자신의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독학을 통해 사회과학 이론 및 역사·철학 등을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제가 80년 5·18을 겪고 나서 나가(내가) 그들 앞에 안 질려고 나도 이빨을 좀 키웠어요, 교도소를 좀 가고, 안 질려고,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만 그들한테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내가 심정적으로 이 긴 것 같은데 모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역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나는 출신 성분은 저것이 노동계급, 아니 석공이었던 말이에요, 무식하다, 내가 아무리 그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 놈은 무식한 놈이라고, 그 놈 무식하다, 그 다음에 논리, 그러면은 가서 악쓸 때는 악 써야 되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은 내 성격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는 논리적이야 되요, 그렇게 논리적이기 위해서는 나도 징역 좀 한 번 더 갔다 왔어요, 80년 이후로, 그 3.30 계엄, 아니 개혁 하자고 그래서 나 눈을 부름 찢고 내가 그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나한테는 큰 병이 되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갔다 나와서 보니까 이건 완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최○○: 5·18기념재단, 2007c)

86년도에 감옥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감옥을 갔다왔어요, 감옥에서 하루에 네 시간씩 자고 공부를 했어요, (중략) 1년 6개월을 살면서 하루 네 시간 씩 자면서 제3세계, 1세계, 소련, 중국, 파리 교원 등에 역사공부와 철학공부를 좀 했죠, 혁명사 공부를 하면서 계급적인 부분, 계급성 부분을 감옥 안에서 공부를 좀 했어요.(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3a)

그는 ‘배운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징역살이를 하며 공부했지만, 그 후에도 ‘배운 집단’과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그는 배운 노동자이지만, 배운 집단에도 배우지 못한 집단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딜레마를 겪게 된다. 나○○ 씨는 초기 기동타격대 모임이 결성되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학생

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불신이나 거부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80년대 초반에 이미 항쟁과 상무대 생활에서 학생들의 불신을 지니고 있었던 대원들도 있었다는 것이다.(나○○; 현사연, 1990: 484-485)

(3) “죽은 자들에 대한 연민과 분노”로 나선 5월투쟁

기동타격대가 어느 정도 결집된 이후(88년 전후로 보임) 가장 중점에 두고 활동했던 것은 행방불명자⁶⁸⁾를 찾아내고, 압매장된 시체를 발굴했던 일이었다. 행방불명자를 찾는 활동은 ‘오청동’ 회원들과 기동타격대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86년부터 항쟁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항쟁 시에 행방불명된 사람을 신고받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88년까지 102명이 신청하였고, 이중 32명이 행불자로 인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행방불명자가족회가 출범하기도 하였다. 행불자를 찾기 위한 노력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동타격대원들은 무명열사에 대한 기억이 남다르다. 기동타격대는 최후항전 당시 “죽음과 삶의 경계”를 경험했고, 그 당시 죽어간 동지들이 잊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더욱이 죽었으나 그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무명열사’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자신들은 살아남았고, 존재감을 갖게 되었지만, 항쟁 당시 이름조차 알 수 없었고 항쟁 이후 사망사실조차 인정되지 않았던 다른 대원들에 대한 부채감이 컸다. 기동타격대 6조였던 ‘사무라이’는 박○○ 씨가 계엄군의 총에 맞았을 때, 강○○ 씨와 함께 박○○ 씨를 근처 집에 피신시킨 생명의 은인이었다. 하지만, 항쟁 이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상무대에서도, 5월투쟁에서도, 보상금 수령 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죽었겠죠.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요즘 더욱 사무라이처럼 이름 없이 도청을 지켰던 사람들,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데 물어버린 망월동 묘역의 무명 열사들이 진짜 5·18이라는 생각이 드요. 넘마주의, 부랑아, 이렇게 천시하면서 5·18의 바깥 존재인 것처럼 취급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꼭 기억해야 하지 않겠어요?(한겨레21, 2010)

항쟁 기간 동안에도 행방불명자가 많이 발생되었고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지 않았

68) 항쟁 당시의 행방불명자는 항쟁 당시 소식이 끊기고 사라졌으나 시체나 유골을 찾지 못해, 그 죽음조차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2004년까지 409명이 행방불명자 신청을 하였으나, 70명만이 인정되었다. ‘무명열사’는 항쟁지역에서 시체나 유골이 발견되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지만, 80년 5월 27일 새벽에 발생한 사망자는 현재까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김 ○○ 씨는 27일 새벽에 도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규모와 체포되거나 사망한 사람의 규모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계엄군의 도청 진압 시, 계엄군의 발포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던 도청 정문 앞이 몇 시간 뒤에는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27일의 사망자에 대해 현재까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기동타격대원들은 구망월동 묘지와 의 인연도 남다르다. 구망월동 묘지는 초창기에는 유족들이 자식과 형제를 잃은 슬픔을 집단적으로 위로하고 나누는 공간이었다. 기동타격대원들은 유족들과 함께 장례투쟁에 동참했고,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과 부모의 자식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이를 위해 망월동 묘지에서 추가로 발굴되는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축대를 쌓거나 묘지를 확장하고, 석조탑을 쌓는 등 망월동 묘지 관리에 앞장섰다. 이는 자연스럽게 90년 전후로 연이어 발생한 각지의 열사들을 망월동 묘지에 안장하는 작업들로 이어졌다.

한편, 기동타격대원들은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사수대의 역할을 주도하였다. 특히 87년부터 격렬한 시위가 각지에서 진행되었을 때, 기동타격대원들은 여러차례 ‘상경투쟁’에 참가하여 ‘화염병조’의 역할을 하였고, 최전선에서 공권력에 대항해 공세적으로 싸웠다. 이들에게 국가폭력과 군경을 향한 적대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80년 당시에 겪었던 공수부대, 교도관, 정보과 형사의 폭행과 학대에 대한 분노는 씻을 수 없는 것이었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그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상 속에서 이들은 그저 동네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전두환’, ‘이순자’의 영상을 내보내는 TV를 부수는 방식으로 밖에 트라우마를 표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인자 집에서 날마다 술로 살았죠, 술로 살고, 막 대부분 데모 때 하던 거시기 노래 부르고 구호 외치고, 운양동에서 그래 갖고 파출소 가서 책상 엮어붙고 소장하고 같이, 강 같이 뒤에 가서 뺨도 때려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차라리 집어 넣어 불라고 (중략) 이제 몸은 아프고 그 때 일도 못 이저든께(못 잊어버리니까) 날마나 술로 인자, 외상 술 먹고, 어머니는 그 때 당시 아버님이란 섬에 계셨었어요, 켄트 생활 하셨는데 어머니 올라오셔가지고 외상값, 술값 다 갚아 주고, (중략) 경찰 뺏지만 봐도 쫓아가요, 죽인다고, TV에서 뉴스만 나와도요, 9시 뉴스만 이런 것만 나와도 텔레비 던져볼라 해요. (중략) 그래 인자, 일반 시민들하고 싸움들은 안했어요. 근데 좀 거시기 하면 화풀이 할 데는 없고 근게 웬만하면 파출소 가서, (주변인: 그 때 전두환씨 대통령 할 때 뉴스 이런 거

못 봐요, 그런 뉴스에 그런 것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때는 뭐 이순자 그런 거 많이 나오면 그걸 못 봐요, ‘저것들’ 하면서 티비가 아주 만만한 대상감이었지.) 얼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활했지. (웃음) (남○○: 5·18기념재단, 2007c)

따라서 이들에게 주어진 사수대와 화염병조의 역할은 80년 당시의 울분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표현할 수 있는 해방구이기도 했을 것이다. 따라서 80년대에 이들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사비를 들여서 활동금을 마련하거나 직접 돌아다니며 모금을 해서 화염병을 손수 마련하는 등 헌신적으로 5월투쟁에 참여했다.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이러한 노력은 집을 팔고, 이혼을 당하고, 쫓겨 다니는 극도로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들에게 그것은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열정적이고, 보람된 일로 기억되고 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진상위원회에 박○○라는 이름도 없고, 그래도 나는 ‘그 일을 했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나는 (작은 목소리로) 좋아요, ○○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박○○: 47)

87년의 전국적인 민주화 투쟁은 광주에서는 더욱 뜨거웠다.⁶⁹⁾ 80년 5월 이후 도청까지 행진하는 시위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감시와 탄압이 여전했음에도 수많은 금남로의 상가와 시민들이 협조해 주었고, 화염병 제조를 위해 부유층의 경우도 차에 기름을 넣고, 그것을 몰래 전달해 주는 등 80년 5월민중항쟁의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났다. 광주시민들에게 87년의 투쟁은 미완의 80년 5월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88년의 대선국면은 광주출신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지지활동으로 나타난다. 이○○ 씨의 경우 5·18 참가자였던 정상용 씨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모든 기동타격대원들이 이와 같은 5월투쟁에 결합한 것은 아니다. 박○○ 씨는 5월투쟁이 진행되는 것을 알았고, 기동타격대 모임에 대한 연락도 받았지만 5·18과 관련 없이 살려고 노력했다. 5·18만 갔다가 오면 생활이 망가지고 외상후스

69) 87년 5·18 추모 행사에서 재야 세력과 운동세력이 연합하여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전남국민운동본부(전남국본)의 창립을 선언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시민적인 6월항쟁이 벌어진다. 조직과정에서는 민중적운동적 성격이 강한 전남사회운동협의회(전사협)와 제도적개혁적 성향의 전남민추회협의회(전민협) 사이의 갈등도 있었으나, ‘전민협’ 대표였던 홍남순 씨에 의해 거국적으로 통합되어, 전남국본은 전남지역의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단일한 조직을 이뤄냈다.(김희송, 2009)

트레스가 재발했기 때문이다. 광○○ 씨의 부인은 남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5월단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찾아와도, 남편에게 애써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광○○; 5·18기념재단, 2007c) 광주에 나타나지 않는 많은 기동타격대원들은 이러한 삶을 선택했을 것이다. 5·18의 고통을 잊기 위해, 80년의 기억 자체를 과거에 남겨두고, 광주를 떠나거나 생업에만 종사하는 것은 이들이 생활의 안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⁷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투쟁에 참가했던 기동타격대에게 80년대의 삶은 망각과 낙인의 기제를 넘어서 항쟁의 기억으로 다시 묻히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고립될수록 동료집단과 함께 함으로써 항쟁체험의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어느 정도 트라우마에 대항할 수 있었다. 더불어 기동타격대는 ‘오함동’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을 ‘민주화 투사’로 인식하여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5월정신’이라는 나름의 신념체계를 형성하면서 정치적인 시야를 확장시켜 나아갔던 시기이다.

3) 가난한 삶과 가족의 희생: “매혈로 생계를 유지했던 시절”

(1) 격리와 신원조회, 불구의 몸으로 박탈당한 노동권

다수의 기동타격대원들은 80년대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척 빈곤한 생활을 해야 했다. 정부는 중형을 받은 관련자의 신원조회서를 발부하여 감시했기 때문에, 이들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취직이 안 되거나, 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씨는 그 당시 기흥민 출신 구속자의 생활처지가 부상자나 유족보다 훨씬 열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실제로 단순가담자로 판명된 사람들에게 대한 신군부의 회유책은 이들에 대한 직업알선과 생활비 지급, 묘지이장 위로금 지급, 유흥오락실 운영권의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폭도와 주동자로 판명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한 고립과 감시의 정책이 취해졌고, 나아가 기동타격대의 경우 인맥이나, 학력조차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지닐 수 없었다. 더구나 항쟁 당시 20대 전후의 젊은 나이의 주변부 노동자 계층이었기 때문에 마땅한 기술도 없었고, 고문으로 망가진 몸과 정

70) 기동타격대 모임 회원명단에는 나오지만, 각종 자료나 온라인 카페에서 그 자취를 찾기 어려운 회원들도 많다. 이들은 전체 회원의 반 정도로 보이는데, 이들의 삶은 5월단체 회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으나,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 그것을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등장하는 기동타격대원들의 생애사와 5월투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생애사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기도 어려웠다.

인자 그 뒤로 나와도 취직이 안 돼버리니까, 우리들은, 아예 자체가 취직이 안 돼부러. (중략) 조서 받으면 우리는 다 특A급들이고, 그 사람들은 뭐 B급 C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실질적으로 보면, (중략) 우리는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중략) 구속자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어디 가면 좀 그 성격들이 좀 난폭하다할까, 조금 그래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부상자는 어~떻게 하든 간에 다 취직해서, 지그들 뭐 안 되면 지식 거까지 취직시켜서 다 가잖아요. 옛날부터 취직 다 시켜줬어요, 그거는, 뭇을 하든 간에, 우리들은 자체가 안 됐잖아요, 구속자들은, 공개, 어영부영 좋은 나이, 좋은 나이 다 보내고 40대를 만나분 거죠, 공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이○○: 7-8)

5월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무보수”로 다니거나, 사비를 들여가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빚을 지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에도 이들은 그동안의 부채를 갚느라 보상을 사용해 버린 경우도 많았다. 박○○ 씨는 사회적 명망이 있던 아버지의 소개로 들어간 회사에 입사했지만 신원조회에 걸려서 일주일 만에 쫓리고 말았다. 박○○ 씨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그 때 죽은 그 망령들이 진짜 몸에 붙었는지” 되는 일이 없었다고 술회한다. “분유값”을 벌기 위해 구두담이부터 “손수 김밥을 팔아 팔러”다니는 일까지 안 해 본 것이 없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박○○ 씨는 자존심을 접고, 5·18 참가자로서 동장에게 쌀과 연탄을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진짜. 누구도 모르는데 당사자, 그렇게 받은 당사자들도 모르는데, 생활 능력이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이나 그 때 당시에 위에(윗) 선에 있으면서 정부에게 손 벌려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능력도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동장이 계속 오니까, 날 괴롭힌 거잖아요, 나도 동장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벌 능력도 안 되고, “저 불쌍하니까 쌀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쌀 20키로 주더라고요, “겨울이니까 춥습니다” 그러니까 연탄 주고,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좀 멀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박○○: 18)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매혈을 해서 ‘분유값’을 마련했다. 이러한 선택은 비단 박○○ 씨만 한 것이 아니었다. 몇몇 기동타격대원 및 5·18회원들도 직업을 구할 수 없어서 매혈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였다.

구술자: 그 때 당시는 매혈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면담자: 들어봤어요.

구술자: ... 우리 애 굶겨 죽이기 싫어서 저는 매혈까지도 해봤어요. 분유값이라도 번다고... 진짜 제가 제 피로 우리 자식들 먹여 살렸어요.

면담자: 그것도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몸도 너무 안 좋아지시고.

구술자: 병원에서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매일처럼 하니까... 내 한계보다는 일단 애들이 한계가 최고니까..... 거기서 우리 5·18동지 두 명을 만났네요. 자살한 한OO가 그렇게, 한참 전에 죽었던 이름이 OO였었나..... 저 잠깐만 실례를 할 게요. (담배를 피러 가심)(박OO: 18)

하지만, 일찍 가정을 꾸리고 나름의 조건에서 생활을 개척해 나간 사람들도 있다. 염OO 씨는 일단 결혼하여 86년에 광주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보일러 설비공으로 꾸준하게 일할 수 있었고, 그 밑천을 삼아 85년에 결혼하고, 광주에서 새로운 터전을 삼았다. 하지만, 광주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5월투쟁의 결합, 후유증의 악화, 사업의 실패 등으로 어렵게 모아둔 돈은 모두 사라졌다. 그래도 염OO 씨는 끝까지 자신이 경제활동을 유지하여 최소한의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현재는 아파트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다.

맨 저, 우리가 양동 저 와이(YWCA), 이런 데가 저 우리 사무실들이 옮겨가면서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 하다보니까, 가정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인자 그 때 후유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인자. (중략) 인자 안 아프데 없이 전부 다 아프고, 그 때서부터 인자 생활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아프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런 생활이 지금까지 지속적이는데, 그래도 인자 굉장히 인자 노력은, 살라고 노력은 인자 많이 허죠. 그렇긴 한데 뒷받침이 안 되니까 힘든 것이고... 사업도 한 대여섯 번 엮어 갖고, 광주에서 짧은 기간에, (중략) 처음 인자 결혼해 가지고 광주 나라 외서는(내려와서는) 다방을 해봤어요. 다방을 하다가 그것도 안 되서 때려치우고, 두암동(?)으로 가서 인자 과일, 야채 그런 것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같이 인자 집사람이 초보니까, 경력이 없으니까 힘들죠, 그것도 허다가 그것도 문닫아지고, 보일러 가게를 하면서 했는데 돈을 많이 뜯겨 버려요, 이 일을 해놓고도 돈을 못받으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 문 닫게 되고, 내 몸이 아파버리니까 이것도 역시 못하니까(염OO1차: 4)

강OO 씨의 경우도 장성에 살면서 죽기 전까지 농사와 조경수 재배를 통해 꾸준하게 생업에 종사해왔다.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몇몇의 기동타격대회원들은 그래도 생활여건이 나왔다.⁷¹⁾ 고등학생이었거나 재수생이었던 타격대원들은 5월민중항

쟁 이후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다. 이들은 20대 전후의 젊은 나이에 진학이나, 취업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했기 때문에 직업생활의 숙련과 사회적 지위를 안정화
시켜갈 20-30대를 실업과 절대적 가난 속에서 보내야만 했다. 광주의 문제가 부분
적으로 해결되고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들은 택시운전, 막노동 등의 단순기술
직이나 육체노동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마저도 구속기록 때문에 쫓겨
나거나, 고문으로 망가진 몸 때문에 오랜 기간 지속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
안정한 삶의 고통은 가족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2) 가족의 희생 “생계는 아내 몫, 고문 후유증의 전이”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은 가족들에게 전이되고, 술만 먹으면 돌변하는 난폭한
행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생활환경은 자녀들의 성장과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자녀들 역시도 원만한 성격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
활환경 때문에 기동타격대원들 중에서 반 이상이 이혼을 경험하였다.

지금도 술을 안 먹으면 거의 잠을 못 자요. (중략) 문제는 그러한 어느 정도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당사자들의 문제보다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가장 왕성한 젊은 나이에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심적으로 많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는 스스로가 자기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이렇게 그 약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술에 의존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폭력, 부모,
아빠 밑에서는 (xxx) 부전자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랑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가,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남에게 나는 이 고통을 주지 않아야 겠다가 아니라, 스스로도 모르게 그 폭군이 되어 버
린 것이지, 자기도,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도 술을 안 먹으면 정말 좋은데, 술을 먹고 이렇게 되면
은 자기를 무엇인가, 가정이라는 것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억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폭군으로 돌변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온전한 가정을 제
대로 지키고 이렇게 가는 그런 당사자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이혼을 뒀... 그런 상황을 보고 자라
난 2세대들 자체도 정신이 원만하지 못하죠...(김○○: 9)

면담자: 5월 달 되면 인제 TV이나 이런데서 말들이 자연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때마다 자녀분들
의 반응이 어떤가, 아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술자: 술 먹고 하도 그런 것을 봐나서, 제일로 걱정인 게 애들이 인자, 다 애들이 적은게 (어리니
까) 나쁜 길로 머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걸 안 보여 줘야 된디 그리 안 되데요, 술만 먹

71)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학졸업자는 타격대 부대장을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다.

으면 정신을 아예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술 먹고 정신 조금이라도 들른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전혀 몰라 브려요. 술 인제 조금만 먹어도.(남○○: 5·18기념재단, 2007c)

또한 남편의 생활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도맡아 해야 했다. 나○○ 씨는 84년에 결혼을 했지만, 한 달 중 보름을 집에 들어가지 않는 생활 때문에 2년 만에 이혼을 당했다. 감시망 때문에 기동타격대 모임을 위해서는 먼 지역에서 회합을 갖아야 했고, 한 번의 회합을 위해서 며칠에 걸쳐서 집을 비워야 했다. 결국 기동타격대 활동 및 5월투쟁에만 전력하고, 생업과 양육에 신경을 쓰지 못해, ‘먹고 사는’ 문제와 양육비는 전적으로 아내의 몫이었다.

망월동에서 만났고 (중략) 다음 다음해에 이혼했습니다. 김○○ 선배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구멍가게를 하나 내준다고 조그만거 하나를 왜 그걸 하게 됐냐면은, 아이는 있고, 큰 애 하나, 밥은 먹어야 되겠고, 연애초반에 애기엄마한테 고마움을 느꼈는데, 그 때는 이해를 해줬어요. 저한테 뭘 물어보는 것도 없고, 제가 뭐 이야기해 주는 것도 없었어요. 제 자신이 끌려가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알고 살아야 되겠다. (중략) 거 몇 분 안 되거든요, 집에서 굶은 일, 하다못해 라면을 먹은 일, 난 이거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자랐고 (중략) 집에서는 아마 굶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안 물어봤는데, (중략) (면담자: 거의 집에는 안 들어가서 놓고) 한 달에 보름 정도요, 그 때 당시는 비아동네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중략) 그 갈려면은 하루 시간을 빼야 돼요, 가는데 몇 시간, 버스 기다리고 중간에 또 갈아타고 되고, 가서 이야기하고 10시경이면은, 그 집은 호롱불을 켜어요. 그 집이 인제 뭐랄까, (중략) 다른 동료 만나는데도, 그렇게, 물론 시내에 있는 동료들한테는 시간에 만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기동타격대 동료들 규합하고 만나는 시기라(나○○: 5·18기념재단, 2007c)

강○○ 씨의 아내는 평생 살아온 소감을 “먹고살기 힘들다”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했다. 강○○ 씨는 상대적으로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편이었기 때문에 가정불화나 자식들과의 갈등이 많지 않았다. 또한 아내와 자녀는 아버지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녀들도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강○○ 씨의 아내는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고, 5월단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생 농사일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했다.

어느 부부나 다 똑같지, 힘들지, 딱 말 하나 뿐야 “힘들다” 힘들다는 거, 힘들 수밖에 없고 그거지, 별~ 얘기를 어찌고저찌고 해도, 일단은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여유가 없어서 부러, 다른 아낙

네들처럼 여유가 없어. 쉬는 날에는 녹초가 되어 가지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뭐 저기 하기도 싫다. 한마디로 “딱 힘들다는 거 밖에 없어~ 사는 게 힘들다는 거” (면담자: 농사도 같이 하셨어요?) 주로 내가 많이 했지. 남편은 몸이 약해서 내가 많이, 머리로 하는 것은 남편이 하고, 노동을 하는 건 내가 거진 다 했지. 우리 회숙님 하는 일 조금 도와 준 거 말고는 농사일, 시골에서 생활하는 게 뻘하지. 뭐 가진 재산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애들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돈이 안 되니까 우리 회숙님이 올라오라 했었지, 공장에서 밥해 달라고 해서(하○○: 10)

강○○ 씨는 간이 나빠져 2006년에 사망하였다. 하○○ 씨는 남편이 죽은 뒤 치료비 때문에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어, 모든 재산을 포기하였다. 강○○ 씨의 아내는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로는 살림을 유지할 수 없었으나, 평생 농사일 말고는 배운 것이 없어서, 다른 일을 구해야만 했다. 결국 친정 언니 장사일 돕기 위해 광주에 올라와 현재는 “비오면 비맞고, 눈오면 눈맞으며” 5일장 난전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다.

김○○ 씨는 가족을 돌볼 겨를 없이 감시망을 피해다니다가, 아버지 생전에 손자를 안겨주려는 꿈이 40분의 시간 차이로 실현되지 못했던 84년의 기억을 떠올리며 “5월로 인해 자신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가정도 풍비박산”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김○○: 5·18기념재단, 2007c)

5. 90년대: 5월공동체의 갈등과 상처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전두환 신군부가 물러나고,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5·18 참가자들에 대한 억압정책도 다소 완화되었다. 이 시기는 광주의 ‘5월세력’ 또는 재야운동권 세력이 제도정치권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5월운동이 목표했던 광주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변화가 진전되고, 90년을 시작으로 보상정책이 시행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구속자 단체 내부에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형성되었고, 내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5월단체들 역시 그 성격이 변화하고 다양한 분화과정을 겪게 되면서, 단체 간의 갈등은 광주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기동타격대에게 비타협적 저항운동을 전개했던 80년대와는 또 다른 생애사적 과제가 발생했다.

1) 5·18의 금전화: “허위보상금 수급은 정부의 피를 빨아 먹는 일”

항쟁 직후, 전두환 정권은 ‘단순 피해자’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위로금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광주시민들을 회유하였다.⁷²⁾ 노태우 정부는 90년 7월 ‘광주보상법’⁷³⁾에 의거, 1차 보상⁷⁴⁾을 실시하여 피해자 신청을 받고 총 2,224명의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93년 김영삼 정부는 2차 보상⁷⁵⁾을 실시하여, 1차 보상 때 거부하였던 피해자를 신청 받아 총 1,843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누락자들에 대한 보상은 98년(3차), 2000년(4차), 2004년(5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2004년까지 사망자 154명, 행불자 70명, 부상자 3,028명, 기타(구속자) 1,628명 등 총 4,362명이 5·18관련 피해자로 인정되었다.⁷⁶⁾

광주보상법은 순전히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80년대에 걸쳐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 및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5월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노태우 정부의 보상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생활이 무척 불안정했기 때문에 당장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했다. 그리하여 보상법을 둘러싸고 많은 이견이 표출되었지만, 2차 보상이 진행될 때까지 대부분의 5·18 참가자들은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1) ‘광주보상법’은 반대, 보상금은 절실

‘광주보상법’이 발의되었을 때,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기념사업 등의 5대원칙을 목적으로 투쟁해왔던 5월단체는 보상정책을 수용하기 어려웠고, 기동타격대 역시도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변변한 소득조차 없이 오랜 시

72) 신군부는 80년 6월 민간인 사망자에 대하여 위로금 4백만원과 장례비 20만원 등 420만원을, 부상자에게는 10만원 씩을 지급하고 완치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급하였다. 이나마도 폭도난동자로 규정된 36명의 유가족에게는 ‘위로금’을 제외시켰다.(안종철, 2007b)

73) 90년 7월 민자당은 여야협상에 의한 법률안 마련을 포기하고 3당 야합으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어떤 조항도 삽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금전적 보상만을 명시하였다.(안종철, 2007b)

74) 노태우 정부는 90년 4월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피해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최고 3천만원 씩 지급하였고 90년 7월 ‘광주보상법’에 의거, 피해자 신청을 받고, 심의 결과 사망자 154명과 행불자 38명, 부상 후 사망자를 포함한 살이자 1,979명, 그리고 기타자 61명 등 총 2,224명의 피해자에게 1,427억 9천 2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안종철, 2007b)

75) 93년 김영삼 정부는 2차 보상을 실시하여, 1차 보상 때 거부하였던 피해자를 신청 받아 심의한 결과, 행불자 9명, 살이자 756명, 연행구금자 1,096명 등 총 1,843명에 대해 392억2천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안종철, 2007b)

76) 5·18기념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음.

간을 가난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보상금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다. 김○○ 씨는 “명예회복도 좋지만, 살아가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받을 것은 받고 투쟁하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5월투쟁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과 심리적 갈등을 겪게 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5·18 참가자들은 정부의 보상정책을 비판하고 거부할 수 있었지만, 어려운 생활처지 때문에 보상을 지급받겠다고 결정했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도덕성이 축소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한 심정은 현재적 관점에서는 중산층 참가자들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사실은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고통 받고 이런 것도 그럴 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사실 그, 치료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물론 명예회복도 좋지만은, 우선 살아가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도 해 준다 하니까, “일단 주는 것은 받고 투쟁할 것은 투쟁하자” 그게 진실된 마음이었죠. 물론 솔직히 걸으로는 “보상보다는 명예회복이 먼저다” 그랬지만, 속내는 “받고, 투쟁할 것은 또 투쟁하자” 이게 사실 더 진실이었죠. 그만큼 어려웠으니까. 그게 아마 솔직한 심정들이었을 거예요. 저 말고도, 살만한 사람들이나 “원 돈 받아야~” 하고, 허울 좋은 놈들이야 그랬지. 그랬지만은 결국은 안 받았냐고? 결국은 더 많이들 한 푼이라도 더 받아 갈려고...(김○○: 21-22)

그 때 뭐, 솔직한 이야기해서, 원 돈 뭐, 그 때 당시 받고 안 받고 어찌고, 한푼이라도 주면 받을라고 마음 묵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원 얼마가 됐든 간에 일단 주면 뭐, 코가 석자라. 조금 의식 있고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이 돈 안 받니 어찌니, 결국은 뒤에 다 받았잖아요……(이○○: 10)

하지만, 이들에게 구속보상금은 당한 피해의 정도로 보나, 5월민중항쟁 당시의 역할로 보다 상당히 억울한 것이었다. 고문으로 소위 ‘얼병’이 들거나, 정신병이 있었던 사람들은 관련 전문의와 만날 기회가 없었고,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등급’⁷⁷⁾으로 분류된 기동타격대원들도 있었다. 또한 보상은 나이, 직업

77) 전체 보상액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 생활지원금, 구속자의 경우 연행구금일수에 해당하는 구속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생활지원금의 경우 상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으로 분류되고, 이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상해의 경우 기타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기동타격대의 경우 가장 많게는 9,000만원에서 적게는 3,000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이것은 5-6개의 사례 안에서, 그리고, 보상금 수령 과정의 정황을 통해 볼 때 추정된 수치이므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등을 고려해 경제력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상이 정도에 따른 노동력 상실율을 계산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고 20대 전후였던 기동타격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보상받게 되었다.

오히려 이제 호프만식 되다보니까 세월 지나서, 더군다나 또, 이게 보상이 호프만식이면서, 당시 자기 수익에 반해서 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경우 세무서에 증빙될 수 있는 수입원이 아니니까, 일반 관례로 보상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당시에 교사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보상을 받았죠. 구속보상금도 들려요, 우리는 40,200이지만은 당시에 예를 들어서 (면담자: 아, 소득이 더 있으면 훨씬 더 많이) 그렇죠.(김○○: 20)

또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이들의 생활처지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김○○씨는 10년 간 고문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부모의 재산을 탕진했고, 구속기록 때문에 막노동판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은 그 동안의 쌓인 부채를 갚는데 쓰였고,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근데 이, 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문이나 구타에 의해 가지고 안으로 얼병이 든다,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증상이 안 나와요, 왜? 단방 아니면 한방, 이런 것은 보험처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금을 주고 치료를 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근게 10년을 거쳐 오면서 거의 젊은 나 이들이 자기 재산이 뭐 있었겠어, 부모 재산을 다 탕진해 먹는거, 부모 형제 재산을 다 탕진해 먹는 상황이며, 그래서 10년 후에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 거에 변제해 버리고, 그러면서 사실, 당시에 이제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 취업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하다못해 택시 회사에 가서 택시 운전을 하려고 해도, 데모꾼이라 그래 갖고 받아 주질 안 했어요, 막노동판에 가서 정말 이름 없이나 가서 하면 몰라도, “너 데모할라고?” 안 받아 줄 정도로(김○○: 13)

그래도, 부채가 심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금으로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염○○ 씨는 보상금을 받고 “커피한잔 안 먹고”,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다른 일거리가 없어서 다시 집을 세를 내주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만, 사업이 망하면서 다시 예전의 생활수준으로 돌아왔다.

면담자: 보상 이후에도 사실상 특별히 더 나아, 형편이 나아지시거나

구술자: 아 그런 것은 없어요~ 왜냐면은 보상은 그걸 좀 받아가지고, 그걸 처음에 받아서 커피 한잔 안 먹고 집을 샀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것을 팔게 되지, 인자 고놈 막 받아가지고 전대 앞에 (xxx) 아파트를 사가지고, 고놈을 세를 주고 있다가, 고놈을 다시 인자 팔아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게 되죠. 그 돈들이 인자 사업이 망하니까 없어서 불, 자동으로 없어서 버렸지...(염○○차: 6)

강○○ 씨도 “술 한잔 먹지 않고” 장성에 집을 지었다. 하지만, 2006년에 사망하기까지 치료비가 1억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강○○ 씨의 부인은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했다.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인한 부채를 갚거나, 직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 이후에 생활여건이 나아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⁷⁸⁾ 타격대 회원들의 경우, 90년 이후에도 단체활동이나 투쟁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생활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기도 했다. 한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무계획적인 소비생활로 인해 보상금을 탕진해 버리기도 하였다. 갑작스런 큰돈의 수여는 이들을 더욱 보상금에 의존하게 하여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오히려 당사자들이 경제적 능력을 복구하고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조그만한 식당 같은데서 소주 한 병에 삼겹살 먹던 사람이, 소주가 양주로 바뀌고, 삼겹살이 양주안주로 바뀌고, 그렇게 살고, 노름 좋아하는 사람 노름으로 날리고, 그래서 그래도 써보기도 했으니까 다행이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돈 맛을 아니까 어때 이제 돈내노라 그러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정부가 진짜로 5·18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보상을 해줄 게 아니라, 저는 그 종교가 바뀌었는데, 성경에 보이면 예수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 말과 일맥상통해요, (종략) 노점상 (종략) 그런 걸 해서 먹고 살래, 안 살래 물어보면 되지. 안 산다면 안 해주면 되는 거지, 먹고 살려고 그, 생각 있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라도 해서 하루에 만원은 벌더라도 내 돈을 벌어야지, 정부 돈 가져다 쓰면 뭐 합니까, 언제까지 정부가 자기 은행 노릇을 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박○○: 24)

(2) “허위 보상금 신청은 정부의 피를 빨아 먹는 일”

그리고 보상은 개별적이고, 차등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개별화되고,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갈등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저항공동체로서의 5월단체는 이해당사자들의 분열로 인해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허위 보상금

78) 실제로 5·18재단의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5·18 참가자들의 2000년대의 생활실태는 80년 당시의 생활실태에 비해 조금 더 악화되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5·18기념재단, 2006a)

을 신청하는 등 보상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는 당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광주시민들로부터 도덕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 씨는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들어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이를 동료에게 부추기는 당사자들의 모습이 “정부의 피를 빨아 먹는” 행위로 느꼈다.

그러면 90년도에 돈을 줬을 때, 주기 전에, 조금 주고 난 다음에, 90년도에 돈을 줄 때 보상자들을 심사를 했잖아요, 유족처럼 차라리 돈을 일시불로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진짜 멀쩡해요, 멀쩡한데, 지금 부상, 아니 그 구속부상자회 전 회장인 이○○ 씨 있죠, (중략) 90년이니깐 벌써 10년이잖아요, 5·18의 10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5·18의 관련자’ 라 하고 돌아다녀서 얼마나 많은… 그, 악행이에요, 악행 그거는 진짜로, 저지르고 다녔는지 사람들이 벌써 10년동안 5·18 하면 손을 흔들 정도였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몸이 멀쩡하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어떻게 받아오는지 알아요? 정신병으로 받아와요, 멀쩡한 사람이, 그러면 그 때 당시는 급수 별로 돈을 줬으니깐, 멀쩡한데 돈을 못 받았잖아요, 보상을 해 준다 했을 때, 그러다 7급이면 1억 가까이 가 돼, 아니 1억이 넘어가요, 그 때 당시 1억이면은 상당한 거예요, 그 많은 숫자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자기 보상을 그렇게 받아내요, (중략) 내가 요구를 했는데 들어줬다, 또 요구하기가 그렇잖아요, “야 너 이거 가서 요구를 해, 안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 옆 사람 시켜서 요구를 해줘요, 안 해줘요? 가요, 아~ 해주라고, 안 해주면 또 사람들 동원시켜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조건 그거 들어주라는 거예요, (중략) 내가 만약 기분을 지키고 있다면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면 안되죠,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냈어야 되는 건데, (중략) 영리단체 만들어 놓고, 이제는 정부를 피 빨아 먹는 게 아니라 광주시민의 피를 빨아 먹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벌어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박○○: 41-42)

한편, 5월단체는 시와 구의 5월단체 공공사업 지원정책을 이용하여, 다른 영세한 단체들의 사업권을 박탈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구속자회는 시와 구로부터 받은 주차단속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돈을 받고 일자리를 알선한다든가, 부적절한 운영을 하였다. 또한 구속자회는 장애인단체의 자판기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노점상 단체의 사업권까지 잃게 만들어, 지역의 힘없는 단체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불법주차 하루에 10만원을 벌다 해요, 견인을 해갔을 때, 그러면은 10만원을 벌게 된다, 그러면은 5만원은 주라, 그러면은 일단 이 사람이 5만원을 줘요, 그럼 내가 분명히 10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5만원 주고 나니까 5만원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요, 1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 진짜 별일을 다 하는 거죠, 인제, 불법 주차가 5분이잖아요, 5분 안되는데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차 서

있으면은 무조건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중략) (면담자: 불안, 시민들의 불안이 많았겠네요.) 그러니까 5·18하면 무조건 손가락질 하는 거죠. 뭐 그 전부터도 5·18하면 손가락질을 했고, 그니까 광주를 떠나올 수밖에 없지...(박○○: 34)

장애인 협회가 있어요 일단. 그 사람들도 물론 영리 목적이 백프로 다 돌아가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판기 사업을 하거나 그러한 그 불법주차 견인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중략) 일단 그 사람은 한 달이라도 휠체어는 탈 수는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단체에서 그걸 뺏어 가지고, 그러면은 그 장애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거 뺏겼으니까 다른 걸 또 찾아서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가 또 힘 없는 단체가 어떻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노점상인들 그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노점은 불법이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장애단체에서는 그거 불법이니까 “하지 마라, 해라” 못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는 장애 단체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 요렇게 해서 깨끗하게 할 거니까 만들어 주라, 정부는 자기가 안 뺏기기 위해서, 자기 욕먹지 않기 위해서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박○○: 42-43)

한편 단체는 이러한 수익사업을 회원들의 복지라는 명분하에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소수만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다수의 회원들은 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구속자회는 ‘회원들의 복지확충’이라는 애초의 목표와는 달리 “윗사람 주머니는 배부르고, 아랫사람들은 끝까지 배고픈” 상황을 만들어냈다. 박○○ 씨는 이러한 구조에서 소외되었고 “구두박스” 하나 얻어서 자립하고 싶은 바람도, 돈을 주고받는 일자리 알선의 관행 속에서 실현하기 어려웠다. 구두박스를 마련하여 꾸준히 일하는 것이 박○○ 씨가 바랐던 최소한의 경제적 분배였음에도 이를 ‘장사의 논리’로 이용하는 간부들의 모습은 5월단체에 대한 근본적인 실망과 박탈감을 안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그의 분노는 정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을 향해 있다. 박○○ 씨는 이러한 갈등이 “절대 정부의 잘못이 아니”고 “백프로 당사자들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 씨는 이처럼 내부 단체의 이권개입과 이권다툼으로부터 실망하고, 소외되면서 삶의 터전이었던 5월단체에 등을 돌리게 된다. 박○○ 씨뿐만 아니라, 다른 타격대원들도 “이게 5·18이예요”, “광주가 얼마나 썩어 있냐면”이라는 표현들을 통해 5월단체의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영리단체는 회원들이 먹고 살아야지, 특정인들만 먹고 살면 안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 그래

도 광주에 그렇게 영리단체 만들어서 회원들 잘~ 살고 있다' 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단체 옆에 이렇게 돌아서 살짝 가서 보면은 구두땀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5·18회원이에요. 지 혼자 벌어서 먹고 살잖아요, 누가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거예요. 진짜로 회에서, 그 단체에서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박스라도 하나 씩 지어주면 되잖아요. 그래놓고 정 뭐하면은 그냥 월세 10만원 씩만 발아가면 되는 거고, 운영비로, 그런 안건이 만약에 나오면 은 생각하는 게, '아 그 좋은 생각이 다', 해놓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내 이거 지어줄테니까 200만원 주라' (중략) 그러면은 그게 정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 저기서 구두 땀을 테니까 구두박스 하나 어떻게 하면 안 될까?' (큰 소리로)이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들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먹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용을 해먹는다는 거... 말은 좋아요, 우리 회원들 복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특정회원들한테만 다 가는 거예요. 재판기 사업, 해요~ 안 하는 거 아니고, 회원들을 위해서, 그런데 한 특정회원이 그 재판기 사업 다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불법주차 견인사업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예를 들어서 다섯 개구가 있으면은 회원 다섯 명이 나눠서 갖는다면 몰라도 한 사람이 다섯 개를 다 하고 있다는 거. 그게 특정한 아니고 뭐냐. 그리고 그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얼마가 아니라 "너 이거 가져가, 몇 천만 원 내놔" 그러면은 우리 단체가 돈이 진짜 수십억이 있어야 되고, 진짜 대기업 형태가 되어 돼, 없어요 돈... 영리단체가 돈 쓸 때가 어디가 있어요. 정부에서 돈 나오지, 영리사업을 하지, 근데 돈이 왜 없어요... 거기에 간부들이 앉아서, 뭐하러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월급이 뭐가 몇백만원 씩 돼. 옛날에 우리 운동권 할 때 간사들 월급 60만원, 70만원이었어요. 왜 그 사람들하고 간부진들하고 어떻게 월급이 다섯 배 차이가 나? 할 일은 간사가 더 많은데.(박○○: 43-44)

또한 이처럼 이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에 비판하려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배타적인 분파를 형성하여 회장직과 간부직을 유지하려는 알력 싸움도 반복되어 왔다.⁷⁹⁾ 박○○ 씨에게 5·18문화회관 뒤에서 '구두땀이'를 하는 5·18 당사자의 모습은 이권만 챙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되면서 가난하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사는" 사람으로 소개된다. 그것은 박○○ 씨에게 이익다툼에서 벗어나 자신이 '5·18정신'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소박한 요구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박○○ 씨는 단체에 대한 근본적인 실망과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

79) 최○○ 씨는 5·18을 자원화하는 사람들이 '고급한 사기꾼' 과 '저급한 사기꾼' 으로 구분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고급한 사기꾼' 은 정계에 진출하는 사람들이며, '저급한 사기꾼' 은 이처럼 단체 내부에서 소소한 이권을 챙기는 사람을 가리킨다.(최○○: 5·18기념재단, 2007c) '사기' 의 진위여부를 떠나, 이러한 표현이 나올 정도로, 내부 갈등은 첨예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5·18의 정치화: “가방끈에 대한 실망”

(1) 광주출신 정치인의 정계진출에 따른 소외감

87년 민주화 이후 광주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제도정치권 진입 등 사회분위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5월공동체 내부에서는 5월운동의 방향, 5·18문제해결의 방향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정치적 입장 간의 갈등상태에 놓이게 된다. 저항집단으로서의 단결된 정체성을 형성했던 5월단체 역시도 5월투쟁 과정에서 발생했던 내부갈등이 증폭되면서, 5·18 당사자 단체는 13개까지 분화되어 나간다. 그 결과 구속자들의 단체였던 5·18민중항쟁동지회(오항동)는 네 개의 단체로 분화되어 나가는데, 그것은 교도소에 억류되었던 회원들이 결성한 ‘교도소생존자동지회’, 부상자들이 조직한 ‘구속부상자동지회’, 차량기사들의 ‘민주기사동지회’, 기존의 사회운동세력이 아닌 회원들의 일부가 결성한 ‘5·18구속자동지회’이다. 분화된 단체들은 대체로 ‘오항동’ 내에서 주변적인 위치를 점하는 기층민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나간채, 1997)

기동타격대 회원들은 분화된 단체 중 ‘5·18구속자동지회’⁸⁰⁾(89년)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사회운동세력과 지식인집단으로부터의 소외감을 극복하고, 기층민중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속부상자회 등 다른 단체들과의 많은 갈등과 마찰도 겪게 된다. 하지만, 이 당시는 회장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빛을 갠기 위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박○○ 씨는 ‘5·18구속자동지회’ 활동을 뿌듯한 일로 기억한다.

합법적인 정치진출의 기회가 확장된 공간에서 치러진 91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기존의 5월운동세력 다수가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의원 등에 출마하여, 제도권 정치에 편입하게 된다. 하지만 5·18을 발판 삼아 제도권 정치로 진출한 사람들은 기층민들에게 공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기동타격대 회원들의 경우, 지식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5월투쟁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왔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정계진출은 복합적인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다.

박○○ 씨는 “그 사람들이 우리 문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80) 구속자들 중에서 지식인이나 사회운동가 출신이 아닌 소수의 기층대중들을 중심으로 결합한 모임이다. ‘오항동’이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와 동시에 이들로부터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불기 기간 동안 도청에서 상황실장을 했던 박남선이 출범 당시 대표를 맡았고, 조동수, 서형진 등이 이를 승계하였다. 이 단체는 독자적인 투쟁을 위한 조직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연대투쟁에 주력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불우이웃돕기 등의 온건한 활동에 치중해왔다.(나간채, 2007a: 39-40)

“알아주지 않는 일”을 수없이 해왔던 활동가들에 대한 보상이 없는 현실에 대해 속상함을 표현한다. 이것은 비단 기동타격대 회원들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 다수가 가지고 있는 양가적인 감정이었다. 기동타격대 회원들은 지식인 집단과 함께 5월투쟁에 헌신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실망감은 훨씬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5월민중항쟁의 결과로 진출한 정치인들은 ‘우리를 대변하고 함께 진실을 풀어가는 사람’이면서도 ‘우리를 무시하고 기득권만을 챙기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근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잘 풀리길 바랬죠. 진짜 우리의 진실이 알려지기를 바란 거지. 근데 물론 그 사람들도 노력은 했겠죠. 했는데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까지를 다 그 사람이 풀 수는 없을 거고, 한 가지만이라도 풀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었지, 원망까지는. (종락) (지식층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 나무에 감 떨어질 거 같지 않나?” 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 떨어지기 전에 차라리 따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따려고 갑니다. 그러면 그 감나무 주인이 못 따게 해요. 그러면 둘이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식인이 다가와요, “왜 싸우느냐”, “감 저거 떨어지기 전에 차라리 따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딸려고 합니다. 감나무 주인이 “왜 따니까?” 그러면 지식층은 “그 따야 될 거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남의 나무, 감나무에 있는 감을 왜 딸려고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뭐 됩니까? 실질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암시를 주잖아요. ‘야 저 감 따야 되지 않겠느냐?’ , 그 사람들 옳은 줄 알고 가요, 우리는 행동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예요,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박○○: 46-47)

5·18이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부분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5·18과 관련된 각종 담론들은 야당 및 사회운동세력의 이념적 자원이 되었다. 5·18의 기념과 추모, 5·18 문제해결의 당위성,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담론은 정치적 선동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이처럼 5·18 정신이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5·18은 공동체에 기반을 둔 민중중심의 저항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 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실망과 회의감은 타격대 회원들에게도 무척 큰 상처로 다가왔다. 김○○ 씨는 밑에서 투쟁은 ‘민초’들이 하고, 그 성과는 배운 사람들이 가져간 것에 대해, 염○○ 씨는 “우리 같이 돈없고 못배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가방끈 긴 사람들은 자기들 잇속 먼저 계산”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한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책임자처벌이나 이런 투쟁을 계속 해왔던 말이야, 남은 자들이, 그것이 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5·18 당시도 10일 간의 항쟁을 했던 게 민중들이, 민초들이 했어. 근데, 그리고 그 이후의 이러한 투쟁도 역시 민중들이 해왔는데, 그 세월이 10년 지나고 10여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마치 5월 항쟁이 마치 학생들이, 학생운동으로, 학생들이 다 한 양, 배운 자들이 다 한 양, 그래서 5월을 등에 업고 나름대로의 출세가도라든지 이런 것만,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 버렸지, 사실적으로 그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민초들, 뭐 쉽게 말하면은 5·18을 앞장세워서 팔았다는데, 그런 식으로 배운 자들은, 배운 자들은 5·18을 등에 업고 출세가도들을 다 나름대로들 달려왔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잠시 통화) 그러면서 사실 5월이 이렇게 밖으로 광주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5월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광주시민들 특히 하는 이야기, “5·18 느그만 했냐, 5·18 그만 팔아먹어라!” 사실은 지금, 5월 관련 당사자들이 3분의2 정도가 생활을 못하는 기초수급자들이예요… (김OO: 12)

참 5월을 많이 팔아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거 나온 사람만이 이것을 갖다가 팔아서 자기들 뺏지 달고 해놓고, 이거 처리 안 해주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갈 동안에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인자… 지식이란 사람들도 자기들 잇속 차지하고, 별로 인자 그럴더라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그저 우리 같이 돈없고 못배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고, 큰 소리 치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동지들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그래요, 제일로 가진 것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리 지키고, 큰 소리 치고, 끌고 이 앞에서 일을 잡아서 주고, 그러면 자기들 나중에 와서 자기들은 얼굴 내밀고, 어찌고 가버리고 하는데, 자기들 거시기지, 밑에서 지금까지 한 사람들이 제일로 바닥에서, 제일로 안 배운, 못 배운 사람들이 하여튼 일은 다 했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소위 가방끈 긴다는 사람들은 자기들 잇속 먼저 계산하고, 배우고 머리가 있음게 그러겠지만은, 우리 같이 인자 못 배우고 말발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염OO2차: 18-19)

기층민중 출신의 참가자들이 중간층 출신 참가자들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은 ‘오청동’과 ‘오항동’ 사이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어 왔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이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 운동세력이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과정은 이 두 단체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는 과정과 비례한다.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은 광주시민들로부터의 지지가 축소되어, 사실상 5월공동체 자체가 와해되고 분화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런 게 있겠죠, 5·18과 관련해서 투쟁을 정말 열심히 하는 오청동의 성과를 오항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항동과 오청동이라고 하는 단체는 넘어설 수 없는 벽

이 생깁니다. (중략)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방끈 논쟁, 5·18을 이용한 제도권 정치진입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5·18이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5·18의 역사적 사건을 정부가 보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배려하고 감안을 했다는 거죠, 88년 이후에는 특히 그랬죠, 87년, 88년 총선, 91년 총선까지는 5·18의 몫으로 재아라고 통칭했지만 5·18 관련 당사자들의 몫으로 국회의원 한 두자리는 반드시 배정을 했거든요, 평민당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조직을 하고 암투도 벌이고 그랬죠,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는 오향동이라고 하는 단체, 나머지 여타의 단체는 항상 대립을... 그것을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5·18단체들이 어떤 단체는 불법적 편법적 이권에 개입하고, 어떤 단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결국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5·18을 파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이런 저런 비판들을 단체가 나눠지면서, 단체가 하는 내용과 활동에 대해서도 공동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오청동, 오향동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 않는 거죠, 다 같은 단체로만 비판하는 거죠.(허○○차: 4-5)

(2) 5·18기념재단 형성과정에서의 갈등과 소외

구속자들은 분열과 난맥상을 극복하고자, 5·18기념재단⁸¹⁾으로 통합을 시도하였다. 기동타격대 회원들을 포함한 구속자들이 구속보상금을 헌납하고, 시민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기초 기금을 마련하였다. 기동타격대 회원들은 통합된 구속자 단체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다.

재단 만들 때도 그랬어요, 진짜 순수했어요, 참 순수했고, 진짜 정신계승이었어요, 5·18기념재단이, 그 때도 ○○이랑 무지하게 설치고 다녔는데, 정착 설쳤던 우리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일단 저기를 모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일단 정신계승 좋은데 모르잖아요, 지식층이 아니다 보니까, 판은 우리가 벌렸는데(박○○: 47)

우리 5·18기념재단이 있어요, 기념재단이 설립이 된 게, 그 당시 구속됐던 사람들이, 형을 받은 사람들이, 624명인가 625명인가 됩니다, 형을,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속보상금이 나와요, 하루 징역 산 돈이 우리가 스스로 뭐, 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감금을 당했어요, 24시간을 그것도, 그런데 그 보상금을 하루에 얼마 씩 쳐 주냐, 40,200원이예요, 40,200원이예요, 93년도에, 그 보상금에서 100만원씩을 각출을 해서 기념재단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김○○: 12)

81) 5·18기념재단은 회원의 출연금과 국민성금의 일부, 시의 지원금을 주요 재원으로, 1993년 발기인 준비 모임을 갖고 1994년 12월 정부의 인가를 받아 1995년 업무를 시작하였다. 항쟁 당사자뿐만 아니라 본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민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방된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추모 사업, 학술·연구·문화 사업, 장학사업 등을 진행해왔다.(나간채, 1997)

인자 그 재단도 참 우리가 못 먹고 그럴 텐데, 제가 이제 신한동 살 텐데, 전대 아파트 집 사는데, 거기 살 텐데, 그 때는 참~ 모여 갖고 거시기 해도, 참~ 못 먹고 굶고 하면서도 그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했죠. 그래 가지고 헌 것이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노니까 자기들이 헌 것처럼 자기들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우리 보상 받아가지고 참 돈 십 원도 안 쓰고 거기다 먼저 냈어요.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놓니까 이제, 지금 재단이 활성화가 돼 갖고 하지만은, 참 그럴 더라고요.(염○○차: 27)

재단 설립의 배경은 관 주도로 추진되는 기념사업의 졸속적인 진행을 막고, 5·18 참가자들 사이의 분열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1) '5월정신' 계승 사업 2) 회원들의 후생복지 및 장학사업 3) 광주의 정신문화사업의 발전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출범 계획 단계에서 서로간의 이견도 있었고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지만, 5월이라는 큰 명제 앞에 그 어느 것도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념재단에 참여하는 우리 서로 모두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중략) 이 기념재단에서는 5·18기념사업만이 아니라 장학사업, '5월정신' 계승사업, 관련자들의 후생복지사업, 출판, 홍보사업 그리고 광주의 정신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온 정성을 다해나갈 것이다. 이 사업들은 5·18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금모금으로 펼쳐진다. 이처럼 항쟁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정성이 담긴 기금으로 재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데는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현재 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과 앞으로 계속 이어질 후속사업 등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이처럼 항쟁 주역들의 분열된 모습은 시민 대중들로부터 심한 지탄을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 관련 단체들이 내부 반성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바로 '5·18기념재단' 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 내부의 깊은 성찰은 기념재단 창립 선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들을 옥되게 하고 광주를 부끄럽게 하고 시민들을 분노케 한 지난달의 잘못을 뉘우치고 '80년 5월의 정신과 자세로 되돌아갈 것을 다짐하며 가신 임들과 7천만겨레 앞에 옷깃을 여미고 섰습니다."

-윤강욱 '5·18기념재단의 출범과 행보-갈등과 반목을 달고 하나 되어' 82)

하지만, 이러한 애초의 설립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되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재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일부당사자들은 소외감을 느꼈고, 당사자의

82)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으며, ‘5·18의 세계화’라는 의제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초반 창립과정에서 함께 했던 타격대 회원들은 재단 운영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취하였다.

① “가방끈 없으면 결정권도 없는 5·18기념재단”

기념재단은 함께 투쟁해왔던 기층민 출신 당사자들보다는, 광주 내외부의 지식인 및 전문가 인물들 중심으로 간부진이 구성되었다. 타격대 회원의 경우 이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정과정에서 결국 학자·전문가 집단 중심으로 운영진이 구성되었다. 타격대 회원인 김○○씨는 5·18기념재단의 이사로 추천되었으나, 최종결정과정에서 뽑히지 못했다.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생업과 가정을 버리고 헌신적으로 투쟁해왔던 타격대 회원들로서는 단체가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제시킨 것으로 느꼈다.⁸³⁾ 왜냐하면 타격대 회원들에게는 5·18기념재단이 5월투쟁의 연속선상에 있는 성과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쟁의 성과물에 대한 접근권이 학벌과 인맥에 의해 특정 지식인 집단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은 무척 부당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감은 5·18 당시 예비검속 등으로 인해 피신했던 학생들에 대한 비난의 감정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씨는 5·18때 예비검속을 피해 미국으로 밀항했던 윤○○씨⁸⁴⁾의 선후배들이 5·18재단 설립 후, 재단의 주요직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았다. 이○○ 씨뿐만 아니라, 5월투쟁에 앞장섰던 다수의 타격대 회원들 다수는 ‘가방끈 낀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한 운영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불신과 박탈감을 느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동타격대는 ‘5·18정신’은 ‘민중성과 평등성’이라고 말해온 지식인들의 태도를 위선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5·18정신’에 대한 회의감과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었다.

5·18 재단 같은 경우도 우리 구속자, 타격대가 일조 했어요 그, 원래, 원래 그것 때때, 우리 김○○ 회장도 있지만 그거 일조해서 난리 안났소~. 원~래 거가 이사 한명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도 틀어 분 사람들이예요, 우리는 무식하고 단순히, 무식하고 조직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83) 5·18기념재단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노파심의 감정은 대부분의 구술자에게서 드러나는 것이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최근의 사건이어서도 있지만, 타격대 회원들에게는 재단이 무엇보다 당사자를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고, 따라서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재단에 대한 강한 불신이 발생한 것 같다.

84) 윤○○ 씨는 80년 당시 전남문화연구소와 녹두서점을 중심으로 청년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80년 5월 당시 예비검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밀항하였고, 93년 수배령이 해제되면서 입국하였다.

뭐 민주화, 민주화라고 자꾸 이라는 사람들, 내가 웃음 나와요. '너나 잘해라.' 한사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보면 자기를 이익 틀지고, 학연 지연 찾아가 붙면, 우리는 아,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온 놈들이 뭐 학연 지연이 있었어요. 5·18이 뭐 학연 지연으로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나쁜 놈들이라고 나는 봐요. 뭐 전대가 뭣이 어찌고, 아 나, "전대가 뭣 어째야? 니들 5·18 때 뭣했냐, 다 도망간 놈들 아니냐?" 무식하게 얘기해야 한당게요? "니들 도망간 놈들 아니냐, 살라고" 공개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윤○○ 선생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밀항해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미국 가서 결국 여기 오면서 고놈 다 장악할라고 자기 후배들 데고(데리고) 재단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거이 뭐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무식하니 얘기하다보면 그래요.(이○○: 12)

타격대 회원들은 출신 대학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구속자 단체 활동 등에서 전남대와 조선대 출신의 인물들의 세력다툼에서는 낄 수도 없고, 안 낄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지식인 집단이 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심부름꾼"이 되거나 세력다툼에 휘둘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많은 회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정 대학 출신의 지식인집단에 의존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활동의 과정이 실제 임지를 보장해 주지 못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들은 다시 주변화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후견인을 찾아가지만 이 과정은 이들을 끊임없이 '들러리'의 존재로 만들었다. 이러한 실망감은 감옥이나 80년대 투쟁과정에서도 느낀 것이었지만, 5·18이 자원화 되는 90년대에 더욱 극명하게 표출되면서, 지식인 집단에 대한 근본적인 적대감으로 드러난다.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그 쪽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우리를 위에 세우고 싶어하지를 알아 해요. 심부름꾼이지. 그리고 우리는 당시 나이도 어렸고, 또 그 사람들 머리만큼 따라주지 않으니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깐. 그런데 우리가 그 노력한 것만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략) 재단도 진짜 조그맣게, 진짜 조그맣게 이층 허름하니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나오지만 전조대의 싸움이다 보니까, 전대 쪽의 사람들이 많았죠, 영향력이 상당히 커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다가, 이제 조금 실질적으로 현판을 내걸고, 공식적인 자리가 전남대 총학생회 회관에, 전남대 쪽에서 그거를 제시를 했죠. 우리가 사무실을 해 주겠노라, (중략) 그렇게 하면서 흐름이 거의 전남대 쪽으로 막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대 쪽에서는 난리 나죠 "우리도 했는데", 그리고 광주 가면 그래요, 두 그 라인에서 싸우는 게 보면은, 그 '광주에서 그 민주의 뿌리 하면 조대다' 차츰 약해지는

거죠, 그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민주는 우리 전대가 강하다’, 그렇게 했던 게 그 박관현 열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큰 인물이 전부 전대 출신이예요, 그리고 광주에 로열 패밀리 하면은 서중-일고-전대 그렇게 해서 완전 ‘용골’ 이라는 건데,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조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대는 어떻게 해서든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 조대 싸움에 우리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용을 당하고, 계속 이용을 당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그래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겠다” 그제 안 해 준다니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패대기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요, 조대하고 손 잡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대에서 안 좋게 보죠, 그래서 또 전대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욕을 하죠 이제.(박OO: 56-57)

② “세계화 이전에 회원들 기초생활 해결부터”

5·18기념재단에 대한 불만은 재단운영의 목적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부터 발생하기도 하였다. 김OO 씨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5·18 참가자들에 대한 복지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단이 학술문화 행사와 국제교류 사업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즉, 재단의 해외연수 예산을 돌려서 “어려운 회원들, 한 달에 쌀 한포대 썩이라도 줘서” “민생고라도 해결하게끔” 만드는 것이 단체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다.⁸⁵⁾ 이는 기념재단이라는 단체의 성격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에 대한 반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은 염OO 씨에게는 회원들의 일자리나 회원 자녀들의 취직 기회를 재단이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그 기념재단은 물론, 커나가, 자기들 변명으로는 커나가지, 뭐 세계화 가기 위해서, 뭐 외부 사람도 좀 하지만, 5·18기념재단, 그대로, 물론 외부사람들도 좋지만은, 당사자들이 주역이 되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이예요, 당사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까지는, 근데 그 당사자들이 (xxx), 막말로 “민초들, 배우지 못 한 놈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배운 놈들이 다 장악해 갖고, 지들끼리 자기들 (큰 목소리로 책상을 두드리며) 뭔 기념재단에서 무슨 놈의, 뭐 연수를 그렇게, 외국연수를 뭇한다(뭇하러) 가냐고, 예산 갖다가, (책상을 치며) 어려운 회원들 하다못해 한 달에 쌀 한 포대 썩이라도, 20키로 쌀 한 포대 썩이라도 줘서, 민생고라도 해결하고 살게끔 해야지, 내가 이 기념재단을 이끌고 간다 한다면, 해외연수 가는 거, 꼭 가, 물론 조

85) 기동타격대 회원들의 이러한 인식은 2000년대 들어 경제력 상실 및 노후로의 진입 등 현재의 처지가 더욱 반영되었을 것이다. 90년대 중반의 창립 초기부터 재단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89년 분화된 구속자 동지회의 성격을 보면, 이러한 경향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들 핑계는 있겠지, 그렇지만은 갖다, 다 그 돈 쓰기 위해서 지랄하고 다니는 것이지, 그 놈 배워 갖고 뭇을 응용한다고! …(김○○: 12)

쫓, 지금 인자 결혼을 해 갖고 애들을 이렇게 낳고, 애들이 대학을 나와서 졸업을 했으니까, 그런 재단 같은데 있어서도, 인제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그 자녀들을 거기다 절반 정도를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 많은 사람 속에 다른 사람들을 다 쓸 것이 아니라, 재단을 만들 때는 뭇허리 만들었깐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 가족들이 좀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중략)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들 잇속만 차리려고 했다는 거이 참 부아가 나요, (중략)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건물 관리 같은 것도 그래요,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쓰는 것 보담도, 자기들 시켜먹고(?) 그러니까 동지들을 관리직에 넣어 가지고 일 시키고, 응, 그러면 되지 않을까, 나 생각은 그래요,(염○○2차: 47)

이처럼 지식인 및 운동가들과의 교류는 타격대 회원들이 정치적 의식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는 과정들도 많았지만,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지니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결국은 지식인 집단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진다. 박○○ 씨는 ‘5·18정신이 무엇인지 몰랐던 우리들’은 그들(지식층들)로부터 정신을 배웠고, “감나무에 감이 떨어질 거 같다”는 지식층의 결정을 몸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그러한 자신의 행동은 지식층으로부터 배운 ‘정신’과는 괴리되는 딜레마를 느꼈다.

3) 광주시민들의 외면: “5·18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

90년대 5·18 참가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갈등과 반목은 5월단체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시기에 기동타격대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니가 그러니까 그렇지, 너도 그거(5·18)냐”라는 시민들의 태도를 느껴야 했고, 그 결과 “어디가서 5·18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기동타격대는 항쟁 당시 목숨을 걸고 광주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시민군 활동을 했고, 항쟁 이후에도 생존의 욕구를 넘어서 5·18의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5·18 참가자들이 제도적 차원에서 경제적·정치적 자원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참가자들이 5·18 자원에 대한 특권과 기득권을 형성하기 위해 갈등하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5·18 참가자들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동타격대는 이러한 5·18 자원들을 전략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없어, 5·18과 관련된 사회적 자원으로부터도 소외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갈등과 경쟁의 희생자였다. 하지만, 5월단체에 가해지는 비판의 목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속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기동타격대는 기회를 이용하려는 소수 분파 집단,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었던 중산층 집단, 그리고 광주시민들로부터 소외됨에 따라 5월민중항쟁 참가자로서 지키고 싶던 ‘5월정신’이 훼손당함을 느꼈고, 경제적·정치적 지지의 축소를 경험함으로써 복합적인 차원에서 자존감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5·18 의제의 마무리와 갈등의 소강상태

94년부터는 광범위한 광주시민들이 결합하여 ‘5·18학살자처벌 및 고소고발운동’, ‘5·18특별법 제정운동’, ‘5·18재판 방청운동’, ‘피해자 추가보상운동’ 등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5월단체는 다시 한 번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하였고, 나아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다. 97년 종결된 5·18학살자들에 대한 재판으로 전두환 등 주요 책임자들이 사형 및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구형받아 법적인 책임을 물었고,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국가차원의 기념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한편 분화되어 있던 4개의 구속자 단체들은 96년경에 ‘5·18광주민중항쟁구속자회’로 통합을 하면서,⁸⁶⁾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분화되었던 하위단체 가운데 하나인 ‘구속자동지회’에서 활동해 오던 박○○ 씨는 통합과정에서 활동을 그만두고 광주를 떠났다. 통합된 구속자회의 회장에는 97년 하위단체 가운데 하나이자 ‘구속자동지회’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구속부상자동지회’의 회장이 선출되었고, 그에 따라 통합된 구속자회에서 박○○ 씨 및 타격대 회원들의 입지는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씨는 특정 대학 출신 간부에게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자회에서 제명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86) 이 단체는 1999년 3월에 시단법인 ‘5·18민주화운동구속자회’로 재출범하였다. 그리고 통합된 구속자회는 단체의 특성상 무죄확정 판결을 받기 위한 ‘재심청구작업’과 항쟁 당시에 구속되어 있었던 ‘상무대 법정 및 영창 복원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운동단체와 연대하여 ‘사람의 장기기증운동’과 한혈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복지 증진사업과 장학사업, 그리고 재활원 등 불우시설에 대한 지원활동도 전개한다.(나간채, 2007a: 40)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는 아니죠, 근데 그 양○○ 측에다가 입바른 소리 했다고 5·18회원 자격증 박탈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5·18관련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제 5·18회원 자격이 박탈됐다’, ‘몇 년 동안은 회원으로서 가입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5·18관련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쓴소리 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그 맞지 않는 소리를 했다고, 그게 5·18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박○○: 40)

이처럼 90년대 후반은 5월단체의 내부의 세력다툼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특정 집단이 단체 내부의 입지를 공고화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타격대 회원들은 이 과정에서 5월단체를 떠나거나, 제명을 당하기도 하여, 구속자 단체 내부에서 완전히 주변화 되기도 하였고, 몇몇 회원들은 그러한 과정에서도 중견 역할로서 자신의 활동을 유지해 나가기도 한다. 남○○ 씨는 1999년 구속부상자회 이사로 활동했으며, 김○○ 씨는 2011년 현재 구속부상자회의 이사로 활동 중에 있다.

6. 2000년대: ‘명예회복’ 되지 못한 국가유공자

2001년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5·18 참가자들 4,362명 중 3,586명은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되고, 2002년에는 신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기념사업은 2000년대에 들어 관련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갈등과 마찰은 계속되었고 타격대 회원들은 5·18 현장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투쟁에 들어간다. 한편, 2000년대는 당사자들이 50대로 진입하는 시기로, 경제력의 상실과 활동력의 위축으로 인해 노후생활의 안정 및 복지에 대한 새로운 생애사적 요구가 나타난다. 이제 5월단체는 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유공자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국가적 지원의 확장을 통해 회원들의 명예유지를 위한 최소한 생계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이른 기동타격대 회원들은 오랜 시간 동안의 투쟁으로 열악해진 가정생활과 경제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타격대 회원들과의 친목모임을 강화하고, 상호부조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으나, 다수의 회원들은 이혼 및 실직의 반복 등으로 인해 더욱 불안정한 생활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1) 5월민중항쟁의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 계속되는 투쟁

기동타격대를 포함한 구속자들에게 상무대는 고문구타가 자행되었던 트라우마의 장소이다. 하지만 시와 정부에서는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한 저항적 성격을 회색시키기 위해 상무대를 기념공간 조성에서 제외시키고자 하였다.(정호기, 2002) 하지만, 기동타격대는 이와 같은 시의 기념사업에 반대하여 상무대 원형 보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단체와 5월단체의 간부들은 이에 반대하였고, 기동타격대는 상무대 원형보존을 위해 삭발농성에 돌입하는 등 고립된 투쟁을 해야만 했다. “항쟁지도부”였던 사람들과 “5·18식구들”은 항쟁 참가자들이 가혹한 고문을 받았던 장소의 보존에 관심을 갖지 않고, 박○○ 씨의 투쟁을 오히려 “미친놈”이라고 깎아내렸다.

처음에 광주에서 한참 활동하고 있을 때, 어떤 부분이 나왔나면은 그 영창 우리가 이제 그 재판을 받았던 그곳도 성지잖아요. (면담자: 상무대, 자유공원) 네, 영창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법원은 이미 설계가 다 빠져버려 가지고 이미 가버렸고, 이렇게. 영창도 그렇게 한대요. 영창을 없앤다 그랬나, 이전한다 그랬나. 그거를 사람들이 다 해준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항쟁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그게 뭘니까, 저 혼자 안 된다고 가서, 시청 앞에 가가지고 삭발 농성했는데, 나보러 미친놈이래요, 그게 5·18이예요. 이전반대 삭발농성하는데 나더러 미친놈이래, 그게 5·18식구라니까, 시민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박○○: 41)

김○○ 씨를 포함한 기동타격대에게 핵심적인 생애사적 사건의 장소는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최후항전을 벌였던 구 전라남도 도청이었다. 기동타격대에게 도청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공간이자, 평생을 ‘5·18 사람’으로 살게 했던 운명적인 장소이다. 이곳에서 평생을 함께 할 동지를 만났고, 가난 속에서도 5월투사로 살게 되는 이유를 발견했던 장소이다. 따라서 도청을 문화의 전당으로 개조하기 위해 건물의 반을 허물어 내려는 시의 계획을 결코 수용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들에게 “뼈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다. 그런데, 기동타격대 회원들이 더욱 화가 났던 것은 광주의 각종 시민단체장, 3개의 5월단체장 등이 이미 ‘별관철거’를 포함한 문화의 전당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었다. 타격대 회원들은 또 다시 생업을 내려놓고 2008년 초반부터 8개월 간 천막농성을 결행했다. 하지만, 연대단체가 없고 여론이 좋지 않아, 고립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투쟁을 지속할 여력이 상실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문

화의 전당 리모델링 안에 합의를 하고, 투쟁을 접었다. 하지만, 더욱 단체 내부의 갈등에 휘말리게 되는 계기는 선거 기간이 시작되자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돌연 별관철거반대를 선언하며 투쟁에 결합하면서부터이다. 타격대 회원들은 어떤 지지도 없었던 단체들이, 선거를 앞두고 투쟁을 시작한 것을 선거전략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감정의 갈등은 최초에 투쟁을 시작했던 타격대 회원들이 “문광부의 돈을 받았다는 등”의 대한 역공격으로 이어졌고, 투쟁은 내분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의 가정이 파괴되고, 김○○ 씨는 사고를 당해 구속되기도 하였다.

2008년에 도청별관이 철거될 위기가 되서, 타격대가 선봉을 해서 천막농성을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미 5·18관련단체장들 및 사회단체에서들 이미 그, 철거를 찬성을 해 준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지켜야 된다’ 하고 8개월을 투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을 제가 대표들을 찾아다니면서 애원을 했어요. “도와주라” 그게 제가 민주당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 대표, 유인촌 장관 면담을 했는데, 그 사람들 답이 정치적인 답이에요. 자, “광주가 하나가 된다면은 그 뜻을 누가 거부하겠나, 거역하겠나” (중략) 위의 뜻들이 이렇다. 광주가 하나 된다면은 이걸 지켜진다.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도 하나 같이 등 돌렸어요. 왜? 이미 용역이든지 뭐이든지 해서 다 돈들을 갖다가 먹었어요. 자 그럼 8개월 만에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살리고, 그 공간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자 문화의 전당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한쪽 팔을 잘라내는, 몸동아리 한군대를 잘라내는 아픔을 갖고라도 우리 이것을 포기하고 가게 하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단체들이 (책상을 두드리며) ‘다시 보존해야 해야 된다’ 라고 기어들어갔어, 쉽게. 그게 진보연대가 앞장서서, 민노총 요쪽으로 앞장서 갖고, 거기를 들어가서 다시 도청별관을 지켜야 된다고 들어갔습니다. (면담자: 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자, 그게 뭐였나? 결국은 선거전략이었요. 민노당이 선거에 싸먹기 위해서. (중략) 막말로 어디 구청장 후보로 나온 놈이나, 민노당에서 나온 년이나 다 타이들을 뭘로 걸었나? (중략) (책상을 두드리며) ‘별관 보존을 끝까지 이루어 냈던’ 이렇게 선거광고에다가 끼어 넣고 나왔어요.(김○○: 18-19)

이처럼, 2000년대 들어서 단체 통합으로 운영권에 대한 갈등은 잦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청산의 마지막 과제인 기념사업의 문제에 있어서도 타격대 회원들은 5월단체 내부에서나,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동타격대 회원들은 5·18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의 각종 사회문제들에 대해 관심 갖고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2008년 당시 도청별관 철거에 반대하는 투쟁의 와중에서 촛불시위에 결합하여 시민들의 운동에 동참하였

고, 2010년에 김○○ 씨는 광주시장의 옳지 못한 행적을 밝히려고 시위하다가 구형을 받기도 하는 등 기동타격대 회원들은 여전히 치열한 투쟁의 삶을 살고 있다.

2) 불안정한 노후생활: “개새끼 하나만도 못한 우리들의 죽음”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활동’ 이면에는 가정의 불안정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스런 생활이 존재해 왔다. “투쟁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현실, 그러나, 5월민중항쟁으로부터 배운 ‘5월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에 따른 노력은 이들의 삶의 기로에서 선택지를 상실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계속될수록 ‘5월투사’로 살도록 설득하고, 함께 해왔던 선배들과 운동가였던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의 감정은 더욱 커진다.

또한 이들에게 동료의 부고 소식과 자살 소식은 자신의 죽음을 현실적인 문제로 느끼게 했고, 죽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프게 느껴진다. 염○○ 씨는 당장 죽어도 장례 치를 돈이 없고, 찾아올 사람 없는 자신의 죽음을 “개새끼 하나 죽어나가는 것만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은 같은 구속자이지만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화려한 학자의 장례식장의 모습과 대조된다. 염○○ 씨는 이러한 억울함을 번번이 느끼면서, “광주에서 못 배운 사람들이 전부 일했지만”, 장례비 하나 마련 못한 억울한 심정은 5·18로 인해 성공한 학자, 지식인들의 장례식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표현된다.

우리에게 투사라고 치켜세우면서 앞장서라고 주장한 사람들 모두 자기 것 챙겨가며 높은 양반 돼서 잘 살고 있어요. 그 때 우리가 폭도로 몰려 보상배상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못할 때 그 사람들 뭐했어요. 우린 대부분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어요.(한겨레21, 2010)

앞으로가 인자 또 문제고요.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다 똑같아요 몸이. 전~부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도 힘이 없어, 죽어가도. 왜냐하면 돈이라도 많이 갖고 죽으면은, (큰소리로) 장례도 제대로 못치른 사람이 많아요. 돈이 없어서 장례를 못치러. (중략) 얼른 오늘 죽어 갖고 오늘 치려도 600만원인가 돈이 있어야 돼. 어, 근게 오늘 치려도 6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들을 갖고 있지를 못하니까, 개새끼 하나 죽어나가는 것만 못하는 것이여.(염○○1차: 5)

이 그, 네모 안에, 내가, 염○○가 죽었으면은 이 사람 손가락 하나 이렇게 휘어진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학자들이 죽었을 때는, 대부분 지식인이 죽으면은 들어갈 자리가 없게꼬름 자리가 하나 차요. 그런 것을 봐와가면서 참~ 큰~ 거시기를 많이 갖고. (중략) 그래서 늘 누차 동지들한테도 말하지만은 “내가 학자, 지식인들 죽었을 때는 절대 안간다.” 내가 그런 말을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못 배운 사람들이 일은 광주서 다 했어요. 지금까지 5·18 모든 일을 주관해 해 올적에, 그러면은 자기들은 얼굴 내밀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테는 내고, 어디가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 할 때는 자기들이 나타나고, 우리는 (종락) 아는 것이 있어야지 욕심을 내지, 그러나 일은 다 해주죠, 요런 것들 때문에, 상을 당하면 눈물이 많~이 나요, 그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 하나 죽어갈라면은 어떻게든 간에 내 가족이 그 없게끔 이, 내 초상비는 벌어 놓고 죽어야 된다는 것.(염○○2차: 19-20)

박○○ 씨에게 97-98년은 이러한 체험이 가장 극심했고 힘들었던 시간으로 기억된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서 이혼을 하고, 자녀들과도 함께 살지 않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던 것은 벌써 3-4년이 넘었을 정도로 그는 자녀들과 거의 연락을 못하고 지내고 있다. 이때가 그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서 기억되며, 처음으로 5·18이라는 것을 원망해 보았다고 한다.

내 가정을 내가 지키지 못한 것도, 이것도 5·18의 피해겠죠... 차라리 그냥 돈을 열심히 벌었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돈 벌 생각을 안하고.....(박○○: 38)

칠십 아니 97년... 98년, 2000년도 쯤인가, 그 때 조금 흔들렸죠 힘들다고, 진짜 5·18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 했던 게 가정을 꾸린 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심점이 되고, 가장 잘 해놓은 일이 내 가정을 만들고 내 아이를 만들고, 근데 그게 깨졌어요. 가~장 잘 만들었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18이예요... 그래서 원망을 했죠, 힘들었고, 벗어나질 못하고.(박○○: 51)

그리고 그는 2002년에 “여기를 떠나야겠다.”라고 결심하며 서울에서 5·18과 무관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기로 결심한다. 5·18이라는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5월단체 활동에서는 배제되고, 경제적인 여건도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인과의 이혼, 자녀와의 연락두절이라는 삼중고는 더 이상 ‘5·18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이 당시 “무조건 광주를 벗어나고 싶고”, “진짜 광주가 무섭고 지겨웠다.” 박○○ 씨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항쟁, 상무대 생활, 경제적 불안과, 정부의 감시와 탄압보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5·18 참가자들이 서로 적이 되고 있는 현실”과 5·18 사람으로서 명예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면담자: 어떻게 보면은 5·18 관련해서 당시 상황보다 좀 더, 가장 더 힘들었던 기억은 언제 이세요? 오히려 그 당시보다 그 이후이신가요?

구술자: (중략) 네, 진짜 5·18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목적이 그냥 일단 그냥 민주라 하더라도 일단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건 사실이잖아요, (중략) 구속자들은 27일까지 잡혔던 사람들은 진짜 동지잖아요, 지금은 서로 죽이기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남들처럼 다른 역사의 인물들처럼 ‘나 5·18에 관련된 사람’ 이라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힘든거지,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한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 때가 힘들었던 거지, 영원히 힘든 건, 그 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 조금 있으면은 풀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지들이 계~속 적이 되고, 계속 또 다른 적을 만들고 있고.(박○○: 32-33)

나○○ 씨는 박○○ 씨와 비슷한 딜레마를 오랜 시간 경험하면서, 정신적인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왔다. 또한 평생에 걸쳐 5월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 씨 역시 이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2009년에 자살한다.

참 그리고 나○○ 라는 친구에 대해서 다시 얘길 해줄게요. 물론 개는 사회에서도 친구인데, 5·18로 인해서 가장 굶아 버린 사람이 아닌가, (중략) 5·18이라는 그 딜레마에 완전히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미쳤다 할 정도로, 그 친구도 진짜 솔로만 의지하면서 살고, 5·18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다른 생활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 보면은 그래요 진짜, 저 때문에 5·18에 발을 담궈서 폐인이 돼 버렸고, 처음에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일단 자기능력이 없잖아요, 자기능력이 없다보니깐, 서울에 인제 가끔 올라오거나 할 때 보면은 자기 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는 거, 5·18식구들한테, “왜 그렇게 손 벌리고 다니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해주진 않잖아요, “손벌리지 마라” 하면서 내 돈을 건내주진 않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이해도 되고, 물론 내가 봤어도, “왜 그렇게 손을 벌리고 다니느냐, 차라리 손 벌릴 거 안 올라가면 될 거 아니냐, 그 사람 안 찾아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도 이해가 되고... 5·18의 가장 깊은 상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거 같아요.(박○○: 25)

지금은 영리단체로 만들어 버린 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영리단체잖아요, 5·18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뭐예요, 피해자예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있잖아요, 왜 추잡하게 만들었느냐, 왜 우리한테 손가락질 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내 배만 부르면 된다..... 그러니까 김○○가 자살하게 된 동기도 그 일부분의 하나라는 거예요, (박○○: 23)

기동타격대 회원들은 평생 동안 5월투쟁에 헌신해 왔지만, 5·18의 혜택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동지들과 갈등하게 되었고, 5·18단체의 왜곡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방식대로 ‘5월정신’을 지키고자 했으나, 그럴수록 혜택으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감을 느낀다. 이처럼 모순적인 상황은 기동타격대 회원 나○○을 정신적인 이상으로, 전투적인 활동가였던 김○○를 자살로 이끌었다. 따라서 남아 있는 타격대 회원들에게 5·18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생애사의 전개과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상처와 원망, 피해의식으로 덧씌워지고 있다.

3) 상호부조를 위한 노력: “투쟁보다는 생사확인하며 살자”

이와 같은 정신적인 딜레마와 피해의식은 노후로 접어들수록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회원들은 투쟁 및 정치적인 일에서 물러나, 회원들 간 상호부조를 통해 애경사 시 서로 돕고, 생사를 확인하며 살고자 한다. 기동타격대 회원들은 제 각각 삶의 방식도 다르고 갈등도 있었지만, 가족 못지않게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며 살아왔다. 이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 온 대외적인 투쟁보다도, 기동타격대 동지들 스스로가 서로 도와가며 ‘먹고살길’을 찾고자 한다. 오랜 시간 동안 투쟁의 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동지들은 이제 노후에 접어들면서 내부적인 결속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린 대부분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어요. 이제 정치적인 일은 그만할랍니다. 앞으로는 그냥 매년 5월 27일 우리가 목숨 내놓고 도청을 지킨 날, 서로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 돕는 게 우선입니다” (한겨레21, 2010)

곳은 일 같은 거 제일로 많이 해놓고 대접을 못받는 거예요, 타격대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 스스로라도 조직적으로 뭉쳐 있자”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회원들 간에 서로 나와서 서로 돕고 그래서 인자, 어떻게 생각하실런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날보다 죽을 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인자 이렇게 보면... (낮은 목소리로) 타격대 실질적으로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한사람도 없어요, 왜그냐면 불의를 보고 달라들고 자꾸 이렇게 해물면 넘(남) 일에 사실 간섭하고 그러면 절대~ 못삽니다.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기고 뭐 누가 특별나게(특별나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거기고, 요즘 뭐 밥세끼 못 먹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보면, 우리가 자꾸 그래요, ‘우리는 형제 간 보다 더 가깝다’ 그래요, 인자, 자~꾸 그런 이야기를 실질

적으로 모여서 보면, 누가 아프다 하면 저쪽으로 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따라주고, 결국은 인자, 애들이 조금 어렸을 때 그, 5·18당사자가 죽어부니까, 애들이 제사 같은 것도 모르고 그래요.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따로 타격대에서 죽은 사람들, 따로 날짜를 이렇게 받아서 우리들이 제사를 지내줘요. 따로, 왜 그냐면 애들이 좀 그 집 제사를 (xxx) 자꾸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로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지내주기로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이○○: 5-6)

기동타격대 동지회는 2011년 전국각지에 있는 기동타격대 회원들 20여 명이 30년 만에 한자리를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5월민중항쟁 당시 기동타격대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그 동안 감시와 탄압, 생활고, 5월투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웠다. 이 자리에는 30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한 회원이 참여하기도 했고, 일찍이 광주를 떠나 생활했던 사람들도 참여했다. 이들 중에는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직과 실직을 반복하며 여전히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자리마저도 참석하지 못했다. 또한 5월단체 활동에 대한 상처로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생활고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처음부터 5·18을 잊고 살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박○○ 씨, 나○○ 씨, 최○○ 씨 등은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5월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지만, 갈등을 겪으면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대부분 50대에 접어든 회원들은 그 삶의 양식은 다양했지만 “5·18민중항쟁정신, 그 최후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둘러싼 현실은 “최후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항전의 체험과 기억은 오히려 서글픔과 박탈감으로 표현되었고, 불안정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지원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된 구속부상자회는 최근 5·18유공자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5·18유공자회의 공법단체화를 추진해 왔으며, 타격대 회원들 역시 안정적인 복지와 노후를 위해 이에 동참하고 있다.

III.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과정 분석

기동타격대의 생애사는 대략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전개되어 왔다. 70년대에 평범한 노동자로 살아왔던 이들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죽음과 삶을 넘나들었고, 밑바닥과 상층부를 오갔으며, 잔혹한 고문으로 짐승보다 못한 생활도 했지만 그 때문에 유공자증도 받았다. ‘긴달세계’에 있다가, 5월의 투사가 된 사람도 있었고, 고통에 못 이겨 광주를 떠나거나,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단체 내에서 중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처럼 타격대 회원들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투쟁을 벌이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동시에 타격대 회원들은 공통적인 생애사의 흐름을 보이며, 강한 집단적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기도 했다.

이 장에서는 기동타격대의 생애사를 네 가지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드러나는 트라우마티즘의 성격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시기별로 1) 기동타격대가 처한 사회적 지지 환경, 2) 일반화된 타자로부터 형성된 정체성의 내용 및 인정투쟁의 방식, 3) 그 결과 극복·형성된 트라우마티즘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1. ‘5·18체험’과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1) 1980년의 사회적 환경

기동타격대는 대부분 80년 5월 이전에는 자립과 직업의 안정을 위해 기술을 배우거나, 이직을 반복하던 하층 노동자들이었다. 광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지역이었으므로, 이직 등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유출입이 잦았고, 노동자들은 시골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서울로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다녔다. 기동타격대 역시도 웨이터, 다방 종업원 등의 영세서비스직과 공장 노동자, 용접공, 석공 등의 생산직, 그리고 수공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였다. 또한 이들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청소년 및 청년들이었으며,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저학력 층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웠고, 무력감을 느끼거나 방황했으며, 대

부분은 학생들의 시위나 정치적 문제들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5월민중항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에게 항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당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육체적 힘의 문화⁸⁷⁾ 속에서, 청년들이 지닌 순수한 정의감이나 행동주의적 감수성 등의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항쟁에서 자신의 역할을 선택했다. 또한 이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녔던 서러움과 노동과정에서 느낀 박탈감 등의 감정들이 항쟁의 공간에서 격렬하게 표현되었다.⁸⁸⁾ 또한 ‘합리적’ 대응보다는 상황을 적대시하고 ‘육체적인 힘’으로 저항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었다.⁸⁹⁾ 그리고 이러한 힘은 일상적인 시기와 달리 항쟁의 공간에서는 저항폭력으로 전환될 수 있었고, 억압으로서의 폭력경험이 해방으로서의 폭력으로 전환되었다.

2) 항쟁에서의 인정투쟁: 시민군 참여로 새로운 인정질서의 형성

기동타격대는 자신의 생활세계에서 지녀왔던 감정을 개인이 아닌 광주시민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공동체’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하층 노동자라는 사회구조적 조건이 이들의 참여양식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⁹⁰⁾ 기동타격대는 계급적인 자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나름의 규범과 신념의 체계를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 및 생활문화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띠었는데, 기동타

87) 노동자들은 ‘육체적인 힘’과 ‘남성적’이라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긍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작업공간에서 노동력을 통해만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과 ‘남성적’이라는 가치는 자신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기호가 되기 때문이다.(Bourdieu, 1979)

88) 평상시 기층민중들의 삶은 오인과 상징폭력으로 시달렸으며, 자신들도 그러한 오인의 메커니즘에서 자기부정적인 정체성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Bourdieu, 1979) 그러나 항쟁의 공간은 이러한 오인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적 시기의 자기억압적 생활세계를 주체적 자아의 목소리로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89)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성향은 부마항쟁에서도 드러났다. 부마항쟁 당시 노동자 대중이 폭력화, 폭동화한 현상은 항쟁 당시의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작업장에서의 폭력적 쟁의 경험은 노동자들이 쉽게 폭동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폭력적 쟁의 배경에는 일상적 폭력으로 노동 규율을 강제하는 병영적 노무관리가 있었다.(차성환 2007, 240)

90) 사회적 구조적 요인에서 개인으로 도출되는 경제적 이해나 한(恨) 등은 그 자체로서 시민들로 하여금 공수부대와 맞서 싸우게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5·18항쟁 전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외형으로 관찰한 비에 따르면 항쟁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계급 또는 기층민, 말하자면 경제적 이해나 한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층이 시위에 참가하고 투쟁한 동기는 위에서 길게 논한 인간의 존엄성의 파괴에 대한 분노였다. 실제로 어떤 시민들이 시위 참가는 오히려 개인적인 성격-예를 들어 위협감이 많은 사람인가 몸을 사리는 사람인가 등-에 크게 좌우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분포는 한의 사회적 분배-이는 사회계급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와 여타 주변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중략) 객관적으로 한이 많이 맺힌 계급들이 주로 참여했지만 그들은 일차적으로 ‘인간’으로 참여했던 것이다.(최정운, 1999: 129-130)

격대의 경우 각각 ‘청년으로서’, ‘군인으로서’, ‘전달로서’ 지켜야 하는 일상적 양심과 상식은 이들에게 항쟁 기간 동안 실천적인 도덕감정 및 새로운 가치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항쟁을 통해 확장된 생활세계의 규범들은 ‘항쟁 공동체’의 새로운 인정질서를 형성하는 요소가 되었다. “불의에 대항하여, 두려움을 넘어섰던” 김○○ 씨의 체험이나, “군인으로서의 정의”를 지키고자 했던 이○○ 씨의 체험은 국가폭력으로 인해 희생당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한 초인적인 역량으로 전환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씨는 5월 26일 한전 앞 시위에서 기동타격대가 상대가 되지 않는 계엄군의 탱크 앞에서 정면으로 맞서 싸웠던 일을 회고하며, ‘시민군’이라는 타이틀로 찍힌 유명한 사진의 주인공이 ‘우리들’이었음을, 그것이 ‘시민군’ 중에서도 ‘기동타격대’였음을 밝힘으로써, 그 당시의 체험이 단순히 폭행을 당하고, 학살을 목격했던 외상 체험만이 아니라, 용기를 발휘하여 적에 대항했던 전사였으며, 무고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의사(義士)로서의 체험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기동타격대는 시민군의 역할을 통해, 항쟁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호 주관적으로 구성하고 자기존중의 인정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일체감은 최후항전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광주시민들을 위한 이타적 행위는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지지와 인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평상시의 심리적 갈등을 넘어 적극적인 결단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것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듣고”, “반긴달로” 살았던 최○○ 씨에게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유’의 체험이었고, 죽음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공동체’의 체험이었다. 즉, 항쟁 기간 동안 기동타격대를 포함한 시민군과 광주시민들 간의 극적인 상호작용은 Honneth가 말한 가치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대칭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연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더욱 높은 수준의 인정형태인 자기가치부여의 인정형태를 획득할 수 있었다. 평상시 기동타격대가 할 수 있는 정치행위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방관자의 역할에 불과했지만, 항쟁에서의 직접행동을 통해 얻었던 나눔과 연대의 경험은 개인으로서 정치적 권리 획득의 문제를 넘어, 개인과 공동체가 동일시된 집단 감정으로 승화되었다.

결국, 기동타격대가 최후항전까지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쟁기간 동안 적극적인 무장과 항쟁을 통해 자기존중과 자기가치부여를 통해 사회적 인정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최후항전에서 죽음의 선택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고, 동료들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던 순간에 총을 버리지 않았던 선택은 이후에 사회적 탄압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는 더욱 커다란 신념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기동타격대가 항쟁에 참여하면서 느끼게 된 ‘민주주의’였고 일반화된 타자였다. 그것은 어떠한 정치적 용어로 표현되기 쉽지 않으며, 그저 ‘총을 들고 시민들을 지키고, 시민들은 주먹밥으로 다시 그것에 보답했던’ 공동체로서, ‘목숨을 던져 이웃과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걸고서라도 죽은 사람들의 넋을 달래야만 했던’ 감정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항쟁의 체험은 실제로 학살, 죽음, 사람들의 피를 끊임없이 목격했던 체험으로, 공포와 두려움, 인간 생명의 좌절과 무력감의 감정들이 함께 소용돌이쳤다. 이들에게 항쟁체험은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체험이지만, 목숨과 생명을 파괴하는 현장에서 느꼈던, 언어화 될 수 없었던 슬픔과 격앙, 절망과 분노의 감정이 뒤엉켜 있었으므로, 항쟁의 체험과 기억은 무의식적인 타자로, 몸의 감각과 느낌으로 더욱 강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최○○씨는 최후항전 당시 총에 맞은 친구의 “끔찍끔찍하는 눈”과 “몸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옷을 적셨던” 경험이 “죽음과 삶이란 생각”의 경계가 사라진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까지 “5·18”을 견디게 하는 원천이었다.(최○○; 5·18기념재단, 2007c) 하지만, 그러한 존재의 이유가 이들에게 논리적인 언어로 쉽게 설명되어지지 않는다. 박○○ 씨도 최후항전에서 목에 총을 맞았을 때 “피”의 느낌과 자신을 구출하고자 시도했던 동료들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심상과 감정으로 남아 있다. 그토록 많은 죽음들, 이러한 죽음이 발생한 이유, 가해자에 대한 인식, 정치적 상황, 민주주의와 같은 것을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젊은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생애사적 사건들은 ‘주격 나’의 충동에 의해 타자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시켰던 사건이었다. 또한 그러한 체험은 항쟁이 종료된 이후, ‘목적격 나’의 일반화된 타자로 형성되어 의식화된 규범으로 자리하면서도, 여전히 의식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억과 체험으로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 남겨지게 된다.

3) 상무대 외상: 폭행, 권리와 가치의 부정, 그리고 저항

불의에 저항한 대가로 기동타격대에게 돌아온 것은 상징폭력이 동반된 잔혹한 고문과 폭행구타였고, 이러한 외상은 이들의 모든 항쟁 체험을 봉쇄시켰다. 신체의 파괴를 통해

정신과 언어를 말살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는 기동타격대의 '자유'와 '공동체'의 항쟁체함에 대한 '빨갱이', '폭도',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이어졌다. 기동타격대는 최소 5개월에서 10개월을 고문구타 속에서 지내야 했으므로, 이와 같은 신체적·정신적 폭력의 지속상태는 만성적인 트라우마를 형성하게 되는 결정적인 외상사건이었다.⁹¹⁾ 장기간의 학대를 통한 심리적 지배는 공포감의 조성-간헐적 보상-고립이라는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과 신념을 받아들이게 되며, 자발적인 노예가 되어, 내적 자율성과 인간적인 연결을 포기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수들은 자신의 모든 자원을 끌어 모아야만 가해자에 대한 정서적 의존을 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수만큼 준비나 정치적 의식, 도덕적 지지가 없는 사람들은 대개 어느 정도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Herman, 1997: 147) 기동타격대의 대부분이 정치적 고문에 대한 정보나 신체적 학대를 견디어 내기 위한 정신적 자원⁹²⁾, 혹은 지지자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 신념을 지녔던 운동권 집단에 비해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단순목격자나 부상자와는 달리 적극적인 항쟁의 체험 속에서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었던 자존감과 협동의 체험 등이 외상을 완전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수 있다. 또한 김○○ 씨처럼 교도관의 얼굴을 사정없이 구타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저항행위를 통해 이들은 심리적 속박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지식인 및 학생들과의 교류는 정치적·사회적 지식을 얻음으로써 인식의 틀을 확장하는 계기였다.

4)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동타격대에게 5월민중항쟁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통해 자존감을 확장시키고, '자유'의 감정을 느낌으로써 정치적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외상사건'이었다. 따라서 죽음의 위협, 살상, 살상의 목격 등의 외상체험과 동시에, 그러한 외상사건에 상호 협동으로 대항하였던 기동타격대의 체험은 어느 정도 '보호요인'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외상에 대항하고자 했던 시민들 간의 헌신적

91) Herman은 단일외상에 대한 PTSD와 달리 감옥, 강제수용소, 컬트종교집단, 성매매 집결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등에서 일어나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외상은 피해자의 심리를 속박시키는 과정이 동반되면서, 복합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PSD)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Herman(1997)을 참고.

92)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일한 외상의 경험할지라도 그러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지닌 해석체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외상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1-2-2) 절을 참고할 것.

인 노력과 교감의 과정이었고, 이 과정은 외상의 충격으로 발생하는 공포, 분노 등의 극도의 흥분상태 속에서도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희열감을 느끼고, 즉각적인 실천이 가능한 각성상태가 복합적으로 존재했던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의 형성과정이었다.

고문구타가 일상화된 상무대 수감생활은 항쟁보다 더욱 가혹한 폭력의 지속상태로서 만성적인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했던 시기였다. 앞서 살펴본 PTSD 측정결과에 의하면 ‘심각한 PTSD’는 기충민 비율이 높은 부상자 집단이 22.6%로, 전문가 및 지식인 비율이 높은 구속자 집단보다 3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5·18기념재단, 2006a)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구속자 집단은 고문구타로 인해 부상자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신체적 폭력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다양한 이유로 인해 PTSD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동타격대는 기충민중이었기에 정치폭력 등에 대한 해석체계와 정신적 자원을 지닐 수 없었던 점은 취약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항쟁 당시의 저항과 연대의 경험들 때문에 외상에 대한 보호요인 또한 존재한다.⁹³⁾

따라서 기동타격대를 포함한 항쟁주체들의 트라우마는 이와 같은 ‘취약요인’과 ‘보호요인’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들의 트라우마티즘은 단순한 피해자로서 다루어질 수 없으며, 구속자 집단의 트라우마티즘으로만 이해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기충민중 출신의 저항집단이 정치폭력에 대응하여 형성해 간 트라우마티즘은 또 하나의 유형으로 분석되어야만 한다.

2. ‘5월정신’을 향한 인정투쟁과 트라우마티즘 극복 전략

1) 80년대의 사회적 환경

기동타격대는 내란에 동조한 폭도집단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에 석방 이후 이들은 일상적인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이들은 중요한 시위와 정국 앞에서 원격지 격리, 연행 등에 노출되는 등 기본적인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없었고, 고문후유증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와 지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93) 실제로 기동타격대 집단의 PTSD와 부상자 집단의 PTSD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기동타격대가 체험한 적극적인 항거의 체험은 부상자 집단보다 PTSD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고문구타의 정도, 석방 이후의 생활환경 등 복합적인 변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기동타격대는 외상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어려움과 구속경험이 장애가 되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열악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지냈다. 정부는 단순가담자 및 피해자와 주동자 집단을 분리시켜 전자에게는 각종 회유책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였지만, 후자에게는 경제생활의 기회조차 차단시켰다.⁹⁴⁾ 더구나 항쟁 당시 20대 전후의 주변부 노동자 계층이었기 때문에 마땅한 기술도 없었고, 고문으로 망가진 몸과 정신으로는 직장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기동타격대원의 다수는 기초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갖기 어려웠다. 일부 기동타격대원들은 80년대에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지만, 빈곤 상태로 인해 반복되는 생활스트레스로 가정불화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국가로부터의 시민권의 박탈로 인한 권리의 부재, 안전의 부재 상태 속에서도 5·18 참가자들에 의해 결성된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등의 5월단체들과 광주의 사회운동단체, 그리고 항쟁체험을 나누었던 광주시민들의 공동체는 이들이 도덕적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인정의 공간이 되었다. 신군부가 5·18 참가자들에게 취했던 강경억압 정책에 대항해, 오히려 당사자들은 극단적인 적대성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저항하였다. 왜냐하면 5월민중항쟁이라는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울분을 체험한 직후, 강한 집단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들에게는 조직 참여문제가 합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저항행동은 “합리성 이전의 원초적 감정에 기초한” 것이었고, 합리적 선택의 이론의 추론과 달리 운동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투명했기 때문에 큰 개인적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지만, 주요 활동가들은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투쟁에 매진하였다.(나간채, 1997)

2) 5월투쟁을 통한 인정투쟁: '5월정신'의 형성

(1) 항쟁체험을 통해 형성된 기동타격대의 '5월정신'

기동타격대원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나누기 위해 외상을 체험한 사람들 간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이○○ 씨 등은 '기동타격대 모임'을 결성하기 위해 경제적인 불안정과 정부의 감시와 탄압을 감수하고 각지에 있는 기동타격대원들의 조직을 위해 노력했

94) 이○○ 씨에 의하면 그 당시 기증민 출신 구속자의 생활처지가 부상자나 유족보다 훨씬 열악했다고 한다. 실제로 단순가담자로 판명된 사람들에 대한 신군부의 회유책은 이들에 대한 직업알선과 생활비 지급, 묘지이장 위로금 지급, 유흥오락실 운영권의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폭도와 주동자로 판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립과 감시의 정책이 취해졌다.

다. 왜냐하면 기동타격대 동지들은 가족이나 형제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항쟁의 체험과 트라우마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집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함께 묻쳐야만 과거의 기억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서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생존의 방법이였다. 모임을 결행할수록 정부의 감시와 탄압은 증대하였고, 가정생활도 어려워졌지만, 이들은 그럴수록 더욱 더 다양한 방식으로 결집을 시도하였고, 결집을 통해 항쟁 당시의 고통을 함께 애도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저항행동에 참가하여, 자신의 심리적 속박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동타격대가 항쟁 이후에 형성한 ‘5월정신’은 항쟁공동체와 최후항전의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동타격대의 항쟁체험은 ‘총을 들고 시민들을 지키고, 시민들은 주먹밥으로 다시 그것에 보답했던’ 공동체로서, ‘목숨을 던져 이웃과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걸고서라도 죽은 사람들의 넋을 달래야만 했던’ 감정으로 표현되었고, 항쟁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후항전에서의 참여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헌신적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받는 것, 광주시민들과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 1차적인 생존의 욕구를 초월하여 항쟁정신을 지키는 것은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생애사적 과제가 되었고, 이들이 형성한 ‘5월정신’의 핵심적인 의미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5월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석방 이후에도 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시민들과 함께 하는 5월투쟁에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인정투쟁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5월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항쟁 당시 획득했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었고, 폭도가 아닌 5월투사로서의 명예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이들의 ‘5월정신’은 ‘죽은 영령들에 대한 부채감’과 연관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감정은 기동타격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던 광주시민들의 집단적 정체성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동타격대의 구술에서 90년대까지 5월투쟁에 대한 두드러진 기억들을 차지하는 것이 주로 무명열사, 암매장 시신 발굴, 망월동 묘지 관리 등이었던 점을 보았을 때 항쟁 당시 사망자들에 대한 기억은 ‘5월정신’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였다. 이들은 최후항전 당시 사라졌던 ‘사무라이’를 비롯한 무명열사들에 대한 기억과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인해 현재까지의 사망자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이름 없는 죽음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기동타격대에게 기억되지 못한 죽음을 되새기고, 그러한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노력은 다

른 집단에 비해 무척 특별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주로 암매장된 시신을 발굴하거나, 행방불명자들을 찾고 망월동 묘지를 관리하면서 그들의 '5월정신'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부채감을 넘어서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후항전에서 '기동타격대'의 역할 및 그들이 활동했던 방식은, 자연스럽게 5월투쟁의 각종 시위에서 화염병조 및 사수대 역할로 이어졌다.

(2) '오항동'의 결성과 새로운 타자의 등장

한편 기동타격대는 상무대 영창에서, 그리고 5월투쟁의 과정에서, 지역 운동가들 및 재야 지식인들이 일반화된 타자로 등장한다. 항쟁체험의 기억이 무의식적인 감정과 심상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5월민중항쟁에 대한 인지적이고 의식적인 인식이 가능했다. 즉, 항쟁에 대한 역사적 가치, 사회적 의미, 정치적 상황, 사회운동의 의미에 관해 배우면서 항쟁체험을 언어화하고, 의식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5월투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고, 민주화 운동 및 민중운동의 담론을 공유하는 운동권 집단과의 동일시를 통해 새로운 자기존중을 지닐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항쟁 및 수감생활 당시의 비합리적 체험을 적극적인 의미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였으며, 5월공동체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 씨에게 구속자들의 단체인 '5·18민중항쟁동지회(오항동)'이 결성되어 참여하는 과정은 "두 번째로 운명이 바뀐 계기"로 설명되고 있다. 그는 오항동에 소속되어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잊고 싶었던 "과거가 되살아나고" 고통스런 감정의 "덩어리가 통째로 누르기" 시작했지만, 오항동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5·18 사람"으로서, "5·18을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자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정투쟁은 '주격 나'의 충동이 일반화된 타자의 인정관계의 확장을 요구하는 과정이기도 했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일반화된 타자로부터의 무시의 경험도 동반되었다. 박○○ 씨는 대학생들의 토론회에 초대받았을 때, 자랑스러움보다는 타자에 의해 "영웅화"된 것으로 느꼈으며,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석공이었고, '건설세계'에 있던 최○○ 씨는 항쟁을 거치면서 왕성한 운동가로 변모하게 되는데, 그 역시 학생들과의 교류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담론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학생집단과의 교류 속에서 번번이 소외감을

느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감옥에 다녀오면서까지 역사·철학·정치와 관련된 분야를 독학하면서, 학생들로부터의 인정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현재적 관점에서는 자신에게 “큰 병이 되어버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이 속해 있었던 구속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학생들 및 지식인의 비율이 높았고, 전국적인 민주화운동과 연계된 명망가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동타격대는 고유의 ‘5월정신’을 통해 인정투쟁을 벌였지만, 더욱 확장된 인정관계를 획득하지 못하고, ‘행동부대’의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다. Mead(1934)에 의하면, 일반화된 타자는 ‘주격 나’의 개성화 요구를 통해, 단일한 정체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정체성들로 구성되고 변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성화의 요구는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인정 관계의 확장을 모색해야만 한다. 80년대가 지나면서 기동타격대는 일반화된 타자와 불일치하는 ‘주격 나’의 충동, 즉 기충민으로서 지닌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구속자단체로부터 분립함으로써, 그러한 충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하지만, 80년대까지는 구속자들 및 지역 운동가들과 함께 했던 투쟁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활동이 “깨끗한” 정신으로 참여한 “보람된” 투쟁들로 평가된다.

(3) 5월공동체를 향한 인정투쟁

기동타격대는 이처럼 일반화된 타자로부터 기대되어지는 높은 수준의 가치합리적인 정체성을 구성하여, 5월단체를 넘어서 광주시민들로 구성된 5월공동체로부터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기동타격대는 국가로부터 배제된 ‘비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비타협적인 투쟁 속에서, 실제적인 의미의 국가를 광주시민들로 구성된 5월공동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5월공동체가 이들에게는 가장 확장된 형태의 인정방식인 ‘가치공동체’로 느껴졌으며, 이를 통해 명예와 존엄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더불어 5·18의 진실 규명을 핵심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았던 대학가와 재야의 민주화운동 집단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들의 구술에서는 이 집단이 ‘가치공동체’로서 부각되지는 않는다.⁹⁵⁾ 따라서, 이들에게는 5월단체 및 광주시민들로 구성된 5월공동체가 일반화된 타자로 존재했

95) 이것은 오래된 과거의 기억이기 때문에 구술과정 속에서 생략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간채(2007a)가 조사했듯이 기동타격대를 포함한 기충민중 출신 참가자들이 1989년에 ‘5·18구속자동지회’를 결성하여 오항동으로부터 분립하여 나갔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항동이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 경향과 이들에게서 느낀 소외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분립 후에 불우이웃돕기 등의 온건한 활동에 치중해왔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전국적인 재야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실질적인 공감대를 갖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며, '5월정신'이라는 규범을 상호주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80년대까지 기동타격대의 '5월정신'은 5월공동체의 일반화된 타자로부터의 적극적인 인정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5월공동체를 통해 기동타격대는 자기 가치 부여를 확립함으로써, 5월민중항쟁 당시 형성했던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었다.

3)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의 확장을 통한 극복전략

Herman(1997)은 트라우마의 회복요건을 1) 안전을 확보하고 인식하는 단계, 2) 외상기억을 자신의 삶으로 통합시켜 애도의 시간을 갖는 단계, 3) 파괴된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공동체와 연결되는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기동타격대는 이러한 도식을 통해 볼 때, 1단계의 회복요건 즉, 정서적 지지, 안전의 확보, 생계의 유지 등 기초적인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기동타격대의 결집 및 5월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2단계의 회복, 즉 외상기억을 불러내고, 애도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5월단체 및 5월공동체로부터의 인정투쟁을 통해 3단계의 회복요건, 즉 단절된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공동체에 대한 연결의 복구가 가능했다.

먼저, 석방 직후 수년 간 기동타격대는 항쟁 및 상무대의 기억에 대한 망각의 시간⁹⁶⁾, 체념의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망각의 시간은 항쟁과 고문의 체험을 나눌 수 있는 정서적 지지의 부재, 치유의 공간 부재라는 조건 속에서 더욱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들은 가족에게도 외상 체험을 말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경험 자체는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오히려 고립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은 외상기억을 망각하는 방식을 통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일상의 의식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박○○ 씨는 석방 이후 수년 간, 항쟁과 상무대의 기억을 “깨끗이” 잊어버린 채, 항쟁 이전의 일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생활을 했고, 엄○○ 씨는 5·18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잊고 서울에서 오로지 생업에 종사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밀쳐진 기억의 파편은 다시 침투 증상으로 솟아오르게 되고, 재경험으로 당시의 외상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특히 기동타격대를 포함한 구속자들은 당시의 고문과 폭행 및 가해지로부터 느꼈던 고통, 공포감, 수치, 모욕의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가해자에 대한 복수, 공격, 도피의 증상이 주변인을

96) 이들이 망각상태는 일반적인 외상 환자들의 회피(억압) 증상의 하나로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일상적인 자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외상 후 기억 상실' 과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향해 나타나기도 했다.⁹⁷⁾ 남○○ 씨는 경찰서에 난동을 피우고, 전투환이 나오는 TV를 부수는 등 개인적인 방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 기동타격대원들의 가족들 역시 이들의 고문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았다. 고통을 잊기 위해 마시는 술은 자신의 감정과 신체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시 주변인을 향한 공격적 행동 및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기민음을 형성할 수 있는 가족의 공간에서의 인정은 축소되었다. 그 결과 기동타격대의 60%가 이혼을 경험하거나, 가정불화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등, 가족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는 더욱 축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외상 후 증상과 더불어, 이들에게는 의미를 부여하는 신념 체계의 토대가 침식당하고, 자기라는 심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애착과 의미의 체계에도 흔들렸다.(Herman, 1997) 반복되는 고문의 후유증과 더불어, 심리적 속박으로 인한 불신과 존재론적 비관 등을 경험했던 나○○ 씨와 한○○ 씨는 항쟁 직후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이러한 복합적인 트라우마티즘을 넘어서기 위해 회복의 2단계와 3단계 차원의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들이 80년대에 지녔던 트라우마티즘의 성격은 기초적인 단계의 사회적 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인정투쟁이 결합된 것이었다. 이러한 트라우마티즘은 그 스스로 가난과 생존의 욕구를 넘어서 수 있는 청렴성과 결연한 '5월정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구성함으로써 극복되었다. 박○○ 씨, 나○○ 씨, 한○○ 씨 등은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지만, 5월투쟁에 대한 절대우위의 가치부여로 인해 그러한 생활을 사실상 견디어 내고, 초월하였다. 물론 이러한 '초월'은 가족들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5월투쟁에서 트라우마의 상징인 공권력에 대항하여 신체적 위협과 폭력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역할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했던 안전의 욕구를 스스로 넘어섰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격렬한 투쟁이 5·18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집단적인 행위전략이었고, 이러한 인정투쟁이 1단계의 안전과 건강, 경제적 안정과 가족을 통한 정서적 지지의 문제보다 더욱 강렬한 욕구로 다가왔던 것이다.

즉, 기동타격대는 80년대에도 항쟁 당시와 유사하게 외상사건에 대해 대면하고, 가

97) 권력감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외상경험자에게 무기력했던 가해의 경험이 재현되면 주변사람들을 향해 공포에 대항하려는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된다. 많은 구속자들은 악랄한 고문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매일, 수도 없이 생각한다고 밝혔다.('KBS스페셜 자살자 심리부검보고서', 2009)

해자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함으로써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무명 열사와 도청의 기억을 회피하거나 망각하지 않고, 불러냄으로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선 공동체의 삶'이라는 항쟁의 체험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체험은 박○○ 씨가 그러했듯이 고통스러운 감정의 "덩어리"를 통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고통에 대면함으로써 외상사건에 대한 기억을 통합하고, 집단적으로 애도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애도와 추념은 80년대 전반에 걸쳐, 5·18 참가자들, 특히 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했던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의 표현이기도 했다. 80년대의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은 항쟁체험의 반영이었지만, 그것은 지역의 사회운동 집단 및 인물들과의 만남으로 더욱 의식적이고, 확장된 형태를 띠었으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외상증상을 지속적으로 견디어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또한 5월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집단정체성의 분화로 인해, 집단 간 상호주관적인 인정투쟁이 확장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따라서 80년대의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은 이들에게 더욱 많은 생애사적 과제를 던져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5월정신'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타자로 존재하지 않았다. 앞서 말한 구속자 집단 내에서 배움의 차이로부터 오는 소외감과 더불어 이들에게는 여전히 몸과 마음의 무의식적인 기억과 감정들이 언어화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지니지 못했고, 따라서 이들의 행위전략이 PTSD를 회복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씨는 90년에 이르기까지 10년간, 2-3일에 한 번씩 마비증상으로 인해 병원에 실려 가야 했고, 90년 이후에 이러한 증상은 다소 나아졌다. 시기 별로 다른 기동타격대의 증상이 어떠했지 구술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안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 이들의 극복전략은 단지 PTSD로 인한 심리적 불안상태를 끊임없이 '견디어 내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3. '5·18자원'을 향한 인정투쟁과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1) 90년대의 사회적 환경

87년 6월항쟁, 노동자 대투쟁, 직선제 개헌 등의 민주화 흐름이 진전되면서, 80년대의 5·18에 대한 강경억압과 위협정책은 90년대 초반에 이르면 방어적인 억압정책

으로 변화하게 된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1990년과, 1993년 각각 5·18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시행하였고, 형식적으로나마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었다. 90년대 후반에 이르면 5·18특별법이 제정되어,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고, 기념사업이 조성되면서 5·18과 관련된 과거청산이 마무리된다. 이러한 정치정세의 변화는 90년을 전후하여, 5월공동체가 지녔던 강한 일체감의 분화효과를 가져왔다.⁹⁸⁾ 비타협적인 저항운동 집단이었던 5월단체는 이러한 분화효과 속에서 이합집산 하여 13개까지 분립되기도 하였다. 또한 5·18과 관련된 제도적 정책들이 지원되고, 5·18 참가자들이 부분적으로 제도화된 정치 공간으로 진출하면서, 5·18과 관련된 의제들은 대중화되고 자원화 되었다. 따라서 비타협적 저항운동이었던 5월운동 역시도 합법적인 공간의 확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면서, 갈등도 발생하였다.

기동타격대는 공격적인 억압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됨에, 신체적 안전과 감사·탄압에 따른 정서적 불안은 어느 정도 축소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80년대의 5월투쟁의 과정 속에서 극도로 악화된 경제적 상태에서, 피해자 보상금의 지급은 이들의 경제생활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동타격대는 보상금을 그 동안의 부채를 갚거나, 집을 마련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으로 인해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마땅한 기술이 없고, 몸이 성치 않아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실패하고 다시 예전의 생활수준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80년대와 마찬가지로 5월투쟁을 계속해 온 사람들은 생업을 뒷전에 두었고, 가족들이 계속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에 기동타격대가 경험했던 주요 사건들은 구속자 단체 내부 갈등, 보상금 수령으로 인한 5월단체의 갈등 및 허위 보상금 신청으로 인한 논란, 5·18기념재단 결성 과정에서 기동타격대 집단의 인정투쟁 과정, 광주시민들의 5·18에 대한 관심을 축소 등이다. 기동타격대의 구술 속에는 90년대의 생애사적 사건들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강력한 감정과 주장이 담겨 있으며, 당시의

98) 여기에는 신군부권력에 영합했던 지역 내 기득권세력의 성장, 대통령 선거에서 이 지역출신 후보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지역적 소외, 지역차별을 개선하고자 했던 지역운동이 가시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데 대한 무력감, 선거정국을 통해 확인되고 심화된 고립감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나간채, 1997: 147-148)

사건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반감이나 실망감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2) '5·18자원'을 둘러싼 인정투쟁

(1) 5월단체로부터의 인정투쟁

사망, 부상, 고문, 정신적 충격, 정보기관의 감시와 탄압 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5·18 참가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보상은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5월민중항쟁에 대한 진실규명, 책임자처벌이 동반되지 않았던 '광주보상법'은 많은 5·18 참가자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정부의 보상정책은 항쟁 참가자의 공로를 존중하여, 항쟁공동체에 대해 집단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5·18 참가자들을 단순히 피해자로 간주하고 상해 정도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보상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수의 5·18 참가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특화시켜서 더 많은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효과에 의해, 항쟁에 참여한 방식은 달랐지만 집단적인 정체성을 공유해 온 부상자, 유족, 구속자들은 항쟁 참여의 경험과 피해를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피해의 형태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특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회원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막대한 보상금을 타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5월단체가 시로부터 공공사업권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다른 단체의 사업권과 일자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일부 회원들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여전히 5월단체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통합적으로 5월운동을 지속하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5월단체는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즉, 5월단체는 '5월정신' 실현을 목표로 했던 투쟁공동체에서, 보상금 수혜자 연합의 성격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합리성 이전의 원초적 감정을 공유해 온 '가치공동체'로서의 일반화된 타자는 오히려 상호적인 권리를 보증하는 관계로, 나아가 개인의 권리 우위를 획득하고, 경쟁하는 집단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집단 정체성의 변화에 따라서, 기동타격대의 인정투쟁의 성격도 변화하게 되고, 이전의 정체성과 충돌하면서 심리적 갈등상태에 놓이게 된다. 기동타격대는 사건의 진실규명을 기본 전제로 하는 5월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나, 항쟁 당시의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항쟁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진행하

지 않고, 학살의 책임주체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진행된 ‘광주보상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매진했던 5월투쟁의 목표가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쟁 당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항쟁 참가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항쟁의 가치와 의미를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대신, 금전적 보상으로 이들을 입막음하려는 정책은 기동타격대가 추구했던 ‘5월정신’을 균열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극도의 경제적 열악함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광주보상법’에는 반대했지만 보상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심리적 갈등 상황에서 기동타격대의 인정투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하나는, 구속자 집단이 지닌 피해와 기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또한 구속자 집단 내부에서 최후항전에 참여한 기동타격대의 공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권리에 대한 인정투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자원화’에 반대하여, 계속적으로 ‘5월정신’의 순수성을 강조함으로써, 관련자들로부터의 도덕적 우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방식이 그것이었다.

(1) 구속자로서의 인정투쟁

기동타격대는 구속자로서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것은 5·18 참가자들 중에서도 구속과 고문으로 인한 극단적인 피해의 양상을 강조하고, 이에 해당하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씨는 일자리 지원, 공공기관의 경제적 지원 등을 부상자회 등 타 단체보다 적게 받아왔던 과정은 항쟁주체였던 ‘구속자’들을 명예롭게 대우하지 못한 불평등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부상자들로부터 구별짓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80년대 자녀들의 죽음으로 순수한 5월투쟁에 참여했던 유족들과 달리, 직계 가족이 아닌 유족들이 ‘5월정신’을 담지 한 당사자들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속자 집단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부상자 하고도 우리들하고 자꾸, 그런 것을 우리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실제로 해요 보면, 지그들은 다 잘 살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연봉이 뭐 몇 천만원 씩, 구속자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어디 가면 좀 그 성격들이 좀 난폭하다랄까, 조금 그래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부상자는 어~떻게 하든 간에 다 취직해서, 지그들 뭐 안 되면 자식 거까지 취직시켜서 다 가잖아요, 옛날부터 취직 다 시켜줬어요, 그거는, 뭣을 하든 간에, 우리들은 자체가 안 됐잖

아요, 구속자들은, 공께, 어영부영 좋은 나이, 좋은 나이 다 보내고 40대를 만나분 거죠, 공께 이
 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중략) 지금 인제 이렇게 보시면 되요, 지금, 유족은 사실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유족은, 유족은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그는 보면, 자기 뭐 형이 나
 와서 한 게 있고, 자기 부모들, 실질적으로 자식을 버리고는, 지금 인자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안남
 았어요, 그러든 우리하고 게~속 말씨름하고 실질적으로 (xxx), (중략) 실지로 구속자들은 다 당사
 자들이잖아, 자 봐보십시오, 부상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공장 차려
 갖고도 하고 여러군데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속자 같은 경우는 회원이 엄청나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뭣을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속자 내로는(?) 사업권을
 주들 안해요, 우리도 뭣할려면 부상자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주들 안해요, 실질적으로 공
 께 자기들이 공법단체 할라 하겠어요, 자기들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청소용역이랄지 이런 거
 다 갖고 허잡아요, 그런게 인제 실질적으로 유족이나 부상자 같은 경우는 회에서 회돈(회비)이 남
 아 돌아가니까, 회비도 안건으면서 실질적으로 요 받은놈 갖고 나눠줘요, 거꾸로 상품권 같은 거,
 나눠줘 볼지, 구속자는 그런 게 없어요, 아 회비도 쓰기 캅캅한데, 회비도 안 내서 쓰기 답답한다,
 회원이 한, 공식적으로 나온 회원이 한 천명 가량 넘은디, 얼마나 힘들것요,(이○○: 8)

또한 구속자 집단은 항쟁에 단순 가담했던 사람들이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많은 보상액을 받은 것과 달리, 고문후유증, 항쟁 당시와 80년대의 헌신적인
 활동을 증명할 길이 없어, 5·18로 인해 얻은 피해와 상처, 헌신과 기여를 충분히 인
 정받지 못했다고 느낌으로써, 보상정책이 구속자를 소홀히 대했다고 보고 있다. 실
 제로, 많게는 3억 가까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 이들은 보상액은
 ‘상-중-하’로 나눈다면 ‘중-하’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⁹⁹⁾ 항쟁에서의 ‘기여’와 ‘피
 해’에 비해 이들이 받았던 보상금은 당사자들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
 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¹⁰⁰⁾

기동타격대는 또한 피해의 정도만이 아니라, 구속자 집단이 항쟁의 주체였던 점,
 계엄군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구속수감되었던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단순 참가자들과 다른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투쟁은 5월민

99) 국가보상금은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뒤늦게 마련된 구속에 대한 피해보상 역시 산업
 재해법에 의해 구속일수 당 월실수액에 해당하는 노동력상실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민주화’
 를 위한 항거기간에서 이들의 기여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여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아직까지 상무대에서 발생한 고문과
 구타의 과정, 책임성의 문제는 공식화되지 않았고, 다만 1일 40,200에 해당하는 구속보상금만이 지급되었다. 이들
 이 고문과 구타를 당했던 사실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100) 박○○ 씨의 구술에서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머지 세 명의 구술자와 구속부상자 회
 원의 구술 속에는 보상액에 대한 불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항쟁 당시 참여방식의 차이, 즉 항쟁 당시 단순히 부상당했던 사람들과 대비하여 항쟁에 “끝까지 갔던” 사람들로 “5·18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재해석을 통해 나타난다.

구속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글고 5·18은 보면 지들끼리 다 한 거 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되니까 마찰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니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끼리 얘기는 “니기는(너희는) 그냥 지나가다가 돌맹이 맞아 분똥” 우리 실제 그래 불거든요, 근 디 이야기 한 데 보면, 지그들이 어서, 구석에서(?) 다니다 보면, 우리도 인자 요즘은 싸움을 안할 라고 아예, 왜냐면 똑같은 사람 되어 붙잡아요, 궁게 그런갑다 하고 우리 앞에서는 5·18 얘기를 잘 안합니다, 그 사람들도, 왜그냐면, 특히 타격대 같은 경우 있으면 다 말 안해부려요, 우리는 끝까지 가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말 못하고 와서 5·18 자랑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궁게 인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지로 보면, 조서 내용을 보면 알아요, 80년 당시 조사내용 받은 것이 다 똑같죠, 맞죠, 거의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인자 구속자가 소외받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이00: 8-9)

5월단체 내부집단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은 비단 보상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으며, 간부진이나 지식인 집단이 기층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나 정치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한 의견차이가 그 이유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체성의 분화와 갈등으로 인해 5월단체는 88년을 전후하여, 13개 단체까지 분화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주먹밥과 젊은이들의 총이 서로를 지켜주었던” ‘나눔의 공동체’는 5·18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지고, 정치적 자원의 활용가치가 높아지면서, 서로의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이해당사자 집단으로, 한편 공로와 기여를 다루는 ‘명패다툼의 공동체’로 변화되었다.

(2) 지식인 출신 구속자에 대항하는 인정투쟁

기동타격대에게 ‘오항동’은 상호주관적인 인정관계를 통해 5월투사로서 사회적 지지를 확장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지식인 집단으로부터의 소외감에 대항하는 ‘주격나’의 충동이 잠재되어 있는 타자였다. 그런데 90년을 전후하여, 삶의 처지가 개선되지 않고, 단체 내부에서도 조직의 실무와 행동부대 역할만이 반복되는 기층민들에게, ‘오항동’ 출신 지식인들이 제도 정치권에 진출하고, 5·18자원을 통해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과정은 ‘무시’와 ‘불인정’으로 경험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일반화된

타자에 대항해 권리 인정관계의 확장을 요구하였고, 일반화된 타자의 규범과는 다른 정체성을 구성하였다. 89년 기동타격대원들은 기층민중출신으로 구성된 '구속자동지회'로 분립하여 정체성들을 특화시킴으로써, 일반화된 타자에 의해 구현된 규범들을 지속적으로 해체하고, 공동체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기동타격대는 지식인들로부터 느낀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인들이 '기동타격대의 최후항전 참여'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구속자 집단의 도덕규범은 항쟁정신에 있으며, 따라서 항쟁에서 최고의 공로를 기여한 집단에 대한 권리의 인정과 공동체의 의무를 요구한 것이다. 기동타격대는 자신의 개성화 요구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이를 위해 기동타격대는 구속자 집단 내부에 전남대 및 조선대 출신 엘리트 집단 간의 경쟁적 갈등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대학출신 참가자들을 후견인으로 삼아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기도 했고, 90년대 후반 학살자고소고발 운동 및 기념사업 투쟁 등 5월투쟁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여, 투쟁가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최○○ 씨의 경우, 독학을 통해 역사·철학·사회 이론을 공부함으로써, 지식인들로부터의 무시를 벗어나 인정관계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5·18재단의 건립은 구속자들이 다수의 정체성들을 통합하고, 갈등을 넘어서고자 했던 시도였으며, 기동타격대 역시도 이러한 통합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기동타격대 회원을 재단 이사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관계 확장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동타격대는 5·18기념재단 내에서 주변화 됨에 따라 다시 한 번 무시와 불인정을 경험하였다. 또한, 기층민중들의 생계와 복지 등 단체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기대하였지만, 이것은 5·18의 의제를 다양한 영역 및 지역으로 확장하고, 문화·학술 활동을 통해 '5월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던 전문가 집단의 관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처럼 구속자들 내부에서 주변화 되고, 권리 인정에 대한 무시를 경험하면서, 이들은 지식인들을 향한 실망감을 적대감의 형태로 표출하였다. 그러한 적대감은 항쟁 당시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재해석을 통해, 즉 항쟁 당시 지식인들의 '도망'과 시민들의 '귀가' 속에서 기동타격대의 '저항'이 '5월정신'의 핵심적인 '공훈'이었다는 해석체계를 형성함으로써 표현되었다.

아마 그 부마사태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마사태가 3시간 만에 진압이 됐거든요. 당시 차지철이가 탱크 몰고 와서 탱크로 밀어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주5·18도 탱크, 장갑차 바로 와서 밀었어

요. 하지만 거기에 손들고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중략) 지금 와서 마치 그 자들이 총 들고 모든 것을 다 한 것인양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예요. (큰 목소리로) 나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자들이! 지금 와서 멍석 깔아놓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융합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자들이 자 “5·18정신의 숭고한 정신은 뭐였냐? 총을 들고 끝까지 항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손을 들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야만이 5·18정신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김○○: 16-17)

한편, 박○○ 씨는 “나는 민주화한 것 아니다”, 혹은 ‘나는 민주주의 정신이 뭔지 모른다’는 답변을 스스로 형성함으로써, 지식인들의 정체성과 자신을 구분하고자 했다. 그것은 80년대의 오항동의 투쟁을 “꽃꽂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진술과 상반된다. “5·18의 꽃”으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던 5월투쟁이었지만, 현재적 관점에서 오항동이라는 일반화된 타자는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일반화된 타자는 내면적으로 부정되고, 상반된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3) ‘5·18자원화’에 대항하는 인정투쟁

박○○ 씨는 당사자들의 보상금 갈등과 ‘5월정신’의 ‘변질’을 극복하고자, 자신이 나름대로 구성했던 ‘청렴성’에 기반 한 ‘5월정신’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는 일자리 알선의 대가를 주고받는 구속자회 회원들에 실망감을 느꼈고, 5·18문화회관 뒤에서 구두담이를 하는 5·18 참가자의 모습을 “가난하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사는” 도덕적 타자로 구성하였다. 그는 보상금 수령 이후 무계획적으로 보상금을 소비하는 당사자들의 모습, 정부의 보상금과 광주시의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따내려는 ‘물질화’된 5월단체를 벗어나고자, 연고지 없는 서울로 올라와 그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찾아 나섰다. 박○○ 씨에게는 경제적 빈곤보다, 5·18 참가자들이 ‘영웅화’와 ‘자원화’를 통해 5·18을 이용하는 모습이 더욱 큰 상처가 되었고, 따라서 그 스스로 5·18 참가자로서의 인정투쟁을 거부하고, 평범한 노동자로서 자립하는 생활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만의 ‘5월정신’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강○○ 씨의 경우도, 오랜 시간 5월투쟁의 원칙적인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꾸준히 가정생활과 생업을 유지함으로써, 자립적으로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안정을 얻고자 노력하였고, 염○○ 씨도 큰 욕심 없이 평범한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평

생에 걸쳐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렸던 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생업을 유지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견디어내는 것이었므로, 가정생활과 생업의 꾸준한 지속 자체가 이들에게는 각고의 투쟁과정이었다.

(4) 인정투쟁의 실패와 심리적 갈등구조

기동타격대는 5·18이 자원화되는 상황 속에서 나름의 전략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지만, 90년대를 거치면서 이들의 권리관계는 크게 확장되지 않았고, 경제적인 여건 역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5·18의 자원화에 대항하는 인정투쟁의 결과 역시 더욱 큰 도덕적 상처와 경제적 지지의 축소로 이어졌다. 이들에게는 “투쟁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현실”이 풀리지 않는 딜레마로 다가왔지만, 이들에게 ‘5월정신’은 80년 5월에 죽음과 피의 체험을 통해 각인된 항쟁공동체와 최후항전의 일반화된 타자가 지워지지 않은 ‘주격 나’의 충동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를 향한 투쟁과 실천을 포기하는 것은 정체성이 훼손당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러한 타자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90년대는 많은 5·18 참가자들의 피해에 대한 인정투쟁 및 공헌 다툼 속에서 광주시민들로부터의 지지마저 축소된다. 결과적으로 기동타격대는 정서적·경제적 지지의 부재로부터 오는 자기믿음의 축소, 5월단체의 갈등으로부터 오는 자기존중의 축소와 더불어 광주시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었던 자기가치부여의 상실을 경험함에 따라, 이들은 5월투사로서의 명예와 존엄성을 확장시키기 어려웠다.

3) ‘5월정신’의 균열과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기동타격대는 90년대에 5·18 자원을 둘러싼 인정투쟁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의 투쟁 속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5월투사’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동타격대는 5·18과 관련된 의제들이 금전적 보상의 문제로,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정치적 진출의 수단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면서, ‘5월정신’의 균열을 느껴야 했다. 물론 이들은 5·18의 과거청산 과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정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국가적 인정이 이들의 생활세계 속에서는 직접적인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정으로 체감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반화된 타자의 관계 속에서 이들은 오히려 그 자존감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5월단체 및 5월공동체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 위상이 높아지고, 5·18의

진실이 공식적인 담론으로 형성되었지만, 대외적으로 드러난 명망가들에 의해 대표되는 집단정체성 안에서 기동타격대와 같은 투쟁하는 기층민중들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오히려 위축되었던 것이다.

정부의 감시와 탄압의 소멸과 보상정책으로 이들은 1단계 회복요인 가운데 하나인 신체적 안전 및 기초생활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외상의 상처를 대면하고, 애도할 수 있었던 5월단체로부터의 인정과 가치공동체로서의 5월 공동체로부터의 지지가 축소됨에 따라, 혹은 이러한 단체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이들의 인정투쟁은 개인적인 권리 인정의 문제로 인식되고, 80년대에 가능했던 공동체와의 연결의 복구가 다시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확히 정부가 1단계 차원의 회복요건을 차등적이고 형식적으로 지급하려는 정책을 통해 2단계, 3단계 차원의 회복과 치유의 문제를 덮어두려 했던 의도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오히려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획득할 수 있었던 공동체의 지지로부터 주변화 되고, 도덕적인 인정도 소멸됨에 따라, 5월투사가 아닌 보상금의 수혜자, 피해자, 정치활동의 동원부대로 전락하고, 이 때문에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상처받은 5월정신'과 복합적인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1) 2000년대의 사회적 환경

2000년을 전후하여, 5·18 참가자들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5·18민주 유공자'로 인정되었고, 국립묘지 건립, 각종 기념공간 조성, 학술문화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5·18과거청산의 의제는 마무리되었다. 한편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있었던 광주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세계적인 인권도시 조성 등 5·18의 의제를 세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또한, 분립했던 5월단체들은 90년대 후반,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3단체로 다시 통합되었고, 연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단체로의 승격을 위해 3단체가 통합된 형태의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5·18 참가자들은 80년 당시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실질적인 생활처지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 조사된 PTSD 역시 무척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증상으로 고통 받으며 자살하는 이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제도적 차원에서 5·18에 대한 과거청산은 마무리되었지만, 5·18 참가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명예회복, 생활여건의 개선, 정신적 건강의 치료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기동타격대의 경우, 아직까지도 무직상태이거나, 이직과 실업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혼도 늘고 있으며, 노후에 접어들어 따라 경제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정서적 불안정은 이들에게 더욱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2) '상처받은 5월정신'과 일반화된 타자의 부정

(1) '상처받은 5월정신'

이들의 항쟁체험은 념마주의도 시민군이 되어 자신의 존재감을 획득할 수 있었던 '높낮이 없는 평등성'의 체험이었다. 또한 '총을 들어 시민들을 지키고, 시민들은 주먹밥으로 보답했던' 개인과 공동체가 정서적인 일체감을 형성했던 체험이었다. 이러한 평등한 공동체성으로서의 '5월정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인의 소유물, 혹은 누군가의 독점물이 되었고, 5월단체는 경쟁하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 결과 해방의 공동체를 기억하고, 실현시키고 싶었던 항쟁 체험의 주체들의 기억은 봉쇄되었고, 이들의 '5월정신'은 상처받았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는 동시에 죽음과 피로 각인된 '5월정신'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도구화된 5·18 담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러한 담론은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훼손으로 느껴졌고, 죽은 영령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5·18은 외상으로 인해 정신착란에 시달렸던 사람들, 이들을 돌보아 왔던 가족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지켜져 온 것이었다. 이러한 고통의 연쇄 속에서 만들어진 5·18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 자원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5·18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옆에서 고통과 죽음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며, 이들의 죽음의 이유를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90년대를 경과하면서 '5월정신'은 영웅담으로, 정치선전의 내러티브로 사용되며 도구화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5월투사들과 5·18의 공동체적 정신에 응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크든 작든 비슷한 유형의 실망감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김○○ 씨라고 있어요. 아마 구속후부상자 첫 사망자가 되려나... 그 사람 역시도 고문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 상무대 영창에서 자살미수를 했어요. (중략) 일반인이 되어서 생활을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고,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이 된 거죠. (중략) 멀쩡하던 남편이 5·18로 인해서 미쳤지, 그걸 수발을 했어요, 정신병원 왔다갔다 하면서,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5·18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박○○: 52)

한편, 이와 같은 ‘5월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80년대에 비타협적으로 전개했던 5월투쟁은 기동타격대 자신의 외상후스트레스를 스스로 견디어 내는 과정, 극도의 가난과 생존의 욕구를 초월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그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동타격대의 헌신, 희생, 초월에 대한 애도와 존중, 명예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타자의 존재는 조금씩 사라졌다. 당장 죽어도 “장례비 600만원이 없어 초상을 치르지 못하는” 염○○ 씨의 현실, “구두박스 하나 없어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지원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박○○ 씨의 현실은 5·18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지지기반의 상실을 의미했다. 이들의 ‘5월정신’의 가치와 더불어, 그러한 투쟁의 대가에 대한 권리인정의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이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복잡한 현실은 이처럼 기본적인 요구도 얻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더구나, 5월투쟁을 격려하고, 항쟁의 투사로서 의식적인 성장을 고무해왔던 구속자들로부터 이러한 상호인정이 축소되었기에 상처는 더욱 깊은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상처는 국가와 타지역민을 향해 있지 않고, 내부집단을 향해 있다. 박○○ 씨에게 5월단체 회원들이 “서로가 적이 되고 있는 현실”, 광주시민들에게 “어디가서 5·18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처지는 운명적인 공동체로 평생을 헌신해 온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인정투쟁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든다.

(2) 박탈감과 적대감의 악순환

기동타격대에게 “모든 것을 받쳐왔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 대한 박탈감은 이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트라우마티즘으로 형성된다. 염○○ 씨는 “밭 디딜 틈 없는 학자들의 장례식장”과 달리, 장례비가 없어 “개새끼 하나 죽어나가는 것만 못한” 처지 때문에 동지들이 상을 당할 때 느끼는 서러움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의식의 반복적인 경험은 내부집단을 향한 적대감의 형태로 드러난

다. 살아온 이야기에 대한 자유로운 구술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들과 감정들은 박탈감, 서러움, 내부집단에 대한 비판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감정이 격렬하게 표현되면서 이들은, 무리하게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광주시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악행을 저지를 죄인’으로, ‘출세’한 정치인들을 “광주를 팔아먹은 사람들”, “5·18 때 도망간 사람들”로 폭로하고 싶어 했다. 이러한 절망감은 박○○ 씨에게는 5·18 참가자들을 삼청교육대에 “씩 다 잡아 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심정으로 나타난다. 이○○ 씨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광주의 시민단체들 및 5월단체 간부들에 대한 분노로 표현된다.

술~직히 얘기해서 나는 다시 싹 잡아 갔으면 쓰겼어요, 와해를 시키려면 완벽하게 와해를 시키던지, 아니 진짜 정부에서 누구 다음으로 저길 했었나,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대요, 박철언 씨 아시죠? (중략) 일단은 박철언이라는 사람이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가지고, 싹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로, 우리 5·18만, 만약에 지금 5·18과 관련된 자 모두 구속한다고 하면은 어떨 거 같아요? 반발이고 뭐고 다시 한 번 진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군부가 들어선다면은, 들어서서 전두환이가 했던 것처럼 삼청교육대 싹 보내버리고, 진짜 그거 참 다시 삼청교육대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보낸다 하면은, 5·18에서 과연 어떨 거 같아요... 들고 일어나든지 말든지 무조건 잡아 연다고 하면은... 얼마나 남아 있을 거 같아요... (면: 근데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웃음) 아니, 그게 나는 차라리 정신이 계승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못 지키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이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지키는데...(박○○: 48)

그런 놈들이 시민단체라고 써서 나자빠진 놈들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나는 요즘 시민단체 사람으로도 안 봐요, 막말로 야기해서요, 내가 진짜 이런 말해서는 안되는데, (xxx)(59:57)에 감옥 콩콩 묶여 몇십년 가서 살고 오라 그래, 그릴~게 매가리가 없어, 새끼들이 아주, 시민단체는 (xxx) 양심이 있고 진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기들 (xxx) 자기들 먹고 살 연구하고 자빠졌어, 그럼 뭣허러 가서, 돈 벌어볼지, 뭘 시민단체라고 나와 갖고 꺼정꺼정하냐 이 말이에요, 나 도청보고 놀래부렸소, 내가 시민단체 이거, “애라~ 이놈들아” 내가 후배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애라~ 이놈들아, 느그들이 사람들아나.(이○○: 14)

물론, 이들이 과거의 생애사적 국면마다 이러한 감정들을 느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감정들은 현재의 처지에 대한 반영이며,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상실과 타자에 대한 존중의 거

부는 양면을 이루는 동전이다. 인간의 자존감은 언제나 타자와 상호주관적인 인정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존감의 위축되고, 허약해질수록 타자에 대한 희망과 애착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것은 타자와 공유했던 상호주관적인 도덕규범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

(3) 일반화된 타자의 부정과 탈출

이혼과 자녀의 연락두절로 가정이 파괴되었을 때, 박○○ 씨는 처음으로 5·18을 원망하고, 5월투쟁에 참여한 것을 뼈아프게 후회하였다. 박○○ 씨에게 ‘더럽혀진 5·18’의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해소되거나, 발전적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고 확대되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절망은 자신이 해왔던 많은 일들에 대한 후회, 그리고 평생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향한다. 박○○ 씨는 “선은 언젠가는 이긴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며, 5·18 참가자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더 이상 바꾸거나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한다. “나 혼자 소리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술자는 자신이 처한 이와 같은 상황을 현실에서는 실현할 수 없다는 체념의 상태로 진입한다. 박○○ 씨는 같은 조원이었던 한○○ 씨가 자살하고 강○○ 씨도 병으로 사망하고, 나○○ 씨도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박○○ 씨는 정서적으로 더욱 불안을 견디기 힘들다.

그래도 힘든 거는 요즘에 와서 힘들어요, 차라리 광주를 갔다오고 난 뒤부터 힘들어. 한○○처럼 그런 생각도 들고... 차라리 광주 안내려갔을 때는 그냥 여기에 묻혀서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내려가니까 없고, 진짜 다시 부르는 거 같고... 진짜 책임지지 못할 행동이 포기하는 건데, 나 혼자 소리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사람도 아니고, 물론 광주에서 몇몇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안되지, 선은 언젠가는 이긴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틀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요즘 세대에서 악이 더 강하고 단물에 맞들인 사람들은 쓴 물 못 먹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고, 광주를 내가 내려가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좀 더 나았을텐데 갔다오니까 더 힘들어요... 광주를 갔다오고 난 다음에(박○○: 51)

(4) 계속되는 ‘5월정신’을 향한 인정투쟁

한편, 김○○ 씨 등의 몇몇 회원들은 이와 같은 인정투쟁의 과정을 차라리 운명적으로 수용한다. 그는 “배고픈 사람들의 행동이 지구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나름의

일반화된 타자를 구성하였다. 김○○ 씨에게는 기층민중들이 즉자적으로 불의를 보고 나서는 행동은 당장의 대가로 돌아오지는 않지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이며,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다. 그는 5월단체에서 지속적으로 5·18 관련 의제 및 지역의 주요 사회운동에 결합하면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다는 아니지만, 머리에 뺨이 좀 박아 논 자들은 계산을, 계산을 해놓고, 그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걸로, 우리 역사가 그것은 뭐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반복되는 그런 아픔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은 알면서도 또다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화선에 불만 붙여 놓고 그것을 마무리하지 않고, 다들 그것을 계산적으로 간다 한다면 (종락) 발전이 안 오겠죠, 계산 속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산 없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내가 피를 흘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탱을 해 가고, 지구 자체도 지탱을 해 나가고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거 같애.....(김○○: 17)

이○○ 씨의 경우도 공헌다툼과 자리싸움 그만하고, 이제 “광주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며” 계속적으로, 5월공동체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5월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나름의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5·18 나는 당사자한테도 그래요, “우리만 5·18을 한 게 (아니라) 광주시민 덕이 엄청나게 컸다. 5·18 우리만 이렇게 찾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5·18 실질적으로, 양○○ 회장 된 뒤로 지금 많이 주잡아요, 지금, 장학금 같은거, 쌀 같은 거. 옛날에는 우리는 받아먹었잖아요, (종락) 진짜 시민들한테 욕 안 얻어먹는 그런 게 되서 인제는 어느 정도 다 밥 먹고 살잖아요, 옛날에 다 돈 받았지만,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길을, 그런 것만 되면.(면담자: 시민들을 향해서 말씀이죠.) 그렇죠, 인자, 우리도 얻을 만큼 얻어 묵었으니까, 그 때 어려웠을 때 다 도와줬잖아요, 5·18, 실질적으로도 뭐 근다고 해서 몇백만원 씩 도와준 것도 아니고, 쌀이든지 뭐든지 그래도, 장학금,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 돌려줄 때가 아닌가...(이○○: 7, 16)

기동타격대는 ‘5·18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호히 다시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느껴온 박탈감, 그로 인한 체념과 부정의 감정들이 뒤엉켜 5·18로 인해 복합적인 트라우마리즘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이들이 형성했던 최초의 일반화된 타자는 몸과 마음에 여전히 잊히지 않는 규범으로 자리하고 있다. 혹

은 5·18이 자원화 되고 상품화된 현실보다, 서로 나누고, 헌신할 수 있었던 80년 5월 민중항쟁의 체험이 이들에게는 더욱 아름답게 남아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저는 그래요, 진~짜로 일어난다면은 저는 다시 갈 거예요, 내 자식은 안 보낼 거예요. (종락) (낮은 목소리로) 그리고 진짜 있어서는 안 되고……(눈시울이 붉어짐) 진짜 안 왔으면 하니까… 살아 있는 사람들도 힘들지만은 그렇잖아요, 조물주가 만들었고, 지금 행불자들 부모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당신들이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계속 상처가 남아 있을 거니까… 산 자들은 어떻게든 그 상처를 보듬고 살아야… 이런 5·18이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온다면, 저는 다시 할 거예요…… (면: 다시 한다고 하셔도 좀 더 잘 싸우고) 글썬요 잘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때보다 더 못 싸운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지켜야 된다는 그 의무감 또 다시 나올 거고, 모르겠어요, 과거의 5·18이 연계가 되든, 잊혀진 또 다른 5·18이 일어나게 되든,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5·18정신과 연계돼 가지고 5·18이 일어난다면은 더 지켜야 겠죠, 진짜로 지켜야 될 거예요, (박○○: 54)

‘불의라는 것을 보고 항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 이라면은 불의에 항거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나는 ‘깨어 있는 사람’ 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다시 “5월 당시 80년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은 30년 세월이 증명을 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악몽을, 그 고통을 겪고 나와 가지고도 다시 그 자들하고 맞서 싸웠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곧 답이지 않느냐, 아마 그 악몽을 피하고 싶고 잊고 싶었으면은 지금 어디 초야에 묻혀 있든지 조용히 살겠죠, 그 예로 저, 올 초에 강운태 행적에 관해서, 행적 밝히라고, 진실 밝히라고 투쟁하다가 지금, 엇그저께 3일날 구형 1년 받았어요.(김○○: 15)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죄없는 광주를 몰살시킨다면 지금도 더 악랄하게 광주를 지킬 거 같아요, 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염○○차: 10)

3) 복합적인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기동타격대에게 90년대를 경과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트라우마티즘은 2000년대에 들어 박탈감과 적대감으로 표현되고, 나아가 5·18에 대한 회의감과 부정의 감정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생애사 전반에 걸쳐 5·18 참가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대부분의 생애사적 과제를 5월의제로 구성함으로써 인정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상실은 이들에게 극단적인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의 생애사적 주기가 노년기에 접어들어 따라 경제적·정서적 지지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5월정신'이라는 규범적 동기를 바탕으로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초월하여, 5월투쟁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정신력이 위축되는 노후는 경제력의 상실, 이혼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티즘에 견디어낼 수 있는 1단계의 회복요인이 무척 중요해진다. 2009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던 기동타격대 회원이 자살했던 사례는 이들의 트라우마티즘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에게는 1단계 차원의 회복요인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국가적 차원의 배상(보상)이 시행되었고,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들의 복합적인 트라우마는 공개적으로 선언되기가 더욱 힘들다. 또한, 당사자들의 보상금 갈등 등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도덕적 지지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가서 5·18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처지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적 연결을 시도할 수 있는 인정투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IV. 트라우마티즘 강화의 정치사회적 함의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기동타격대의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은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강화되고, 또 형성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기동타격대의 생애사적 사건과 관련된 주요 정치사회적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트라우마티즘 형성과 변화과정이 5·18 과거청산 과정, 87년 민주화, 사회운동조직의 내부 동학이 지니는 한계로부터 발생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1. '5월정신'을 희석시킨 5·18 과거청산

5·18에 대한 과거청산은 한국사회의 다른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빠른 시일 내-피해자와 가해자가 생존해 있는 시간 동안-에 진행되어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다. 법적 차원에서 5·18 과거청산은 88년 5공청문회, 90년 '광주보상법' 제정으로 출발하

여, 95년에는 ‘5·18특별법’이 제정됨으로서 헌정사상 군사쿠데타 세력을 제도적 틀을 통해 단죄할 수 있는 선례를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해결과정은 불완전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자처벌, 기념사업, 명예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럼에도 각 정권의 5·18 관련 법·정책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이는 5·18 과거청산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다.¹⁰¹⁾ (유광중, 1999; 김재균, 2000; 정호기, 2002b; 최정기, 2006; 김동춘, 2007a)

본 논문에서 조사한 기동타격대의 트라우마티즘은 이와 같은 5·18 과거청산의 과정과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5·18 문제의 해결과정 속에서 이들의 트라우마티즘은 오히려 강화되거나,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하였으며, 그 결과 자존감과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5·18 과거청산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통해, 그리고 이들 집단이 지닌 특수성과 관련하여 설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⁰²⁾

1) 피해자에 대한 기억으로 축소

먼저, 5·18과 관련한 보상정책은 항쟁의 ‘주체’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들의 트라우마티즘이 강화되는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인하며 대신, 금전으로 5·18 참가자들의 불만을 무마시켜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정치적 산물이었다.¹⁰³⁾ 이렇게 일시불로 지급된 거액의 보상금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회복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으며, 다른 여타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 침묵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5·18의 공식적인 명칭은 ‘광주민주화운동’이고, 5·18 참가자를 지칭하는 개념은 ‘유공자’이지만, 관련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5·18에 참여한 행위보다는 피해발생 여부

101) 5·18 과거청산의 한계는 먼저, 5공 세력의 입력 때문에 5·18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으며,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국가적 범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고, 사실상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철저한 진실규명 없이, 집단보상보다는 개인보상을 우선시함으로써 ‘항쟁’의 역사적 성과가 대부분 퇴색하였으며, 5·18기념사업에 대해 광주사람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지역과 전국의 5월 운동의 힘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5·18의 주역들이 ‘당사자주의’의 벽을 넘어서지 못해서 광주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민주화 투쟁가들의 모범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김동춘, 2007a)

102) 이들은 다수 기층민중적 성격이 강한 투쟁하는 활동가들이었으며, 오랜 시간 5월투쟁과 5월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온 집단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전문가 집단, 5월운동에 결합하지 않았던 집단과는 또 다른 체험들을 하였다.

103) 1990년 7월 민자당은 여야협상에 의한 법률안 마련을 포기하고 3당 아합으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진실규명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조항도 삽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금전적 보상만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용이었다.(안종철, 2007b)

가 기준이었고, 따라서 의학·물리적 상처, 5·18보상체계, 현재의 처지 및 고통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했다.(최정기, 2008: 59, 62) 본 논문에서 분석한 트라우마티즘은 사회적·경제적 지원 부재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고통이 트라우마를 강화시키는 한 요인이었지만, 이들이 90년대를 통해 형성한 트라우마티즘은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5월민중항쟁과 5월투쟁의 주체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청산은 항쟁주체가 항쟁에서 기여했던 역사적 가치와 공로를 인정하고, 사회적인 지지와 인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5·18 기념사업에서도 드러났다. 5·18로 지칭되는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경험들의 복합적인 총체이며, '기억투쟁'은 그러한 기억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전쟁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최정기, 2006: 11) 하지만, 기념사업이 복원하려는 주된 내용은 피해자 중 일부만의 기억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억에 대한 배제의 기제가 작용하게 된다. 본 논문의 사례 집단은 그 자신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5·18정신을 실현하고자 했던 의지로 열악한 경제적인 조건을 극복해왔던 과정이 생애사의 핵심적인 서사였다. 따라서 '피해와 보상'의 틀 안에서 진행된 과거청산 및 광주 지역 내부의 공헌 갈등은 이들의 핵심적인 생애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배제시키게 된 것이다. 이들이 새롭게 형성한 트라우마티즘의 주요 내용은 '5월정신'의 도덕적 훼손에 대한 상처였다. 한편 이들은 제도화, 권력화, 자원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는 공로에 준하는 권리를 요구하는 인정투쟁을 벌이기도 했다.¹⁰⁴⁾ 하지만, 이와 같은 권리 인정투쟁에도 불구하고, 5월투사로서의 충분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5월정신' 계승을 위한 의연한 가치합리적 투쟁을 전개했던 5월투사였던 이들은 정부의 진정성 없는 보상정책에 의해 피해의식과 보상심리에 시달리는 개인으로 간주되었다.

2) 5·18 참가자들의 집합적 정체성의 와해

다음으로, 보상정책은 집단보상이 아닌 개인보상의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5·18 참가자들을 개별화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상은 상해정도, 소득수준,

1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애사에서 살펴보면 5·18에 대해 대처하는 행위전략은 개인마다 무척 다양했다.

구속일수 등의 수치를 바탕으로 1등급에서 14등급까지의 급수를 차등화시켜 피해자들을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항쟁 당시 참여를 과장하거나, 피해사실을 허위로 증명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 결과 5·18 참가자들을 국가보상의 수동적 수혜자와 개별적 소비자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고, 당사자들이 개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나아가 5·18의 광범위한 지지자를 당사자들과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광주 시민들과 전국의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이 함께 공유했던 5·18의 의미는 축소되고 5·18이 당사자들의 자원으로 인식되는 특권화를 낳았다. 그 결과 5월운동이 갖는 집합적 성격은 희석되었고, 5월공동체의 도덕적인 힘은 약화되었다.(최정기, 2006)

이처럼 저항집단이 집합적 힘을 잃게 된 것은 ‘광주보상법’에 내재한 화합과 보상의 논리가 가해자의 처벌과 진상규명을 묻어둔 채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진행된 결과,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운동진영을 분열시켰기 때문이다. 그것은 피해 ‘당사자’와 ‘대변자’의 분열, 혹은 ‘당사자’ 내부에서의 분열로 나타났다. 운동은 반민주 반인권 정치세력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의해 그 동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민주화를 통해 정치질서의 유제를 청산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치적 민주화보다는 당장의 억울함이나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세력이 던지는 미끼, 즉 ‘보상 혹은 명예회복을 통합 화합’을 수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과거청산 작업이 뒤물리게 된다. 따라서 대변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려는 역할과 도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김동춘, 2007a)¹⁰⁵⁾

기동타격대는 그동안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근본적인 과거청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러한 목적을 획득하기 위한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해 온 집단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경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생업을 쟁개치고 전개한 투쟁으로 인해, 더욱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보상정책 수용을 두고 심한 도덕적 갈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광주지역에서 5월운동을 주도했던 ‘대변인’들 역시 이를 두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상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기동타격대도

105) 하지만, 대변인들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료적 접근에 안주하거나 개인적인 출세와 기득권 확보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러한 뒤물림이 없기 위해서 과거청산 운동은 민주주의의 심화를 통해 법 제도적 개혁으로 완수되어야만 한다.(김동춘, 2007a)

이를 선택하였다. 이렇듯 이 시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인들을 피해와 소득으로 서열지어, 금전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집단적인 보상의 방식, 피해자들이 협동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재활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등이 추진되었거나, 기층민중들의 현실처지를 고려한 적극적인 복지가 이루어졌다면, 5·18 참가자들은 도덕적인 상처나, 보상심리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5·18 참가자들, 특히 기동타격대와 같은 기층민중들은 저급한 보상방식이 시행되고 ‘대변자’들의 충분한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항쟁 주체로서의 공로에 대한 불인정, 공동체로부터의 도덕적 지지 상실 등 다차원적인 트라우마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2. ‘5월정신’의 훼손과 민주주의 심화의 실패

사태집단의 트라우마티즘이 심화되어 형성된 피해의식은 외부집단이나 정부를 향해 있지 않고, 내부집단을 향해 있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5월단체가 인정투쟁을 벌이는 핵심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타격대 회원들은 주로 구속자 집단 내부에서 활동해왔고, 부상자 집단 및 유족 집단과는 달리 전문가·학자·중간층 출신의 회원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계층적인 차이로 인해 지식인들로부터 소외감을 더욱 직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소외감은 명망가들이 제도권 정체세력으로 진출하지만, 자신의 처지와 사회적 지위가 개선되지 않자 한층 증폭되었다. 기동타격대의 소외감은 단순한 피해의식으로만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실제로 5월운동의 확장과 정치적 동학 속에서 광주 지역의 권력구조가 더욱 공고화되었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이들의 정치적·경제적 권리는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이 지닌 한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1) ‘5월정신’의 최소민주주의적 전유

이광일(2007)은 80년대의 운동이 87년 민주화로 마무리된 것은 “70년대 유신체제에 반대하던 자유주의적 운동과 이후 그것을 비판, 지양하며 등장했던 80년대 급

진 운동을 매개하는 고리로서의 5·18민중항쟁의 위상을 단지 전자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것은 “5월민중항쟁 당시 협상론과 투쟁론의 차이, 즉 산자와 죽은 자의 심연”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파시즘과의 타협이 아닌 파시즘에 대항함으로써 죽음을 선택했던 민중들의 염원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진보’에 대한 염원인데, 이것은 항쟁 이후 ‘산자’들이 5·18에 대한 최소 민주주의적 성격만을 기억하고 전유함에 따라 묻혀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한계는 광주 지역의 권력구조의 강화로 나타난다.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볼 때, 광주 지역에서는 5·18과 5월운동의 전개로 인해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뒷받침하는 성원의 변화를 겪었지만¹⁰⁶⁾ 이러한 인적구성원들의 정계진출이 지역사회의 민주화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DJ중심의 정당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항상 ‘광주정신’의 계승을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은 5·18 관련 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이나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광주에서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내건 선거공약은 대부분 경제발전이테올로기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인권, 평화 등의 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사회활동가들이 지역권력구조를 보다 민주적으로 바꾸었다기보다는 활동가들이 자신의 활동경력과는 달리 지역의 지배담론을 수용하는 과정이었으며, 기존의 권력구조가 이들의 충원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최정기, 2004)

이는 직접적으로 5·18의 의제를 풀어가고자 했던 전문가들 및 지역의 명망가들이 87년 이후 5월세력의 정치세력화 및 제도적 진출을 우선적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87년 6.29선언으로 중단되었던 ‘더 많은 민주주의’는 5월공동체 안에도 실현되기 어려웠다. 5월공동체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는 5·18과 관련하여서는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포함한 근본적인 과거청산이기도 했지만, 당사자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권리와 평등에 기반 한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문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표된 5월세력의 대외적인 인정투쟁, 즉 5·18의 전국화라는 집단적 목표가 우선적으로 설정됨에 따라, 5월공동체 내부에서의 인정투쟁, 즉 기층민중들이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고자 했던 바램은 실현되기 어려웠다.¹⁰⁷⁾

106) 광주에서는 80년 이후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5·18 관련자와 재야인사, 사회운동 활동가 출신이 대거 늘어났다. 1970년대(43명)와 1990년대(40명)의 광주·전남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출신 경력을 비교해 보면 1970년대에는 재야인사나 사회운동 세력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지만, 1990년대에는 재야인사와 사회운동가 출신 8명, 5·18관련자 출신 9명(사회운동가 출신과 4명 중복)이 당선되었다. 재선과 3선을 한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선 횟수는 훨씬 늘어난다.(최정기, 2004)

기동타격대가 인정투쟁을 벌였던 5·18기념재단의 경우 ‘전국화’ 및 ‘세계화’의 의제는 5·18 당사자에게 소외감을 낳았는데, 그것은 내부집단에서 기층민중들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우근(2007)이 지적했듯이 5·18의 ‘전국화’는 참다운 의미의 ‘지역화’를 통해 가능하며, 이것은 각종 5·18기념사업들을 지역 주체들의 반성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진행해야 했으나, 그러한 노력은 부족했다.¹⁰⁸⁾

2) 민중담론의 박제화와 엘리트의 과대대표

기층민중들의 소외감은 5·18과 5월운동에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었던 엘리트주의적 관점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5월민중항쟁을 통해 기층민과 지식인들 간의 소통이 확장되고, ‘민중담론’이 형성되었지만, 지식인들이 현실의 민중들과 교류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평등한 관계를 모색하는데 한계를 지녔다. 그 결과 기동타격대는 5·18의 투사로 영웅이 될 수 있었지만, 전체집단에 동원되는 행동부대의 역할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또한 이들이 노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닐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조건 때문에 고문후유증 등으로 인한 삶의 파괴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점들이 5월단체 내부에서 더욱 배려되어야 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몫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논리는 5·18의 기념물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5·18국립묘지는 민주기념탑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나머지 구도가 배열되는 힘의 집중을 재현하고 있으며, 묘역들은 지배와 통치를 상징하는 왕릉 혹은 능원의 구성 원리로 배치됨으로써 5월민중항쟁의 가장 큰 의의인 ‘위아래가 없는 공동체성, 민중성, 민주주의’ 등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이는 엘리트와 명망가 중심의 민주화 운동, 제도적 진출 이후에 기층민과의

107) 광주의 대표되는 정체성은 정부와 타 지역을 향해 인정투쟁을 벌였지만, 5월공동체의 하위집단은 5월공동체를 향하여 끊임없이 인정투쟁을 벌였다. 전자는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향한 노력으로 나타났으며(은우근, 2007), 후자는 기동타격대의 경우, 기층민 출신 항쟁주체에 대한 권리인정 노력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외적인 인정투쟁은 오히려 5·18의 ‘국지화’와 5·18의 ‘당사자화’로 결과지어졌다. 그 이유는 5·18이 국가차원에서 기념되고, 도덕적 우위를 획득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타지역민이나, 비당사자들은 구분되었고, 항쟁 당시와 80년대 5월투쟁이 지녔던 보편성과 평등성 및 공동체성이 5·18의 공식화로 인해 희석되고, 박제화 되었기 때문이다.

108) 5·18기념재단의 이사로 활동했던 은우근(2007)은 당사자중심주의와 관주도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주도 원칙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념사업이 추구하는 고도의 추상적, 진보적 가치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운동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민중성이라는 ‘5월정신’에 입각해서 ‘민중 자치’의 모델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5·18기념재단의 발전적 지향점 및 실천방향은 현재까지 속제로 남겨져 있다.

평등성은 더욱 약화되는 권위적 민주화의 현 상태를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정호기, 2002b: 591-592) 따라서, 엘리트 중심으로 대표된 5·18의 담론, 과거청산, 정치화 과정 등에서 기층민 집단의 주체성, 공동체성, 즉자적 용기, 자생적이고 분산적인 연대와 결집과 같은 미덕들은 기념되지 못했으며, 대신 몇몇 영웅들이 그것을 과대대표하였다.

3) 정치적 동원대상이 된 항쟁주체

그 결과 5월민중항쟁 당시 운동정치 중심에 있었던 대중들은 지금 더 이상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선거 때에만 주체로 호명되어 지역주의에 기반 한 정치세력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다.(이광일, 2007) 기동타격대의 트라우마티즘은 바로 이러한 지점 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5월민중항쟁과 80년대 5월투쟁의 과정에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정치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90년대의 정치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5·18을 대표하는 광주출신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의 행동대원으로서 살아가야 했다. 또한 최소민주주의적 의제는 경제적 민주화를 추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동타격대를 포함한 기층민중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했고, 민주화운동 세력이 따낸 최소적인 차원의 광주보상법 역시 항쟁주체로서의 사회적 지지와 인정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정치지형의 변화 속에서 기동타격대는 지속적으로 투쟁의 주체로 살기 위해 노력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더욱더 암담했고, 이러한 불인정이 반복되는 생애사의 과정 속에서 이들은 지식인들에 대한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3. 사회운동과 트라우마티즘

최근 들어, 사회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인권침해, 정신건강, 트라우마티즘의 문제를 접근하려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¹⁰⁹⁾ 최근 급증하는 비정규직 장기 투쟁

109) 인권과 트라우마 분석을 위한 접근은 아니지만, 사회운동 과정에서의 폭력, 자살의 문제를 다룬 경험적 연구로는 김정환(1998)과 이창언(2009) 등의 연구가 있다. 김정환은 91년 5월의 '열사정국'을 폭력에 대한 대중들의 양면적 심리와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창언은 학생운동 분신자살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개인적인 일탈이나 허무주의적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구성행위로 분석하고 있다.

사업장의 경우, 참여자들이 투쟁 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티즘은 만성화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¹¹⁰⁾ 이는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투쟁 과정에서의 자살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노동건강연대 외, 2009)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면 사회운동 참여자들에게 있어 공권력 및 용역 폭력의 만성적인 노출, 위협과 회유, 경제적 압박 등이 트라우마티즘의 1차적인 요인이지만, 이들이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은 동료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 외부 단체 및 조직과의 갈등, 사회적 지지로부터의 고립에 대한 두려움, 아노미적 상태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5·18 참가자의 트라우마티즘은 이들의 트라우마티즘 발생 조건과 닮아 있다.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폭력 및 억압으로부터 발생하는 트라우마는 분명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그 증후도 명확하다. 하지만, 그러한 폭력의 경험은 실제 조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또 다른 결을 형성하게 된다. 즉, 동료들과의 관계, 조직 내부의 구조 및 집단 간 상호작용 과정,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개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

그동안 사회운동 진영에서, 사회운동 참여자들의 사회적 고통의 문제를 접근할 때 주로 폭력과 억압적 통제를 행사하는 국가 및 회사를 그 가해자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억압에 대항하는 저항운동 및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정신적 건강의 악화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억압적인 제도와 권력을 극복하는 노력 못지않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를 시민사회공간에서 함께 풀어가는 작업은 또 하나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5·18 참가자들의 트라우마티즘은 이처럼 사회운동 내부 집단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트라우마티즘은 제도적 차원의 문제해결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성, 미시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를 함께 고찰해야만 한다.

110) 2011년 3월, 성공회대학교 '계급과 폭력 세미나'에서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트라우마를 주제로, 김경욱 이랜드 노조 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투쟁 참가자들의 정신건강은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매우 심각했고,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우울증, 간헐성 폭발장애, 충동장애, 공황장애, 대인기피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지원이 이루어지지만, 투쟁참가자들이 파업 사업장에서 느꼈던 고립감의 현실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는 이랜드 노조 뿐만 아니라 쌍용차 노조, 용산철사 등 공권력의 탄압이 극심한 투쟁의 참가자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4. 향후 실천적 과제

요컨대, 항쟁 당시 기층민중들이 지켜내고, 이루고자 했던 민주성, 위아래 없는 평등성, 민주주의 등의 가치와 의미들은 형식적인 과거청산 과정 및, 엘리트중심적인 정치화의 과정에서 상처받고 왜곡되어왔다. 기층민중들의 무장항쟁은 민주화운동의 계보 속에 놓임에 따라, 이들은 이러한 계보 속의 주인공으로 호명되었지만, 이들의 생애사에 있어 이러한 이름표는 이들의 삶을 오히려 주변화 시키는 기제로서도 작동되었던 것이다. 이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상처에 맞설 수 있었던 자신의 몸이, 오히려 기대를 걸었던 저항공동체의 미시적 권력기체에 의해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을 경험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기층민중과 명망가들은 ‘5·18’, ‘광주’, ‘김대중’이라는 보편적 상징 속에서 하나로 존재하는 듯 했지만(정근식, 1997), 언제나 그러한 보편적 공간 속에서 질적으로 다른 시간을 보내 온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이들이 지닌 트라우마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절차적·제도적 민주화의 과정에 한정된 과거청산은, 이러한 기층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이들의 지혜를 인정하고 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거청산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18 참가자들에게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인정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복구가 필요하다. 이는 의학적인 치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들이 생애사적 과정에서 잃어버린 ‘5월정신’ 및 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동타격대를 포함한 5·18 참가자들은 현재 노후에 진입하고 있으며, 경제력 등의 상실로 인해 트라우마티즘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이들이 신체적·정서적·경제적인 안정을 통해 1단계 차원의 회복요인이 마련될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 치료지원, 경제적 지원 등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지지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에게는 ‘와해된’ 5월공동체에 대한 불신과 박탈감, 그로부터 발생하는 적대감과 고립감을 넘어설 수 있는 공동체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고 분열되었던 당사자들 및 시민들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광주의 시민사회단체의 개혁과 변화의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공동체의 연결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구상으로 이들이 노동을 통한 대가를 지급받고 나아가, 일의 구상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의 형태를 지역사회가 마련하고, 당사자들을 운영과 참여의 주체로 교육하는 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이 단순히 금전적 지급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또 다시 이들은 수혜자로서만 인식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 간, 나아가 시민들 간의 통합은 어려워 질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생산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상호 협동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 지역사회에 기여를 통한 시민들과의 연결을 이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층민중 5·18참가자들이 담론 생산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식인·전문가 집단이 독점해 온 지식생산을 당사자들에게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5·18과 관련된 학술·문화 행사 및 세계교류 프로그램에 5·18참가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지역 교류 프로그램이 몇몇 대표자 및 간부들의 교류가 아니라, 5·18 당사자들과 인권취약지역 민중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당사자들이 그러한 성과물을 직접 기록하는 작업에 동참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5·18과 관련된 지적 자원을 몇몇 지식인·전문가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민중들의 익명적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을 만듦으로써 기층민중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항쟁주체로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기층민중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비단 5·18 참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및 한국사회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민중지향적인 삶과 높낮이 없는 평등성과 나눔의 공동체를 추구했던 5월민중항쟁과 5월투쟁의 사회운동적인 의미를 현재적 관점에서 되살리는 것이다.

V. 결론

1. 연구주장의 요약

본 논문은 5월민중항쟁에서 시민군기동타격대로 참가했던 사람들의 생애사를 재구성하여, 이들이 5·18과 관련한 트라우마티즘을 극복 또는 형성해 가는 과정을 사

회학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정치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5·18시민군기동타격대의 생애사를 재구성하여, 이들의 정체성 형성과정, 사회적 환경, 심리적 갈등,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전략은 무엇이었는지를 사회적 과정 속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은 단순히 재경험, 회피, 불안 등의 임상적 증상을 넘어, 자기존중감의 파괴, 애착된 인간관계의 단절, 신념체계의 붕괴라는 심리구조의 변화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심리구조는 일반화된 타자로부터의 인정투쟁을 통해 변화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주체의 인정투쟁이란 원초적 관계-권리관계-가치공동체라는 세 가지 영역을 통해 진행되며,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믿음, 자기존중, 자기가치부여라는 자존감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차원에서 획득되는 사회적 지지의 여부는 트라우마티즘을 극복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고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을 형성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5·18기동타격대에게는 인정투쟁의 영역이 가족, 기동타격대 동지회, 5월단체, 5월공동체, 국가 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다차원적인 영역에서의 인정투쟁의 과정과 그로 인해 형성된 트라우마티즘의 성격을 생애사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의 정치사회적 조건은 무엇인지를 5·18 과거청산 과정, 한국 민주화의 성격, 사회운동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먼저 기동타격대는 3가지 차원의 자존감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화된 타자의 '5월정신'이라는 집단정체성을 구성하고, 주로 기동타격대 동지회-5월단체-5월공동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영역에서 인정투쟁을 벌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투쟁의 양상은 크게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1) '5·18체험'으로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이 형성되는 시기, 2) '5월정신'을 향한 인정투쟁을 통해 트라우마티즘을 극복하려는 시기, 3) '5·18자원'을 향한 인정투쟁 및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이 형성되는 시기 4) '상처받은 5월정신'으로 인해 복합적인 트라우마티즘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기동타격대는 80년 5월민중항쟁 당시 외상사건에 대항하여 저항공동체를 형성하고,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한 체험 속에서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함으로써, 외상을 넘어설 수 있는 보호요인을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고문구타 등의 만성적인 외상사건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는 '상호헌신의 공동체성', '생존의 욕구를 초월한 투쟁정신'을 지향하는 '5월정신'을 일반화된 타자의 규범으로 형성하고 5월공동체를 향한 인정투쟁을 통해, 어느 정도 외상의 기억을 통합하

고 애도하며, 공동체의 연결을 복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5·18이 자원화 되고, 5월 공동체가 분화되는 90년대가 전개됨에 따라, 항쟁주체로서 획득했던 자존감은 오히려 축소되었고, 항쟁의 공로에 대한 권리인정 요구 역시 인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이들은 ‘5월정신’을 향한 인정투쟁으로부터 다차원적인 사회적 지지의 축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5·18의 의제가 마무리되는 200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상처는 일반화된 타자 즉, 5월단체를 향한 박탈감과 적대감의 형태로 표현되었고, 극단적인 경우는 광주를 떠나거나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복합적인 트라우마티즘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결국 사례 집단의 트라우마티즘은 5·18 과거청산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민주화가 진전되는 과정에 대칭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의 정치사회적 조건은 첫째,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 금전보상으로 시작된 5·18 과거청산이 항쟁주체의 공로와 명예를 충분히 회복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개별화 효과를 가져와 5월단체의 집단적 명예를 하락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절차적 민주화가 지니는 한계는 5월공동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높낮이 없는 공동체성’과 ‘민중성’이라는 ‘5월정신’이 최소민주주의적 범주로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중산층 참가자들과 달리 저항집단 내부 기층민중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 및 자존감의 회복 역시 미완으로 남겨졌다. 따라서 현재의 트라우마티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인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과 더불어 불신과 박탈감을 넘어설 수 있는 공동체의 연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광주지역 및 한국사회가 기층민중의 삶의 개선을 위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운동을 확장해야 한다.

2. 연구의 함의 및 한계

본 논문이 지닌 연구의 함의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5·18과 관련한 담론 및 연구들은 지식인 중심의 관점에서 명망가들의 5·18체험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항쟁의 주체였던 기층민중의 체험을 재구성함으로써 공식적인 5·18 담론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기층민중의 담론을 소개할 수 있었고, 보편적인 정체성으로서의 5·18정신과는 구분

되는 기층민중들의 5·18정신 및 정체성의 결이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5·18과 관련된 '의명적 지식'을 확장하였다.

둘째, 외상사건에 대한 임상적 증상의 결과로 간주되는 트라우마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환경과 주체의 행위전략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이라는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사례와 사회적 환경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통해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트라우마 현상을 의학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학적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셋째, 본 논문은 항쟁 참여자들의 정치체험의 부정적 계기와 긍정적 계기를 모두 살펴봄으로써, 사회운동 체험이 주로 참가자들의 인식적 해방과 정치적 신념이 구성되는 과정이라는 일면적 관점을 넘어서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은 다른 사회운동 과정에서의 정치체험과 트라우마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즉, 운동집단 내부의 갈등과 모순을 운동 참여자가 받아들이는 과정, 그 속에서 형성되는 정신적 고통의 내용, 그리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 등은 사회운동 조직의 발전사와는 별개로 운동참여자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분석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5·18 체험을 항쟁 당시의 사건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항쟁 이후 5·18의 영향 하에 놓여 있는 5·18 참가자들의 생애사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5·18 사건이 참가자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통시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단면적이고, 사건 중심적인 분석의 관점을 넘어설 수 있었고, 시간의 궤적을 통한 5·18 사건의 끊임없는 재생산 과정 및 새로운 의미의 형성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사회운동 참여를 통한 정치체험 이후 참가자들이 일상적인 시기에도 사회적 인정을 통한 자존감의 획득과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정치체험을 통해 형성한 정체성은 긴 시간에 걸쳐 오히려, 착종된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항쟁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 이후, 참여자들이 살아가게 되는 실질적인 사회현실의 지속적인 혁신 및 참여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식적 해방은 다시 봉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현재 5·18 참가자들이 놓여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5·18 과거청산 과정이 당사자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와 민주화운동 세력이 5·18의 문제해결을 제도적 차원에만 한정함으

로써, 5·18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향후 5·18 참가자들의 트라우마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실천적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먼저 트라우마의 사회학적 차원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트라우마라는 현상 자체가 무척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 구성되어지는 것이므로, 본 논문의 분석틀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부분적인 해석만을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 트라우마티즘에 대한 사회학적 차원의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더욱 깊이 있는 이론적 체계가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동타격대가 지닌 트라우마티즘의 양상은 5·18 참가자가 지녔던 트라우마티즘의 양상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5·18 참가자들-유족, 부상자, 기동타격대가 아닌 구속자 집단, 5·18 참여자가 아닌 목격자 집단 등-의 트라우마티즘에 대한 분석과 각각의 집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5·18 트라우마티즘의 다양한 양상을 더욱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연구가 과제로 남겨져 있다.

마지막으로, 구술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한 생애사는 '서술적 진실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고, 구술인터뷰가 지니는 시간상의 제약 및 인터뷰 진행 과정상의 한계로 인해 '체험된 생애사'의 '사실적 진실성'에 대한 재구성에 일정정도 한계를 갖는다. 이것은 익명적 지식을 산출하는데 발생하게 되는 일반적인 한계이지만, 각종 문헌 및 자료를 통해 더욱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학술논문 및 단행본

- 5·18기념재단, 2006a,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실태 조사연구 보고서』, 5·18기념재단
- _____, 2006b, 『5·18의 기억과 역사1,2,3』, 5·18기념재단
- _____, 2007a,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1~5』, 5·18기념재단
- _____, 2007b, 『5·18민주화유공자 생활실태 후유증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 5·18기념재단
- _____, 2007c,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전사』, 5·18기념재단
- _____, 2008,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부검 및 자살피해 예방대책과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5·18기념재단
- _____, 2010a, 『5·18민중항쟁 구술자료 목록집』, 5·18기념재단
- _____, 2010b, 『5·18의 기억과 역사4』, 5·18기념재단
- 5·18기념재단 외, 2010, 『광주민중항쟁3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5·18기념재단
-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2000, 『부서진 풍경:5·18정신병동 이야기』, 문병란, 5·18기념재단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07, 『5·18민중항쟁 증언록: 꽃만 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1,2』, 5·18기념재단
- _____, 2008, 『5·18민중항쟁 증언록: 꽃만 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3,4』, 5·18기념재단
- 강현아, 2004, 『5·18항쟁의 성격·주체-연구사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2호, 전남대학교5·18연구소
- _____, 2010, 『5·18구술사 현황과 과제』, 광주민중항쟁3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자료
- 공선옥 외, 1995, 『꽃잎처럼』, 풀빛
- 공제욱 외, 2008, 『국가와 일상』, 한울
-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1~50』,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 _____, 2001,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 구해근, 2007, 『세계화 시대의 한국 계급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색』, 『경제와 사회』 2007년 겨울호, 비판사회학회
- 권명아, 2009, 『죽음과 생존을 묻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슬픔』, 당비의 생각03, 산책자
- _____, 2010, 『죽음과의 입맞춤: 혁명과 간통, 사랑과 소유권』, 『문학과 사회』 제89호
- 김귀옥·윤충로, 2007,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동춘, 2007a, 「과거청산 작업과 한국 민주주의」, 『5·18민중항쟁의 정치역사사회5』, 5·18기념재단
- _____, 2007b, 「5·18, 6월항쟁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5·18민중항쟁의 정치역사사회5』, 5·18기념재단
- _____, 2009, 『전쟁과 사회』, 돌베개
- 김두식, 1998, 「5·18에 관한 의미구성의 변화 과정과 지역 사회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편,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나남출판
- _____, 2003, 「광주항쟁, 5월운동, 다중적 집단정체성」,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김명희, 2009, 「한국의 정치변동과 가족주의의 재생산 과정에 관한 연구-한국전쟁 좌익 관련 유가족들의 생애체험을 통해 본 '가족' 과 '국가'」,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0, 「이야기된 가족사에 나타난 '가족트라우마'와 복합적 과거청산: 한국전쟁 좌익 관련 유가족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4회 주니어 국제 한국학 학술대회
- 김상봉 외, 2008, 『5·18 그리고 역사-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길
- 김상숙, 2007, 「지역과 젠더 통제, 여성노동자들의 저항: 80년대 대구지역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성례, 1991, 「한국 무속에 나타난 여성체험: 구술 생애사의 서사분석」, 『한국여성학』 제7집, 한국여성학회
- _____, 2004, 「한국 여성의 구술사: 방법론적 성찰」, 조옥라·정지영 엮음, 『젠더, 경험, 역사』, 서강대학교출판부
- 김영범, 1991, 「망탈리테사: 심층사의 한 지평」, 한국사회사연구회, 『사회사연구와 사회이론』, 문학과 지성사
- 김영택, 1999, 「5·18광주민주항쟁의 초기성격」,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원, 2006, 「그녀들의 역역사, 여공1970」, 이매진
- _____, 2011,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1980년대 대학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이매진
- 김원식, 2009, 「인정(Recognition)과 재분배(Redistribution)-한국사회 갈등 구조 해명을 위한 모색」, 『사회와 철학』 2009년 4월호, 사회와철학연구회
- 김재균, 2000,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 전남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정한, 1998, 「대중과 폭력-1990년 5월의 기억」, 이후
- _____, 2008, 「5·18광주항쟁의 이데올로기 연구」, 『기억과 전망』, 통권18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_____, 2010, 「대중운동의 이데올로기 연구-5·18 광주항쟁과 6.4 천안문운동의 비교」,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진균·정근식, 1990, 「광주5월민중항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5월민중항쟁』, 풀빛
- 김창진, 2007, 「광주민중항쟁의 발전구조- '무장투쟁' 과 '민중권력' 」, 『5·18민중항쟁의 정치역사사회3-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18기념재단
- 김택현, 2002, 「그람시의 서발턴 개념과 서발턴 연구」, 『역사교육』, 83권, 역사교육연구회
- _____, 2009,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출판사
- 김희송, 2009, 『시민운동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광주지역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NGO협동과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나간채, 1997, 「광주지역 5월운동 조직의 형성과 발전: 5·18당사자조직을 중심으로」,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5·18연구소
- _____, 1999, 「5·18민중항쟁의 현재적 과제: 유관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5·18은 끝났는가』, 학술단체협의회 편, 푸른숲
- _____, 2002, 「폭도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되기까지: 5·18항쟁의 역사만들기」, 『내일의 여는 역사』, 제9호, 서해문집
- _____, 2007a, 「5월단체의 형성과 활동」,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4: 5월운동의 전개』, 5·18기념재단
- _____, 2007b, 「5·18증언프로젝트의 실태분석」,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18기념재단
- _____, 2008a, 「5월운동에 있어서 운동주체의 형성과 발전과정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_____, 2008b, 「5월운동에 있어서 의미들의 형성과 발전」, 『지역사회연구』 15권 13호
- 당대비평기획위원회, 2009,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 산책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1,2』, 돌베개
- 박영실, 2001, 『5·18 다큐멘터리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기억의 정치』,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학사학위논문
- 박영주, 2004, 「5·18 트라우마티즘 연구의 현황과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박해광, 2003, 『계급, 문화, 언어』, 한울아카데미
- 박헌채, 1989, 「민중경제론의 관점에서 본 민중론」, 『한국민중론의 현 단계』, 돌베개
- 변주나, 1996, 「광주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의 15년 후 후유증에 관한 연구: 일상생활 변화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9권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 신광영·조돈문·조은, 2003, 『한국사회의 계급론적 이해』, 한울
- 신진욱, 2007, 「사회운동의 연대 형성과 프레이밍에서 도덕감정의 역할: 5·18 광주항쟁 팸플릿에

- 대한 내용분석」, 『경제와 사회』 제73호, 비판사회학회
- 안중철, 2007a,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연구」, 『5·18민중항쟁의 정치역사』 3-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18기념재단
- _____, 2007b, 「과거청산과 미해결 과제」, 『5·18민중항쟁의 정치역사』 5-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18기념재단
- 오수성,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의 심리적 충격」, 광주현대사료연구소 엮음, 『광주5월민중항쟁』, 풀빛
- _____, 2001, 「5·18관련자의 심리적 고통」,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 오수성·신현균·조용범, 2006, 「5·18피해자들의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제25권 2호, 한국심리학회
- 오수성·신현균, 2008, 「5·18 피해자들의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스트레스, 심리건강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권 3호
- 유경남, 「광주항쟁시기 ‘광주’ 지역의 표상(表象)과 광주민주시민의 형성」, 전남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광중, 1999, 「5·18광주민중화운동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택림, 1994, 「기억에서 역사로-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집, 일신사
- _____, 2001, 「역사인류학자의 시각에서 본 역사학-구술자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6호, 역사문제연구소
- _____, 2004,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 _____, 2005,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 윤택림·함한희, 2006,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 은우근, 2007, 「5·18기념사업에 대한 하나의 반성」, 『5·18민중항쟁의 정치역사』 5, 5·18기념재단
- 이광일, 2007, 「5·18민중항쟁, ‘과거청산’ 과 재구성의 정치」, 『5·18민중항쟁의 정치역사』 5, 5·18기념재단
- 이세영, 「민중개념의 계보학」, 『학술단체협의회-민주사회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이승원, 2009, 「‘하위주체’ 와 4월 혁명-‘하위주체’ 의 참여형태를 통해 본 민주화에 대한 반성」, 『기억과 전망』 20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이재승, 2010 「국가폭력, 그리고 치유와 화해의 문법」, 통일인문학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이종구 외, 2010, 『1950년대 한국 노동자의 생활세계』, 한울
- 이종범, 2004, 「5·18항쟁 증언에 나타난 ‘기층민중’ 의 경험과 생활」, 『기억과 전망』 20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이창언, 2009, 「분신자살의 구조와 메커니즘 연구: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이희영, 2005a,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 _____, 2005b, 「체험된 폭력과 세대간의 소통」, 『경제와 사회』 통권 제68호, 한국산업사회학회
- 임희섭, 200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장미경, 1999, 「페미니스트 근대론자들: 낸시 프레이저, 아이리스 영, 앤 필립스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999년 가을호
- 장훈교, 2008, 「민중에 대하여」, 『역사학연구소 창립20주년 심포지움 자료집』
- 전남대학교5·18연구소, 1997,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_____, 2000, 『5·18민중항쟁에 대한 재조명』, 5·18 20주년기념학술연구발표회 자료집
- _____, 2003a, 『5·18항쟁증언자료집Ⅰ,Ⅱ-5·18연구소 자료총서』, 나간채이명규 엮음, 전남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3b, 『5·18항쟁증언자료집Ⅲ-5·18연구소 자료총서』, 박병기 엮음, 전남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5, 『5·18항쟁증언자료집Ⅳ-5·18연구소 자료총서』, 김양한강현정 엮음, 전남대학교 출판부
- 전명혁, 2008, 「『민중사』, 성과와 한계: 연구현황과 '모색」, 『역사학연구소 창립20주년 심포지움 자료집』
- 전진성, 2007, 「트라우마, 내러티브, 정체성-20세기 전쟁 기념의 문화사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 『역사학보』 193권, 역사학회
- 정근식, 1997, 「민주화와 5월운동, 집단적 망탈리테의 변화」,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나간채 엮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_____, 1999a,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제주4.3 제50주년 기념 제2회 동아시아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보고서』, 역사비평사
- _____, 1999b, 「사회운동과 5월의례, 그리고 5월 축제」,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새길
- _____, 2001, 「청산과 복원으로서의 5월운동」,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고령
- 정문영, 1999, 『광주오월행사의 사회적 기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일준, 2007, 「5·18담론의 변화와 권력-지식관계: 역사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과 민주화, 5·18민중항쟁의 기억과 과거청산』, 5·18기념재단
- 정재호, 1995, 『5·18광주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3,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비교연구: 4.19혁명, 광주민중항쟁, 6월민주항쟁을 중심으로』

- 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차환, 1990, 「한국의 민중사회학과 민중문학에서의 민중 개념 비교」, 『論文集(Song Sim Research Journal)』 22권, 성심여자대학교
- 정해구, 1990, 『광주민중항쟁 연구』, 사계절
- 정호기, 2001, 「5·18기념행사와 기념사업」,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편, 고려
- _____, 2002a,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2b, 「트라우마티즘과 기념사업-5월운동과 5·18 기념공간을 중심으로」, 『제5회 비판 사회학대회 자료집』, 비판사회학대회
- _____, 2003a, 「5월운동의 전개와 주체에 관한 연구-현황과 방향」, 『5·18 제24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5·18연구: 회고와 전망』,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_____, 2003b, 「광주민중항쟁의 '트라우마티즘'과 기념공간 '5월운동'과 국립5·18묘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8권
- _____, 2004, 「5월행사와 주체로 본 5월운동 연구-연구 현황, 한계 그리고 방향」,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조희연 외, 2001,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 조희연·정호기 편, 2009,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한울
- 차성환, 2009, 『참여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영태 외, 2009, 『5·18 그리고 역사-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길
- 최용섭, 1994, 『한국민주화운동의 좌절요인과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정기, 2002, 「5·18항쟁에서의 국가폭력」, 『5·18항쟁의 이해』, 최정가나간채강현아 편, 전남대학교
- _____, 2004, 「5월운동과 지역권력구조의 변화」, 『지역사회연구』 12권, 한국지역사회학회
- _____, 2006, 「과거청산에서의 기억 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과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4권, 한국지역사회학회
- _____, 2007a, 「광주민중항쟁의 지역적 확산과정과 주민참여기제」,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18기념재단
- _____, 2007b, 「국가폭력과 대중들의 자생적 저항」,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2: 5·18민중항쟁의 원인과 배경』, 5·18기념재단
- _____, 2008, 「국가폭력의 트라우마 기제」, 『경제와 사회』 통권 제77호, 한국산업사회학회
-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 개서린 문, 2007, 『동맹 속의 섹스』, 삼인

- 한국기자협회, 1997, 『5·18 특파원 리포트』, 풀빛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 한홍구, 2009, 「놀라운 붕괴, 거룩한 좌절-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의 비교연구」, 『박정희 체제와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한홍구, 2010, 「죽음의 자각: 5·18민중항쟁 시기 죽음과의 대면이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창작과 비평』
- 황석영, 198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2) 기타자료

- 노동건강연대 외, “쌍용차 정리하고 철회투쟁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사회적 치유 촉구 공동기자회견” 자료 2009. 9. 14
- ‘한겨레21’ 811호 기사, “잊혀진 시민군, 도청 기동타격대”, 2010. 5. 24
- ‘KBS스페셜 “5·18자살자 심리부검 보고서” 다큐멘터리 2009. 5. 17

2. 구술 인터뷰 자료

- 강은숙, 2010, 김○○ 구술인터뷰 녹취록
- _____, 2010, 박○○ 구술인터뷰 녹취록
- _____, 2010; 2011, 염○○ 구술인터뷰 녹취록(1), (2)
- _____, 2010, 이○○ 구술인터뷰 녹취록
- _____, 2010, 허○○ 구술인터뷰 녹취록(1), (2), (3)
- _____, 2011, 하○○ 구술인터뷰 녹취록

3. 국외 문헌

- Agamben, G, 1995, *Homo Sacer*, Giulio Einaudi editore s.p.a.;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주권권력과 벗겨벗은 생명』, 새물결
- Arendt, H, 1973,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Harcourt, Inc; 이진우·박미애 역, 2006, 『전체주의의 기원1,2』, 한길사
- Bauman, Z, 1989, *Modernity and the Holocaust*,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ew York
- Berg, B. L, 2009,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 Allyn & Bacon

- Bourdieu, P, 1979, *La Distinction*, Les Editions de Minuit; 최종철 역, 2006, 『구별짓기』, 새물결
- Crehan, K, 2002, *Gramsci, Culture and Anthropology*, Pluto Press; 김우영 역, 2004, 『그람시·문화인류학』, 길
- Fanon, F, 1995, *Peau Noire Masques Blancs*; 이석호 역, 2003, 『검은피부 하얀가면』, 인간사랑
- _____, 2010,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남경태 역, 그린비
- Gramsci, A, 1978,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SPN)*, International Publishers, NewYork; 이상훈 역, 2007, 『옥중수고1,2』, 거듭
- Herman, J, 1997,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Basic Books; 최현정 역, 2007, 『트라우마-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플래닛
- Hoffer, E, 1951, *The True believer*, Harper Collins; 류석중 역, 1976, 『대중운동론』, 대한기독교서회
- Honneth, A, 1992, *Kampf um Anerkennung*; 문성훈·이현재 역, 1996,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동녘
- Kleinman, A. et al, 1997, *Social Suffering*,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안종설 역, 2002, 『사회적 고통: 인간의 고통에 대한 사회학적, 의학적, 문화인류학적 접근』, 그린 비
- Le Bon, G, 1895, *La Psychologie des Foules*; 김성균 역, 2009, 『군중심리』, 이레미디어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 나은영 역, 2010 『정신·자아·사회』, 한길사
- Ricoeur, P, 1976,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Texas Christian Univ. Press; 김운성·조현범 역, 1994, 『해석이론』, 서광사
- Scheper-Hughes, N., Bourgois, P., 2004, *Violence in War and peace*, Black Well Publishing
- Skocpol, T, 1984, *Vision and Method in Historical Sociololgy*, Cambridge University; 박영신 외 역, 1991, 『역사사회학의 방법과 전망』, 한국사회학연구소, 민영사
- Thomson, E. P, 1968,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나종일 외 역, 2007,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상·하』, 창비
- Wright, E. O, 1997, *Classes*, Verso; 이한 역, 2005, 『계급론』, 한울아카데미
- Young, Robert J.C, 2005,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김택현 역, 박종철출판사

ABSTRACT

The Formation of a Social Traumatism in the Life History of Resistance Group

- 'Wounded May Spirit' of the Special Strike Force of Civil Militia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Kang, Eun-Sook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SungKongHo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way in which the Special strike force of civil militia in May 18 democratic uprising overcome or form the 5·18 traumatism by reorganizing their life history at a sociological level.

In this study, this research would divide the lives of the Special strike force of 5·18 civil militia into four period into May of 1980, 1980s, 1990s, and 2000s. The lives of the participants in each period would be critically discussed in terms of traumatism and struggle for recognition considering the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draws struggle for recognition theory from Honneth and trauma-recovery analysis initiated by Herman as a theoretical framework. Put it more details, this research puts further recognition on struggle for recognition theory as it clearly explains a process how struggle for recognition operates within three areas - principle relation, relation of rights, and value community, and is formed through interaction with self-preservation, self-esteem and investing oneself with value in those domains. In the same manner, it attempts to conceptualize the various trauma processes as social traumat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pecial strike force of 5·18 civil militia constructs collective identity called 'May Spirit' that indicates generalized norm of others being built up. Besides, they show the process of overcoming and forming traumatism as a result of continuous recognition struggle among the three fields—a comrade meeting of the Special strike force of 5·18 civil militia, May

Organization, and May Community.

- 1) May of 1980 : Forming resistant traumatism through the experience of 5·18.
- 2) 1980s : Overcoming traumatism in the process of recognition struggle for 'May Spirit.'
- 3) 1990s : Executing Recognition struggle for '5·18 resources' and forming new traumatism.
- 4) 2000s : Constructing complex traumatism brought about by 'wounded May Spirit.'

To be concrete, for resistant traumatism, the Special strike force of 5·18 civil militia shows and strives for keeping the struggle consciousness transcending basic human instinct for survival in spite of shocking external accidents in May, 1980. And such resistant traumatism sutures their life torn in pieces and make them try to form a connection with various communities commemorating sacrifice. These processes devote to construct 'May Spirit' that has been widely agreed to be protected in 1980s. Since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in 1990s, the meaning of 5·18 was distorted and limited. In this process, the Special strike force of 5·18 civil militia forms complex traumatism accompanied by the damage of 'May Spirit', inner conflict of the May Community, withdrawal of the social support, and etc. To sum up, complex traumatism is formed by repeated circulations of two processes: the loss of a high level of moral norm constructed in order to overcome diverse difficulties created by 5·18; and the disallowance of their contributions of 5·18. In addition, the complex traumatism of the Special strike force of 5·18 civil militia tend to be expressed in anger such as distrust, deprivation, and hostility.

Lastly, social traumatism is deeply connected with thre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as follows. 1) structural limitations of liquidating the past mainly concentrated on compensation to individual victims 2) the institutionalized process of 5·18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1987 3) the internal conflict structure of (the) resistance group and process of isolating (the) resistance group given the context of socio-politics in Korea.

Key words : Special strike force of 5·18 civil militia, May 18 democratic uprising, May movement, May community, Liquidation of 5·18, life history, struggle for recognition, identity formation process, social support, trauma, social traumatism, resistant traumatism.

2011년 연구지원논문

- ▣ 1980년대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과 5·18
 - ▣ 한국 국립묘지의 정치학
 - ▣ 국립5·18민주묘지 비문 읽기
- ▣ 1970년대 광주일고 이념서클에 대한 연구
- ▣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1980년대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과 5·18

작성자 : 한규무(광주대학교)

- I. 머리말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5·18 당시 광주 기독교계의 역할
- IV. 198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과 5·18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연구는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하 '5·18'로 약칭)이 당시 및 1980년대 한국기독교¹⁾ 민주화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 5·18 당시 기독교회의 역할과 동향을 살펴본다. 1980년 5·18 당시 광주·전남의 기독교회도 나름대로 사태의 수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비록 5·18 당시의 활동은 미약했다 해도 이후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기독교회의 역할은 매우 컸으며, 여기에는 5·18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5·18 당시 기독교회의 역할과 동향을 밝혀내는 것은 이후 기독교 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198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에 끼친 5·18의 영향을 알아본다. 5·18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같은 시기 민주화운동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비롯한 기독교계의 역할이 컸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5·18은 198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

1) 엄밀히 말해 '기독교' 라 하면 '천주교'·'개신교'·'정교' 등이 포함되나, 이 글에서는 '개신교'를 뜻한다.

쳤는가)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성과 역시 드물다. 이 부분이 밝혀진다면 향후 5·18 연구를 위해 나름대로 보탬이 될 것이다.²⁾

셋째,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실증적인 정리에 초점을 맞춘다. 역사연구에서 해석이나 평가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나,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5·18과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관계를 시기별·지역별로 정리할 것인데, 특히 기독교계의 5·18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 기념행사의 개최, 그리고 각종 성명서에 나타나는 5·18 관련내용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려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적으로는 1980년 5·18 당시부터 제5공화국 시기(1980-87)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지역적으로는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의 기독교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중 개신교를 대상으로 한다.³⁾ 기독교 안에서도 이른바 ‘진보’와 ‘보수’ 계열이 있다. 기독교 민주화운동은 진보계열에서 주도했으므로 이것이 연구의 중심대상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자료는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2009; 이하 ‘5·18자료총서’로 약칭)와 『광주오월민주항쟁 사료전집』(풀빛, 1990; 이하 ‘『광주사료전집』’으로 약칭) 등 자료집, 『1980년대 민주화운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등이다. 이밖에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에서 구심체 역할을 한 NCKK의 소장문서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⁴⁾ 부디 이 연구가 5·18 연구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다.

2) 현재까지 이루어진 관련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 윤선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종교계의 역할」, 『민주주의와 인권』 2-1(전남대 5·18연구소, 2002).
- 김홍수, 「5월항쟁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반응」, 『한국기독교역사』 5(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조이제,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5), 166-180쪽.
- 김명배, 『해방후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1960-1987』(북코리아, 2009), 209-219쪽.

3) 천주교의 경우 이미 몇 편의 선행연구가 있으며 관련자료 또한 방대하므로 이는 별도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는 한국교회의 연합정신 구현과 에큐메니칼운동을 위해 창설된 기독교 협의체이다. 1924년 9월 24일 당시 장로교와 김리교의 선교연합 구축을 위해 결성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일체의 간섭으로 활동하지 못하다가 1946년 다시 발족했다. NCKK는 민주화운동·통일운동을 비롯한 기독교 사회운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대표적인 진보적 기독교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NCKK 인권위원회는 1970-9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작성수집한 상당한 분량의 관련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현재 이 문서는 (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NCKK로부터 수증하여 정리 중이다. 이 자료는 조이제의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에서 성명서 및 회의록 일부가 소개된 것을 제외하면 아직 거의 활용된 바가 없다. 본문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NCKK’,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는 ‘EYC’,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은 ‘KSCF’로 약칭하겠다.

II. 선행연구 검토

『5·18 민주항쟁 연구의 현황(1)·(2)·(3)』(5·18기념재단, 2006)에 따르면, 5·18과 기독교에 대한 연구는 김홍수와 윤선자의 논문뿐이다. 이밖에 조이제와 김명배의 저술에 일부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정도이며, 한국기독교사 개설서 중 대표적·진보적으로 평가받는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3)』(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에도 5·18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적다.⁵⁾ 따라서 5·18 연구에서 기독교와의 관련 부분은 연구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⁶⁾

그럼에도 이들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적지않은 정보와 시사를 준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의의 및 한계를 짚어보자.

김홍수의 논문(「5월항쟁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반응」)은 5·18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에 대해 천주교·개신교 교인이나 집단이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를 신앙고백과 신학해석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도·증언·설교·성명 등이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 나오는 5·18과 기독교 관련부분 및 활용자료는 다음과 같다.

- 1980.05.20 침례교 선교사 아놀드 A. 피터슨의 증언(피터슨, 『5·18 광주사태』, 풀빛, 1995)
- 1980.05.26 박용준의 기도문(『1980년대 민주화운동(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 1980.05.22 목사·신부 등 종교지도자, 15명으로 구성된 '5·18수습대책위원회' 결성에 참여
- 1980.05.25 '목포시 기독교연합회 비상구국기도회' 에서 <광주시민혁명에 대한 목포지역 교회의 신앙고백적 선언문> 발표
- 1980.06.00 이후 교회의 반응은 대체로 진상을 알리는 문서, 구속된 성직자·평신도들의 재판과정에서의 진술, 추모예배를 통해 광주사건에서 희생된 자들을 기억하는 일 그리고 조찬 기도회 등으로 표출
- 1980.00.00 홍남순 변호사의 고백(『1980년대 민주화운동(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 1980.06.00 감리교, 6월 9일부터 1주간을 기도주간으로 결정

5) 이 책에서는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기독교청년협의회 회원 김의기가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투신했으며, 신촌 네거리에서는 기독교인 노동자 김종태가 분신하였다(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3)』, 244쪽)" 는 언급에 그치고 있다.

6) 이밖에 『5·18자료총서(8)』에는 「아! 광주여! 오월이여!(1996.8)」(『인권선교 20년사』, 1996.8)와 「광주민주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했나(1)·(2)」(『호남선교』 1993.5·6)가 실려 있다. 이들은 당시의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중요한 문건이지만 아직 연구에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

- 1980.06.08 전주시내 전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참여한 기도회가 완산교회에서 개최
- 1982.05.18 한국기장 전남노화·광주기독교연합회·광주기독교청년연합회 공동으로 광주YMCA에서 연합예배 개최
- 1982.05.18 언론기관·관변단체, '새광주건설 도민단합대회' 열고 기독교인들의 활동과 연합예배를 비판
- 1996.05.18 광주한빛교회에서 기념예배 거행

이 논문은 5·18에 대한 기독교계의 학술논문으로서는 최초란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5·18에 대한 교회와 교인의 반응을 신앙고백·신학해석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관점이나 방법이 역사학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이며, 시기적으로도 5·18 당시나 직후로 한정되어 있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구분되지 않았다.

윤선자의 논문(「5·18광주민주화운동과 종교계의 역할」)은 1980년 5·18 당시 천주교 광주교구·전주교구의 활동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거의 1980년에 국한되어 있다. 개신교측의 활동은 일부 소개에 그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0.05.21 김신근·한완석 목사 등 8명이 광주제일교회에서 첫 비공식 회의 개최
- 1980.05.22 60여 명의 목사·장로가 광주제일교회에 모여 서로의 목격담을 나누며 기도회 개최
- 1980.05.23 광주시내 15개 교파 200여 교회에서 100여 명의 목사·장로들이 광주제일교회에 모여 '광주시기독교수습대책위원회' 결성하고 구호금 1천만원 헌금을 결의
- 1980.05.25 '광주시민일동' 명의로 <전국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글> 발표
- 1980.05.25 목포시기독교연합회 비상구국기도회에서 <광주시민혁명에 대한 목포지역교회의 신앙고백적 선언문> 발표하고 광주항쟁을 시민혁명으로 정의, 시민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전국적 관심을 요청
- 1980.05.26 광주시내 각 교파 목사 30여 명이 모여 '광주시기독교수습대책위원회'를 '광주시기독교비상구호대책위원회'로 개편하고 각교회에 <구호사업추진 협조의 일>이란 공문 발송

조이제의 저술(『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은 NCKK 창립 30주년을 맞아 펴낸 것으로, NCKK의 민주화운동을 정리한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까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여기에 나오는 5·18과 기독교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 1980.05.24 광주 각 교회 목사들은 '부상자돕기 1천만원 모금운동' 을 전개할 것을 결의(25일부터 시작)
- 1980.05.25 목포의 교인들, 주일예배 마치고 목포역 광장에 모여 '비상구국기도회' 열고 광주 민중항쟁을 "동학혁명, 3·1운동, 광주학생사건, 4·19와 명동민주구국선언의 법통을 잇는 역사적인 시민혁명" 으로 규정하고 <광주시민혁명에 대한 목포지역 교회의 신앙고백적 선언문> 발표
- 1980.05.26 NCKK 인권위원회, 대책위원회를 열고 '광주사태대책위원회' 구성
- 1980.05.28 NCKK 인권위원회·교회와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했으나 당국의 금지로 무산
- 1980.06.04 NCKK 오충일 목사와 이경배 사무국장, 광주를 방문하고 현장조사
- 1980.07.04 NCKK 조남기 위원장,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 면담하고 교회의 입장 전달
- 1984.07.05 NCKK 인권위원회, '광주사태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1984.11.09 NCKK 조사위원들, 광주 한빛교회에 모여 광주지역 조사위원 선임
- 1985.06.05 NCKK 등 인권문제전국협의회 명의로 5·18 진상규명 촉구하는 성명 발표

이 저술은 제목 그대로 NCKK가 민주화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5·18 자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대상시기가 1990년대까지임에도 5·18 관련내용은 1980년대 전반(前半)에 국한되어 있다.

김명배의 저술(김명배, 『해방후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인 『한국 기독교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1960-1987』(장신대, 2007)을 다듬어 출간한 것이다. 여기서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기도회의 개최’·‘수습대책위원회 참여’·‘유인물 배포’·‘자살: 투신과 분신’·‘기도회와 추모예배’ 등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으며, 대상시기는 1980-1982년이다. 여기에 나오는 5·18과 기독교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 1980.05.22 광주지역 목사·신부 등 종교지도자, 15명으로 구성된 5·18수습대책위원회에 참여
- 1980.05.25 목포역 광장에서 기독교인 600여명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기독교연합회 비상구국기도회 개최하고 <광주시민혁명에 대한 목포지역 교회의 신앙고백적 선언문> 발표
- 1980.05.25 광주시민들, <전국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글> 발표
- 1980.05.25 한빛교회 박윤수 전도사 및 대학생들, 경찰에 구속
- 1980.05.29 고려대 기독교학생회원 16명, 경찰에 구속
- 1980.05.30 EYC 농촌간사인 서강대 학생 김의기, <동포에게 드리는 글>·<광주시민,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며> 발표하고 기독교회관에서 투신자살

- 1980.06.08 전주 기독교인들, 완산교회에서 초교파적 기도회 개최
- 1980.06.09 기독교감리회 선교국, 1주간을 기도주간으로 설정
- 1980.06.28 NCKK, 인권위원회·교회와사회위원회 소집코자 했으나 당국의 불허로 무산
- 1980.08.05 청주산업선교회 조순형 전도사 및 4명, 5·18 관련 유인물을 제작·살포한 혐의로 구속
- 1980.10.08 한신대 학생들, 고(故) 유동운 추도식을 마친 후 시위를 벌이다 146명 연행
- 1980.10.22 한빛교회 교인 양화수 등 4명, <십자가의 성전을 선포한다>·<폭력을 논함> 유인물을 제작·살포하다 구속
- 1982.05.18 광주YWCA회관에서 기장 전남노회 교회사회위원회·광주기독교연합회·광주기독교 청년연합회 공동주관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위한 예배 거행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그 대상시기가 1980년대 전반(前半)으로 한정되며, 그 대부분을 1980년 5·18 당시에 할애하고 있고, 내용도 중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같은 현상은 선행연구들의 목표가 1980-90년대 5·18과 한국기독교계의 동향에 맞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5·18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직 이 분야를 개괄하는 선행연구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Ⅲ. 5·18 당시 기독교계의 역할과 동향

1. 5·18 당시 광주 기독교계의 역할

1979년 10·26을 계기로 유신정권이 붕괴되자 각계각층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열망을 품고 다양한 활동에 나섰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NCKK 인권위원회도 1980년 5월 2일 예수교장로회 통합측(예장통합)·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구세군·성공회·복음교회 등 목회자들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으며, 5월 14일 천주교성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사회안전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⁷⁾

하지만 이같은 활동은 5·18이 일어나면서 전면중단되었다. 그 후 5·18 기간 중 광

7) 조이제,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156-157쪽.

주 ‘기독교계’⁸⁾의 활동은 그 주체에 따라 (성당측·도청측) 수습대책위원회, 광주사태 수습대책위원회, 광주시기독교수습대책위원회, 광주YMCA·YWCA 등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1) (성당측) 수습대책위원회⁹⁾

5·18 이전 광주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면 신·구교가 공동대처하기 위한” 사회선교위원회란 연합조직이 있었는데, 회장은 김성용 신부, 부회장은 조아라·이성학 장로였다. 이들을 주축으로 유신정권하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인사들은 5월 22일 오전 10시경 천주교 남동성당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¹⁰⁾ 그 명단 및 회합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법정기록(공소사실)’¹¹⁾ 및 증언¹²⁾ 중 관련부분을 바탕으로 이후 상황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성당측) 수습대책위원회 명단 및 회합

인물	회합	5.22		5.23	5.25		
		남동성당 사제관	도청 부지사실	남동성당 유치원	YWCA 총무실	남동성당 유치원	도청 부지사실
홍남순 (1914년생/변호사)	10: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송기숙·이성학·이예신·조아라·홍남순	11:30 좌기 동인	10:00 김성용·김천배·위인백·이기홍·이예신·이영생·장기안·조봉환·조아라·조철현·홍남순	10:00 명노근·박석무·윤광장·윤상원·이기홍·이성학·장두석·정상용·홍남순	14:00 김성용·명노근·송기숙·오병문·이기홍·이성학·조아라·홍남순	17: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송기숙·오병문·위인백·이기홍·이성학·이예신·조아라·홍남순	
김성용 (1934년생/신부)	10: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송기숙·이기홍·이성학·이예신·이영생·조아라·홍남순	11:00 좌기 전원	10:00 김성용·김천배·위인백·이기홍·이예신·이영생·장기안·조봉환·조아라·조철현·홍남순	11:00 명노근·송기숙·윤상원·이기홍·이성학·정상용·허규정·홍남순	14: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송기숙·오병문·이기홍·이예신·장두석·조아라·조철현·홍남순	17:00 좌기 전원	

- 8) ‘기독교회’라 하면 예배당을 갖춘 형태의 ‘교회’나 그 연합체인 ‘교단’만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기독교계’라 하면 그것은 ‘교회’·‘교단’은 물론 YMCA·YWCA와 같은 ‘기관’과 ‘교인’까지 포함된다. 5·18 당시를 설명할 때는 ‘기독교계’란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 9) 김성용·명노근·송기숙·이기홍·조아라·조철현·홍남순 등의 증언에 따르면, 5월 22일 남동성당에서의 회합에서 별도의 대책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들은 같은날 도청에서 조직된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광주 5월 민중항쟁 증언」, 『사료전집』, 127-202쪽). 이후 이 대책위원회 내부에서는 남동성당에 모였던 ‘재야인사’들과 다른 인사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다. 따라서 양측을 구분하기 위해 ‘남동성당측’이란 표현을 썼다. 실제로 이들은 ‘남동성당파’·‘남동성당파 수습위원’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 『광주사료전집』, 84쪽; 송기숙, 「수습과 항쟁의 갈등」, 『광주사료전집』, 160쪽). 여기서는 5월 22일 도청에서 모인 이들을 ‘도청파’·성당에서 모인 이들을 ‘성당파’로 구분하겠다. 이들 중에는 조철현(조비오) 신부처럼 양측에 모두 참여한 이들도 있다.
- 10) 「인권선교 20년사」, 『5·18자료총서Ⅱ』, 385-386쪽; 조아라,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일」, 『사료전집』, 137쪽. 이들에 대해 송기숙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 유신치하에서 민주화를 위한 여러가지 논의를 할 때 항상 같이 모였던 사람”이라 증언했다(「수습과 항쟁의 갈등」, 『광주사료전집』, 160쪽).
- 11) 「광주민중항쟁 관련 법정기록」, 『1980년대 민주화운동(7)』, 379-414쪽. 이 기록은 5·18을 ‘불순분자들의 폭동’으로 몰아가려는 계엄사측의 입장을 담은 것이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명단·시간·장소 등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위의 자료집에서는 이들을 ‘재야’로 분류했다.
- 12) 「광주 5월 민중항쟁 증언」, 『광주사료전집』, 125-198쪽.

명노근 (1933년생/교수)	10: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 송기숙-이기홍-이성학- 이애신-조아라-홍남순	11:00 김성용-명노근-송기숙- 홍남순		11:00 명노근-박석무-송기숙- 윤상원-이기홍-이성학- 장두석-정상용-홍남순	14: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 송기숙-오병문-이기홍- 이성학-이애신-조아라- 조철현-홍남순	17: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 송기숙-오병문-위인백- 이기홍-이성학-이애신- 조아라-홍남순
송기숙 (1935년생/교수)	10: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 송기숙-이기홍-이성학- 이애신-조아라-홍남순	11:00 김성용-명노근-송기숙- 홍남순		11:00 명노근-박석무-송기숙- 이기홍-이성학-장두석- 정상용-허규성-홍남순	14: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 송기숙-오병문-위인백- 이기홍-이성학-이애신- 장두석-조아라-조철현- 홍남순	17:00 김성용-명노근-송기숙- 오병문-위인백-이기홍- 이애신-장두석-조아라- 홍남순
이기홍 (1933년생/변호사)	10: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 송기숙-이기홍-이성학- 이애신-조아라-홍남순	11:00 김성용-명노근-송기숙- 이기홍-홍남순	10:00 김성용-김천배-위인백- 이기홍-이애신-이영생- 장기안-조봉환-조아라- 조철현-홍남순	11:00 명노근-박석무-송기숙- 윤상원-이기홍-이성학- 장두석-정상용-홍남순	14: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 송기숙-오병문-위인백- 이기홍-이성학-이애신- 장두석-조아라-조철현- 홍남순	17:00 짜기 동인
조철현 (1938년생/신부)			10:00 김성용-김천배-위인백- 이기홍-이애신-이영생- 장기안-조봉환-조아라- 조철현-홍남순		14: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 송기숙-오병문-위인백- 이기홍-이성학-이애신- 장두석-조아라-조철현- 홍남순	17:00 김성용-김천배-위인백- 이기홍-이애신-이영생- 장기안-조봉환-조아라- 조철현-홍남순
오병문 (1928년생/교수)					14: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 송기숙-오병문-위인백- 이기홍-이성학-장두석- 홍남순	
조아라 (1912년생/YWCA회장)	10: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 송기숙-이기홍-이성학- 이애신-조아라-홍남순	11:00 짜기 동인	10:00 김성용-김천배-위인백- 이기홍-이성학-이영생- 조봉환-조아라-조철현- 홍남순	11:00 조아라-홍남순 등	14:00 김성용-조아라 등	17:00 조아라 등
장두석 (1940년생/양서협동조합이사)			10:00 김성용-김천배-위인백- 이기홍-이애신-이영생- 장기안-장두석-조봉환- 조아라-조철현-홍남순	11:00 명노근-박석무-송기숙- 이기홍-이성학-장두석- 정상용-홍남순	14: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 송기숙-오병문-위인백- 이기홍-이성학-이애신- 장두석-조아라-조철현- 홍남순	17:00 짜기 동인
위인백 (1948년생/변호사 사무장)			10:00 김성용-김천배-위인백- 이기홍-이성학-이애신- 이영생-조아라-조철현- 조철현-홍남순	11:00 명노근-박석무-송기숙- 위인백-이기홍-이성학- 장두석-정상용-홍남순	14:00 김성용-위인백 등	17:00 짜기 전원
이영생 (1915년생/YMCA이사)	10: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 송기숙-이기홍-이성학- 이애신-이영생-조아라- 홍남순	11:00 김성용-김천배-이애신- 이영생-장기안-조봉환- 조아라-조철현-홍남순	10:00 김성용-위인백-이기홍- 이성학-이애신-이영생- 장기안-조봉환-조아라- 조철현-홍남순		14: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 송기숙-위인백-이기홍- 이성학-이애신-이영생- 장두석-조봉환-조아라- 조철현-홍남순	17:00 짜기 동인
조봉환 (1918년생/농업)			10:00 김성용-위인백-이기홍- 이성학-이애신-장기안- 조봉환-조아라-조철현- 홍남순		14: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 송기숙-위인백-이기홍- 이성학-이애신-장두석- 조봉환-조아라-조철현- 홍남순	17:00 짜기 동인
이애신 (1923년생/YWCA총무)	10:00 김성용-명노근-송기숙- 이기홍-이애신-조아라- 홍남순		10:00 김성용-김천배-위인백- 이기홍-이애신-이영생- 장기안-조봉환-조아라- 조철현-홍남순		14:00 김성용-김천배-명노근- 송기숙-오병문-위인백- 이기홍-이성학-이애신- 조아라-조철현-홍남순	17:00 짜기 동인

*전자: 「광주민주항쟁 관련 법정기록」, 『1980년대 민주화운동(7)』, 379-414쪽.

〈표 2〉 (성당측) 수습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증언

성명	내용
차재연	[5.22] 홍남순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수습위원회에 참여
조아라	[5.22] YWCA에서 YWCA 이사·홍남순 변호사·목사 등이 신·구교가 함께 사태를 해결하자고 논의(기존의 '사회선교위원회' 활용-회장 김성용 신부/부회장 조아라·이성학 장로)→남동성당으로 가서 김성용 신부와 협의→도청 부지사실로 가니 정시채 부지사·이종기 변호사·침례교 장목사·조선대 신교수 등이 수습대책회의 중(이종기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7개 요구사항 작성)→이종기·장목사·장흥동 등이 계엄본소 방문 [5.23] 남동성당에서 종교계 신·구교 임원과 교수·변호사 중심한 재야인사들만 회합(그 시각 도청에서 상공 회의소 회합·한국부인회 등 친여세력·친여단체 중심으로 수습대책위원회 조직(독립투사 최한영을 위원장으로 선출)→이들의 연락을 받고 도청에 온 재야인사들은 최한영과 설전→어느 목사가 지금 광주제일교회에서 목사들이 회의 중인데 한완식 목사를 오도복 하여 함께 회의하자고 제의→한완식 목사·장목사가 도청에 오고 교수·신부·한목사 외 2명이 대표로 계엄본소 방문 [5.25] 도청에 있던 학생들이 수습위 사무실로 와 "자칭 조선대 신교수, 하나님교회 김재희 목사, 장목사"를 고함치며 비난하자 이들은 퇴실
정태성	[5.22] 남동성당 방문(김성용 신부·조비오 신부·홍남순 변호사 등 회합 중)→도청으로 이동(정시채 부지사·윤세균 목사·이종기 변호사 등 회합 중)
장사남	[5.25] 홍남순 변호사의 요청으로 김갑재와 함께 남동성당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김성용 신부·이기홍·명노근·송기숙·조아라·조비오·장무석 등 회합 중)
송기숙	[5.22] 명노근과 함께 홍남순 자택 방문→남동성당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김성용 신부·조아라 장로·이애신 YWCA 총무·이성학 장로·이영생·이기홍 변호사 등 회합 중)/도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것인가 논의/도청 회의에 참석한 조비오 신부가 돌아와 상황을 설명→일행은 도청으로 가 협의하고 7개항의 수습조건에 동의 [5.25] YWCA에서 열린 회의에 홍남순 변호사·이성학 장로·이기홍 변호사·명노근 교수·윤영규·박석부·장무석·정성용 등 참석
이기홍	[5.22] 남동성당에서 김성용 신부·조아라 장로·홍남순 변호사 등 10여명과 회합→김성용 신부 등을 도청에 대표로 파견 [5.23] 남동성당 유치원에서 홍남순 변호사·김성용 신부·조철현 신부·조아라 장로·이애신 YWCA 총무·위인백 사무장 등 20여명이 회합 [5.25] YWCA 총무실에서 재야측 수습위원 일부가 학생대표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
조철현	[5.22] 오전 도청 부지사실에 마련된 수습위원회 회합에 참석(수심명의 법조계·언론계·종교계·학생·교수들 참석: 조철현 신부가 천주교 대표, 목사 2명이 개신교 대표, 독립운동가 최한영, 사업가 장흥동 등 11명으로 수습위원회 구성)
홍남순	[5.22] 김성용 신부로부터 전화받고 남동성당 회합에 참석→도청으로 가서 정시채 부지사 면담 [5.23] YWCA에서 열린 수습회의에 참석→도청에 열린 수습회의에 참석 [5.25] 3개의 수습대책위원회가 통합(위원장: 이종기 변호사/대변인: 김성용 신부)
명노근	[5.22] 송기숙과 함께 홍남순 변호사 자택 방문→함께 남동성당 회합에 참석(김성용 신부·조아라 장로·이성학 장로 등)→도청으로 이동 [5.23] 도청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 참석(광주지역 유자·교계대표·종교계 인사 등) [5.25] YWCA에서 송기숙·홍남순·이기홍·조아라 및 학생 몇 명과 함께 사태수습을 위해 토의

*전거: 「광주 5월 민중항쟁 증언」,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125-198쪽.

이처럼 이들은 5월 22-25일 적어도 6번의 회합을 갖고 대책을 숙의했는데, 일시와 증언에 따라 명단은 약간 달리 나온다. 먼저 5월 22일 오전 10시경 남동성당 사제관에 모인 이들은 누구에 대한 '공소사실'인가에 따라 7-10명으로 나오며, 15-16명으로 나오는 자료도 있다.¹³⁾ 김성용·이영생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0명이며, 같은 시간 도청에서 열린 수습대책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남동성당의 회합에 합류한 조철현

13)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 『광주사료전집』, 84쪽. 15-16명이라 한 것은 5월 23·25일의 회합과 혼동했기 때문인 것 같다.

(조비오) 신부14)까지 포함시키면 11명이 된다.

이들 중 김성용·조철현 신부가 천주교인, 김천배·명노근·송기숙·이기홍·이성학·이에신·이영생·조아라·홍남순 중 송기숙·홍남순을 제외한 이들은 개신교인이었다. 즉 11명 중 9명이 기독교인 것이다. 이는 이 회합의 모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면 신·구교가 공동대처하기 위한” 사회선교회였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 김천배·명노근·이성학·이영생은 광주YMCA 이사였으며, 조아라와 이에신은 광주YWCA의 회장과 총무였다.¹⁵⁾ 천주교측은 신부 2명이 참여했으나 개신교측은 모두 목사·전도사 등 교역자가 아닌 평신도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성당파’는 ‘강경파’로 알려졌으며,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도청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¹⁶⁾ 이들 모두는 5·18 이후 계엄사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2) (도청측) 수습대책위원회

5월 22일 오전 도청에서도 별도의 회합이 있었다. 조철현 신부의 증언에 따르면, 그 자리에는 “수십명의 법조계·언론계·종교계·학생·교수들”이 참석했으며, 조철현 신부가 천주교 대표, 목사 2명이 개신교 대표를 맡고 독립운동가 최한영, 사업가 장휴동 등 11명으로 수습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한다.¹⁷⁾ 조아라의 증언에 따르면, 도청에서 “정시채 부지사, 이종기 변호사, 침례교 장목사, 조선대 신교수 등 몇몇 사람이 모여 수습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¹⁸⁾ “최한영(독립투사)·박윤중(전 광주시장)·이종기(변호사)·조비오(신부)·윤영규(YMCA 이사)·김상형(전남대 강사)·이석연(전남대 교수)·장휴동·신용순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이종기 변호사가 위원장에 선임되었다거나,¹⁹⁾ 이들이 “목사·신부·변호사·관료·기업주 등을 중심”으로 한 15명이었다는 자료도 있다.²⁰⁾

그런데 ‘성당파’ 중에는 ‘도청파’ 일부에 대해 의혹을 품은 이들도 있었다. 예컨대

14) 송기숙, 「수습과 항쟁의 갈등」, 『광주사료전집』, 135쪽. 그런데 조철현은 “22일 저녁” 예야 남동성당의 회합에 참석했으며, “그날부터 남동성당에서 수습대책을 논의하던 재야인사들이 도청 수습위에 자연스럽게 합류하여 본격적인 수습활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증언했다(조철현, 「민족과 역사의 심판」, 『광주사료전집』, 190쪽).

15) 광주YMCA 역사편찬위원회, 『광주YMCA 90년사』(광주YMCA, 2010), 379쪽. 이기홍은 한빛교회 교인이었으며(이기홍, 「광주재판 다시 해아」, 『광주사료전집』, 181쪽), 홍남순은 불교신자였(홍남순평전간행위원회, 『영원한 재야, 대인 홍남순』, 나남, 2004, 398쪽).

16)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 『광주사료전집』, 108-109쪽; 『경향신문』 1980년 5월 31일 「광주사태에 대한 계엄사 발표」.

17) 조철현, 「민족과 역사의 심판」, 『광주사료전집』, 189쪽.

18) 조아라,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광주사료전집』, 137쪽.

19)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 『광주사료전집』, 84쪽.

20)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6)』, 96쪽.

조아라는 “도청에서 상공회의소 회원, 한국부인회 등 친여세력, 친여단체를 중심으로 한 몇몇 단체들이 자칭 독립투사 최한영을 모시고 정식으로 수습대책위원회 조직”,²¹⁾ 김성용은 “어용목사와 교수, 그리고 장모라는 정치가가 달려들어 긴급히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²²⁾ 조철현은 “도청 수습위원들이 어용인사들이라고 의심을 받거나 혹은 어용 쪽에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²³⁾ 송기숙은 “도청에 모여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시민의 대표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²⁴⁾이라 증언했다. 이에 반해 ‘도청파’인 장휴동은 “어느날부터인가 광주의 재야인사들이 도청으로 파고 들어왔다. 김성용 신부를 비롯해 남동성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온 것이다. … 그런데 그분들(주: 조비오·조아라)이 다른 재야인사들과 함께 들어와서는 기존의 수습위원들을 완전히 어용으로 몰고 자신들이 수습위원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식이었다”고 증언했다.²⁵⁾ 그럼에도 5월 22일 도청에 온 ‘성당파’는 ‘도청파’가 “제시한 7개항 수습방안을 들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그 방안에 따르기” 함으로써 수습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²⁶⁾ 그 뒤에도 이들은 수습대책을 놓고 강경·온건의 갈등을 빚었다.²⁷⁾

한편 ‘도청파’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아라는 ‘침례교 장목사’, 김성용은 ‘어용목사’, ‘장모 목사’, 조철현은 ‘목사님 두 분’이라 증언했는데,²⁸⁾ 5월 25일 광주사태수습대책위원회(대변인 김성용 신부) 명의로 발표된 「최급하 각하게 드리는 호소문」의 명단에 나오는 ‘김목사(침례교 목사)’와 ‘장목사(침례교 목사)’가 그들이다.²⁹⁾ 또 조아라 증언에 따르면 5월 23일 도청에서의 회합에서 ‘젊은 목사’가 나서서 “지금 금동 제일교회에서 개신교 목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개신교 목사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한완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모셔다 함께 회의를 합시다”고 제안하여 ‘장목사와 한완석 목사’가 도청에 오자 “교수, 신부님, 한완석

21) 조아라,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광주사료전집』, 138쪽.

22) 김성용, 「분노보다 슬픔이」, 『광주사료전집』, 176쪽.

23) 조철현, 「민족과 역사의 심판」, 『광주사료전집』, 190쪽.

24) 송기숙, 「수습과 항쟁의 갈등」, 『광주사료전집』, 160쪽;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 『광주사료전집』, 84쪽.

25) 장휴동,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 『광주사료전집』, 185쪽.

26) 이 수습대책위원회의 정식명칭은 ‘5·18사태수습대책위원회’였다(5·18사태수습대책위원회 일동, 「개업분소 방문 협의의 결과보고(1980.5.24)」, 『5·18자료총서(2)』, 51쪽).

27)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 『광주사료전집』, 84쪽.

28) 조아라,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광주사료전집』, 137쪽; 김성용, 「분노보다 슬픔이」, 『광주사료전집』, 176쪽; 조철현, 「민족과 역사의 심판」, 『광주사료전집』, 189쪽.

29) 『5·18자료총서(2)』, 61쪽; 『1980년대 민주화운동(6)』, 172-173쪽. 여기에 실린 호소문은 ‘원문’ 이기는 하나 ‘원본’ 이 아니어서, 다른 위원은 실명으로 나오는데 왜 이들만 ‘장목사’ · ‘김목사’ 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목사 외 2명을 대표로 뽑아” 5명이 계엄분소를 방문했다고 한다.³⁰⁾ 장휴동은 5월 22일 도청에 모인 이들 중 “최한영, 장세균 목사, 조비오 신부, 김창길, 박재일 목사” 등이 대표로 계엄분소를 방문했다고 증언했다.³¹⁾

박재일 목사는 다른 자료에 나오지 않으며 어떤 인물인지 알기도 어렵다. ‘김목사’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으나,³²⁾ ‘장목사’는 장세균 목사임이 분명하다. 5·18 기간 중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침례교 피터슨 목사의 회고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표 3〉 장세균 목사의 활동

일자	활동
5.22	아침에 일단의 복음주의적인 목사들이 전화로 서로 연락해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장로교회에 모이기로 결정했다. 세 개의 다른 장로교파들에서 세 명의 목사와 한 명의 감리교 목사가, 한 명의 성결교 목사가, 세 명의 침례교 목사가 같이 모였다. 세 명의 침례교 목사는 박영복·신순균·장세균이었다. ... 그들은 10시 30분에 모여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조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논의했다. ... 도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계엄사령부와 협상을 벌이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 세 명의 침례교 목사들이 가기로 결정했다. 장목사와 박목사와 신목사는 중앙장로교회에서 네 구획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도청으로 걸어가서, 학생들이 협상을 하도록 설득했다. ... 협상위원회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시민수습위원회라고 명명되었다. 중앙장로교회에 처음 모인 여덟 명의 목사와 두 명의 변호사와 한 명의 사제와 한 명의 학생대표와 한 명의 시민투사와 두 명의 시민지지와 한 명의 교수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계엄사령관에게 보일 일련의 요구사항들을 작성했다. ... 세 명의 침례교 목사들을 포함하여 몇 명의 사람들이 요구서를 계엄사령관에게 건네주도록 선별되었다.
5.23	집에 돌아왔을 때 나(주: 피터슨 목사)는 김영수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나에게 협상을 시작하는 데서 장목사와 신목사가 한 역할에 대해 말해주었다. 나중에 나는 금요일 아침에 장목사가 화정동에 있는 50명의 급진투사들에게 가서 그들이 총을 내려놓고 협상을 하도록 무릎을 꿇은 채로 설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5.24	일신교회로 가서 박목사를 만났다. 박목사를 만나는 사이에 나는 장목사와 박목사와 신목사가 목요일 아침에 시민들과 군인들 사이에서 협상을 벌이면서 보인 활동들에 대해 상세히 들었다. ... 오후 4시경에 나는 군중 속에서 신목사와 이목사를 만났다. 그때 장목사는 분수대 위 플랫폼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사실 수습위원회에 의해 진행된 협상과정에 대해 대중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30) 조아라,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광주사료전집』, 138쪽. 광주제일교회(예정통합)의 한완석 목사가 이 자리에 참석했던 것은 확실하나, 이후 그는 개신교회 연합조직인 ‘광주시기독교수습대책위원회’ (‘광주시기독교비상구조대 책위원회’로 개칭)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수습대책위원회와는 거리를 뒀다.

31) 장휴동,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 『광주사료전집』, 184쪽.

32) 어느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도청 안에는 김성오란 자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이란 명함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목사가 아님이(어용목사) 밝혀졌으며 진압이 될 무렵 행방을 김춘 사실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목사나 교회에 대한 인심이 좋지 아니했었다(『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18)』, 581쪽)고 한다. 김성용이 지칭한 ‘어용목사’도 그가 아닐까 짐작되지만, 명단에 나오는 ‘김목사’는 ‘침례교 목사’로 나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이란 직함과 맞지 않는다.

5.25	우리가 2층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일단의 서방기자들이 시민지도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침례교 목사인 장세균이 도청에 있는 사실상의 리더였다. … 장목사는 수습위원회를 대신해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는 주요인물인 것 같았다.
5.26	나는 장목사와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과 시민들 중 급진과 투사들에게 그들이 무기를 넘겨주고 계엄군과의 협의상황에 동의할 것을 설득하고 있었다. … 오후 8시쯤에 장목사는 문제가 협상에 의해서 풀릴 수 없음을 감지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다. 그는 군인들이 다음날 쳐들어오리라는 것을 알면서 집으로 갔다. 그는 문제를 풀고자 닦새 내내 노력했었다.
5.27	오전에 나는 도시의 여러 교회에 전화를 해서 목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장목사를 포함하여 모두가 안전했다.
5.30	우리가 돌아왔을 때 나는 장목사가 금요일인 5월 30일에 체포된 것을 알게 되었다. 즉시 나는 그의 아내와 몇몇 광주지역 목사들과 함께 그를 찾아 그의 석방을 보장하고자 노력했다. 우리는 그가 어디 갇혀있는지 몰랐고 더욱이 어떤 기소제목으로 갇혔는지를 몰랐다. 우리가 찾고자 노력했지만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
6.04	마침내 수요일인 6월 4일에 우리는 그가 갇혀 있는 곳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석방을 보장받는 데는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수요일 오후에 우리는 광주 계엄사령본부로 갔다. 우리는 장목사가 안전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확실한 장교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석방을 기대할 수 있다고는 암시하지 않았다. … 그런데 그날밤 10시에 장목사는 감금에서 풀려났다.

*전거: 아놀드 A 피터슨 저(정동섭 역), 『5·18 광주사태: 아놀드 A. 피터슨 목사의 80년 광주증언록』(불빛, 1995)

이에 따르면, 박영복·신순균·장세균 등 침례교 목사 3명은 5월 22일 열린 도청에서의 회합에 참석했고, 같은날 계엄분소도 방문했으며, 23일 장세균은 ‘급진투사’들을 설득했고, 피터슨의 눈에 장세균은 “도청에 있는 사실상의 리더”·“수습위원회를 대신해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는 주요인물”로 비쳐졌다. 그리고 그의 역할은 ‘급진파’ 시민군을 설득하여 무기를 반납케 하고 계엄군과 협상하는 것이었다. 이는 ‘도청파’ 및 이후 설명하려는 상당수 기독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이기도 했다.³³⁾

(3) 광주사태수습대책위원회

5월 25일 남동성당에 모인 ‘성당파’는 “시민의 여론과 계엄분소간의 대화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 수습위와 합류하기로” 결정했다.³⁴⁾ 이들은 도청으로 가서 ‘도청파’와 함께 회합을 갖고 광주사태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한 뒤 위원장에 이종기 변호사, 대변인에 김성용 신부를 선출했다.³⁵⁾ 이어 이들은 김성용 신부가 작성한 최규

33) ‘도청파’ 인물들의 활동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장세균 목사가 그들을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었는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가 ‘도청파’의 대표적 기독교인인 점은 확실하다.

34)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 『광주사료전집』, 108쪽, 이에 대해 공소장에는 이들이 “폭도들과 합류하여 목적달성을 위하여 투쟁을 하기로” 하고 “도청내 수습위원회에 합류하여 동위원회를 장악” 했다고 나온다(『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 『광주사료전집』, 108쪽).

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³⁶⁾ 여기에 참여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갑제(광복회), 김목사(침례교), 김성용(남동천주교회 신부), 김천배(YMCA 이사), 명노근(전남대 교수), 송기숙(전남대 교수), 신교수(조선대 교수), 오재일(청년), 위원백(법률사무소), 윤영규(YMCA 이사), 이기홍(광주변호사협회장), 이성학(국제사면위원회 전남지부장), 이애신(YWCA 회장), 이양현(청년), 이영생(YMCA 이사), 이종기(전 변호사), 장두석(가톨릭농민회), 장목사(침례교), 장사남(서석교 교사), 정규완(북동성당 신부), 정태성(시민), 조아라(YWCA 회장), 조중환(시민), 조철현(계림동성당 신부), 홍남순(변호사)³⁷⁾

김성용·정규완·조철현 신부와 장두석 등은 천주교인, 김천배·명노근·윤영규·이기홍·이성학·이애신·이영생·조아라 및 ‘김목사’·‘장목사’ 등은 개신교인이었다. 즉 25명 중 적어도 14명이 기독교인인 셈이다. 물론 이들은 대부분 개인적 결단에 따라 참여한 것이며, 특히 개신교인의 경우 교회·교단의 대표도 아니었다. 이날 밤 학생수습위원장 김창길의 요청에 따라 김성용 신부와 장세균 목사가 동원한 성당·교회 청년들이 밤새 도청 지하실에 저장된 TNT를 지켰다. 그리고 김성용·김천배·위원백·이기홍·이성학·이영생·홍남순 등도 도청에서 밤을 지냈다.³⁸⁾

한편 같은날 ‘광주시민 일동’ 명의로 「전국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글」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종교인들은 군부독재가 물러서고 민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총궐기하라.
- 종교인들은 국민적 신망을 바탕으로 거국 민주내각 구성에 적극 나서라.

35) 이에 대해 홍남순은 이로써 “세 갈래로 갈라졌던 수습대책위원회가 통합” 되었다고 증언했다(「일생을 민주회복하는 사람에게 바치리」, 『광주사료전집』, 198쪽). 여기서 ‘세 갈래’는 시민수습대책위원회·학생수습대책위원회·시민학생투쟁위원회 등이다(『광주 5월 민중항쟁 증언』, 『광주사료전집』, 125쪽).

36) 「최규하 대통령 각하에게 드리는 호소문」, 『1980년대 민주화운동(6)』, 172-173쪽; 「최규하 각하에게 드리는 호소문」, 『5·18자료총서(2)』, 61쪽;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 『광주사료전집』, 108쪽. 여기에 실린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번 사태는 정부의 잘못임을 시인해 주시고, 2. 사과와 용서를 청해 주시옵고, 3. 이미 약속하셨지만, (다시한번) 모든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하고, 4. 어떤 보복조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옵기 피눈물을 삼키면서 간곡히 간언드립니다.”

37) 「최규하 대통령 각하에게 드리는 호소문」, 『1980년대 민주화운동(6)』, 172-173쪽. 그런데 『5·18자료총서(2)』(61쪽)에 실린 「최규하 각하에게 드리는 호소문」에는 윤영규·이애신·조중환 등 3명이 명단에 빠져 있다. 또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광주사료전집』, 108쪽)에는 김성용 신부가 제안한 4개항에 27명이 서명했다고 나와 역시 차이를 보인다.

38) 조아라,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광주사료전집』, 139쪽; 장사남, 「무기회수에 참여하다」, 『광주사료전집』, 152쪽; 이기홍, 「광주재판 다시 해야」, 『광주사료전집』, 181쪽; 조철현, 「민족과 역사의 심판」, 『광주사료전집』, 194쪽;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2)』, 582쪽;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6)』, 111쪽;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 『광주사료전집』, 109쪽.

•모든 종교인들은 광주지역의 질서회복에 앞장서라.³⁹⁾

이 문건의 작성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광주시민’들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종교인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미 살펴봤듯이 5·18 기간 중 천주교·개신교 등 기독교인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전엔 사회봉사를 떠들어대며 행사 때마다 나타나던 각종 사회단체가 이번엔 하나도 수습과정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사회·경제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수습에 나서지 않고 일부 회원들이 개인자격으로 나섰다 정도뿐입니다”⁴⁰⁾란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4) 광주시기독교수습대책위원회

5·18이 일어나자 5월 19일 광주중앙교회와 광주제일교회(예장통합)에서는 소속교단 광주·전남 노회대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⁴¹⁾ 5월 21일 김신근·한완석 목사 등 8명은 광주제일교회(예장통합)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어 5월 22일 같은 교회에서 60여명의 목사·장로들이 모여 기도회를 열고 “구호와 수습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⁴²⁾

이에 따라 5월 23일 광주의 15개 교파 200여 교회 62명의 목사·장로들이 같은 교회에 모여 ‘광주시기독교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위원장에 김신근 목사(광주제일교회:성결), 부위원장에 문정식 목사(광주중앙교회:성결) 외 9명, 총무에 이인국 목사(광주남광교회:예장통합) 등이 선출되었으며, 고문으로 김길현(광주하영교회:예장합동)·변한규(광주중앙교회:예장개혁)·윤재현(광주한빛교회:기장)·은명기(광주양림교회:기장)·조원곤(광주양림교회:예장통합)·조창석(광주반석교회:기감)·한완석(광주제일교회:예장통합)·홍관순(광주광천교회:예장통합) 등 목사를 위촉했다.⁴³⁾

39) 「전국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글」, 『1980년대 민주화운동(6)』, 177-178쪽.

40) 『조선일보』 1980년 5월 31일 「광주에서 본 광주사태: 임시취재단 현지방담」, 『1980년대 민주화운동(6)』, 232-233쪽.

41)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8)』, 582쪽. 여기에 나오는 ‘광주중앙교회’가 예장통합·예장개혁·성결 중 어느 교파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같은날 예장통합측 광주제일교회에서 회합이 있던 것으로 미뤄 예장통합은 아닐 것이다.

42)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8)』, 582쪽. 이날 회의에서는 “자칭 목사들(어용목사) 때문에 전체목사나 교회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 대한 문제를 논의” 했다고 한다.

43)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1)」, 『5·18자료총서(8)』, 576쪽;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8)』, 581쪽. 그런데 같은 자료이면서도 전자와 후자의 내용이 약간 다르다. 전자에서는 5월 23일 김신근 목사를 위원장으로 한 임원진이 구성되었다가 25일 한완석 목사를 위원장으로 한 임원진으로 교체되었다고 한 반면, 후자에서는 23일 한완석 목사를 위원장으로 한 임원진이 구성되었다고 나온다.

같은 개신교 계통이지만 신앙노선과 현실참여를 놓고 보수·진보로 갈라져 있던 15개 교파가 연합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 사태를 기독교회가 방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날 위원회는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 김길현·방철호·변한규·장세균·정인성·조원곤·한완석 등 목사의 파견 및 구호금 1천만원 헌금을 결의했다.⁴⁴⁾ 5월 24일 위원회는 대표단을 전남북계엄본소에 보내 7개항을 건의하는 한편 회수된 총기 100여 정을 반납하고 연행자 34명을 석방시켰다고 한다.⁴⁵⁾

그런데 이 위원회는 5월 26일 광주제일교회(예장통합)에 모여 '광주시기독교비상구호대책위원회'로 개칭했으며, 위원장과 총무를 각각 한완석 목사와 방철호 목사로 교체했다.⁴⁶⁾ 명칭이 '수습'에서 '비상구호'로 바뀐 것이다. 어떤 이유로 임원진을 교체하고 위원회를 개칭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개칭의 경우 시민들 중심의 수습위원회와 혼란을 빚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으나, '구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수습'의 방법을 놓고는 보수·진보 교파간 마찰을 빚을 수 있으나, '구호'라는 목적은 교파에 관계없이 공감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 사망자의 장례비로 100만원을 전달했으며,⁴⁷⁾ 광주의 각 교회에 공문을 보내 교인들의 기도와 함께 성금을 요청했다.⁴⁸⁾ 그리고 다른 5·18 관련 위원회들이 계엄군의 도청진입 이후 해산된 것과 달리 이 위원회의 '구호활동'은 이 해 11월까지 지속되었다.

44)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08』, 581쪽.

45)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08』, 582쪽.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바름 보도를 할 것. 2. '폭도' 라는 과격한 말을 사용하지 말 것. 3. 연행자를 석방할 것. 4. 보복을 하지 말 것. 5. 계엄군의 시가진입을 금지할 것. 6. 계엄군(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과정을 인정할 것. 7. 치안은 경찰에 맡길 것." 한편 이날 계엄사 상황일지에 나오는 「시국수습을 위한 목사 동향」을 보면, 한완석 목사 등 50여 명이 광주제일교회에 모여 "피를 덜 흘리기 위해 무기를 회수하나 보복을 막아야 한다. 수습을 위해 일하다 보면 원망을 듣기 쉬우니 계엄당국과 절충하라는 등 시국수습에 자체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 기록되어 있다(「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 『광주사료전집』, 107-108쪽).

46) 변경된 임원진 명단은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08』, 580쪽 참조. 한편 이 날을 5월 25일이라고도 하고 26일(「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08』, 582쪽)이라고도 한다. 후자가 '오전 9시 30분 제임장로교회'란 구체성을 띠고 있어 이에 따랐다.

47) 이것을 놓고 계엄사는 "김대중 측근으로서 10·26 이후 6회에 걸쳐 상경, 접촉한 바 있는 홍남순(번호사)은 ... 폭도들이 5월 23-26일간 시민수습대책위원회라는 구실로 도청에 출입, 김신근 목사 등 강경파 위원들과 함께 투쟁비 명목으로 1백만원을 지원(『경향신문』 1980년 5월 31일자 「광주사태에 대한 계엄사 발표」)라 발표했다.

48)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1)」, 『5·18자료총서08』, 576쪽;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08』, 582쪽

(5) 광주YMCA·YWCA

광주의 YMCA와 YWCA는 대표적 기독교 사회단체이며,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김천배·명노근·이성학·이영생도 광주YMCA 이사였고, 강신석·윤영규도 그 임원이었다.⁴⁹⁾ 그 때문에 이들은 5·18 이후 체포·수배·투옥·고문 등의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⁵⁰⁾ 또 조아라와 이에신은 광주YWCA의 회장과 총무였으며, 그 간사인 김경천도 5·18로 수배되었고, 회원인 김선옥(전남대 음대)은 학생수습위원회에 참여했다.⁵¹⁾ 또 그 직원인 인용준은 5월 27일 총격으로 사망했고, 회관건물도 손상되었다.⁵²⁾

특히 광주YWCA는 전남도청과 함께 수습과 항쟁의 근거지 역할을 했다. 수습 및 항쟁을 위한 각종 회의와 집회가 여기서 열렸으며, 민주시민투쟁위원회도 여기서 조직되었다.⁵³⁾ 광주YWCA는 “송백회원과 광촌동의 들불야학팀, 극단 광대팀, JOC 여성노동자들이 합류하여 항쟁지도부가 상주하였던 전남도청과 더불어 ‘또 하나의 항쟁부’로 자리잡았”으며, 여기에 모인 이들은 “가두홍보조·모금조·리본조·대자보조·릴 기대회준비조·취사조 등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벌였다.⁵⁴⁾

(6) 교파별·교회별 활동

사례가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교파나 교회 차원에서 구호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교파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침례교회는 박영복·신순균·장세균 목사가 5월 22-23일 수습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이나 피터슨 목사의 증언 등으로 미뤄볼 때, 교파 차원에서도 구호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장통합 총회는 전국교회에 성금을 요청했고, 박치순 부총회장은 광주로 와서 총회장 조원곤 목사(광주양림교회)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증경총회장 한완석 목사(광주제일교회)를 만나 위로하고 진상

49) 1980년 광주YMCA 임원진을 보면 강신석·김천배·명노근·윤영규 등은 이사였으며, 강신석(농촌사업위원회)·김천배(성서연구위원회)·명노근(논단사업위원회)·이기홍(회원연수위원회) 등은 분과 위원장이었다(광주YMCA 역사편찬위원회, 『광주YMCA 90년사』, 599쪽).

50) 광주YMCA 역사편찬위원회, 『광주YMCA 90년사』, 379쪽.

51) 『동아일보』 1980년 6월 17일 「게임사발표 수배자명단」; 『한겨레』 1991년 5월 16일 「'5·18광주민중항쟁과 여성' 출간」; 이수애·한신애·박남순·송경자, 『전남여성 100년』(다지리, 2004), 299-300쪽.

52) 『경향신문』 1989년 5월 17일 「다시 광주를 생각한다: 광주의 어머니 조아라 여사」; 광주YWCA 홈페이지 (<http://www.kjywca.or.kr>) 참조.

53)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 『광주사료전집』, 93·110쪽.

54) 이수애·한신애·박남순·송경자, 『전남여성 100년』, 299-300쪽.

을 파악한 후 돌아갔다.⁵⁵⁾ 광주양림교회(예장통합)에서는 5월 23일 기독교병원, 26일 적십자병원을 찾아 환자들을 위문했으며, 여전도회연합회에서 모은 10만원과 서울·이리의 교회에서 보내온 35만원을 사망자·부상자 9가정에 전달했다.⁵⁶⁾

교파별 총회록·노회록과 교회별 당회록·제직회록·주보 등을 참고한다면 이같은 사례는 더욱 많이 찾아질 것이다. 하지만 당시 광주의 기독교계는 “15개 교파 200여 교회 62명의 목사·장로들”로 구성된 ‘광주시기독교수습대책위원회’(‘광주시기독교비상구호대책위원회’로 개칭)를 중심으로 구호에 초점을 맞춘 연합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개별적 활동규모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5·18 당시 사망자·부상자 중에는 기독교인도 적지 않았을 것이나 이에 대한 조사는 보이지 않는다. 교파별로는 2명의 침례교인이 사망했고, 교회별로는 광주양림교회(예장통합)에서 사망 2명 부상 5명의 희생자가 나왔다.⁵⁷⁾ 또 5·18 직후 광주기독교비상구호대책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광주지원교회의 수요일예배 때 총알이 날아들었고, 화정중앙교회의 건물이 파손되는 등 인명·재산피해 86건을 접수했다고 한다.⁵⁸⁾

2. 5·18 당시 타지 기독교계의 동향

광주에서 5·18이 일어나자 이에 가장 먼저 호응한 지역은 목포였다.⁵⁹⁾ 5·18에 앞서 5월 10-16일 목포역 광장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핵심은 김성훈·박상규·한봉철 등 기독교장로회 청년들이었다. 5·17 계엄령이 선포되자 이들은 청년학생민주화투쟁위원회를 결성했는데, 박상규가 집행위원장 한봉철이 기획실장을 맡았다.⁶⁰⁾

55) 5월 30일 서울 연동교회에 모인 목사들은 박치순 부총회장의 보고를 들은 후 6월 1일 전국교회가 5·18 희생자를 위한 기도회를 갖도록 결의했다(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홈페이지: <http://pck.or.kr>).

56) 차중순, 『양림교회 100년사(2)』(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양림교회, 2009), 265쪽.

57) 아놀드 A 피터슨 저(정동섭 역), 『5·18 광주사태: 아놀드 A. 피터슨 목사의 80년 광주증언록』; 차중순, 『양림교회 100년사(2)』, 264쪽.

58)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1)』, 『5·18자료총서(8)』, 577쪽.

59)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목포상업학교 학생들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에 호응하여 11월 19일 “싸우자 2천만 동포여”를 외치며 항일시위에 나선 바 있다.

60) 『아! 광주여! 오월이여!』, 『5·18자료총서(8)』, 390-391쪽.

한편 목포의 항쟁을 주도한 안철 역시 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남연합회장이었다. 그는 5월 21일 목포죽동교회에서 강신석·김현식·유기문·정권모 등 목사와 만나 “김대중 석방하라, 유신잔당 물러가라, 민주정부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결정했다. 이튿날인 22일 그는 목포중앙교회에서 다시 명재용·박광용·유기문·이복익·정권호 등 목사들과 만나 “질서를 회복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일단 총기를 회수하고 관민합동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어 이들은 안철의 집에서 목포시장·목포대학장 및 정당대표·재야인사들과 등과 회합하여 ‘목포시민민주화투쟁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안철이 위원장을 맡았다.⁶¹⁾

이튿날인 5월 23일 목포역에서는 약 5만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목포시민민주화투쟁위원회 민주헌정수립을 위한 목포시민결기대회’가 열렸으며, 정권모 목사(목포연동교회)가 초안한 「우리 겨레와 세계 자유인에게 보내는 목포시민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회가 끝나고 안철과 목사들은 천주교측과 함께 기도회를 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목포NCC 주관으로 5월 25일 비상구국기도회가 열렸다.⁶²⁾

특히 5월 25일 목포의 기독교인들은 주일예배 후 목포역 광장에 모여 나홍석 목사(목포NCC 회장)의 사회로 ‘목포시기독교연합회 비상구국기도회’를 열었으며, 윤사현 목사(목포산정교회: 기장)가 설교를 맡았다. 이어 유기문 목사의 낭독으로 9개항으로 이뤄진 「광주시민혁명에 대한 목포지역교회의 신앙고백적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⁶³⁾ 비록 지역교회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5·18 기간 중 나온 개신교회의 첫 입장표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목포 교회는 교파적인 이해를 떠나 오직 앞서 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단합된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 자유시민들과 전국 형제교우들과 세계 자유우방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선언한다.

1. 최근 광주·목포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시위항거는 동학혁명, 3·1운동, 광주학생사건, 4·19와 명동민주구국선언의 법통을 잇는 역사적인 시민혁명이었다.

61) 안철, 「목포시민민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광주사료전집』, 1045-1046쪽;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 『광주사료전집』, 84-85쪽; 「광주민중항쟁 관련 법정기록」, 『1980년대 민주화운동(7)』, 609쪽; 「아! 광주여! 오월이여」, 『5·18자료총서(4)』, 387-388쪽.

62) 안철, 「목포시민민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광주사료전집』, 1047쪽; 「아! 광주여! 오월이여」, 『5·18자료총서(4)』, 388-390쪽.

63) 안철, 「목포시민민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광주사료전집』, 1048쪽; 「아! 광주여! 오월이여」, 『5·18자료총서(4)』, 390-391쪽.

1. 이 사건, 이 역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를 파종하려는 그리스도의 군병과 그리스도를 또 한번 못박고 군벌독재를 구축하려는 적그리스도와 의로운 투쟁이었다.
 1. 이같이 의로운 싸움을 진압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분의 형상을 짓밟고 우리 주님이 피흘려 찾아주신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것이며 천인공노할 시민학살로 단정한다.
 1. 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통치능력을 회복하려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자유시민을 능욕하고 학살한 정부 당국자와 시민 살해에 가담한 자를 지체없이 색출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처벌해야 한다. ...
 1. 우리는 광주·목포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실권을 잡고 있는 소수 군벌 몇 사람에게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저들에게 오늘의 도피성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회가 발하는 복음적인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그리스도와 자유시민의 가슴에 흉기를 들이댄다면 광주시민이 흘린 피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 성부·성자·성령 3위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피흘려 싸우는 광주·목포시민을 비롯한 5천만 한국민족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⁶⁴⁾

여기서 보듯이 이들은 5·18을 동학농민전쟁→3·1운동→광주학생운동→4·19혁명 및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던 명동민주구국선언(1974)의 맥락을 잇는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그리스도의 군병’과 ‘적그리스도’의 의로운 투쟁, 즉 ‘성전(聖戰)’이라 선언했다. 이 기도회는 ‘교과적인 이해를 떠나’ 열렸으나 사실상 기독교장로회가 주도했으며, 목포연동교회에서 제작하여 걸은 현수막에 “피값에는 외상이 없다 즉각 보상하라” 등의 문구를 문제삼아 일부 목사들이 퇴장하기도 했다.⁶⁵⁾ 이처럼 목포의 기독교계에서도 항쟁의 수위를 높고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 전남의 영암읍교회(이서하 목사 담임) 교인들은 5·18 기간 중 주먹밥을 마련하여 버스터미널 근처를 오가는 시위대에 제공했고, 강진의 강진읍교회(김경식 목사 담임) 교인들은 환자에게 의복·모포·음식 등을 제공했으며, 해남읍교회(한시석 목사 담임) 교인들도 시위대에 음식을 제공했다.⁶⁶⁾

64) 목포시기독교연합회 비상구국기도회, 「광주시민혁명에 대한 목포지역 교회의 신앙고백적 선언문(1950.5.25)」, 『5·18 자료총서(2)』, 69쪽; 조이제,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168-169쪽;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6)』, 113쪽.

65) 안철, 「목포시민민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광주사료전집』, 1048쪽;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6)』, 113쪽.

66) 「아! 광주여! 오월이여」, 『5·18자료총서(8)』, 392-393쪽. 이 자료는 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기장측 교회들의 활동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다.

서울에서는 5월 25일 한빛교회(기장) 박윤수 전도사와 대학부 회원들이 5·18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만들었으나 미아리 대지극장 앞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처벌받았다.⁶⁷⁾ 하지만 더 이상의 사례는 찾아지지 않는다.

개신교 최대의 연합조직인 NCKK 인권위원회는 5월 26일 5·18 대책을 논의하고 ‘광주사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5월 28일 인권위원회·교회와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계획했으나 계엄당국의 불허로 무산되었다.⁶⁸⁾ 결국 NCKK마저도 5·18 기간 중에는 “5·18에 대한 성명서 한번 발표하지 못”하고 말았다.⁶⁹⁾

한편 계엄당국이 1980년 6월 발표한 ‘수배자 명단’을 보면 강신석(광주무진교회 목사)·김경천(광주YWCA 간사)·박상도(도시산업선교회, 부산) 및 한신대 학생(노창식·진철·최병일)·장신대 학생(장대업)·총신대 학생(김광훈·박광덕·신은균·전은식·천종수·최장일·최형길)·그리스도신대 학생(이병한) 등 기독교인이 나온다.⁷⁰⁾ 5·18 당시 강신석은 목포, 김경천은 광주에서 활동했으나 다른 이들이 이 기간 중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IV. 198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과 5·18

1. 1980년대 광주·전남의 기독교 민주화운동과 5·18⁷¹⁾

5·18 항쟁이 끝나면서 대중집회와 단체활동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광주시기독교비상구호대책위원회는 활동을 계속했다. 5월 28일 계엄당국에서 저녁예배를 불허한다는 것을 알게 된 대책위원회의 김신근·변한규·한완석 목사와 지익표 장로 등은 전남 북계엄분소장을 만나 저녁예배의 허용과 구호활동을 위한 집회허가를 건의하여 승낙

67)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824쪽.

68) 「인권위원회회의록(1980.5.26)」: 조이제,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171쪽.

69) 「아! 광주여! 오월이여!」, 『5·18자료총서(8)』, 394쪽.

70) 『동아일보』 1980년 6월 17일 「계엄사발포 수배자명단. 많은 수는 아니나 한신대(기장)·장신대(예장통합)·총신대(예장통합) 학생들이 5·18에 연루되어 수배된 점은 기독교인의 ‘초교파적’인 5·18 참여란 점에서 검토의 필요가 있다.

71) 1980년 5·18 당시 광주·전남의 기독교인들은 서로 연대하지 못하고 독자적 활동을 벌였으나, 이후 1980년대에는 이들이 함께 연대활동을 벌인 사례가 많으므로 이 장에서는 광주·전남의 상황을 아울러 살펴보려 한다.

을 받았다.⁷²⁾ 이에 따라 1980년 6월 1일 광주의 기독교인들은 교회와 성당에서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기원하는 예배와 미사를 드렸다.⁷³⁾ 이어 대책위원회는 광주의 모든 교회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 성금을 모금했다.

수신: 광주시내 교회 당회장

참조: 광주시내 교회 목사 장로

제목: 구호사업추진협조의 일

성은 중 귀 교회의 평안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번 5·18 광주시민권기사태에 따른 피해사항(사망·부상)에 대처해서 시내교회(초교파)가 일치단결하여 이 시기에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구호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사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상구호대책위원회의 조직

5·18사태 수습과 구호사업을 위해서 광주시내교회 성직자 전원이 모여 비상구호대책위원회(목사·장로)로 조직하였습니다.

2. 추진활동사항

(1) 대모 주체자측과 대화수습책을 협의한 일 (2) 무기회수 설득활동 전개 (3) 연행자 석방을 위한 계엄사 방문 건의문 전달 (4) 사망자 검시 확인입회한 일 (5) 부상자 조사 입회확인한 일(기독병원·대학병원·통합병원) (6) 구호사업 계획수립 추진활동 (7) 5·18사태 진상조사서 작성 작업 추진

3. 구호사업비 조달방법

(1) 배정범위 ① 80년도 교회예산 500만원 이상 교회 전체배정 ② 500만원 미만 교회는 자의에 맡겨 성의껏 협조요망 (2) 방법: 지교회 자유의사에 따라 협조요망 ① 특별헌금 ② 교회예산 할애 ③ 특지가 찬조 등 (3) 배정기준 ① 80년도 교회예산규모 500만원 이상 교회 비례적용 키로 정하였음 ② 배정내용(생략)

4. 배정금 송금처

(1) 기간 1980.6.1-9 (2) 송금처 지익표 장로⁷⁴⁾

이와는 별도로 광주뿐 아니라 전국각지의 94개 교회·기관에서 39,999,761원의 성금이 담지했다.⁷⁵⁾ 대책위원회는 광주기독병원·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적십자병원·통

72)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8)』, 581-582쪽; 『경향신문』 1980년 5월 29일 「교회에배등 허용」.

73) 『동아일보』 1980년 6월 2일 「나들이 자제 ... 상흔 씻는 정상근무」.

74)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8)』, 580쪽.

75)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8)』, 577쪽. 이 자료에 실린 명단을 보면 교회는 광주광송교회·광주서광교회·광주제일교회·광주중앙교회·나주음교회·서울노량진교회·서울아현감리교회·서울화곡동교회·전주대흥교회 및 미국필라델피아한인교회, 기관은 군산시기독교연합회·여수교회연합회·이리기독교연합회, 교파로는 구

합병원 등에 입원 중인 시민·군인·경찰 등 환자 594명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또 이들은 광주시장을 만나 사망자들을 위한 묘지를 망월동에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재일·장세균·정인성 목사가 보안대 요원들과 함께 사체검안에 입회했다. 5월 29일에는 노정열·방철호·변남주 목사의 집례로 망월동 공동묘지에서 47명의 장례식을 치렀다. 인적·물적 피해를 받은 교회들의 사례 86건을 접수하여 보상했으며, 보안대·정보부·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구속자 석방을 건의했고, 교도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영치금을 차입하기도 했다.⁷⁶⁾

6월에 들어서도 대책위원회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6월 9일 각 교단대표 12명이 계엄분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했으며, 개인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33명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16일 광산경찰서에 연행된 26명에게 영치금을 전달했고, 23일 목사 32명이 12개 조를 편성해서 사망자 유족 102명에게 10만원씩 전달했다. 24일에는 통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90여명을 위문했다.⁷⁷⁾ 6월 25일에는 광주의 목사·장로 1백여 명이 광주제일교회(기감)에 모인 가운데 ‘5·18 현장보고 및 6·25 구국기도회’가 열렸다. 이 날 대책위원회의 활동보고 및 재정보고에 있는 뒤 변한규 목사가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대책위원회는 1980년 11월 8일 활동을 마치고 해산되었다.⁷⁸⁾

자료는 많지 않지만, 개교회 차원의 활동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광주양림교회(예장통합)에서는 자체적으로 753,940원을 모금하여 사망자(10만~20만원)·부상자(5만~20만원)·구속자(5만원)의 기준에 따라 성금을 전달했다. 이듬해에도 이 교회 여전도회는 “광주사태로 몸의 자유를 잃고 있는 4가정에 백미 포대, 금 6만원씩을 지급 위로”했다.⁷⁹⁾ 하지만 이같은 순수한 구호활동 이외의 모든 집회나 활동은 금지되었고, 이같은 상황은 1981년까지도 지속되었다.

1980년 5월 29일 기장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6월 8일 주일에 전국교회가 광주시민을 위한 특별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모아 전남노회에 보내기로 결의했다. 이와

세군서울본영·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장전남노회·예장통합총회 등이다. 이는 94개 교회·기관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지역적으로는 광주·전남·전북·서울 및 미국, 교파별로는 구세군·성결·기장·예장통합의 참여가 눈에 띈다.

76)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1)」, 『5·18자료총서(Ⅷ)』, 577쪽;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Ⅷ)』, 581-582쪽; 『동아일보』 1980년 6월 4일 「비상구호위를 구성 광주기독교 성직자」.

77)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Ⅷ)』, 582쪽.

78)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1)」, 『5·18자료총서(Ⅷ)』, 577쪽.

79) 차중순, 『양림교회 100년사(2)』, 265-266쪽.

함께 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총회 총무와 위원회 총무를 광주에 파견했으며, 이들은 현지의 교인 및 기독교병원의 환자들을 만나 위로했다.⁸⁰⁾

1981년 4월 21일 광주계림교회에서 열린 기장 제83회 전남노회는 참석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관계당국에 5·18 관련 구속자 석방을 건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⁸¹⁾ 5월 18일 5·18 제1주기를 맞았으나 광주에서는 이를 추모하기 위한 어떤 집회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기독교인들 역시 “당국의 탄압에 의해 추도식조차 드릴 수 없었”다고 한다.⁸²⁾ 그러나 늦게나마 5월 22일 광주NCC 주최로 ‘광주5·18추도 연합예배’가 열렸으며, 24일에도 광주제일교회(기감)에서 광주기독교연합회와 기장 전남노회 주최로 ‘광주5·18사태 1주기 추도연합예배’가 열렸다.⁸³⁾

7월 이후 기장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유족부상자돕기위원회’(위원장 조아라, 총무 강신석, 류연창·안성래·은명기·이명자 등)도 사망자·부상자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으며, 강신석(전도사)·이철우(전도사)·이명희(집사) 등이 사망자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또 같은해 기장 전국청년대회가 ‘죽은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주제로 광주에서 열려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처리와 더불어 유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⁸⁴⁾ 10월에도 기장청년회 전국연합회·전남연합회·전남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전남도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5·18 관련자들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⁸⁵⁾

1982년 5월 18일 광주시기독교연합회·광주기독교청년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공동주최로 1천여 명의 시민·학생·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YWCA에서 열린 5·18 제2주기 추모예배에서 고영근 목사(한국목민선교회 회장)는 ‘순국열사의 핏소리’란 설교를 통해 “아담의 장남 카인은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다”, “5·18은 순국의 피를 흘린 의거”, “2년 전 피흘린 선열들의 뒤를 따르자”라 주장하며 미국의 대한정책을 비난하고 정권퇴진을 요구했다. 추모예배 후 참석자들은 스크

80) 「아! 광주여! 오월이여!」, 『5·18자료총서08』, 394쪽.

81) 「아! 광주여! 오월이여!」, 『5·18자료총서08』, 395쪽.

82) 편집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교회와 사회』(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1985,6,26): NCCK문서.

83)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장의 교회들(2)」, 『5·18자료총서08』, 583쪽.

84) 「아! 광주여! 오월이여!」, 『5·18자료총서08』, 396-397쪽. 기장 전남노회측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 기장 전국청년회의 개최시기는 나와 있지 않다.

85)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남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교사위원회, 「전남도민에게 드리는 글」(1981,10), 『5·18총서(2)』, 276쪽.

림을 짜고 가두진출에 나서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자 애국가를 부르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 날의 시위와 농성으로 18명이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이들 중 김경식 목사(강진읍교회: 기장)·김영진(BYC 회장)·백혜진·유시경(성공회대 신학생) 등 4명이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고 14명은 불구속입건되었다.⁸⁶⁾ 이에 기장 전남노회는 교역자·평신도들의 석방을 위해 강진읍교회(6.2)·목포양동교회(6.9)·무안읍교회(6.7)·해남읍교회(6.14)·영암읍교회(6.16)·완도읍교회(6.23)·함평읍교회(6.30) 등에서 연합기도회를 열었다.⁸⁷⁾ 6월 4일에는 NCK에서도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⁸⁸⁾

한편 같은날 광주무등경기장에서는 ‘새광주건설 전남도민단합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기독교측의 5·18 추모행사(천주교: 남동성당, 개신교: YWCA)에 맞서기 위한 관변집회였는데, 이 자리에서 지역개발협의회 회장은 “종교인들이 거행한 항쟁을 기념하는 광주 5·18 예배 등에 대해 우리는 폭력과 분쟁을 물고 온 사이비 종교인들이 평화로운 이 광주에서 한시바빠 떠나기를 바란다”, “작금 종교계 인사들이 5·18을 들먹이며 아물어가는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서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려 한다”며 기독교측을 비판했다.⁸⁹⁾

그러자 이 날 저녁 기장 전남노회는 광주양림교회에 모여 긴급대책위원회(위원장 윤기석, 대변인 강신석, 서기 김현삼)를 구성했다. 이어 5월 20일 광주세광교회에서 긴급노회를 연 이들은 이튿날 “광주사태 희생자의 보상, 양심수의 석방과 복권, 5·18 추모예배사건 구속 목사·학생의 석방” 등 내용을 담은 「5·18추모예배 및 소위 전남도민 단합대회 사건경위와 우리의 주장」을 발표하고 기장 전국총회의 소집을 청원한 뒤 광주양림교회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⁹⁰⁾ 이후 8월 1일에는 광주무진교회(기장)에서 5·18부상자동지회가 창립되었고,⁹¹⁾ 10월 12일 박관현이 옥

86) 고영근, 「(광주의거 기념설교) 순국열사의 핏소리(1982.5.18)」: NCK문서; 김영진, 「추모사」(1982.5.18), NCK문서; 『중앙일보』 1982년 5월 19일 「광주사태 추모예배 1천여명이 시위」; 『동아일보』 1982년 5월 19일 「가톨릭·개신교 광주사태 희생 추모미사·예배」; 『동아일보』 1982년 5월 22일 「광주학생 추모예배 시위주동 4명 구속」; 「아! 광주에 오월이여」, 『5·18자료총서Ⅱ』, 396-397쪽;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907쪽.

87) 「아! 광주에 오월이여」, 『5·18자료총서Ⅱ』, 400쪽.

88)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909쪽.

89) 「아! 광주에 오월이여」, 『5·18자료총서Ⅱ』, 400쪽;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6)』, 206쪽; 『경향신문』 1982년 5월 19일 「(사실)광주에서 들려온 두 소식」.

90) 「아! 광주에 오월이여」, 『5·18자료총서Ⅱ』, 396-400쪽;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907쪽;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5·18추모예배 및 ‘전남도민단합대회’ 사건경위와 우리의 주장」(1982.5.21): NCK문서.

91)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6)』, 208쪽;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921쪽.

중에서 사망하자 광주한빛교회(기장)에서 추모예배가 열렸다.⁹²⁾

1984년 4월 19일 4·19를 맞아 광주NCC·광주EYC는 “1. 당국은 4·19 정신을 이어받아 치솟는 민주화 요구에 즉각 부응하라. 2. 당국은 5·18 광주사태의 종식을 위해 관계자의 처벌 및 사과와 완전한 보상을 실시하고, 망월동 묘역을 성역화 하라”는 내용이 성명을 발표했다.⁹³⁾ 이는 5·18을 4·19와 같은 민주시민혁명으로 규정한 것이기도 했다. 이어 5월 18일 기장 전남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주최로 광주한빛교회에서 열린 제4주기 추모예배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5·18유족회 전개량 회장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⁹⁴⁾

7월에는 5·18 당시 ‘성당파’를 중심으로 ‘광주복권복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임원진은 위원장 윤기석, 총무 김영진, 고문 홍남순·김성용·조아라 등이었으며, 실행위원으로 강신석·김경신·김동원·김영진·김재영·김호준·남제희·노희관·명노근·문병란·문정식·박신종·방철호·서용주·송기숙·위인백·유기문·윤기석·이광우·이기홍·이방기·이애신·이영성·정광진·정형달·조철현·지익표 등이 참여했다.⁹⁵⁾ 이들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⁹⁶⁾

10월에는 전남NCC 인권선교위원회에서 「인권선언: 전남인권선교위원회를 결성하며」를 발표하고 “‘5·18광주시민 의거’는 군사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간존엄성 회복의 몸부림”이었으며, “아직도 이들은 폭도의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영령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오늘의 선교의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했다. 이 선언에는 광주·전남의 다수 기독교인들이 초교파적으로 참여했다.⁹⁷⁾ 12월에도 광주NCC는 「84년도 인권주간을 맞는 우리의 선언」을 발표하고 “이제는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할

92)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921쪽.

93) 광주기독교연합회(NCC)·광주기독교청년협의회(EYC), 「성명서」(1984.4.19.), 『5·18자료총서(2)』, 378쪽.

94)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977쪽.

95) 광주복권·복지추진위원회, 「광주복권·복지추진위원회 결성에 즈음하여」(1984.7): NCCCK문서.

96) 천주교 인사는 김성용·조철현, 개신교 인사는 강신석·김영진·명노근·박신종·방철호·송기숙·유기문·윤기석·이광우·이기홍·이애신·조아라·지익표 등이다.

97) 그 임원진은 위원장 문정식(목사: 광주중앙성결교회), 부위원장 임명홍(목사: 여수중부교회), 총무 김영진(장로: 강진읍교회), 서기 김현삼(목사: 목포죽동교회), 회계 이애신(광주YWCA), 감사 김경식(목사: 광주계림교회)·윤용상(국장: 광주CBS), 위원 강신석(목사: 광주무진교회)·김규섭(목사: 여수덕충교회)·김석중(회장: 기형 전남연)·김신원(목사: 목포낙원성결교회)·방철호(목사: 광주월성성결교회)·배종렬(회장: 기능 전국연)·박신종(목사: 광주큰무리교회)·서용주(목사: 광주NCC 회장, 광주양림교회)·신용호(목사: 여수동광교회)·유기문(목사: 강진읍교회)·윤기석(목사: 전남NCC회장, 광주한빛교회)·윤여권(목사: 목포양동제일교회)·이경석(목사: 서정교회)·이기홍(변호사)·임영식(사관: 구세군 광주영문)·지익표(장로, 변호사)·한철완(목사: 광주한일교회) 등이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남인권선교위원회, 「인권선언: 전남인권선교위원회를 결성하며」, 1984.10: NCCCK문서).

5·18광주의거가 폭거로 낙인되어 버리고 광주시립묘소에서 강제로 시신마저 옮겨져 버리는 현실”을 개탄했다.⁹⁸⁾ 또 같은달 11일 고(故) 기종도·박관현·이성학 등 3인의 추모예배에 참석하려던 유족 3명이 강제납치되어 대구·여수·해남 등지로 격리되었는데,⁹⁹⁾ 이로써 미뤄볼 때 광주의 기독교인들은 5·18 희생자들을 위한 별도의 추모예배를 준비했던 것 같다.

1985년 2월 5일 기장청년회 목포연합회는 「5·18광주·목포의거 구속자를 전원 사면·복권하라: 기청 전국연합회 증경회장 안철씨를 즉각 사면·복권조치하라」란 성명을 발표하고 5·18 관련 구속자 및 5·18 당시 목포에서의 항쟁을 주도했던 안철의 사면·복권을 촉구했다.¹⁰⁰⁾ 또 3월 19일 목포평강교회(기장) 복지부 총무 안철의 명의로 발송된 우편물 534통이 배달되지 않고 사라지자 3월 26일 목포평강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체신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구했다. 4월 24일 광주무등교회에서 열린 기장 전남노회 제87회 정기노회에서 「목포평강교회 우편물증발사건 경위서」를 배포하고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튿날에는 도청을 항의방문하여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40여 명이 농성을 벌인 뒤 금남로 일대를 행진하고 찬송을 부르며 “군사독재 물러나라, 광주학살 책임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4월 26일 이들은 “5·18광주의거에 대한 당국의 왜곡과 언론조작”을 규탄하며 5·18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¹⁰¹⁾

5월 6일에는 광주·전남의 20개 단체가 5·18을 앞두고 유족들을 탄압하는 당국에 항의하며 「“5·18광주의거 유족탄압에 대한 범광주시민 규탄대회”에 대한 현 정권 및 경찰당국의 폭력적 탄압에 대하여」란 성명을 발표했다. 이때 천주교측에서는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가톨릭노동청년회 광주대교구연합회, 개신교측에서는 기청전남연합회·광주기독교민중문화선교원·목포YMCA목민회·전남기독교농민회·전남 NCC 인권선교위원회 등이 참여했다.¹⁰²⁾

98) 광주기독교연합회, 「84년도 인권주간을 맞는 우리의 선언(1984.12.12)」: NCKK문서.

99)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6)』, 207쪽.

100)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목포연합회, 「5·18광주·목포의거 구속자를 전원 사면·복권하라: 기청 전국연합회 증경회장 안철씨를 즉각 사면·복권조치하라」(1985.2.5): NCKK문서.

101) 안철, 「우편물 발송에 대한 해명요구」(1985.4.4): NCKK문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 『교회와 사회』1(1985.6.26): NCKK문서. 이 우편물의 내용은 “시민부흥성회 전단 1매, 동아약국 건강해설지 1매, 평강소식 1매, 김대중·김영삼씨 3·1절 멧세지 1매” 등이었다.

102) 「공동성명서: “5·18광주의거 유족탄압에 대한 범광주시민 규탄대회”에 대한 현 정권 및 경찰당국의 폭력적 탄압에 대하여」(1985.5.6): NCKK문서.

5월 18일 광주YWCA에서는 전남NCC와 기장 전남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주최로 5백여 명의 유족·시민·교인들이 모여 제5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윤기석 목사(전남 NCC 회장)가 사회, 문정식 목사(전남NCC 인권위원장)가 기도, 경찰에 연행된 강희남 목사(한국기독교농민회 이사장) 대신 방철호 목사(전남NCC 총무)가 설교를 맡았다. 또 김영진 장로(전남NCC 인권위원회 총무)의 낭독으로 “1. 5·18 민중항쟁에 희생된 유족과 부상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현 정권은 퇴진하라! 2. 복음의 나팔이며 민중을 일깨우는 기독교방송은 언론 통폐합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라! 3. 오늘의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가 되어 개인과 사회를 구원하는 사명을 다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추모예배가 끝나고 열린 5·18광주의거부상자회 주관 5·18광주사태 진상보고회에서는 조비오 신부와 강신석 목사가 증언했으며, 집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애국가 부르며 시위에 나섰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었다.¹⁰³⁾

같은날 목포NCC·목포인권선교위원회·기장청년회 목포연합회·예장청년회 목포연합회·목포YMCA청년목민회·국제사면위원회 목포지회 등은 「5·18 광주·목포시민의거 제5주년을 맞아」란 성명을 발표하고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정계은퇴, 사망자 유족·부상자들에 대한 보상, 대통령직선제 개헌, 노동법·언론법·집시법 등의 개정, 5·18 관련 민주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노동자·학생·도시민민 등에 대한 탄압 중지, 최저임금제 실시, 농축산물 수입 중단, 노동자·농민의 생존권 보호 등을 촉구했다.¹⁰⁴⁾

5월 19에는 목포죽동교회에서 목포인권선교위원회(위원장 임기준 목사) 주최로 “목포에서는 처음으로” 5·18광주·목포의거 5주년 추모연합예배를 드렸다. 이 날 예배에서는 강신석 목사(광주무진교회)의 설교와 안철(국제사면위원회 목포지부 총무)의 5·18 당시 경위보고에 이어 전날 발표한 성명을 다시 채택했다.¹⁰⁵⁾

6월 16일 광주계림교회(기장)에서는 광주NCC와 기장 전남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주최로 ‘6·25 35주년 연합예배 및 5·18진상보고회’가 열렸다. 교역자 50명, 재야인사 10명, 5·18관련자 15명, 학생 150명, 교인 280명 등이 참석한 이 보고회에서는 ‘범국민광주사태진상조사위’ 구성과 위령탑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이 발표되었

103) 『동아일보』 1985년 5월 20일 「빛속 '5·18' 추모제: 「5월! 그날이 다시오면, 『교회와 사회』1(기장 전남노회, 1985.6.26): NCK문서.

104) 목포기독교교회협의회·목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선교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목포연합회·대한예수교 장로회청년회목포연합회·목포YMCA청년목민회·국제사면위원회목포지회, 「5·18 광주·목포시민의거 제5주년을 맞아」(1985.5.18), 『5·18자료총서(2)』, 608쪽.

105) 편집실, 「5월! 그날이 다시오면, 『교회와 사회』1(기장 전남노회, 1985.6.26): NCK문서.

으며, 보고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5·18광주사태 허위발표 규탄한다”, “5년 전엔 총칼로, 오늘은 관제언론으로 죽어간다 광주시민” 등 피켓을 들고 계림동과출소까지 행진하다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¹⁰⁶⁾

한편 6월 7일 윤성민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광주사태 사망자는 191명”이라고 발표하자 이에 분노한 인사들은 6월 17일 광주YMCA에서 윤장관의 국회허위보고에 대한 범시민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그런데 경찰이 건물을 봉쇄하여 집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강신석·강희남·문정식·은명기·임기준 목사 와 이기홍·홍남순 변호사는 옥상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태극기를 게양한 채 옥상에서 시민규탄대회를 열었다. 도청앞 금남로 일대에 운집한 시민들은 이에 적극 호응했으며,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여 유기문 목사 등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채택된 성명은 “1. 광주학살에 대한 은폐와 조작을 중단하고 광주민중봉기 당시의 생생한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1. 전투환 등 현 군사독재정권은 광주학살을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 1. 미국은 전투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즉각 철회하라. 1. 5·18광주민중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의 요구조건을 즉각 수락하라. 1. 광주 시민을 중심으로 하여 ‘범국민광주학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1. 정부당국은 사망자 통계에 대한 책임을 모면키 위한 당시의 광주시 관계공무원의 징계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¹⁰⁷⁾

6월 26일 기장 전남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교회와 사회』를 창간하고 5·18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윤용식 목사(전남노회장, 광주신흥교회)는 <창간사>에서 “아비멜렉이 불한당을 동원하여 그 형제 70인을 죽이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였을 때 모두 벌벌 떨고 입을 봉하고 있었”으나 “그리심산에서 요담의 소리(삿 9:7-9)”가 있었으며, “아비멜렉의 잔혹성과 비정통성을 여지없이 고발한” 그 소리가 “새역사의 출발점이 되었고 정의사회의 기초가 되었”다며 이 회보가 “그리심산의 소리”가 되자고 주문했다. 이는 5·18로 집권한 제5공화국에 대한 저항을 뜻하는 것이었다. <강단>에서 최연석 목사(강진병영교회)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교회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고개숙일 수밖에 없다”고 자성한 뒤 5·18의 진상규명과 이를 통해 얻는 역사의 교훈을 ‘신학화’해

106) 편집실, 「5월! 그날이 다시오면」: 『동아일보』 1985년 6월 17일 「광주기독교단체 5·18진상보고회」.

107) 『동아일보』 1985년 6월 17일 「광주기독교단체 5·18진상보고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 『교회와 사회』1(1985.6.26): NCKK문서.

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식 목사(교회와사회위원장, 광주계림교회)는 <추모사>에서 “해마다 5월이 오면 봄을 선구하는 진달래처럼 광주의 꽃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되살아 피어나리라”며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서용석 목사(해제용학교회)는 “미문화원사건과 5·18”이란 <시론>에서 5·18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¹⁰⁸⁾

1986년 5월 18일에는 ‘전남기독교연합회’ 주최로 광주YMCA에서 제6주기 추모에 배가 열렸다. 같은 시각 도청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금남로·충장으로 일대에 교역자·평신도들이 모였다. 또 광주YMCA 맞은편 광주백화점에서는 기독교인 100여 명이 “모든 정치범 양심수 즉각 석방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다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이들 중 20여 명이 연행되었다.¹⁰⁹⁾ 같은날 광주NCC와 기장 전남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1. 5·18 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는 회개하는 자세로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때 죽임당한 이들의 원한은 풀어주어야 하며, 유족과 부상자는 국가원호대상법에 의거 보상받아야 한다.
1. 5·18의 뜻은 이 땅의 민주화이다.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뽑자>는 열화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화의 일정을 밝히려 한다. <89개헌이 소신이나 국회에서 합의하면> 따위의 말로 이를 호도하거나, 내각책임제나 의원집정부제를 음모하여 집권연장을 꾀하려 한다면 제2의 5·18이 초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5·18 당시 묶여진 시민의 정치적 자유는 마땅히 주어야 하고, 진정한 시국수습을 원한다면 구속인사의 석방·사면·복권이 선행되어 국민대화합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¹¹⁰⁾

이 날 전남기독교농민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하여, “80년 5월 광주민중학살을 방조했던 미국, 그리고 이제 와서는 우리 농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요구가 오히려 천만 농민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있다. … 나가자! 농민들이여! 손에 손을 잡고 농민살길 쟁취를 위해, 민족자주수호를 위해, 오늘 5월 광주항쟁 제6주기를 맞아 그날의 함성을 다시한번 온누리에 떨치자!”면서 5·18

108)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 『교회와 사회』1(1985.6.26): NCCK문서.

109) 『동아일보』 1986년 5월 19일 「광주 '5·18' 산발시위」.

110)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성명서: 5·18 제6주년을 맞아」, 『5·18자료총서(2)』, 739쪽.

정신을 이어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요구에 맞서 싸우자고 주장했다.¹¹¹⁾ 6월 10일 광주YWCA는 “5·18의 값진 희생을 치루고도 이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민주화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¹¹²⁾

제5공화국의 마지막 해인 1987년은 1월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전두환 대통령의 ‘4·13호헌조치’ 발표, 그리고 6월항쟁 등으로 어느 해보다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뜨거웠다. 1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나자 2월 11일 목포NCC와 기장 목포시찰회는 목포죽동교회에서 추모예배를 드리며 “현 정권은 80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적 요구를 짓누르고 … 2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탈취”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¹¹³⁾ 또 전두환 대통령의 4·13호헌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12일간 단식기도를 벌인 전남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단식기도참가자 일동은 성명을 발표하고 “군화발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힌지 26년, 그들의 총칼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광주민중들의 피흘림 이후 7년”이라 지적했다.¹¹⁴⁾

5월 18일 목포NCC는 기장 목포양동교회에서 5·18 제7주기 추모예배를 갖고 안동해 목사(목포평강교회)가 ‘5·18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목포의 희생자 유가족 3가정에 성금을 전달했다.¹¹⁵⁾ 같은날 전남NCC와 기장 전남노회도 「광주사태 7주기 추모예배를 드리며」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와 정부·미국의 자성을 촉구했다.¹¹⁶⁾

5월 24일 광주기독교선교자유수호위원회는 광주YMCA에서 ‘범교단 나라를 위한 연합예배’를 드렸다. 모든 순서를 교파별로 안배하여 진행했으며, 변한규 목사(광주중앙교회)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7년 전 5월 18일에 무고한 광주시민들이 처참히 살육되던 모습들을 직접 보고 들은 우리들은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일념에서 현 정권을 향해 누차에 걸쳐 회개를 촉구해왔”다고 밝힌 성명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을 채택하고 4·13호헌조치 철회·언론자유 보장·양심수 즉각석방·민중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전의 광주 기독교계

111) 전남기독교농민회, 「광주항쟁 계승하여 농민살길 쟁취하자」(1986.5.18), 『5·18자료총서(2)』, 734-735쪽

112) 광주YWCA, 「민주화운동에 부치는 광주YWCA선언: 민주조국건설에 발맞춰 나가고자 합니다」(1986.6.10): NCCCK문서.

113) 목포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 목포시찰회, 「故박종철군 추모예배(순서지)」(목포죽동교회, 1987. 2.11): NCCCK문서; 목포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서: 박종철군을 다시 살려야 한다」(1987.2.11): NCCCK문서.

114) 전남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단식기도참가자 일동, 「12일간의 단식기도를 마치며 교회와 국민, 현 정권에 보내는 성명서」(1987.5.8): NCCCK문서.

115) 「목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목포인권 제87-2호)」(1987.5.18): NCCCK문서.

116) 전남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광주사태 7주기 추모예배를 드리며」(1987.5.18): NCCCK문서.

성명이 주로 NCC·EYC 및 기장 전남노회 중심으로 발표된 데 비해 이 성명에는 “구세군(6명)·그리스도교회(1명)·기감(1명)·기성(1명)·기장(30명)·기침(20명)·성공회(1명)·순복음(2명)·개혁(211명)·고신(5명)·예장통합(178명)·예장합동(34명)·예장호헌(4명)·기독교성회(6명)” 등 광주의 교역자들 534명이 초교파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¹¹⁷⁾

2. 1980년대 타지의 기독교 민주화운동과 5·18

5·18 항쟁이 끝난 직후인 5월 29일, 고려대학교 ‘기독교학생회’ 회원 16명은 안태용의 집에서 회합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이때 「8백만 서울시민에게 고함」이란 5·18 관련 유인물이 발견되었다. 이들 중 10명은 훈방되었고 5명은 구금되었다.¹¹⁸⁾ 5월 30일에는 서울 형제교회 교인인 김의기(서강대생, 기감청년회 농촌분과위원장, EYC 농촌분과위원장)가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오늘의 성전에 몸바쳐 싸우자”는 내용의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남기고 투신자살했다.¹¹⁹⁾

한편 197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NCK는 계엄당국의 감시와 탄압 때문에 “5·18에 대한 성명서 한번 발표하지 못했다”고 한다.¹²⁰⁾ 하지만 NCK는 6월 4일 오충일 목사와 이경배 사무국장을 광주로 파견했으며, 7월 4일에는 조남기 위원장이 국군보안사 사령관실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① 연행자들의 소재확인 및 면회요청 ② 정국변화에 따른 교회의 입장 ③ 광주사태에 관한 교회적 관심 ④ 종교인으로서의 정치적 관심 등 광범위한 내용을 협의”했다.¹²¹⁾ 12월 12일에도 NCK 인권위원회는 5·18 관련 구속자인 정동년의 감형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진정했다.¹²²⁾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거두지 못했으며, 7월 22일 이회성 계엄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인들은 너무 편견

117) 「법고단 나라를 위한 연합예배(순서지)」(광주YMCA체육관, 1987.5.24) NCK문서; 광주기독교교사자유수호위원회, 「사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1987.5.24); NCK문서.

118)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824쪽.

119)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824쪽.

120) 「아! 광주여! 오월이여!」, 『5·18자료총서Ⅱ』, 394쪽.

121) 이 자리에는 NCK 이경배 사무국장과 문만필 군목이 배석했다(조이제,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171쪽).

122)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852쪽.

에 사로잡혀 그들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한다”면서 기독교계를 압박했다.¹²³⁾

5월 29일 기장 총회는 6월 8일(일요일) 전국교회에서 특별예배를 드리고 광주시민을 위해 헌금할 것을 결의했으며, 총회 및 위원회 총무를 광주에 파견했다. 이들은 현지 교역자들과 면담을 갖고 피해상황을 파악했으며, 기독교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을 위문했다.¹²⁴⁾ 10월 8일 기장 계열인 한신대학교에서는 5·18 기간 중 사망한 신학생 유동운을 위한 추도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피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계엄철폐”를 외치며 강당에서 농성을 벌이다 교수들의 만류로 중지했다. 이 사건으로 학생 146명 연행되고 9명이 구속되었으며, 6명이 ‘순화교육’을 받는 시련을 겪었다.¹²⁵⁾ 12월 23일에는 기장 총회에서 5·18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극형 면제”를 당국에 탄원하는 등,¹²⁶⁾ 1980년의 삼엄한 상황에서 기독교 민주화운동은 미약하나마 NCKK 및 기장교단을 통해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 해 한국 개신교계의 원로들은 전두환 군부집단을 지지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조찬기도회’란 명칭으로 8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기도회에는 개신교측의 김지길(기감)·정진경(성결)·조향록(기장)·한경직(예장통합) 등 20여 명의 목사가 참석해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전두환 위원장을 위해 기도했고, 전두환 위원장은 “여러분께서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서 7백만 기독교인들이 난국극복의 대열에 참여토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¹²⁷⁾ 이 조찬기도회는 이후에도 매년 열려 군사독재정권을 사실상 옹호했으며, 이에 따라 5·18의 진상과 책임을 둘러싼 개신교계의 입장도 다르게 나타났다.

1981년 3월 1일 NCKK는 「3·1절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하면서 “1979년과 1980년에 받은 국민적인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란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5·18을 언급했다.¹²⁸⁾ 3월 31일 5·18 관련 피고인 중 상고한 83명에 대해 대법

123)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6)』, 204쪽.

124) 「이 광주여! 오월이여」, 『5·18자료총서(18)』, 394쪽.

125)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844쪽.

126)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852쪽.

127)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836쪽; 『동아일보』 1980년 8월 6일 「국가위환 조찬기도회」. 정진경 목사는 이 기도회가 전두환 위원장측에서 요구한 것이며, 한경직 목사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데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동의했고, 이후 기도회가 정권옹호용으로 자신들도 이용된 것을 안 뒤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묵묵히 수모를 받자”며 “운동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목사들의 몫”이라고 말하고 이후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정진경 구술, 이유진 글,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열린다』, 홍성사, 2008).

1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3·1절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1981.3.1)」: NCKK문서.

원에서 전원 기각판결을 내리자 구속자 가족들은 이 날 밤부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는데, NCKK 인권위원들은 이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한편 강원용 회장과 윤공회 대주교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구속자들의 감형을 청원했다. 이후 4월 3일 이뤄진 정부의 감형조치로 사형은 무기, 무기는 징역 20년, 5년 이상 형기는 절반으로 감형되었으며, 징역5년 이하의 수감자는 58명 중 안철(징역 3년으로 감형)을 제외하고 전원 석방되었다.¹²⁹⁾

5월 18일 5·18 제1주기를 맞았으나 당국의 불허로 공식적인 추모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대신 EYC는 사무실에 한쪽 벽에 검은 천으로 십자가를 만들고 “5·18민중봉기 희생자 신위”라고 쓴 종이의 양옆으로 두 개의 촛불을 켜 분향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5월 20일 경찰이 분향소에 난입하여 총무·간사 등 5명을 연행했다.¹³⁰⁾ 이튿날인 5월 21일에는 감리교신학대학 예배시간에 「광주의기 1주기를 맞이하여」란 유인물이 배포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신학생 송규의가 구속되었다.¹³¹⁾

1982년 4월 부활절을 맞아 EYC는 「한국기독교청년 시국선언」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민중봉기를 총칼로 진압, 살육을 자행하면서 등장한 전두환 집단”을 비난했다.¹³²⁾ 하지만 5·18 제2주기를 맞아 NCKK나 EYC가 독자적인 추모행사를 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대신 광주YWCA에서 열린 제2주기 추모예배에 NCKK 사무국장과 위원들이 참석했고, EYC 회장 김영진이 추모사를 낭독했다.¹³³⁾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 날 추모예배가 끝난 뒤 김경식 목사 등 4명이 구속되자 NCKK는 5월 19일 긴급간담회를 연 데 이어 20일 ‘5·18추모예배사건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 날 발표한 성명에서 “광주사태는 광주인의 책임이 아니며 광주만의 비극이 아닌 민족의 비극이다. 이 슬프고 고난에 찬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임을 믿는 우리 교회는 일치단결하여 광주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정확한 희생자의 명단과 충분한 보상, 구속되었던 인사들의 복권·복직·복학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다짐”했

12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1년 인권위원회 사업보고서」(1981.5.26): NCKK문서.

130)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868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1년 인권위원회 사업보고서」(1981.5.26): NCKK문서.

131)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869쪽.

132)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서울지구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기독교청년 시국선언」(1982.4): NCKK문서.

13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일지(1982.3.1-6.15)」: NCKK문서; 김영진, 「추모사」(1982.5.18): NCKK문서.

다.¹³⁴⁾ 그리고 NCKK 인권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5월 24일 ‘광주예배사건’ 보고회를 열었다.¹³⁵⁾ 기장 서울노회도 5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공식사과와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¹³⁶⁾

이처럼 1982년 NCKK의 5·18 관련 민주화운동은 1981년보다 적극성을 띠었다. 10월 6일 발표한 「1982년도 인권선언」에서 “민주와 정의를 외치다 쓰러져간 광주 의 시민들”이라 언급하며 인권회복을 촉구했으며,¹³⁷⁾ 10월 12일 전남대생 박관현이 광주교도소에서 사망하자 사무국장과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광주에 파견하여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어 광주교도소장·전남도경국장 및 부검의 등과 면담한 테 이어 다시 광주교도소를 방문하고 사망경위를 조사했다. 그리고 10월 20일 법무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병중에 있는 제소자들의 조속치료를 요청하고 21일부터 인 권위원회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후에도 NCKK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3차례(10.26/11.16/12.12) 더 법무부 교정국장을 만나 대책을 촉구했다.¹³⁸⁾

이밖에도 NCKK는 같은해 4월 구속된 5·18 관련 수배자 최운용 및 ‘광주햇불회사 건’ 관련자 기태우 등 2명, 5·18과 관련하여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충주 오석교회(기감) 장석재 전도사 외 2명, 박관현의 옥중사망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이 다 구속된 전남대생 11명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구조활동’을 벌였 다.¹³⁹⁾

1983년부터 서울의 기독교인들은 독자적으로 5·18 추모예배를 드렸으나 당국은 이를 방관하지 않았다. 추모예배에 참석할 예정이던 설교자 문익환 목사를 비롯하여 성해룡·윤반웅·이해동 목사와 이문영·함석헌, 황인성(KSCF 간사)·유태선(EYC 회장)·이민우((EYC 부회장)·김철기((EYC 총무) 등이 사전에 가택연금되었고, 김영균·김상근·박형규 목사도 미행을 받았다.¹⁴⁰⁾ 이에 따라 5월 18일 열린 5·18 제3주기 추모 예배에서는 문익환 목사 대신 김소영 목사(NCKK 총무)가 설교를 맡았다.¹⁴¹⁾

134) 5·18추모예배사건대책위원회, 「5·18추모예배사건에 즈음하여」(1982.5.20): NCKK문서.

135) 「행사일지」(1982.5.20): NCKK문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2년도 인권위원회 사업보고서」(1983.2.8): NCKK문서.

136)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908쪽.

13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1982년도 인권문제전국협의회 참가자 일동, 「1982년도 인권선언」(1982.10.6): NCKK문서.

13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2년도 인권위원회 사업보고서」(1983.2.8): NCKK문서.

13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일지(1982.3.1-6.15)」: NCKK문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2년도 인권위원회 사업보고서」(1983.2.8): NCKK문서.

140) 「1980년대 상반기 일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8)』, 939쪽.

이후 EYC는 5월 30일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 여러분께」란 성명을 발표하여 불법적인 연금·납치에 대해 항의했다.¹⁴²⁾ NCKK 인권위원회에서도 6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현 정권의 이러한 폭력적 탄압을 목도할 때마다 광주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총칼에 무참히 난도질당했던 몸서리치는 그날의 악몽을 되새기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권의 통치방식을 볼 때 우리는 광주의 비극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질타했다.¹⁴³⁾ 이어 6월 9일부터는 시한부 단식에 나서며 “우리는 12·12사건, 광주사태, 의령총기 난동사건, 경찰병력의 학원내 투입 등등 일련의 권력의 폭력화 경향을 상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온통 폭력만능 내지는 폭력승배의 풍조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¹⁴⁴⁾ 이밖에도 5·18 당시 총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치료를 받다 다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김용대를 NCKK 위원장·부위원장 등이 5월 30일과 6월 1일 위문하며 성금을 전달했고,¹⁴⁵⁾ 1982년에 이어 구속자들을 위한 ‘법률구조활동’도 계속했다.¹⁴⁶⁾

1984년에는 기독교 청년들이 군사독재정권의 각종 폭력에 대해 규탄하면서 5·18을 언급했다. 5월 2일 기장 전국연합회에서 발표한 「기장청년 반폭력투쟁선언」에서는 “광주에서 벗기운 채 대검에 쓰러져간 우리 부모, 형제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아직도 끊이지 않는 죽음의 행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¹⁴⁷⁾ EYC 회보 『전진하는 새벽』 5·6월의 논설 「반폭력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에서는 “광주학살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정권에 의한 폭력”¹⁴⁸⁾이라 하여 군사독재정권 폭력의 근원을 5·18에서 찾았다. 특히 EYC는 5월 14일부터 1주간을 ‘반폭력투쟁주간’으로 하여 “80년 5월 광주사태 때의 희생자와 강제징집되어 군에서 사망한 6명의 대학생과 그의 민주화

14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성명서」(1983,6,3): NCKK문서.

142)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 여러분께」(1983,5,30): NCKK문서.

14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성명서」(1983,6,3): NCKK문서.

14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한부 단식에 즈음하여」(1983,6,9): NCKK문서.

14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성명서」(1983,6,3): NCKK문서.

14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3년도 인권위원회 사업보고서」(1984,1,27): NCKK문서.

147)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 「기장청년 반폭력투쟁선언」(1984,5,2), 『5·18자료총서(2)』, 382쪽.

148)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전진하는 새벽』 1984년 5·6월호: NCKK문서. 이밖에 이 회보에서 김홍기는 고 김의기를 추모하며 “수천명의 광주시민을 현대 세계가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잔인하게 피흘려 죽이고도”(김홍기, 「추모문」새벽사의 새벽을 기다리며)라 했고, 「(학원민주화)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는 대학가의 5·18 기념투쟁 소식이 실렸다.

를 위해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검은리본을 착용”하기로 했다.¹⁴⁹⁾ 이어 5월 19일에는 8개 기관·교파 청년회 명의로 「반폭력 평화행진 선언」을 발표, 망월동에 안장된 5·18 사망자들의 이장을 강요하는 당국을 비판하면서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각종 추모행사를 열었다.¹⁵⁰⁾

NCKK 인권위원회에서도 6월 27일 발표한 「1984년도 인권선언」에서 “오늘의 폭력통치의 시발점이 된 광주사태도 회개함으로 그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회개의 징표로써 당국자들이 책임을 질 것과 광주의거의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을 국가원호대상자로 대우할 것”을 요구했다.¹⁵¹⁾ 또 11월 29일에는 기독교 노동선교 관계자들이 「기독교 노동선교관계자 민주쟁취선언」을 발표하면서 “광주 민주시민 수천명을 살육하고 정권을 잡은 군부”를 비판했다.¹⁵²⁾

한편 NCKK 인권위원회는 7월 5일 금영균·김상근·오충일 목사 등으로 ‘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11월 9일 광주한빛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광주지역 조사위원에 강신석·김영진·문정식·방철호·윤기석·이경식, 위원장에 김상근 목사, 부위원장에 문정식 목사, 서기에 김영진 등이 선임되었다.¹⁵³⁾

1985년 기독교계의 5·18 관련활동은 더욱 조직화되었다. 이 해 2월 12일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이 민주한국당을 누르고 제1야당으로 부상하면서 전국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에서는 4월 23일 광주에서 ‘광주민중항쟁기념위원회’를 결성했다. 위원장 조아라 장로, 부위원장 유연창·고영근 목사, 총무 이해학 목사, 협동총무 강신석 목사 등 임원진에서 보듯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5월 10일 서울 형제교회(기감)에서 광주민중항쟁기념대회를 연 이후 전국적·조직적인 5·18 추모행사를 펼쳤다. 다음은 이에 대한 내용이다.¹⁵⁴⁾

149) 『인권소식』97(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4.5.17); NCKK문서.

150)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전국연합회·대한예수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구세군대한분영청년회전국연합회·대한성공회청년회전국연합회·기독교대한복음교회청년회전국연합회, 「반폭력 평화행진 선언」, 『5·18자료총서(2)』, 409쪽.

15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1984년도 인권문제전국협의회참가자 일동, 「1984년도 인권선언(1984.6.27.)」, NCKK문서.

152) 기독교노동선교관계자 민주쟁취대회 참가자 일동, 「기독교 노동선교관계자 민주쟁취선언(1984.11.29)」, 『5·18총서(2)』, 504쪽.

153) 조이제,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172쪽. 이 조사위원회는 1985년 5월 8일 조사내용을 “(1) 기본조사서를 기초로 하고 (2) 정부발표 및 해외보도 재료를 더욱 수집 공동으로 편집하기로 (3) 조사위원이 다시금 정리하여 편집키로 (4) 편집위원은 인권위원회 조사위원과 광주 강신석 목사로 한다” 등의 원칙에 따라 정리했으며, 1987년 『1980년대 민주화운동』 3권의 발간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

154) 『5월 광주민중항쟁 5주년기념 투쟁경과보고 및 평가』(1985); NCKK문서.

<5월 광주민중항쟁 5주년기념 투쟁경과 보고 및 평가>

1. 목표 및 과제 설정

- (1) 목표: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퇴진을 주 슬로건으로 하여 광주학살의 진상과 그 책임문제를 대중선전과 집회 등을 통하여 전국화·대중화하며 국민적 애도와 저항의 기간으로 삼는다.
- (2) 과제: ㉠ 전단을 통한 전국적 대중선전 ㉡ 각 지역단위로 공개집회 개최 ㉢ 공동설교문을 통한 예배로 교회의 인식과 참여를 촉구하고 추모사업을 위하여 헌금 ㉣ 연대투쟁에의 적극참여

2. 활동 내용

- (1) 전단: ㉠ 성명서 '광주의 피는 보상되어야 한다' ㉡ 교회용 대중전단 '아! 광주여 민족의 십자가여' ㉢ 일반용 대중전단 ㉣ 광주민중항쟁 기념포스터 ㉤ 광주학살진상보고 및 희생자추모예배 전단 ㉥ 목회자 성명서 '광주민중항쟁 5주년을 맞는 우리의 입장' ㉦ 성명서 '농성에 들어가면서' ㉧ 서울 미문화원 농성사건에 대한 기독교학생 긴급성명 ㉨ 김동완 목사 옥중서신 ㉩ 성명서 '김동완 목사 구출에 대한 형제교회의 입장' ㉪ 전주경찰 폭력에 대한 성명서
- (2) 공동성명: ㉠ 광주민중항쟁 5주년 사회단체 연합성명 ㉡ 미문화원 농성에 대한 5개단체 지지성명 ㉢ 전학련과 4개단체 연합성명
- (3) 광주민중항쟁 책자 '아! 광주여 민족의 십자가여' 발간
- (4) 광주민중항쟁기념위원회 결성: 4월 23일 광주/위원장 조아라 장로, 부위원장 유연창·고영근 목사, 총무 이해학 목사, 협동총무 강신석 목사
- (5) 광주민중항쟁기념대회 개최: 5월 10일 형제교회/기민쟁 광주민중항쟁기념위원회 주최
- (6) 서울지역 광주학살 진상보고 및 희생자 추모예배: 5월 16일 기독교회관
- (7) 지방집회: 11개 지역 5월 17일 울산·해남·부산·대전·수원/5월 18일 청주·광주·온양/5월 19일 안동·목포·전주
- (8) 목회자 철야기도회: 5월 16-17일/기장 총회
- (9) 목회자 가두시위 2회: 5월 19일/기장 전북노회 주최로 기념예배 후 목회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유인물을 뿌리며 가두시위
- (10) 추모기도회 및 농성: 5월 23-25(2박3일간)/사무실/추모예배 6회, 시민방송, 전단살포, 비디오상영, 사진전시
- (11) 지역선전활동
- (12) 공동설교문을 통한 예배(5.19)
- (13) 연대투쟁: ㉠ 5월 14일 광주학살 진상규명 시민대회/세운상가에서 플래카드 들고 유인물 뿌리며 가두시위/황인성·최인규·허춘중 외 1명 구류 ㉡ 5월 29일 국민대회/전학련·민청련 공동주최
- (14) 구류 8명: 김동완 목사, 황인성 총무, 최인규 기청총무, 허춘중 장청총무(서울), 김영주 목사, 이영호 전도사(충남), 신명찬 울산 총무, 이인국(울산)

3. 투쟁일지

일자	전국기독교민주쟁취대회	연대·기타
4.23	광주민중항쟁기념위원회 구성	
5.1-5		각 대학 광사특위 구성
5.6-12		각 대학 지역시위
5.10	김영주 목사·이인규 전도사 구류 광주민중항쟁기념대회 개최	
5.13	김동완 목사 구류/단식투쟁(5.27 까지)	
5.14	황인성·최인규·허준중 총무 구류 신명찬·이인규(울산EYC) 구류	광주학살진상규명 시민대회(1차) 전학련 서울역 가두시위
5.16	광주학살진상보고 및 희생자 추모 예배	전국 39개 대학 시위
5.16-17	목회자 철야기도회	
5.17	울산·해남·부산·대전·수원 집회	전국 80개 대학 시위/시민대회(2차)/인천지 역 사회운동연합 추모대회/민통련 농성
5.18	청주·광주·온양 집회	5·18광주사태 희생자 5주기 합동추모제(광 주 망월동 묘지)
5.19	안동·목포·전주 집회 평화주일(광주민중항쟁에 관한 공동 설교)	
5.20	목회자 8명 종로2가에서 가두시위	
5.23-25	광주민중항쟁 추모기도회 및 농성	
5.23-26		전학련 미문화원 농성
5.25		연대 전학련 기자회견(제야인사 배석)
5.26		민청련(5개단체 기자회견, 공동성명서)
5.27		민통련, 광주민중항쟁 추모대회(울산)
5.29		전학련 외 4개단체 공동주최 국민대회
6.7		전학련 주최 국민대토론회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종래 서울·광주 및 전남에서만 산발적으로 있었던 기독교계의 5·18 추모행사가 서울·광주·전남(목포)은 물론 경남(부산·울산)·경북(안동)·충남(대전·온양)·충북(청주)·전북(전주) 등지에서도 열린 것이다. 이 기간 중인 6월 5일 NCKK 인권위원회 서울·경기(인천·수원·성남)·경상(부산·대구·울산)·충청(대전·청주·천안)·전라(전남·전북)·강원(춘천·원주) 등 지회 공동명의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점도 5·18 관련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전국화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 광주사태의 진상과 책임이 조속히 규명되어야 한다.
1. 광주사태의 책임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회개의 구체적 실천으로 퇴진하여야 한다.
1. 진정한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광주사태를 방조한 미국은 한국민에게 사과하고, 독재정권의 수립과 존속을 도왔던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광주외거 희생자와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는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광주사태 진상을 밝히려는 범국민적인 열망에 대한 당국의 폭력적 탄압과 인권침해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1. 광주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평화적이고 의연한 자세로 미문화원에서 농성함으로써 국민의 열망을 대변한 민주애국학생들을 옹공시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처벌을 가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광주외거 희생자들을 기리는 '광주5·18민중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운동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하며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¹⁵⁵⁾

이로써 1985년에는, 비록 NCKK 조직에 편중되기는 했으나, 전국적인 5·18 관련 기독교 민주화운동이 펼쳐지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이 해 기독교계 5·18 추모행사의 열기는 뜨거웠으며, 광주민중항쟁기념위원회는 '전국기독교민주쟁취대회'란 명칭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5월 15일 김동완 목사(전국기독교민주쟁취대회 사무국장)는 「5월광주민중항쟁 기념주년을 맞아 전국 교우 여러분께 드립니다」란 성명에서 5·18 진상규명과 주동자 처벌,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미국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¹⁵⁶⁾ 5월 23일에도 기념위원회에서는 5·18의 진상공개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미국정부의 사과 등을 촉구했다.¹⁵⁷⁾ 이어 5월 16일 '5월광주민중항쟁을 기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일동'은 「광주민중항쟁 5주년을 맞는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에서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 목회자들은 광주참상에 대하여 외면해온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진심으로 참회한다”고 밝히면서 위의 내용을 거듭 촉구했다.¹⁵⁸⁾

6월 27일 EYC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전국학생총연합 등과 함께 '민중민주운동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회의'를 결성하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2·12총선과 미문화원 농성 등이 “80년 광주의 핏빛 함성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혔다.¹⁵⁹⁾ NCKK도 5월 2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광주에서 5년 전에 죽어간 영령들을 추모하

15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성명서」(1985.6.5): NCKK문서; 조이제,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172-175쪽.
 156) 전국기독교민주쟁취대회 사무국장(김동완), 「5월광주민중항쟁 기념주년을 맞아 전국 교우 여러분께 드립니다」(1985.5.15): NCKK문서.
 157) 전국기독교민주쟁취대회 5월광주민중항쟁기념위원회, 「5월 광주민중항쟁 5주년을 기리는 농성에 들어가면서: 광주의 피는 보상되어야 한다」(1985.5.23): NCKK문서.
 158) 5월광주민중항쟁을 기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일동, 「광주민중항쟁 5주년을 맞는 우리의 입장」(1985.5.16): NCKK문서.
 159) 민중민주운동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회의(민주화운동청년연합·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전국학생총연합), 「공동성명서」(1985.6.27): NCKK문서.

며, 부상자들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위로와 격려가 같이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으며,¹⁶⁰⁾ 8월 14일 다시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는 민족적 비극이었던 광주사태 이후, 제5공화국이 출범하고 나서 학원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우려했다.¹⁶¹⁾

충남 온양에서는 5월 18일 온양장로교회에서 ‘제5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광주의거추모 및 순천향대학 인권유린사태 진상보고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준비하던 김영주 목사(송악감리교회)와 이영호 전도사(원남감리교회)가 5월 10일 홍보자료를 찾아오던 중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에 5월 13일 천안NCC에서는 「성명서: 온양지역 성직자 인권유린 및 선교탄압에 대하여」를 발표하고 “5년 전 광주에서 죄없이 희생된 영령들을 위한 추모행사와 홍보물이 어찌 불온유인물이 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어찌 유언비어 유포가 되는가”라 항의했다.¹⁶²⁾

전북 전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기장 전북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5월 19일 전주남문교회에서 추모예배를 드리고 「광주민중항쟁 5주년을 맞는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5·18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미국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의 강경한 대응으로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거나 연행되었다. 이에 전북노회에서는 21일 비상노회를 소집하여 「5·19 경찰폭력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책임자 문책 및 전북도경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전북도경국장과 전주경찰서장이 공개사과하고 책임자 문책과 제발방지를 약속하여 사태는 일단 수습되었다. 그럼에도 5월 29일 전북NCC 인권선교협의회는 다시 「5·19 경찰폭력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5·18 진상규명과 함께 “이땅의 모든 인권 탄압사태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³⁾

이처럼 어느 해보다 기독교계의 5·18 관련 활동이 많았기에 정부로부터의 탄압도 거셌다. 이 때문에 5·18 추모행사를 주도한 김동완(NCCK 인권위원)·김영주(천안

16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시국선언문」(1985,5,20): NCCK문서.

16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서」(1985,8,14): NCCK문서.

16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안지역 인권선교위원회, 「성명서: 온양지역 성직자 인권유린 및 선교탄압에 대하여」(1985,5,13): NCCK문서.

16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5년도 사업보고서」(1985,12): NCCK문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5·19 경찰폭력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1985,5,21): NCCK문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장(백운식)·5·19경찰폭력사건대책위원장 김현식, 「5·19 전주경찰폭력사건 경위서」(1985,5,22): NCCK문서;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최근 폭력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1985,5,29): NCCK문서.

NCC 인권위원, 송악감리교회)·이영호(원남감리교회)·황인성(NCCK 인권위원, KSCF 총무) 등이 구속되었다.¹⁶⁴⁾

1986년에 들어서도 지방에서의 5·18 관련 기독교 민주화운동은 계속되었다. 5월 15일 대전제일교회에서 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충남기독교농민회·대전기독교청년협의회 등은 ‘민족자주와 민주쟁취를 향한 충남지역 기독교대회’를 열고 「광주여! 민족자주와 민중민주로 부활하라」란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서 이들은 “80년 5월 광주민중들의 항쟁은 유신독재체제 몰락 이후 현 군사독재정권이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민족자주와 민주화를 갈망하는 민중들이 분연히 일어난 항쟁이었음을 천명하며, 이 항쟁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민중항쟁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여 역사 가운데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¹⁶⁵⁾ 5월 19일 울산에서는 신·구교특별위원회 명의로 「야훼의 부르심과 위기속의 응답: 광주민중항쟁 6주기를 맞는 울산지역 신·구교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5·18 진상규명, 폭력정치의 종식, 학원의 자율보장, 개헌요구 수용 등을 촉구했다.¹⁶⁶⁾

6월에는 ‘부천시 성고문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자 7월 18일 성고문추방기독교대책위원회에서 「광주학살 살인정권 여성고문 강간정권 온 민중과 교회의 이름으로 처단하자!」는 성명을 발표했으며,¹⁶⁷⁾ 8월 11일 충남NCC 인권선교협의회는 천주교대전교구 정의구현사제단·충남민주운동협의회 등과 함께 ‘고문 및 폭력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군사독재정권의 고문·성폭력·폭력·용공조작만행을 규탄한다!」란 성명을 발표하고 “현 군사독재정권은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0여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권력을 탈취한 피물은 정권이다”며 규탄했다.¹⁶⁸⁾ 10월에는 경기도 안산노동교회(기장) 김현수 전도사가 ‘민중교육’이란 제목의 5·18 관련 비디오를 대부분이 반월공단 근로자들인 교인들과 함께 시청하다 검거되기도 했다.¹⁶⁹⁾

1987년 1월에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나 거센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16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5년도 사업보고서」(1985.12): NCCK문서.

165) 민족자주와 민주쟁취를 향한 충남지역 기독교대회, 「광주여! 민족자주와 민중민주로 부활하라」(1986.5.15): NCCK 문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충청남도인권선교협의회, 「인권소식」(1986.5.27): NCCK문서.

166) 신·구교특별위원회, 「야훼의 부르심과 위기속의 응답: 광주민중항쟁 6주기를 맞는 울산지역 신·구교의 입장」(1986.5.19): NCCK문서.

167) 성고문추방기독교대책위원회, 「광주학살 살인정권 여성고문 강간정권 온 민중과 교회의 이름으로 처단하자!」(1986.7): NCCK문서.

168) 고문및폭력저지공동대책위원회, 「군사독재정권의 고문·성폭력·폭력·용공조작만행을 규탄한다!」(1986.8.11): NCCK문서.

169) 『동아일보』 1986년 10월 25일 「광주사태관련 테이프 교회서 신도에 틀어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2월 4일 발표한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에 임하는 기독교 목회자의 입장」이란 성명에서 “고 박종철군의 죽음은 일개 수사관의 실수로 인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광주시민의 무고한 피를 흘리고 들어선 제5공화국 치하에서 지난 6년간 끊임없이 자행되어 온 관행”이라 지적했다.¹⁷⁰⁾ 이어 EYC·KSCF도 2월 7일 「군부독재의 종식만이 고문·폭력을 뿌리뽑는 길입니다!」란 성명을 발표하고 “이 사건은 결코 일개 경찰의 우연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의 피를 △고 들어선 현 정권 치하 6년간 우리 모두가 지긋지긋하게 당해 온 폭력과 인권유린의 한 상징적인 사건”이라 주장했다.¹⁷¹⁾ 2월 25일 NCK가 채택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6회 총회선언문」에서는 “1980년 광주사태 이후 수립된 제5공화국은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 자유와 인권의 신장 등을 열망하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¹⁷²⁾

한편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는 ‘4·13호헌조치’를 발표하자 전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4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행 헌법은 “80년 5월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피의 학살로 묵살하고 출발한 제5공화국의 헌법”이라 비판했다.¹⁷³⁾ 5월 6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무기한 삭발기도를 시작하면서: 호헌을 철폐하고 군부독재 퇴진하라」란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 학살로 집권한 현 정권”의 비정통성과 부도덕성을 규탄했다.¹⁷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독교청년학생 금식기도회’ 참가자들도 5월 15일 발표한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호헌철폐와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기독교청년학생 금식기도회에 들어가며」란 성명에서 “광주학살 이후 계엄령 하에서 급조된 현행헌법”이라 지적했다.¹⁷⁵⁾

이처럼 고문규탄과 개헌요구 등 민주화의 열망이 높아지면서 이 해 5·18의 열기도 뜨거워졌다. 5월 18일 NCK 김소영 총무는 「5·18 광주 7주년을 보내며」란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광주의 5월이 있었으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민주주의를 위한 용기를 가진다. 우리는 결코 광주의 함성을 망각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를

170)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에 임하는 기독교 목회자의 입장」(1987.2.4): NCK문서.

171)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군부독재의 종식만이 고문·폭력을 뿌리뽑는 길입니다!」(1987.2.7): NCK문서.

172) NCK 제36회 총회 참석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6회 총회선언문」(1987.2.25): NCK문서.

173) 「전국으로 번져가는 목회자들의 단식기도!」, 『소식』1(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1987.5.6): NCK문서.

174) 「무기한 삭발기도를 시작하면서」, 『소식』1(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1987.5.6): NCK문서.

175)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독교청년학생 금식기도회 참가자 일동,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호헌철폐와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기독교청년학생 금식기도회에 들어가며」(1987.5.15): NCK문서.

실현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¹⁷⁶⁾ 같은날 ‘남원지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단식기도 참가자 일동’도 「이땅의 민주화를 위한 무기한 구국단식기도회에 들어가면서」란 성명을 발표하고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을 무참히 총칼로 짓밟아버린 현 군사독재정권”이라 비판했다.¹⁷⁷⁾

5월 21일 NCKK 주최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산업선교회(영등포·인천·성수)·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기독교여민회·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한국기독교도시민선교협의회·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주관으로 기독교 회관에서 열린 5·18 제7주기 추모예배에서 참석자들은 “80년 5월의 광주는 이 민족의 십자가”이며 4·13호헌조치를 “제2의 5·17쿠데타”로 규정하고 “계승하자 광주항쟁 분쇄하자 호헌책동”이라 주장했다.¹⁷⁸⁾

한편 같은달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 은폐·조작되었다고 폭로하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5월 25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사건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민중항쟁 제7주기를 맞아 ... 고문살인의 희생자의 숨겨진 진실이 공개되고 조작된 범인들의 억울함이 밝혀져야 한다는 요청이 절박해졌다”고 주장했다.¹⁷⁹⁾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권위원회도 5월 28일 「성명서: 박종철학생 고문살인사건 범인조작은폐를 규탄한다」를 발표하고 “이 정권의 출발이 애당초 정통성을 결여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이 정권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온 국민에게 아픔을 안겨주었던 광주사태에 대한 진정한 속죄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마땅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¹⁸⁰⁾ 6월 8일 감신대·서울신대·장신대·총신대 총학생회와 연세대·한신대 신학과 학생회 등 학생들과 KSCF는 초교과적으로 「기독교학생결의문」을 발표하고 “80년 5월 ... 2,000여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들어선 현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6월 10일 성공회 대성당에서 열리는 ‘고문살인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¹⁸¹⁾ 보수적

176) NCKK 총무 김소영, 「5·18 광주 7주년을 보내며」(1987.5.18): NCKK문서.

177) 남원지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단식기도 참가자 일동, 「이땅의 민주화를 위한 무기한 구국단식기도회에 들어가면서」(1987.5.18): NCKK문서.

178) 「고난받은 이와 함께하는 목표예배: 7주기 광주영령 추념예배(순서지)」(기독교회관 대강당, 1987.5.21): NCKK문서.

179)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사건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1987.5.25): NCKK문서.

18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권위원회, 「성명서: 박종철학생 고문살인사건 범인조작 은폐를 규탄한다」(1987.5.25): NCKK문서.

181) 감리교신학대 총학생회·서울신학대 총학생회·연세대 신과대 학생회·장로회신학대 총학생회·총신대 총학생회·한신대 신학과 학생회·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기독교학생결의문」(1987.6.8): NCKK문서.

성향의 서울신대(성결)·총신대(예장합동)의 학생들까지 참여했다는 점이 이채로운데, 이들 교단에서는 그때까지도 시국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었다.

7월 13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주최 NCKK 시국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연동교회(예장통합)에서 열린 ‘광주항쟁 이후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적 통일의 선구자인 애국열사를 추모하는 기도회’에서는 5·18 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위한 헌금을 했으며, 62명의 ‘애국열사’ 명단도 발표했다. 추모예배가 끝난 뒤에는 이세영 5·18광주의거청년동지회 회장이 “분신·투쟁을 한 사람들, 살해당한 사람들, 광주항쟁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 추모강연을 했다.¹⁸²⁾

한편 12월 16일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제5공화국도 점차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써 기독교 민주화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때마침 12월 21일 NCKK 인권위원회는 기독교회관에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 광주민중항쟁관련 자료 및 상반기일지』(전2권)을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이 『일지』에는 5·18에 대한 각종 내외신 자료와 법정기록, 구속자·사망자·부상자 명단이 수록되어 이후 5·18의 진상 및 역사를 밝히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었다.¹⁸³⁾

V. 맺음말

이상에서 1980년 5·18 당시 및 1980년대(제5공화국 기간) 기독교 민주화운동과 5·18에 대해 살펴봤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18이 일어나자 광주의 천주교·개신교 인사들은 5월 22일 남동성당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는데, ‘성당파’ 수습대책위원회라 불린 이들은 김성용·조철현 신부와 김천배·명노근·송기숙·이기홍·이성학·이애신·이영생·조아라·홍남순 등이었다. 이들 중 송기숙·홍남순을 제외한 이들이 기독교인이었으며, 개신교 목사·전도사 등 교역자들은 참

182)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주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시국대책위원회 주관, 「광주항쟁 이후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적 통일의 선구자인 애국열사를 추모하는 기도회(순서지)」(연동교회, 1987.7.13): NCKK문서.

183) 『동아일보』 1987년 12월 19일 「21일 광주시태 자료집등 출간기념회」.

여하지 않았다. 같은날 도청에서 모인 이른바 ‘도청파’ 수습대책위원회 인물 중에는 몇 명의 개신교 목사가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장세균 목사 정도가 확인된다. 사태의 수습방안을 놓고 대체로 ‘성당파’는 강경, ‘도청파’는 온건한 입장을 보였는데, 그 때문에 양측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5월 25일 광주사태수습대책위원회를 함께 구성하여 활동했다. 이 위원회 위원 25명 중 적어도 14명이 기독교인이었다. 따라서 사태수습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하겠다.

위의 수습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의 개신교 교역자들은 5월 23일 15개 교파가 참여한 ‘광주시기독교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했으며, 26일 이를 ‘광주시기독교비상구호대책위원회’로 개칭하고 구호활동에 중점을 둔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되도록 계엄당국과 마찰을 빚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광주의 대표적 사회기관인 YMCA와 YWCA 인사들은 대체로 ‘성당파’와 보조를 같이하며 활동했고, 개교회 차원에서도 구호활동을 벌였다. 이 때문에 이후 계엄당국에 연행되어 처벌받은 인사는 주로 ‘성당파’·YMCA·YWCA 관계자들이었다.

5·18이 일어나자 전남 목포에서는 안철과 기장측 목사, 목포NCC가 중심이 되어 5월 25일 목포역 광장에서 목포시기독교연합회 비상구국기도회를 열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밖에 영암읍교회·강진읍교회·해남읍교회 등에서도 시위대에게 음식·의복 등을 지원하며 항쟁에 동참했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의 중심점 역할을 했던 개신교 최대의 연합조직인 NCK는 당국의 감시와 탄압 때문에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5·18 항쟁이 끝나고 대중집회와 단체활동이 금지되었지만 광주시기독교비상구호대책위원회는 11월까지 초교파적인 구호활동을 계속했다. 그리고 기장 전남노회에도 피해상황 조사 및 부상자 위문 등의 활동을 벌였다.

1981년 5월 18일 5·18 제1주기를 맞았으나 광주·전남의 기독교계는 별다른 추모 행사를 열지 못했으며, 몇일이 지난 5월 22일 광주NCC 주최로 연합추도예배를 드렸고, 5월 24일 광주기독교연합회와 기장 전남노회 주최로 연합추도예배를 드렸다. 이어 7월에는 기장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구호활동이 펼쳐졌다.

5·18 제2주기를 맞은 1982년 5월 18일 광주의 기독교인들은 YWCA에서 추모예배를 드리고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행사가 끝난 뒤 시위를 벌이다 다수가 경찰

에 연행되었다. 그리고 같은날 무등경기장에서는 ‘새광주건설 전남도민단합대회’가 열려 기독교측을 비난하여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광주·전남NCC와 기장 전남노회는 각종 5·18 관련 성명을 발표하여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984년 7월에는 ‘성당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광주복권복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임원진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1985과 1986년에도 광주·전남의 기독교인들은 추모예배와 가두시위, 성명서 발표 등의 방법으로 5·18을 기념하며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투쟁을 벌였으며, 특히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고조된 1987년에는 광주·목포의 기독교인들이 폭력추방과 헌법개헌을 위한 행동에 나서며 5·18 정신을 되새겼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타지에서는 1982년부터 NCK·EYC·KSCF 등 ‘진보적’ 초교파 연합기관을 중심으로 5·18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희생자 보상 등을 요구하고 5·18 관련 각종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 벌였으며, 그 때문에 정부로부터 적지않은 탄압을 받았다. 1984년 NCK는 광주사태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985년에는 광주민중항쟁기념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국 NCC 조직을 활용하여 전국기독교민주쟁취대회 등 5·18 추모행사를 열었다. 이는 주로 서울·광주·전남에 국한되었던 기독교계의 5·18 관련활동이 경기도·강원도·충청도·경상도 등지로도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또 1986년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4·13호헌초치’ 등에 즈음하여 발표한 각종 성명서에서 제5공화국의 비정통성·비도덕성을 언급할 때 5·18을 자주 언급했는데, 이는 198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추진동력이 바로 5·18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적 평가나 해석보다는 지역·연대별로 사건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아직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이 분야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진보적’이라 평가받는 NCK·EYC·KSCF 등 개신교 연합기관과 한국기독교장로회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이들 기관·교단의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같은 편중성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차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광주·전남의 개별 교회 및 교파 노회의 주보·당회록·노회록 등에도 관련자료가 적지 않게 실려 있을 것이며, 이들 자료가 활용되면 198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과 5·18의 관계가 더욱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終).

<참고문헌>

1] 관련자료·목록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80년대 민주화운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 한국현대사료연구소 편,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물빛, 1990)
-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1-50(1997-2009)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NCCK 민주화운동 자료목록』(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04)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민주화운동자료 목록집(1)·(2)』(국사편찬위원회, 2005)
- 『5·18민중항쟁 연구의 현황(1)·(2)·(3)』(5·18기념재단, 2006)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민주화운동사료 목록집: 1945-1979』(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2] 관련논문

- 김홍수, 「5월 광주항쟁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 5(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윤선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종교계의 역할: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19(한울, 2001)

3] 관련저서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국가권력과 기독교』(민중사, 1982)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군사정권과 민주화경험』(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2)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 백종국 편, 『한국기독교인의 정치의식과 민주화』(생명의말씀사, 1994)
- 조배원, 『한국기독교 사회참여운동 관련 문헌해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 조병호, 『한국기독교청년학생운동100년사』(땅에쓰신글씨, 2005)
- 차성환 외, 『1970년대 민중운동 연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 조이제,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5)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 김귀옥,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3)』(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 김명배, 『해방후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1960-1987』(북코리아, 2009)

한국 독립묘지의 정치학

- ‘국립 5·18 민주묘지’의 탄생을 중심으로 -

작성자 : 하상복(목포대학교 정치학)

I. 근대국가와 독립묘지 제도

국가는 자신의 존속을 위해 구성원의 충성과 복종과 희생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국가의 존재와 의미와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주의 인격적 표상 혹은 군주의 예외적 존재성과 위엄을 드러내는 자연물의 표상들은 그러한 정치적 고민의 전 근대적 결과물이다. 그러한 정치적 재현(representation)의 과제는¹⁾ 근대국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 동인은 전 근대와는 사뭇 다르다.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국가의 정치적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근대 국민국가는 근본적으로 인격적 실체성과는 관련이 없다.²⁾ 근대국가는 오히려 비인격적 추상성 또는 관념성의 토대 위에 구축된 체제다. 립셋(S. M. Lipset)은 미국의 정치적 본성과 관련해, “혁명을 통해 수립된 미국은 선한 사회의 본성에 관한 일련의 교의를 포함하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나라”³⁾라고 규정했다. 그 명제 속에 근대 국민국가의 본질적 특성이 들어 있다. 근대국가는 이념 위에 성립하는 정치체이며, 그 이념은 고도의 추상성과 관념성으로 특징지어진다. 근대국가를 특징짓는 자유, 평등, 인간존엄, 권리, 주권 그리고 그러한 이념들의 총화로서 국민(nation)이란 개념은 결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시적 대상들이 아니다. 근대국가는 국민들이 그러한 이념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1) Louis Marin, *Politiques de la Repr sentation*, Paris: Editions KIME, 2005.

2) 크리스토퍼 피어슨, 박형산·이택면 옮김, 『근대국가의 이해』, 서울: 일신사, 1997, p. 38-39.

3) 세이무어 마틴 립셋, 문지영 외 옮김, 『미국 예외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06, p. 33.

국민이라는 주권적 행위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동일화의 심리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재현의 정치가 가능할 때에야 비로소 국가를 위한 충성과 희생의 심리적 유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에 만연해 있는 상징행위는 그와 같은 정치적 맥락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상징행위와 관련해 우리는 전 근대적 재현의 메커니즘을 재전유하는 방식으로서 '의인화'(personification)를 들 수 있다. 서양의 근대는 국가의 존재와 위엄을 표상하는 방식으로서 인격체를 동원하는 의인화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왔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의인화의 주된 대상은 대체로 여성인데⁴⁾, 아마도 오랫동안 남성성으로 재현되어 온 전 근대적 왕조국가와의 이념적 대비 혹은 원리적 단절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시각적 장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근대국가는 국가 기념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축제와 달력의 형식을 통해 근대국가는 국가 이념의 추상성과 관념성의 수위를 낮추고, 국민이라는 정치적 주체를 미학적으로 호명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의 심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합창과 선서와 연설 등으로 구성되는 의례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국가의 존재이유와 이념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상기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적 동일체로 통합될 것을 유인한다. 국가기념일은 달력이라는 형식 속에서 특정한 정치적 이름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국민들은 생활의 일상적 리듬에 맞추어 국가의 이념과 국민적 주체성을 환기할 것을 제안 받는다.⁵⁾

우리가 살펴보게 될 국립묘지 또한 근대국가의 재현의 정치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한 충성과 희생, 즉 애국적 심성의 구현이라는 면에서 매우 깊고 넓은 심리적 효과를 산출해낼 수 있다. 그곳에는 국가를 위한 자기희생을 실천한 인물들이 안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의인화와 기념일 혹은 박물관보다 한층 더 강렬한 정치적 정념을 자극한다. 그런 면에서 앤더슨은 “근대 민족주의의 문화의 상징으로 무명용사의 기념비나 무덤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없다”⁶⁾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근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표상하고 있다고 국가가 ‘승인’한 인물들만이 안치된다. 그런 면에서 ‘국립’

4) "National Personification",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personification.

5) 에비아타 체룸비벨, 「달력과 역사: 국가 기억의 사회적 조직화에 관한 비교 연구」, 제프리 K. 올리 역음, 『국가와 기억: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본 집단기억의 연속갈등변화』,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p. 365.

6)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출판, 2003(2002), p. 29.

묘지인 것이다.

근대국가의 독립묘지는 1791년 혁명프랑스가 최초로 건립한 이래 많은 나라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또한 1945년 해방 이후 근대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한 뒤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애국적 인물들의 전당으로서 독립묘지를 건립했다. 최초의 독립묘지인 서울 동작동의 독립현충원의 애국적 인물들은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이라는 점에서 ‘반공주의’와 ‘군사주의’라는 이념을 체현하는 존재들이었다. 한국에서 독립묘지에 대한 인식이 오랫동안 그 두 이념 위에서 있던 것은 그 범주를 벗어나는 독립묘지가 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정치민주화가 진행되면서 4·19와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안장하는 묘지들이 각각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의해 독립묘지로 격상되면서 한국에는 반공과 군사주의에 연결된 독립묘지와는 이념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새로운 독립묘지가 탄생하게 된다. 특히 독립 5·18 민주묘지의 설립은 반군사주의의 상징성을 띠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한국 독립묘지의 정치적 인식에서 새로운 이념적 균열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독립묘지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독립묘지 탄생의 역사과 진화의 과정을 검토하면서 독립 5·18 민주묘지의 탄생을 갖는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논문은 현재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적대적인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 한국의 독립묘지를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 독립묘지의 탄생사

1948년 10월 중순에 발발한 여순사건은 근대적 체제를 수립한 남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념대립의 장이었다. 주지하는 것처럼, 여순사건은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제14연대 병사들이 육군총사령부가 내린 제주도 파병을 거부하면서 일어난 정부군과 봉기군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었다.⁷⁾ 당시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14연대의 병사들은 남로

7)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서울: 선인, 2009, p. 71-74.

당 소속의 좌익 군인들이었다. 그런 면에서 여순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좌우의 이념 대결이었다. 국무총리의 지휘 아래에서 봉기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는데, 10월 22일부터 27일에 이르기까지 정부군의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⁸⁾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봉기를 진압한 뒤에 봉기의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해나갔다. 그것은 곧 좌익의 뿌리를 근절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좌익의 뿌리 뽑기는 물리적 차원과 언어적 차원에서 양면적으로 이루어졌다. 숙군과 군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언어를 동원한 반공주의의 가시화가 시도되었다. 국무총리는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가 극우의 정객들과 결탁’한 ‘반국가적 반란’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10월 혁명과 같은 것으로 묘사했다.⁹⁾ 이후 정부는 사건을 체제 전복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사안을 북한과 연계시켰다.¹⁰⁾

여순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좌익병사의 제거와 공산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비난은 새로운 국가체제를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국가에게는 매우 중대한 정치적 의미로 다가온다. 그것은 이른바 국가건설과 국민건설의 실질적 토대인 국가이념의 틀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을 읽을 수 있다.

근자에는 시국이 다소간 위험한 상태가 보이므로 라디오로 방송해서 시국의 관계를 일반 동포에게 알려져 관민합작으로 위기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 금번 반란구역에서 피해된 여러 동포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 오늘 세계에서 당하고 있는 가장 큰 화근은 공산당의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목전에 제일 큰 화근은 공산분자들의 활동입니다. [……] 어찌하여 우리가 가장 신뢰하던 애국단체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며 소련의 목적을 이루어주고 우리를 해하려는 분자들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려는 공작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함은 누구나 우려치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국회에서 정한 헌법에 입법부가 정부를 개조할 권리도 없고 정부를 개조할 이유도 없는 터이니 입법부가 먼저 헌법을 위반하고 앉아서 행정부를 시비한다는 것은 누가 듣던지 웃을 말이오, 또는 정부를 타도하려는 공산분자들의 반란죄를 정부에 싸운다면 이것이 정부를 도우는 것인가 공산분자를 도우는 것인가를 생각해 붙입니다.¹¹⁾

8) 노영기, 「여순사건과 육군의 변화」, 『역사학연구』, 22권, 2003, pp. 265-266.

9)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p. 205.

10) <평화일보> 1948년 11월 5일.

11) 「공산분자의 반란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 국회의 내각개조 요구는 유감」(1948년 11월 9일), 공보실 『대통령이승만 박사 담화집』.

그에 이어 언론, 종교단체, 문인단체 등 사회적 여론을 주도하는 행위자들이 개입해서 여순사건을 매개로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의 잔학성과 반국가성과 체제 전복의지 등을 알리는 데 힘을 기울였다.¹²⁾ 여순사건에 대한 언어적 재현은 정부와 같은 논리에서, 사건을 공산주의라는 좌익이념으로 채색하고, 봉기 주도자들을 폭력, 비인간, 잔학, 극악의 존재들로 묘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 존재들은 같은 땅에서, 같은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적대적 타자들’이 된다. 한마디로 이들은 “민족적 대립물”로 표상되고 있던 것이다.¹³⁾

이제 여순사건을 통과한 대한민국 사회에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 개념이 구체적인 형상을 획득한다. 이른바 ‘반공 민족’ 또는 ‘반공 국민’이다. 이러한 반공 민족과 국민의 등장은 이승만 정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정한 정치권력의 존재와 유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제도적 차원의 장치들만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수립된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치권력에 대해 일체감과 동질 의식,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체성’(identity)을 가져야 하는데, 그 둘 사이의 정체성은 정치적 타자인 적의 존재를 통해 한층 더 강력하게 조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적의 존재는 그 반대편에서 ‘우리’라는 관념을 형성시키는 대립적 축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적이 심리학적 차원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드러날 때 그 정체성 형성의 강도는 그 힘을 더하게 된다.¹⁴⁾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된 적이 존재하는 이상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것들은 정당화되며, 그 적들의 소멸이 자신의 존재이념이라고 표명하는 지도자 또한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제 적을 매개로 정치적 지도자와 구성원들은 하나의 견고한 정체성의 고리로 연결되기에 이른다. 이승만 정권은 단일민족의 순수성과 단결을 강조하는 일민주의¹⁵⁾와 함께 여순사건을 통해 보다 더 강력한 통합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확보한다. 여순사건은 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민족과 국민이며, 누가 그러한 민족과 국민의 존재를 위협하는 적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으며 이승만 정권

12)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p. 375-398.

13) 임종명, 「여순사건의 재현과 공간(空間)」, 『한국사학보』 vol. 19, 2005, p. 177.

14) 이러한 관점에서 에델만(M. Edelman)의 입론은 음미해볼만하다. “적은 시악함, 부도덕함, 심리적 뒤떨림, 병리적 성격과 같은 내적 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들로 그려진다. 따라서 이들은 이들이 추구하는 행위가 무엇이든지, 이들 행위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나아가 이들이 구체적인 행위를 시도하고 있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위협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나치에게서 유대인은 그들이 존재하는 한 적이었다(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M. Edelman, *Constructing the Political Spectacl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 67.

15) 서종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2005.

은 이러한 이념적 대립구도를 통해 정권의 존재가치와 이유를 설명해냈다.

여순사건은 남한에서 독립묘지가 형성되는 데 최초의 계기로 작용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남한 독립묘지 탄생의 역사가 왜 반공주의와 군사주의로 특징화되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정부는 여순사건으로 적지 않은 군과 경찰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자 이들의 시신과 유해를 안치할 공간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군경의 시신은 서울의 장충단(獎忠壇)에 안치되었다.¹⁶⁾

그런데 전사자 수가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육군본부의 주도하에 새로운 육군묘지 후보지를 찾았는데, 그 일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정부는 내전의 급박한 상황에서 임시로 전사자들을 관리할 공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산의 금정사와 범어사에 마련된 ‘순순 전몰장병 영현 안치소’가 임시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¹⁷⁾ 하지만 전쟁으로 상상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전사자들을 안치할 묘지를 물색하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된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주관 하에 묘지 후보지 답사반을 구성해 제1차로 대구, 제2차로 경주 일대의 답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육군 공병감실의 주도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군 고위층은 현지를 답사한 결과 침수 우려가 있는 등 몇 가지 점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1952년 5월 6일 국방부 국장급 회의에서 육군 묘지 설치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다. 그 회의에서는 육군에서 추진 중인 안으로 군인묘지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군에서도 묘지를 설치하려 할 것이고 이는 곧 예산과 인력 및 관리의 통일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육군에서 추진 중인 묘지 설치 계획은 보류되었고, 대신 ‘3군 종합 묘지’ 설치를 추진하되 그 명

16) 그렇다면 왜 장충단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대한제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장충단은 대한제국 광무 4년(1900년) 10월 27일 고종의 명령으로 남소영(南小營, 남소문 옆에 있던 어영청의 분영)의 터에 건립되었다. ‘충을 장려한다’는 뜻이 말해주듯이 장충단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장소로 설립된 것이었다. 고종은 장충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국가적 의미를 부여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표창하고 절개를 지킬 것을 장려하여 대대로 죄를 용서하고 고아를 돌봐주는 일은 나라의 뜻밖한 법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라일을 위하여 죽었으나 부모와 처자는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원수의 칼날에 찔려 그만 목숨을 잃었으나 돌보아주지 않는다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을 무엇으로 고무해 주겠는가? 개국 503년 이후부터 장령(將領), 위사(衛士), 병졸, 액속(掖屬) 가운데서 순절하였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지 않았지만 표창하고 돌보아주는 은전(恩典)은 오늘에 이르도록 미처 베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매번 생각이 이에 미칠 때마다 가슴이 아파 오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원수부(元帥府)에서 세목표(世祿表)를 만들어서 등급을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라.” <고종실록>, 1900년 10월 27일, 11월 11일.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장충단이 현대적 의미의 독립묘지와 동일한 이념적 위상과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장충단이 군인들을 안치하는 공간으로 사용된 역사적 단서 또는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17) <주간불교>, 1997년 6월 3일.

청을 국군묘지로 할 것으로 결의되었다.¹⁸⁾

그러한 계획에 따라 1952년 5월 26일 국방부 주관 아래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3군 합동 답사반이 편성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3일 군 묘지 설치위원회를 구성한 후 1952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답사가 이루어졌다. 답사 일정 및 지역 그리고 선정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¹⁹⁾

답사일정 및 지역	
1952년 11월 15일 - 22일	서울 지역 일대
1952년 12월 24일 - 26일	서울 우이동 일대
1953년 6월 16일 - 24일	부평, 시흥, 안양 지역
1953년 7월 28일	용산, 성동구 지역
1953년 7월 30일	서울 우이동 일대
1953년 9월 7일 - 8일	남산 일대
1953년 9월 11일 - 15일	한강주변 일대
선정기준	
교통관계	- 전국 또는 남한의 중심지 - 전방에서 너무 멀거나 전방과 근접하지 않은 곳
면적	- 최저 330,580 평방미터, 50000주 기준
용지종별	- 국공유지 우선, 부득이한 경우 사유지 허용
배수관계	- 저습지를 피하여 배수가 잘 되는 곳
대민관계	- 가급적 민가와 부락이 없는 곳

답사 후보지들 중에서 서울의 우이동 일대가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국방부가 1952년 1월 9일에 올린 <국군묘지 설치 건의서>에는 우이동 부지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적지인 것으로 추천되고 있었다. 즉, 우이동 일대는 교통, 토질, 배수, 대민 관계에서 최적의 후보지로 평가되고 있었다.²⁰⁾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이동이 아니라 동작동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우이동 일대는 휴전선에서 상대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지리적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보인다. 1953년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동작동이 국군묘지 부지로 확정되었다. 이후 1953년 10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측량을 실시했으며, 다음해 3월 1일 정지공사를 시작한 후 3년에 걸쳐 묘역 238,017 평방미터를 조성했다.²¹⁾

18) 국립서울현충원, 『민족의 얼』, 제6집, 2007, p. 11.

19) 국립서울현충원, 『민족의 얼』, p. 12.

20) 국방부, 「국군묘지 설치에 관한 건의서」, 1952년 1월 9일.

21) 국립서울현충원, 『민족의 얼』, p. 13.

III. 국립현충원의 정치적 의미: '반공'과 '군사주의'

1956년 4월 13일, 정부는 대통령령 1144호로 <군묘지령>을 제정했다. 주요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국방부 장관 소속 하에 군 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항의 묘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작동에 두되 그 경내의 타인소유의 토지, 임야, 건조물, 공작물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조 전조의 묘지에는 군인, 사관후보생 및 군속(기타종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자 중 그 유가족이 원하거나 유가족에게 봉송할 수 없는 유골, 시체를 안장한다.²²⁾

여기서 우리는 국군묘지 안장 자격에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위의 제2조에 따르면 군 묘지는 그 이름에 부합하도록 '군과 군에 관계된 사람들'만을 안장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1957년 1월 7일 <군묘지령>(대통령령 제1228호)(일부개정)을 통해 국군묘지로서의 성격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안장 대상자의 제한적 확대를 명시함으로써 국군묘지의 의미 변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주었다. 개정된 <군묘지령> 제2조는 안장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조의 묘지에는 군인, 사관후보생 및 군속(기타 종군자를 포함)으로서 사망한 자 중 그 유가족이 원하거나 유가족에게 봉송할 수 없는 유골, 시체를 안장한다.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묘지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순국열사 또는 국가에 공로가 현저한 자의 유골, 시체를 안장할 수 있다.”(제2조). 국가적 죽음으로 기억해야 할 대상에 군인 이외에 국가 유공자가 포함된 것이다.

국군묘지의 성격규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몇 가지 안장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1957년 4월 2일에 이루어진 6·25 전쟁 희생 군인들 유해(191위) 안장이며, 둘째는 1963년 11월 21일과 1964년 4월 15일에 각각 열린 재일학도의용군과 학도의용군 유해의 안장이며, 셋째는 1964년 3월 11일에 이루어진 애국지사 김재근의 안장이다. 첫째와 둘째 안장은 국군묘지의 본래적 성격을 유지하

22) <군묘지령> 1956년 4월 13일.

고 강화하는 의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국방부는 1956년 9월 9일 육군 영현 200위와 해군 영현 3위를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각 군별로 봉안하고 있던 전쟁 희생자들의 유해를 창설된 국군묘지로 옮겨 봉안했으며 그 중에서 육군하사 강덕수 외 191위의 유해를 국군묘지 묘역에 안장했다.²³⁾ 이 의식은 1956년 1월의 무명용사 안장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명용사의 안장이 국군묘지라는 외적 형식에 최초의 내용을 채우는 상징적 행위였다면 유명용사 유해의 집단적 안장은 국가적 희생자들의 기억이라는 정치사회적 기능이 본격적인 계도에 진입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군묘지의 위상이 가시적 틀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곧 이어 국군묘지에는 학도 의용군의 유해가 안치된다. 6·25 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재일한국 유학생들 50위 -- 당시 도쿄 대행사에 안치되어 있었음 --를 국군묘지에 안장해달라는 재향군인회 주일지부의 요청을 국방부가 검토한 뒤에 국무회의가 최종적으로 의결했다. 같은 해 9월 24일에는, 6·25 전쟁 중에 사망한 학도병들 중에서 포항의 한 무덤에 함께 묻혀 있던 48위의 영현들을 국군묘지로 옮겨오는 것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어 이듬해에 안장되었다.²⁴⁾ 학도의용군의 안장은 군인들의 안장과는 다른 상징성을 띠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문힘으로써 국군묘지로 가시화되는 애국적 희생이 한층 더 강력한 순결성과 고결성의 무게를 지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같은 해에, 그 의미가 앞의 두 경우와는 현격히 다른, 애국지사의 안장의례를 거행했다. 국무회의는 1964년 3월 10일 국방부의 제안 -- 국방부는 "김재근은 국가에 공로가 현저한 애국지사로서 고인과 유가족의 소원에 따라 그 유해를 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인의 공적을 기리 추모하"고자 함을 강조했다 -- 을 논의한 끝에 3월 7일에 사망한 독립운동가 김재근을 국군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정된 <국군묘지령> 제2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당시 국무회의록을 보면 김재근의 안장은 <국립묘지령> 이외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보호법 제22조(국군묘지에의 안장) "애국지사의 유골 또는 시체는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군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에서 그 법률적 근거를 지니고 있었다.²⁵⁾

하지만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군묘지의 이념적 순수

23) 국립서울현충원, 『민족의 얼』, p. 196.

24) 국립서울현충원, 『민족의 얼』, pp. 200-201.

25) 국무회의록 1964/03/10, (애국지사의 유해 군묘지 안장의 건).

성을 지키는 데 큰 관심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군묘지에 군인 이외의 유해 또는 유골을 안치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군 묘지 설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가급적 억제하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²⁶⁾ 그런데 정부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추가로 애국지사 두 사람, 즉 한홍근과 김광진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²⁷⁾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는 군인 이외, 다른 사자를 안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했다. 하지만 애국지사 김재근에 이어 추가로 두 사람이 안장됨에 따라 아마도 국군묘지의 이념적 엄격성 혹은 제한성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에 직면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정부는 국군묘지를 국립묘지로 명칭변경하면서 안장자격을 확대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1965년 3월 15일 법제처장의 이름으로 국군묘지를 국립묘지로 변경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법제처가 올린 제안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현재 군 묘지에는 전역(戰役)장병과 특정한 애국지사의 영현만을 안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키어 전역장병 뿐만 아니라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를 전적으로 이곳에 모시고 국립묘지로 하여금 모든 애국총렬의 영령이 잠드는 애국과 헌신 및 충의의 상징지로 하여 (1) 전 국민이 그들의 숭고한 순국정신과 위훈을 높이 찬양하고 영구히 추앙하게 하며 국민의 애국적인 도의심을 극양시키고, (2) 빈번히 내방하는 외국의 귀빈 침 지명인사를 참방하게 하여 외교적 의례적인 국가위신을 높이고 국가적 명분을 세우며, (3)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의 묘소를 빙자한 이권 분규의 사회적 폐단을 제거하고, (4) 허례허식적인 경조 사상에 대한 계몽적인 의례와 의식을 국민에게 시범하기 위하여 이 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²⁸⁾

1965년 3월 30일에 정부는 대통령령 제 2092호를 근거로 국군묘지를 ‘국립묘지’로 바뀌었다. <국립묘지령> 제1조는 “군인·군속으로서 사망한 자와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1965년 3월 23일에 개최된 국무회의는 법제처가

26) <국무회의록>(제21회), 1964년 3월 10일.

27) <국무회의록 1964/6/23 - 국가유공자 군묘지 안장(애국지사 김광진). 그 이전에 애국지사 한홍근이 안장되었는데 관련된 문서를 찾지 못해 정확한 날짜는 파악하지 못했다.

28) 「국무회의 부의안건 제출의뢰」 1965년 3월 15일.

올린 제안 이유서에서 언급된 “국립묘지로 승격시키어”란 표현을 “국립묘지로 개칭하여”로 수정 의결했다.²⁹⁾ 이러한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로서는 그 위상에서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보다 낮은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것에서 다른 것으로의 승격이란 곧 그 이전 것의 위상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군사정부는 국군묘지의 국가적 가치에 대한 관점을 지속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개칭되어 그 법률적 위상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군인들’의 지배적 공간이라는 상징성은 그 곳을 무대로 진행된 ‘현충일’을 통해 명확하게 파악된다. 특정한 국가적 의례와 의례의 무대 사이에는 빈틈없는 논리적 정합성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의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현충일의 의례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그 의례가 열리는 국립묘지의 이념적 성격 또한 명확하게 해독할 수 있게 된다.

IV. 민주화와 ‘또 다른’ 국립묘지의 탄생

한국의 국립묘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립현충원은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계기들을 통과하면서 형성되었다. 그것은 몇몇 예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반공과 군사주의의 공간으로 지속해왔다. 그곳은 한국의 정치이념을 가시화하는 일상의 정치적 무대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한국의 정치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한국 국립묘지에 부여된 이념적 정체성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해보기로 하자.

1992년에 출범한 문민정권의 수장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정치적·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29) <제25회 국무회의록>(안건 227호).

땅에 세웠습니다.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³⁰⁾

"문민 민주주의"를 강조한 대통령은 "신한국" 이란 국민적 메시지도 전달했다.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문화의 삶,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조국입니다. 새로운 문명의 중심에 우뚝 서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나라입니다. 누구나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신한국입니다.³¹⁾

대통령은 그렇게 선언된 문민민주주의와 신한국을 가사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시작은 군부의 탈정치화 조치였다. 김영삼 정부는 1980년대 초반의 쿠데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치화된 군부세력으로 성장한 한파가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군부의 탈정치화와 중립화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라고 판단했다. 군을 개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공군 출신 합참의장 발탁, 국방부 대변인의 문민화, 인사비리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구속, 보안부대의 위상 약화, 군사교육제도의 개혁, 인권 억압에 관련된 군 장교들의 숙청 등과 같은 조치들로 이어졌다.³²⁾

문민민주주의와 신국회의 도래를 알리는 일은 군부개혁에서 그치지 않았다. 역사바로세우기와 민주화의 정통성 찾기를 통해서도 가시화되었다. 1995년 광복절을 기해 일제가 세운 조선총독부건물을 해체하는 일이 역사바로세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³³⁾였다면, 민주화의 정통성 찾기는 4·19 민주화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성화하는 일로 구현되었다.

문민정부는 1993년 10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4·19 묘지의 성역화 공사를 진행했다. 1994년 4월 17일,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묘지 준공식을 개최했으며, 같은 달 18일에는 국무회의 결의를 통해 419 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하기로 결정했다.³⁴⁾

30) 김영삼, 「우리 다 함께 신한국으로」, 대통령 비서실 역음, 『김영삼 대통령 연선물집』, 1994, p. 55.

31) 김영삼, 「우리 다 함께 신한국으로」, p. 55-56.

32) 조현연, 「한국 민주주의와 군부독점의 해체과정 연구」, 『동향과 전망』, 69호, 2007, p. 68.

33) 이에 대해서는 하상복, 「광화문과 정치권력」,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제7장 참조.

34) <조선일보> 1995년 4월 15일.

이어서 문민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역화 과정에도 힘을 기울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5월 13일에 발표한 '광주 민주화운동에 따른 특별담화'를 통해 1980년 5월을 역사적 정통성의 중심으로 올려놓는 작업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5·18광주민중항쟁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하고, 광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 해결과 치유방안을 제시했다. 주요한 방안들은 5·18 기념일 제정, 망월묘역 성역화, 도청 이전 공원화 및 기념탑 건립, 상무대 부지 무상 사용 및 기념공원 조성, 추가보상 및 부상자 치료, 법적 절차에 따른 남은 문제 처리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한 방안 중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위한 묘역 조성 계획이 있었다. 그 동안 희생된 시민들은 망월동 묘역에 안장되어 있었다.

대통령의 담화를 근거로 새로운 묘역 조성공사가 1994년 11월에 시작되어 4년만인 1997년 5월 16일에 완공되었다. 이어서 1995년 12월 21일, 법률 제5029호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소시효의 정지) ①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³⁵⁾

위의 조항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법률을 통해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화를 위한 역사로 그리고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당시의 신군부세력은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른 존재로 규정되었다. 이후 정부는 1997년 5월 9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정해 정부의 공식적 기념행사로 승인했다. 문민정부가 시작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통성 확립 조치들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2002년 1월 26일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광

35)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국가 유공자로 대우했으며, 같은 해 7월 27일에는 <국립5·18묘지규정>(대통령령 제17667호)을 통해 문민정부가 건립한 5·18 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시켰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민주화를 향한 조치의 일환으로 각각 4·19 묘지와 5·18 묘지를 국립묘지로 전환해냈다. 그러한 사실이 한국 국립묘지의 역사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건립된 이후 단 한 번도 그 절대적 위상이 흔들리지 않았던 동작동 국립묘지의 이념적 위상이 상대화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지나면서 한국에는 '국립묘지'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묘지가 하나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동작동 국립묘지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 조성된 것이다. 문민정부가 국립묘지관리소란 명칭을 국립현충원으로 바꾼 것도³⁶⁾ 그러한 문제의식의 소산인 것으로 보인다. 동작동 국립묘지가 국립묘지라는 이름을 더 이상 독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립 4·19 묘지와 국립 5·18 민주묘지는 국립현충원과는 근본적으로 이념적 상이성을 띠고 있다. 동작동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이 이념적 차원에서 보수성과 반공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4·19 묘지와 5·18 묘지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재한 공간이다. 그 점은 두 묘지에 관한 규정에서 명확하게 관찰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4·19묘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19혁명에 참가하여 민주발전에 공을 세운 자로서 사망한 자를 안장하고 그 위훈을 기림을 목적으로 한다.³⁷⁾

제1조 (목적) 이 영은 광주민주유공자애우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5·18묘지의 설치와 안장대상자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³⁸⁾

특히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4·19 민주묘지보다 한층 더, 국립현충원이 내재하고 있는 군사주의 이념을 부정하는 의미가 있다는 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 안장된 사람들은 신군부의 정치적 의지에 정면으로 맞선 존재들이었기 때

36)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문민정부가 수행한 또 하나의 일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1996년 5월 21일, 동작동국립묘지의 명칭을 국립묘지관리소에서 '국립현충원'으로 개명한 일이다. <국방일보> 1996년 5월 22일, 1996년 6월 2일.

37) <국립 4·19묘지 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8) <국립5·18묘지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돌아볼 때, 민주주의의 형성과 군부통치의 해체는 상호 불가분한 연관성을 지닌 과제였으며, 그런 면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는 한국현대사를 관통하는 정치적 과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설득적으로 말해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표상된다. 국립 5·18 민주묘지가 민주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조형물과 명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 안장된 국립 5·18 민주묘지의 탄생은 서울-대전의 국립현충원과 그 이념적 지평에서 극적인 대비를 만들어내는 ‘다른’ 국립묘지가 조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한국사회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국립묘지 제도가 공존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국가주의와 군사주의가 각인되어 있는 국립묘지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와 반(反)군사주의로 상징되는 국립묘지 제도다.

국립 5·18 민주묘지의 등장은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또는 의심할 수 없었던, 국립현충원으로 상징되는 국립묘지 제도와 애국적 희생의 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제기해주고 있다. 국립 5·18 민주묘지는 그 명칭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국립묘지 안장 및 애국적 희생의 범주와는 무관하게 존재해 온, 민주화의 가치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역시 국민적 존경과 기억의 존재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곳이다. 이로써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 온 국립묘지와 애국자에 대한 인식에 실질적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국립묘지를 둘러싼 이념적 균열은 김대중 대통령의 안장을 둘러싼 갈등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V. 전직 대통령의 장례와 국립묘지의 분열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의 사망으로 한국 사회는 죽음이 정치와 교차하고 사자가 이념과 조우하는 상징의 공간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의 사망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든 직접적 동인은 그의 장례형식과 안장지에 관한 이견과 논란이었다. 장례형식에서 김 전 대통령의 유족은 국장을 희망했다. 한국 현대사를 돌아켜볼 때, 국장은 극히 예외적이었다. 현

직을 수행하다 사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을 제외하면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민장 또는 가족장의 형태로 영면했다. 그렇게 볼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은 정부 입장에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민감한 논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국장 대신 국민장을 선호했다. 전직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말했다. “국장은 보통 현직 대통령의 장례를 치를 때 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경우는 국민장이 선례다.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³⁹⁾ 하지만 그러한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소망과 역사적 관례 사이에서 고민을 반복했다. 언론이 ‘국장과 국민장의 절충안’을 제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결국 다음날 행정안전부는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장의 온전한 혹은 엄격한 모양새를 따르지 않았다. 9일 동안 치르는 국장의 법적 원칙과는 달리 대통령의 장례를 6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족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이후에 초래될 지도 모를 사회적 반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려 한 것처럼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했다.

정부는 제도적 원칙의 현실적 변용을 통해 유족과의 타협을 찾아나갔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의 시신을 어디에 안장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유족들이 시신의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그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의 ‘국가원수묘역’이 공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매장 후보지에서 일단 제외하고자 했다. 이미 국립서울현충원의 국가원수묘역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부부 묘지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들의 묘역은 당시의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서 각각 1600여 평방미터와 3600평방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규모였다.⁴⁰⁾ 그러한 공간적 제약에서라면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묘역 면적인 16m × 16.5m(약80평)를 조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로서는 이후에 안장될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하자면 전임 대통령들이 전례를 들어 국립서울현충원에의 안장을 요구할 경

39) <동아일보> 2009/08/19.

40) <중앙일보> 2010/08/20.

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통령의 시신을 아직까지 공간적 여유가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의 국가원수묘역이나 그의 정치적 상징성이 드러날 수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런데 결국 정부는 유족의 뜻을 받아들여 김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매장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여유 공간이 없는 국가원수묘역이 아니라 묘역에 근접하고 있는 터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8월 20일 정진태 서울국립현충원장은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현 국가유공자 묘역 하단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⁴¹⁾ 정부는 장례행식과 매장지를 결정하는 일에서 유족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으로써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공식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태의 끝은 아니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른다는 결정에 더해 시신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의 이념과 정책 노선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불만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적과 국가정책, 특히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정책에 대해 어떠한 관용적 태도도 보이지 않은 한국의 보수우익세력은 ‘국민행동본부’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국장 취소와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들의 시위는 대통령의 사망 다음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이 발표한 성명서 일부를 읽어보자.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은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끊임없이 폄훼해 온 인물을 국장으로 예우할 순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해방 직후 좌익 활동가였고, 일본에서 망명 중이던 1973년에는 반국가단체 한민통을 만들어 의장에 취임했으며, 이 일로 사형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감형되고 사면되긴 하였지만 한민통 판결은 이후 재심대상이 된 적도 없다. 김 전대통령은 재임 중 反헌법적 6.15선언에 합의해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했다. 이로 인해 남한 내 좌익들은 반역활동의 자유를 얻게 됐고,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맹목적 대북지원에 앞장서 온 김 전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기도 하다.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반역자로 기억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애도를 강제하는 국장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며 전체주의적 의식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김대중 지지자들과 북한정권 추종자들을 위하여 대한

41) 장시행, 「김대중 대통령 서거: 정치, 왜 서울 현충원으로 정했나」, 〈조선일보〉, 2009/08/20.

민국의 명예와 권위를 팔아먹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포기해 버렸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해 온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6일은 물론 하루도 조기를 걸 수 없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김 전대통령 국장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⁴²⁾

성명서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은 “애국시민”과 정치적 대척점에 자리하고 있다. 애국의 본질을 반공과 반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이념적 눈으로 볼 때 대통령은 나라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를만한 애국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의 국장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 단지 가시적인 이념적 이유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민장은 총 13회가 치러졌지만 국장으로 안장된 인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단히 상징적인 차원에 속하는 것인데,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 이념, 정치적 경력에서 서로 섞일 수 없는 뚜렷한 보색 대비를 이루는 두 지도자라는 배경에 비추어볼 때, 보수우익단체의 입장에서는 김 전대통령이 국장으로 안장됨으로써 박 전대통령과 동등한 국민적 존중 혹은 영광을 받을 것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상상된다. 우리가 곧 이야기하게 될 보수우익단체의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반대운동 또한 그러한 상징적 모티브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의 시신은 동작동에 안장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국가적 지위를 가진 존재임과 동시에, 국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이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법률적 자격을 갖추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9079호)은 국립묘지에의 안장자격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 전 대통령은 그에 해당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 결정된 8월 20일 국민행동본부, 라이트코리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보수우익단체들은 정치적 연합을 구성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및 현충원 안치 반대 기자회견’ 개최를 시작으로 매우 격렬한 시위를 전개해 나갔다.⁴³⁾ ‘김대중’, ‘국장’이라고 적힌 종이를

42) 「국장(國葬) 거부운동을 선언한다」,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2009/08/19.

43) 「김대중은 국민장도 과분한 민족반역자」, 〈오마이뉴스〉 2009/08/20.

구기거나 찢어서 땅바닥에 버리는 상징적 퍼포먼스로 문을 연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좌익 활동가인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반역자로 기억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애도를 강제하는 국장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며 전체주의적 의식일 뿐”이라며 “6일은 물론 하루도 조기를 걸 수 없다”는 독설을 퍼부었다.⁴⁴⁾

보수우익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더 격렬해지는 국면 속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해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시위는 극단적인 상징폭력을 동반하면서 계속되었다. 2009년 9월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취소 및 국립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온 보수우익단체들 회원 100여명이 동작동 국립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친북세력의 알박기”로 규정하면서 시신을 망월동 묘지로 옮기는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또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온 국민이 빨갱이 타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⁵⁾ 그들은 ‘김대중 묘지 이장 촉구 서명운동’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비 제막식 우상화 규탄 대회’를 거쳐,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분노와 적대감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적 맥락에서 2009년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송 청구문의 일부를 읽어낼 수 있다. “[……] 정부가 김대중 유족에게 국민장을 권유했지만 유족이 국장을 고집하자 유족과 합의하여 국장으로 바꾼 것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장의 대상은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인물에 한한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 언론과의 전쟁을 통한 언론탄압,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적법한 5억불 송금,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운 이적행위로 안보위기 자초,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게 한 죄 등을 보더라도 그는 결코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인물로 국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충원 안치도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인물에 한하는데 전직 대통령에 한하여 무조건 안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충원 안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족장과 국민장을 치른 다른 전직 대통령과

44) 「우익단체 “DJ 국장 있을 수 없는 일”」, 〈노컷뉴스〉 2009/06/20.

45) 백승목, 「DJ가 나가야지 우리가 왜 나가?」, 〈독립신문〉, 2009/09/11.

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대부분의 국민이 조기개양을 하지 아니한 것은 국장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⁴⁶⁾

해가 지나서도 김대중 전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에 대한 정치적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2010년 2월 2일 오전, 김 전 대통령 묘역 뒤편 언덕의 잔디가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되었다. 화재 현장 부근에서 김 전 대통령을 친공산주의자로 표현한 한 보수단체 명의의 전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⁴⁷⁾로 미루어보아, 화재는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보수우익단체의 의도된 행위로 해석 가능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안장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현재 한국의 국립묘지가 얼마나 심각한 이념적 분열과 대립을 겪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보수우익세력들은 1956년에 건립된 반공주의와 군사주의의 공간인 국립현충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존재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국립 5·18 민주묘지와 등치시키고자 했다.

VI. 국립묘지의 정치적 화해를 향해

한국은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립묘지를 건립했다. 국립현충원으로 명명된 그 공간은 본질적으로 반공주의와 군사주의를 응축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국립묘지 = 반공 군사주의’라는 등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민주화과정 속에서 두 개의 새로운 국립묘지가 탄생하면서 국립묘지에 관한 기존의 이념적 등식이 깨어지기 시작했다. 4·19 민주묘지가 국립묘지를 민주주의적 가치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최초의 계기를 제공했다면 국립 5·18 민주묘지는 국립묘지의 이념적 변화와 균열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곳은 군사주의의 부정과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가치를 구현한 공간이며, 국립묘지란 반공주의를 지킨 군인들만이 아니라 군사주의를 거부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존재들도 안장될 수 있는 전당이라는 인식이 조형된 것이다. 결국 한국에는 서로 화

46)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 소송」, 〈프리존〉 종합게시판.

47) 〈경향신문〉, 2010년 2월 2일.

해하기 어려운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두 개의 독립묘지가 공존하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식은 그 두 공간의 대립과 분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독립묘지를 둘러싼 이념적 분열 혹은 대립은 사실상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독립묘지를 놓고 대립하고 갈등한 역사를 알고 있다. 프랑스의 독립묘지 빵떼옹(Pantheon)과 미국의 독립묘지 알링턴(Arlington)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프랑스의 빵떼옹과 미국의 알링턴 독립묘지는 두 나라의 정치적 모순과 이념적 대결을 간직하고 있는 극단의 공간이었다. 전자가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의 투쟁 무대였다면⁴⁸⁾, 후자는 연방주의를 지지하는 북군과 분권적 공화주의를 선호하는 남군간의 정치적 싸움의 공간이었다.⁴⁹⁾ 그들은 수십 년 혹은 근 백 년 동안 타협 없는 정치적 대립을 지속해왔으며, 그 싸움의 종결은 결국 독립묘지를 대립하는 두 세력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화해내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현재 그 곳은 프랑스 혹은 미국의 국민들 대다수가 죽은 자들에 대한 국민적 기억과 추모를 실천하는 통합의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독립묘지에 노정되고 있는 분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한 논의의 시발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반공과 군사주의를 본질로 하는 독립현충원과 민주주의와 반군사주의를 지향하는 독립 5·18 민주묘지를 넘어 새로운 형식의 독립묘지의 건립이라는 문제의식도 가능할 수 있을 듯하다. 김구를 비롯한 애국지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서울 ‘효창원’에 대한 검토도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48) 하상복, 『빵떼옹: 성당에서 프랑스 공화국 묘지로』, 서울: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7.

49) Robert M. Poole, *On Hallowed Ground: The story of Arlington National Cemetery*, New York: Walker Publishing Company, 2009.

참고문헌

- 국립서울현충원, 『민족의 얼』, 제6집, 2007.
-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서울: 선인, 2009.
- 김영삼, 『우리 다 함께 신한국으로』, 대통령 비서실 엮음, 『김영삼 대통령 연선물집』, 1994.
- 노영기, 『여순사건과 육군의 변화』, 『역사학연구』, 22권, 2003.
- 립셋, 세이무어 마틴, 문지영 외 옮김, 『미국 예외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06.
- 백승목, 『DJ가 나가야지 우리가 왜 나가?』, <독립신문>, 2009/09/11.
-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2005.
- 앤더슨, 베네딕트,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출판, 2003(2002).
- 이승만, 『공산분자의 반란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 국회의 내각개조 요구는 유감』, 공보실,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1948.
- 임종명, 『여순사건의 재현과 공간(空間)』, 『한국사학보』, vol. 19, 2005.
- 장시행, 『김대중 대통령 서거: 장지, 왜 서울 현충원으로 정했나』, <조선일보>, 2009/08/20.
- 조현연, 『한국 민주주의와 군부독점의 해체과정 연구』, 『동향과 전망』, 69호, 2007.
- 체롬바벨, 예비아타, 『달력과 역사: 국가 기억의 사회적 조직화에 관한 비교 연구』, 제프리 K. 올릭 엮음, 『국가와 기억: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본 집단기억의 연속갈등변화』, 서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06.
- 피어슨, 크리스토퍼, 박형산·이택면 옮김, 『근대국가의 이해』, 서울: 일신사, 1997.
- 하상복, 『빵때움: 성당에서 프랑스 공화국 모지로』, 서울: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7.
- 하상복, 『광화문과 정치권력』,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 Edelman, M, Constructing the Political Spectacl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Marin, Louis, Politiques de la Repr sentation, Paris: Editions KIME, 2005.
- Poole, Robert M, On Hollowed Ground: The story of Arlington National Cemetery, New York: Walker Publishing Company, 2009.
- <고종실록>, 1900년 10월 27일, 11월 11일.
- <국립 4·19묘지 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5·18묘지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무회의 부의안건 제출의뢰〉, 1965년 3월 15일.
 〈제25회 국무회의록〉(안건 227호).
 〈국무회의록〉 1964/03/10(애국지사의 유해 군묘지 안장의 건).
 〈국무회의록〉(제21회), 1964년 3월 10일.
 〈국무회의록 1964/6/23 - 국가유공자 군묘지 안장(애국지사 김광진).
 〈국군묘지 설치에 관한 건의서〉, 1952년 1월 9일.
 〈군묘지령〉 1956년 4월 13일.

「김대중은 국민장도 과분한 민족반역자」, 〈오마이뉴스〉 2009/08/20.
 「우익단체 “DJ 국장 있을 수 없는 일”」, 〈노컷뉴스〉 2009/06/20.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 소송」, 〈프리존〉 종합게시판.
 「국장(國葬) 거부운동을 선언한다」,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2009/08/19.

〈경향신문〉, 2010년 2월 2일.
 〈동아일보〉 2009/08/19.
 〈중앙일보〉 2010/08/20.
 〈국방일보〉 1996년 5월 22일, 1996년 6월 2일.
 〈조선일보〉 1995년 4월 15일.
 〈주간불교〉, 1997년 6월 3일.
 〈평화일보〉 1948년 11월 5일.
 National Personification",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personification,

국립5·18민주묘지 비문 읽기 : 비극적 역사 인식과 수용의 문제들¹⁾

작성자 : 김 강 (호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여기 꽃다운 젊은 나이로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
불의에 항거하던 중
행방불명으로 슬픔에 젖은 가족의 여망에 따라
후세에 업적을 기리고 저 기념비를 세우다.
- 행방불명자 묘역, <묘지번호 10-46> 김성기 비문-

I. 들어가며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소설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에서 내레이터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핼(Pip)은 책의 서두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는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며, 그들의 모습을 한 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묘비에 새겨진 글씨의 모양을 통해서 자신의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첫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1) 이 논문의 일부는 2011년 11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미국대중문화학회 중부대서양지역(Mid-Atlantic Popular/American Culture Association) 2011년도 연례학술회의 (Death in American Culture)분과 제1차 세션에서 "Decoding Epitaphs at the National Cemetery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in Gwangju, Korea: Microscopic Approaches to Modern Korean History of Democracy and Politics" 라는 제하에 발표되었다. 토론자들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과 동정을 보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치유하려는 정부와 시민의 노력에 공감하고 격려를 표하였다.

아버지의 성이 피립(Pirrip)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비문과 누나의 말에 근거를 둔 것이다. — 누나는 대장장이 조 가저리와 결혼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본 적도 없고, 그들과 비슷한 사람조차도 본적이 없으므로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는 사진이 나오기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에), 나는 엉뚱하게도 부모님의 비문을 읽고 그들의 모습을 마음대로 상상하였다. 아버지 비문의 글자모양을 보고 나는 아버지가 네모난 얼굴에 건장한 체구를 가졌으며, 피부는 어두운 편이고 머리카락은 검은 곱슬머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상기한 자의 부인 조지아나 여기에 함께 묻히다.” 라는 비문의 말투와 글씨체를 보고서 나는 어머니가 주근깨가 있으며 몸이 매우 병약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어린애다운 결론을 내렸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바로 옆에는, 한 줄로 잘 정돈된 다섯 개의 조그마한 마름모꼴의 비석들이 서있었다. 이것들은 내 다섯 동생들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생들은 인류의 생존경쟁에서 너무나 일찍 생명을 포기했던 것이다. 이 조그만 비석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이 별 볼일 없이 잇달아 태어났으며, 나 또한 그러한 처지에서 결코 벗어나 본적이 없었으리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 . . 이 모든 음산한 환경이 점점 무서워져서 온 몸을 쪼그리고 떨면서 울상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굵은체는 필자강조) (Dickens 25-26)

여기서 디킨스가 의도한 바는 주인공 핍의 신분 그리고 그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함께 장차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기발한 상상력에 대해서 독자에게 미리 알려주려는 것이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구절은 비석과 비문, 그리고 묘지 안의 일체의 장식물을 포함하는 “묘지 표시물”(grave marker)²⁾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들 역시 핍과 같은 방식으로 어느 비석의 형태와 비문의 내용으로부터 고인의 인물됨과 삶의 행적을 유추하려 하며, 또한 가문의 크기를 헤아리고 그 삶의 가치를 감히 평가하려들기 때문이다.

위 구절에서 핍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자신의 처지와 장래를 본인과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동생들의 마름모꼴 비석에서 도출해낸다. 생전에 보지도 못한 아버지의 얼굴을 비석에 새겨진 글씨체로부터 형상화하고, 어머니의 병약한 모습은 글씨체와 더불어 비문의 어조에서 그려낸다. 그는 비

2) “묘지 표시물”이란 용어는 영어에서 “grave marker”란 표현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묘지에 부착되는 일체의 장식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위해 영어에서 빌려 쓴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석을 포함하여 상석, 석동, 석수(석양) 등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 고인의 묘를 다른 이의 그것들로부터 구별하고자 시작했던 단순한 형태의 무덤 표시물이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의 사회적 신분과 공적을 드러내는 전사적 장식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였다. 참고로, 묘비(tombstone) 혹은 비석(headstone)에 새겨진 글들을 의미하는 비석문, 묘비명, 묘비글, 비문 등의 용어는 영어에서는 보통 epitaph, gravestone inscriptions 등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비문은 결국 묘지 표시물을 구성하는 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문을 통하여 고인의 모습과 성격을 체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영교와 이미지화를 시도한 것이다. 비석과 비문은 그에게 바로 죽은 자의 존재론적 실체와 삶의 단면적인 양상을 복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물질적 재료가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무덤의 표시물 혹은 장식품 자체를 하나의 상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사진작가이자 묘지 전문가인 더글러스 카이스터(Douglas Keister)에 따르면, 이 묘지표시물, 즉 죽은 자를 위하여 묘지에 세워 놓은 기념물들은 이제는 세상을 떠나 버린 고인들을 추모 혹은 기억하기 위한 “대표적인 유형물”(the material representatives)이다³⁾(7).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실체를 도저히 규명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미지의 나라”(the undiscovered country)(*Hamlet* 279)에 진입하여 이제는 무형의 존재가 되어버린 고인을 다시 현재적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형상화하여 그 존재감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유일한 대체물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묘지표시물의 의미는 각각의 유형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기능은 동양과 서양 그 어느 곳,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묘지표시물들은 한편으로는 바로 고인의 삶을 단면적으로나마 재구성할 수 있는 근원적인 소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세에 남아있는 가족이 죽은 자의 존재를 영원히 추모하고 기리겠다는 의지의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특히 묘지 앞 비석에 쓰인 비문은 본인이 미리 남겼든지, 아니면 가족이 후일 덧붙였든지 간에 죽은 이가 이승에서 누렸던 삶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써 고인의 “객관화된 인성”(generalized humanity)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라 할 수 있다(Keister 7). 여기서 “객관화된 인성”이란 무덤에 묻혀있는 인물에 대한 해석자의 주관적인 편견이 배제된 평가, 특히 고인의 삶이 외형적, 물질적 가치에 의해 치우치지 않고서 고인의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보편적인 수용과 인정, 그리고 개념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국립5·18민주묘지의 비문들은 매우 특별한 성격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비문과 비교하여 우선적으로 구별 할 수 있는 바는, 현 시대에 있어서도 묘지에 비문쓰기는 여전히 흔치 않은 장례적인 실천이라

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석, 향로석, 혼유석, 석등, 석인(망주석), 석주, 석수 등이 이에 해당하는 유형물이라 할 수 있겠으며, 서양의 경우에는 무덤의 종류는 물론이거니와 무덤에 쓰이는 장식품의 유형함과 규모가 우리의 것과는 사뭇 다양하여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의 망주석에 해당하는 묘지지기동상(stone sentinel)이 있으며, 비석 장식품으로는 꽃(floral), 동물(fauna), 사람의 신체(기도하는 손, 응시하는 눈, 발, 심장 등), 죽음의 상징물(두개골뼈, 해골뼈 등), 그리고 종교적 상징물(십자가, 유대의 육각형 별표, 비둘기 등)을 대표적 예로 들 수가 있다(Keister 40, 68, 100, 126, 140-72 참조).

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바처럼, 조선시대를 대표로 하는 과거에도 양인의 경우에 그것도 나라의 벼슬자리에 올랐었던 인물들만이 대개가 비석에 이두나 한자 혹은 운문으로 비문을 새길 수 있었다. 특히 화장(cremation)이 보편화되고 있는 근래의 상황에서 비문이 쓰인 묘지나 비석을 찾아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묘지가 개인적으로 조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문쓰기가 더 용이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한 예로, 우리 지역에 소재한 가장 대규모의 공설 묘지라 할 수 있는 <영락 공원>에 안장된 무덤의 묘석들에서 묘비명을 찾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한 정도이다. 이는 장례와 묘지 문화에 대한 변화된 문화적 환경의 탓도 있겠지만, 개인적 비문쓰기가 생각처럼 그리 수월한 실천적 행위가 결코 아님을 드러내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반면에, 5·18묘지는 정치적 사건의 치유책으로서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조성된 묘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적이며 주관적인 비문쓰기를 추천하고 그 기록을 집대성하여, 마침내 『당신이 잠든 곳에 우리마음 함께 있네』(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2009)라는 책으로 펴내어 공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은 묘비석의 설치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5·18비문이 다른 비문들에 차별되어 고유한 특수성을 지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⁴⁾. 이 비문 작성이 누군가의 생각과 ‘의도’로 혹은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 같은 공적인 글쓰기가 우리가 혹은 우리의 후세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상황적 이해와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는 데에 크나 큰 지침서이자 사료가 될 것임은 매우 분명하다.

4)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등 모두 8곳이다(<http://www.mpva.go.kr/intro/intro400.asp>). 이 중에서 전체 묘비를 대상으로 비문쓰기가 가능한 곳은 국립5·18민주묘지가 유일하다. 나머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고인들이 국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공적을 인정받아 그들의 넋을 범국가적으로 추모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국립5·18묘지에 안장된 고인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대상이자 객체로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보상하고자 묘역을 국가적 차원으로 승격했지만, 이로 인하여 지역적 인식과 추모의 한계성을 아울러 지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타자의 정치학’이 현실 국내 정치계에 서 뿐만 아니라 추모와 선양의 영역에도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주장처럼, 국립묘지라는 “언표”의 등가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대상의 주체화”를 위한 실질적인 “간국”의 조힘이 필요하다(『지식의 고고학』 119, 126, 33). 한편,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의 경우에는 제한적 비문쓰기가 가능하다. 그 대상은 애국지사과 장군묘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장교와 사병의 묘비에는 비문을 새길 수가 없다. 국립대전현충원이 제공한 「묘비문 작성 안내」에 의하면, 해당자 비석의 전면부 묘지명 아래에 “고인이 일생동안 몸소 실천하신 희생정신, 항일투쟁활동, 애국정신 등을 함축한 내용 또는 고인이 남기신 유언, 교훈적인 말씀” 등을 내용으로 하여 비문을 작성할 수 있다. 후면부에는 안장자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및 공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국립대전현충원, 「묘비문 작성 안내」 팩스문 1-5).

5·18묘지에 새겨져 있는 비문의 내용은 비록 개인적인 것이며, 어느 경우에는 죽음의 원인에 대한 비공식적인 기록과 극단적인 정서를 담고 있지만,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약 10여 일 간에 걸쳐서 이곳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과 직접 관련된 우리 공통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기에 '그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새로이 조명할 수 있는 진실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의 영웅적 삶과 그 역사적 행적을 살펴보기 위해 위인전이나 평전을 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문 읽기를 통하여 '5·18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휘말려 무참히 희생된 개인적 삶의 궤적과 그 행위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5·18항쟁에 대한 거시적이며 통시적인 이해는 법률적으로는 국회의 '5공 청문회'와 정부차원의 조사문서에 의해서,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소설과 영화⁵⁾ 또는 창작 미술과 무대 등을 통하여,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5·18신묘역의 거대한 전시물과 기념관을 통하여 이미 정리되고 담론화 되었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는 5·18묘지의 비문에서 사유되는 '정치적 담론'의 분석을 통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이며 비극적인 사건을 희생자의 유족들이, 폭넓게는 살아남은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고 있는지를 미시사적인 접근법으로 고찰하고자한다. 이를 위해서 동서양에서 비문의 유래와 대표적인 사례들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담론으로서 5·18묘지의 비문들이 지니는 성격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며, 마지막이자 종합적으로 5·18묘지의 비문들을 그 내용에 따라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여 그 성격과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비문들이 표방하는 정치·사회학적 의미, 혹은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5) 5·18을 다루고 있는 소설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심영의 『5·18민주항쟁 소설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과 차원현, 『5·18과 한국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1집(2010.8): 439-67 참조. 연구서에 따르면, 5·18민주항쟁을 형상화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설들은 '5·18'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기억을 통해 그 사건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는 필자가 본 논문에서 5·18묘지의 비문읽기가 현재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피려는 것과 매우 유사한 논리적 근거를 지닌다. 5·18문학/문화연구의 주된 초점이 과거의 현재적 재현(representation)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현재의 재해석(reinterpretation)의 본체에 집중되어있음을 시사한다. 5·18을 다룬 선구적인 문화 산물들은 다음과 같다. 소설은 『일어서는 땅: 5월광주항쟁소설집』(1987.10)과 홍희담의 『깃발』과 영화 〈꽃잎〉의 원작인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가 수록된 5·18 15주년 기념 작품집인 『꽃잎처럼: 5월광주대표소설집』(1995)이, 시는 문병란과 이영진이 펴낸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 5월광주항쟁시선집』(1987)을, 영화는 〈꽃잎〉(1996)과 〈화려한 휴가〉(2007)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5·18민주항쟁의 예술적 재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왕철, 『5·18항쟁의 예술적 형상화』, 『5·18항쟁의 이해』, 나간체·강현아 편, 광주광역시: 전남대출판부, 2002:241-252 참조.

II. 동서양 비문의 유래와 사례

필자는 지난 5월 어느 달 밝은 밤에 광주시립공원묘지 제3묘원 이른바 <5·18 구 묘지>에서 느꼈던 섬뜩한 기분을 한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지금까지도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극히 개인적 차원에서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지금은 국립묘지로 승격한 신 묘역과 이른바 ‘망월동 묘지’ 구 묘역을 순례하던 중이었다. 그날 필자는 감히 깨뜨릴 수 없는 적막함과 무거운 침묵에 잠겨있는 수많은 회중들, 즉 망자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유를 알 수 없는 이장과 세월이 시달린 봉분의 침강으로 인하여 군데군데 비어있는 듯 보였지만, 동일한 형제와 같은 크기의 비석들이 80년 5월 당시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 안치된 수많은 관들의 행렬처럼 줄지어 하늘을 향해 침묵하고 있었다. 이는 마치 필자가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의 경계에 걸쳐있는 수많은 영혼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군락에 둘러 쌓여있다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이들 무덤 하나하나에 박혀있는 차가운 시선의 묘비들이 필자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달빛에 굴절하여 회색빛깔을 띤 비석들이 비수처럼 예리하게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저들의 주인들이 도대체 왜 여기에 현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무거운 성찰의 어휘들은 한편의 시가 되어 비석에 고통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시인 임동확은 『그때 그 자리 그 사람들: 5·18 민중항쟁 사적지 답사기』에서 <5·18 구 묘지>를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거룩한 땅”(315)이라 부르고 있다. 이곳이 “5·18항쟁의 상징적 장소”(322)이자 신 묘지와 함께 “신군부의 학살 만행을 영원히 기억시키는 기억 장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 묘지의 거대한 조형물로도 가시화할 수 없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써 가는 거대한 역사책”(324)이기 때문이다.

여기 ‘망월동 묘지’에서 안장자의 신분은 세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하나는 민족민주열사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5·18열사들이며, 나머지 하나는 “1980년 당시 계엄군과 싸우다 행방불명되신 65인중 29인의 영정이 모셔져있는” 행방불명자의 묘역이다. 전자는 국내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양한 성격의 민주화 활동을 벌이다 희생당했거나 대의를 위해 스스로의 생명을 바친 인물들이다. 모두 52기의 묘지가 안치되어 있다. 후자 그룹인 5·18열사들과 행방불명자의 묘소는 지금은 전부 신묘역으로 이장되었다. 이중에서 한 민족민주열사의 비문을 잠시 되새겨본다.

그대 가는가 / 어딜 가는가 / 그대 등 뒤에 / 내리 깔린 쇠사슬 / 어디 가는가 /
 그대 끌려간 / 그 자리위에 / 4천만 민중의 / 웃음을 드리우자. (이한열 열사 유고시)

표지번호 55번 “+ 성도 열사 전주이한열 지 묘”에 새겨진 글이다. 이 비문을 문
 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일제의 압박에서도 해방을 염원한 이육사의 시처럼 다분히 미
 래 지향적 투쟁의 다짐과 의지를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무명열사의 묘”라고 똑같은 이름이 붙어있는 표지번호 97, 98, 99번의
 비문을 비교해보자.

五一八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하여
 군부독재의 총칼과 맞서 싸우다가 산화하십시오

이 비석들의 옆면에는 모두가 마찬가지로 다음의 글이 새겨져있다. “광주여 무등
 산이여 민주의 활화산이여.” 이 구절은 유족이 직접 쓴 글이라기보다는 김준태 시인
 (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5·18 직후 군사계엄 시절에 쓴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
 의 십자가여!>라는 제목의 시에서 일부를 빌려와 다른 표현과 합치어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⁶⁾ 비문의 내용은 이한열 열사의 비문에 비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그 어조는 비분강개의 심정이다.

표지번호 92번 “탐진 최공 강식의 묘 (대건 안드레아)”의 비문에는 다음처럼 쓰여
 있다.

6) ‘5·18광주항쟁’을 처음으로 형상화한 시로서 1980년 6월 2일자 당시 전남매일신문 1면에 일부가 게재되었다. 이 시
 는 당시 전남매일신문사 편집국 부국장이었던 문순태가 전화로 시인에게 요청한 것이다. 마감시간을 두 시간이나 넘긴
 후 시인이 가져온 것은 200행이 넘는 장시였다. 이 시는 “검열에서 156행이 삭제당하고” 겨우 “74행”만이 인쇄되
 었다. 삭제당하지 않은 김준태의 시 원문은 그날 밤 복사되어 시내로 전국으로 해외로 퍼지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신문사는 2개월 뒤 폐간되었다(『일어서는 땅』 15). 시는 모두 13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아 광주여 무등산
 이여”라는 웅변적 연설로 시작한다. 이 구절은 시 전체에 모두 3차례에 걸쳐 반복된다. 이후 ‘광주와 무등산’은 이
 지역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표’로서 ‘시민민주화운동’이라는 ‘기의’와 더불어 마치 동의어처럼 우리사회 전반
 에 그 표상적 연표를 확장하게 되었다. 이 시에서 광주는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무등산이라는 “골고다 언
 덕”을 십처두성이의 몸으로 넘어가는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이라는 존재의 궁극적 최후에 이르게 된 “하느님의 아
 들” 예수에 비유된다. 시인은 예수가 세상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느님께 바쳤듯이 그리고 “부활”
 하여 영원한 진리가 되었듯이, 이곳 광주 역시 국가대의를 위해 희생당했지만 “우리의 빛”으로, “영원한 깃발”로,
 “꿈”으로, “청춘의 도시”로 거듭 태어나 영생을 하게 될 것임을 엄숙하게 노래한다. 광주의 비극적 현실에 대하여
 참담한 격정을 토로하면서도 잠엄함과 이성적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시에서 시인은 이미 광주가 5·18과 관련하여
 장차 이 나라의 민주화 성지이자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도시가 될 운명을 타고났음을 선지자적인 논지와 어조
 로 선포한다. (시 전문은 <http://blog.daum.net/aeorazy/70>, 참조).

八十년 五一八 광주민주항쟁에 참여하여
五月二十一日 시청 앞에서 화염방사기에 의해 부상.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함께 고인이 희생된 원인을 매우 노골적으로 담고 있는 비문 중의 하나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5·18관련 희생자들의 비문이 여타의 전통적인 다른 비문들과 크게 다른 차이는 바로 최강식의 비문처럼 역사적 사건에 대해 사실적이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보다 극적으로 해석하자면, 피히테의 <독일국민에게 고함>⁷⁾이라는 강연처럼, 유족들은 고인의 당면한 희생에 대해, 그 진실한 배경에 대해서 “한국국민에게 고함”치듯이 당당하게 알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는 또한 단순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로 사건의 실체를 보도하려는 유족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공개성명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들의 비문은 개인적 삶의 발자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상징적 언표에서 더욱 나아가 ‘역사적 경험’을 현시적으로 조명해내는 ‘기억장치’로 승화된다. 바로 비문의 ‘정치적 담론’이 형성되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다양한 내용과 성격을 지니게 된 비문 혹은 묘비명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 먼저 비문을 담고 있는 본체에 해당하는 비석의 정의와 기원부터 살펴보자. 비석은 비, 빗돌, 석비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이력이나 업적 등을 간략하게 새기어 후대에 알리기 위해 무덤 앞에 세운 돌을 일컫는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고대에 일종의 토테미즘으로서 부족이나 국가의 소망과 기원을 담은 돌 비석이나 목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비석의 기원은 인류학적으로 그 시기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개 인류가 생존했던 고대로부터 통치자나 전사 등 신분이 높은 인물의 죽음을 맞이하여 봉분이나 석분을 만들고 이를 ‘표시’하고 ‘기억’하기 위해 만들기 시작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우리나라의 비석문화는 중국의 장례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7) 1806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한 프로이센이 위기에 처하자 철학자 J. G. 피히테(Fichte)가 적군 프랑스의 점령하에 있는 베를린 학사원 강당에서 행했던 우국적인 대강연의 제목이다. 1807년 12월 3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4월 20일까지 14회에 걸쳐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행해졌다. 이 강연을 통해 피히테는 독일 재건의 길은 무엇보다도 국민정신의 진작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는 독일 국민의 분기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 (피히테, 황문수 역, 『독일국민에게 고함』, 서울: 범우사, 1994 참조).

8) 강운구는 『중국문화탐방』에서 아시아 몇몇 나라의 매우 흥미로운 장례 문화에 대해 소개한다. 현재 중국의 장례는 거의 화장제도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등소평도 화장하여 전국에 재를 뿌렸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중국에는 옛날

일설에 의하면, 옛날 중국에서 제례 때 희생으로 바칠 동물을 매어 두던 돌 말뚝을 묘 둘레에 세우면서부터 비롯되었다고도 하며, 이보다 훨씬 후대의 일이지만 장례식 때 귀인의 관을 매달아 무덤 내에 공손히 내려놓기 위하여 묘지 주변 사방에 기둥을 세우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각석’이라 하다가 전한 말기나 후한 초에 이르러 비석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석이 언제부터 세워졌는지 확실치가 않다.⁹⁾ 시기 측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미 서기 85년에 한사군 중의 하나인 낙랑군(지금의 평안남도 용강군)에 백성의 안녕과 풍운을 기원하는 비가 세워진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실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행웅은 비석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의 기원에 대해서는 장례의식에서 쓰던 풍비(豐碑), 해시계의 일종인 일영비(日影碑), 역성입국(易姓立國: 기존의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국가를 세운 것)한 제왕이 천지의 신들에게 알리던 의식인 봉선(封禪), 시신을 묻은 곳을 표시하는 갈(碣) 등의 설이 있으나,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은 풍비 유래설이다. 즉, 시신의 하관을 위해 세운 기둥에 죽은 사람의 약력 등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비에 대한 신격화도 이루어졌으리라는 추정이다. 당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일정한 양식이 정착되고, 비를 세우는 풍습도 널리 퍼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비는 85년 세워진 <점제현신사비>이다. 삼국시대 고구려는 만주 집안현에 광개토대왕비를 세웠고, 신라는 창녕에 진흥왕척경비, 북한산·황초령·마운령에 진흥왕순수비를 세웠다. 백제의 비로 대표적인 것은 부여의 사택지적비이다. 통일신라시대는 태종무열왕릉비가 대표적이며, 그 밖에 승려의 탑비가 많다. 고려는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이어받아 역시 승려의 탑비가 대부분이다. 조선시대는 백두산정계비

무덤을 제외하고는 무덤을 쓰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힘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묘처럼 봉분을 만들어 개인 묘지를 쓰고 있으며, 종풍은 땅이 좁기에 묘지 값이 아파트 값보다 더 비싸고, 대만 역시 비슷한 이유 때문에 묘지를 일반인들이 사는 것 같이 만들어 놓고서 묘지 문에 편지함까지 달아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반면에 티베트는 신국으로서 육신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다. 윤회사상을 중시하여 현생보다는 내생을, 육신보다는 정신을 더 중히 여긴다. 정신이 떠난 육신은 쓸데없는 고깃덩이에 불과하므로 시신을 독수리나 까마귀에게 보시하는 천장(天葬)이 그들만의 장례의식이라 한다. 독수리가 먹기 편하도록 시신에 칼집까지 내놓는다고 하니 그 성품함이 충격적이지만, 육신을 자연에 다시 자유롭게 돌려보내는 정신은 죽은 후에도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하여 육신을 그대로 간직하려는 우리의 우직한 장례 문화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56-57).

- 9) 우리나라의 비석이나 비문의 역사에 대한 문헌을 찾는 것은 그리 녹록지가 않은 작업이다. 박삼진의 『비석이야기』(예진, 2001)는 그 제목과는 달리 밀양 박씨 시문진사공파의 비석건립 과정에 대한 책이며, 한국고문서학회가 엮은 『조선시대 생활사』(역사비평사, 1998)와 『조선시대 생활사 2』(2000)는 상례와 제례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비와 비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한국역사연구회가 펴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청년사, 2005) 1, 2권도 관련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가까운 예로, 중국어권에서만 1,000만부 이상이 판매되어 ‘초베스트셀러로 인정받은 고품격 중국문화답사기’의 저자인 ‘현대의 루쉰’ 위치우위의 『중국문화기행』(미래인, 2007) 1, 2권에서도 묘비와 비문의 유래에 관한 부분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사명산>에 대한 장에서 묘비쓰기에 대한 경험을 들려주면서 “생명은 또 다른 형식으로 묘비와 묘가 그득한 언덕을 점령했다.”(166)고 말하지만 이는 여행기의 일부분이지 비석 문화 전반에 관한 정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예들은 생활사나 역사관련 문헌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겠지만, 이 분야에 대한 정리와 연구가 시급함은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 유명하고, 주로 왕실과 사대부의 능묘비와 신도비가 세워졌으며, 그 밖에 다양한 비가 많이 세워졌다. (「하동정씨-비석과 묘비문」 <http://blog.naver.com/jhwoong1/90103726297>).

그에 따르면, 비석은 또한 내용과 만든 의도에 따라 “묘비, 탑비, 신도비, 사적비(사찰 내력 기록), 송덕비¹⁰⁾” 등으로 분류되며, 생김새와 배치 위치에 따라 비, 갈, 묘비, 비석, 묘갈 등으로 더욱 세분화된다.¹¹⁾ 비석은 기본적으로 내용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새긴 것이므로 새겨진 글 내용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를 형식적으로 장엄하게 꾸미기 위해 여러 장식을 추가하여 “비 받침”이나 “비 머리” 등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하동정씨」 참조). 이러한 형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각 시기의 고유한 분위기를 보여 주므로 미술사의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역사학, 문자학, 서예·풍속사 등의 자료로도 쓰이고 있다. 비문의 내용 역시 당시의 정치이념이나 사회상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역사서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은 매우 당연하다.

비문의 내용은 죽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동양과 서양의 인식이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와 깊이가 서로 다른 만큼 극히 당연한 이치다. 노자는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고 그 둘을 전관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겨 내라”고 말하였다. 장자는 “죽음이란 영원한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이기에 그야말로 진실한 진리라 하였다(심경호 4 재인용).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의 현대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Haruki Murakami)는 그의 소설 『상실의 시대』(*The Norwegian Wood*,

10)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무덤 앞이나 길가에 세운 비를 송덕비라 하였고, 송덕비가 세워진 곳을 ‘비석 거리’라고 불렀다. 그런데 나중에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벼슬아치들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강제로 송덕비를 세우는 경우도 더러 생기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에 분개하여 비석거리를 지날 때마다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발걸음을 하여 화풀이를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일부 지방에서 남자 아이들이 주로 했던 ‘비석치기’ 놀이는 바로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놀이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돌이나 기와 조각을 가지고 노는데 지역에 따라 ‘비사치기’, ‘돌치기’, ‘비석놀이’ 등으로 불려졌다(<http://www.kidsnfm.go.kr/tolk/play/play06.htm>).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5공 관련 한 인사가 국립묘지에 밤사이 서둘러 안장되었다고 한다. 이는 5·18민주묘지의 설립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다. ‘5공 침산’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통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의 가해자이자 객체로 가려진 세력이 사후에라도 주체화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현대판 비석치기가 우려되는 바다.

11) 정행웅은 나아가 비를 글자를 돌에 그대로 새긴 갈(碣)과 일정한 형태로 돌을 다듬어 글자를 새긴 비로 나눈다. 비는 구조상 몸체인 사각기둥 모양의 비신(碑身), 머리 갖 부분인 뿔 없는 용 이무기를 조각한 이수, 비석을 기반으로 받치는 거북모양의 귀부(龜趺)로 이뤄져있다. 비신의 앞면을 비양(碑陽), 뒷면을 비음(碑陰)이라고 부르며 비양에 새겨진 글을 명(銘), 비음에 새겨진 글을 음기(陰記)라고 한다. 비의 종류로는 능에 세우는 능비, 묘에 세우는 묘비, 공역을 기리는 송덕비, 기념비 등이 있다. 묘비는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을 총칭하여 묘비 또는 비문이라고도 하며 비명(碑銘)에는 죽은 사람의 성명, 본관, 행적, 경력 등의 사실을 새긴다. 비석은 묘비무덤의 상석 우측에 세우는 것으로 묘표(墓表)라고도 한다. 묘갈(墓碣)은 무덤 앞에 세우는 머리 부분이 둥그스름한 작은 비석을 말한다. 신도비(神道碑) 임 금이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의 무덤 앞이나 길목에 세워 죽은 사람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을 말한다(「하동정씨」 참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석은 묘표가 아닌 바로 묘비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도 이의 의미로 사용한다.

1989)에서 “죽음은 삶의 대극으로서가 아니라 그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71). 소설의 주인공 ‘나’는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후 죽음이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그러한 사실은 제아무리 노력한다하더라도 망각할 수가 없는 점을 깨닫는다. 우리에게 죽음은 보통 극복하기 어려운 두려운 존재로 제시된다.

반면에 르네상스 극작가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는 햄릿(Hamlet)의 독백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를 통해 헤겔(Hegel)식 변증법적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죽음이 자의적으로 비굴한 삶은 종결하려는 우리의 결단을 망설이게 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사는 것이라며 죽음을 조건적으로 수용한다(279-80). 맥베스(Macbeth)는 “내일, 그리고 내일이 오면”(Tomorrow, Tomorrow, Tomorrow)이라고 시작하는 독백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을 비춰주며, 인생은 단명의 “가련한 배우”(poor player)가 “아무런 의미 없이”(signifying nothing) 지껄여대는 이야기요, 그저 “걸어가는 그림자”(walking shadow)에 불과하다고 푸념한다(264). 그에게 죽음은 그저 초라한 인간이 당면해야 할 운명인 것이다. 숙명론자로서 셰익스피어의 면모를 읽을 수는 구절이다.

한편, 17세기 영국의 형이상학과 시인 존 단(John Donne)은 그의 종교시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Death Be Not Proud)에서 죽음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육체의 소멸이라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신의 섭리로서 당당하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은 “유골의 안식과 혼의 해방”(Rest of their bones, and soul's delivery)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시인은 “죽음이여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도 결국은 죽을 것이리니”(And death shall be no more. Death thou shalt die)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지를 매듭짓는다(이창준 126-27).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시인 리처드 크래쇼(Richard Crashaw)는 <부부의 비문>(An Epitaph upon Husband and Wife)이라는 시에서 죽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역설적으로 비유한다. 죽음은 이미 결혼한 부부를 다시 한번 결혼시키는 존재로 이제 운명은 두 사람을 더 이상 갈라놓을 수 없으며, “무덤은 그들의 두 번째 혼인침대”(This grave's the second marriage-bed)라고 긍정한다(박기열 216-17).

죽음에 대한 동서양의 이해는 묘지의 위치에 있어서도 상이하다. 우리의 경우 전통적으로 무덤을 산속에 마련하는 반면에, 서양은 대개 마을이나 도시 한 가운데 혹은 교회 주변에 묘지를 마련한다. 또한 우리의 묘지는 다분히 개인적인 장소인 반면에, 서양의 것은 공동체적이며 집단적이다. 따라서 공동묘지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동하더라도 망자의 곁에 빈번히 다가서기 어렵고 서양은 그에 비하면 접근이 용이하다. 우리는 특히 조선시대의 유교이념을 통하여 죽음과 삶을 대조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지만, 서양의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하여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가르쳤다. 죽음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동서양간에 실존적 무거움과 가벼움으로 크게 엇갈리는 단층이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죽음이 가져올 존재의 무화를 극복하는 그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의 묘표(自表)와 묘지(自誌)를 적고 자기를 애도하는 만시(挽詩)를 썼다. 후한 때부터는 생전에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만드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무덤을 수장이라 하고, 그 무덤에 묻을 묘지명을 살아 있을 때 작성한 것을 생지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고려 때부터 있었다고 전해진다. 묘표에 운문이 첨가되면 “묘비명”, 묘지에 운문이 첨가되면 “묘지명”이라 했으며, 그러한 기록을 통틀어 편의상 “자찬묘지명”이나 “자찬묘지”라고 불렀다(심경호 5).

한문고전에는 자신의 무덤에 묻거나 무덤 앞에 세울 비명을 미리 지은 것들이 상당수 전한다. 이를 “자명(自銘)”(596)이라 하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죽음에 대처하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의 본래성을 추구할 수 있었던 매우 독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이 가져다 줄 통절한 아픔과 슬픔을 가상으로 체험함으로써 죽음의 보편성을 배우고, 고독 속에서 홀로 겪게 될 죽음의 순간에 느낄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 죽음의 절박함을 알았기에 삶속에서 진정한 희열을 맛보고자 했음이다.¹²⁾ 18세기 초 영남 유학을 대표했던 남인학자 이재의 자명을 살펴보자.

12) 5·18묘지의 비문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크게 대조된다. 5·18묘지에 묻힌 고인들은 국가 권력의 예기치 않은 비정상적이며 돌발적인 폭력에 의해 갑작스럽게 삶을 종결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죽음은 가상적인 체험이 아니라 세심과 실제적인 단절이었다. 또한 사망자 대부분의 신분은 이른바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 속해있다. 황석영이 기록하고 전남 사회운동협의회가 펴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풀빛, 1985.5)의 부록에 실린 총212명의 사망자들의 직업 분포도를 살펴보면, 사회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동(직공포함)과 무직”이 46명에 이른다. 여기에 직업 표기가 없는 73명을 고려한다면, 그 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22명의 신원 미확인 사망자들은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직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261-69). 자신들을 향한 총구 앞에서 그들이 느꼈었던 공포를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비문에는 삶을 관조하는 차분한 여유와 죽음을 수용하는 담대함의 기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이다. 거기에는 사실(fact)과 기원(wish)만이 가득 차있을 뿐이다.

세상에 기인이 바다 한 모퉁이에서 났으니
 성은 이, 이름은 재, 자는 유재,
 뜻은 있었으되 재주도 없고 시운도 없으니
 감암에서 말라 아위어감이 참으로 마땅하다.
 빛나도다 내 마음가짐이여 전철을 뒤따르고
 나의 즐거움을 즐기도다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

그는 이 운문을 빌어 자신의 삶을 위로하며 자신의 죽음을 명예롭게 한다.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es)가 『죽음 앞의 인간』에서 소망한대로, “조금은 투박한 묘석”으로 자신의 무덤을 “영예롭게” 만들고, “거기에 그의 덕성과 고향마을의 애도를” 미리 새겨보는 것이다(심경호 589 재인용).

한편, 묘비명과 관련하여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 중의 하나는 바로 연암 박지원일 것이다. 고미숙은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연암을 “묘비명의 달인”(90)이라 평가한다. 연암은 홍대용과 함께 가장 절친한 벗이었던 석치 정철조를 기리는 「제정석치문」(祭鄭石癡文)이라는 글에서 삶과 죽음의 일반적인 통념과 제문의 문법까지 과감하게 전복시키는 필력을 보여준다. 술을 쳐서 제주(祭酒)로 드려도 정말 마시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으니 고인이 정말 죽은 것이냐며 역설적으로 되묻는다. 사실 제문이나 묘비명만큼 판에 박힌 것도 드물다. 마치 주례사처럼 한편의 글을 여러 사람에게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규격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야다. 그렇지만 연암은 그의 “문체적 전복”을 통해 이 장르를 일신하려 한다. 그는 아끼는 지인들을 잃은 슬픔을 그저 형식적인 제문이나 묘비명에 담지 않았다. 생의 기쁨과 동경, 쓰라린 좌절 등을 고스란히 투명하게 그 속내를 드러내도록 한 것이다. 그것들은 “죽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보고서”이자 죽음과 삶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레퀴엠”이었다(92). 하지만 이러한 그에게 정작 묘비명이 없다, 아니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대 보이지 않은 권력의 검열 탓인지, 아니면 그의 높은 학식과 명망에 어울릴만한 글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음인지 역사 속에서도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서양의 금석학(epigraphy) 연구자들은 비문의 역사가 동양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정확한 연대를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비석이 등장했던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특정 집단 사이에 소통되었던 기호로서 표

시를 했을 것이며, 문자 시대이후에는 축약된 문장으로서 고인의 행적이나 죽음의 의미를 기록하였을 것으로 주장한다.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비석에 새겨진 문자를 하나의 “문서”(writing)로 삼아 연구하는 금석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때는 16세기 무렵이다. 금석학의 원리는 문화에 따라 다양하지만 초기 연구는 주로 라틴어 묘비명을 해석하는 데 집중되었다. 1863년 이래 시어도어 몸젠(Theodor Mommsen) 등에 의해 베를린에서 출판되기 시작한 『라틴어묘비문집』(*Corpus Inscriptionum Latinarum*)은 로마 시대 라틴어로 쓰인 비문들에 대한 가장 거대하고 광범위한 수집본으로 인정받고 있다(<http://en.wikipedia.org/wiki/Epigraphy>). 이와 함께 이집트 문자와 그리스어 등 3개의 고대 문자로 쓰인 ‘로제타석’(Rosetta stone)의 존재를 통하여 이미 기원전 상당한 시기로부터 비석과 비문이 유래하였음을 추측할 수가 있다.

서양에서 비문의 기원은 동양에서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바 처럼, 영어에서 비문은 ‘epitaph’로 표기한다. 이 어휘는 “무덤가에서 행해지는 추도사”(a funeral oration over tomb)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ἐπιτάφιος”에서 유래하였다. 위키피디아(Wikipedia) 온라인 사전은 비문을 죽은 자를 추모하기 위해 비석이나 석판에 새겨놓은 짧은 글로서 때로는 이 글이 비유적으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정의한다. 비문의 작성은 간혹 고인이 죽기 전에 직접 내용을 지정해놓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례의 책임자에 의해 완성된다(<http://en.wikipedia.org/wiki/Epitaph>).

대부분의 비문은 가족들이 남긴 간단한 기록으로서 고인의 이력을 담고 있다. 여기에 사랑과 존경에 대한 표현이 추가된다. 어떤 비문들은 제법 야심적이다. 르네상스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에서 저명한 사람들의 묘비명은 상당히 길었으며, 자신들의 가족 계보와 경력, 공적, 그리고 직계 후손들에 대한 내용을 때로는 라틴어로 거창하게 실었다. 서양의 일반적인 비문은 대개 성서나 격언에서 빌려왔다. 글의 형식은 대개 비문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말하는 식으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묘비문은 또한 유족의 삶속에서 고인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가족과 고인의 관계를 명시한다.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혹은 딸이라는 표현이 뒤따른다. 묘석에 새긴 글은 또한 죽은 자의 특징적인 인성에 대하여 말해준다. 때때로 그의 업적과 생애에 대한 이야기도 묘비글로서 새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인류만이 가지는 문화적인 특징으로서 죽은 자에 대한 경배와 추모의 마음을 표하는 독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묘비문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세상에 남아있는 유족들은 성서로부터의 구절을 선택하기도하며, 어떤 다른 이들은 유명 인사들의 말을 인용하기를 선호한다. 어떤 묘비명들은 매우 익살맞다. 이는 고인의 성격이 매우 쾌활하고 희극적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비문의 내용이 고인의 삶을 추모하며 내용이 행복하고 익살맞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살아온 사람일 것이다.

다음 서양의 묘비명에 새겨진 글들을 사례로서 읽어보자(<http://www.buzzle.com/articles/headstone-sayings.html> 발췌). 먼저, 여성의 묘비명이다. 어머니, 부인, 여자형제, 할머니 등을 위한 비문은 대부분 매우 “감상적”(sentimental)인 어조를 지닌다. 가족의 삶속에서 차지하는 그녀들의 중요한 위치를 반영한다.

그녀는 삶의 모든 색깔을 고이 포장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She wrapped all colors of life gave it to us as a Gift
그녀에게 평온한 안식을 내리소서, 우리는 그녀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let her soul rest in peace We shall miss you!

이제 잠드소서, 나의 사랑하는 부인이여 당신의 영혼은 여기 누워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대가 살아있음을 느끼오, 끝없는 사랑을 느끼오, 그대는 영원히 나의 것이오!	Sleep on sweet wife your soul lies, but for me you still breathe, with endless Love, you will be forever mine!
---	--

다음은 남자를 위한 묘비명이다. 아버지, 아들, 남편, 남자선생님, 형제, 할아버지 등의 죽음 또한 가족들의 대단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남자들의 비문은 보통 관용, 인자함, 헌신, 그리고 사회적 성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사랑의 표상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바다처럼 드넓어서 보살핌과 염려의 마음으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아빠, 영원히 그리워 할 것입니다. 그는 항상 나의 곁에 있었습니다.	He was an emblem for love his heart as vast and ocean with full of care and concern We shall miss you Daddy He was beside me
--	--

모든 고난을 함께 하였습니다.	in every thick and thin
그의 죽음은 너무나 커다란	His departure is more than
공백입니다.	a Vacuum
사랑하는 남편이여, 그대를 생각하며	I still breathe for you -
오늘을 지냅니다.	Dear Husband

이어서 유명 인사들의 비문을 살펴보자. 먼저, 셰익스피어의 묘비명이다. 기록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비등하지만, 인간의 궁극적 유한성을 애써 극복하려는 ‘르네상스형 인간’(Renaissance Man)으로서 자신의 불멸의 존재성에 대한 포부가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다.

선한 친구들에게 부디 부탁하네,
 여기 내 무덤에 손을 대지 마시게나,
 내 무덤을 아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내 무덤을 움직이지 자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이니,

Good friend, for Jesus' sake forbear
 To dig the dust enclosed here,
 Blessed be the man that spares these stones
 And cursed be he that moves my bones, (Hyland 14)

아래는 미켈란젤로(Michelangelo)의 비문이다. 삶과 죽음의 창조는 오직 신만이 가능하다. 셰익스피어에 비해 종교적 귀의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의 예술적 천재성의 근원은 바로 신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기쁘게 맞이했다면,
 죽음이 닥치더라도 불쾌히 여기지 않아야한다.
 삶과 죽음은 동일한 창조주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If we have been pleased with life,
 we should not be displeased with death,
 since it comes from the hand of the same master.

그리고 세계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글이다. 자기 존재의 특수성에 대해 자신만만하다.

나는 창조주를 만날 준비를 갖추었다.
나의 창조주께서도 준비가 되셨는지.
나를 만나는 것은 호된 시련이 될 것이다.

I am ready to meet my maker,
Whether my Maker is prepared,
for the great ordeal of meeting me is another matter (Hom 45-46)

다음으로 재기발랄한 해학성이 충만한 비문들을 살펴보자. 이와 같은 회극적 분위기는 우리의 비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을 관조하는 방식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유별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삶을 지나치게 엄숙하고 진지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유교적 가르침과 관습의 영향일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생을 객관적으로 관조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그를 저 멀리 데려간 것은	It was a Cough
바로 천식이었다.	That carried him Off
그런데 그들이 그를 실고 간 것은	It was a Coffin
바로 그의 관이었다.	They Carried him Off

나는 잘 지냈다. 하지만 더 잘 지내길 바랐다. 마침내 여기 눕게 되었다.
I was well, I wish to be better; here I am

여기 잠들어있다네	Here lies
캐시 스텔라	Cathy Stela
나이는 105살	Age 105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다네.	The good die young

여기에	Here lies the body
선데이 존의 유해가 묻히다.	of Sundae John
그는 브레이크 대신에	Stepped on the gas
가속페달을 밟았다네.	Instead of the brake (Green 27-2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양의 묘비명은 우리의 것에 비해 그 내용과 어조가 매우 다양하다. 희극적 재치가 스며들어있으며, 삶에 대한 희망찬 관조와 죽음에 대한 야유, 때로는 풍자성이 깃들여있다. 서양 문화가 죽음에 대해 지니고 있는 매우 다양한 접근과 이해의 시선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또한 서양의 비석에는, 우리의 경우를 포함하여 동양과는 달리, 다양한 그림들과 장식물이 추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자면, 17세기와 18세기 초에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 압박한 죽음과 삶 자체의 불확실성을 암시하는 다양한 상징들이 무덤가에 번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두개골 뼈, 해골 뼈, 관, 낫, 시간을 다 써버린 모래시계와 같은 장식들은 인간의 당면한 종말에 대하여 일깨워준다. 그러나 이후 수 세기에 걸쳐서 그러한 분위기는 조금 약화되기 시작한다. 가혹한 죽음에 대한 상징물은 이제 보다 부드러운 모양의 애도적인 형상들이 - 천이 덮여진 유골 단지, 수양버들, 깎지를 낀 두 손, 그리고 꽃 장식 등 - 그리고 보다 뚜렷하게는, 부활과 영원한 삶을 암시하는 다양한 종류의 시각적 상징물로 - 날개달린 게루빌 천사,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 천국의 문 등 - 대체되기 시작했다(Keister 137, 67, 108). 아울러 이 시기에 어린이들의 묘지에 그들만을 위한 양, 비둘기, 부러진 장미 줄기 등과 같은 특별한 상징적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죽은 자의 직업적, 사회적, 전문적인 관련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대두되었다.¹³⁾

오늘날에는 서구에서도 무덤의 장식물로 죽음을 의미하는 표시들은 거의 사라지고

13) 지난 10월 20일, 42년간의 철권통치 끝에 비참한 최후를 맞은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시신처리에 관한 외신은 묘비 문화와 관련하여 흥미롭다. 기사는 고향인 시르테에서 시민군에게 붙잡혀 사망한 카다피의 시신이 시간과 장소가 비밀에 부쳐진 채 비공개로 매장될 것이라 전한다. 그를 추모한 세력이 정치적으로 집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4월 사살된 오사마 빈 라덴은 무덤조차 없이 아라비아해 북부 해역에 수장됐으며, 2006년 12월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한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고향 땅에 매장되었지만 단체로 묘소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슬람권 장례 문화에 따르면 무슬림이 사망하면 엄을 포함한 간단한 의식을 행한 뒤 24시간 내에 매장한다. 매장 시 망자 머리는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마호메트)의 탄생지인 사우디 메카를 향하도록 한다. 무슬림은 사람이 죽은 뒤에는 그 육체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더운 지방이라 죽은 다음 날로 시신을 묻고, 봉분이나 묘비도 만들지 않는 게 보통이다. (『연합뉴스』, 「카다피 시신, 비공개로 매장할 듯」, (10.21), 『아주경제』, 「독재자 카다피 시신 어떻게 처리되나」, (10.21) 참조.

있다. 내세를 암시하는 미래지향적인 형상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죽음의 이미지들은 그 수가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직업적이며 여가적인 취미를 반영하는 수많은 종류의 아주 개인적이며 회고적인 상징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오늘날 무덤 표시물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가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우리 인류가 죽음에 대해 지녔던 부정적인 견해가 의료 및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전문 지식의 보급, 그리고 종교적 논리의 보편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이분법적인 간극이 과거에 비해 더욱 좁혀졌음을 시사한다.

III. 정치적 담론으로서 5·18비문 읽기

2010년 4월 20일자 광주일보 1면에는 「너무 지쳤다, 이제 용서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창사58주년 특집 발굴보도’ 기사가 실렸다. 5·18때 동생을 죽인 계엄군을 쫓아 ‘30년’에 걸쳐서 복수극을 다짐했던 김무정의 사연을 소개한다. 기사에 따르면, 그의 동생 김형진은 1980년 5월 23일 오후3시경, 광산군 신촌리 동부과출소(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송정치안센터) 앞에서 모 부대 하사관에 의해 검문 중 심한 폭력을 당했고, 3년 뒤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그와 다른 형제들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칼을 품고서 가해자를 추적해왔지만, “가장 고상한 복수가 용서”라는 생각에 마침내 뜻을 접어야만 했다(1-3면 참조).

기사에 의하면, 형은 동생 김형진의 묘비명에 다음과 같이 썼다.

김형진은 1980년 5월 23일 계엄군인 충남 부여 출신 포병학교 소속 신OO 상사가 대검으로 흉복부를 난자해 국군광주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 중 1983년 11월 4일 사망했습니다. 오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서 국민의 군대가 정권 찬탈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국민에게 총칼을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¹⁴⁾ (필자 강조).

14) 비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가 발행한 비문집 『당신이 잠든 곳에 우리 마음 함께 있네』와 대조한 바에 따르면, <묘지번호 2-99> 김형진의 비문은 광주일보의 보도와는 다르게 위 인용문에서 굵은체로 된 부분만이 실려 있다(110). 끔찍한 내용이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된 앞부분이 생략된 것이다. 유족들이 기사

‘사실’과 ‘기원’이 함께 서려 있는 이 비문을 통해 우리는 그날 32세의 고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와 함께 그와 같은 끔찍한 폭력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문 혹은 묘비명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죽은 자의 삶을 매우 함축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준다. 또한 죽음에 대한 유족들의 때로는 망자 자신의 수용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문은 우리의 경우 대개 깊은 산속에 고적하게, 혹은 그저 묘지 앞에 공허하게 놓여있다. 일반적으로 비문의 내용은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궁금해 하지 않으며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그저 나와 무관한 어떤 개인의 살아있을 적 행적에 관한 개인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5·18묘지의 비문은 이들과는 사뭇 다르다. 비록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 기록된 것이지만 비문이 ‘내포’하고 있는 사건의 실체는 한국 현대 정치사의 한 구획을 실제로 차지하고 있기에 당연히 공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5·18비문의 이러한 기능은 최근에 영화로도 개봉되었던 캐스린 스토킷(Kathryn Stockett)의 소설 『헬프』(*The Help*)의 주인공 스키터(Skeeter)의 역할에 비유할 수 있다. 그녀는 1963년 미국 남부 미시시피의 소도시 잭슨에서 백인 중산층 가정의 딸이자 작가 지망생이다. 스키터는 도시에 여전히 잔재해있는 인종차별의 양상을 흑인가정부의 삶을 기록하여 책으로 펴냄으로써 주류 백인 사회의 위선과 편견에 예리하면서도 이해심 있는 비판을 가한다. 영화에서 스키터는 “구술사 채록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경향신문 20). 이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역사에서 배제된 사회적 소수자, 민중의 목소리를 인터뷰에 담아내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이전부터 흑인 노예들의 이야기를 적어 출판한 전통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5·18비문은 ‘희생자의 기록’으로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미시사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생경한 ‘채록 문헌’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주제와 문체를 지닌 비문을 통하여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그들이 몸소 경험했던 시대에 대해

에 실린 원본을 묘지관리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그 일부가 삭제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출판 과정 중에 실수일 것이다. 비문집의 수정과 관련하여 여기서 몇 가지 바로잡고자 한다. 비문집의 내용을 현장에서 일일이 대조한 결과, 행방불명자의 묘역인 <제10묘역>에서 묘지와 비문이 서로 다르게 잘못 인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묘지번호 10-07> 이옥섭과 <묘지번호 10-08> 김병군, <묘지번호 10-11> 김재영과 <묘지번호 10-12> 허덕례, <묘지번호 10-25> 이기환과 <묘지번호 10-26> 임옥환, <묘지번호 10-27> 정명귀와 <묘지번호 10-28> 최봉례는 비문이 서로 바뀌어 실려 있다. 반면에 <묘지번호 10-45> 변오연과 <묘지번호 10-46> 김성기는 묘지의 위치를 서로 교체해야 한다(302-321). 참고로 <제10묘역>의 묘지들은 행불자의 묘지인 탓에 타 묘역과 달리 봉분이 없으며, 상석과 비석, 화병, 영정액자로 구성돼있다. 총66기의 묘지 중에 35기는 영정 사진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이를 통해 5·18항쟁의 역사적, 정치적 은폐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전달하려 한다.

또한 이들 비문에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대개 여타의 전통적인 비문들은 실제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개인의 생애와 뛰어난 업적을 치장하는데 주도면밀하다. 때로는 미화와 과장의 기술도 아끼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수용이 아니라 과식체적이며 수사학적인 뽐냄의 도구이다.¹⁵⁾ 5·18묘지의 비문들이 비극적이며 애달픈 심정을 담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일반의 비문들은 웅변적이고 계서적이다. 5·18의 비문들은 비극성과 역사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본질을 부정하는 ‘드러냄’이 아니라 실체를 수용하는 ‘받아들임’이며, 비문의 주인공들의 생애는 ‘극적’(dramatic)이기보다는 ‘비극적’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참으로 ‘애국적’이다. 5·18비문집 『당신이 잠든 곳에 우리마음 함께 있네』의 발간사는 비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에 수록된 비문들은 먼저가신 님들의 못다 이룬 꿈과 가족들의 그리움이 송두리째 배어있는 완성된 가치이며, 개인의 목숨보다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던 살신성인의 숭고한 애국정신 자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필자 강조) (5)

5·18민주화운동 구속자의 가족으로서 필자는 2005년 8월에 광주민주화운동 2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5·18: 고 김태진 교수의 쪽지서신』(대동문화)이라는 책을 엮어 출판한 바 있다(<사진 1> 참조). 광주일보 흥행기 기자는 이 책에 담겨있는 쪽지서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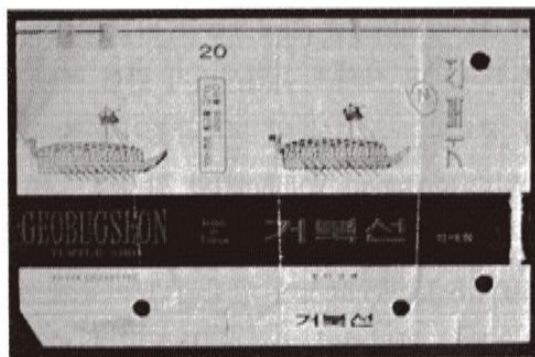
1980년 5·18당시 전남대 학생처장으로 근무하다 계엄사에 끌려가 옥고를 치렀던 김태진 전남대 교수(영어영문학 · 1997년 작고 · 향년 62세)가 계엄군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아내에게 몰래 써 보냈던 쪽지가 25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60여장의 이 쪽지들은 당시 김 교수가 상무대 전남·북 계엄분소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지병이 악화돼 국군통합병원에 특별수용됐던 80년 7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상황을 ‘긴박한 필체로,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김 교수는 ‘거복선’ 담뱃갑 뒷면이나 쓰고 버린 편지봉투 여백 등에 몰래 쓴 이 쪽지에 병원에서 들었던 합수

15) 전통적인 비문의 예를 위해 필자의 고고조부의 비석에 새겨진 글을 살펴보자. “공의 위는 선채요 자는 치명이며 성은 김씨니 시조는 가락국왕이요 파는 수로왕의 56세손인 사정공 휘리형(諱利亨)이다. . . 공은 단기 4172년 정월 12일에 생하였다. . . 노사기 선생 문하에서 수업학문을 일찍 성취하였고 아버지께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하였다. . . 후에 동정대부의 제수를 받았고 갑진년 5월20일에 졸하였다. . .” 비문의 내용은 극히 개인적이고 여조는 주관적이다. 행간에는 고인의 사회적 성취와 역할에 대한 보전과 드러냄의 분위기가 스며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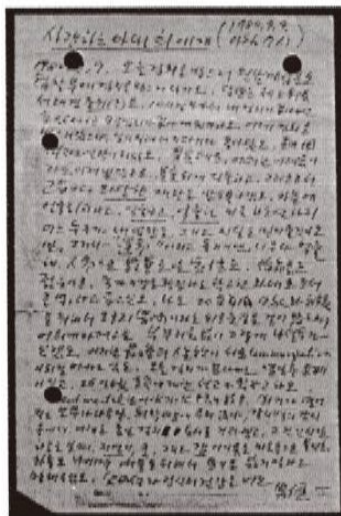
부의 수사동향과 국군통합병원에 함께 수용된 전남대 학생 및 교수들의 얘기, 재판 준비과정, 대학 측의 사태해결 움직임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염려 등을 적어 놓았다. . . . 이들 쪽지는 김 교수가 국군통합병원에 수용됐을 당시 아내가 [권력의 감시망을 피해 간접적으로] 넣어준 시식 그릇과 내복 등을 돌려보내면서 몰래 전달한 것이다. 쪽지는 김 교수가 착고한 이후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영문편지 봉투 속에 넣어져 감추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홍행기, 『쪽지서신 속 아버지의 5·18』 『광주일보』 (2005.5.17) 발췌) (<사진 2, 3> 참조)



<사진 1: 책 커버표지>



<사진 2: 거북선 담뱃갑 전면>



<사진 3: 거북선 담뱃갑 후면에 쓴 쪽지내용>

『아버지의 5·18』에 기록된 쪽지서신의 내용들은 출판의 형식을 통하여 숨김의 어둠에서 벗어나 세상의 빛에 드러난 순간 ‘이중의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첫째, 서신들은 집안의 가장이 감내해야만 했던 고통의 의미와 삶을 향한 강렬한 의지

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신적 자산으로 간직하고자 온 가족의 뜻을 모아 펴낸 한 가족의 유물이다. 둘째, 더욱 중요하게, 한 개인이 겪었던 삶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에 대한 '직접적이며 사실적인 기록'이다. 그런데 만약 그와 같은 글쓰기가 정치적인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그 기록들은 이제 역사성과 정치성을 지닌 시대적 '다큐 문학'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5·18비문들이 역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회고록처럼 "역사의 교훈서이자 반성문"이 될 수 있음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중앙일보』 6). 유사한 방식으로 페미니즘 비평가들이 억압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한 매체, 다시 말해 사회적 성 평등과 해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여성적 글쓰기를 강조하는 점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다.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말처럼, 진술한 기록은 그 기록이 생산된 시대의 선악을 여실히 드러내고, 아울러 그 시대를 향한 의미를 다시 제공하기 때문이다(107).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묘비들에 새겨진 비문들을 살펴보면, 대개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가족이나 친지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나 상실에 대한 솔직한 감정, 때로는 정화된 기원, 혹은 희생의 의미 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묘역에 갈 때마다 비석에 새겨진 희생자들의 삶에 대해 궁금해한다. 망자들의 비극적 사연을 읽으려한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고, 그 역사적 현장을 목도했기에 마음 깊은 동지적 연민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은 이들 희생자들이 자신들의 삶이나 경험에 대해 사적 혹은 공적으로 새겨놓은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희생의 순간이 찰나적으로 그들을 엄습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한 차분하고 여유 있는 글쓰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5·18은 느닷없는 쓰나미처럼 닥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문들은 희생자들 각각의 고통스럽고도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찬찬히 들려준다. 비록 자신이 아닌 유족 등 타인에 의해 쓰인 것이지만, 5·18이 그들의 삶에 어떤 것이었는지, 어떻게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5·18이 살아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은유적으로 말해준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5·18 민주항쟁에 대한 유족들의 정서와 인식이 가장 최고도로 표현된 형태는 바로 묘비에 눈물과 통한으로 새겨놓은 비문이다 따라서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사실 방관자적인 타인의 눈과 가슴에도 매우 사실적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비문은 대상에 대한 가장 주관적이며 솔직한 정서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5·18비문의

경우에는 대상의 타자화가 아니라 오히려 대상에 대한 몰입과 주체적 객관화의 심리적 반응이 뒤따른다. 일반의 방문 참배객들이 묘비 앞에서 숙연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다.

5·18묘지의 비문에 쓰인 글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fact)과 더불어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희생자의 가족으로서 느꼈던 한, 슬픔, 분노, 화해, 극복, 초월, 기원 등의 인간적인 정서를 진솔하게 담고 있다. ‘다큐멘터리’인 동시에 ‘문학’이다. 소위 관청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공식 자료’는 사실에 대한 감각이 있을 수도 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려하지만,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균형을 맞추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문과 같은 극히 개인적인 자료는 주변적이며 비공식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오히려 실제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자 연구 텍스트인 것이다.

서구의 주요한 문화연구 이론에서 인정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대담론이 역사적 진실의 유일하며 당연한 모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오히려 문화유물론(Cultural materialism)의 측면에서 미시담론을 통한 역사성, 정치성의 규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5·18비문에 대한 분석은 당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아버지의 5·18』처럼 희생자들이 직접 정리해 놓은 기록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 쓰인 유족의 비문이 바로 그들의 삶의 행적 그리고 시대에 대한 이해를 가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이것들을 통하여 죽음과 역사를 수용하는 우리 민중들의 인식과 수용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IV. 5·18비문의 내용 분석과 범주화

비문의 분석은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가 2009년 펴낸 『당신이 잠든 곳에 우리 마음 함께 있네』에 실린 비문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부는 현장 조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비문이 담겨 있는 비석의 구성은 제10묘역 행방불명자의 묘지만 제외하고 5·18묘지 전체에 걸쳐서 모두가 동일하다. 정면에는 사망자의 이름, 후면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좌측면에는 생존 가족의 이름이 들어있으며, 우측면에는 망자의 출생일자와 사망일자가 표기되어 있다.

묘지관리소에 확인한 안장 현황은 2011년 12월 현재, 행방불명자 묘역인 <제10묘역>을 포함하여 8개 묘역(제1묘역~제7묘역)에 걸쳐서 총 651기의 묘소가 들어져 있다. 각 묘역별로는 1묘역에 100기, 2묘역에 97기, 3묘역에 94기, 4묘역에 96기, 5묘역에 88기, 6묘역에 88기, 최근에 조성된 7묘역에 22기, 그리고 10묘역에 66기가 안장되어 있다. 안장 시기는 제1묘역과 제2묘역의 경우 1997년 5월을 전후로 하여 거의 모든 묘소가 조성되었다. 이는 1994년 11월 1일부터 망월동에서 착공한 묘역공사가 1997년 5월16일 정부의 5·18망월동묘역 성역화 사업에 의해 <5·18묘지>로 준공되었기 때문이다. 구 묘역에서 신 묘역으로 이장은 5월 4일부터 이루어졌으며, 사망자 153기의 묘가 처음으로 조성되었다(『당신이 잠든 곳에』 341-43). 1묘역과 2묘역의 묘소들은 대개가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이장되었으며, 3묘역에서부터 2000년도 이후의 이장 일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7묘역은 가장 최근에 안장된 희생자들의 묘지에 해당한다.

또한 비석에 새겨진 사망 일자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제1묘역에는 5·18광주항쟁 당시 기간 중에 사망한 사람들의 묘소가 안치되어 있다. <묘지번호 1-01> 김경철은 “1980년 5월 19일”에 사망하였다. 계엄군의 과격한 진압이 시작된 시점과 그 희생자가 나오기 시작한 순간을 유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1980년 5월에 사망한 희생자들의 수는 제2묘역의 중반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그 마지막 희생자는 <묘지번호 2-53> 노재인으로 5월 29일에 사망하였다. 김경철에서 노재인에 이르기까지 5월 중에 사망한 희생자의 수가 무려 153명에 이른다. 이후 6월 7일에 사망한 <묘지번호 2-54> 박귀주를 비롯하여 묘역과 묘지번호가 높아갈수록 사망일자와 이장일자가 가장 최근에 속하는 묘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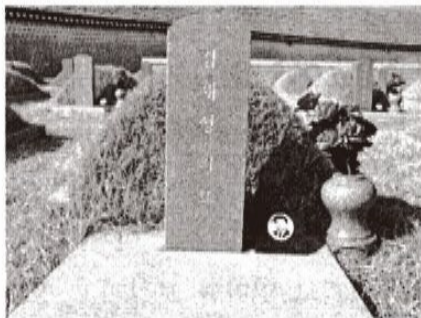
각 묘역별로 비문의 표기 여부를 살펴보자. 제1묘역에서는 비문이 없는 경우가 총 묘비의 약 25%에 해당하는 23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후 조성된 제2묘역에서는 13기, 제3묘역에서는 10기, 제4묘역에서는 0기, 제5묘역에서는 1기, 제6묘역에서는 1기 등으로 무덤의 안장 연도가 늦을수록 거의 모든 묘가 비문을 갖추고 있으며, 앞선 묘역에 비해서 그 내용도 보다 구체적이며 분량 또한 많아지는 점이 관찰되었다.¹⁶⁾ 이와 같은 현상은 이전 묘비명에 대한 다른 유족들의 관찰과 모방의 결과

16) 행방불명자들의 무덤이 자리해있는 <제10묘역>의 경우 비문이 없는 묘는 전체 묘비 66기 중에서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30기에 달한다. 이들 묘비에는 행불자의 성명, 출생년도, 그리고 행몰일자만이 대개가 1980년 05월 00일로 기록되어 있고 안장일자는 공백으로 남겨져있다. 조선시대 박수량이란 선비는 자신의 청빈한 마음을 기억해달라는

인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비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이며 장문의 비문을 통하여 희생자 고인의 개인적 정체성과 역사적, 정치적 위치를 의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고인의 희생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기록하거나 역사화하고 있는 비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이제 5·18비문이 ‘사회적 글쓰기’로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5·18비문의 내용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만큼이나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소박하게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에서부터 단순하게 성서를 인용한 글, 광주항쟁과 관련하여 고인의 희생된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역사화하는 글, 그리고 망자의 행적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앞으로의 투쟁을 다짐하는 글에 이르기까지 그 소재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공통적인 키워드에 맞추어 분류하기란 사실 불가능해 보인다. 고인의 죽음을 수용하는 유족들의 입장이 그만큼 무궁할 정도로 다양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비문에 각각 다르게 표현된 죽음의 수용과 역사적 사건에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필자는 비문을 크게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범주화는 전체 비문들의 내용을 각각 살펴본 후 서로 가장 어울리는 성격과 주제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들 5가지 유형은 기원형, 역사화형, 사실기록형, 종교적 순응형, 묵시록형 등으로 각 유형별 대표적인 비문은 다음과 같다.

가. 기원형: 사망자의 희생과 죽음을 수용하며 평화와 안식을 기원하고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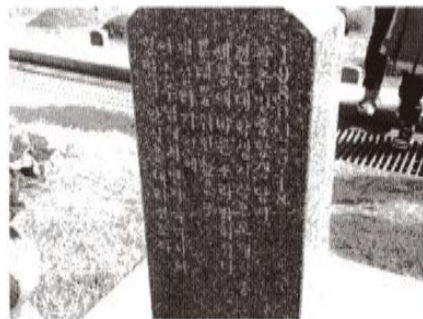


〈사진 4: 김재성의 묘와 묘비명〉

뜻으로 자신의 무덤 앞에 아무런 비문이 적혀있지 않은 이른바 “백비” (白碑)를 세워두게 했다(KBS 한국의 유산 「백비」 참조). 마찬가지로 여기 비문이 없는 행몰자들의 비석도 마치 현대판 백비와 같다. 그들의 묘비에 남겨진 빈 여백의 공간을 통해서 그들 희생된 녀의 가치를 가능할 수 있을 뿐이다. 비문중에서 가장 단문은 〈묘지번호 6-11〉 박영문의 것으로 “편히 잠드세요” 라고 적혀있다.

- 1) 김재성 <묘지번호 5-19> - 타고난 정의감과, 강직하신 성품으로, 살다가신 아버지! 이승에서 못 다 이룬 꿈, 천상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 2) 김영님 <묘지번호 2-85> - 그때 오월의 한을 풀지 못하고 먼저 가신 당신에게 죄송하오. 이제 과거는 모두 잊고 고이 잠드소서.
- 3) 홍순권 <묘지번호 2-52> - 폭도로 쓰러진 님! 민주의 신 새벽으로 부활하라.
-형과 누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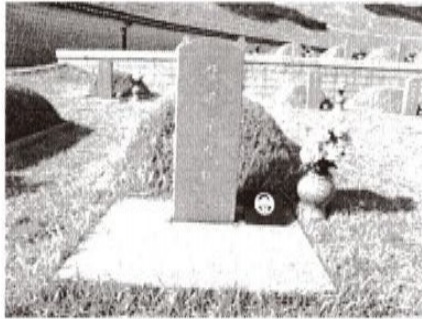
나. 역사화형: 5·18항쟁과 관련하여 희생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고인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승화한다. 은유적 표현이 강조된다.



<사진 5: 김태진의 묘와 묘비명>

- 1) 김태진 <묘지번호 5-18> -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 당시, 전남대 학생처장으로 재직 중, 세상에 바른 소리 밝히셨다. 후대를 위한 높은 뜻, 채 알리기 전에, 아! 주님께서 먼저 아끼시어, 영면의 안식을 내리셨도다.
- 2) 이성숙 <묘지번호 5-35> - 행동하는 양심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시다가 평화와 민주화를, 이루시고 이곳 민주성지공원에 많은 동지들과 함께, 주님의 품에 고히 잠드소서.
- 3) 차용봉 <묘지번호 6-39> - 아빠!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아빠께서 외치셨던 민주! 항상 아빠의 당당한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엄마를 보살피고 형제간에 우애를 돈독히 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다. 사실기록형: 5·18항쟁으로 인한 희생의 내용을 가장 극적이며 사실적으로 기록한다. 상황 진술은 구술 자료처럼 매우 세밀하고 공개적이다.



〈사진 6: 강해규의 묘와 묘비명〉

- 1) 강해규 <묘지번호 3-73> - 1980년 5월 21일 군부독제에 항거하는 아들 대정이를 찾으러 가던 중 잣등에서 계엄군의 총에 가슴을 맞고, 80년 5월 27일에 계엄군에 붙들려 상무대 헌병대로 끌려가 모진 고문과 고통을 받은 후 석방되어 그 부상후유증으로 1993년 3월 10일 운명하시다.
- 2) 김춘화 <묘지번호 3-23> - 80년 5월22일 오전 10시경 광주교도소 옆에서 검문 후 통과 불가로 되돌아가는 차를 뒤에서 총을 난사(3공수 12대대 8지대) 총상 후 후유증으로 사망 5세의 딸 김래향은 총상으로 하반신 마비 남편 김성수는 8급 상이자로 가족이 파탄되어 한을 안고 살고 있다. 당시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의로운 민중항쟁을 탄압했던 자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은 위대한 국민정신의 승리라 할 것이다. 1997년 11월 10일 5·18묘역에 안장하다.¹⁷⁾
- 3) 박재영 <묘지번호 1-77> - 1955년 3월 11일 해남군 황산면 성산리 출생 1980년 5월 21일 오후 5시 광주 목포 간 경계에서 공수부대 총격으로 사망.

라. 종교적 순응형(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고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석의 상단에 소속 종교를 나타내는 표시가 추가되어있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천주교는 십자가와 함께 영세명이 부기되어 있다. 불교 신자인 경우에는 만(卍)자 표시가 들어있으며, 원불교의 경우에는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부르는 둥근 원이 그려져 있다(<사진 7>과 <사진 8> 각각 참조).

17) 김춘화의 비문은 5·18묘역의 비석에 새겨진 글 중에서 가장 장문에 해당하며, 한 가족 모두가 비극적 운명에 휩쓸려 희생당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고인의 출생연도는 1937년 03월 18일이며 사망일자는 1985년 12월 07일이다. 이 비문은 무고한 한 개인 혹은 한 가족의 삶이 정치적 사건에 의해 어떻게 통째로 굴곡이 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종교 표시는 희생자의 가족이 무덤 안장 시에 묘지관리소에 제출하는 '비석제작 신청서'에 기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성서로부터의 인용은 아래의 비문들에서처럼 개신교와 천주교에 의해 표기되었고, 불교 혹은 원불교 경전에서 의 인용은 그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사진 7: 고영문의 묘〉



〈사진 8: 임균수의 묘〉

- 1) 나병남(베드로) <묘지번호 3-37> - 베드로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아 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 2) 김귀현 <묘지번호 2-95> -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 3) 주재성 <묘지번호 6-47>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시 23.1> 아파 질병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세요.

마. 목시록형: 고인의 희생을 치하하고 분개하며 굳은 다짐으로 새로운 도전을 약속한다.

- 1) 박태조 <묘지번호 3-45> - 왜 우리는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 .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장을 지키고 우리 부모 형제자손을 위해 총을 들었던 것입니다.
- 2) 이금재 <묘지번호 2-49> - 아들아! 서러워마라. 새날이 올 때까지 싸우리라. 엄마가.
- 3) 김재영 <묘지번호 10-11> - 장하다! 총칼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다 간 한 많은 세상을 마감한 인생....., 너의 유골을 꼭 찾으리라.

5·18비문에서 가장 많이 쓰인 구절은 “편히 잠드소서/잠들어라” 혹은 비슷한 맥락에서 “고이 잠드소서/잠들어라”로 분석됐다. 이러한 표현은 유족들의 대부분이 고인의 희생을 참담하게 여기고 슬퍼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희생을 감내하며 망자의 넋을 위로하려는 죽음에 대한 인류의 전통적인 태도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죽음이란 어떠한 종류의 것 이든 간에 인간이 초월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성질의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각각의 비문들이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기표는 서로 다를지언정 그 기의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망자에 대한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비문에 소개된 표현들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어휘들을 가려내어 살펴보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유족들이 역사적 현실과 그들이 경험했던 상실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수용하고 있는 가를 규명할 수 있다. <제1묘역>에 안장된 100기의 비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민주”, “희생”, “정의”, “죽음”의 순으로 단어의 빈도수가 나타난다. 이는 유족들이 고인의 희생을 어떠한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단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이자 우리 사회가 5·18민주항쟁을 어떠한 시각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안병옥은 「한국현대사에서 5·18항쟁의 의의」라는 논문에서 5·18항쟁을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향한 “시민전쟁”(256)으로 규정하여 전투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5·18묘지의 비문들은 이와는 다르게 광주항쟁이 인류의 민주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한 것이며, 고인들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고결한 희생이었음을 오히려 강조하여 수용한다.

V. 나가며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수용의 문제를 5·18묘지의 비문과 관련 지어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도서관 인터넷 검색(검색어: 5·18 그리고 비문 혹은 묘비명)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등이 그동안 다양한 연구와 지원을 통해 상당한 양과 질의 데이터를 축적해놓았지만 이는 주로 거시담론적인 접근법에 의한 결과물들이다. 비문이 사회적 문서이자 기록 문학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다소 간과한 탓이다. 이미 앞서 설명했던

바처럼, 문화유물론의 이론을 빌리자면, “모든 기록은 정치적인 것”이며(Williams 7), 특정한 시대의 역사성과 정치성의 진실한 규명은 반드시 거대담론의 시스템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사적인 영역의 다큐먼트와 같은 미시적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일기, 서신, 메모장 등과 같은 매우 주변적이며 주관적인 자료들에 대한 다시 읽기가 행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접근법의 중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공적인 조사자라는 객관적 입장에서 벗어나 주관적 입장에서 역사를 들여다보려는 고집스런 시선과 수용의 자세를 찾아야 할 것이며, 본 연구 결과의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시대에 대한 비문의 연구는 눈에 주목할 정도는 아니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매년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미국대중문화학회(중부대서양지역) 학술대회의 경우, <Death in American Culture> (미국 문화와 죽음의 문제)라는 분과를 두어 미국 각 지역의 특별한 장례 문화, 묘비 형식, 비문 사례, 역사성, 인종 관계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미국 매사추세츠 디어필드(Deerfield, Massachusetts)라는 지역 박물관의 경우에는 이 지역의 비문을 소개하고 자세히 읽기 및 분석을 포함하는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지역의 특수한 역사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공하고 있다(<http://www.americancenturies.mass.edu/home.html>). 이는 비문 읽기가 학생들의 문화 이해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적절한 사례로서 5·18민중화운동과 관련한 학습 교재의 개발과 확대를 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벤치마케팅이 필요하다(<사진 9, 10 참조>).



<사진 9: 다양한 지역 문화 소개 섹션을 포함하고 있는 Memorial Hall Museum Online 홈페이지>



〈사진 10: 비문 읽기 및 분석에 관한 온라인 강좌 사이트〉

우리도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나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5·18비문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사이트를 구축하여 일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5·18관련 학습의 교재로 이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기술과학부의 주도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고, 5·18, 4·19, 6월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은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반민주적”(『경향신문 15』)이며 ‘퇴행적 역사서’를 쓰려고 작정한 바와 다름없다. 바로 이러한 비이성적인 시도 때문에 비문 연구와 같은 미시사적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누구의 비문이든 간에 그것을 그저 차가운 돌 위에 쓰여 있는 타인의 별 의미 없는 생과 죽음의 기록이라고 단순히 간주하는 것은 문화 연구자로서 참으로 경솔한 판단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 비문이 어떤 특정 시대의 역사성과 정치성을 직접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귀한 역사적 문헌이자 가치 있는 물질적 유산임에 분명하다.¹⁸⁾ 이념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적인 기록 행위가 공적인 영역의 정치적 도구로 물화하는 것이다. 국립5·18민주묘지를 한국 민주화정신과 인권

18) 중국의 문필가 임옥당은 「무덤들 사이를 거닐며」라는 시에서 비문 읽기를 통하여 “죽은 자들이 나의 참된 스승”임을 드러낸다. “무덤들 사이를 거닐면서/ 하나씩 모비명을 읽어 본다./ 한두 구절이지만/ 주의깊게 읽으면 많은 얘기가 숨어 있다./ 그들이 염려한 것이나/ 투쟁한 것이나 성취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짜로 좁아들었다./ 살아 있을 적에는/ 지위와 재물이 그들을 갈라 놓았어도/ 죽고 나니/ 이곳에 나란히 누워 있다./ 죽은 자들이 나의 참된 스승이다./ 그들은 영원한 침묵으로 나를 가르친다./ 죽음을 통해 더욱 생생해진 그들의 존재가/ 내 마음을 씻어 준다. . . [이하 생략]” 류시화 엮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다더라』, 서울: 열림원, 2000, 44-45.

운동을 대표하는 '유물론적 기표'로서 역사책에 비유한다면, 그 묘지에 새겨진 각각의 비문들은 '상징적인 기의'로서 그 역사책을 가듯 채우고 있는 글이자 콘텐츠에 해당한다. 이제 5·18민주묘지의 비문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의 구체화된 텍스트로서 우리 사회의 공적인 유산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그것들은 5·18민주항쟁의 승화된 죽음과 역사의식을 새겨볼 수 있는 사회적 담론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야한다.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우리는 5·18비문 읽기를 통하여 우리의 지난 과거를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해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한다. 기록에 담긴 희생의 가치를 되새겨보고 국가 미래를 향한 화합과 용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미시적 담론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여 5·18연구의 지평을 확대함은 물론 희생자 고인들의 고귀한 넋을 다시 한번 쓰다듬고 위로하는 진혼극의 마당이 되기를 바라는 바다.

참고문헌

- 강운구, 『중국문화탐방』,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6.
- 김 강 역음, 『아버지의 5·18: 고 김태진 교수의 쪽지서신』, 광주: 대동문화, 2005.
- 김함미, 「역사교과서 5·18, 4·19, 6월항쟁 삭제는 반민주」, 『경향신문』 (2011.11.11):15.
-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서울: 그린비, 2005.
- 국립대전현충원, 「묘비문 작성 안내」 팩스문: 1-5.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당신이 잠든 곳에 우리 마음 함께 있네』,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9.
- 나간채, 강현아 편, 『5·18항쟁의 이해』,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
- 미셸 푸코,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옮김, 서울: 민음사, 1992.
-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 유유정 옮김, 서울: 문학사상사, 1996.
- 박기열 역, 『16세기 영시』, 서울: 탐구당, 1991.
- 박삼진, 『비석이야기』, 서울: 예진, 2001.
- 박승희, 「노무현, 부시와 회담 때 괴상한 언행」, 『중앙일보』 (2011.11.3): 6.
- 박초롱, 「카다피 시신, 비공개로 매장할 듯」, 『연합뉴스』 (2011.10.21): 1.
- 백승찬, 「이유있는 외침, 들어봅시다… ‘헬프」, 『경향신문』 (2011.11.3): 20.
- 심경호, 『내면기행: 선인들, 스스로 묘비명을 쓰다』, 서울: 이가서, 2009.
- 심영의, 『5·18민주항쟁 소설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 셰익스피어, 윌리엄, 『맥베스』, 김 강 옮김, 서울: 펭귄클래식코리아, 2010.
- 안병욱, 「한국현대사에서 5·18항쟁의 의의」, 『5·18항쟁의 이해』, 나간채, 강현아 편,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 255-69.
- 이재준, 이재호 역, 『17세기 영시』, 서울: 탐구당, 1982.
- 임동환,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거룩한 땅」, 『그때 그 자리 그 사람들』, 5·18기념재단, 서울: 여유당, 2007: 314-29.
- 임옥당, 「무덤들 사이를 거닐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류시화 역음, 서울: 열림원, 2000: 44-45.
- 오광록, 「너무 지쳤다, 이젠 용서하고 싶다.」, 『광주일보』 (2010.4.20): 1-3.
- 왕 철, 「5·18항쟁의 예술적 형상화」, 『5·18항쟁의 이해』, 나간채, 강현아 편,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 241-52.
- 위치우이, 『위치우이의 중국문화기행』 1, 2, 유소영, 심규호 옮김, 서울: 미래인, 2007-2008.
- 전기연, 「독재자 카다피 시신 어떻게 처리되나」, 『아주경제』 (2011.10.21): 1.
- 차원현, 「5·18과 한국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1집(2010.8): 439-67.
- 피히테, 『독일국민에게 고함』, 황문수 역, 서울: 범우사, 1994.
-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8.

- . 『조선시대 생활사 2』,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청년사, 2005.
- 한승원 외. 『일어서는 땅: '80년 5월 광주항쟁소설집』, 서울: 인동, 1987.
- 황석영 기록,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서울: 풀빛, 1980.
- 홍행기. 「꼭지서신 속 아버지의 5·18」, 『광주일보』 (2005.5.17): 3.
- KBS. 「백비」, KBS 한국유산, 2011.
- Clark, Donald N., ed. *The Kwangju Uprising: Shadows over the Regime in South Korea*. Boulder, CO: Westview, 1988.
- Dickens, Charles. *Great Expectations*. Seoul: SHINASA, 1993.
- Greene, Meg. *Rest in Peace: A History of American Cemeteries*. New York: 21st Century, 2007.
- Hom, Susan K. *R.I.P.: Here Lie the Last Words, Morbid Musings, Epitaphs & Fond Farewells of the Famous and Not-So-Famous*. London: Sterling, 2007.
- Hyland, Peter. *An Introduction to Shakespear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6.
- Keister, Douglas. *Stories in Stone: The Complete Guide to Cemetery Symbolism*. New York : Gibbs Smith, 2004.
- Meyer, Richard. *Cemeteries and Grave markers: Voices of American Culture*. Logan, Utah: Utah State UP, 1992.
- Stockett, Kathryn. *The Help*. New York: Penguin, 2009.
- Williams, Raymond.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Oxford UP, 1985.
- William Shakespeare. *Hamlet: The Arden Shakespeare*, Harold Jenkins Ed. London: Routledge, 1989.
- <http://blog.daum.net/aeorazy/70>
- <http://blog.naver.com/jhwoong1/90103726297>
- <http://en.wikipedia.org/wiki/Epigraphy>
- <http://en.wikipedia.org/wiki/Epitaph>
- <http://www.americancenturies.mass.edu/home.html>
- <http://www.buzzle.com/articles/headstone-sayings.html>
- http://www.emuseum.go.kr/relic.do?action=view_d&mcwebmno=79538
- <http://www.gravestonestudies.org>
- <http://www.kidsnfm.go.kr/olk/play/play06.htm>
- <http://www.mpva.go.kr/intro/intro400.asp>
- <http://www.nanet.go.kr/main.jsp>
- http://www.primaryresearch.org/pr/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96:early-new-england-gravestone-studies&catid=114:gravestone-studies&Itemid=300033

1970년대 광주일고 이념서클에 대한 연구

작성자 : 황광우

- 1, 들어가며
 - 2, 이념 씨클 ‘광랑’ 연구
 - 2-1, 윤한봉의 구술: ‘민사권’ 과 ‘광랑’ 의 관계
 - 2-2, 이양현의 구술
 - 2-3 정용화의 자술
 - 3, 이념 씨클, ‘피닉스’ 연구
 - 3-1, 피닉스의 실천
 - 3-2, 피닉스의 이념
 - 4, 1975년, 그리고 일고 출신 학생운동가들
 - 4-1, 인혁당 사형
 - 4-2, 1975년 광주일고 시위
 - 4-3, 1970년대 광주일고 출신 학생운동가 명단
 - 5, 나가며
- 참고문헌

1, 들어가며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1980년 5월 18일 왜 전남대학교의 학생들만이 공수부대에 대항하여 싸웠던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전국의 대학생들은 계엄령 확대 시, 각자의 캠퍼스를 거점으로 민주화를 위한 항쟁을 계속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킨 유일한 대학이 전남대학교였다. 1980년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일어

난 사태에 대하여 혹자는 군부의 음모였다는니, 광주에 선택된 희생양이었다는니, 등등의 견해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또 혹자는 누적된 호남 차별의 필연적 분출이었다는니, 김대중의 정치적 제거가 낳은 분노의 행동이었다는니, 등등의 견해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은 광주민중항쟁의 총체를 구성하는 한 편린들이겠지만,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을 온전히 대변하진 않는다. 본 연구자는 광주민중항쟁의 구체적 총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뿌리를 탐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는 거시적 이론의 틀을 거부할 것이다. 어떤 이론적 조명보다는, 광주민중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투사들의 얼굴들을 떠올릴 것이다. 역사적 사건은 인간들이 연출한 사건일 뿐이다. 그 어떤 필연적 법칙이 있어 역사적 사건이 발발하였다고 보는 것은 모두 허구이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분노와 땀 그리고 투쟁이 있을 뿐이다. 이어 그들의 삶, 그들의 의식의 각성과 실천 과정을 찾아들어갈 것이다. 역사의 물줄기야 거슬러 연원하면 4.19 혁명 세대를 거쳐 전전(戰前) 세대로, 일제하 독립운동으로까지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에서 주역을 논 얼굴들의 한 흐름을 1970년대 학생 운동¹⁾에서 찾고자 한다.

우리는 1972년 함성지의 사건에서 본 연구를 출발할 것이다. 김남주와 이강으로 대표되는 <함성지> 사건은 19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체제에 저항하는 기나긴 투쟁의 점화를 알리는 사건이었다. <함성지>는 광야를 불태우는 한 알의 불씨였다. 이어 전남대학교의 학생운동자들은 1974년 4월 민청학련에 합류한다. 민청학련 사건은 1000여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체포, 구금된 70년대 최대의 시국사건²⁾이었다. 동 사건은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활동하던 학생운동자들을 단일 사건으로 결집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 독재정권은 자신을 무덤을 팔 묘혈꾼들을 양산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은 동아일보 광고 사태로 이어진다. 동아일보 기자들의 영웅적 투쟁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심리적 기반을 국민 대중 속에 널리 확산하는

1) 1980년 5월 27일 새벽 이양현과 윤상원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어- 윤상원씨랑 이렇게 만나서 참 거 서로가 즐거웠습니다. 좋은 친구였는데 저승에 가서도 좋은 친구가 됩시다. 그 쪽도 혹시 요렇게 불평등한 사회면은 거기 가서도 학생운동 험시다.”,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이양현, 60쪽

2) “당국은 긴급조치 4호의 민청학련 사건으로 1024명을 조사했고, 그 가운데 253명을 군사재판에 송치하였다고 발표 했다.” 동아일보, 1974년 5월 27일자.

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광주일고 고교생들은 네 차례나 연거푸 반독재 민주화 시위³⁾를 감행한다. 민청학련 관련자들과 광주 일고 시위 관련자들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에 직접 가담하고 이를 주도한다.

돌아다보면 전남대학교와 광주일고에는 이념 씨클들이 있었다. 이 이념 씨클들의 회원들이 대다수 시위 사건의 주동자였던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 분야에 관한 우리의 연구는 전무하다. 민중운동사의 전개과정을 주체역량의 형성과정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우리는 1970년대 전남대와 광주일고의 학생 운동을 주도하였던 이념 씨클의 내면을 탐색하고자 한다.

‘1970년대의 이념 씨클들은 언제부터 뿌리를 내렸던가? 그들의 활동 내용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이념적 특질은 어떠했는가? 이념 씨클 회원들의 현실 참여는 어떠했는가?’ 등의 질문은 ‘1980년 5월 18일 왜 광주의 학생들만이 공수부대에 대항하여 싸웠던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종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하지만 답변은 쉽지 않다. 한 두 사람의 기억으로는 결코 재구성해낼 수 없는 복잡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970년대 광주 지역 학생 운동을 이끌었던 운동의 주역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녹취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주역들이 남긴 일기와 회의 자료를 보조 자료로 하여 지난 역사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2011년 5월 이후 10월까지 본 연구자는 20여 차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를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 1, 1960년대 학생운동 관련 이홍길, 전홍준 선생 인터뷰
- 2, 1973년 합성지 사건 관련 이강 선생 4회 인터뷰
- 3, 1974년 민청 사건 관련 김상윤 선생 인터뷰
- 4, 1974년 민청 사건 관련 나상기 선생 인터뷰
- 5, 1974년 민청 사건 관련 이학영 선생 인터뷰
- 6, 1974년 민청 사건 관련 박형선 선생 인터뷰
- 7, 1974년 민청 사건 관련 최철 선생 인터뷰

3) 1974년 10월 시위와 11월 시위, 그리고 1975년 4월 시위, 1975년 5월 1일 불발로 끝난 시위 예비 사건을 지칭한다.

- 8, 1978년 전남대 학생운동 정용화 선생 2회 인터뷰
- 9, 1978년 전남대 학생운동 이세천 선생 인터뷰
- 10, 1978년 전남대 학생운동 박병기 선생 인터뷰
- 11, 1974년 광주일고 학생 시위 지병주 선생 인터뷰
- 12, 1974년 광주일고 시위 박석면 선생 인터뷰
- 13, 1975년 광주일고 시위 윤성석 선생 인터뷰
- 14, 1978년 전남대 학생운동 관련 김선출 선생 인터뷰
- 15, 1980년 5월 고교생 운동 관련 김상호 선생 인터뷰

이상의 면담 녹취록과 <5.18 기념 재단>이 확보해 놓은 기존의 구술록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진행된다. 본 연구자가 참고한 <5.18 기념 재단>의 구술록은 다음과 같다. 박석무, 윤한봉, 김상윤, 이양현, 정찬용, 최철, 최권행. 본 연구자는 1970년대 학생운동을 저항 1기(1972.10-1975.5)와 모색의 시기(1975.6-1977.8) 그리고 저항 2기(1977.9-1979.9)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저항 1기는 유신 헌법의 선포와 이에 대한 저항운동의 시기이고, 모색의 시기는 박정희 독재 정권의 혹독한 탄압에 내밀려 다음 운동을 준비하고 모색하던 시기이며, 저항 2기는 1977년 9월 서울대 시위를 기점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 확산되어갔던 시기이다. 본 연구 보고서는 저항 1기의 학생운동에 집중할 것이며, 저항 2기의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자.

1972년 유신 독재의 암흑을 밝게 비춘 <합성지> 사건의 두 주인공 이강과 김남주, 이들의 의식을 전반적으로 지배하였던 것은 “저항 정신”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이강과 김남주에게는 해방 전후 활동한 전전(戰前) 세대의 체계적으로 교양된 이념이 없었다. 이 강과 김남주는 전전(戰前) 세대의 활동가들이 공유하고 있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웠고, 이러한 이념의 공백이야말로 1970년대의 시기를 경유하는 학생운동가들의 공통된 특질이었다. 공백이라 하여 하얀 백지장처럼 ‘사상의 비어있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빛의 무지개 색깔이 하나로 합하여 흰 색깔을 띠듯, 1970년대의 학생운동가들은 ‘이념의 빨주노초파남보’ 모든 것을 한 몸에 담고 있었다. 가깝게는 제도 교육으로부터 주입받은 자유 민주주의⁴⁾를 포함하여, 동학 혁명으로부터

터 흘러나오는 저항적 민족주의⁵⁾, 인도의 간디로부터 들려오는 비폭력주의, 니체와 사르트로부터 배우는 실존주의, 실로 그 족보를 따지기도 어려우나 유행처럼 떠돌아 다니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한 유파로서 모택동주의 등 온갖 유파의 사상이 한반도에 들어와 학생들의 의식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모든 잡다한 사상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1970년대 학생운동가들이 수용한 허다한 사상적 유파들의 최대공약수는 바로, “저항 정신”이었다. 이강과 김남주가 중학 시절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함석헌의 글에 매료되었던 것⁶⁾도 함석헌으로부터 저항 정신을 전수받은 것이요, 두 운동자가 <함성지>를 제작, 유포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간 것도 전홍준의 혁명적 저항정신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강과 김남주는 아주 특이한 청년들이었다. 중학생 시절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고등학생 시절엔 이미 삶에 대한 일견을 갖추었던 것 같다. 대학생 시절엔 특별한 조직적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나, 유신 헌법이 선포되자 전국 최초로 저항운동의 선구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었다. 일반적으로 학생운동의 주도자들은 이념 씨클 내에서 맺는 인간관계, 동료와 선후배들 상호간 주고받는 정신적 자극과 상호 역할 분담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면 1972년 10월에서 1975년 5월에 이르는 저항 1기의 학생 운동을 주도한 이념 씨클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윤희봉은 전남대의 이념 씨클 민사련에 대해, 그리고 민사련의 인적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광주일고의 이념 씨클 광랑에 대해 이렇게 구술하였다.

4) <함수 윤희봉 기념사업회, 대담집> 이홍길, 전홍준 대담 (대담자 황광우, 구술자 이홍길, 전홍준, 때: 2011년 10월 17일, 곳: 금수정)에 의하면

이홍길은 이렇게 말하였다.

“황: 강이 형이나 남주형을 보면은 무정부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 안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욕구가 긴 시간 작용했지. 4.19 때 반독재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적색, 백색 독재도 반대해야 된다고 보았어.

황: 전홍준 선생님의 경우,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비판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전: 그러니까 당시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니까 거기에 눈높이를 낮춰서 통일전선 전술로 접근한 거지. * <함수 윤희봉 기념사업회, 대담집>- 이홍길, 전홍준- 6쪽)

5) “이: 석무는 구태여 말하면, 유교좌파라 할까. 한말부터, 소위 유교 애국운동이 있어. 최익현선생,

황헌선생, 고광순선생, 우리나라 한말 쟁쟁한 선비들의 투쟁사가 있어. 석무 증조할아버지가 최익현선생하고 서로 문동을 하고 지냈던 분이야. 최익현 선생의 절의라던지 그런 것이 쪽 내려 왔지... 석무가 동학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으로 들어갈 것이야. 녹두이야기를 박석무가 가장 많이 했어. * <함수 윤희봉 기념사업회, 대담집>- 이홍길, 전홍준- 3쪽, 6쪽)

6) <함수 윤희봉 기념사업회, 대담집>- 이 강 대담 (대담자 황광우, 구술자 이 강, 때:2011년 6월 3일, 곳: 함수 윤희봉 기념사업회 사무실)

2. 이념 씨클 ‘광량’ 연구

2-1. 윤한봉의 구술: ‘민사련’과 ‘광량’의 관계에 대해

이 강과 김남주가 전남대 교정에 <함성지>를 살포하고 다니던 1972년 겨울, 전남 대엔 민주주의를 외칠 일단의 이념 씨클이 막 태어난 시점이였다. 이른바 <민족사회 연구회>(약칭, 민사련)이 1971년 결성된 것이다. 10년 후 1980년 광주민중항쟁 과정에서 항쟁지도부의 일원으로 활약하는 정상용과 이양현은 바로 민사련 출신이다. 윤한봉은 말한다.

그때 교련반대시위, 학원 병영화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죠. 대학에서 후배들이 시위 앞 장서는 친구들이 나를 꼬드기는 거야. 끌어들이려고, 내가 들어갔을 때가 전남대 운동사에서 한 획이 그어지는데,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전남대학교에 운동의 맥이 형성이 안됐어요. 맥이, 그런데 7년부터 이제 전남대 운동의 맥이 형성이 되었거)

주목할 것은 민사련의 초기 회원들이 대다수 광주일고 졸업생들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살레시오고, 동신고 등 타교 출신 전남대학생을 배타한 것은 아니나, 민사련의 초기 회원들의 면면도 그렇고, 이후 후배 회원들도 대다수 광주일고 출신이다. 왜 그런가?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가 작동하고 있었다.

첫째, 기본적으로 이념 씨클은 단지 이념의 학습만을 목표로 하는 ‘순수 이론 씨클’이 아니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와 토론은 당대의 시사적 정치 사건에 관한 것이고, 선배들이 제공하는 교양 역시 이론 그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투쟁의 길’에 나설 때 요구되는 자세, 비밀 준수에 관한 기초적 규율에 관련된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념 씨클은 상당한 정도의 위험, 자기 희생을 예약하는 모임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순진한 대학 초년생이라 할지라도 이념 씨클에 대해선 본능적으로 경계하였고, 따라서 이념 씨클의 선배들은 신입 회원의 모집을 위해 사활의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념 씨클의 선배들은 대학 신입생들과 가장 쉽게 인연을 맺을 수 있는

7)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윤한봉, 5쪽

고교 동문의 선을 타고 씨클 신입 회원들을 조직해 들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전남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었고, 서울대를 비롯하여 이념 씨클이 활동하고 있던 전국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었다.

둘째, 전국 명문 고등학교 출신자 중에서도 유독 광주일고 출신자들이 이념 씨클에 대거 포진해 있었던 것이 1970년대 주요 대학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예컨대 1970년대 중후반의 시기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사에서 굵직한 역할을 하였던 <사회과학회>(약칭, 사과학, 한사의 후신) 역시 그 회원의 다수가 광주일고⁸⁾와 부산고 출신자로 구성되었다. 광주일고 출신들은 대부분 대학 초년생의 시기에 이념 씨클 혹은 진보적 교회, 혹은 야학 활동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전남대에서 결성된 민사련에 광주일고 출신자들이 다수 가입하였던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왜 광주일고 출신자들은 이념 씨클에 많이 가입하였던가? 윤한봉의 구술을 듣자.

내가 광주일고 11회 졸업생(1966년 졸업)인데 광주 일고 교정에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어요. 광주 일고생들, 이 탑을 금지로 알지. 1929년 광주 학생 운동의 본거지라는 거여. 그 역사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수량화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항일독립운동 과정에서 독서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일제하에서도 독서그룹이 있었대요.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 광주일고에 특별 활동반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웅변반 서예반 있듯이 향토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향토 사람이 어떻고, 농촌체험하고 봉사활동도 하고.⁹⁾

지금 윤한봉 선생이 구술하는 향토반은 교내에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용되는 씨클이다. 학교의 공식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특별 활동의 한 부서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1970년대 광주 학생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향토반의 이름을 듣게 된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 학생 169명 중 광주일고 출신자들이 전체의 1/6에 달하는 28명에 달했고, 그중 향토반 회원들이 10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이념 씨클, 광랑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광랑은 향토반이라는 합법 씨클 속에서 암약하던 지하 이념 씨클이었다. 하지만 향토반의 구성원과 광랑의 구성원이 대부분 일치하였기 때문에 ‘향토반=광랑’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시 윤한봉의 구술을 듣자.

8) 예컨대 <사회과학회>의 75회번 멤버들 중, 박관석, 백상철, 부윤경은 광주일고 20회 졸업자들이고, 김수천, 김석준, 박병태는 부산고 졸업자였다.

9)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윤한봉, 6쪽

구술자 : 향토반에 몸담았던 학생들 중에 일부가 광랑이라는 씨름을 만들었어요. 그 광랑이 향토반에 다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빛 광(光)자 사내 랑(郎) 자 광주사내라는 거요. 이 광랑(光郎)이라는 씨름이 광주 일고6회(1961년 졸업) 선배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광주사내들의 모임에서 자기들끼리 당시로는 아주 불순한 공부들을 했다고. 쿠바인의 입장에서 미국을 맹렬히 비판한 <들어라, 양키들아>, 뭐, 그런 책을 놓고 미제국주의의 진면목이 무엇인가 공부했다던가, 조금 붉으스름했지. 그러니까 자칭 사회주의자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광주 일고 9회(1964년 졸업) 선배가 반공법 사건으로 들어가고, 10회 선배가 통혁당 막동이로 고생도 하고,

면담자 :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 9회 조용호씨죠. 조용호씨가 이상한 붉으스름한 책들을 가방에 담고 기차타고 내려오다가 다른 비슷한 가방하고 바뀌려고 나와 부렸어. 그 다른 사람이 집에 가서 보니 이상한 책들이 나와요. 가서 경찰에 신고해 버린 거지. 10회 박경호 선배가 통혁당 막동이로 들어갔는데.

윤한봉의 구술에 의하면 광랑이라는 씨름은 1960년 4.19 학생 혁명이 낳은 씨름 입을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4.19혁명 당시 광주 일고생들이 결성한 것이 광랑이었다. 1960년은 자유와 혁명의 열기가 솟구치던 시기였고, 따라서 여러 급진적 이념 서적들이 자유롭게 유포되던 시기였다. Mills가 쓴 <들어라, 양키들아>는 이때 한국에 상륙하여 이후 오랜 시일 학생운동권의 고전이 된 이념 서적이었다. 광랑의 초기 멤버들 중 조용호씨와 박경호씨 두 분이 반공법 위반의 전과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향후 진행될 씨름의 운명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거기에 일고 14회(1969년 졸업), 그러니까 내 3년 후배들이 정상용, 5.18 항쟁지도부 외무부장 맡았었지. 이양현도 5.18 항쟁지도부 기획위원을 맡았고, 김희택은 긴급조치로 투옥되고, 민청련 의장도 하고 그랬지. 지금은 공직에 가 있는 박영규, 박영신, 그렇게 되고, 이제 16회가 최철, 19회가 정용화이죠. 근데 이 14회 애들 정상용, 이양현이 주축이 돼갖고 만든 게 전남대 민족사회연구회였어요. 민사련이라고, 여기에 일고 후배 김정길이가 세한 거지. 김정길은 민청사건부터 남민전 등등으로 징역 좀 많이 살았지. 박형선, 거기도 민청학련사건으로 고생했고, 문덕희 이런 친구들이 민족사회연구회에 들어가요. 다 일고 출신들이예요.¹⁰⁾

10)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윤한봉, 6쪽

2-2, 이양현의 구술

2-2-1, 광랑의 전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민사련과 광랑의 관계에 대해 구술해 준 윤한봉은 사실은 광랑의 활동과 무관한 분이였다. 윤한봉은 고교 시절 때에도 그랬고, 대학 시절에도 이념 씨클과는 무관하게 살아간 분이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고교 시절 광랑의 핵심 멤버였고, 민사련의 초기 멤버였던 이양현의 구술을 듣자. 이양현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일찍이 노동운동에 투신한 선구자적 인물이었고,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윤상원과 함께 항쟁의 최후를 지킨 인물이다. 함평 촌 동네에서 청운의 꿈을 품고 광주로 올라온 이양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주일고의 향토반이었다. 그의 구술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 뒤 혼자 광주로 유학을 와가지고 하숙 내지는 자취를 하면서 서중학교, 일고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향토반', 소위 농촌·농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서클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향토반 서클 활동을 하게 되지요, 당시만 해도 대학생들, 또 사회에 나간 선배님들까지 오셔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고 그랬었습니다. 그 때 서클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눈을 뜨게 되죠, 초기에는 상록수적인 발상으로 농촌활동 내지는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¹¹⁾

그러니까 이양현은 이미 고교 시절 의식화의 기초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이제 스무 살도 넘지 않은 청소년이 벌써 농민운동 혹은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 10대에 품는 꿈은 아름다우나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물거품이 되기 쉬운데, 소년 이양현의 꿈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군대를 제대하고 그의 소신 그대로 바로 노동 운동에 투신하였다. 이양현이 대학에 들어가 이념 씨클을 만들었던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경로였다. 다시 그의 육성을 듣자.

그러던 차에 전남대학교를 갔는데, 그야말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적드라구요, 그래서 정상용, 김정길 이런 친구, 후배들하고 같이 '민족사회연구회' 라고 하는 이념 서클을 만들지요, 전남대학교에서는 최초의 이념 서클이었을 겁니다. 저희들만 열심히 공부한 것이 아니고 조선대학교, 교육대학교에도 그런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1학년 때 데모하게 되고 처벌받고, 또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갔다가 또 처벌받고, 그래서 학교를 7~8년 다녔지요, 저희

11)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이양현, 17쪽

들이 조직적 활동으로서 학생운동을 한 것은 전남대학교의 처음일 것입니다. 저희들보다 나이 많은 이홍길 선배님, 박석무 선배님 그런 분들은 고등학교 때 광고에서 '녹번'이라는 서클을 했었어요, 그런데 광고의 '녹번'이 전남대학교에 이식되지는 않았지요, 개인적 활동으로 그친 거죠.¹²⁾

1960년 4월 혁명 당시 광주 지역의 학생 운동을 주도한 광고의 이념씨클 '녹번'¹³⁾이 전남대학교에 이식되지 않았다는 이양현의 구술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발언이다. 우선, 1960년대 전남대 학생운동은 몇몇 걸출한 리더들에 의해 주도되었지, 이 학생운동을 책임지고 이끌어간 씨클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박석무, 이홍길, 전홍준, 정동년 등 학생운동가들은 있었지만 학생운동가들의 재생산을 도맡아 수행하는 별도의 씨클이 없었다는 얘기다. 광고의 녹번 출신자들이었던 이홍길과 박석무는 그들의 광고 인맥을 주축으로 하는 대학생 씨클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녹번이 이식되지 않았다.'는 발언의 의미이다. 반면 전남대 학생운동사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념 씨클, 민사련은 광주일고의 '광랑'이 이식되어 생긴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이제 '민사련'의 모태인 '광랑'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옮겨가보자. 이양현은 이렇게 구술한다.

면담자 : 그 '광랑'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구술자 : '광랑'이라는 서클은 화랑이 신라의 역사에서 역임했던 그런 역할, 소외된 땅 전라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보자고 만든 씨클이었지요, 4·19 당시¹⁴⁾ 활약했던 항토개혁단

12)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이양현, 17쪽

13)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대담집> 이홍길, 전홍준 대담 (대담자 황광우, 구술자 이홍길, 전홍준, 때: 2011년 10월 17일, 곳: 금수장)에 의하면 이홍길은 이렇게 말하였다

"황: 녹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 녹번의 주류는 광고 12회 김홍명, 김원기가 녹번의 주류야. 그 애들이 만든 거야. 11회는 박석무 혼자고, 나중에 조태일, 양성우가 합류하지, 10회는 나 혼자야, 11회 박석무를 비롯하여 선배들이 영입된 케이스지, 석무가 그 애들한테 인연이 더 많았어. 석무가 전남대학교를 왔지, 전남대학교 6.3 데모를 할 때 석무도 같은 데모 팀이었어, 광고 선후배 인연이 전남대 와서 다시 살아난 거야. 같이 어울려 다니다보니까, 석무 광고 후배들이 연결됐 거지. 녹번은 거창했어, 내부의 이념 투쟁도 치열했고, 녹번의 운동 에너지화엔 석무가 강했어, 나는 이데올로기로서 자부심이 컸지."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대담집>- 이홍길, 전홍준- 6쪽

14)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대담집> 정용화 대담 (대담자 황광우, 구술자 정용화 때: 2011년 6월 17일, 곳: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사무실)에 의하면 정용화는 4.19 혁명 이후 학생 운동 내 두 흐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또 <광랑(光郎)의 과거,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서 정용화는 이렇게 자술하였다.

"광랑"의 전신은 "항토반"입니다.1960년대 초, 4.19민주혁명 이후 거세게 불던 우리나라 학생운동은 크게 두 조류를 형성합니다. 하나는 광주일고 33회 이영일(한중협회 이사장) 선배를 주축으로 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대학가를 풍미한 민족자주 통일운동이고, 또 하나는 34회 임동규(민족무에 경당) 선배 등을 중심으로 '대학으로 돌아가자'는 순결주의 노선인 농민운동(농촌연구활동)입니다. 광주일고 "항토반"은 농촌연구활동의 영향 아래 생겨난 씨클이라고 보는 관점이 타당할 듯합니다. 일종의 브나로드운동(농민계몽활동) 또는 '신상록수운동(농촌계몽활동)' 쪽으로 연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광랑(光郎)의 과거, 그리고 현재와 미래>, 정용화

의 정신¹⁵⁾을 이어받은 선배들이 만든 서클이었어요. 모토는 자아완성이구요. 자기를 완성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수신제가 후 언제 치국평천하하겠습니까? 수신제와 치국평천하를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나 사회가 문제들이 많은데, 자기 혼자 수신하고 잘 산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변혁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세계사에 빛나는 민족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하는 아주 좋은 서클이었어요. 그 때 일고에는 '광랑' 이 있었고, 광고에는 '녹번' 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양쪽 학생들끼리 교류하고 그러면서 지식도 넓히고 인간관계 폭도 넓히고, ... 출세한 사람들도 많고, 감옥 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전대 병원장 했던 강삼석 선생님, 전대 주석중 교수, 삼성한의원 나웅인 원장, 고현석 군수, 보건복지부장관 했던 김화중씨, 국회의원 정상용, 청와대 인사수석 했던 정찬용, 평동 사무처장 김희택, 권오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 '70, 80 동지회' 회장 최철, 다 광랑 멤버였어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 했는데 그 공부한 놀음이 절반은 감옥살이를 살았죠...(웃음). 저희들 서클 멤버들이 징역 산 횟수를 다 합치면 몇 백 년 될 겁니다.¹⁶⁾

그러니까 광랑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체제저항적 의식을 고무하는 이념 씨클이자, 동시에 한국 사회를 향도하는 역사적 책임을 자임한 엘리트 청소년들의 모임이었다. 광주일고라는 고교 자체가 전국 6대 명문고 안에 들어가는 명문고였으며, 그 광주일고 학생들 중에서도 광랑은 독특한 역사적 소명감을 자부한 씨클이었다. 신라의 화랑도에서 빌려온 광랑의 이름이 이것을 증거하지 않는가? 청소년 시기 누구나 품게

15) 광랑의 창립멤버 백이호는 당시의 기억을 이렇게 회고한다.

"1962년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이다. 그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광주일고 향토반에서는 안좌도로 농촌계몽 및 봉사활동을 나갔다. 30명 이상의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그 봉사단에 김영후, 박종회, 양정화, 이재형도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 9회 회원 중에서는 누가 그 봉사단에 참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목포에서 출발한 작은 배의 뱃머리에 앉아 시원하고 끈적끈적한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한참을 갔던 것 같다. 그 섬의 학교 교실에 숙소를 정한 우리는 농사일도 돕고, 야학에서 공부도 가르쳤다. 마을 주민 들 특히 젊은 층들과 어울려 기념사진도 찍고 푸짐한 음식도 맛본 기억이 난다. 섬을 떠나기 전날에는 헤어지는 것이 섭섭해서 아산의 봉우리에서 마을 처녀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먹거리를 나누어 먹고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도 난다. 엄청나게 크고 사나운 모기들이 많아 두꺼운 담요도 들고 우리를 물고 괴롭혔던 기억도 난다. 농촌봉사 활동에서 돌아 온 우리는 학교 교지에 글도 써내고 모임도 갖게 된다. 주로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발표하거나 팸플릿 형식의 몇 쪽 짜리 자체 회지를 만들기도 했다. 그 당시 내가 거주하던 광주시 구동 하숙집에 모여서 양정화, 이재형, 조영호군 등이 가리방으로 열심히 글을 썼던 기억도 난다. 그 후 우리는 박주근 선배를 만난다. 그의 안내를 받아 전남대 농촌봉사 클럽 "밀알(?)"에 참가하여 각종 교육을 받았다. 그 때 합석한 선생님이 광주에 가끔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씨알의 역할에 대한 공부도 했다. 씨알이 썩어야 다음 씨를 틔울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침 받기도 했다. 전북에 있던 가마골을 방문해 김준선생님의 가르침도 받았다. 우리는 연탄을 배달하여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김민영군의 차당개서 연탄 나르는 우리에게 많은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격려했던 기억도 난다."

<백이호의 광랑 창립 이야기>에서 발췌함

16)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이양현, 30쪽

되는 영웅주의적 야망에 대해 굳이 논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만화를 좋아하는 것이나 청소년들이 입지전적 인물을 흠모하는 것은 모두 성장기의 한 특징이다. 광랑 회원들의 징역 횟수가 수 백 년이 넘게 되었다면, 이렇게 민주주의의 제단에 젊음을 바친 이념 씨클이 있었다면, 저변에 흐르는 사춘 소년들의 선민의식쯤이야 용서를 해주어도 무방할 것이다. 과연 광랑 회원들은 무슨 책을 읽었고, 무슨 이념의 세례를 받았을까?

2-2-2, 광랑의 이념적 특질에 대하여

구술자: 일주일에 책 2~3권씩을... 그 때만 해도 컷도 그림도 없는 아주 딱딱한 책들을 그것도 일주일에 두 세권씩 읽어야 되었어요. 헌 책방에 가가지고 좀 넘새나는 책들도 읽었구요...

면담자: 어떤 책들인데요?

구술자: 사회주의에 대한 책들이었지요, 4·19 때 그런 책들이 유통되다가 5.16 쿠데타 이후 헌 책방에 굴러다니기 시작했지요. 반공법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한 권 구하면 몰래 나눠 보고 그랬죠. 문병란 선생님이라 그런 책을 놓고, 누군가 발설하면은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손을 포개가지고 맹세를 해(웃음),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던 기억이 납니다.

면담자: 그럼 문병란 선생님이 광주일고의 선생님이셨어요?

구술자: 당시 일고 선생님이었죠.

면담자: 선생님이셨는데 학생들이랑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¹⁷⁾

광랑의 회원들이 고교 시절 무슨 책을 읽었을까? 구술자는 헌책방에 굴러다니던 사회주의 관련 책자를 입수하여 몰래 읽던 추억을 회고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기 못한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오고 있다. 시 <직녀에게>의 주인공 문병란 시인이 30대의 젊은 시절 광주일고에서 교편을 잡았다는 것, 광랑의 회원들과 함께 이념 서적을 탐독하였다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과 함께 이념 서적을 읽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시각으론 납득하기 힘들다. 광랑의 이념적 특질을 탐색하다 보니, 광랑의 청소년들과 함께 시대를 아파한 교사들의 이름이 불거져 나온다. 알고 보면 광주일고 출신자들이 민주주의의 제단에 과감하게 그들의 젊음을 헌납한 데에는 다 나름의 사연이 있었던 것이다. 첫째 광주 학생운동 기념탑의 영향이 있었고 둘째 광랑과 같은 이념 씨클의 활동이 있었으며 셋째 학생들과 영혼을 교감한 뜻있는 교사들이 있었던

17)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이양현, 27쪽

것이다. 문병란 선생은 그 중 한 젊은 교사였다면, 1960년대 후반 광주 일고의 교실에서 사자후를 토한 또 한 분의 교사가 있었다. 바로 김용근¹⁸⁾ 선생이다. 이양현의 구술을 듣자.

구술자 : 그렇죠. 그 때 아주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김용근 선생님이라고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셨고, 일고에선 역사 과목을 가르치신 분이었는데, 교회의 장로이기도 하였고 또 운동도 잘 하셔서 고교 농구 감독도 하였고, 그러면서 바이올린도 켜시고 그랬어요. 세계사를 갈쳤는데 보통 국사나 세계사 갈치면 그냥 암기시키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역사를 보는 사관을 갈친거야, 이 양반이. 세계사가 발전해 온 과정을 총괄 해부러, 이 양반은 책은 뒷주머니에다가 포개 넣고 우리들에게 역사를 보는 눈을 가르친 거지. 선생님이 자기는 기독교 신자면서 우리들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담배를 주면서 담배를 피라고(웃음). 어떤 삶의 방법, 인생관, 가치관 이런 걸 형성해주신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 옆에 문병란 선생님이 계셨고,..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죠.¹⁹⁾

한 알의 불씨가 광야를 불태운다는 말 그대로, 광주 일고 교실에서 한 분의 교사가 수 천 명 젊은이들의 영혼을 불태우고 있었다. 김용근 선생에 대한 깊은 영향은 이양현만이 아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된 모든 광주일고 출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자술한다. 김용근 선생이 토해낸 사자후의 기억은 모든 광주일고 출신자들의 뇌리 깊은 곳에 아로새겨져 있다. 이양현과 고교 동기이자 서울로 대학을 간 정찬용(광주일고 14회)에 의하면 김용근 선생은 수업 시간에 “역사의 흐름에 어떻게 우리가 맞춰가야 하는가? 역사의 큰 흐름 속에 맞춰야 한다. 지금보다 많은 사람에게 권한과 자유가 분산되고 있는 것이 역사의 발전 과정이다.”²⁰⁾고 말씀하였다고 기억한다. 마찬가지로 서울로 대학을 간 최권행(광주일고 17회) 역시 당시 광주일고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한다.

18) 김용근 선생은 1917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목포영흥보통학교와 평양송실학교를 졸업하였다. 1937년 영광에서 야학 교사를 하던 중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후 연희전문학교를 다니던 중 1941년 독립운동으로 2년 6개월간 전주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45년 4월에 석방되었다. 해방 후 경북고등학교와 전주고등학교에서 국사를 강의하다 1960년대에 광주 일고와 인연을 맺었고, 칙첩 항토반의 지도교사를 맡았다. 1973년 전남고등학교로 옮겨 근무를 하다가 1976년 전남고 학생 시위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후 고향 강진으로 낙향하여 농사를 지었다. 1980년 제자 윤한봉과 정용화를 강진 자택에 보호해 준 일로 또다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보, 서증, 일고 80년사:1920-2003>, 695쪽에서 발췌.

19)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이양현, 28쪽

20)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정찬용, 34쪽

김용근 선생님이라고 하는 역사 가르치셨던, 일제시대에 독립운동도 하셨던 아주 걸출한 선생님이 계셨고 그 분을 통해서 민족사에 대한 자각이랄까, 이런 각성을 했던 것 같구요, 그리고 문병란 선생님도 현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최갑진 선생님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분이 <씨알의 소리> 독자이시고 함석헌 선생님을 각별하게 따르는 분이었는데,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제가 <씨알의 소리> 광주일고 보급책 같은 거를 맡았어요, 아마 50부 정도를 팔았던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팔러 다니면 그 날로 순식간에 다 팔렸어요, 학생들의 현실 의식, 민족의식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나마 우리 사회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눈이 떴다고 할까요.²¹⁾

행복한 고교생들이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후배들이 있는 것도 행복한데 훌륭한 선생을 만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광랑의 이념적 특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구를 위해 중도에 유산된, 1970년 11월 학생의 날 기념행사는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3일간의 대화'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이 심포지엄의 주최가 바로 향토반²²⁾이었던 것이다. 첫째 날 이길동이 E. 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요약 발표하였고, 둘째 날 송종현(17회)이 '학생의 현실 참여 타당한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송종현이 발제하는 과정에서 김지하의 '오적'을 일부 발췌하여 낭송하였는데, 당국은 불온한 시를 낭송한다는 이유로 심포지엄 행사를 중지시킨 것이다. 다음 날 양태열은 '동학혁명과 학생운동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오광호는 '학생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행사가 중지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지하는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저항시인이었다. 광주일고의 고교생들은 그 해 6월 '오적'이 유포되자마자 적극적 관심을 기울였음을 위 심포지엄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적'의 주조를 이루는 '저항과 비판 정신'은 바로 광랑의 이념적 특질과 맞닿아 있었다. 양태열이 주목한 동학혁명 정신은 197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적 기조였던 저항적 민족주의의 산실이었다. 동학혁명 정신과 이어지는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은 1970년대 광주 지역 학생운동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었던 이념적 특질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송종현이 발표한 '학생의 현실참여'나 오광호가 발표하기로 예정되었던 '학생활동의 의의와 가치'는 모두 4월 혁명의

21)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최권행, 4-5쪽

22) 광주일고 47회 광랑 회원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권오걸, 김동준, 송종현, 양태열, 오광호, 오국영, 이승식, 이훈우, 조영권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의 글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학생은 역사를 책임져야 하는 나라의 지식인이라는 소명의식을 피력하였을 것이다. 모두가 4월혁명처럼 학생들이 나서서 독재 권력을 민주화해야 한다는 맥락의 혁명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이었을 것이다. 고교생이 E. 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발제하다니? 놀라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얼마나 카의 논지를 이해하며 읽었을까 의심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1970년대 후반 기 대학생들이 읽던 ‘역사란 무엇인가’를 광주일고의 학생들은 고교 시절 탐독하였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다.

2-2-3, 광랑의 실천적 특질에 대하여

광랑 회원들의 실천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광주일고 16회 졸업자인 최철은 향토반의 농촌봉사활동에 대해 이렇게 구술한다.

구술자 : 당시에는 요 뒤가 다 숲이었어요. 여기서 단풍나무를 심어놨던가 그랬을 거예요. 이 숲 속에 와서 토요일 오후에 독서발표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웃음)

면담자 :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젊은 청년들의 진지한 모습이었던 것 같네요.

구술자 : 그랬죠. 저희들은 해마다 농촌 봉사 활동을 갔습니다. 저희들이 2학년 때 농촌봉사활동을 어디로 갔었나면, 저기 화순에 있는, 화순동곡에 굉장히 깊은 골짜기였어요. 화순에서 버스를 갈아 타가지고 지금 유격훈련장 있는 데데 거기서 버스를 내려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무슨 장비가 없어가지고, 시골 운동회에서 쓰는 차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빌려가지고 농촌 봉사를 가는데, 그 차일파이프가 (손가락으로 파이프 두께 모양을 그리며) 이렇게 굵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그 30리 길을 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일주일간 농촌봉사활동을 했어요. 가서 이밭도 해주고 동네 소독도 하고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저희 2학년 때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연탄배달을 했습니다. 고생, 고생 좀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커멓게 연탄배달도 해보고 그런 일을 하고 했습니다.²³⁾

역시 학생운동의 꽃은 시위이다. 그리고 모든 시위는 조직적 역량의 분출이다. 따라서 시위를 전개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인적, 조직적 역량이 축적되어야 한다. 광주일고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거의 해마다 시위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념 씨클들의 활약에 힘입은 것이다.

23)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최철, 5-6쪽

이양현은 광주일고 14회이다. 이양현의 동기생들 즉 정상용, 김희택, 나병식, 주석중, 박영규, 김영신은 1968년 3월 중순, 미국의 프에블로호 나포 사건을 항의하는 시위를 감행한다. 최철은 16회이고 최권행은 17회이다. 최철과 최권행의 동기생들은 1969년 11월 수업을 거부하고 강당에 집결하여 ‘참스승, 참학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일고의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했는가? 1969년 고교 시절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감행한 최권행의 다음 일화는 당시 광주일고의 분위기, 그리고 향토반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저희들이 1학년 때 제가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소풍을 가서 해산하기 전에 각 반 반장을 통해서 작은 편지가 들어왔어요. 편지 내용은 3선 개헌을 반대하는 시위를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내로 내려가서 바로 해산하지 말고 총장로 입구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면서 3선 개헌 반대시위를 하자 이런 문구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향토반 친구가 그걸 보냈었던 모양인데, 어쨌든 그걸 받고서 그날 총장로 입구에서부터, 대오를 정비해가지고 구호를 외치면서 학교까지 들어왔었어요. 제가 아마 1학년 1반장이어서 맨 앞에 서게 되고 (웃으면서) 구호도 선창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근데 그날 집에 갔는데 밤에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당시 교장실에 중앙정보부 관계자들이었던 같아요. 전혀 그 학교에서 보지 않았던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과정을 낱낱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대로 이야기 할까요. 우리가 3선 개헌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지가 와서 시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와서 일부 다시 나가자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의사표시는 했으니까 뭐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해산하자고 했다. 그래서 해산했다. 너무 천진하게 이야기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계획적으로 오랜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뭔가 큰 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려고 했었다가 내 이야기를 듣고서 뭐 상당히 우발적인 거다 판단을 하고 그 뒤로 뭐 별 문제 삼지 않았죠. 근데 그때 담임선생님이 인제 저한테 아주 걱정을 하면서 너 이리다가 너 장래를 망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각별하게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학생들이 다 3선 개헌에 반대하고 저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위를 했었어요. 이백명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총장로를 누비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갔었으니까 그게 작은 사건은 아니죠. 보도가 되고 그랬다면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들의 데모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우리 일고생들한테 좀 자연스러운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선생님들의 영향도 있지만 학생탐을 늘 일상적으로 가까이 한데서 오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²⁴⁾

24)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최권행, 6쪽

2-3, 정용화의 자술

정용화는 18회이다. 당연 광랑의 주축 멤버이다. 그가 동기생들과 함께 주도한 성토 대회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정용화는 1972년 고교 시절 벌었던 성토대회를 이렇게 자술한다.

1972년 6월 21일 수요일 오후, 점심시간부터 7째 시간까지 학생회장인 이기상과 신중하게 학생과장 김 모 선생에 대한 축출문제를 논의한 저는 당시 3학년으로서 학생회 총무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날 밤 1차 주동자 13명을 소집해 ‘민주적 교육풍토 조성 및 폭력교사 축출을 위한 성토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당시 성토대회 주동자는 이기상(당시 학생회장), 송용일(부회장; 고인), 정용화(당시 총무부장, 성토대회 주모), 김기정, 김요왕, 김영채(현 교사), 김용구, 박성환, 신쌍식, 장병우(현 판사), 정태석(전 광주은행장), 조장현(전 언론인), 최동남(현 아시아나항공) 등입니다. 6월 25일(일요일), 1차 주동자 13명과 후속 주동자 15명 등 28명이 화정동 피정센터에 모여 선언문(격문), 결의문 등에 서명을 했습니다. 6월 26일(월요일), 당시 광주일고 3학년 학생 6백여 명은 오전 8시께부터 오후 6시께까지 강당을 점거한 채 ‘민주적 교육풍토 조성 및 폭력교사 축출을 위한 성토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당시 교장선생님과 김 모 학생과장이 전출되고, 주동자 13명이 모두 무기정학을 받았습니다.²⁵⁾

이제 광랑의 이념적 실천적 특질을 연구하는 본 조사는 정용화의 자술을 통해 선배 이양현, 정찬용, 최철, 최권행의 구술을 대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용화는 광주일고를 18회로 졸업했고, 재학 당시 광랑 모임의 주축이었으며, 이후 광주 지역 학생운동에서 민청학련 선배들과 긴급조치 세대 후배들 간의 중계자 역할을 하였던 까닭에 1970년대의 학생운동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정용화씨가 직접 자술한 진술서를 통해 광랑의 전체적 모습을 총괄하자.

“자, 이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1970년대의 학생운동 현황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저 자신이 어떻게 형성됐고, 제 사고의 인식체계가 어떤 바탕에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서언에 걸맞게 “ 1970년 3월 광주일고 1학년에 재

25) 광주민중항쟁 31주년 기념 학술토론회(2011. 05. 27), 민주장정 50년, -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의 재조명(1960년대 -1970년대) -1970년대 후반 광주전남지역 청년-학생문화운동, 정용화

학 중이던 저(정용화)는 이미 그해 2월 고교 1년 선배인 오국영²⁶⁾, 이훈우²⁷⁾ 등에 의해 광주일고 교내 독서모임인 ‘향토반’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됩니다.”라고 자술한 뒤 바로 이어 향토반의 독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회고한다.

그 모임에서 제일먼저 독서발표를 위해 읽은 책이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 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역사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대학에 가서 ‘역사학’ 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그 다음 앙드레지드의 “선원교향악”, 헤르만헤세의 “심다르타”, 달가스, 유달영 등의 농촌과 농민에 관련된 책들을 비롯한 민족적 에너르기의 확대를 위한 내용의 서적들, 그리고 이 에이치 캐(E.H.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 등을 읽어가면서, 철학과 종교, 역사와 민족,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5월, 당시 장준하 선생이 발행인인 “사상계” 에 김지하 시인의 “오적” 이라는 풍자담시가 실리면서 필화 사건이 발생하였고, 세상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는 것을 선배들을 통해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광랑’ 모임의 선배들에²⁸⁾ 의해 세칭 ‘의식화’ 되기 시작했습니다.²⁹⁾

정용화가 향토반의 역사와 성격에 대해 자술한 내용은 앞에서 이양현과 최철이 구술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광주일고 ‘향토반’은 1960년 4·19이후 거세게 불어닥친 농촌연구 활동에 부응코자 백이호, 양정화, 이재형 선배 등을 주축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학생회 활동에 열심인 학생들을 끌어들여 광주일고 교내 씨클로 태동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임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며칠간씩을 농촌연구 및 봉사활동으로 할애하여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체계를 확립해 나갔으며, 방학 이외의 학기 중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 학교에서 독서발표와 토론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나갔습니다. 당시 ‘향토반’은 ‘영어회화반’, ‘문예반’ 등과 같이 1주일에 한번 있는 공식적인 특별활동 부서로 인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1년 4월 ‘향토반’은 공식 특별활동 시간에서 제외되었고, 모임 이름을 선배들이 애칭으로 불러온 “광랑(光郎)”으로 바꾸기로 하고, 스스로를 ‘광랑도(光郎徒)’라 불렀습니다.”³⁰⁾

26) 일고 47회; 후에 광주일고 학생회장에 피선됨

27) 일고 47회; 졸업 뒤 전남대 상대에 재학하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수감 됨

28) 광랑 선배들 : 고현석(전 곡성군수), 강삼석(전 전남대학병원장), 조영호(전 한겨레신문), 박경호(유풍양행), 김희택(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박영규(현 세무사), 이양현(5.18항쟁지도부 기획위원), 정상용(전 국회의원), 주석중(전남대 교수), 고아석, 김태수, 고희일(전남대 교수), 김태승(아주대 교수), 정재현(충북대 교수), 최 철(광민회 공동대표), 권 오걸(민주화운동공제회 상임이사), 송종현, 양태열, 오광호(충북대 교수), 오국영, 이길동, 이승식, 이훈우 등등.

29) 광주민중항쟁 31주년 기념 학술토론회(2011. 05. 27), 민주장정 5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의 재조명(1960년대-1970년대) -1970년대 후반 광주전남지역 청년·학생문화운동, 정용화

1971년 당시 고교 2년에 재학 중이던 정용화에게도 어김없이 격동의 역사가 다가 오기 시작했다. 1971년 4월 24일, 제7대 대통령후보인 김대중씨의 유세가 있어 참석했고, 1971년 7월 1일, 삼선개헌과 부정선거의 후유증으로 얼룩진 정국 속에서 박정희씨가 제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광랑’은 1971년 여름방학에도 예전과 다름 없이 3일간에 걸쳐 연탄장사, 수박장사, 고물장사 등으로 경비를 모아 3박 4일 동안 ‘농촌연구 및 봉사활동’을 다녀왔으며, 학교 밖에서 선배들과 함께 독서발표 및 토론 활동을 계속했다. 당시 “학생운동(學生運動)”³¹⁾이라는 책자에서 읽었던 서울대 문리대에서 나온 “민주주의여! 조종(弔鐘)을 울려라!”라는 선언문이 광주일고의 고교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1960년대의 광주일고에는 4.19의 전통이 깊이 새겨져 있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1970년대 초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1980년대 이후가 되면 학생운동의 주체가 온전하게 대학생으로 옮겨가지만, 1960년대 학생운동은 고교생과 대학생이 함께 수행하는 운동이었고, 이러한 흐름이 1970년대 초반까지 이어내려 온 것이다. 요즘의 고교생에게는 경천동지할 현상이지만 50년전의 고교생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역사를 책임지는 지식인의 집단으로 자처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발표자(정용화)의 일기 메모에는 아무 논평 없이 10월 유신에 대해 이렇게 적어 놓았다.

“.....1972년 10월 17일 화요일 오후7시, 비상계엄 선포(2개월 시한부 계엄령). ① 의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현행 헌법 일부 중지. ② 중지된 헌법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 ③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 ④ 연말이내 헌정질서 정상화: 대통령 박정희 ⑤ 포고문 제1호: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금지/ 언론, 출판 사전검열/ 각 대학 휴교/ 직장이탈 금지(유언비어 금지)/ 영장없이 구속 등등-육군대장 노재헌”³²⁾

30) 같은 문건.

31)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후예인 광주일고 출신 선배들이 만든 잡지형태의 책자. 서울지역의 대학에 진학한 광주일고 선배들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1년에 1권을 ‘학생의 날’ 이 있는 11월쯤 발간된 것으로 기억됨. 주로 학생운동의 동향과 일지, 그리고 각종 선언문이 게재되었던 것으로 기억됨. 광주일고 39회(조영호), 40회, 41회, 42회(선경식) 등의 선배들이 제작하였으며, 1집부터 4집까지 출판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음.

32) 광주민중항쟁 31주년 기념 학술토론회(2011, 05, 27), 민주장정 5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의 재조명(1960년대-1970년대) -1970년대 후반 광주전남지역 청년학생문화운동, 정용화

3. 이념 씨클, '피닉스' 연구

1970년대 초반 광주 지역 학생 운동을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이양현의 구술은 또 하나의 힌트를 남긴다.

면담자 : 일고에 '광랑' 이나 '향토반' 이거 외에도 이념 씨클이 있었나요?

구술자 : 불사조가 있었죠, 이념적으로 좀 약하지만 그런 이념 씨클들이 있었는데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공현씨라고 우리 2년 선배인데, 그 선배들이 과격하지 않은 사람들로 좀 온건한 씨클을 만들었죠.³³⁾

피닉스는 무엇인가? 어떤 성격의 이념 씨클이었을까? 향토반이나 광랑처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피닉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우리는 <광주고보, 서중, 일고 80년사; 1920-2003>를 들추어 보았다. 이 자료의 675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따라서 70년대 학생운동은 막연히 문제만 제기하는 차원을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즉 학생운동이 이념과 방향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일제하 광주 학생 독립 운동의 배후에 성진회, 무동회와 같은 독서회가 존재하였던 것과 같았다. 그와 같은 동아리가 일고에는 '광랑' 이나 '피닉스' 와 같은 봉사 동아리, 원시림과 같은 문학 동아리, 전남대학교에는 'RCY', '민족사회연구회', 서울대의 '후진국 사회 연구회' 등이 있었다.³⁴⁾

3-1, 피닉스의 실천

피닉스는 서울대 학생 운동사에서 명성을 떨친 안평수씨(일고 12회)가 그의 동기 윤재근, 이공현 등과 함께 만든 씨클이다. 1기의 회원들은 20명이나 되었고, 1기와 2, 3기의 회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2기의 회원으로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있고, 5기의 회원으로는 배기선, 지병문 전 의원 등이 있다. <광주고

33)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이양현, 31쪽

34) <광주고보, 서중, 일고 80년사; 1920-2003>, 675쪽.

보, 서중, 일고 80년사; 1920-2003>은 1974년 10월에 있었던 유신체제 반대 교내 시위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다.(670쪽)

1974년 10월 21일 당시 3학년이었던 광주일고 50회 30여명이 넘는 동문들이 주축이 되고 51회 동문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한 교내 시위가 벌어졌다. 그날 운동장에 운집한 일천여명이 넘는 학생들은 ‘유신헌법 철폐,’ 구속학생 석방 ‘,’ 군사독재 물러가라 ‘,’ 언론자유 보장하라 ‘의 5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대열을 형성했다.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시위진압용 차량을 앞세운 경찰들과 정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학생들이 가두로 나가기 위해 스크럼을 짜고 정문으로 몰려들자 선생님이 교문에 매달리는 등 적극적으로 저지하여 정문돌파는 이루어지지 못했다....학생들은 더 이상 문밖으로 나갈 엄두는 내지 못하고 연단에 올라 한참동안 성토회를 열고 학생독립운동기념탑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후 시위를 끝내고 교실로 들어갔다....당시 시위를 주도한 학생은 50회 지병주, 이항규, 정경연, 김상집이었으나 지병주와 이항규가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훈방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지병주 외 몇 명은 무기정학 조치를 받았다.³⁵⁾

바로 위 사건의 주동자 지병주, 이항규가 피닉스의 회원이었다. 본 연구자와 나눈 지병주의 대답에 의하면 광주일고엔 광랑과 피닉스 두 개의 이념 씨클이 있었다. 74년도 3월 민청학련이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있던 시기, 지병주는 전남대의 최철을 접촉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 : 우리 일고에 그 당시에 이념서클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피닉스, 하나는 광랑. 대학생들이 씨클에서 하는 초보적인 단계의 공부를 했지요, 독서토론도 하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왔었지요. 그때 74년도는 워낙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광주에서 윤한봉 선배, 최철 선배를 3월부터 접촉했어요, 고등학생도 합세하라는 것이었지요.

황 : 그러니까 74년 10월의 시위가 봄부터 계획되어 왔네요.

지 : 최철 선배가 검거되어 엄청난 고문에 시달려서 제 이름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 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4월 19일 날 백영흠 목사님 댁에서 고등학생들끼리 4.19 기념 행사를 하고 집에 와서 자고 있었는데, 4월 20일 월요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새벽 5시 경에 형사들이 검거하러 와서 잡혀갔어요, 잠깐 다녀오면 된다고 부드럽게 해서 순순히 연행에 응했는데 까만 지프차에 올라타는 순간 지프차 뒷자리에 앉은 나를 보고 ‘어디 빨갱이 새끼가 의자에 앉아있냐, 끌어.’ 라고 해요, 대공 분실 지하에서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민청학련과의 관계를 물어라는 것이어요, 그때 불 것도 없었는데, 4박 5일로 맞았어요, 그때 고문이 참 무서웠어요, 자퇴서

35) <광주고보, 서중, 일고 80년사; 1920-2003>, 670쪽.

와 서약서를 쓰고 빠져나왔죠.

황 : 그럼 4월 달에 고초를 당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10월 시위를 기도한 것이네요? 제 기억에 그 날 날씨가 좋았어요. 2천여 명이 나와서 그렇게 재미있고 멋있게 데모해 본 것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지 : 일도 못해 보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이대로 졸업할 수 없다. 한 판 붙기로 한 거죠. 광량의 정경연과 만나 주도한 거요. 서른 세 명이 모였어요. 구체적인 준비는 8월부터 해서 내가 그때 9월 달 3,4분기 등록금을 가지고 식사비로 썼어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양이라든지 그런 시골에 모이면서 준비를 차근차근 했었고.

황 : 선언문은 누가 작성했던가요?

지 : 나랑 경연이하고 썼어요. 그때 시대가 워낙 어려워가지고 사건 후 잡히면 어떻게 돼나 솔직히 겁도 났어요. 경연이는 유서를 쓰고³⁶⁾

1974년 10월 시위가 가두로 진출하지 못하고 교내 시위로 그치고 말자 1974년 11월 15일, 다시 2차 시위가 발발했다. 11월의 2차 시위를 주도한 이들은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손호상, 신민호, 박석면 등이었다. 시위는 각 반 반장과 유도부 학생들까지 합세하여 계획되었다. 먼저 신민호가 호루라기를 불며 복도를 돌면 각 반 반장들이 학생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선동하고, 유도반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교무실 문을 몸으로 막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연출하였다. 게다가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집결시키지 않고 아예 교문을 뛰쳐나와 대열을 짜서 충장로를 거쳐 도청 앞에 도착하여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시위는 예정대로 전개되어 학생들은 ‘유신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정을 빠져 나왔다. 시위행렬은 제지하는 경찰과 쫓고 쫓기는 공방전을 거듭하면서 도청 앞에서 공원 광장으로 갔다가 결국 학교로 돌아와 자연스럽게 끝났다. 학생들은 가두시위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승리감에 모두 신이나 있었다. 51회 손호상, 박석면, 신민호 3명의 주동자가 광주 경찰서 대공분실에 끌려가 3일간 조사를 받고 훈방처리로 시위사건은 마무리되었다.

74년 10월 시위의 주동자가 지병주, 정경연(광량)이었다면, 74년 11월 시위의 주동자는 손호상과 박석면이었는데, 지병주와 손호상은 모두 피닉스 씨클의 주도적 회원이었다. 그만큼 74년의 시위와 이어지는 75년의 시위에서 피닉스 회원들은 중심

36) <합수 윤한봉 기념 사업회, 면담집>, 지병주 대담에서

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만 피닉스 회원들의 경우, 대다수가 졸업 후 서울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한 결과, 전남대에서 민사련으로 재결집한 ‘광랑’처럼 이후 광주 지역 학생 운동사에 인상 깊은 자취를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1980년 5월 광랑 출신의 이양현과 정상용이 도청을 지켰듯이, 피닉스 출신의 안평수와 지병주는, 서울에서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일에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광랑과 피닉스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가? 앞에서 이양현의 구술이 시사하듯 피닉스의 이념 성향은 광랑의 그것보다 온건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40년이 지나 버린 이 시점에서 두 씨클의 이념적 성향을 객관적 지표로 들추어내기란 무척 힘들다. 다행히도 우리에게 지병주가 작성한 고교 시절의 일기장이 확보되어 있다. 지병주씨가 고교 시절 3년 동안 작성한 피닉스 모임 일기장³⁷⁾에 의거하여 판단해 보건대, 피닉스 회원들의 정치적 이념은 자유 민주주의와 혁명적 민주주의의 가운데에 있으며, 저항적 민족주의의 연장 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부 광랑 회원들이 보여준 사회주의적 경향은 피닉스에 찾아볼 수 없다. 1972년에서 1974년의 시기에 학교를 다닌 지병주의 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3-2, 피닉스의 이념적 특징

“우리는 피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40년이 지난 빛바랜 일기장이언만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비문은 힘차다. 그 밑에 “다하라 충효, 이어라 전통, 길러라 실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구호는 광주 일고의 교훈이다. 일기장을 넘기면 “PHENIX 不死鳥 나는 불사조를 사랑한다.”라고 써어 있다. 사춘기 소년들의 모집단에 대한 애틋한 애정일 것이다. 그 밑에는 저 유명한 김춘수의 꽃이 또렷한 글씨로 새겨져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로 시작되는 김춘수의 시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는 사춘기의 순수한 우정, 순결한 사랑을 가장 쉬운 용어로 옮겨놓은 시

37) 이 일기는 피닉스 모임의 공식 기록물은 아니다. 당시 회장을 맡았던 지병주의 개인 기록물이다.

대학 노트 한 권 분량의 이 일기에는 지병주가 피닉스 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모든 의식의 각성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일기의 절반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편의상 한글로 옮겨 실는다. 이 자료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보관되어왔다는 것이 기적적인 일이다.

일 것이다. 다음 쪽에는 지병주가 회장으로 운영되는 피닉스 9기³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일기장은 지병주 개인의 일기를 넘어 피닉스 9기의 공동 일기인 셈이다. “벌칙 : 결석시 200원, 지각 50원 5분마다 10원씩 증가”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회원들의 시간임수 규율이 그들에게도 확보하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3월 25일 열린 제2회 모임에서는 “치철의 일생”을 다루었던 모양이다. “민주주의는 모험과 신념, 용기와 비전을 요구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치철의 생각을 일기는 채록하고 있다. 이어 치철의 일대기를 요약하고선 다음과 같은 치철의 연설을 옮겨놓았다. “참된 애국자는 국민들에게 그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없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빼앗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가 없어도 된다는 사실, 즉 이 나라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 전체의 자각과 협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붙여넣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차적인 의미에서의 애국자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어 4월 8일에 개최된 제3회 독서회에서는 김구의 <나의 소원>을 다루었다. “나의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 독립한 제나라의 민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에 나는 독립 정부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소원이다. 나는 공자, 석가, 예수의 도를 배웠으나 그들이 합하여서 세운 천당 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대 민족을 이끌고 가지 않으리라.”는 문구를 적어놓고 있다. 치철의 민주주의와 김구의 민족주의는 당시의 교과서들도 다루는 내용으로서 다분히 체제내적 이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4월 19일이 다가온다. 지병주의 일기는 다섯 쪽에 걸쳐 4월 혁명에 관한 그들의 학습을 메모하고 있다.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대학정신은 이성, 진리, 자유이다.” 요즘의 고등학생들은 감히 흉내도 내기 힘든 언어들이다. 이어 일기는 “영원히 자랑스러워야 4월 혁명의 달이 오늘날 슬프게 인식되는 그 자체가 슬픈 일이 아닌가.”라는 구절을 적고 있다. <서울 대학 신문>에서 따온 것이다. 그들 역시 정용화처럼 <학생운동지>라는 문건을 읽었던 모양이다. 이 문건에서 4월 혁명의 경과를 공부한 것 같다. 70년 5월 사상계에 게재된 <학생 운동의 나아갈 길>

38) 명단(9기)

1. 지병주 2. 류우연 3. 윤영남 4. 이근우 5. 강성일 6. 박상배 7. 박환석 8. 정찬형 9. 이항규 10. 빈재룡 11. 장규상

도 공부한 것 같다. 1970년 4월 19일 4월 혁명 1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와 고려대학교 및 시내 각 학교 학생 총회에서 채택하여 낭독한 선언문이 매우 인상적이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원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추 아래 미친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의 사수자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고교 1년생들이 4월 혁명에 대해 이처럼 학습하고 있었다는 것이 요즈음의 시각으로 보면 놀랍기 그지없다. 그들의 의식은 체제 내적 경향의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하면서도 체제 도전적 경향의 민주주의, 즉 혁명적 민주주의를 4월 혁명으로부터 배우고 있었다.

이어지는 5월 13일의 독서회는 고교생에 걸맞게 플로베르의 작품 <젊은 느티나무>를 다루고 있다. 지병주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비누냄새의 이미지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말 그대로 스물 두 살의 남성과 열여덟 살의 계집이라는 것이 진실의 전부인, 두 사람의 사랑이 이 작품의 내용이다. 여느 소설들과 달리 여러 면에서 독특한 느낌을 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것은 바로 그 비누 냄새다. 비누 냄새. 이걸 어쩌면 희망을 상징하는 것인지 모른다. 뭔가 신선한 것, 아늑한 것, 이국적인 것이다. 너는 밀리는 군중의 쾌쾌한 땀 냄새 속에서 비누 냄새를 맡아온 적이 있는가? 그때 너 무얼 느꼈는가? 시골집의 처마 밑에서 비누로 세수하고, 물을 버리는 그러한 아늑한 것과, 거기서 뭔가 이국적인 것을 맡지는 못했는가? 아침에 세수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서 나는 비누냄새는 희망적인 것이다. 그러한 희망적인 비누 냄새의 이미지를 이 작품의 결과와 맺어 본다면 뭔가 잡히는 게 없을까? 이 작품은 두 사람의 매력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닐까?” 나름대로 진지하게 문학 작품을 감상한 피닉스 회원 일동은 간디, 운동주, 여운형을 학습하고 이제 독일로 넘어 간다. 김성식 교수의 <독일 학생 운동사>를 흥미있게 토론했던 모양이다. 네 쪽에 걸쳐 독일의 근대사와 학생운동을 메모한다.

지병주는 “독일 학생의 자유주의는 민족적 자유주의”라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어를 기록한다. “당시의 학생운동의 독특한 성격은 실로 독자적인 행동에 있었다. 시대와 환경을 정시하고 장구한 대학의 전통을 배경으로 외적의 뼈아픈 지배를 벗어나서 시대적 보수주의에 항거하고 새로운 세대를 창조하려던 것이 독일의 학생 운동이었다. 조국의 신생과정의 한 순간 한순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 속에서 새로

일어나려고 한 것이 의식 그 때의 학생들은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격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조국에 바치려고 하였고 하느님을 굳게 믿고 조국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였으며 새로운 힘이 손과 마음에 생겨서 거룩한 조국을 위해 죽고 살겠다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학생들의 마음이 빛이 나는 것이다. 이 애국 운동으로서의 학생 운동은 그 뒤의 모든 청년 운동의 모범이 되었으며 세계사에 있어서 청년 학생들이 역사를 움직이게 한 첫 번째 현상이었다.”

한 해가 부지런히 달리고 있다. 어느덧 11월의 문턱에 들어선다. 11월이 오면 광주 일고의 학생들은 또다시 일제 치하에 항거하여 싸웠던 선배들의 자랑스런 전통을 떠올린다. 피닉스 일기장은 '타오르는 불길'이라는 제하에 이렇게 적고 있다. “굴욕으로 사느니 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장한 의기로 이 고장 젊은이들이 맨주먹으로 포악한 일제의 총 칼 앞에 항쟁의 횃불을 높이 들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에 호응하여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수만 학생들의 함성은 잔악한 일제의 가슴을 찢었으며 세계 방방에 우리의 불굴의 의기를 떨쳤으니 그날 그들이 당한 악형과 희생은 한없이 슬프고 괴로웠어도 그들이 남기고 간 불멸의 의기는 민족사에 영원히 기록될 불멸의 녹음이 되었으니 어찌 이 고장 우리들의 자랑이 아니며 뒤 따라 가는 우리들의 큰 교훈이 아니겠는가?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발휘하는데 지극히 용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일기는 광주일고 고교생들의 멘탈리티를 가장 적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기록일 것이다. 그들의 어린 마음에 새겨진 저항적 민족혼은 깊다.

오늘날 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현장 교사들은 지병주의 일기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죄와 벌>을 읽고 쓴 그의 짧은 메모이다. “작품의 가치성이나 작가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라스폴리니코프의 얘기의 줄거리를 더듬어 가며 거기서 그때 같은 인간의 필요 여부를 생각해 보고 싶다. 즉, 그는 천재적인 개인주의에 빠져 독자적인 사상의 밀반침, 초인사상 아래 일을 저지른다.” 고교생이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폴리니코프의 범죄를 ‘천재적인 개인주의’의 오류라고 규정할 수 있다니 대견스럽지 않은가? 다음으로 눈여겨 볼 것은 문제아를 바라보는 도전적 메모이다.

문제아, 혁명적 인간, 진보적 인간이 나타나야 한다. 반사회적이고 개성적인 인간만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인류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기는 어느 시대에서나 필요한 것이다.

지금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전해 있다 해도 이 이상의 단계가 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의식 구조 사고방식에 또 얼마나한 모순이 있을지 모른다. “우연과 천재”에 의하여 나타난 비범인들의 노력과 투쟁으로 우리는 지금의 발전 상태를 누릴 수 있었고 지금 정도의 사고방식을 지니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모순이나 불합리를 파괴시킬 사람도 그들이다. 고로 우리는 소위 개혁자나 광적일 정도로 자기 사상에 충실한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게 해서 안 된다. 허나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그러한 분위기(천재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로 충만 되어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될 때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비범인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비범인이라 믿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이 많아야 한다. (라스플리니코프의 초기처럼) 그런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기회를 포착했을 때 우리세계는 더한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 대부분 그들의 생각이 어리석은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실에 그들이 반론을 제기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확실한 진리고 그걸 조금도 해를 입지 않고 더욱 강해질 것이며 그게 우리는 우리의 모순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이다.³⁹⁾

4. 1975년, 그리고 일고 출신 학생운동가들

4-1, 인혁당 사형

김지하 시인은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하여 1974년 4월 24일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다가 1975년 2월 15일 형집행정지로 출감했으나 같은 해 3월 14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다시 수감되었다. 사유는 동아일보에 게재한 옥중수기였다. 1975년 2월 25일-27일 동아일보에 3회에 걸쳐 게재되었던 이 옥중수기에서 김지하는 인혁당 사건의 조작적 성격을 폭로하였다. <고행....1974>의 제목으로 시작되는 옥중수기의 요점은 이렇다.

나는 작년 4월 25일 새벽 흑산도에서 체포되었다. 목포경찰서 흑산지서의 민경사는 정중한 인사를 한 뒤, 내 두 손에 수갑을 채웠다. 음울하고 황막한 바다를 내내 나는 낯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서 지나왔다. 정보국 6국의 저 기이한 빛깔의 방들, 아득한 옛날 잔혹한 고문에 의해 입을

39) 이 일기는 노트의 중간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아마도 고2 때 작성한 일기가 아닐까 추정된다.

별리고 죽은 매마른 시체가 그대로 벽에 걸린, 환각을 불러 일으키는 그 소름끼치는 빛깔의 방들. 그 방들 속에서의 매 순간순간은 한마디로 죽음이었다. 1974년은 한마디로 죽음이었고, 우리들 사건 전체의 이름은 이 죽음과의 싸움이었다.

젓빛 하늘 나직이 비 뿌리는 날, 누군가 가래 끓는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더군요. “하재완입니다.” 나는 물었죠, “인혁당 그것 진짜입니까?” “물론 가짜입니다.” 라고 하씨는 대답하더군요.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까?” 하고 나는 물었죠. “말 마이쇼! 창자가 다 빠져나와버리고 부서져버리고 엉망진창입니다.” 하씨는 대답하더군요.

그 무렵 어느 날인가 출정하다가 한 사람이 나에게 “김지하씨지요?” 하고 물더군요. “나, 이수병이오” 하고 말합디다. “아하 그 ‘만적론을 쓰신 이수병씨요?’ “정말 창피하군요. 이거 아무 일도 나라 위해 해보지도 못한 채 끌려 들어와서 슬기로운 학생운동 통찰하는 데에 어거지 부역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법정에서 경북대학교 학생 이강철의 그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나는 인혁당의 인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잘 아는 것으로 시인하지 않는다고 검사 입회하에 전기고문을 수차례나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소위 인혁당이란 것이 조작극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⁴⁰⁾

1975년 4월 9일은 20세기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슬픈 ‘수난의 날’로 기록되어야 한다. 김지하의 증언 그대로 인혁당은 강령도 없고 조직의 규약도 없는 유명조직이었다. 박정희와 그의 하수인들이 국민들에게 적색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허구적 조직이었다. 대개의 경우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사형의 집행은 가능한 연기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집행 5분 전에 황제의 사면을 받고 목숨을 구하지 않던가? 그러나 이 나라 독재 정권은 전기 고문으로 만든 인혁당 관련자들을, 사형 선고 후 24시간도 넘기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만들어 버렸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가슴에 굵은 눈물을 뿌리게 한 날이었다. 윤한봉은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구술자: 그런데 잘 알겠지만 4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4월 9일 날 인혁당 관련 여덟 분이 사형당 하셨어, 여덟 분이 그냥 사형당해 부렸어, 그 때 내가 전남대 도서관 앞 백도 앞에 있었는데, 그 소리를 전해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일어나 또한번 맹세를 했어. ‘내 한 목숨 바쳐 이놈의 독재정권, 학살정권 맞서 싸우다.’ 악을 버려버려 질렀지.⁴¹⁾

40) <김지하 전집, 3권>, 567쪽에서 576쪽을 발췌한 것임.

41)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윤한봉, 30쪽

4-2, 1975년 광주일고 시위

인혁당의 사형 소식이 퍼지고, 이틀 후 1975년 4월 11일 서울대 농대 김상진 학생이 양심선언문을 낭독한 후 할복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선혈을 내뿜는 김상진 열사를 동료 학생들이 황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출혈이 심해 끝내 절명하고 말았다. 당국은 김상진의 죽음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였지만 소문은 삼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광주일고 51회 박석면은 형 박석무로부터 김상진의 할복 소식을 듣고서 열사의 의로운 죽음을 광주일고 재학생 모두에게 알리고 추모식을 거행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박석면은 동기생 김윤창, 임성래에게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모두 동의하였다. 1975년 4월 유신체제 하에서 일어난 최후의 고교생 시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직접 박석면으로부터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인혁당 사건이 터졌어, 4월 9일이야, 나는 인혁당 사건이 터지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애, 사건이 나자마자, 식발을 했구만, 그런데 4월 12일 날 김상진 열사가 할복해, 그때 나는 형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형님이 김상진 열사가 할복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김상진 열사에 대해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김상진씨 추도식을 계획을 하게 된 거지, 나, 김윤창, 임성래, 박종호, 박철호가 김상진 열사 추도식을 주도했어, 그리고 학생회의 이형섭과 박수만이 가담하지, 그래서 7명이 주동을 했는데, 내가 주동에 끼면 분명히 제적을 당할 것 같았어, 내가 추도사를 써야 하는데 박종호가 나 대신 추도사를 쓰기로 하고 임성래가 읽기로 합의했어, 그런데 이튿날, 박종호가 학교를 안 나와 버린거야, 내가 써준 추도사를 베끼다가 어머니한테 들려버렸어, 뺏겨버렸지, 그래서 종호는 감금당해불고, 종호가 안 나오니까, 성래는 복도만 돌아 댕겨, 할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던 추도사의 초고를 성래에게 주지, 호주머니에서 넣고 댕긴 원본을 성래한테 준거야, 3학년이 중심이 돼서 교정으로 나왔을 거야, 2학년도 나오고, 예정대로 추도식이 진행되었고, 추도식 끝나고 나는 기분 좋게 집에서 놀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나를 데리러 온 거야, 추도식이 끝나고 성래가 잡혀가 추도문을 뺏겨버렸다는 거야, 그 추도사를 누가 작성을 했느냐 심문하는데, 글씨체가 성래 글씨체가 아니라는 거야, 경찰서에서 디지게 얼어터지고, 우리 친구들 무기정학 당하고, 나는 퇴학을 먹었지.⁴²⁾

1975년의 저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인혁당의 죽음은 김상진의 할복을 불러일으

42) <합수 윤한봉 기념 사업회, 면담집>, 박석면 대담.(대담자 황광우, 구술자 박석면, 때: 2011년 7월 15일, 곳: 윤한봉 기념사업회 사무실)

켰고, 김상진의 의로운 죽음은 광주일고의 추모 시위와 박석면의 제적을 가져왔는데, 그 당시 고교생에게 제적은 죽음이었다. 정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지식의 순교는 지인들의 가슴에 의분의 물결과 송고의 감정을 일으킨다. 광주일고 재학생들은 학우의 제적 사태에 즈음하여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한다. 5월 1일 개교기념 일을 기하여 3학년과 2학년의 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약 40여명의 학생들이 치밀한 준비를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시위는 불발로 끝났다. 이 사건으로 3명의 학생이 구속되고 16명의 학생이 제적되는 등 고등학교 사상 전례 없는 희생을 치러야 했다.

한 차례의 시위를 주도한다는 것은 제적과 투옥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젊은 나이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제적을 당하는 것은 이후 정상적인 사회 진출을 차단하는 가슴 아픈 일이었다. 더욱 긴급조치를 비롯한 제반 악법의 희생양이 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고 이어 교도소에 투옥되는 과정은 길고도 지리한 고난의 여정 그 자체였다. 학생운동가들이 겪어야 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부모 형제가 흘리는 눈물을 목격하는 일이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이야 이겨내면 되는 일이나 부모 형제가 흘리는 눈물은 불효자의 죄책감을 수반하면서 어찌해볼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학교에서 제적되고 감옥까지 갖다오게 된 이들 학생운동권 출신자들을 대하는 사회의 시선은 그렇게 따스운 것은 아니었다. 사회로부터 떠밀려나온 이들이 자신들끼리 강한 유대를 맺는 것은 너무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이른바 ‘빵잼이’라고도 불리고, 혹은 ‘운동권’이라 불렀던 이들은 선배들 간의 긴밀한 유대 속에서 어두운 죽음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했다. 본 연구자 경우, 1980년 5월 18일 이후 1년간 서울의 도처를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 그때 함께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이 집 저 집 함께 떠돌아다녔던 분들을 떠올려 보면 8할이 광주 일고에서 인연을 맺은 선배들이었다. 안평수, 고영하, 문국주, 지병주 등등.

우리의 연구보고서는 1975년에서 끝난다. 이후 1976년에서 1980년에 이르는 복잡하고 광대한 전개과정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197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차지하는 학생운동의 몫은 절대적이었다. 동시에 학생운동에서 광주일고 출신자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지대한 것이었다. 전남대의 학생운동은 물론이고 서울대와 고려대를 비롯한 서울의 여러 대학에서 광주일고 출신자들을 제외하고선 1970년대 학생운동은 설명할 수 없다. 먼 훗날 이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게 될 후배 역사학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표를 작성해 보았다.

1970년대 전개된 제반의 투쟁 과정의 이면에는 아래 광주일고 학생운동가들의 선후 배간 유대가 항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⁴³⁾하고 있었다.

4-3, 1970년대 광주일고 출신 학생운동가 명단

<1970년대 광주일고 출신 학생운동가 명단>⁴⁴⁾

이름	고교	씨클 ⁴⁵⁾	대학 ⁴⁶⁾	사건 ⁴⁷⁾
	기수			
주영길	11회	광랑	서울대	69,통혁당
박석물	11회		서강대	74,민청/79,남민전
윤한봉	11회		전남대	74,민청/76,부활절/79,전대방화/80,지명수배
김남주	12회		전남대	72,함성지/79,남민전
안평수	12회	피닉스	서울대	69,3선개헌반대/80,유인물 배포
윤재근	12회	피닉스	고려대	71,전국학생연맹
안병욱	12회		서울대	69,삼선개헌반대/74,민청
김상윤	12회		전남대	74,민청/80,광주민중항쟁
송정민	12회		전남대	71,녹두지
선경식	12회		외대	71,전국학생연맹
김영철	12회			80,광주민중항쟁
김상곤	13회	피닉스	서울대	71,전국학생연맹
김경남	13회		서울대	74,민청
김희택	14회	광랑	한신대	74,민청
이양현	14회	광랑	전남대	71,교련반대/80,광주민중항쟁

43)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에 지명수배사진을 배포하여 ‘우선 지명 수배자’ 로 지목한 60명의 수배자들 중 다음은 광주 일고 출신자들의 얼굴이다.

김태홍(8회) 윤한봉(11회) 배기선(16회) 정재현(16회) 고영하(16회) 문국주(17회) 문승훈(20회) 양민호(20회) 박몽구(20회) 김태종(21회) 황광우(22회)

또, 박석물, 김현장, 이윤정, 박효선, 박관현 등 1970년대 학생운동을 이끌면서 광주 민중 항쟁의 투사로 활약한 분들도 지명수배 되었다. 60명의 명단과 사진은 아래 사이트에 있음. <http://blog.naver.com/daekyobook?Redirect=Log&logNo=50017640015>

44) <광주고보, 서중, 일고 80년사: 1920-2003>에 의거 정리한 것임.

45) 광랑과 피닉스의 경우 회원 명단을 확보하여 대조하였으나 원시림을 비롯한 그밖의 씨클은 회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46) 대학이 기재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 고교 졸업 후 바로 사회로 진출한 분들임.

47) 여기에 적힌 사건 및 활동은 <광주고보, 서중, 일고 80년사: 1920-2003>에 의거 작성하였고, 일부 본 연구자의 기억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나 각 개인의 활동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

정상용	14회	광랑	전남대	71,교련반대/80,광주민중항쟁
정찬용	14회	광랑	서울대	74,민청
김진	14회		전남대	69,삼선개헌반대 시위
나병식	14회		서울대	74,민청
배기운	14회		서울대	71,전국학생연맹
박형선	15회		전남대	74,민청/78,함평고구마/80,광주민중항쟁
조천준	15회	피닉스	전남대	71,교련반대
김정길	15회		전남대	72,함성지/74,민청/79, 남민전
고아석	15회		서울대	73,10 서울대 시위
임상택	15회		서울대	74,민청
박진	15회		전남대	74,민청
문덕희	15회		전남대	74,민청
김태승	16회	광랑	고려대	80,유인물 배포
정재현	16회	광랑	서울대	80, 지명수배
최철	16회	광랑	전남대	74,민청
이기승	16회		성대	74,민청
황지우	16회	원시림	서울대	73,서울대 시위/80,유인물 배포
정금채	16회		서울대	노동운동
노병직	16회		서울대	노동운동
고영하	16회		연세대	74,연세대 시위/80,지명수배
배기선	16회	피닉스	국민대	78, 국민대 시위/80,지명수배
김경석	16회		고려대	75,고대 시위
주경석	16회		고려대	80, 유인물 배포
권오걸	17회	광랑	서울대	74,민청
송종현	17회	광랑	한양대	70, 학생의 날 심포지엄
양태열	17회	광랑	서울대	70, 학생의 날 심포지엄
오광호	17회	광랑	서울대	70, 학생의 날 심포지엄
이길동	17회	광랑	전남대	70, 학생의 날 심포지엄
문국주	17회		서울대	74,민청/80,지명수배
최권행	17회	회화반	서울대	74,민청
최연석	17회	광랑	한신대	74,민청
이우회	17회		한양대	74,민청
유선규	17회		전남대	74,민청

정환준	17회		전남대	74,민청
이훈우	17회		전남대	74,민청
정남진	17회		고려대	75, 고대 시위
정용화	18회	광랑	전남대	78, 교육지표
유재창	18회		고려대	80, 유인물 배포
이승재	18회		고려대	80, 유인물 배포
이기상	18회		외대	72,일고 강당농성
장병우	18회		서울대	72,일고 강당농성
김기정	18회	원시림	서울대	72,일고 강당농성
김용구	18회	피닉스	연세대	72,일고 강당농성
백계문	18회		서울대	72,일고 강당농성/노동운동
이은규	18회	피닉스	서울대	72,일고 강당농성
김성재	18회		국민대	76,거레터야학
김현준	18회		서울대	77, 녹두 서점 학습
박찬우	19회		서울대	77, 서울대 시위
이흥국	19회		서울대	78, 6개대학연합시위
김성중	19회		한신대	79,카터 방한 반대 시위
박강수	19회		고려대	75,고대 시위
문승훈	20회	광랑	전남대	78, 교육지표/80,지명수배
노준현	20회		전남대	78, 교육지표/80,광주민중항쟁
정경연	20회	광랑	고려대	74, 일고시위/78,6개대학연합시위
지병주	20회	피닉스	고려대	74, 일고시위/80, 유인물 배포
박환석	20회	피닉스	성대	80, 유인물 배포
이영현	20회		고려대	80, 유인물 배포
이항규	20회	피닉스	전남대	74, 일고시위
김상집	20회	울림	전남대	74, 일고시위/80,광주민중항쟁
박몽구	20회	울림	전남대	78, 교육지표/80,지명수배
한동철	20회		전남대	78, 교육지표
박관석	20회	회화반	서울대	77, 서울대 시위
김용관	20회		서울대	77, 서울대 시위
부윤경	20회		서울대	77, 서울대 시위
백삼철	20회		서울대	77, 6개 대학 연합 시위
양민호	20회		서울대	78, 6개 대학 연합 시위/80,지명수배

윤종은 20회		외대	78, 6개 대학 연합 시위
이성하 20회		연세대	77, 거레터 야학
전복길 20회		서울대	77, 거레터 야학
박석면 21회	울림	전남대	74, 일고시위/75, 일고시위
임성래 21회	울림	전남대	75, 일고시위
김윤창 21회	울림		75, 일고시위
신민호 21회		외대	74, 일고시위
민동곤 21회	광랑	서울대	79, 남민전 민투
손호상 21회	피닉스	전남대	74, 일고시위
차민식 21회		서울대	79, 서울대시위
김영철 21회		서울대	77, 거레터야학
최기혁 21회		외대	78, 들불야학
전용호 21회		전남대	79, 들불야학/80, 광주민중항쟁
최동열 21회		전남대	78, 교육지표
김선출 21회		전남대	78, 교육지표/80, 광주민중항쟁
김윤기 21회		전남대	78, 교육지표/80, 광주민중항쟁
신영일 21회		전남대	78, 교육지표/79, 들불야학
나상진 21회		전남대	79, 들불야학
정석구 21회		서울대	77, 대방동 야학
이영목 21회	피닉스	한양대	78, 대방동 야학
김태종 21회		전남대	80, 광주민중항쟁/80, 지명수배
채영선 21회			80, 광주민중항쟁
이 규 21회		한양대	75, 일고 시위/78, 6개 대학 연합 시위
오순기 21회		외대	75, 일고시위
최수일 21회			75, 일고시위
윤성석 21회		전남대	75, 일고시위
김형중 21회		조선대	75, 일고시위
황광우 22회	피닉스	서울대	75, 일고시위/78, 6개대학시위/80, 지명수배
이태연 22회	피닉스	서울대	75, 일고시위
민영돈 22회		조선대	75, 일고시위
김종현 22회		외대	75, 일고시위
장훈열 22회		서울대	79, 서울대 시위
진재학 22회		서울대	77, 서울대 시위

박용성 22회	전남대	79, 백제야학
정 철 22회		80, 광주민중항쟁
김태훈 22회	서울대	81, 서울대 도서관 투신
김종률 22회	전남대	81, '님을 위한 행진곡' 작곡
이주로 22회	서울대	81, 서울대 시위
송상종 22회	서울대	81, 서울대 시위
김치걸 22회	연세대	81, 연세대 시위

***사정상 본 자료에 공개하지 않은 분들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5, 나가며

광주일고 출신자들은 대학에 들어가 부산과 대구,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학우들과 함께 학생운동을 전개했다. 전남대 학생운동의 경우 광주일고 출신자들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었지만, 중요한 시기 중요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투사들이 광고와 살레시오고 출신자들이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에서 영웅적 역할을 수행해낸 윤상원과 박관현은 각각 살레시오고와 광고 출신자였다. <폐다고지>의 역자 성찬성은 살레시오고, 5월의 광대 박효선은 송원고 출신자였고, 들불야학을 짊어지고 투사회보를 작성한 임낙평은 전남고 출신자였다. 함께 들불야학을 세운 비운의 여성 박기순,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지킨 이윤정은 전남여고 출신자였다.

1970년대를 관통하여 이들 젊은 학생운동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혹은 지도를 한, 60년대 학생운동가는 누구였을까? 민청학련 학생들과 인혁당 선배들을 연계하는 고리로서 이수병이 있었다면 광주 지역에서 광주의 청년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한 이가 있었다면 그는 누구인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김상윤 선배와 대담⁴⁸⁾을 하였다.

48) <합수 윤희봉 기념 사업회 대담집>, 김상윤 대담(대담자 황광우, 구술자 김상윤, 때: 2011년 8월 23일, 곳: 지역문화 교류재단)

황: 대학 다닐 때 영향을 많이 줬던 선배가 누군가요?

김: 실질적으로 강한 영향을 준 것은 주영길 선배야.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서울대 사회학과 다니다가, 유학생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무혐의로 풀려났다, 내려와서 소위 의식화 작업을 시작했다. 해겜의 역사철학을 발췌해서 사람들과 공부하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 73년도에 만났고, 그때, 광랑 출신들 하며, 그 사람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지. 굉장히 많이 받았어. 지난 정부 때 여성부 장관 지은희의 남편입니다. 그 양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그 양반은 민청 때 들어가서, 서울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해서 광주교도소로 왔는데, 내 옆방에 유낙진 선생이 계셨어요. 문근영 외할아버지지. 내 옆에 방에 계셨는데, 주영길이라는 학생을 아냐고 물어, 내가 대단한 학생을 봤다고, 김탄을 했다는 거야. 그 선배를 통해 대부분 지도를 받았다고 보면 되지.

황: 광주에 드러나지 않은, 혹은 드러났던 선배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김: 박석무 선생님 덕에 많이 갔고, 그 양반은 달변에다가, 포효하는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분이시고, 워낙 우리하고 스킨십이 많아서, 제일 허물없는 사이이기는 하고, 나하고 남주는 친구이지만, 뭐랄까, 남주한테는 깊은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삶에 대한 목표를 이미 확고하게 세워져 묵묵하게 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73년 10월 사건 때 활동하다가, 서울대 동양사학과의 고아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려와서 방위를 받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열정적으로 나를 도왔습니다. 그 친구가 돈도 만들어 오고, 사람도 데려오고, 나는 제대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다 소개시켰다. 전홍준을 나에게 연결시켜 주었어. 전홍준은 조영래 선배랑 이철, 나병식이랑 만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고 계셨는데, 그분 하고는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지도를 받은 셈이지.

김상윤은 윤한봉과 함께 1970년 후반, 제2의 저항기에서 광주의 청년 학생 운동을 이끌어온 두 지도자였다.⁴⁹⁾ 윤한봉은 실천가로서 김상윤은 이론가로서 각각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김상윤의 이론적 역량이 주영길의 지도 아래 갖추어진 것이라는 구술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1977년 이후 이른바 제2의 저항기에 활동한 광주 지역의 학생운동가들은 모두 김상윤의 학습 소그룹이 길러낸 운동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광랑’은 학생운동 깊은 곳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면 김상윤에게 또다른 영향을 주었다는 전홍준은 또 누구인가? 윤한봉의 구술록

49) "윤한봉 선배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민중투쟁을 도우면서 후배들에게 실천적 기둥이 되어주었다면, 김상윤 선배는 그 특유의 예리한 논리적 사유의 힘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상적 사조들을 소개해준 이론적 기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황광우, 장석준 공저, <레즈>, 실천문화사, 267쪽)

에 의하면 1980년 봄, 윤한봉은 특이한 모임을 가진 것으로 회상한다.

구술자 : 응, 전홍준 선배지, 그때만 해도 의사였고, 근데 전홍준 선배는 광주에서 그 양반이 월남 파병 반대 운동 전개하다 감옥에 갔던 분인데, 선구자적인 분이지, 60년대에 그랬으니까, 그 양반이 아버지가 월북 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 알고부터 운동일선에서 조금 빠진 거예요. 왜냐면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죽이게 되니까, 그런 선구자였는데, 그 양반이 얘기 돌인가 백일인가, 나는 얘기 돌 하고 백일하고 헛갈려가지고, 하여간에 식사나 하게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 간 사람들이 인제 8명이 갔어요, 8명이 갔는데 그걸 8인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나하고 정상용, 정용화, 이양현, 윤강욱, 김영철이 박용준이하고 윤상원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이었어요, 인제 윤상원은 항쟁 지도부 하다가 죽었고, 용준이도 시민군으로 27일 날 YWCA앞에서 죽었고 영철이는 항쟁지도부 기획실장 하다가 고문의 후유증으로 18년간 정신과 치료받다가 죽었고 정상용은 항쟁 지도부 의무위원장 맡았고, 윤강욱이는 기획의원 했고 이양현이도 기획위원이었고, 50)

그 날 모임은 전홍준의 집들이 잔치 모임이었다. 때는 1980년 봄이라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 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동의 시기였다. 윤한봉의 구술과 달리 그 날 모임을 주선한 전홍준의 대답에 따르면 1960년대 학생운동가들이 다수 동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4.19 혁명 당시 광주 학생 운동의 핵심이었던 김시현, 한일협정 반대 투쟁의 주역이었던 유인학과 이홍길, 이후 전남대 학생운동의 선봉장이었던 박석무와 정동년 등 쟁쟁한 인물들이 마침내, 최초로 1970년대 청년 학생 운동의 핵심들과 조우한 모임이었다.

“그 무렵 세속적으로 안락하게 살고 있었어요, 마침 광주시 양림동에 집을 하나 장만해서 1980년 5월 초 집들이를 했죠, 이때 찾아온 사람들이 김시현 4.19 동지 회장을 비롯해 민자동, 민통련 인물들, 6.3 세대인 유인학, 이홍길 교수가 왔고 광주 운동권의 중심인 박석무, 박관현, 정동년, 윤한봉, 윤상원, 정상용, 김영철 등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 자리가 광주 5.18의 모태가 되었다고 봅니다.” 51)

‘그 자리가 광주 5.18의 모태가 되었다’는 전홍준의 구술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전홍준은 누구인가? 그는 1946년 나주 출생으로 중학교 때 4.19를 목격하고, 고등

50)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윤한봉, 83쪽

51) <합수 윤한봉 기념 사업회 대담집>, 이홍길, 전홍준 대담, (대담자 황광우, 구술자 이홍길, 전홍준, 때: 2011년 10월 17일, 곳: 금수장)

학교 때 한미행정협정 반대 투쟁에 가담하면서 고교 시절에서부터 투옥 경험을 하는 열혈 청년으로 성장하여, 전남대 1학년 재학 시절 한일 국교 협상 반대 투쟁을 주도, 반공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다. 조영래와 협력하면서 교련 반대 투쟁과 민청학련을 배후 지도하였고, 조영래의 도피를 도와 <전태일 평전>을 집필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등,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굵직한 자취를 남긴, 선구적 인물이다. 지금 열린 전홍준의 집들이 잔치는 표면상으로는 장삼이사의 집들이이지만, 전홍준씨가 호명한 인물들의 이력을 살펴볼 때, 범상치 않은 자리이다.

이 집들이가 누군가의 의도된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순수한 잔치 모임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사실은 민청 세대의 청년 운동가들과 6.3 세대의 운동가들이 '집단적'으로 모였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두 세대의 운동가들이 집단적으로 회합을 가진 것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박정희 독재 체제는 '모임'을 억압하였다.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김상윤의 증언에 의하면 70년대 내내 자신은 전홍준과 비밀스런 회합을 지속한 것으로 밝힌다. 정용화 역시 윤한봉은 수시로 전홍준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였다고 한다. 하여 6.3 세대 운동가들과 민청 세대 운동가들이 생면부지로 지낸 것은 아니나, 그 만남은 지극히 비밀스런 1:1의 접선으로 머물러야 했다. 모두가 다함께 만나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면서 이른바 집단적 지혜를 이끌어내는 '모임'을 갖지 못했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인간적 본성을 실현하는 정치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을 때, 당시의 아테네인들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자신들의 공동체, 폴리스를 이끌었다.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자유를 한껏 누렸고, 그리하여 공동체의 자유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다. 하지만 1970년대 한국인들은 말할 자유를 억압당했고, 생각할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근원적으로 만남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였다. 1980년 5월의 광주 거리를 의사 가운데 입을 입고 다니던 전홍준은 마침내 금기의 선을 넘는다.

“의사니까 당연히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곧바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거리에 부상자들이 많았어요. 닥치는 대로 부상자들을 치료했는데, 갈수록 '치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5월 21일부터 시민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시가전을 벌였고 22일엔 시민군이 도청을 장악했죠. 저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광주 지역 재야운동가

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저는 퇴장당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처벌당한 제
가 참여하면 모임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⁵²⁾

그러니까 전홍준의 회합 참석을 거부한 것은 재야운동가들이었다. 이른바 자기 검
열에 걸린 것이다. 반공법 위반의 전력을 가진 전과 경력자가 모임에 가담하면 모두
가 간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는 경계심, 이 경계심은 1970년대를 살아간 운동자들
의 일상의 활동을 규정한 현실이었다. 공산주의자, 혹은 북한 간첩과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면, 그 어떤 동정도 받지 못하고 행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레드 콤
플렉스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소년에서 노인까지 나이와 계급을 불문하고 온
국민의 의식을 조여든 마귀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투사 윤상원도 전홍준의 도
청 동참만큼은 반대하였다. 전홍준은 도청을 지키는 윤상원과 매일 한번씩 사직 공
원 팔각정 근처에서 비밀리 접촉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윤상원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엄군은 엄청난 화력
으로 곧 도청을 점령하려 들어 올텐데 소총 하나로 버틴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역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기 이를 전 비밀 안전지대를 찾아서 제2의 지도부를 마련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그
러나 그는 자신만이라도 도청에서 최후를 맞겠다고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어간 사
람들의 역할에 비하면 자신이 한 일은 너무나도 하찮았었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저더러는 도청에
들어오지 말라더군요. 반공법 연루자가 들어오면 군부정권에 얼마든지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
죠. 물론 그가 저를 살리기 위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⁵³⁾

52) 같은 곳

53) 같은 곳

참고문헌

1, 1차 사료

- 1,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윤한봉
- 2,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김상윤
- 3,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이양현
- 4,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정찬용
- 5,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최 철
- 6, 2008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민청학련: 최권행
- 7, 〈합수 윤한봉 기념 사업회 대담집〉
- 8, 지병주, 〈피닉스 모임 일지:1972-74〉
- 9, 정용화,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의 재조명(1960년대-1970년대)
- 10, 정용화, 〈광랑(光郎)의 과거, 그리고 현재와 미래〉
- 11, 신동호, 〈긴급조치 9호세계 대탐험〉
- 12, 〈광주고보, 서증, 일고 80년사: 1920-2003〉

2, 단행본

- 1, 김성수, 〈함석헌 평전〉, 삼인, 2009
- 2, 안경환, 〈조영래 평전〉, 강, 2006
- 3, 강대석, 〈김남주 평전〉, 한얼미디어, 2004
- 4, 김병곤 기념사업회, 〈영광입니다〉, 거름, 1992
- 5, 〈황지우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5
- 6, 김준태, 〈명노근 평전〉, 심미안, 2009
- 7, 김삼웅, 〈리영희 평전〉, 책보서, 2010
- 8, 노준현 추모문집 발간위원회, 〈노준현〉, 미디어민, 2006
-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윤상원〉, 2003
- 10, 신동호, 〈오늘의 한국정치와 6,3 세대〉, 1996
- 11,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1974년 4월〉, 학민사, 2004
- 12, 5.18기념재단, 〈5.18의 기억과 역사〉, 2006
- 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신과 반유신〉, 2005
- 14, 〈김지하 전집, 3권〉
- 15, 황광우, 장석준 〈레즈〉, 실천문학, 2003
- 16, 황광우, 〈젊음이어, 오래 거기 남아 있그라〉, 참비, 2007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원리를 중심으로 -

작성자 : 이영재(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1. 들어가며

1980년대 후반부터 ‘사법권의 전지구적 확대’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¹⁾ 주요 서방 국가들을 비롯하여 남미, 아시아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라는 신조어가 학술적으로 정착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관습헌법 하에서 사법권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영국 등 관습헌법 국가를 제외하고도, ‘위헌법률심사’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수가 이미 80개 국가를 넘고 있다.²⁾

정치적, 사회적 쟁점 해결의 사법적 의존도가 커지면서 ‘정치의 사법화’ 문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지난 2000년 부시와 고어의 선거 결과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04년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사법적 결정으로 매듭지어지면서 정치의 사법화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³⁾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관련 결정(10. 21)

1) 사법권의 확대에 대한 경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논의로는 C. Neal Tate & Torbjörn Vallinder(eds.), *The Global Expansion of Judicial Power*, (New York Univ. Press, 1995), Brian Z. Tamanaha, *On the Rule of Law, History, Politics, Theory*, (Cambridge Univ. Press, 6th Printing, 2004) 참조.

2) 위헌법률심사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2차 대전 이전 미국(1803년)과 노르웨이(1868년), 아이슬란드(1943년) 3개국에서 1940년대와 1950년대를 걸쳐 신헌법을 제정하면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등으로 확대되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는 식민지에서 벗어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중 일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1970년대 남유럽 국가의 민주화 바람에 힘입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소련과 동구권에 민주화 물결이 닥치면서 헝가리, 러시아, 그 밖의 동유럽 국가들에도 이 제도가 확장되었다. 이외에 스웨덴, 이집트, 캐나다, 벨지움, 뉴질랜드, 멕시코, 이스라엘 등 약 80여개 이상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양 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역할: ‘제한적 적극주의’를 넘어서.” (제51회 헌법실무연구회 발표문(2004. 12. 3)), 3-4쪽 참조.

도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쟁점화 시킨 대표적 사건이다. 이외에도 ‘동성동본 금혼’, ‘이라크 파병’, ‘낙천낙선운동’, ‘간통죄’, ‘사형제’, ‘존엄사’,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사안들이 연이어 현재의 결정에 맡겨졌다.

이렇듯 현대 민주국가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포착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두고, 과연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지 여부를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민주주의 발전의 병폐로 보는 견해들은 입법, 사법, 행정권력의 분립, 즉 3권 분리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이 사실상 3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치의 사법화는 법 해석권한을 사법부가 독점하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법의 지배라는 정치원리를 형해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리에 입각한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첫째,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 둘째, 분배적 정의 실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입법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⁴⁾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으로 바라보며, 고전적 3권 분립 원리의 자유주의적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 위헌법률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관들은 (직선에 의한)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고, 이들이 국민적 대의기관인 국회 다수결에 의한 입법을 위헌 결정으로 무력화시킨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재판관들이 또 다른 입법자 내지 초입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⁵⁾

이와 달리, 오히려 입법부의 무능력과 한계가 정치적 사법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절차’의 제도적 결함이나 국민의 대표가 모여 입법활동을 벌이는 의회 내부의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곧잘 ‘민주주의의 실패’(failure of democracy)가 발생하는 데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의 사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3) 이 사건 직후 국내 학계에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다수 제출되었다. 대표적으로 박명림,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1호, 2005), 박찬표, “헌법에 기대기: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실망,” 『한국정당학회보』 (통권 제8호, 2006), 양 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역할: ‘제한적 적극주의’를 넘어서,” Jonghyun, Park,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Korea,”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Vol. 10, 2008), pp. 62-113. 등 다수가 있다.

4) 오송용,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법의 지배,”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3호, 2010), 185-187쪽.

5) 박은정,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2010), 4쪽.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관한 사안이나 인종평등 문제를 다룬 미국의 Brown 사건⁶⁾과 같은 민감한 사건들이 입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나 (연방)대법원에서 해결된 이유가 ‘민주주의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진전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이 사법에 의존적이게 되는 현상은 분명 고전적 의미의 3권 분립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정치의 사법화 배경은 ‘법 시스템의 확대’, ‘헌법 규범의 생활화’와 ‘시민들의 기본권 의식 확산’, ‘민주화 이후 사법부 독립의 강화’, ‘사법심사제 도입’, ‘국가의 배분적 정의 내지 복지 실현의 미진’, ‘시민사회단체의 사법을 통한 권리구제 운동, 즉 공익소송운동의 활성화’ 등이다.⁷⁾

이렇듯 법학과 정치학을 넘나들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민주주의 위기론적 해석과 긍정론적 해석이 갖는 나름의 의미에 공감하면서도 그 현상의 원인을 해명하기 위한 정치사상적 모색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정치의 사법화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예단하는 논지들을 일별하고, 그 기저에 이미 한계를 노정한 고전 자유주의적 전통 모델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하버마스의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의 패러다임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그 방향은 정치의 사법화 만능주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과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적 맥락을 향할 것이다. 이 글은 중심적인 논의의 틀로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의 기획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2. 논의의 전제

1) ‘정치의 사법화’의 의미

‘정치의 사법화’ 개념은 ‘사법 적극주의’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사법 적극주의’ 개념은 ‘정치의 사법화’ 개념과는 다소 다른 맥

6)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347 U.S. 438 (1954).

7) 박은정,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6-7쪽.

락에서 출발하였다. 공개된 지면에 ‘사법 적극주의’가 최초로 소개된 것은 1947년 대중 매거진 Fortune에서였다.⁸⁾ 이 글이 사법 적극주의의 개념사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법학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 변화만을 살펴보자면, 법학적 차원에서 사법 적극주의는 기존의 ‘법질서’ 혹은 ‘법체계’적 관점을 기준으로 정의되었다. 즉, 기존 법질서의 순응 여부가 사법 적극주의와 소극주의를 가르는 기준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법 적극주의’는 선판례를 뒤집는 측면을 강조하여 “판사들이 선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진보적이고 새로운 사회정책을 선호하는 사법부의 철학”으로 사용되었다. 엘리(John Hart Ely)와 같은 법학자는 헌법·법규나 선 판례를 해석하는 방법의 측면’을 강조하여 사법 적극주의를 헌법·법률 자구의 문어적인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선거에 의해 뽑힌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을 대체하는 정책결정을 판결을 통해 감행하는 진보적인 사법부의 태도라고 이해하였다.⁹⁾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의에 따라 사법 적극주의를 “사법부도 역사발전과 진보적인 사회정책 형성에 기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례에 지나치게 기속될 것이 아니라 헌법 규범을 시대적 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입법부나 집행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사법철학 내지 헌법 재판적 철학”이라고 정의했다.¹⁰⁾

이러한 정의에 따른 경우 사법 적극주의는 ‘진보주의’, 사법 소극주의는 ‘보수주의’로 귀결된다.¹¹⁾ 하지만 이러한 연계는 정치현실에서 그 설명력을 상실한다. 진보적 정치권력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정책방향과 다른 개혁적, 혁신적 정책 추진에 대해 사법영역이 제동을 거는 경우 사법 적극주의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를 진보적이라고 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 적극주의는 기존 법체계(질서)의 순응 여부가 아니라 권력분립 원리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심으로 볼 경우, 사법 적극주의는 행정부

8) Fortune에 이 개념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은 Arthur Schlesinger Jr.이다. 사법 적극주의의 개념적 기원과 의미맥락에 대해서는 Keenan D. Kmiec, "The Origin and Current Meanings of 'Judicial Activism,'" *California Law Review*, (Vol 92, 2004), pp. 1441-1477. 참조. 이 글은 누가 처음으로 이 개념을 썼는지, 최초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 지에서부터 사법 적극주의의 다양한 의미맥락까지 개념사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9) J. H. Ely, *Democracy and Distrust: A Theory of Judicial Review*, (Harvard Univ. Press, 1980).

1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지사, 1995, 신판), 993쪽.

11) 최대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읽는 대단히 유행하는 방법의 하나가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의 읽기 방법이라고 정리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구체적 사례로 예시하여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로 일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권,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치적 의미," 『서울대학교 法學』(제42권 제3호, 2001), 14-20쪽. 참조.

나 입법부의 의사나 결정에 곧잘 반대를 제기하여 두 부(府)에 의한 권력의 남용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사법부의 태도나 철학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법 소극주의는 다른 두 부(府)의 의사나 결정에 개입하고 반대하기보다는 ‘사법부 자체’의 미명 하에 심리 자체를 회피하거나 두 부(府)의 의사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동조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태도나 경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²⁾

하우드(Sterling Harwood)는 사법 적극주의의 요소를 다음의 네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사나 결정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가, 둘째, 원고 적격과 같은 재판 가능성의 요건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가, 셋째, 선판례 구속의 원칙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가, 넷째, 헌법·법률·선판례를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가가 그것이다.¹³⁾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사법 적극주의의 관철은 위헌판결이라는 형식으로 등장하여 입법, 행정의 영역에서 각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결정으로 이어진다. ‘정치의 사법화’란 바로 이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정치의 사법화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으로 해소하는 현상”¹⁴⁾인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갈등이 입법영역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적 결정으로 좌지우지되는 현상이 ‘정치의 사법화’이다.

‘정치의 사법화’는 이 현상을 보는 학자들의 관점이나 강조점에 따라 ‘정치적 논쟁의 법화’(legalization of political dispute), ‘정치의 법제화’(juridification of politics)¹⁵⁾, ‘법의 정치화’(politicizing law)¹⁶⁾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허슬은 특정한 통치유형의 범주로까지 의미를 확대하여 ‘사법통치’(juristocracy)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⁷⁾ 헌법해석과 해석주체의 논의를 모두 포괄하기 위하여 ‘사법적

12) 이에 대해서는 임지봉, 『사법적극주의와 사법부 독립』 (철학과 현실사, 2004), 23쪽 이하 참조.

13) Sterling Harwood, *Judicial Activism: A Restrained Defense* 2, (San Francisco, London and Bethesda: Austin&Winfield, 1996).

14) Ferejohn, John and Pasquale Pasquino, "Rule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in Jos María Maravall and Adam Przeworski, ed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Cambridge Univ. Press, 2003), p. 248.

15) Tim Koopmans, *Courts and Political Institutions: A Comparative View*, (Cambridge Univ. Press, 2003), Ran Hirschl, "The Judicialization of Mega-Politics and The Rise of Political Court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1, 2003), pp. 1-44.

16) John Ferejohn, "Judicializing Politics, Politicizing Law,"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65, No. 3, 2002), pp. 41-68.

17) Ran Hirschl, *Towards Juristocracy: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the New Constitutionalism*, (MA: Harvard Univ. Press, 2004), Ran Hirschl, "The Judicialization of Mega-Politics and The Rise of Political Court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1, 2008), p. 35.

검토'(judicial review)라는 개념도 자주 사용된다.¹⁸⁾ '정치의 법제화'(juridification of politics) 개념은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Between Facts and Norms)에서 이미 사용된 바 있다. 하버마스는 시민사회 영역의 정치적 영향력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의 동화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정치의 법제화'의 의미를 사용한다.¹⁹⁾

정치의 사법화를 입법의 역할과 비교해 볼 때,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사법의 새롭고 중요한 역할 구조가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법원은 입법권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함으로써 의회의 권위 행사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 둘째, 법원이 점차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는 영역이 되고 있다. 셋째, 판사들은 이익집단, 정당,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의 행위기준을 구축하고 시행함으로써 (판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점차 정치행위 자체를 규제하게 되었다.²⁰⁾ 이처럼 정치의 사법화 효력은 위헌판결의 행사로 인해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정책결정의 과정에까지 그 효력이 이르고 있다.

최근 정치의 사법화와 관련한 연구는 미시적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입법영역, 행정영역에 각기 다른 대응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국가차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정치적 쟁점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유형과 특징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오승용은 이를 '사법부 입법'과 '사법부 정책결정', '다른 수단의 정치'(정치적 무기로서의 법의 지배), '권리신장의 사법화'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²¹⁾ 정치의 사법화의 국가간 비교연구를 진행하는 허셜(Hirschil)은 정치의 사법화를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기능주의적', '권리 중심적', '제도주의적', '재판 중심적' 차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²²⁾

이 글의 목적은 정치의 사법화의 구체적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거나 비교방법론을

18) 사법적 검토는 헌법해석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결정권을 인정하는 입장과 사법외적 또는 입법부의 정치행위를 통해 헌법의 안정성과 헌정체제의 변경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입장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사법적 검토는 대법원에 헌법재판권을 부여하는 미국식 제도에 대한 논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법적 기관에 의한 헌법재판 또는 위헌법률심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준혁, "사법적 검토의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2006), 82쪽, 각주1) 참조. 사법적 검토 개념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John Hart Ely, *Democracy and distrust: a theory of judicial review*, (Harvard Univ. Press, 1980)가 대표적이다.

19) '정치의 법제화'는 Jürgen Habermas, translated by William Rehg,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MIT Univ. press, 1996), 곳곳에서 사용된다.

20) J. Ferejohn, 2002, "Judicializing Politics, Politicizing Law," p. 41.

21) 오승용,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법의 지배", 173쪽.

22) R. Hirschil, "The Judicialization of Mega-Politics and The Rise of Political Courts," p. 1. 이외에 정치의 사법화와 관련한 대표적 비교연구의 성과로는 Carlo Guarnieri & Patrizia Pederzoli, *The Power of Judges: A Comparative Study of Courts and Democracy*, (Oxford Univ. Press, 2003)가 있다.

통한 비교 연구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민주주의 원리와 조응하는지, 더 나아가 현대 민주주의의 파숫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논증하는데 있다. 따라서, 사법부 입법, 사법부 정책결정, 권리신장의 사법화 등 제 유형을 관통하는 핵심 원인, 즉 민주헌정질서의 수호자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또는 연방최고법원)의 위헌판결로부터 야기되는 제반 현상을 정치의 사법화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고전 삼권분립 원리-자유주의적 모델을 넘어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일별해 보면, 첫째 위헌심판을 행하는 재판관들은 ‘선거’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아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다. 둘째, 정치영역과 민주적 공론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 사안들이 소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해 좌지우지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셋째, 현재의 결정이 형식적 평등에 관한 결정보다는 분배적 평등에 인색하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다. 넷째, 국민적 대의기관인 입법의 결정을 무력화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을 저해하는 초입법자로 등장하고 있다. 다섯째, 사법에 의한 통치라 할 만큼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민주주의의 ‘위기징후’ 또는 ‘병폐’로 해석하는 대부분의 논자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고전적 3권 분립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아마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연방헌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몽테스키외까지 이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구상에서 사법권은 입법, 행정권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약화된 형태로 등장한다. 몽테스키외는 “만약 법관이 입법권까지 보유한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해 독단적이고 전제적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만약 법관이 행정권마저 보유한다면 압제자로서의 권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²³⁾이라고 ‘정치의 사법화 현상’(필자)을 우려했다. 물론 이 바탕에는 프랑스의 구체제에서 법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귀족에 대한 견제가 작동하고 있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전적 권력분립 원리의 기저에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분리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규범적 요청이 자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는 정치권력과 국가의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유

23) Br de et de Montesquieu, *The Spirit of Laws*, (Berkeley : California Univ. Press, 1977), p. 202.

지하는데 집중한다. 고전적 3권 분리 원리나 자유주의적 해석에 따를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권력분립에 관한 논의들은 그동안 “권력 상호간의 분리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정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²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법의 지배는 ‘평등’의 원리, 즉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법의 지배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현대 국가는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적 조건들을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자유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특히 소유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정부를 헌법조항과 기본법의 엄격한 틀 안에 두는 것을 고안했다.²⁵⁾ 뿐만 아니라 입법권과 사법권의 분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전망 하에서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과 불일치가 발생한다.²⁶⁾ 하버마스는 원칙적인 의미에서 법치국가(constitutional state)는 민주주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한다.²⁷⁾

최소국가(minimal state)²⁸⁾를 주장하는 대표적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Nozick)은 사유재산권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복지권에 대해 부정하고, 사유재산권에 기반한 ‘야경국가론’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국가론을 전개하였다. 노직은 국가의 영역을 강제,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의 보호, 계약의 이행과 같은 기능들로 제한한다.²⁹⁾ 노직의 이론 속에서 자아의 완성, 평등, 재분배 등의 이상은 정치의 영역에서 제외된다.³⁰⁾

국가와 시민사회를 분리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고전 3권 분립 원리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관을 바탕으로 할 경우 논리필연적으로 “정치의 사법화가 직선에 의해 선출된 입법영역을 위축시키고, 정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³¹⁾는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 병폐를 해소하기 위하여 결국 그 권한을 보유한 헌법재판소나 연방최고재판

24) 차동욱,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안티테제인가”, 『의정연구』, (제12권 제2호, 2002), 185쪽.

25) Russell Hardin, *Liberalism,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9), pp. 122-147

26)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을 다룬 논의는 박찬표, “헌법에 기대기 :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실망.” 76-98쪽, 참조.

27)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78.

28) 노직의 ‘최소국가’ 개념에 대해서는 R.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4), pp. 110-119, 참조.

29)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p. ix.

30) David O. Brink, *Moral Realism and the Foundation of Ethics*, (Cambridge Univ. Press, 1989), p. 71.

31) 오승용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법의 지배”, 200쪽.

소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면 민주주의 원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과연, 그러한가?

차동욱은 “기존의 권력분립이론에 대한 논의가 그 역사적 전개방식에 대한 검토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을 뿐더러 현실의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적절히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그 설명력을 상당한 정도로 상실했다”고 말한다. 위헌법률심사권과 민주주의 원리의 충돌을 논의함에 있어 “분립된 권력 간의 견제와 효율적 기능분담, 그리고 안정적 균형에 기반을 둔 동태적 측면”³²⁾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재판 즉,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민주적 입법자와 사법부의 권력분립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되었다. 이런 한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둘러싼 논쟁은 권력분립 원리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정책결정에 대한 비판은 고전적 권력분립 주제에 대한 특수한 독해, 즉 자유주의적 독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유주의적 사회 모델에 따라 과거에 헌법은 개인들이 사적 자율성을 갖고서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사회를 국가적 영역으로부터 분리시켜 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국가의 과제와 목표는 정치에 일임되었다. 자유주의적 이해에 따르면, 정치는 헌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유주의적 모델 속에서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한의 결과로서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의 자의성을 법치국가적으로 혼용하는 고전적인 권력분립 도식이 나왔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모델은 민주적 법치 국가의 헌법이 국가/시민의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폭력을 독점³³⁾하고 있는 행정부와 무장해제된 사적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등장할 수 있는 일차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모델에 잘 어울리는 것이 법을 회귀적인 폐쇄 체계(recursively closed system)로 여기는 실증주의적 관점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모델에서 출발하면, 사회복지국가의 실체화된 법질서는 헌법구조를 뒤흔드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심지어는 그것의 부패로 보일 수도 있다.³⁴⁾

32) 차동욱,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안티테제인가”, 185쪽.

33) 이는 베버의 국가폭력독점체제를 말한다. 베버는 그 행정참모가 규범질서의 관철을 위해 정통적 물리적 강제 독점(monopol legitimen physischen Zwanges)에 대한 요구권을 성공적으로 수립하는 한에서의 정치적 시설경영체(polischer Anstaltsbetrieb)를 ‘국가’라고 부른다. Max Weber, edit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Economy and Society*, 1 vols.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1st Printing) p. 54.

34)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p. 245–246.

하지만, 이제 법질서를 관통하는 기본규범과 원칙들은 개별 사례들이 법체계 전체와 관련하여 건설적으로 그리고 맥락에 민감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법체계 내부에서 그것은 사법부의 권력증대를 의미한다. 또 시민의 자율성을 희생시키면서 고전적 법치국가의 규범구조상의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판사의 재량권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본규범과 원리를 지향하게 되면서 판결은 법질서의 제도적 역사를 향하던 시선을 돌려 주로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에 주목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였다. 사법부는 (고전적 3권 분리 모델에 따른 경우-인용자) 입법적 권력에 관여할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입법적 권력에 관여하고 있다. 논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³⁵⁾

3.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의 양립

1) 기본권 : 법질서의 구성원리

정치의 사법화가 주목할만한 정치적 현상으로 등장한 배경과 원인에 대한 해석 역시 상반된다. 먼저, 의회의 한계, 민주주의의 한계로부터 그 원인을 도출하는 논의들이 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정치적 문제에 대해 다수결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가 문제해결능력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반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문제해결자로 부상하자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과 법의 지배에 대한 열망의 사이클이 작동하고 있다”³⁶⁾거나 “정치의 사법화의 원인이 민주주의(그 현실적 실체로서의 민주정부)에 대한 두려움과 실망에서 기인한다”³⁷⁾는 견해들이 그것이다.³⁸⁾

그러나 필자는 위 견해와 달리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35)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246, 참조.

36) 오승용,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법의 지배.” 105쪽.

37) 박찬표, “헌법에 기대가: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실망.”

38) 이외에 사법권력 또는 법률가 권력의 비정상적인 확대가 민주정치의 근본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국운, “자유민주주의의 정상화 문제(II)”, 『법과 사회』(제34호, 2008) 49쪽., 정치의 사법화를 이용해서 특수이익들이 우월적 지위를 선점하려는 노력들이 헌정공학적 형태로 등장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차동욱,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본 헌정 60년-개헌의 정치와 ‘헌정공학’의 타당성”, 『법과 사회』(제34호, 2008), 57쪽, 등의 논의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전제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민주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경우 정치의 사법화는 “헌법규범이 생활규범으로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한 과정,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갈등과 조화의 관점에서 입헌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³⁹⁾ 하버마스는 현대 사회에서 사법 영역이 과거의 소극적, 수동적 역할을 벗어나 입헌민주국가의 주요 기관으로서 민주정치 발전 면에서나 사회변화에 적극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는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의회와 헌법재판소 간의 비증변화는 법체계 전체의 발달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⁴⁰⁾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대두되는 원인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시스템의 확대이다. 둘째, 헌법규범의 생활화와 시민들의 기본권 의식 확산이다. 셋째, 민주화 이후 사법부 독립이 강화되었다. 넷째, 사법심사제 도입이다. 다섯째 국가의 배분적 정의 내지 복지 실현의 미진도 사법의존도를 높였다. 여섯째, 1990년대 이후 시민운동단체들의 사법을 통한 권리구제운동 즉, 공익소송운동도 사법의 존재 의의 부각 및 위상강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⁴¹⁾

이 6가지 원인들의 핵심을 요약해보면, 사회복지, 생활보호, 건강증진, 남녀평등, 청소년 보호, 장애인 보호, 적극적 평등조치 등과 같은 ‘기본권의 강화’와 이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민주적 활성화’, ‘사회복지국가적 요구의 증대’로 집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건들은 현대 민주정치의 원리와 관련하여 집합적으로 작용하며, 특징적 가치를 산출한다.

현대 민주주의 원리에서 기본권은 기존의 ‘방어적’ 차원을 넘어 국가와 시민사회를 관통하는 법질서의 실체적 준거로서 자리 잡는다. “원래 기본권은 행정부의 개입 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 묶어두고 사적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어권으로 개념화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본권은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면서 그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규범의 객관적인 법적 내용 속으로 주관적 자유권의 내용을 수용하는 법질서의 구성원리로 개념화”⁴²⁾되는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기본권을 민주적 법질서의 구성원리로 개념화하는 제도적 장

39) 박은정, “‘정치의 사법화(司法化)’와 민주주의.” 5쪽., 김종철,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노무현정부 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 2005), 232쪽.

40)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244.

41) 박은정, “‘정치의 사법화(司法化)’와 민주주의.” 6-7쪽.,

42)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p. 247-248.

치로 기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제도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제도의 도입이다. 이 헌법소원심판제도의 도입은 한국헌법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한국의 민주화와 헌법재판의 관련성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부분이다.”⁴³⁾ 실제 한국에서 권리구제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1988년 25건 이래 2007년 1596건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10년(1015건)에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보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적극적 차원의 기본권 확립은 시민사회와 정치, 경제 영역을 매개하는 굳건한 민주적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다. 또한 부분 체계들이 수평적으로 분화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복잡한 사회에서 기본권이 갖는 보호작용은 국가의 개입을 차단하는 수동적·방어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양극화 등 제반 사회적 문제와 갈등의 해결자로서 정부의 적극적 조력을 요청한다. 그 내용은 주로 사회복지국가적 요구로 집약되어 나타난다.

헌법재판소의 개별 평결에 대한 구체적 평가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미흡함⁴⁴⁾들이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는 민주헌정질서에 입각한 판결을 통해 기본권을 전체 법질서의 원리로 규정하는 적극적 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기본권이 민주적 법질서의 구성원리로 견지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내용⁴⁵⁾은 자유주의적, 고전적 3권 분리의 맥락과 달리 법체계 전체를 관통하여 구조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와 고전적 3권 분리의 의미 전환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확대된 현재, 그 원인을 전적으로 의회의 무능력과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서 나타나는 사법권력의 기형적 강화로 설명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서 ‘기본권 강화 요구’와 ‘시민사회의 민주적 활성화’, ‘사회복지국가의 실체화된 법질서 요구’로부터 발생

43) 정종섭,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와 기본권의 실현,”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3호, 1999), 227쪽.

44)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계적으로 추척하면 성지적으로 부담이 적은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소극적이거나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종섭,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와 기본권의 실현”, 226-252쪽. 참조. 특히 현재의 분배적 정의와 관련한 한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논의는 문무기, “노동법적 시각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입법정책기능,” 『法和政策研究』(제8집 제2호, 2008), 465-498쪽. 참조.

45) 기본권을 법의 원리로 개념화하는 접근방법과 가치정향으로 개념화하는 접근방법의 구별은 이미 오래전 시도된 바 있다. P. Brest, “The Fundamental Rights Controversy,” *Yale Law Journal* (Vol. 90, 1981), pp. 1063-1109.

하는 민주주의적 필요의 측면을 한층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자유주의적 맥락과 같이 기본권이 오직 국가권력에 대한 주관적 자유권에 그쳐야지, 법의 모든 영역의 (구속력 있는) 객관적 기본규범이어서는 안된다는 자유주의적 법학자들의 이해와 충돌한다.

하버마스는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모델이 고전 정치경제학의 사회이론적 가정의 운명과 함께 종말을 고하였다고 말한다. 자유주의적 기본권 모델은 민주법치국가의 적극적 기본권 요구의 차원과는 나란히 할 수 없는, 이미 소멸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그 사회이론적 가정은 맑스의 비판에 의해 이미 무너졌으며, 서구의 선진 탈산업사회에는 맞지 않다. 다시 말해 법치국가의 원리들을 특정한 맥락에 종속된 하나의 역사적 독해방식과 혼동해선 안되는 것이다.”⁴⁶⁾

‘누가 헌법의 수호자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한 1920년대의 유명한 논쟁, 즉 슈미트와 켈젠의 ‘헌법 수호자’ 논쟁에 대해 민주정치원리는 근 백년에 걸쳐 경험한 현실 정치를 통하여 그 답을 비교적 명료히 해주고 있다.⁴⁷⁾ 결국, 궁극적인 헌법수호의 권한은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의 몫이다. 이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위법규범의 효력을 부인(위헌결정)하는 즉, 나라의 법질서를 헌법 밑에 질서지우는 헌법수호의무를 갖는다.

물론, 과거 자유주의적 모델과 같이 시민사회를 정치제도, 특히 의회와 같은 정치적 공공영역과 생산과 분배로 구성되는 기업이나 공장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사회와 구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고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근대 시민사회를 보증하는 권리들의 구조물들 - 정치적 권리와 노동 기본권 등 - 과 함께 정치경제적 영역과 관계를 맺는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은 직접적으로 권력에 대한 정복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에서의 제약 없는 논의(discussion)와 민주적 결사(association)들을 통하여 영향력을 산출한다.⁴⁸⁾

코헨과 아라토는 시민사회의 제도적 영역들에 주목하면서 권리의 복합체를 세 가

46)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p. 249-250.

47) 1986년 11월 ‘콘트라(Contra)’ 사건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슈미트의 논지대로라면, 국가의 기밀 사항에 속해 대통령 통치권으로 방어될 수도 있을 법했던 이 사건은 결국 사법권력의 적극적 개입으로 이 사건과 관련되었던 고위 관료들에게 유죄가 확정되었다. 참고로 콘트라 사건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레바논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인질을 석방시킬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에 지원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부통령이었던 부시는 1992년 미국 대선에 대통령 후보자로 나서서도 이 사건의 개입 정도를 두고 곤란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48) J. Cohen & A. Arato,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MIT press, 1992), pp. ix-x.

지로 구분한다. 첫째, 문화적 재생산과 관련된 권리로 사상, 언론, 표현, 소통의 자유가 있고, 둘째, 사회적 통합을 확보할 권리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고, 셋째, 사회화를 보장하는 권리로 프라이버시, 친밀성, 개인의 불가침성에 대한 보호가 있다. 이와 구분되는 차원에서 시민사회, 시장경제, 근대 관료제적 국가 사이를 매개하는 권리가 있다. 재산권과 계약, 노동권이 시민사회와 경제체계를 매개한다면, 정치적 시민권과 복지권은 정치체계와 연관을 맺는다.⁴⁹⁾

이제 기본권의 의미 맥락은 개별 시민의 자유와 국가의 자유만을 양립시켜서는 안 되고, 기본권 보장 요구, 사회복지국가적 패러다임으로의 선회와 함께 권리체계 속에 언제나 담겨 있던 '주관적' 자유권의 요구를 '객관적' 법적 내용으로 전환하여 그 민주적 효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미국에서 뉴딜 시대의 사회복지국가적 프로그램과 '위대한 사회'라는 비전에 의해 규정되었던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국가적 요구의 비약적 확대를 주요한 사례로 제시한다. 사회복지국가적 요구의 확대가 사법부에 야기했던 문제들이 편견 없이 지각된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 '권리혁명'이 법치국가의 원리를 새로운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도전으로 개념화되었다고 평가한다.⁵⁰⁾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첫째, 민주주의의 진전이 정치의 사법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시민사회의 '참여'와 사회권의 강화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회나 정책중심의 판단을 하는 행정부에 비해, '태생적으로 소극적'⁵¹⁾일 수 밖에 없는 사법부의 위치가 헌법에 기반한 기본권의 보장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라는 법정정책적 주제를 선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제 고전 3권 분리의 원리는 보다 강화된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적 요구에 따라 그 의미를 전환시켜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9) Cohen & Arato,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p. 441.

50)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251.

51) 헌법재판소를 위시한 사법기관은 스스로 이니시iativ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당사자로부터의 제소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제시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만 사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법기관은 그 태생부터가 소극적인 기관이라고 할만하다. 최대권,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치적 의미," 『서울대학교 法學』(제42권 제3호, 2001), 2쪽.

4.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기획과 정치의 사법화

1)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기획의 함의

철학적, 인식론적 지평에서 형성된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은 ‘법’에 대한 소통이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이론으로 전환하였다. 하버마스는 사회적 연대성이 법적 구조 속에 보존되어 있으며, 소통적 권력이 법을 통해 발현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관계를 검토함에 있어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기획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해 준다. 첫째, (자유주의적 규범 원리를 넘어서는) 법제화 과정에 대한 적극적 해석 맥락이다. 둘째, 법과 정치(권력)의 상관적 해석이다. 셋째, 고전적 3권 분립의 틀을 현대 민주국가적 원리로 전환시키는 이론적 지평의 제공이 그것이다.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기획에서 법치국가의 중심 이념은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결합을 강조하는 법제화 과정의 적극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법제화 과정은 법 매체가 이미 전제하고 있는 정치권력에까지, 다시 말해서 법의 실행만이 아니라 법의 제정에도 구속력을 제공하는 권력에까지 직접 확대되어야 한다. 법과 정치권력의 동근원적인 구성과 개념적 상호침투로부터 더 넓은 정당화의 필요성, 즉 국가의 제재력, 조직권력, 행정권력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겨난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이념이다.”⁵²⁾ 법치국가의 이념은 권력코드를 통해 운영되는 행정체계를 법을 제정하는 의사소통적 권력에 결속시키는 동시에 행정체계를 사회적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즉 특권적인 이익의 사실적 관철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⁵³⁾

법치국가의 제도는 사회적으로 자율적인 시민들이 정치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성적으로 형성된 의지의 의사소통적 권력이 등장하여 법률 프로그램 속에서 구속력 있는 표현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의사소통적 권력이 법률 프로그램의 이성적인 적용과 행정적인 시행을 경유하여 사회 전체의 규모에서 유동하고 - 기대의 안정화와 집합적 목표의 실현을 통하여 - 사회적 통합력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2)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133.

53)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p. 194-195.

법치국가의 조직과 함께 권리체계는 헌법질서로 분화된다.⁵⁴⁾

둘째,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기획은 법과 정치(권력)의 상관성을 견지한다. 여기서 법은 소통적 권력과 행정권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⁵⁵⁾ 또한 소통적 권력과 행정권력을 매개하는 법에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법치국가적 긴장이 내재되어 있다. 권력은 공적 행정체계 속에 집중되고, 이 권력은 항상 소통적 권력으로부터 새롭게 쇄신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은 행정과정을 조절하는 권력코드에 대해 구성적이면서 소통적 권력으로부터 행정권력으로의 변형을 위한 매체이기도 하다. 정당한 법은 소통적 권력으로부터 나오고 소통적 권력은 다시 정당하게 제정된 법을 통해 행정권력으로 번역된다는 원리의 도움으로 법치국가의 이념을 전개할 수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⁵⁶⁾ 하버마스는 법적 타당성의 차원에서는 법의 실정성과 정당성 사이의 긴장과 권리체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긴장에 주목한다. 법치국가의 이념이 도입되면서 이 전망도 확장된다. 법을 그 법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정치권력에 반성적으로 적용하는 순간 사실성과 타당성의 긴장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간다. 이제 그 긴장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직된 정치권력 자체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와 동시에 정치권력은 정당한 법을 통해 권위를 얻는다.⁵⁷⁾

따라서, 헌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반드시 국민적 권위, 즉 하버마스적 합의에서는 소통적 권력과 맞닿은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크라머 역시 “헌법적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법적’ 문제”⁵⁸⁾라고 갈파하였다. 이제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긴장과 갈등의 문제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합치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국민적 정당성이 소통적 권력의 이름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헌법해석과 헌법재판은 법치와 민주를 결합시키는 정치적-법적 활동이기 때문에,

54)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176.

55) “소통적 권력 개념이 도입되면서 정치권력의 개념에 분화가 일어난다. 정치가 정치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실천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자율성의 행사는 공동의지의 담론적 형성을 의미하지, 거기서 생긴 법률의 시행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개념은 정치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권력의 사용과 정치체계로의 접근을 둘러싼 경쟁까지 포괄한다. 권력 코드가 구성된다는 것은 행정체계가 집합적 구속력 있는 결정권한을 갖고서 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까닭에 나(하버마스-인용자)는 법을 소통적 권력이 행정권력으로 번역되는 매체로 간주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소통적 권력에서 행정권력으로의 변형은 법률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권한부여라는 뜻을 갖기 때문이다.”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150.

56)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169.

57)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p. 136-137.

58) Larry D. Kramer, *The People Themselves, Popular Constitutionalism and Judicial Review*, (Oxford Univ. Press, 2004), p. 30.

설사 사법기관(헌재)에 헌법해석이 맡겨진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에 최고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다. 최고성은 헌법이 지니는 징표이지 사법이 그 징표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 정치적-법적 영역은 헌법의 제정만이 아니라 해석과 그 이행도 포함한다. 이점에서 오늘날 헌법정치는 어느 면에서는 ‘반쪽정치’로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⁵⁹⁾ 법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정치는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이원적 구도는 잘못된 구도이다. 헌법의 해석과 적용 역시 시민사회의 반응과 정당성 속에서만 그 의미가 활성화될 수 있다. 즉 헌법의 해석과 적용 역시 정치적 영역과 같이 소통적 권력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헌법재판의 결과는 민주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입법에서도 과오가 가능하듯이 헌법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때는 당연히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문제점들은 공론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입헌주의이다.⁶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기획은 소통적 권력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대한 해명인 셈이다. 특히, 정치권력을 행정권력과 소통적 권력으로 이원화함으로써 형식합리성의 지배영역에 소통합리성에 근거하는 견제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버마스 민주법치국가 기획의 또 다른 정치사상적 의의는 고전적 삼권분립을 논의이론적으로 전환시켜 놓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권력의 기능적 분리는 민주적 입법의 우선성과 아울러 행정권력을 소통적 권력에 피드백 시키는 것을 동시에 보장한다.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시민들은 사적 주체로서는 법에 종속되지만 이와 동시에 자신을 그 법의 저자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버마스는 행정의 합법성 원리를 강조한다. 이 합법성 원리란, 행정부가 의회와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통제는 행정부 활동의 두 측면과 관련되는 데, 하나는 법 시행의 전문적 성격이라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과정의 합법성과 아울러 행정적 개입의 법률적 제약을 보장하는 규범적 책임의 준수라는 측면이다. 행정권력은 법률의 테두리 내로 국한된다.⁶¹⁾

재차 강조하지만 고전 삼권분리 원리의 논의이론적 전환에 있어 핵심은 입법의 영역과 접해 있으며 끊임없이 행정과 사법의 작동을 견제, 감시하는 소통적 권력에 놓

59) 박은정,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16쪽.

60) 박은정,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17쪽.

61)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p. 187-188.

여 있다. 민주법치국가 기획의 관건은 자유롭게 공론장을 유영하며 제도적 영역, 즉 입법, 사법, 행정 권력에 견제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통적 권력에 달려 있다. 소통적 권력은 법과 권력의 정당성 준거로 작동하면서 각 영역의 권력 행사를 포위, 감독하는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기획은 상당부분 공화주의적 원리를 따른다. 자유주의적 견해에서 민주주의 과정은 사회의 이익에 맞게 국가를 프로그램화하는 과제를 충족한다. 반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정치는 사회구성 과정 전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정치’는 인륜적 삶의 연관의 반성적 형식으로 파악된다. 자유주의적 국가와 사회관계에 대한 설계도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다. 국가권력이라는 위계화된 규제층위와 시장이라는 탈중심화된 규제층위 곁에, 다시 말해서 행정권력과 개인적인 자기이익 곁에 연대성과 공동복지 정향이 사회통합의 제 3의 원천으로서 등장한다.⁶²⁾

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법질서의 요체는 개별적 사례에서 어떤 개인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 확정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해 공화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이주관적 권리는 객관적인 법질서 덕분에 존재하며, 이 법질서는 상호존중에 바탕을 둔 동등한 참여권이 인정된 자율적인 공동체적 삶의 불가침성을 가능하게 하고 또 보장한다. 한쪽에서는 법질서가 주관적 권리에서 출발하여 구성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법질서의 객관적인 법적 내용에 우선적 중요성을 부여한다.⁶³⁾

그렇다면,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기획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헌법재판소는 입법과정이 정당성을 산출하는 토의정치의 조건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권위의 테두리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⁶⁴⁾ 점차 헌법재판소가 입법적 효력을 강화함으로써 입법영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국민적 요구가 입법 영역을 통하여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영역을 민주적으로 구조화하는 조력자의 역할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의무인 것이다. 다시 말해, 소통적 권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 제도적 조력자가 헌법재판소인 셈이다.

62)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p. 268-269.

63)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271.

64)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p. 274-275.

2) 규범 대 가치의 충돌 : 현재의 역할과 범위

헌법에는 ‘헌법 정치적 흥분의 순간’을 경유한 자유, 인권, 평등, 정의,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가 새겨져 있다. 이 가치들을 헌법적 가치로 창출한 헌법제정권력이 더 이상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 정치 상황에서 사법영역은 헌법에 의해 설립된 권력, 즉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헌법제정권력의 기초를 침식하지 못하도록 작동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시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정의로운 삶의 조건을 확립하는 협력적 기획을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기 위한 정치적 절차를 확정”⁶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체계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권력의 분리와 상호의존의 고전적 도식은 이러한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권의 기능은 자유주의적 법패러다임에 내장된 사회이론적 가정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며, 따라서 본래부터 사적으로 자율적인 시민들을 국가기구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분쟁대상이 된 규범의 내용을 무엇보다 민주적 입법과정의 의사소통 전제와 절차적 조건과 관련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주의적 헌법이해는 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의 물꼬를 민주주의 이론의 방향으로 선회시킨다.⁶⁶⁾

최고재판소가 헌법의 준수를 감시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것은 민주적 과정의 정당화 효과를 좌우하는 절차와 조직규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고재판소는 민주적 법공동체의 자기 조직을 위한 매체인 포괄적인 의견형성과 의지형성 과정이 이루어지는 ‘수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해야만 한다. “위헌심사가 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민주적 과정의 막힌 곳을 푸는 일”⁶⁷⁾인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그동안 텍스트에만 의존해 왔던 공법학자들의 영역과 정치학자들에게 정치과정의 행위자로 간주되지 않았던 법원과 법관들의 ‘어색한’ 만남을 가능케 하였고, 다양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⁶⁸⁾ 필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민주주의의 부정적 병폐로만 해석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렇

65)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263.

66)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263.

67) Ely, *Democracy and distrust: a theory of judicial review*, p. 117.

68) 그동안 “공법학자들은 법 텍스트에만 의존했으며, 정치학자들은 법원과 법관들을 정치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Guarnieri & Pederzoli, *The Power of Judges*, p. 14.

다면, 이제 관건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진원지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어느 만큼 '적극적'이어야 하는지, 어떠한 맥락에서 '자기 제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헌법재판소가 입법 권력을 대체할 수 있는가? 입법과 사법의 지평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판결의 타당성이 헌법적 명령의 의무론적 이행의 의무를 갖는다면, 입법은 우리의 소망의 지평과 주어진 상황에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의 목적론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헌법재판은 타당하다고 전제된 (헌법적) 규범의 적용에 국한된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입법자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된 절차적 지침'에 의해 구속받는다고 해서 법관과 입법자가 서로 경쟁하는 동등한 위상을 갖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도 출현한 정당성의 근거들이 헌법재판소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 적용의 전망에서 주어져 있는 것이지, 자신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권리체계를 해석하고 조형하는 입법자의 전망에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⁶⁹⁾.

정치적 사법화 현상의 정당성 맥락은 그때 그때 다수에게 가장 좋은 것이 그 자체로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좋은 것과 일치하진 않는다는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입법의 영역을 통과한 실정법이 다수의 결정을 배경으로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오류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거트만과 톰슨은 다수의 결정이 갖는 정당성에 대해 "다수의 결과가 옳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절차가 공정하기 때문에 정당한 것"⁷⁰⁾이라고 말한다. 정치의 사법화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실정법이 과연 모두에게 동등하게 작용하는가의 문제를 배경으로 한다.

여기서 사법적 권력이 법원리를 보편타당한 규범이 아닌 가치에 동화시키는 것은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른 규범들을 정당화하는 원리 혹은 한 차원 높은 규범은 의무론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반해 가치는 목적론적 의미를 갖는다. 타당한 규범은 그 수신자들에게 일반화된 행동기대를 충족하는 행동을 해야 할 책무를 예외 없이 그리고 동등하게 부여한다. 이에 반해 가치는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된 선호로 이해될 수 있다.⁷¹⁾ 가치는 특정 집합체 안에서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목표지향적 행동을 통해 획득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특정한 선이 우선성을 가질만하다는 점을 표현한다.⁷²⁾ 즉, 입법의 지평에서 정당화 되어야 할 이데올로기

69)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262.

70) Amy Gutmann & Dennis Thompson, *Democracy and Disagreement*, (Harvard Univ. Press, 1996), p. 28.

71) 상이한 가치들은 사례별로 우선성을 다룬다. 특정 가치의 매력은 특정 문화와 삶의 형식 속에서 확립되었거나 채택된, 특정한 선에 대한 평가라는 상대적 의미를 갖는다.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255.

72)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255.

적, 가치추구적 사안에 대한 사법적 개입은 헌법의 파수꾼적 역할을 포기하고, 공론장의 다양한 가치 논쟁 속에 하나의 행위자로 진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의 성격과 관련하여 규범과 가치의 차이는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의무적 행동에 관련되는가 목적론적 행동에 관련되는가에 따라 구별되고, 둘째, 그 타당성 주장이 이원적으로 코드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구별되고, 셋째 그 구속성이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에 따라 구별되며, 넷째 규범체계들의 연관과 가치체계들의 연관이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에 따라 구별된다. 따라서 그 적용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생긴다.⁷³⁾

규범으로서의 기본권은 법적 소재를 만인의 동등한 이익에 부합하여 규제한다. 이에 비해 가치로서의 기본권은 다른 가치들과 어울려 하나의 상징적 질서를, 즉 특수한 법적 공동체의 정체성과 삶의 형식을 표현하는 상징적 질서를 형성한다. 헌법을 구체적 가치질서와 동일시하는 것은 헌법의 특수한 법적 성격을 오인하는 것이다. 법적 규범으로서 기본권은 도덕적 규칙과 마찬가지로 선호되는 선을 모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론적 행동규범을 모델로 해야 한다.⁷⁴⁾

가치들은 다른 가치들과 사례별로 특정한 서열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합리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의 경중을 재는 일은 관습적인 기준과 서열에 따라 자의적으로나 무반성적으로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가 가치질서론을 자신의 결정의 기초로 채택하는 한, 비합리적 판단의 위험도 늘어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기능주의적 논증이 규범적 논증을 희생시키면서 우선권을 갖기 때문이다. 이 논증의 게임에서 으뜸패가 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권리 뿐이다.⁷⁵⁾

우리가 헌법을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내적 연관을 구현하는 권리체계의 해석과 조형으로 이해한다면, 민주적 절차의 관철과 정치적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의 토의적 형식의 관철이 다루어지는 사례들에서 공격적인 헌법재판은 해로운 것이 아닐 수 있으며, 나아가 그것이 규범적으로 요청되기도 한다.⁷⁶⁾

73)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256, 참조.

74)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p. 256–257.

75)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259.

76)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p. 280.

5. 맺으며

앞선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병폐이거나 부작용의 원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은 입법과정이 정당성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역 내에서 민주주의의 조력자로 기능하는 역할을 부여 받는다. 그 방향은 기본권을 법적 질서의 객관적 준거로 삼아,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의 이러한 기능은 정치, 경제 영역과 맞닿은 헌법제정권력의 진원지인 시민사회의 민주적 버팀목 역할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막힌 민주주의의 수로를 뚫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질적 전환을 동반하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고전적 삼권분립 이론이 더 이상 실효성 없어진 마당에 자유주의의 고전 모델에 따라 헌법재판의 한계를 들지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로장 발롱(P. Rosanvall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판은 상반되는 입장의 대치를 전제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 결정은 반드시 정당화 되어야 하는 필연적 요청을 부여 받는다.⁷⁷⁾ 입법이 다수의 결정을 정당성의 출발로 하여 작동하는 권력이라면, 사법적 결정은 다수의 공론장을 향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특성을 갖는다. 헌법재판이 공론장의 정당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저항을 초래하게 되고, 현재의 제도적 존재가 거론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의 우려와 같이 헌법재판 자체가 비민주적 행위와 등치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과연 헌법재판소의 특수태, 즉 구체적 개별 사건의 결정이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 방식은 해당 사회의 정치적 역관계, 민주주의적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이 입법적 행위자의 지위를 대체해서는 안된다. 정치의 사법화는 충돌하는 가치 추구의 경쟁적 지위, 즉 입법적 지위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의 규범을 지탱하는 한에서 그 긍정적 역할을 부여받는다. 즉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와 조응하는 최선의 방식은 비제도적 영역 즉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막힌 수로를 뚫어 소통적 권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해 주는 역할일 것이다.

77) Pierre Rosanvallon, translated by Arthur Goldhammer, *Counter-Democracy, Politics in an Age of Distrust*, (Cambridge Univ. Press, 2008), p. 230.

한국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정치의 사법화를 반대하는 견해들은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자주 거론한다. 첫째, 한국의 사법부는 민주화 이전에 이미 일제 식민통치 시기 이래 냉전시기 분단국가 건설과 권위주의를 거치면서 그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사법부는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주의적 기본권이나 민주주의의 제 가치를 법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보다는 권위주의적 권력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갖는다. 이 문제는 민주화라는 정치적 변화를 계기로 사법부가 급작스레 정치적 권력에 대해 자율적이 되고 시민권의 수호자로 변신하는 것을 극히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법부의 인적 충원방식과 인적 구성의 특성이다. 법과 대학교의 교육, 그것의 위계 구조와 사법 시험 제도는 법률 공직자들이 한국 사회의 최상층 엘리트 지위를 갖도록 했다. 권위주의 시기를 통해 그리고 민주화 이후 시기에도 법률 공직자들이 한국 사회의 위계 구조에 있어 최상층 엘리트 지위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가치관과 이념적 정향 역시 한국 사회의 최상층 집단들과 높은 동질성을 갖게 만들었다. 이 문제는 법률가 집단이 한국 사회의 최상층의 이해관계를 더 편향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통해 민주적 시민권을 구현하고 사회 집단 간 힘의 배분을 다원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⁷⁸⁾

이 두 가지 지적이 한국에서 헌법재판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지금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법권력은 근대화 또는 민주화 이전에 세습적, 권위주의적 권력의 도구로 기능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 거슬러 가보면, 사법부는 민주적으로 ‘설립’되기 이전 ‘세습’ 권력의 상징인 귀족들의 전유물로 구체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사법영역 역시 입법영역의 민주적 발전과 나란히 또는 그 뒤를 쫓아 그 역할과 방향을 민주적으로 구조화해 왔다. 현재 권위주의적 권력의 도구적 활용에 휘둘렸던 사법부의 ‘과거’ 때문에 사법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제약받는 국가는 없다. 오히려 그 책임은 무소불위의 권위주의를 창출한 행정권력으로 돌려야 할 것이고, 과거의 역사적 과오가 클수록 사법적 개혁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78) J. M. Maravall, and A. Przeworski, ed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2003), 안규남, 송호창 외 옮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휴머니티스, 2008), 최장집 “한국어판 서문” , 36-37쪽.

두 번째 지적인 사법부의 인적 구성과 충원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필자도 공감하는 측면이다. 최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법개혁의 모색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배심원제 등을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구성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현재의 구성을 민중주의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⁷⁹⁾, 헌법재판의 조정원칙을 비지배적 상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⁸⁰⁾ 등은 향후 보다 가다듬어 구체적 사법개혁의 방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사법적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필자의 역량상의 한계로 사법 영역의 구조적 개혁 방향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끝)

79) 박명림,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53-276쪽 ; “사회국가 그리고 민주헌정주의: 민주주의의 ‘한국모델’을 위한 시론,” 『기억과 전망』, (통권 15호(가을), 2006), 8-43쪽.

80) 곽준혁, “사법적 검토의 재검토: 헌법재판과 비지배적 상호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2006), 81-110쪽.

참고문헌

- 강정인, 2008.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 40-75쪽.
- 곽준혁, 2006. “사법적 검토의 재검토: 헌법재판과 비지배적 상호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81-110쪽.
- 권영성, 1995. 『헌법학원론』, 법지사.
- 김종세, 2008.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29집, 1-27쪽.
- 김종철, 2005. “ ‘정치의 사법화’ 의 의의와 한계: 노무현정부 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
- 문무기, 2008. “노동법적 시각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입법정책기능.” 『法과 政策研究』, 제8집 제2호, 465-498쪽.
- 박명림, 2005.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1호, 253-276쪽.
- 박명림, 2006. “사회국가 그리고 민주헌정주의: 민주주의의 ‘한국모델’ 을 위한 시론.” 『기억과 전망』 통권 15호(가을), 8-43쪽.
- 박성우, 2006.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3호, 55-77쪽.
- 박은정, 2010. “ ‘정치의 사법화(司法化)’ 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1-26쪽.
- 박찬표, 2006. “헌법에 기대기: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실망.” 『한국정당학회보』 통권 제8호, 71-102쪽.
- 양 건, 2004.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역할: ‘제한적 적극주의’ 를 넘어서.” 〈제51회 헌법실무연구회 발표문(2004. 12. 3.)〉.
- 오승용, 2010. “한국민주주의의 위기와 법의 지배: 정치의 사법화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3호, 163-196쪽.
- 이국운, 2008. “자유민주주의의 정상화 문제(II)”, 『법과 사회』, 제34호.
- 임지봉, 2004. 『사법적극주의와 사법부 독립』, 철학과 현실사.
- 정종섭, 1999.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와 기본권의 실현.”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3호, 226-252쪽.
- 차동욱, 2002.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안티테제인가: 현대적 권력분립원리 하에서의 두 헌법기관의 관계”, 『의정연구』, 제12권 제2호, 183-221쪽.
- 차동욱, 2008.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본 헌정 60년-개헌의 정치와 ‘헌정공학’ 의 타당성”, 『법과 사회』, 제34호.
- 최대권, 2001.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치적 의미.”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3호, 1-27쪽.

- Brest, P. 1981, "The Fundamental Rights Controversy," *Yale Law Journal*, Vol. 90, pp. 1063-1109.
- Brink, David O. 1989, *Moral Realism and the Foundation of Ethics*, Cambridge Univ. Press.
-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347 U.S. 438 (1954).
- Clayton, Cornell W. 2002, "The Supply and Demand Sides of Judicial Policy-Making(or, Why Be So Positive About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65, No. 3, pp. 69-85.
- Cohen, J. & Arato, A.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MIT press.
- Cover, Robert M. 1982, "The Origins of Judicial Activism in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The Yale Law Journal*, Vol 91, Number 7, June, pp. 1287-1316.
- Ely, J. H. 1980, *Democracy and Distrust : A Theory of Judicial Review*, Harvard Univ. Press.
- Ferejohn, John and Pasquale Pasquino, 2003, "Rule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in Jos María Maravall and Adam Przeworski, ed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Cambridge Univ. Press.
- Ferejohn, John. 2002. "Judicializing Politics Politicizing Law,"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65, No. 3, pp. 41-68.
- Guarnieri, Carlo & Pederzoli, Patrizia., 2003, *The Power of Judges: A Comparative Study of Courts and Democracy*, Oxford Univ. Press.
- Gutmann, Amy. & Thompson, Dennis. 1996. *Democracy and Disagreement*, Harvard Univ. Press.
- Habermas, Jürgen, 1996, translated by William Rehg.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MIT press.
- Hardin, Russell, 1999, *Liberalism,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 press.
- Hirschl, Ran, 2008, "The Judicialization of Mega-Politics and The Rise of Political Court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1, pp. 93-118(1-42).
- Holland, Kenneth M. 1990, "Judicial Activism and Judicial Independence: Implications of 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for the Reference Procedure and Judicial Service on Commissions of Inquiry," *Canad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5 Can J. L. & Soc, pp. 95-109.
- Jonghyun, Park, 2008,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Korea,"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Vol. 10,(2008-2009) pp. 62-113.
- Kmiec, Keenan D. 2004, "The Origin and Current Meanings of 'Judicial Activism!,'" *California Law Review*, Vol. 92, pp. 1442-1477.

- Kramer, Larry D. 2004. *The People Themselves, Popular Constitutionalism and Judicial Review*, Oxford Univ. Press.
- Maravall, J. M. and A. Przeworski, eds. 2003,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안규남, 송호창 외 옮김, 2008,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후마니타스
- Montesquieu, Br de et de, 1977, *The Spirit of Laws*, Berkeley : California Univ. Press.
- Munger, Michael C. 2002, "Comment on Frerjohn's 'Judicializing Politics, Politicizing Law',"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65, No. 3, pp. 87-93.
-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 Pasquino, Pasquale, 1988, 김효전 편역, 2000, “임마누엘 시에에스와 칼 슈미트에서의 헌법제정권력론” , 『칼 슈미트연구』, 서울: 세종출판사.
- Pierre Rosanvallon, translated by Arthur Goldhammer, 2008. *Counter-Democracy, Politics in an Age of Distrust*, Cambridge Univ. Press.
- Seelmann, Kurt. 2008. "Rechtsstaat und Demokratie",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 pp. 76-96.
- Tamanaha, Brian Z. 2004, *On the Rule of Law, History, Politics, Theory*, Cambridge Univ. Press, 6th Printing.
- Tate, C, Neal, & Vallinder, Torbj rn(eds.), 1995, *The Global Expansion of Judicial Power*, New York Univ. Press.
- Weber, Max, edit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Economy and Society*, 1 vols,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1st Printing.